국 민 과 언 론 을 이 어 주 는 ,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를 마치며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2013년 새 봄을 맞아 대선 심의백서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의 대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였으며,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의와 의식도 함께 성숙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외형적 토대도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으로써 불법, 부정선거의 폐해는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감소하는 만큼 언론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특히 각인효과와 신뢰도가 타 매체보다 높은 인쇄매체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특정 후보자의 홍보수단이나 특정 후보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명예훼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향방까지 잘못 정하게 되는, 공동체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언론이 객관적인 정보제공과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는 선거의 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라는 큰 선거를 맞이하여 선심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19대 총선 기간 동안 제재건수가 총 130건이었는데 2010년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역대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선 역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기 동**

선심위 제재건수가 47건으로 대선 선심위가 운영된 세 차례 중 제재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2002년 대선 12건, 2007년 대선 35건).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부각 또는 비방보도의 양과 질이 예전에 비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로, 선거보도에 대한 언론의 각성과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성과도 있었지만 지난 총선 선심위에서 내린 사과문 게재 결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는 문제도 불거져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미 제재조치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언론중재위에서 선심위 관련 제도 개선 소위를 구성하여 선심위를 상설화하고 '경고문 게재 결정'과 같은 제재조치를 다양화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도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3년에는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총 14차에 걸친 회의에서 바쁘신 가운데 깊이 있는 토론을 해 주시고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언론중재위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심위의 활동 내역이 담긴 백서가 향후 구성될 후임 선심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 례

심의위원장 인사말 ✍ 제18대 대선 선거기사심의를 마치며

제 1 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1 장 위원회 구성 ····· 8
제 2 장 심의 · 의결 절차 ····· 11
제 3 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 13
제 4 장 위원회 운영 결과 ····· 15

제 2 부 심의 · 의결 현황

제1장 심의 운영방침 ····· 18
제2장 심의 · 의결 현황 분석 ····· 19
Ⅰ. 심의유형별 분석 ····· 19
1. 자체 심의 ····· 19
2. 시정요구 심의 ····· 22
3. 재심청구 심의 ····· 22
Ⅱ. 결정유형별 분석 ····· 23
Ⅲ. 위반유형별 분석 ····· 24

제 3 부 종 합 평 가

제1장 심의위원 평가 ····· 34

제2장 결산 좌담 ····· 52

제 4 부 심의 · 의결 사례

제1장 자체심의 ····· 60

1. 사과문 게재 ····· 60
2. 경 고 ····· 72
3. 주 의 ····· 205
4. 권 고 ····· 365

제2장 시정요구심의 ····· 393

1. 정정보도문 게재 ····· 393
2. 취 하 ····· 397
3. 기 각 ····· 409
4. 각 하 ····· 413

부 록

1. 선거기사심의기준 ····· 418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 422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 432
4. 심의대상 매체 현황 ····· 445
5. 색 인 ····· 448

제 1 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1 장 위원회 구성
제 2 장 심의 · 의결 절차
제 3 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제 4 장 위원회 운영 결과

제1장 위원회 구성

1. 활동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에 따라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사설 · 논평 ·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운영기간은 2012년 4월 22일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이며, 재보궐선거 시에도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심의위원회와 동시에 운영되었다.

【역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구 분	운 영 기 간	선 거 일	비 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0. 2. 25. ~ 2000. 5. 13.	2000. 4. 13.	2000. 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관련 조항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2. 14. ~ 2002. 7. 13.	2002. 6. 13.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8. 21. ~ 2003. 1. 18.	2002. 12. 1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3. 12. 17. ~ 2004. 5. 15.	2004. 4.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6. 1. 31. ~ 2006. 6. 30.	2006. 5. 3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8. 21. ~ 2008. 1. 18.	2007. 12. 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12. 11. ~ 2008. 5. 9.	2008. 4. 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2. 1. ~ 2010. 7. 2.	2010. 6. 2.	2009. 1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설치·운영기간 변경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5. 29. ~ 2010. 8. 27.	2010. 7. 28.	2010. 1. 선거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보궐선거시에도 선심위 설치 운영

구 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 고
2010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8. 28. ~ 2010. 11. 26.	2010. 10. 27.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2. 26. ~ 2011. 5. 27.	2011. 4. 27.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8. 27. ~ 2011. 11. 25.	2011. 10. 26.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12. 12. ~ 2012. 5. 11.	2012. 4. 11.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2. 10. ~ 2012. 5. 11.	2012. 4. 11.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4. 22. ~ 2013. 1. 18.	2012. 12. 19.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10. 20. ~ 2013. 1. 18.	2012. 12. 19.	

2. 구 성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언론학회, 한국신문협회, 공정언론시민연대에 추천을 의뢰했으며, 추천권자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 의뢰를 받아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 위원 명단 】

구 분	성 명	현 직	추천단체	비 고
위 원 장	박 기 동	현 만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원 병 설	현 배재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연장자순)	문 명 호	현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공정언론시민연대 (시민단체)	
	박 석 태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언론중재위원회	
	김 택 근	전 경향닷컴 사장	민주통합당	

구 분	성 명	현 직	추천단체	비 고
위 원 (연장자순	김 준 범	전 국방홍보원 원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언론인단체)	2012. 10. 31. 사퇴
	권 문 한	현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한국신문협회 (언론인단체)	2012. 11. 21. 위촉
	오 세 헌	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새누리당	
	이 준 웅	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계)	
	조 우 성	현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3. 기 능

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 심의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며,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사진. 왼쪽부터 오세헌, 김택근, 김준범, 박기동, 권 성 언론중재위 위원장, 문명호, 박석태, 원병설, 조우성 위원, 오광건 사무총장〉

제2장 심의 · 의결 절차

1. 자체심의

언론사 경력 20년 이상인 전문 심의원들과 심의 담당 부서는 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를 모니터하여 선거기사심의기준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보도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불공정한 보도일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 후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위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명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시정요구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심의하여,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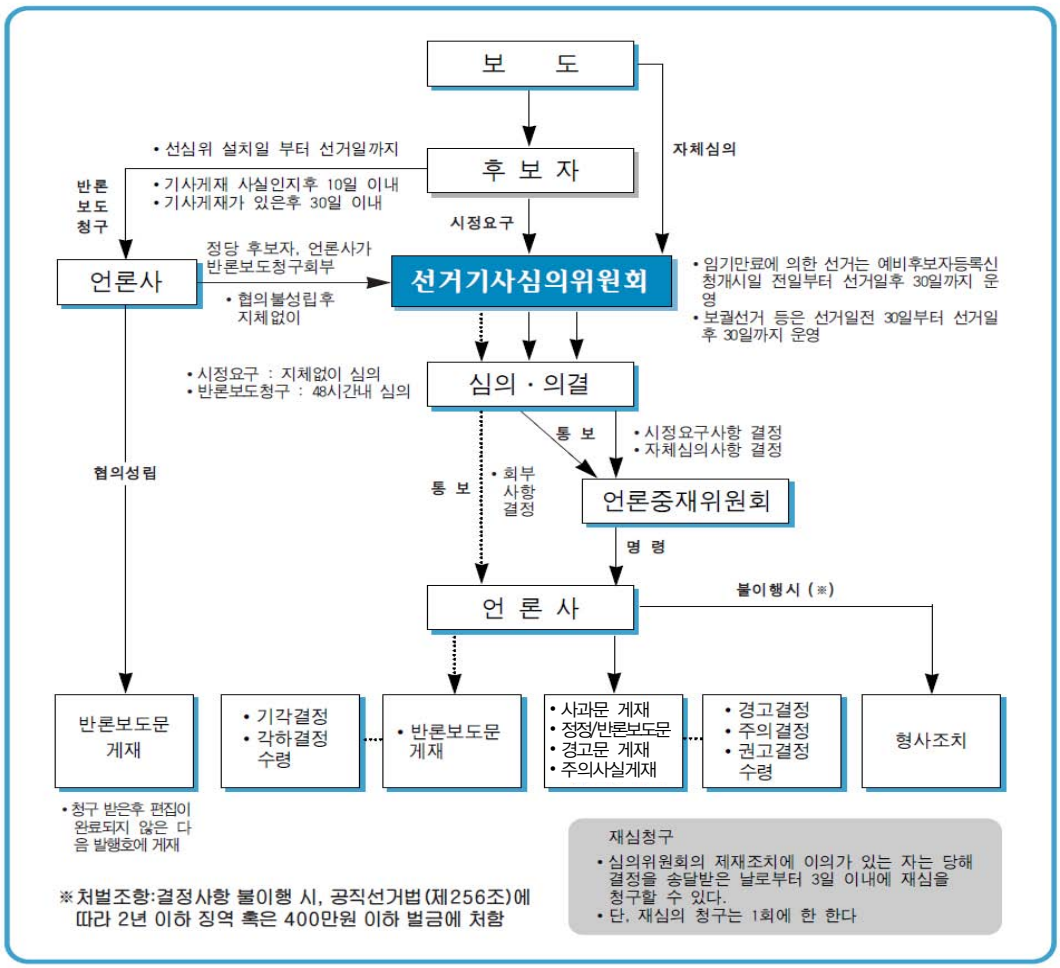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정당 혹은 후보자)이나 언론사는 이를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문 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각'과 '각하' 등을 결정하여 양측에 통보한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나 시정요구심의 절차와 동일하다.

【심의 · 의결 흐름도】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1. 심의위원회 규칙 개정 (2012년 3월 5일)

심의위원회는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됨에 따라 선심위 규칙상 제재조치의 유형을 정비하는 등 선심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심의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보도심의기구 제재조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07. 11. 29. 2007헌마290)을 존중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선심위 제재조치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경고결정문 게재와 주의사실 게재를 추가하고 주의, 권고 외에 '경고'를 부활하였다.

둘째, 선심위 안건에 대해 권고 등의 조치 및 각하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견진술을 생략하도록 했다.

셋째, 시정요구 및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결과를 결정문으로 송부함에 따라 별도 처리결과통보서 서식을 삭제하고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했다.

2. 선거기사심의기준 개정 (2012년 3월 8일)

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심의기준을 개정하였다.

첫째, 선거기사의 범위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기사의 범위를 일반 보도외에 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언론사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고금지규정에서 예외조항의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단서규정을 삭제하였다.

셋째, 선심위 제재조치의 유형 중 경고조치를 부활하고 사과문 게재결정의 요건을 세분화하는 등 제재조치의 유형과 요건을 재정비하였다.



〈선거기사를 심의하고 있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 장면〉

제4장 위원회 운영 결과

심의위원회는 2012년 한 해 동안 총선, 대선 및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등 총 4개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운용한 만큼 심의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언론사로 하여금 불공정한 보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선거기사 심의의 일관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관련 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언론사들이 심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반복 위반 유형(예: 여론조사 보도)에 관한 공정보도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언론사 대상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였으며 언론재단에서 실시하는 지역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 기자 교육 등을 통해 선거기사심의기준 및 위반 사례를 교육했다. 또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등 타 선거보도 심의기구와 유사·동일 심의안건이 발생한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했다.

아울러 제재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사과문 게재와 정정보도문 게재 외에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입법화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선심위를 운영하면서 제도상 문제점들이 계속 노정되어 왔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선 국회에 발의된 제재조치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선심위의 제재조치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심의위 회의에서는 심의기준 위반 여부 못지않게 언론의 자유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제재수위에 대한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 또한 사과문 게재 결정을 받고도 사과문이 게재된 지면에 해당 매체가 지지하는 후보 관련 기사를 나란히 실은 경우처럼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인 '사과문 결정'을 내린다 해도 언론사에게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도 있었다. 향후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기존의 개정안에 더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선심위 제도 개선에 있어서 제재조치의 실효성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선심위의 상설화이다.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는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까지 설치되어 총 4개의 심의위가 구성되는 등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했다. 또한 각각의 선심위별로 많은 수의 위원들이 교체 구성되어 심의기준의 적용과 제재 수위 및 심의대상기사에 대한 해석 등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이 선심위에서 논란이 된 시정요구 대상과 절차, 반론보도청구 회부 등 공직선거법상 심의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검토와 심의기준상 각종 규제조항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 관련 제규정 검토 및 개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2012년 1월에 구성하여 이런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2월 하순 개선안을 도출했으며, 중앙선관위와 국회 등에 제출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 2 부

심의 · 의결현황

제 1 장 심의 운영방침
제 2 장 심의 · 의결 현황 분석

제1장 심의 운영 방침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9대 총선에 이어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심의 운영방침을 정하여 시행했다.

기존에 활용되어 온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 및 '주의사실 게재' 결정은 언론사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제재조치로서 공직선거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변형결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모 방송사에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제재조치인 '경고'를 내린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에서 아무리 약한 제재조치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을 강하게 천명하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2007헌마290 2007. 11. 29. 전원재판부). 따라서 이번 심의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 규칙 및 심의기준에만 변형결정을 유지하고 실제로는 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선거법상 규정된 사과문 게재 결정을 활용하기로 하고 적용기준에 관한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사과문 게재 결정을 하기로 했다.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심의위원회의 조사결과 또는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 등을 참고하여 해당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기로 했다.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선거기사의 내용에 대한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의 반론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기로 했다.

그리고 언론사의 이행을 요하지 않는 제재로서 주의 및 권고 외에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고 결정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경고조치와 사과문 게재결정 사이에 간격이 크다는 문제점도 있어 공직선거법상 심의위원회 제재조치의 다양화 및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주의 결정은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리기로 했다.

또한 해당 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선거기사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권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제2장 심의 · 의결현황 분석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는 선거기사에 대한 자체심의와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심의로 구분되어 진행됐다. 심의 결과 자체심의 47건, 시정요구 심의 4건, 재심청구 심의 3건 등 총 54건의 심의가 이뤄졌으며, 반론보도청구회부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I. 심의유형별 분석

1. 자체 심의

심의실무를 담당하는 기사심의팀은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추천을 받아 채용한 언론사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심의원들과 함께 대상매체(중앙일간지 31개, 지역일간지 100개, 종합주간지 32개, 지역주간지 206개, 특수주간지 4개, 월간지 25개, 뉴스통신 3개 등 총 401개)의 선거관련 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 · 분석하여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기사를 가려낸 후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 · 의결하는 절차를 거쳤다.

심의위원회는 총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47건의 자체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47건 중 주의가 27건(57.4%)로 가장 많았고, 권고 11건(23.4%), 경고 8건(17%) 그리고 사과문 게재 결정이 1건(2.1%)이었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2건(25.5%), 여론조사 보도요건미비 12건(25.5%), 광고 제한 위반이 10건(21.3%), 정책비교 서열화 금지 위반이 8건(17.0%), 외부기고 금지 위반이 4건(8.5%)으로 나타났다.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일간지가 22건(46.8%), 지역일간지 16건(34%), 종합주간지 4건(8.5%), 월간지 2건(4.2%), 지역주간지, 특수주간지 및 뉴스통신이 각각 1건(2.1%) 순으로 선심위의 제재를 받았다. 전국적으로 여러 후보가 선거전을 펼쳤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일간지에 대한 제재 건수가 많았던 것과 달리 후보자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중앙일간지에 대한 제재가 지역일간지에 대한 제재보다 높았던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자체심의 유형별 의결현황】

구 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형평성 위반		사실 보도 위반	여론 조사 보도 요건	정책 비교	기고 위반	의견 광고	사과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간 별		계	인물 부각	인물 비방									
일간 신문	중앙	22				6	6		10		2	14	6
	지역	16	4	1	1	5	1	4		1	3	8	4
종합주간지		4	3			1					1	3	
지역주간지		1	1								1		
특수주간지		1					1					1	
월간지		2	2								1	1	
뉴스통신		1	1										1
총 계		**47**	**11**	**1**	**1**	**12**	**8**	**4**	**10**	**1**	**8**	**27**	**11**

【자체심의 매체별 의결현황】

구 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간별	매체명	계	공정성·형평성 위반		사실 보도	여론 조사	정책 비교	기고	의견 광고	사과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인물 부각	인물 비방									
중앙 일간지	경향신문	3				1	1		1			2	1
	데일리 노컷뉴스	1					1					1	
	동아일보	4				1	2		1			3	1
	매일경제	1				1							1
	문화일보	1							1			1	
	서울신문	3				1	1		1			2	1
	세계일보	1				1							1
	조선일보	4							4		2	2	
	중앙일보	1					1					1	
	한겨레	2							2			2	
	헤럴드 경제	1				1							1
	소 계	22				5	6		10		2	14	5

구 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간별	매체명	계	공정성 · 형평성 위반		사실 보도	여론 조사	정책 비교	기고	의견 광고	사과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인물 부각	인물 비방									
지역 일간지	경남매일	1				1						1	
	경북도민 일보	2	1					1			1	1	
	경북매일	1	1									1	
	경북일보	1	1									1	
	광주 타임즈	1			1							1	
	대경일보	1				1							1
	대구일보	1						1			1		
	대구 연합일보	1				1							1
	대전일보	1				1							1
	시민일보	1						1		1			
	시사서울	2					1	1				2	
	아시아 일보	1	1									1	
	아시아 투데이	1		1							1		
	영남일보	1				1							1
	소 계	16	4	1	1	9	7	4		1	5	22	8
종합 주간지	미래한국	1	1									1	
	일요시사	2	1			1					1	1	
	일요서울	1	1									1	
	소 계	4	6			10					6	24	
지역 주간지	남해시대	1	1								1		
	소 계	1	6								6		
특수 주간지	여성신문	1					1					1	
	소 계	1					0					0	
월간지	경제풍월	1	1									1	
	서울21	1	1								1		
	소 계	2	1								0	1	
뉴스 통신	연합뉴스	1	1										1
	소 계	1	1										0
총 계		47	11	1	1	12	8	4	10	1	8	27	11

2. 시정요구 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선심위에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4건으로 중앙일간지 3건, 월간지가 1건이다. 선심위는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의결결과 정정보도문 게재 1건, 기각 1건, 각하 1건, 취하 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취하된 1건은 신청 후 반론보도문이 게재되었다.

【시정요구심의 매체별 의결현황】

구 분			위반유형		결정내용			
간 별	매체명	계	공정성 및 형평성	사실보도	정정보도문 게재	취 하	기 각	각 하
중앙 일간지	문화일보	1	1					1
	조선일보	2	1	1	1		1	
	소 계	3	2	1	1		1	1
월간지	월간조선	1	1			1		
	소 계	1	1			1		
총 계		**4**	**3**	**1**	**1**	**1**	**1**	**1**

3. 재심청구 심의

선심위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총 3건으로 모두 기각되었다.

【재심청구심의 처리결과】

연 번	재심청구인	결 과	원심결정
1	시민일보	기각	2012국선19(자심) 사과문 게재 결정
2	문재인	기각	2012대선37(시심) 각하 결정
3	문재인	기각	2012대선46(시심) 기각 결정

Ⅱ. 결정유형별 분석

1. 사과문 게재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총 1건의 기사에 대해 사과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역 일간지인 시민일보는 2012년 9월 10일자 5면 「안철수, 국민을 바보로 아나?」, 9월 11일자 5면 「안철수,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9월 12일자 5면 「안철수 '불출마 종용' 진실은?」, 9월 13일자 5면 「안철수, '꼼수 정치'부터 배웠나」 등 연속적으로 7번에 걸쳐 특정 예비후보자의 신상과 행보에 비판적인 칼럼을 게재하면서 단정적이고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사용하는 한편, 자극적인 제목을 게재하고 부정적인 사실만 선별 · 적시해서 심의위원회로부터 사과문 결정을 받았다.

2. 정정보도문 게재

금번 심의위원회에서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받은 건은 1건으로 시정요구 심의를 통해 이뤄졌다. 심의위는 문재인 후보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건에서 주요 후보자들의 의료정책을 비교하면서 시정요구인의 의료정책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적시한 것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했다.

3. 경 고

심의위원회가 자체심의로 의결한 47건 중 경고 결정은 8건으로 17%를 차지했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2건, 지역일간지 3건, 종합주간지 1건, 지역주간지 1건, 월간지 1건이다. 경고를 받은 매체 중에 특이한 사례로 서울지역일간지인 아시아투데이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의 행보 및 선거이슈 등을 보도하면서 해당 예비후보자에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1면 등 주요 지면에 30차례에 걸쳐 비중 있게 게재하고 상대방의 비방 발언을 그대로 전달해서 경고를 받았다.

4. 주 의

자체심의 의결 건수 중 주의 결정은 27건(57.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일간지 14건, 지역일간지 8건, 종합주간지 3건, 특수주간지 1건, 월간지 1건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제한 위반이 8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2건, 기고 위반 1건이다.

5. 권 고

권고 결정은 11건(23.4%)이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 6건, 지역일간지 4건, 뉴스통신 1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10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건이다. 권고 결정은 심의위원회 설치 초기에 계도차원 및 언론사에 대한 주의 환기 차원에서 주로 내려졌다.

6. 기 각

'기각' 결정은 시정요구심의 및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에서만 내릴 수 있는 결정 유형으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심의에서 1건, 재심 청구 심의에서 3건 등 4건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7. 각 하

'각하' 결정은 시정요구심의 및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에서만 내릴 수 있는 결정 유형으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심의에서 한 건의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Ⅲ. 위반유형별 분석

심의위원회가 자체 심의한 기사의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위반기사 총 47건 가운데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및 특정 후보 인물부각 또는 비방 등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기사가 각각 12건(2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견광고가 10건(21.3%), 정책 비교 보도가 8건(17%), 기고 위반이 4건(8.5%)으로 나타났다.

1.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심의한 안건 중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제재한 사례가 12건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기사와 동일하게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제재 시기는 심의위원회 운영 초기에 집중돼 있고 선심위에서 심의대상 언론사에 여론조사 보도요건 준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정보도 협조를 요청해서 제재 건수가 다른 선거에 비해 특별히 많지는 않았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대선1	매일경제	5. 1. 5. 15.	A1면 A8면 A7면	- 박근혜 44.6% 안철수 39.9% - “與 국민경선 현 규정대로” 56% - 민주-진보 연대 反 43% > 贊 30%
2012대선2	대경일보	5. 17.	2면	- 박근혜 대선 지지율 47% ‘1위’
2012대선3	영남일보	5. 22.	4면	- 새누리 박근혜 범야권 안철수
2012대선4	대구연합일보	6. 4.	3면	- 양자대결 박근혜-안철수 51.9%-39.5% 박근혜-문재인 56.5%-34.5% - 다자대결 박근혜 43.1% 안철수 20.7
2012대선5	동아일보	6. 5	A8면	- “문재인 지지율 9%로 하락… 김두관은 4%로 상승”
2012대선6	헤럴드경제	6. 7.	4면	- 민주 대의원들에게 대선주자 물어보니… 文 · 孫 · 金 3强…5%P내 박빙 격차
2012대선7	경향신문	6. 8.	6면	- 김두관 뜨자 대선주자 ‘박빙 3파전’
2012대선8	서울신문	6. 8.	3면	- 민주 대의원 후보 선호도 문재인 · 손학규 · 김두관 박빙
2012대선9	대전일보	6. 12.	3면	- 정당구도 양당체제 양상
2012대선10	세계일보	6. 12.	4면	- 朴 지지율 자신감에 대선정국 정면돌파… 복병은 ‘숨은 표’
2012대선11	경남매일	7. 16.	3면	- 김두관 지지율 꿈틀댄다
2012대선14	일요시사	7. 29. (864호)	4/5면	- 언제 그랬나 쏙 들어간 ‘박근혜 대세론’

2. 인물 부각 또는 비방 (공정성 형평성 위반)

특정후보자를 부각하거나 비방한 보도는 총 12건이다. 제19대 총선 선심위에서 가장 많은 제재 건수를 차지한 위반 유형이나 소수의 후보자가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자만 부각하는 기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특정 후보자를 크게 부각한 사례로는 김두관 예비후보자를 부각한 남해시대와 박근혜 당선인을 부각한 월간지 서울21이 있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대선12	연합뉴스	7. 10.	정치	- 사상 첫 여성대통령 노리는 박근혜 누구인가
2012대선13	남해시대	7. 5. (제310호)	1면 9면 20면	- 김두관, 8일 해남 땅끝마을서 출마선언 - 밥상머리교육 대상으로 삼아도 될 남해인물은 - 김두관 경남도지사, 대권도전 공식화
		7. 12. (제311호)	1면 4면 5면 6면 6/7면 7면 27면	- 김두관과 함께 평등사회로! - 김두관 후보 대선출정식을 다녀와서 - 고향마을을 찾은 김두관 전 지사 - '대통령 마을' 되고 싶은 이어리의 꿈 - 미니인터뷰 - "남해의 아들, 99%를 위한 대통령으로" - 동행취재기 - 50만 내외군민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7. 19. (제312호)	4면 20면	- 고향 남해에서 바라본 김두관1-이어마을 사람들 - 김두관 전 지사, 21일 서울서 출판기념회 - 김두관에게 '힘이 되는 향우'
		7. 26. (제313호)	6면 S14면	- 고향 남해에서 바라본 김두관2-장묘문화혁신 위해 전쟁치룬 공무원들 - 김두관의 도전 '아래에서부터 위로'
2012대선17	광주타임즈	9. 3.	2면	- 안철수, 지지율 상승세
2012대선18	서울21	9월호 (통권 제51호)	35면 36~39면 40~43면 44~45면	- | 특집 | 육영수와 박근혜 - 인물 초대석 | 강인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 "육영수 여사, 월남출정 때 눈물로 손 흔들어 줬다 - | 특집 | 영원한 퍼스트레이디 故 육영수 여사 추모 38주년 "그녀는 역사의 제단위에 던져진 한국의 위대한 어머니였다" - 사진으로 본 故 육영수 여사 제38주기 추도식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46~49면	- 인물 초대석 | 김구철 '여풍당당 박근혜' 공동저자 및 TV조선 〈뉴스와이드 참〉 팀장 "박근혜가 대통령 될 것, 안철수는 검증 후 추락"
			50~51면	- | 기획특집 ① | 박근혜의 정치미학 국민행복 디자이너, 대한민국 대통합 이룬다
			52~53면	- | 기획특집 ② | 박근혜 '옥함상자' 열다 박근혜의 한국적 가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애국주의'
			54~55면	- | 기획특집 ③ | 박근혜 A to Z '한국적 스타일', 육영수 여자와 닮은 꼴
			56~59면	- 수리철학으로 풀어본 2012년 대선 전망 | 임선정 양뱍문화재단 원장 "연말 대권은 전생부터 준비된 者, 용천박 대박난다" 예언
2012대선25	일요 서울	10. 22. (제964호)	62~63면	- 大예언 18대 대통령은 바로 이 사람… "이번에 되는 대통령은 최고의 성군될 것"
2012대선28	경북 도민 일보	11. 12.	1면	- '18조 규모 국민행복기금 설치'
			3면	- 文 "사람이 먼저, 가치실천 토건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 - 安 "이기는 단일화 원칙 입각 모든 테이블 열고 머리맞대야"
2012대선29	경북 매일	11. 12.	3면	- 박근혜 "가계부채 해결 추진하겠다"
2012대선30	경북 일보	11. 12.	1면	- "국민행복기금 18조 조성 가계부채 해결"
			3면	- 문 · 안, 종합정책자료 발표
2012대선31	아시아 일보	11. 12.	1면	- 安, 반값선거운동 선언 - 문재인, 5대공약 발표
			2면	- 朴, 18조원 규모 국민행복기금 조성
			3면	- 문재인 대선공약 '일자리' 강조…책임총리제 공약
2012대선40	아시아 투데이	11. 15.	1~2면	- "文 이중플레이로 단일화 협상 중단"
			3면	- 文측 양보론이 발단… 文 · 安 단일화 파경? 봉합?
		11. 16.	1면	- 文의 참모형 리더십 한계
			3면	- 민주 자초 단일화 파행… 결국 부메랑? - 분열 아이콘 '親盧 패권에 국민 등 돌린다 - 민주 구태정치에 선 긋는 안철수
			4면	- "文 흑색선전만… 권력집착 스토커 같다" - 새누리, 文 에 십자포화 "민주 전매특허는 여론 왜곡"
		11. 19.	1면	- 文 '신불자 게이트' PK민심 이반 조짐
			3면	- 단일화에 목맨 文 · 安, 결국 테이블로 - 그때그때 다른 지역공약 '文 말바꾸기' 논란
		11. 20.	1면	- 文 언론정책에 '진실성' 의구심
			3면	- "여론조사도 수용" 文 자신감… 믿는 건 조직 세몰이? - "文, 복지재원 106조 확보는 허구"
		11. 21.	1면	- 文 '통큰양보'는 포장된 통큰욕심?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11. 22.	3면	- ‘무늬만 큰형님’… 文 리더십 다시 도마위에
			4면	- “문재인은 옹졸하다”
				- “문재인 ‘盧 NLL 발언’ 거짓 가능성”
				- “朴 출산 그림의 폭력 · 가학성
				- 민주당 본래 속성과 일맥상통“
			1면	- ‘버스 반발’ 불지른 문 등 책임 불가피
				- 저축銀 피해자들 “文, 대통령 될 자격 없다.”
			2면	- “두 사람, 앞에선 형님 · 동생… 뒤에선 너죽고 나살자”
			4면	- ‘무늬만 용광로’ 文캠프
				- 文 공보단장 우상호의 ‘과잉’
				- 벌써 선거운동? 기호 2번 文 홍보차량 등장
				- ‘단일’ 김칫국
		11. 23.	1~3면	- 文 공보 · 홍보라인은 아마추어?
			3면	- 절박한 文 ‘가상대결+적합도’ 승부수
				- 文, 단일화토론서 ‘맏형 모습’ 없었다.
2012대선44	경제 풍월	11월호 (통권 159호)	21~23면	- 또 햇볕정책 망령
			52~55면	- 국민이 공과 평가한다
			56~58면	- 어찌 벌주자고 하는가
			100~101면	- 죽기살기 야권 단일화
			102~103면	- 노 후계자 어쩔 셈인가
			109~111면	- 세 번 無血革命 완성
			112~115면	- 안철수식 거짓말들
		12월호 (통권 160호)	96~97면	- 여성대통령 혁신시대
2012대선51	미래 한국	통권 435호 (12.3. ~12.16.)	표지, 8~ 37면	- 지금은 여성시대
				- 세기의 여성 지도자들 그들은 위기속에서 빛났다
				- 미국은 지금 여성 상위 시대
				- 美 최초 여성 대통령 꿈꾸는 힐러리 클린턴
				-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 여성지도자에 대한 국민 생각
				- 우리에게도 ‘철의 여인’이 필요하다
				- 南北 모두를 품는 리더십을 기다린다
				- “여성의 강점 활용하면 유리천장은 없다”
				- 멋진 여성의 3대 조건
				- 딸의 롤모델을 찾아서
				- “박근혜, 흐름탔다”
				- “정수장학회는 장물이 아니다”

3. 의견광고

시민단체 등의 의견광고를 게재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유도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 건수도 10건으로 여전히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정치적 지향에 따라 상대방 후보나 정당을 폄훼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경우가 많았다. 또 상업 광고를 빙자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경우 경고 결정을 내렸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대선15	조선일보	7. 25.	A31면	- '남한정부가 채찍만 써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안철수 씨는 國籍(국적)이 어디인가?
2012대선16	한겨레	7. 25.	30면	- 5 · 16 군사반란을 미화하는 박근혜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2대선23	조선일보	10. 10.	A33면	- 불굴혼 박정희
2012대선26	동아일보	10. 25.	A35면	- |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을 모집합니다!! |
2012대선27	조선일보	10. 25.	A34면	- |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을 모집합니다!! |
2012대선32	조선일보	11. 10.	A32면	- 나는 왜 18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해야 하는가?
2012대선34	문화일보	11. 14. 11. 15.	39면 31면	- '노빠', '폐족'들이 다시 활개치기 시작, 경제 · 안보, 또 흔들리게 할 것인가? - |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을 모집합니다!! |
2012대선35	서울신문	11. 15.	31면	- |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을 모집합니다!! |
2012대선36	경향신문	11. 16.	2면	- 2012 정권교체와 국민후보단일화를 촉구하는 복음주의 기독인 300인 선언
2012대선41	한겨레	11. 20.	10면	- 해외동포들이 6 · 15 10 · 4 통일대통령을 바라며, 2012 대선후보들과 국민들께 드리는 공동호소문

4. 정책비교평가 결과의 공표

제18대 대선 선심위에서 심의한 선거기사 가운데 특기할 만한 위반 유형 중 하나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한 후 그 결과에 점수를 부여하거나 서열화하여 공표한 보도다. 공직선거법상 공약의 비교 평가는 가능하나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금지된 사항이다. 이에 대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이해하도록 돕는 보도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이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총 8건의 해당 보도에 대해 모두 '주의' 조치했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대선38	중앙 일보	11. 13.	B1,3면	- 대선 공약 집중 해부 전문가 10인이 평가한 가계부채 대책 - 박 · 안 6.3점, 문 6.0점… 빛 안나는 빚 대책
2012대선39	동아 일보	11. 15.	A1면 A5면	- 빅3 일자리공약 평균 5.8점 - 朴 해결의지 부족… 文 뜬구름 잡기… 安 좌우정책 혼란
2012대선45	서울 신문	11. 29.	5면	- 가계부채 해법, 朴 고통분담 지원책 초점·文 제도 개편에 무게
2012대선48	여성 신문	1214호 12. 1. ~12. 7.	1면 6면	- 평균 'C' 학점… 여성공약 다시 써라 - "후보들의 여성정책 철학을 볼 수 없다"
2012대선49	데일리 노컷 뉴스	12. 3.	6면	- 유력 대선주자 여성정책공약 평가
2012대선50	경향 신문	12. 4. 12. 5.	1면 6면 1면 5면	- 경향 · 경실련 13대 대선의제 공약 평가 - 선택 D-15 경향 · 경실련 '공약 평가' ①청년 실업 해결 - 경향 · 경실련 13대 대선의제 공약 평가 - 선택 D-14 경향 · 경실련 '공약 평가' ②고령화 사회 대책
2012대선52	시사 서울	12. 3.	3면	- 대선 여성공약 비교해보니… 평균 C학점
2012대선53	동아 일보	12. 7.	A1면 A4면~ A5면	- 朴-文 15개 정책, 본보-정당학회가 검증해보니 - 선택 2012 대선 메니페스토 정책검증

5. 기고 위반

금번 대선 심의위에서 제재한 기고 관련 심의기준을 위반한 매체는 총 4곳으로 총선보도와는 달리 이번에 제재한 언론사의 기고 등의 보도 행태의 특징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특정 후보를 과도하게 비판하거나 인신공격으로 비칠 만큼 상대를 비난한 내부 칼럼을 게재했다는 점이다. 특히 시민일보는 특정 후보자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약 2주간에 걸쳐 해당 후보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칼럼을 연속 게재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사과문 게재 명령을 받았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 면	기 사 제 목
2012대선19	시민 일보	9. 10. 9. 11. 9. 12. 9. 13. 9. 14. 9. 17. 9. 18.	5면	- 안철수, 국민을 바보로 아나? - 안철수,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 안철수 '불출마 종용' 진실은? - 안철수, '꼼수 정치'부터 배웠나 - 안철수, 킹이냐 킹메이커냐 - 안철수 발목 잡는 '안철수의 생각' - 문재인, 안철수에 '책임총리' 추파
2012대선20	경북 도민 일보	8. 30. 9. 3. 9. 5. 9. 13. 9. 17.	19면	-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외면한 안철수 강의 - 탈세용 '페이퍼 컴퍼니'와 안철수용 '페이퍼 정당' - 안철수의 '아파트 딱지'와 '대선불출마' 암시 - 민주당 문재인과 안철수의 '위험한 동거' - 기어코 대선 출마하겠다는 안철수에게
2012대선21	대구 일보	5. 7. 7. 30. 8. 6. 9. 3. 9. 10.	26면	- 안철수 불가론 - 안철수 불가론(2) - 안철수 불가론(3) - 안철수의 '위대한' 이미지 조작 - 안철수 검증은 네거티브일 수 없다
2012대선33	시사 서울	11. 13.	3면	- 박근혜 지지자들의 '생각'

종 합 평 가

제 3 부

제 1 장 심의위원 평가

제 2 장 결산좌담

제1장

심의위원 평가

바람직한 저널리즘이 추구해야 할 선거보도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위 원 **문 명 호**

언론의 영향력과 선거보도의 사명

언론은 요약하면 진실, 사실 보도 그리고 정확, 공정 보도를 그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다. 저널리즘에선 여러 가지 보도 준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공정 보도만큼 더 중요한 요체는 없다. 만일 언론이 사실, 공정 보도에서 벗어난다면 그 언론은 이미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국가를 이끌어 갈 지도자나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객관적 사실과 공정한 시각에서 벗어난 왜곡되고 편향된 보도는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가이드라인의 준수가 필요하다. 여론이 중요해진 오늘날의 선거는 예전보다 매스 미디어의 보도에 거의 선거의 사활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편재된 매스 미디어의 보도 내용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미국 등 서구에서 효과적 선거 홍보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 황금 시간대의 TV시간을 사는 것도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황금 시간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문이 어떤 보도 태도를 보였는가를 분석한 연구보고서(이동한의 '16대 선거보도 분석'에서 인용, http//blog.naver.com/leedh2013/150079130480)에

의하면 발행 역사가 오랜 서울의 한 중앙지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파행적 관행이 지적되었다.

> *"선거 보도에서 과거에 비해 객관성과 형식적인 공정성을 지키려는 흔적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동일 주제를 같은 내용으로 다룬 패키지 보도, 기계적 중립에 힘 쓴 형식적 공정 보도, 후보 중심 보도, 질적 편파성 보도가 두드러졌다. 또 여론조사를 보도하며 승부에만 집착하는 경마식 보도, 흥미위주 보도. 사실 확인과 검증이 안 된 풍설 보도, 가십성 보도, 선거 무관심과 유권자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부추길 부정적 보도, 해묵은 지역감정과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지역주의 조장 보도가 여전했다."*

유권자나 대중에게 전달하는 보도 과정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스 미디어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보나 정책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전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해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 두 선거를 통해 본 전국의 갖가지 보도 사례들을 선거기사 심의위원으로 접하며 "아직도 이런 언론 아닌 언론이 활동하고 있는가."하고 놀라고, 필자 역시 평생 언론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한 한 언론인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국내와 해외에서 겪어온 사실 확인의 중요성

그러면 먼저 사실 보도를 위해 기자를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가를 정통 언론 코스를 밟은 언론인들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려 한다. 보통 수습기자(견습기자) 라고 하면 1년 (필자의 경우 약 1년 반) 정도의 훈련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수습기자는 선배 기자들을 따라 국회나 행정부 또는 주요 경제 단체, 법원, 검찰, 경찰 등 현장 취재에 나서며 선배들로부터 어떻게 정보를 캐치하고 이를 확인하며 기사를 작성하는 가를 직접 현장에서 배우게 된다. 물론 수습기자들에겐 직접 기사를 작성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요즘엔 어느 정도 훈련을 거친 수습기자에게도 기사를 작성시키는 데도 있다).

필자가 처음 사회부 견습 기자로 일 할 때였다. 광화문 네거리에 있던 책방 숭문사에 들렀다가 한 영어사전에서 '동해' 영어 표기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 곧 그 사전을 사가지고 신문사로 들어와 데스크에 보고했더니 기사를 써서 넘기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당시엔 철필로 잉크를 찍어 끙끙대며 쓴 기사를 데스크에 갖다 주자, 데스크는 선배기자에게 넘겨주며 다시 작성토록 했다. 분명 무엇인가 부족한 데가 있는 기사였을 것이다. 기사는 신문에 나갔지만 그 기사는 내 기사가 아니었다. 그 때 느꼈던 실망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수습기자들은 현장에서 선배 기자들로부터 무엇 무엇을 확인하고 누구누구를 만나 얘기를 듣고 관련 자료들을 입수해 오도록 지시 받는다.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와 보고하면 선배 기자는

기사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견습이 거의 끝날 무렵, 밖에서 땀 흘려 취재해 작성해 넘긴 기사를 당시 명 사회부장으로 유명했던 L부장은 한두 장 넘겨보다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기도 했다. 눈물이 쑥 빠졌다. 데스크는 필자가 취재한 기사가 완벽하지 않은 기사였기 때문에 다시 취재 지시를 하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았다. 그런 몇 십 년 후 필자가 데스크가 되어 기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지시는 사실인가를 확인 또 확인 그리고 또 확인, 적어도 세 번 이상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수습기자 제도가 없다. 기자가 되기 위해 저널리즘 스쿨에 들어간 학생들은 대학 시절부터 엄격한 취재 및 편집 훈련을 받는다. 미국 최초의 저널리즘 스쿨로 유명한 미주리대학의 저널리즘 스쿨에선 학생들이 〈미주리언〉이란 제호의 신문을 직접 제작한다. 학생들은 담당 교수들의 엄격한 지도 아래 기사를 쓰고 이를 편집해 신문을 만드는데 이 〈미주리언〉은 상업지로 그 지역 컬럼비아 주민들이 구독료를 내고 구독한다. 특이한 것은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상업지보다 구독자 부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기사가 그만큼 정확하고 가치 있기 때문이다.

미주리대학의 〈미주리언〉지는 워싱턴 D.C에 학생 특파원까지 파견해 필자의 워싱턴 특파원 사무실이 있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 사무실을 두고 직접 취재 활동을 벌였다. 이들 학생 기자들의 신문 제작 활동은 그대로 학점이 된다. 그리고 이들 엄격한 취재보도 훈련과 이론을 갖춘 저널리즘 학도들이 졸업 전후로 로컬 페이퍼(지방지)에 스카우트 되어 졸업과 동시에 기자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로컬 페이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우수한 기자들이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 스트리트 저널〉 같은 권위 있는 신문에 스카우트 되어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고(故) 제임스 레스턴도 한 지방지로부터 시작해 필명을 높인 당대의 언론인이었다.

타인의 행위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얼마나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하는 실례를 필자의 경험에서 들겠다. 필자는 동아일보의 워싱턴 특파원과 베트남전 기간, 동남아 순회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저명인사들을 인터뷰했다. 가령 한국 기자 최초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서면 인터뷰 했을 때나 유명한 경제학자로 미국의 주인도대사를 지낸 하버드대학의 존 케네드 갈브레이드 박사, 카터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박사와의 신년 인터뷰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인공심장을 개발해 세계 학계로부터 '인공심장의 창시자'로 존경받은 유타대학의 윌램 J 롤프 박사, 인도네시아의 존경받은 언론인 목타 루비스, 필리핀의 하이메 신 대주교, 월남 패망 전 베트남의 트란 반 투엔 등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기사 작성 후 그들이 말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맞지요"하고 확인하곤 했다.

인터뷰 중 가령 국가 안보와 관련된 얘기들을 주고받는 인터뷰에선 상대방으로부터 보도를 해선 안 될 민감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 대목을 보도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몇 번이나 확인한 다음 기사를 작성하곤 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고위 공직자가 한창 얘기하다 보면 국가 안보상에 미

칠 영향을 미쳐 생각지 못하고 아주 민감한 내용을 밝혔을 경우 "이 문제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오프 더 레코드를 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고 환기시켜 주기도 했다. 예를 들면 80년대 당시, 미 하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의 미국 기자들을 동반한 판문점 통과 북한 방문 비밀 교섭 같은 것이다. (결국 기자 동반의 판문점 통과를 북한 측에서 거부해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과의 이 비밀 교섭은 처음부터 보도가 될 경우, 방문 교섭 자체가 깨어지는 내용이었다. 대서특필할 수 있는 특종감이었지만 남북한 관계와 국가적 이익을 위해선 보도를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런 경우 기자로서 기사를 못 쓰거나 특종을 놓치게 되지만 국가 안보에 아주 민감한 내용이 보도될 경우, 남북한 관계 또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결정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사를 쓰지 못한 대신 상대방 고위 공직자와의 신뢰가 두터워져 그 후부터 더 많은 고급 정보와 배경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취재 기자와 정보 소스와의 관계도 결국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보도, 공정한 보도야 말로 서로 간에 신뢰감을 높여 주는 것이다.

사실 보도와 관계된 확인 절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사례를 하나 더 들겠다. 필자가 1977년 베를린 국제신문연구소에 연구원으로 가 있을 때였다. 매주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서구의 권위 있는 신문으로부터 강사진이 베를린으로 초빙되어 와서 특강을 했는데 한번은 영국 〈더 타임스〉의 부국장이 와서 강의를 했다. 그 강사는 오후 시간에 유럽과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온 현역 기자들에게 카메라를 나누어 주더니 베를린 거리에 나가 기사가 될 만 한 좋은 사진 스케치를 해 오라고 지시했다.

필자도 베를린 중심가인 쿠퍼슈텐담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길바닥에 성모 마리아 상을 크게 잘 그려 놓은 한 거리의 화가를 발견했다. 마리아 상 옆에는 행인들로부터 동전을 구하기 위한 빈 깡통이 놓여 있었다. 좋은 스케치감이었다. 그 즉시 성모 마리아 상과 젊은 거리의 화가를 카메라에 몇 장 담았다. 연구소로 돌아와 현상된 연구원들의 스케치 사진들을 살펴 본 영국 강사는 필자의 스케치 사진이 좋아 신문 제작에 쓸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물었다. "이 사진을 찍고 난 후 젊은 화가에게 이 사진을 신문에 써도 좋은 가하고 동의를 구했는가?" 필자는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영국 강사는 "그렇다면 이 사진은 신문에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젊은 화가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이상 만일 신문에 게재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신문에 게재된 사진을 보게 된 화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며 동전을 구하고 있는 이 젊은이를 보고 크게 실망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이었다.

베를린에서 서울로 돌아와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하며 혹시라도 명예훼손이나 사실 보도 지침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고민하다 보니 한동안 글이 잘 써지지 않았다. 이처럼 기사 취재나 보도는 저널리즘의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기자는 객관적 사실 보도와 공정 보도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기사심의에서 발견된 언론의 문제점

그런데 지난 1년간 총선과 대선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갖가지 보도 사례들을 보면 꼭 선거보도 기준에서뿐 아니라, 일반적인 보도 기준에도 맞지 않고 상식선에도 어긋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아 아연할 뿐이다.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민주사회로 크게 발전해 오늘날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의 일원이며 세계의 지도국인 G20 국가 중의 당당한 일원인데 그런 사회 곳곳에 이런 바른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언론'이 활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 보도 사례에서 보듯 선거기사 심의기준과 저널리즘의 일반적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추후에라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일부 '보도 관계자들'의 태도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본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한 일간지는 대통령 선거 전인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특정 예비 후보자의 신상과 행보에 비판적인 칼럼을 계속 게재하면서 단정적이고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사용하는 한편,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부정적인 사실만 선별, 적시함으로써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선심위의 지적을 받았다. 이 일간지 칼럼의 제목은 특정 후보자 즉 'OOO, 국민을 바보로 아나?', 'OOO,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OOO, '꼼수정치'부터 배웠나?' 일색이었다. 위 보도는 심의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상 공정성, 형평성 등 위배로 사과문 게재조치를 받았는데 이 매체는 과거 선거 때마다 지극히 편파적인 칼럼을 계속 실어 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단골로 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광고면도 아닌 보도 기사면에 특정 후보자의 출마 선언문과 성명서, 자세한 이력 사항을 후보 측에게서 받은 그대로 옮겨 놓은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다. 경남지역 K주간지 2012년 1월 18일자 7면 보도이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 아들 OOO,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한 평생 농사일을 천직으로 여겨 고향을 떠나지 않으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여생을 걱정 없이 사셔야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미래를 꿈꾸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손을 잡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새로운 △△△, OOO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 아닌 출마 선언문 바로 뒤엔 이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등 주요 경력이 일목요연하게 붙어 있으며 이어 1월 21일자 1면엔 이런 기사가 나와 있다. "OOO 후보의 OO당 입당은 그동안 입당 불가능을 주장하며 OOO를 압박해 오던 타 경쟁 후보자들에겐 새로운 큰 짐으로 등장한 반면 OOO은 발목에 매여 있던 족쇄를 풀고 훨훨 날게 되었으며...."(이하 생략)

역시 특정 후보자의 '출마 인사'를 그대로 전제한 경기도 한 주간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은 소명을 위해 심사위원회에 나온 자리에서 취재나 기사 작성, 편집 등 저널리즘의 기초 과정도 밟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혼자 기사를 쓰고 제작하는 입장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해 심사위원

들의 탄식이 절로 나오게 만들었다. 심사위원회에 소명 차 나온 어떤 지역 매체의 편집인들은 때로 특정 인물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지역 신문의 특수성과 경영상의 애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역 매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엄연한 언론이고 매스 미디어인 이상 저널리즘의 일반적인 보도 원칙이나 특히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본 더 놀라운 일은 심의에 회부된 해당 매체 측의 소명이 한결같이 "국민과 독자들의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거나 합당한 증거나 근거도 없이 무조건 "사실보도"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저널리즘에선 공정성(Fairness)의 요체로 객관성(Objectivity)과 공평성(Impartiality)을 들고 있다. 공정성이란 기자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선입관 또는 편견을 버리고 취재 대상을 동등하게 대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려 할 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취재 현장에서 뛰다 보면 이 같은 저널리즘의 정도가 그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든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 또는 단체의 호의를 받아선 절대로 안 되며 편파적인 또는 개인이나 단체의 홍보물을 그대로 기사화해선 안 된다. 앞서도 말했지만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홍보물도 사실 여부, 과장 편파 왜곡 여부 등을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선거관련 기사나 글, 홍보물은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사회에서 공정 보도를 위한 지침은 엄격하다. 더구나 선거 보도에 있어 취재 기자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요하고 있으며 후보자와 정당을 어떻게 취재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거 보도와 관련된 보도 칼럼의 수와 길이, 방송 회수까지 정해 각 후보자를 공정하게 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이 엄격한 가이드라인은 자칫 잘못된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줘서 결과를 돌이킬 수 없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된 사례들에서 보듯, 후보자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거나 위원회 자체 조사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건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심의기준을 지키지 않는 데 있는 것보다 해당 언론사의 소명에서 보듯, 심의 지적된 내용 중 상당수의 보도 행태가 저널리즘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재 보도 수준에 못 미치고 또한 '언론'의 기본적인 자질에도 못 미치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앞서 보듯, 후보자 개인 홍보문을 그대로 옮겨 싣고도 이를 취재 기자의 기사라고 하는 데는 그저 아연할 뿐이다. 이는 주간지 등 일부 매체에서만 지적된 사례들이지만 방송이나 인터넷 등 전 매스 미디어 매체를 검색해 보면 그 범위와 위반 내용은 더욱 더 많을 것이다.

우리 사회엔 요즘 언필칭 '언론'이라고 하여 쏟아져 나오는 과장, 허위 '보도'들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성 또는 형평성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해선 주의 권고 경고 사과문 게재 등 제재조치가 심의위에 의해 가해진다. 그러나 현행 제재 조치는 거의 솜방망이에 가깝다. 선진 사회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언론인, 언론은 법적 제재에 앞서 그것으로 언론인, 언론으로서는 끝이

다. 이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 즉 언론의 자유는 책임 있는 보도와 신뢰받는 언론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저널리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도 없고 또 주어져서도 안 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대통령선거기사심의위에서 지난 해 4월 총선이 끝난 이후 12월까지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매체들의 심의기준 위반 내용(자체심의 47건, 시정요구 4건, 재심청구 3건)을 보면 대체로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 여론조사 보도기준과 의견광고제한 위반 등으로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여러 언론 매체들이 아직도 저널리즘의 기본과 보도원칙 그리고 그 사명과 책임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이를 개의치 않거나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적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 윤리마저 알지 못하거나 개의치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 한 가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재조치가 주의나 권고, 경고로 권고나 주의 조치가 가장 많고 사과문 게재, 정정보도문 게재조치는 단 한 건씩이었다. 이는 과연 권고나 주의조치로 잘못된 보도가 시정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한다. 더욱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고도 계속해 선거보도 기준을 위배하는 매체들이 적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를 '솜방망이'로 가볍게 보거나 저널리즘의 기본이나 언론의 책임과는 '무관한 듯한' 불성실한 태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언론의 바른 역할을 위한 제언

이제 결론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첫째는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저질 보도' '저질 언론'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언론사 등록 요건을 강화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난 2010년 2월에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제3조), 등록(제9조),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조), 결격사유(제13조)등 신문 등록에 관한 제반 규정들이 정해져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법률로서 보장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 특히 1960년대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언론윤리위법' 반대투쟁을 겪고 계엄 하에서 한때 신문검열을 받기 위해 신문대장을 들고 지금의 시청에 차려진 검열관실에 가져가 검열을 받으며 기사가 마구 짤려 나가는 고통을 겪었던 필자로서는 언론자유를 옥죄려는 어떠한 기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책임과 언론윤리의 준수가 뒤따른다. 언론 자유라고 해서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전혀 무지한 아무나 '매체'라는 것을 만들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멋대로 '보도'하고 불공정, 편파, 왜곡, 명예훼손을 '보도활동'이라는 포장으로 일삼는다면 이는 사

회에 심각한 해독을 끼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모든 언론활동은 그것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적 또는 윤리적 지침을 존중토록 해야 한다고 본다. 앞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고찰해 보면 제13조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기간행물의 진흥 관련법, 저작권법, 형법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대상자의 결격은 당연하다.

그런데 신문 또는 인터넷 등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려는 사람이 과연 언론인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윤리적 기준 등을 갖추고 있는가는 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등록을 받는 관계 부처가 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 그렇다고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재원 및 시설과 역시 무자격자인 인력을 갖추어 언론 매체로 등록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언론 매체의 등록엔, 앞서 언급했던 대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거나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언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 같은 전문 언론단체가 최소한 자격 검증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 후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아마도 더 좋은 방안도 있을 것이다. 즉 책임 있는 언론 매체의 창업을 위해서는 재원, 시설도 중요하지만 직접 보도활동에 종사할 소정의 자격을 갖춘 편집인 등 보도인력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시설만 갖추고 등록만 한다고 아무나 '언론'이라고 한다면 이는 한때 우리 사회의 병폐의 하나였던 '사이비 언론'을 양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대중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둘째, 선거기사 심의기준에 위배된 매체에 대해선 엄격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사회 전체에 해독을 끼치기 때문이다.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제재란 주의, 경고나 사과문 게재, 정정보도 같은 것이다. 여기에 당장 언론사가 불복할 경우 선심위에서 자체 이행을 담보할 권한은 없다. 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매체를 고발조치 할 수 있을 뿐이다. 심의위원회의 한 법률전문가가 언급했듯이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주의나 경고 받은 사실을 해당 매체가 대외에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제재로 처벌 여부를 떠나 반드시 언론에서 지켜야 한다.

적어도 뚜렷하고도 중대한 불공정, 편파왜곡 ,명예훼손 보도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는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 방안이라고 본다. 가령 서구사회처럼 법의 심판에 넘겨진 위배 매체에 대해 최대한의 경제적 배상을 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매체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일찍이 서구 사회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최대한의 경제적 배상 판결로 이를 감당하지 못한 매체들이 문을 닫게 된 사례들이 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기자 등 보도요원들이 심의기준을 잘 알고 준수함으로써 불공정 보도나 편파적 보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기자들

도 재교육 재훈련이 필요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대학의 저널리즘 스쿨 같은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해 저널리즘의 기초나 언론윤리 같은 것을 다시 연마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인의 전문지식 재충전을 위해서도 좋고 장기적으로 언론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도 필자와 함께 백악관이나 국무부를 출입한 기자들이 1년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들어가 자신의 전문 분야나 뉴 저널리즘 같은 현상을 분석 연마하고 돌아와 다시 보도활동에 더욱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다.

넷째, 선거보도 옴부즈맨 제도나 언론중재위의 심의위원회처럼 불공정 언론 감시기구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구 선진사회의 예를 든다면 애초 '저질언론'이나 '사이비 언론'이 발을 붙일 수조차 없지만 (이는 시민과 대중들의 철저한 외면 때문이다) 서구의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권한도 마치 재판관처럼 강하고 존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선 불공정 언론을 감시, 고발 조치하는 시민단체도 있고 선거법에 의해 운영되는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있지만 이 같은 언론감시 기구들이 상설화되고 그 활동이 법적으로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 사회의 언론은 그 누리는 언론 자유와 함께 언론의 책임과 사명을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갖가지 사례의 선거 기사 보도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허점과 폐해가 보이고 있다.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사회는 언론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우리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채찍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로필

서울대 문리대 영문과 졸
동아일보 논설위원
문화일보 이사 겸 논설주간
현 대한언론인회 주필
현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 본 원고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8대 대선 선심위를 마치며

- 선거기사 개념과 심의기준에 관한 소견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위 원 **이 준 웅**

이 글에서 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 한다. 이 두 사안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 중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며, 대선 선심위 후 구성된 〈선거기사심의 관련 제 규정 개선 소위원회〉에서도 의제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선거기사의 개념과 선거기사 심의기준에 대한 것이다. 향후 새롭게 구성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선거기사의 개념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 중,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사안은 문재인 후보(이하 시정요구인)가 문화일보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사건에서 선거기사의 개념과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시정요구인은 해당 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기사라고 주장했고, 선심위는 기사 내용 시정요구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노 전 대통령 재직시 벌어진 일에 대한 기사로 이번 선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조선일보 대상 시정요구 건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 두 건을 가로지르는 핵심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기사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일견 자명하게 보이는 이 사안이 문제가 된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선거기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제8조의3 1항은 "사설, 논평, 광고 그 밖의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제시할 뿐, 선거기사에 대한 구체적 특성에 대한 다른 기술적 규정이 없다. 요컨대, 조문에 제시된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폭넓게 보아서,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기사로 보느냐, 아니면 좁게 보아서, 선거 과

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정당과 후보 등 당사자와 관련된 경우만을 포함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일단 과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렸던 경우인 총 4건(제18대 총선 2건, 제5회 지방선거 1건, 제19대 총선 1건) 중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2007년 제18대 총선에서 인터넷 신문의 경우 2건, 2008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시정요구인이 후보직사퇴로 시정요구 권리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1건,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대통령후보를 자처하는 시정요구인의 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경우 1건이다. 요컨대, 시정요구인과 기사내용의 관련성을 들어서 각하한 것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심의위원회가 처음이다.

내 의견을 요약하자면, 적어도 시정요구에 관한한 기사내용과 시정요구인의 관련성을 들어서 '기사 내용에 시정요구인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정요구인의 요구를 충분히 살펴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 등 본안을 판단해야 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위임된 임무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논의의 핵심은 선거기사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이다. 선거기사를 구성하는 '선거 관련성'이란 직간접적으로 무한한 속성과 특성에서 발견할 수 있으므로 그 수많은 속성과 특성 가운데 선거기사를 구성하는 '필수적 관련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필수적 관련성'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에서 도출해야지, 상식적 의미나 사전적 정의 등 다른 어떤 기원에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언론이 불공정, 불균형, 비사실적 내용에 기반해서 선거과정 및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목적에 근거해서 선거기사를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선거기사란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기사'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선거기사를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기사라고 규정한다면, 선거기사의 필수 규정요인은 후보자 등 적법한 시정요구인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율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가 되어야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닐 것이다. 특히 시정요구인이 기사 내용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여부와 같은 형식적 요인이 선거기사를 구성하는 필수적 관련성이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어떤 후보자가 기사 내용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더라도, 해당 선거기사가 유권자에게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당 후보의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판단에 대한 영향이 실체적일 것으로 판단되면, 그 기사 내용의 공정성, 형평성, 사실성을 검토하여 선거결과에 부당하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해야 하는 것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목적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어떤 기사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그 기사 때문에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이 영향 받을 수 있다는 명제는 그저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설명되고 경험적으로 검

증된 연구결과이다. 잘 알려진 언론 효과론의 명제 중에 '유권자는 결국 언론이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의제설정이론(the agenda setting theory)이라고 불린다. 이 명제를 따로 검증할 필요가 없다. 이미 수많은 연구에 의해 그리고 경험에 의해 확인된 바이기 때문이다. 이 의제설정이론에 기반한 새로운 언론 효과이론이 지난 15년 간 제시되고 검증되어왔는데, 이른바 점화효과이론(the priming theory of news)이라고 불린다. 이 이론에 따르면, 유권자는 언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사안을 후보자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선거에 임박해서 언론이 안보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면 유권자는 안보를 기준으로 후보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보문제를 중요하게 다룬 언론이 보수 정당의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언론의 점화효과이론을 근거로 언론의 의도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력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물론 무리다. 점화효과는 일종의 조건적 효과의 기초, 기여적 효과, 매개적 효과의 배경이 되는 까닭을 밝히는 이론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점화효과이론은 한 가지 분명한 경험적 사실을 설명한다. 그것은 언론은 특정 사안을 강조해서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권자가 그 사안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보도가 다층적이고, 다면적이며, 여러 상호작용을 거쳐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따라서 언론보도가 복잡할지언정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이런 보도의 영향력이 실체적인지 주의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타당하다면, 선거기사에 직접적으로 후보나 정당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선거기사로서' 취급하고 그 기사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심의 대상으로서의 선거기사는 약간 다른 기준을 적용시킴이 타당하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자체 심의의 대상이 되는 기사를 무한정 넓게 규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선거기간 동안에 출판되는 기사의 양과 범위를 생각해 보면, 제한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심의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모든 선거관련 기사를 심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시정요구 건은 경우를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 등 일응 적법한 시정요구인이 '선거기사의 불공정 등을 이유로 선거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시정요구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그 요구가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즉 기사내용의 불공정성, 편파성, 비사실성 등에 의해 선거과정이나 결과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선거기사 심의기준

선거기사 심의기준의 논리적 일관성, 명확성, 적용가능성이 문제 있다는 지적은 선거기사심의위

원회 내부에서도 반복해서 제기된 문제이다. 2000년 2월 28일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되어 온 선거기사 심의기준은 실제 심의과정에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심의기준 제2조는 심의원칙으로 (1) 선거기사의 공정성, (2)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의 형평성, (3) 사실에 기초한 객관성, (4) 정치적 중립 등을 제시한다. 심의기준 제3조는 이 네 원칙을 양적, 질적 정도와 전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등에 따른 영향력, 선거기사의 게재시기, 반복적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준 제4조, 제5조, 제7조는 각각 공정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것으로서 '공정하게 다루어 보도해야 한다', '편집 및 기사배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제시하는데, 이는 심의원칙을 동어 반복하는 문장일 뿐이다. 반면 제6조는 객관성과 사실보도에 대해 6개의 조항을 들어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사항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룰 것, (2) 사실보도와 의견을 명백히 구별할 것, (3)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 은폐하는 등 왜곡하지 말 것, (4) 취재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후보나 정당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발언을 그대로 전달하지 말 것, (5)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지 말 것, (6) 대담, 토론 등에서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줄 것 등이다.

제4조부터 7조까지 심의기준만 얼핏 보더라도 문제가 많다. 첫째, 체계적이지 않다. 심의기준 제4조, 제5조, 제7조의 내용인 공정성, 균형성, 중립성은 서로 개념적 중첩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별도의 기준으로 서로 구분되어 있으며, 심의기준 제6조의 내용인 객관성과 사실보도에는 공정성, 균형성, 중립성 등과 관련된 내용이 중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뒤죽박죽이다. 둘째, 추상적이다. 공정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 조항들은 동어반복조의 긍정 명령문을 제시할 뿐 별도의 자세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셋째, 비실용성이다. 이 기준을 적용해서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비객관적인 선거기사가 실제 선거과정 및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위의 3가지 문제와 약간 다른 차원에 속하는, 눈에 띄지 않는 미묘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선거기사 심의기준이 설정된 논리적 틀이다. 심의기준의 조항이 긍정적 명령문으로 조문화되어 있으며, 그 긍정적 명령문이 지시하는 구체적 언론의 내용이 명료하게 규정되지 않은데, 이는 자유주의 원칙에 모순되는 논리를 암시한다는 문제가 있다. 과연 자유민주주의 정체에서 '국가가 언론이 공정할 것, 형평을 지킬 것, 객관적일 것,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명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가치에 의거해 볼 때, 자명해서 따로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국가는 기본권을 누리는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어떤 누구라도 선하게 행동할 것을 명령할 수 없다. 국가의 명령이 아니라 요구라 해도 마찬가지다. 또한 개인이 아니라 제도에 적용해도 마찬가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기본권을 갖고 있는 어떤 주체의 선한 행동의

계도자요 양심의 개발자 노릇을 할 수 없다. 아니 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공공선이나 국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언론에 대한 명령을 내릴 때, 국가는 신중해야 한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하는 언론에 대해 국가는 그저 공정해야 한다고 명령할 수 없다. 국가는 언론이 국가안보나 공정선거 등 공공선을 위협하거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언론에 대해 규제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전파라는 공적 자산을 사용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송이 정치적으로 불공정한 보도를 하는 등 공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방송을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해 양심적으로 살라고 명령할 수 없듯이, 언론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양심은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며, 공정함도 언론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명령이 아닌 국민 또는 언론의 자발적 자율규제라면 논리가 달라진다. 즉 위의 조항이 선거기사 심의기준의 조문이 아닌, 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이라면 긍정적 명령문으로 조문화되어도 문제없다. 자율규제의 논리는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스스로 복종하는 논리적 틀을 따르기 때문에 '공정해야 한다'는 식의 긍정적 명령문의 형식이 될 수 있다. 실제 언론사나 언론인들이 스스로 규정하는 언론 윤리 조항은 이렇게 조문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면, 현학적이고 결의론적으로 들리겠지만 (따라서 대세에 지장이 없는 문제제기라 해도 크게 할 말은 없지만), 공직선거법에 조문화된 표현도 개정하는 편이 좋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면서 "방송 보도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의2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제8조의3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비록 이 조항들은 언론이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에 사실상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역시 배경 논리에 따라서 타당하게 조문화하자면 '불공정하게 방송 보도해서는 안 된다', '[선거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불공정성 방송이나 보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조문화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렇다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심의기준이 실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정성, 편향성, 객관성 기준을 선거기사의 내용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요점은 선거기사를 놓고 보았을 때, 그 기사가 '불공정하다' '편향적이다', '객관적이지 않다'고 규정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은 공정성과 편향성 기준을 적용시켜 해결할 수 있기에, 별도의 심의기준으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나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면, 선거기사를 심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공정성 기준

공정성은 개념적으로 담론 내적 공정성, 즉 '기사 내용의 공표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의 의견이 정당하게 기사 내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정식화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정당이나 후보자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에 그 해당 정당 대변인의 해명이나 반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예로, 국토개발에 대한 정부 계획을 보도할 때, (국토개발로 인해 영향 받는 환경은 스스로 말할 수 없으므로) 환경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포함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노동자 단체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기사를 작성할 때, (잠재적 임금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광범위하지만) 경제 전문가의 견해를 포함시키는 것 등이다.

이 원칙을 선거기사에 적용시키면, 어렵지 않게 불공정함을 규정할 수 있다. 기사의 내용이 공표됨으로써 가장 손해(영향)를 받는 자가 누군지 따져서 그의 의견이 해당 기사에 정당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보면 된다. 영향 받는 당사자의 의견을 구할지, 아니면 별도의 대변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지, 또는 해당 기사에 그 의견을 포함시켜야 할지, 별도의 관련기사로 처리하거나 가까운 후속 기사에 포함시킬지 등은 언론사의 편집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또한 불공정함은 정도의 문제일 수 있으며, 맥락에 따라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기에, 현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사의 양적, 질적 정도와 전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등에 따른 영향력, 선거기사의 게재시기, 반복적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균형성 기준

현행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5조는 '형평성'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단어의 함의는 '균형성'에 비해 양적인 대칭적 균형을 과도하게 암시한다는 점에서 '균형성'으로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균형성이라 하면, 양적 차원과 질적 차원의 균형성을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다. 양적인 균형은 후보나 정당에 대한 기사의 양적인 비중을 따지는 것이고, 질적 균형은 후보나 정당에 대한 평가적 강도의 차이를 따지는 것이 된다.

얼핏 생각하면, 균형성 위반, 즉 불균형은 선거기사 심의에서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인다. 후보나 정당에 대한 기사의 양적 차이와 평가적 함의를 갖는 내용의 경중을 따지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오해라고 생각한다. 공정성과 달리 (그것은 기사의 내용이 포함해야 할 목소리를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며, 따라서 주로 형식적 구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규정할 수 있다), 균형성은 어떤 기사에서나 언제나 쉽게 발견할 수 있기에 오히려 형식적인 구성요건으로 삼기 어렵다. 요컨대, 누구나 어떤 기사에서든 어느 정도의 불균형은 항상 발견할 수 있다. 현행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6조는 객관성에 대한 것이지만 불균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6항에

보면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은 사실 있으나 마나다.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정도의 문제로서, 누가 보나 어느 정도 불균형을 감지할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 바로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기사의 불균형 기준을 적용할 때, 기사내용의 불균형 정도를 따져서 심의판단하려 해서는 가망이 없다. 그보다 선거기사의 불균형 정도, 즉 양적, 질적 정도가 심해서 그 기사를 보는 유권자의 판단이 부당하게 영향을 받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불균형임을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 된다. 요컨대, 선거기사의 형식적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균형 여부를 따지기보다 선거기사의 예상된 영향에 대한 효과론적 분석을 통해서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만한 불균형인지 판단할 일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론 연구자처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언론기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타당한 효과론적 분석이지만, 선거기간 동안 이런 분석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의 유일한 방법은 전례를 활용해서 사려 깊게 판단하는 것이다. 선거기사의 불균형 판단은 불가피하게 과거의 전례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양적, 질적 불균형이면 선거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어림짐작해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은 예상된 효과가 산출되는 맥락에 대한 폭넓은 고려와 더불어, 그런 불균형한 보도가 정당한 언론의 활동의 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한 고려와 함께 종합적으로 내려야 한다. 예컨대, 주류적 중앙일간지에서 지속적으로 특정 정당 후보의 사생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그런 사생활에 대한 보도가 후보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평가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후보검증 보도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런 비판적 기사를 쓸 수 있는 사실적 근거를 갖추었는지, 언론윤리적 가치에 따라 보도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균형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3조에 제시된 양적, 질적 정도와 전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등에 따른 영향력, 선거기사의 게재시기, 반복적 위반 여부 등 판단요인들을 적용시켜야 한다.

객관성 기준

객관성은 개념적으로 ‘명제(또는 문장의 내용)가 그 명제가 지시하는 사물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러나 개별 명제의 객관적 일치성을 확인하기란 방법론적으로 어려운 일이며(심지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상 선거기사의 내용이 모두 현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객관성 기준을 언론기사의 요건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언론학에서 말하는 ‘객관성’이란 ‘언론의 객관성 규범’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으로, 객관성

을 보장하기 위한 방책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언론인의 행위적 규범의 집합이다. 언론의 객관성 규범은 (1) 의견과 사실의 구분, (2) 인용문의 구분, (3) 역피라미드식 글쓰기, (4) 기자의 취재대상에 대한 감정적 유착배제, (5) 사실주의적 문체의 사용 등을 포함한다. 즉 언론의 객관성이란 과학자나 철학자의 객관성과는 내용이 다르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도 이런 '언론의 객관성 규범'을 선거기사 심의원칙으로 삼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예컨대,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고, 인용문을 따옴표로 엄밀하게 구분하며, 역피라미드 식으로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드라이'하게 쓴 기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유권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도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언론의 객관성 규범을 실현한 기사는 지배적인 언론의 규범을 따르는 기사일 뿐, 저절로 선거기사 심의에 면제받는 기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선거기사 심의기준으로서의 객관성 기준은 '검증 가능성' 또는 '확인 가능성'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즉 선거기사의 핵심 요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기사 내부에 갖추어져 있는지, 만약 실천적 고려에 따라 '익명의 정보원'이라고 밝힌 경우에라도 별도의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가 객관성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특정 후보의 사생활에 대해 비판적인 함의를 갖는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그런 비판적 평가를 뒷받침하는 증거나 증인이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언론사 측에서 '사실이라고 판단해서 보도할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해서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증거가 아닌 정황적 증거나, 정보원이 별도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주장하는 경우 등은 '검증 가능성' 또는 '확인 가능성'의 충분조건이 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보완적인 근거를 확보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복수의 확인 가능한 증거나 독립된 관점이나 배경을 갖춘 2인의 증인의 존재, 또는 그에 상당하는 확인 가능한 근거의 확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검증 가능성으로서의 객관성이란 제재의 충분조건은 아닌 것 같다. 즉 검증 가능하지 않거나 확인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고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불공정한 기사이면서 확인 가능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거나, 불균형한 기사인 동시에 확인 가능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불공정성과 불균형성이란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적용해서 제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객관성이란 앞서 제시한 두 심의기준, 공정성 기준과 균형성 기준에 따른 결정적 판단에 적용되는 보조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확인 가능한 근거가 없는 선거기사임에 틀림없지만 내용적으로 불공정하지 않거나 효과를 기준으로 보아 불균형하게 기울어지지 않는 기사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이런 선거기사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기본이 안 된 기사' 또는 '수준 낮은 기사'일뿐, 그 자체로 '선거과정이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는 아닌 것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수준 낮은 기사를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현행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6조에 포함된 사항 중에 단지 4항 '사실 확인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이

나 비방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규제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검증 가능성으로서의 객관성 기준'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기준 제6조 5항은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약간 애매하다. 나는 이 기준을 무작정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여론조사나 전문가의 평가 없이 특정 후보가 승리 또는 패배할 것이라는 요지의 선거기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기사를 '객관성 위반'으로 심의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타당한 심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기사가 심의대상이 되어 제재를 받게 된다면, 그 이유는 '근거 없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선거에 불공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어야 한다. 그저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즉 불균형이 문제이고 근거 없이 불균형이어서 심각하게 문제인 것이지, 유권자의 판단이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심의하고 제재할 수 없을 것이다.

덧붙여 의견을 제기하자면,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6조 1항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 2항 '의견과 사실의 분리', 3항 '과장 또는 축소, 은폐하는 등 왜곡' 등은 선거기사 심의기준이 되기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1항은 '다양성 기준'과 '객관성 기준'이라는 구분되는 2개의 기준을 모호하게 혼합시킨 것으로 명료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 2항은 누구도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 '의견과 사실의 구분'이란 원칙을 무리하게 선거기사 심의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주는 기준이다. 3항은 얼핏 보기에 정당한 기준 같지만, '축소, 은폐 등 왜곡'과 '언론의 일상적 뉴스 가치 판단, 정당한 게이트키핑, 관행적 편집, 언론인의 글쓰기 스타일'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역시 실효적 심의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축소, 은폐 등 왜곡'이 엄밀하게 규정되기 위해서는 관점독립적인 사실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전제조건(즉 사실 검증 가능성의 조건)만 충족하면 내가 말하는 제3의 선거기사 심의기준인 객관성 조건이 충족된 것과 같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프로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학사, 석사)
미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 박사
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본 원고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장

결산좌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좌담

♣ 일 시 : 2012. 12. 28.(금) 17:00
♣ 장 소 : 위원회 회의실

♣ 참 석 자 ♣

박 기 동 (심의위원장, 만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원 병 설 (부위원장, 배재대 초빙교수)
문 명 호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박 석 태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김 택 근 (전 경향닷컴 사장)
권 문 한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오 세 헌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준 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여 종 국 기사심의팀장 및 기사심의팀 직원 1명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활동을 마무리하는 좌담회를 열고,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보도 실태와 심의위원회 운영성과, 제도상의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의위원장 : 오늘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기사를 심의하기 위해 4월 22일에 구성되어 자체심의 47건, 시정요구 4건 및 재심청구 3건 등 총 54건을 처리했습니다.

기사심의팀장 : 금번 선심위의 처리 실적은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자체심의는 12건이, 시정요구는 2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심의 47건을 결정유형별로 보면, 사과문 게재 1건, 경고 8건, 주의 27건, 권고 11건입니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여론조사 보도기준 위반이 12건, 인물 부각이 11건, 의견광고 10건, 정책비교 금지 위반이 8건, 기고 금지 위반 4건, 인물 비방 및 사실보도 위반이 각각 1건입니다.

후보자의 시정요구는 총 4건으로, 정정보도문 게재 1건, 취하(반론보도문 게재) 1건, 기각 1건, 각하 1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선거기사심의위에서는 지난 제17대 대선 선심위보다 다양한 위반 유형을 심의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했다고 생각"

박기동 위원장

심의위원장 : 금번 선거기사심의위에서는 지난 제17대 대선 선심위보다 다양한 위반 유형을 심의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선 선심위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위원회에서 의미있었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에서 심의위의 상설화 및 여러 개선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를 바래"

원병설 부위원장

원병설 부위원장 :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서 1년 내내 선거기사심의를 했습니다. 맡은 바 소임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잘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언론중재위에서 심의위의 상설화 및 여러 개선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선심위가 내린 결정이 주의, 경고가 대부분인데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주의나 경고 받은 사실을 대외에 공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오세헌 위원

오세헌 위원 :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법조항이 발견되면 중재위 차원에서 정리해서 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심위가 내린 결정이 주의, 경고가 대부분인데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주의나 경고 받은 사실을 대외에 공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에 쟁점이 된 선거기사의 범위 등 기본적인 문제는 향후 심의위가 구성되는 시점에서 미리 정리하고 심의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

권문한 위원

권문한 위원 : 이번 대선 기간에 쟁점이 된 선거기사의 범위 등은 기본적인 문제로 향후 심의위가 구성되는 시점에서 미리 정리하고 심의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석태 위원 : 선심위 제재가 실효성을 갖을 수 있도록 제재조치를 좀 더 다양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제재가 언론을 처벌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언론, 바른 선거를 치르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고 등 제재를 한 이후에 언론사의 불공정 보도 태도의 개선이나 변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만일 태도변화가 없다면 제재나 벌칙이 강화되어야"

문명호 위원

문명호 위원 : 각 사회의 분야가 언론을 포함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만, 불공정하고 편향되고 왜곡된 언론보도가 올해 총선, 대선 심의 과정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향후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각각의 쟁점에 대해 판단이 다를 수도 있지만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은 기구이긴 하지만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경고 등 제재를 한 이후에 언론사의 불공정 보도 태도의 개선이나 변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일 태도변화가 없다면 제재나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자료를 가지고 언론사를 상대로 교육도 필요합니다.

심의위원장 : 이번 대선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와 관련해서 그동안 당연시 여겨지던 여러 쟁점이 불거진 위원회였습니다. 시정요구를 통해 반론을 요청하는 경우에 반론보도청구회부 조항의 제척기간 적용 문제, 선거기사의 범위 문제,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광고에 대한 심의 여부 문제 등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원병설 부위원장 : 반론보도청구회부와 관련해서 청구 기간도 중요하지만 청구 내용도 실제 반론보도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기사의 범위를 정할 때 특정 정당의 유·불리 여부만 보지 말고 기사의 내용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으며, 정치적으로 논란이 돼서 선거쟁점화한 경우에만 선거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심위는 선

거보도의 불공정성을 신속히 교정하는 제재기구인 점을 고려하면, 의견광고나 상업광고에 대해 선관위의 고발 조치와 별개로 선심위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명호 위원 : 선거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기사 자체가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 지를 따져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보도인 경우에는 선거기사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요구에도 제척기간이 필요하지만, 현행 반론보도청구회부 조항의 제척기간은 너무 짧으므로 이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신문의 경우는 인터넷신문이나 방송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거보도의 범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봐야 하며, 해당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줬고 피해자도 있다면 선거보도로 봐서 심의해야"

김택근 위원

김택근 위원 : 대선 선심위 전까지 시정요구에 제척기간을 적용한 전례도 없고, 한참 전에 보도가 난 경우에도 시일이 흐른 후인 선거기간에 논란이 되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정요구에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보도의 범위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봐야 하며, 선거에 영향을 줬고 피해자도 있다면 각하하지 않고 심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권문한 위원 : 선거기사의 범위에 관해서는 보도 당시에 이슈가 된 사안인 경우만 선거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피해자는 선심위가 아니더라도 언론중재위 일반 조정절차 이용도 가능한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세헌 위원 : 입법자가 반론보도청구회부조항에 제척기간을 별도로 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원 보도가 나온 직후 최대한 속히 반론이 나가도록 한 취지이므로 시정요구에도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후보자가 선거 한참 전에 나온 보도에 대한 반론을 선거 직전에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무작정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사기업인 언론사의 재원마련 수단인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선거법상 시정요구에는 제척기간이나 청구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반론보도청구회부조항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필요는 없어"

이준웅 위원

이준웅 위원 : 선거법상 시정요구에는 제척기간이나 청구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반론보도청구회부조항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거기사 여부에 대해서는 관행에 따라 정해온 점을 고려해야 하며, 시정요구인이 해당 기사에 대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하자가 없으면 해당 신청을 그냥 각하하지는 말고 심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선관위의 심의를 거친 적법한 선거광고는 선심위에서 심의하기가 부적절하므로 제외하고, 현행대로 의견광고 등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심의위원장 :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선심위 상설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 선심위 때 논란이 된 부분뿐만 아니라 법률, 규칙,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사무처에서 선거법 개정 등 선심위 제도 및 운영을 전담할 상근 인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공약 비교 평가 보도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지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

박석태 위원

박석태 위원 : 공약에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지 말고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선심위의 건설적인 논의사항이 제도개선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구의 상설화를 통해 지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후 위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문한 위원 : 이번 심의를 하면서 공약에 서열을 매기지 말라는 규정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일선 언론사에서는 이런 규정에 대해 잘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에 미리 해당 규정의 의미와 취지를 전파하거나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장 : 결론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총 4개의 선거기사심의위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역량을 잘 가다듬으면 상설화 등 제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대선 선심위를 위해 심의에 애써 주시고 활발히 의견 개진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기사심의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 좌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 사례

제 4 부

제 1 장 자체심의

제 2 장 시정요구심의

제1장 자체심의

1. 사과문 게재

의 결 번 호	2012대선19(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시민일보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3-22 대표이사 최 정 호
심의대상기사	시민일보 2012년 9월 10일자 5면 「안철수, 국민을 바보로 아나?」, 9월 11일자 5면 「안철수,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9월 12일자 5면 「안철수 '불출마 종용' 진실은?」, 9월 13일자 5면 「안철수, '꼼수 정치'부터 배웠나」, 9월 14일자 5면 「안철수, 킹이냐 킹메이커냐」, 9월 17일자 5면 「안철수 발목 잡는 '안철수의 생각'」, 9월 18일자 5면 「문재인, 안철수에 '책임총리' 추파」 제하의 칼럼(총 7개)
주 문	1. 위 심의대상 칼럼에 대해 사과문 게재를 명한다. 2. 위 언론사는 2012년 10월 5일(금)까지 〈시민일보〉 1면 좌측 상단 위치에 〈별지 1〉 보도문을 2단 이상의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 칼럼의 제목 크기 및 활자와 동일하게 하고 제목의 각 글자 사이를 1칸 이상 두며, 기사 본문은 심의대상 칼럼의 본문 활자 크기보다 1단계 크게 하고 제목과 본문 사이 최소 1줄 이상 간격을 둔다(문단 구분할 것과 제목글자 크기 및 글자 수 축소 불가. 제목 넘칠 경우 2단으로 할 것).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신상과 행보에 비판적인 칼럼을 여러 번 지속적으로 게재하면서 단정적이고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사용하는 한편, 자극적인 제목을 게재하고 부정적인 사실만 선별·적시함으로써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는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제1항, 제15조(기사제목)을 위반한 위 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과문

1. 제　목 : 사과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본지 9월 10일자 5면 「안철수, 국민을 바보로 아나?」 제하의 칼럼 등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7건의 칼럼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중립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사과문 게재를 결정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본지가 특정 예비후보자의 신상과 행보 다룬 칼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면서, 단정적이고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사용하고, 부정적인 사실만 선별해 서술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본지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해 독자 및 유권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을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유념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내용

안철수, 국민을 바보로 아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의 '대선 불출마 협박' 폭로 사건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안철수 원장 측 대변인으로 나선 금태섭 변호사는 "9월 3일 오전 새누리당 측이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대선 불출마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제법 그럴 듯 해보였다. 뭔가 대단한 음모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가 지목한 '새누리당 측 관계자'라는 사람이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정준길'이라는 이름이 너무 생소할 뿐만 아니라, '공보위원'이라는 그의 직책을 볼 때,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를 협박할만한 위치에 있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안 원장측은 그를 협박 당사자로 지목하면서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것까지 열었다.

대체,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 금 변호사와 정 전 위원이 지난 4일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걸 빌미로 금 변호사는 정 전 위원이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 전 위원은 "친구끼리 한말"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금 변호사는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라며 친구가 사이가 아니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정 전 위원과 금 변호사가 '편하게 얘기하는 친한 사이(정준길 주장)'인지, '친한 사이가 아닌(금태섭 주장)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중략)

이 같은 논쟁을 지켜본 국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 주었을까?

'안철수 불출마 종용 폭로' 후 지지율 변화를 보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오른 반면 안 원장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다.

실제 지난 7일 실시한 리얼미터 · JTBC 여론조사 결과 다자대결에서 박 후보 지지율은

42.4%로 기자회견이 진행된 전날(40.7%) 대비 오히려 1.7%포인트 올랐다. 반면 안 원장 지지율은 23%로 전날(23.2%)보다 되레 0.2% 포인트 떨어졌다.

물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다.

문 후보 지지율은 17.5%로 전날(17.3%) 대비 0.2%포인트 올랐지만 기자회견 전날(18.8%)에 비해선 1.3%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안 원장의 기자회견으로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이 하락한 문 후보에게 불똥이 튀었다"며 "안 원장과 문 후보 양자구도에서 지지율 격차가 기자회견 3일전 9.1%포인트였던 게 전날 2.7%포인트로 좁혀지니까 격차를 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야권 단일후보 경쟁상대인 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을 것이란 뜻이다.

결국 그의 전략은 주효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9연승을 거둔 문재인 후보의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안 원장 자신의 지지율도 덩달아 추락하고 말았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안 원장 측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지금 '정치를 위해 친구의 우정까지 팔아먹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치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안철수, 국민을 바보로 아나?



아침햇살

고하승 편집국장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의 '대선 불출마 협박' 폭로 사건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안철수 원장 측 대변인으로 나선 금태섭 변호사는 "9월 3일 오전 새누리당측이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대선 불출마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제법 그럴 듯 해보였다. 뭔가 대단한 음모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가 지목한 '새누리당 측 관계자'라는 사람이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고개를 가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정준길'이라는 이름이 너무 생소할 뿐만 아니라, '공보위원'이라는 그의 직책을 볼 때,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를 협박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안 원장측은 그를 협박 당사자로 지목하면서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것까지 열었다.

대체,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 금 변호사와 정 전 위원이 지난 4일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걸 빌미로 금 변호사는 정 전 위원이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 전 위원은 "친구끼리 한말"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급 변호사는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라며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정 전 위원과 금 변호사가 '편하게 얘기하는 친한 사이(정준길 주장)'인지, '친한 사이가 아닌(금태섭 주장)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금 변호사는 "통화·문자메시지 수신 기록을 보니까 작년 12월3일 정 위원이 '출판기념회를 한다'면서 단체 문자를 보냈다. 나는 출판기념회에 가지도 않았는데 13일 후인 12월16일 출판기념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단체 문자가 또 하나 왔다"며 "그 외에는 전혀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문자 한 통이 더 오고 나서 관련된 전화를 한 통화 정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 전 위원이 공개한 금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지난 8월27일 오후 10시 금 변호사에게 '대섭아, 수고 많지? 산업은행 관련 안철수 연구소 부분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정이 있다. 참고하기 바래'라는 내용이 있었고, 금 변호사는 약 3시간 뒤인 28일 새벽 1시쯤 '다른 사정이 뭐니, 준길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전화줘^^'라고 답문을 보냈다.

두 사람이 금 변호사의 주장처럼 잘 모르는 사이라면, 새벽 1시에 문자를, 그것도 반말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

정 전 위원은 지난 7일 공보위원직을 사퇴하며 금 변호사에게 "이번 전화 통화 이전에도 메시지와 전화로 새누리당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에 안철수 교수님께서 와서 강의를 해주실 수 있는지 의논하는 등 나름 대학 사정에 꿈꾸어 왔던 국민이 바라는 정치문화를 만드는데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라며 아쉬운 마음을 표했다.

이같은 논쟁을 지켜본 국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 주었을까?

'안철수 불출마 종용 폭로' 후 지지율 변화를 보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오른 반면 안 원장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다.

실제 지난 7일 실시한 리얼미터·JTBC 여론조사 결과 다자대결에서 박 후보 지지율은 42.4%로 기자회견이 진행된 전날(40.7%) 대비 오히려 1.7%포인트 올랐다. 반면 안 원장 지지율은 23%로 전날(23.2%)보다 되레 0.2%포인트 떨어졌다.

물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다.

문 후보 지지율은 17.5%로 전날(17.3%) 대비 0.2%포인트 올랐지만 기자회견 전날(18.8%)에 비해선 1.3%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안 원장의 기자회견으로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이 하락한 문 후보에게 불똥이 튀었다"며 "안 원장과 문 후보 양자구도에서 지지율 격차가 기자회견 3일전 9.1%포인트였던 게 전날 2.7%포인트로 좁혀지니까 격차를 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야권 단일후보 경쟁상대인 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을 것이란 뜻이다.

결국 그의 전략은 주효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9연승을 거둔 문재인 후보의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안 원장 자신의 지지율도 덩달아 추락하고 말았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안 원장 측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지금 '정치를 위해 친구의 우정까지 팔아먹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치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안철수,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권 단일화 양자구도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막상막하의 팽팽한 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경선에서 10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반면, 안철수 원장은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 이후 되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9월 첫째주 주간집계에 따르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주일 전 대비 2.2%p 상승한 37.4%를 기록한 반면, 안철수 원장은 2.9%p 하락한 40.0%로 두 후보 간 격차는 2.6%p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75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6%p다.

그러면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가.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 95%, 오차 ±3.1%포인트)에서도 안 원장의 지지율은 42.5%로 36.9%의 지지를 받은 문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신뢰도 95%, 오차 ±3.1%포인트) 역시 양자대결에서 안 원장 43.0%, 문 후보 40.4%로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또 매일경제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 95%, 오차 ±3.1%포인트) 결과, 야권후보 단일화 조사에서 안 원장은 42.0%로 38.9%의 지지를 받은 문 후보를 오차범위인 3.1%p 이기는데 그쳤다.(후략)



오피니언 제2980호 2012년 9월 11일 화요일 5

안철수,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아침햇살

고하승 편집국장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권 단일화 양자구도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막상막하의 팽팽한 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경선에서 10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반면, 안철수 원장은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 이후 되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9월 첫째주 주간집계에 따르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주일 전 대비 2.2%p 상승한 37.4%를 기록한 반면, 안철수 원장은 2.9%p 하락한 40.0%로 두 후보 간 격차는 2.6%p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75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6%p다.

그러면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가.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 95%, 오차 ±3.1%포인트)에서도 안 원장의 지지율은 42.5%로 36.9%의 지지를 받은 문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신뢰도 95%, 오차 ±3.1%포인트) 역시 양자대결에서 안 원장 43.0%, 문 후보 40.4%로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또 매일경제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 95%, 오차 ±3.1%포인트) 결과, 야권후보 단일화 조사에서 안 원장은 42.0%로 38.9%의 지지를 받은 문 후보를 오차범위인 3.1%p 이기는데 그쳤다.

심지어 문 후보가 비록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안 원장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겨레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일 유권자 7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 95%, 오차 ±3.7%포인트)에서, 야권 후보 적합도는 안 원장(40.9%)이 민주당 후보(42.6%)에게 오차범위에서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블론 안 원장과 문 후보가 이처럼 접전양상을 보이는 데에는 '역선택' 효과가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지지자들이 박 후보와 대립각을 보이는 안 원장 대신 문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란 뜻이다.

실제 KSOI 조사에서 박 후보 지지자 중 야권단일화 후보로 민주당 후보를 꼽은 사람이 54.1%로 안 원장(22.6%)보다 배 이상 많았고, R&R 조사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층의 48.0%가 문 후보를 지지한 반면, 안 원장은 33.6%만 지지했을 뿐이다.

한길리서치 조사 역시 새누리당 지지층 중 문 후보 지지율이 49.6%로 안 원장(25.4%)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역선택'으로 인해 무너질 정도라면, '안풍(安風, 안철수 바람)'은 생각처럼 그다지 위협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특히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나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더욱 상승세를 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 후보의 지지율이 안 원장의 지지율을 뛰어 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문 후보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당의 뒷받침이 없는 안 원장은 '나 홀로'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게임은 애초부터 승산 없는 싸움이었다.

따라서 안철수 원장의 역할은 여기까지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즉 막강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맞서 '야권도 한 번 해볼 만하다'는 꿈을 갖게 하는 것으로 그의 역할을 다했다는 말이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 여당의 박근혜 후보로 하여금 긴장감을 갖게 하고, 새누리당에도 변화와 쇄신의 바람이 불게 했다는 것이다.

사실 그 정도의 역할이면, 안 원장은 할 만큼 했다. 더 이상의 욕심은 금물이다.

그럼에도 안 원장이 끝까지 대선 출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추락의 끝이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고, 추락하는 지점은 '밤바닥'이라는 사실이다.

안철수 '불출마 종용' 진실은?

최근에 안철수 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의 '불출마 종용' 폭로기자회견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치학부 교수는 1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만약 새누리당이나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이 정말로 불출마 협박을 하려고 했다면 이런 방식으로 했겠느냐"며 '협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김종배 평론가는 "협박이냐 아니냐는 그 발언한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당사자가 협박이라고 느꼈으면 협박'이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친구끼리 오갈 수 있는 말'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한 쪽이 친구라고 하지만 한 쪽이 아니라면 친구가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다.

둘 사이가 그런 말을 주고 받을만한 친구인지 아닌지는 오직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중략)

특히 안 원장이 불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 책임을 여권에 돌리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만일 안 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은 '불출마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 불 보듯 빤하지 않은가.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추측일 뿐이다. 부디 이런 예상이 엇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안철수 '불출마 종용' 진실은?

최근에 안철수 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의 '불출마 종용' 폭로기자회견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치학부 교수는 1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만약 새누리당이나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이 정말로 불출마 협박을 하려고 했다면 이런 방식으로 했겠느냐"며 '협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김종배 평론가는 "협박이냐 아니냐는 그 발언한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당사자가 협박이라고 느꼈으면 협박'이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친구끼리 오갈 수 있는 말'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한 쪽이 친구라고 하지만 한 쪽이 아니라면 친구가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다.

둘 사이가 그런 말을 주고 받을만한 친구인지 아닌지는 오직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침햇살

고하승 편집국장

더구나 기자회견장에 동행한 인사는 안 원장이나 유대변인이 아니라,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이라는 점도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먼저 이 문제를 곰곰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건을 이렇게 키운 사람이 누구인가. 금 변호사다.

엄청난 문제를 제기했지만, 명백한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단지 두 사람 사이에 전화 통화했다는 사실이 전부다.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금 변호사가 정말 '협박'으로 느꼈다면, 당시에는 녹취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전화를 걸어 물어보면서 녹취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건 협박이다'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것도 전화통화한지 이틀이나 지난 후에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이를 '불출마 협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뭔가 어색하지 않은가?

결국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금 변호사 혼자 듣고, 혼자 기자회견을 결정하고, 그래서 안 원장을 비롯해 정치권이 그의 장단에 놀아나는 셈인데, 과연 이게 정상적인가?

혹시 어떤 다른 흑막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안 원장은 대선출마 보다는 오히려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 그는 최근 "목표가 대통령이 아니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식으로든 일조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장이 불출마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을 하기에 충분한 발언이다.

진보진영은 이런 분위기를 일찌감치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최근 안 원장에게 서신을 보낸 도올 김용옥 교수(한신대 초빙교수)이 "이미 안 원장이 차지하고 있는 역사의 하중은, 그가 빠져나올 경우 그 공백을 아무도 메울 수 없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은 상처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없다. 후회하면 나쁜 놈이 된다"고 출마를 종용하고 나섰는가하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등 범야권 시민사회 원로들의 모임인 '희망2013 승리 2012 원탁회의'가 "돌아갈 시점이 지났다"며 안 원장의 출마를 적극 종용한 바 있다.

어쩌면 민주당 송호창 의원이 동행한 가운데 열린 금 변호사의 기자회견은 안 원장을 향한 '출마 압력'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즉 안 원장 측근이라는 금 변호사와 민주당 일부 인사가 결탁해 안 원장이 대선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기자회견을 강행했을 것이란 뜻이다.

만일 안 원장이 고심 끝에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그는 금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문제, 즉 뇌물과 여성문제 때문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바로 그 점을 노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안 원장이 불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 책임을 여권에 돌리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만일 안 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은 '불출마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 불 보듯 빤하지 않은가.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추측일 뿐이다. 부디 이런 예상이 엇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오피니언 제2982호 2012년 9월 13일 목요일 5

안철수, '꼼수 정치' 부터 배웠나



아침햇살

고 하 승 편집국장

금태섭 변호사의 입에서 촉발된 '안철수 불출마 협박' 파문이 급기야 자신을 택시기사라고 밝힌 정체불명의 사나이 입을 통해 결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 이성을 가지고 조금만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사건이라고 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우선 친구끼리의 대화를 '협박'이라고 주장한 금 변호사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 웃기는 것은 자칭 택시기사라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각 언론이 앞 다퉈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금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그 택시기사 역시 아무런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그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어떤 증거가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실내에는 녹화장치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그는 "있다"면서도 "내부는 녹화가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회자가 '그러면 외부를 비추는 블랙박스에는 정준길 전 공보위원의 모습이 잡혔을 수는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그는 "지금 현재까지는 확인된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이 전화 끊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결정적인 증거가 거기에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라고 말했고, 그는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확인은 안 한 상태"라고 거듭 밝혔다.

이 얼마나 웃기고 황당한 이야기인가.

그런 중요한 제보를 하는 사람이 당연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블랙박스조차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니, 그의 말을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일까?

사실 이번 사건은 실체가 없다.

물론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이 잘못 한 것은 맞다.

공식 직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해도 할 말 못할 말이 있는데, 그를 구분하지 못하고 너무 기법게 처신했다는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자신의 조언을 협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친구로 둔 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하지만 그 잘못에 비해 안철수 원장 측의 잘못은 너무나 크다.

우선 금 변호사는 이런 중차대한 사실을 폭로하려면 최소한 국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어야 옳았다.

그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먼저 전화를 받을 때에는 경황이 없어 녹취를 하지 못했더라도, 다시 전화를 걸어 '내게 그런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묻고 정 전 위원의 발언을 녹화했더라면, 국민들이 그 말을 듣고 '협박'인지, 아니며 '친구 사이의 조언'인지 판단할 수 있었을 것 아니겠는가.

이제 불과 대통령 선거가 90여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막가파식으로 먼저 폭로부터 해 놓고, 사실여부를 논쟁하자는 것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검증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생각되기 십상이다.

아무런 근거 없는 택시기사의 일방적 제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안 원장 측이 이러는 것은 정말 실망이다.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기존 정당의 구태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이 당 밖에 있는 안 원장에게 '참신'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아니겠는가.

그런데, 기존 정당도 감히 상상하기 힘든 '막가파 폭로 정치'를 태연하게 구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는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물론 새누리당이 정말 조직적으로 안철수 원장에게 협박을 했다면, 박근혜 후보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 가운데 박 후보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누가 뭐래도 이번에는 안 원장 측이 자충수를 두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참신한 정치를 기대했는데, '꼼수 정치'라니 정말 실망이다.

안철수, '꼼수 정치'부터 배웠나

(전략) 이제 불과 대통령선거가 90여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막가파식으로 먼저 폭로부터 해 놓고, 사실여부를 논쟁하자는 것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검증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생각되기 십상이다.

아무런 근거 없는 택시기사의 일방적 제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안 원장 측이 이러는 것은 정말 실망이다.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기존 정당의 구태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이 당 밖에 있는 안 원장에게 '참신'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아니겠는가.

그런데, 기존 정당도 감히 상상하기 힘든 '막가파 폭로 정치'를 태연하게 구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는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물론 새누리당이 정말 조직적으로 안철수 원장에게 협박을 했다면, 박근혜 후보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 가운데 박 후보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누가 뭐래도 이번에는 안 원장 측이 자충수를 두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참신한 정치를 기대했는데, '꼼수 정치'라니 정말 실망이다.

안철수, 킹이냐 킹메이커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오는 16일, 혹은 늦어도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경선 결선투표가 끝나는 시점인 23일 직후에는 이번에 대통령선거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불출마를 선언하고 다음을 기회를 기다릴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

현재로서는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비교적 안 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송호창 의원은 13일 "안 원장은 흔들리지 않고 나갈 것"이라며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게 문제다.

일단 안 원장의 지지율은 추락하는 반면, 야권 후보단일화 대상인 문재인 후보는 마치 날개라도 단 듯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중략)

따라서 안 원장이 출마를 선언하기보다는 '불출마'를 선택하거나 '독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안 원장의 출마를 재촉하거나, '불씨'가 되기를 강요하는 것도 안 원장이 이런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원장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킹메이커'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안 원장은 대선 출마여부에 대해 뚜렷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없다. 물론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야권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구상하는 일정표나 방식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어쩌면 민주당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지도 모른다.(후략)

안철수, 킹이냐 킹메이커냐



아침햇살

고하승 편집국장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오는 16일, 혹은 늦어도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경선 결선투표가 끝나는 시점인 23일 직후에는 이번에 대통령선거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불출마를 선언하고 다음을 기회를 기다릴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
현재로서는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비교적 안 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송호창 의원은 13일 "안 원장은 흔들리지 않고 나갈 것"이라며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게 문제다.
일단 안 원장의 지지율은 추락하는 반면, 야권 후보단일화 대상인 문재인 후보는 마치 날개라도 단 듯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리얼미터'가 지난 10~11일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야권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문 후보의 지지율은 44.2%로 전일(39.5%)보다 4.7%p 올랐다. 반면 안 원장은 34.5%로 전일(37.1%)보다 2.6%p 감소했다. 이로써 양자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9.7%p로 크게 벌어졌다.
더구나 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될 경우에 그의 지지율은 더욱 오를 것이고, 상대적으로 안 원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문 후보는 '제1야당'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뒷받침해 주고 있는 반면, 안 원장은 그런 정치 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그렇다고 안 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동안 안 원장 스스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기존 정당의 구태를 신랄하게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 안 원장이 출마를 선언한 뒤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무소속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신당 창당을 통한 제3세력화 방법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원장은 치열한 경선을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면 안 원장이 유리하고,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면 문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이제는 안 원장이 문 후보를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오히려 여론조사에서도 안 원장이 뒤처지고 있다.
안 원장 측이 이른바 '김정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의 불출마 협박' 폭로 기자회견을 한 이후,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투표는 더욱 불리하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나타났듯이 문 후보는 친노 세력의 조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단일 후보를 확정지어야 하는데 후보단일화 논의에서 안 원장이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안 원장이 출마를 선언하기보다는 '불출마'를 선택하거나 '독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안 원장의 출마를 재촉하거나, '불씨'가 되기를 강요하는 것도 안 원장이 이런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원장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킹메이커'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안 원장은 대선 출마여부에 대해 뚜렷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없다. 물론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야권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구상하는 일정표나 방식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어쩌면 민주당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지도 모른다.
최근 경희대 4학년에 재학중인 아마추어 모델 김세영씨가 등장하는 모 그룹 기업광고가 화제다.
그는 '시람이 미래다' 기업광고의 9번째 시리즈 '믿음 편'에서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오늘따라 그 광고가 귀에 쏘옥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피니언 제2984호 2012년 9월 17일 월요일 5

안철수 발목 잡는 '안철수의 생각'



아침햇살
고하승 편집국장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가도에 발목이 잡혔다.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최근에 발간한 '안철수의 생각'이다.

우선 그가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그의 과거행적 간의 불일치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생각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어야만 했다.

특히 책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은 매우 신랄하다.

한국경제 정규재 논설실장은 '착한, 너무 착한 안철수'라는 제목의 책에서 "일부 좌파세력들이 말한 걸 안 교수가 대학 1학년생처럼 따라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안철수의 생각' 출판으로 단숨에 대권 유력주자 반열에 오른 그가 이제는 되레 그 책으로 인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실제 안 원장과 야권 단일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 관계에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안 원장의 지지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6일 모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후보와 안 원장 중 누가 야권 단일후보로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문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48.6%에 달했다. 반면 안 원장을 선택한 응답자는 고작 31.8%에 불과했다. 두 후보 간 격차가 무려 16.8%포인트에 달하는 것이다.

사실 책이 출간될 당시만 해도 문 후보는 안 원장의 게임 상대가 못됐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원장의 지지율이 문 후보 지지율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왔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의 지지율을 띄워주던 '안철수의 생각'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역적인 현상이 아니다.

안 원장(50.9%)은 호남권에서만 유일하게 문 후보(35.0%)를 따돌렸을 뿐, 수도권과 영남권, 충청권, 강원 권 등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문 후보에게 뒤졌다.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말이다.

특히 안 원장을 든든하게 발쳐주었던 20대와 30대에서도 문 후보에게 밀렸다. 그들이 '안철수의 생각'과 '안철수의 행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다자대결에서는 42.9%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이어 안 원장이 22.9%로 2위를 차지했지만 이는 불과 일주일 전 조사 때에 비해 6.3%p가 하락한 수치다. 반면 17.9%로 3위를 차지한 문 후보는 4.5%p가 올랐다.

이런 상태라면 다자대결에서도 안 원장이 문 후보에게 밀리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더구나 '안 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경우 지지 후보를 안 원장으로 바꿀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52.5%의 응답자가 '바꿀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 상당수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들이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안철수 원장에게 표를 주느니, 차라리 대통령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14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48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4%포인트다.

그렇다면 안 원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동안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 안 원장의 출마여부를 묻는 질문에 출마하지 않기를 바라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

한겨레신문이 지난 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마찬가지다.

'안 원장이 출마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출마해야 한다'(39.6%) 응답보다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49.0%)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 격차가 무려 9.4%p에 달한다.

따라서 안 원장은 대선출마를 고집하거나 정치권에 직접 뛰어드는 것보다는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뜻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권력 나누기'의 일환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불러서는 모양새를 연출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정당정치의 쇄신을 명분으로 독자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백번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안철수의 생각'에 발목이 잡힌 안 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안철수 발목 잡는 '안철수의 생각'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가도에 발목이 잡혔다.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최근에 발간한 '안철수의 생각'이다.

우선 그가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그의 과거행적 간의 불일치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생각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어야만 했다.

특히 책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은 매우 신랄하다.

한국경제 정규재 논설실장은 '착한, 너무 착한 안철수'라는 제목의 책에서 "일부 좌파세력들이 말한 걸 안 교수가 대학 1학년생처럼 따라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안철수의 생각' 출판으로 단숨에 대권 유력주자 반열에 오른 그가 이제는 되레 그 책으로 인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중략)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정당정치의 쇄신을 명분으로 독자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백번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안철수의 생각'에 발목이 잡힌 안 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문재인, 안철수에 '책임총리' 추파



아침햇살

고하승 편집국장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경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후보가 지난 16일 후보수락연설을 통해 '책임총리제'를 언급했다.

물론 이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문 후보는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동정부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총리직을 줄 테니 자신을 중심으로 후보단일화를 하자는 요구인 셈이다.

한마디로 '권력 나눠먹기' 제안이다.

앞서 문재인 후보는 경선 직전에 안철수 원장에게 '공동정부'를 제안한 바 있다.

문 후보가 제안한 공동정부는 일종의 '유럽식 연합정부'와 같은 것이다.

즉 서로 다른 두 세력이 연합 정부를 구성하면서 향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점을 명확하게 문서화 하자는 제안이다.

그 일환으로 문 후보가 이번에는 '책임총리'를 언급했다.

결국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공동정부를 만들되,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총리를 맡자는 제안인 셈이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철수 원장이 총리를 맡고, 안 원장이 대통령이 되면 문 후보가 총리를 맡자는 것이다.

따라서 문 후보가 비록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권력 나눠 먹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사실 문 후보가 '담판'으로 후보단일화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 데에는 '책임총리'가 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다.

실제 문 후보 측은 정치협상을 통한 담판을 선호하고 있다.

1997년 대선 당시 이뤄진 이른바 'DJP 연합'과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안철수 교수가 조건 없이 무소속 박원순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문재인 후보 경선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아온 노영민 의원과 우윤근 의원은 모두 '담판론'에 무게를 실었다.

노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권교체를 위해서 후보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한데 후보단일화의 방식은 국민이 감동하고 대선승리의 길로 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어떤 길이 대선승리로 가는 길인가를 두고 많은 이견이 있을 순 있는데 담판에 의한 단일화도 그 중에 하나이고, 꽤 설득력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우윤근 의원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서로의 갈등을 촉발하는 것은 양쪽이 다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갈등을 유발하는 경선보다 담판에 의한 단일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속된 말로 하자면, 문 후보가 안철수 원장에게 '책임 총리를 시켜줄 테니, 그거 먹고 나가 떨어져라'하는 제안 아니겠는가.

과연, 이 같은 제안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원장의 지지층이 상당수 겹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권력 나눠먹기에 합의한다면, 그런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난 4.11 총선 당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룸에 따라 이른바 '종북 세력'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민심이 '종북세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후보단일화를 통해 그런 선택을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실체가 검증되지 않은 안철수 원장에게 '책임총리'를 제안하면서 공동정부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정말 걱정이다.

설사 그런 '권력 나눠먹기'를 통해 집권을 한다고 한들 그런 정권이 국민 앞에 얼마나 떳떳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그런 정권이 과연 올바른 인사를 단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인사정책의 실패로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공동정부는 그보다 더 잘못된 인사정책을 할 개연성이 높지 않은가.

총리가 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도 '책임총리'라는 것 때문에, 권력을 나눠먹기로 이미 합의한 사실 때문에 그를 교체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까?

문재인, 안철수에 '책임총리' 추파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경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후보가 지난 16일 후보수락연설을 통해 '책임총리제'를 언급했다.

물론 이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문 후보는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동정부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총리직을 줄 테니 자신을 중심으로 후보단일화를 하자는 요구인 셈이다.

한마디로 '권력 나눠먹기' 제안이다.

앞서 문재인 후보는 경선 직전에 안철수 원장에게 '공동정부'를 제안 한 바 있다.

문 후보가 제안한 공동정부는 일종의 '유럽식 연합정부'와 같은 것이다.

즉 서로 다른 두 세력이 연합 정부를 구성하면서 향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점을 명확하게 문서화 하자는 제안이다.

그 일환으로 문 후보가 이번에는 '책임총리'를 언급했다.

결국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공동정부를 만들되,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

람은 총리를 맡자는 제안인 셈이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철수 원장이 총리를 맡고, 안 원장이 대통령이 되면 문 후보가 총리를 맡자는 것이다.

따라서 문 후보가 비록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권력 나눠 먹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사실 문 후보가 '담판'으로 후보단일화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 데에는 '책임총리'가 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다.

실제 문 후보 측은 정치협상을 통한 담판을 선호하고 있다.

1997년 대선 당시 이뤄진 이른바 'DJP 연합'과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안철수 교수가 조건 없이 무소속 박원순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문재인 후보 경선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아온 노영민 의원과 우윤근 의원은 모두 '담판론'에 무게를 실었다.

노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권교체를 위해서 후보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한데 후보단일화의 방식은 국민이 감동하고 대선승리의 길로 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어떤 길이 대선승리로 가는 길인가를 두고 많은 이견이 있을 순 있는데 담판에 의한 단일화도 그 중에 하나이고, 꽤 설득력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우윤근 의원도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서로의 갈등을 촉발하는 것은 양쪽이 다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갈등을 유발하는 경선보다 담판에 의한 단일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속된 말로 하자면, 문 후보가 안철수 원장에게 '책임 총리를 시켜줄 테니, 그거 먹고 나가 떨어져라'하는 제안 아니겠는가.

과연, 이 같은 제안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원장의 지지층이 상당수 겹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권력 나눠먹기에 합의한다면, 그런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난 4.11 총선 당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룸에 따라 이른바 '종북세력'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민심이 '종북세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후보단일화를 통해 그런 선택을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실체가 검증되지 않은 안철수 원장에게 '책임총리'를 제안하면서 공동정부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정말 걱정이다.

설사 그런 '권력 나눠먹기'를 통해 집권을 한다고 한들 그런 정권이 국민 앞에 얼마나 떳떳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그런 정권이 과연 올바른 인사를 단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인사정책의 실패로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공동정부는 그보다 더 잘못된 인사정책을 할 개연성이 높지 않은가.

총리가 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도 '책임총리'라는 것 때문에, 권력을 나눠먹기로 이미 합의 한 사실 때문에 그를 교체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까?

의 결 번 호	2012대선22(재심)	원심결정 : 2012대선19(자심)
재심청구인	주식회사 시민일보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3-22 대표이사 최 정 호	
심의대상기사	시민일보 2012년 9월 10일자 5면 「안철수, 국민을 바보로 아나?」, 9월 11일자 5면 「안철수,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9월 12일자 5면 「안철수 '불출마 종용' 진실은?」, 9월 13일자 5면 「안철수, '꼼수 정치'부터 배웠나」, 9월 14일자 5면 「안철수, 킹이냐 킹메이커냐」, 9월 17일자 5면 「안철수 발목 잡는 '안철수의 생각'」, 9월 18일자 5면 「문재인, 안철수에 '책임총리' 추파」 제하의 칼럼	
주 문	1.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청구인은 2012년 10월 22일(월)까지 〈시민일보〉 1면 좌측 상단 위치에 〈별지 1〉 보도문을 2단 이상의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재심 대상 칼럼의 제목 크기 및 활자와 동일하게 하고 제목의 각 글자 사이를 1칸 이상 두며, 기사본문은 재심 대상 칼럼의 본문 활자 크기보다 1단계 크게 하고 제목과 본문 사이 최소 1줄 이상 간격을 둔다(문단 구분할 것과 제목글자 크기 및 글자 수 축소 불가. 제목이 넘칠 경우 2단으로 할 것).	
재심청구취지	2012대선19(자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본 위원회 2012대선19(자심)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본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의 추가 진술을 살펴보자면 사실에 근거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를 검증하는 칼럼을 게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특정 예비후보자의 신상과 행보에 관하여 비판적인 칼럼을 여러 번 지속적으로 게재하면서 단정적이고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사용하는 한편, 자극적인 제목을 게재하고,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부정적인 사실만 선별·적시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을 충분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 재심청구인이 설사 사실에 근거한 점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것임은 틀림없다. 본 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거나,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끼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사과문 게재 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원심결정 과정에서 심의기준을 오해하여 과도한 제재 결정을 하였거나 원심결정 이후 원심을 파기하거나 변경해야 할 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었다. 따라서, 재심요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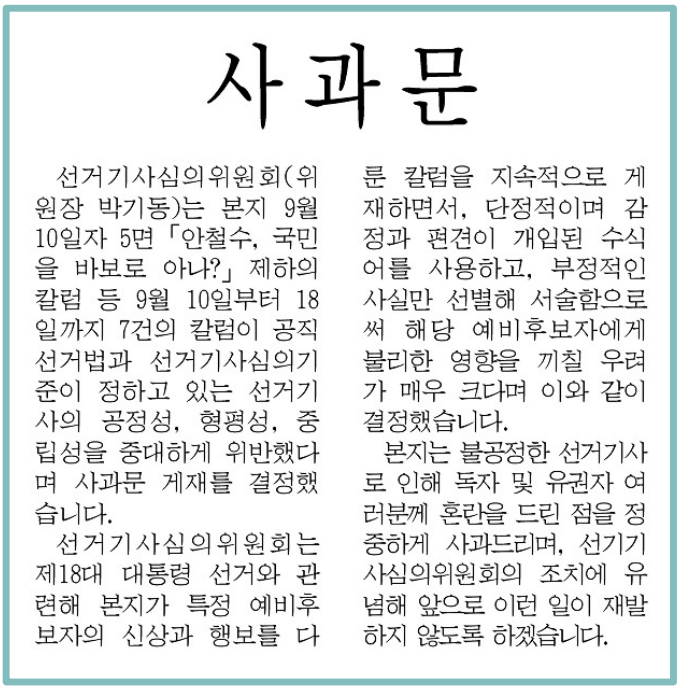
결정 후 보도문

사 과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본지 9월 10일자 5면「안철수, 국민을 바보로 아나?」제하의 칼럼 등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7건의 칼럼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중립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사과문 게재를 결정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본지가 특정 예비후보자의 신상과 행보를 다룬 칼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면서, 단정적이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사용하고, 부정적인 사실만 선별해 서술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본지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해 독자 및 유권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을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유념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본지 9월 10일자 5면「안철수, 국민을 바보로 아나?」제하의 칼럼 등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7건의 칼럼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중립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사과문 게재를 결정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본지가 특정 예비후보자의 신상과 행보를 다룬 칼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면서, 단정적이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사용하고, 부정적인 사실만 선별해 서술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본지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해 독자 및 유권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을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유념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2012년 10월 22일(월) 시민일보 1면

2. 경고

의 결 번 호	2012대선13(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남해시대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46 남해군산림조합 3층 대표이사 이 정 원
심의대상기사	남해시대 2012년 7월 5일자 1면 「김두관, 8일 해남 땅끝마을서 출마선언」, 9면 「밥상머리교육 대상으로 삼아도 될 남해인물은」, 20면 「김두관 경남도지사, 대권도전 공식화」, 7월 12일자 1면 「김두관과 함께 평등사회로!」, 4면 「대통령 김두관, 남해에 달렸다!」, 5면 「〈Interview〉 고향마을을 찾은 김두관 전 지사」, 같은 면 「'대통령 마을' 되고 싶은 이어리의 꿈」, 6면 「미니인터뷰」, 6~7면 「"남해의 아들, 99%를 위한 대통령으로"」, 7면 「동행취재기」, 27면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7월 19일자 4면 「"두관이는 상여 메는 일에 한번도 빠진 적이 없제"」, 같은 면 「김두관 전 지사, 21일 서울서 출판기념회」, 20면 「김두관에게 '힘이 되는 향우'」, 7월 26일자 6면 「멀리 가느냐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느냐를 고민하던 사람」, 14면 「김두관의 도전 '아래에서부터 위로'」 제하의 기사 등 총 16건의 선거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2012년 7월 5일부터 16건의 기사를 통해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에 대해 집중 보도하면서 대선 출마 사실을 상당한 크기의 사진과 함께 여러 면에 걸쳐 매우 우호적인 제목을 사용하여 보도했을 뿐 아니라 해당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만의 인터뷰와 기고문을 게재하고, 해당 예비후보자를 노골적으로 지지·추천하는 내부 필진의 칼럼을 작성하는 등 해당 예비후보자를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부각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이 정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며,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6조(정치적 중립), 제12조(기고)제1항 및 제16조(사진게재)제1항을 위반한 위 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두관, 8일 해남 땅끝마을서 출마선언

"정의와 평등·복지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 열겠다"

중도사퇴 "더 큰 김두관 돼 돌아오겠다"며 용서구해

남해사람 김두관! 어릴 적부터 가슴에 품어온 대통령의 꿈! 그 꿈을 과연 그가 쟁취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어마을 이장에서부터 남해군수, 행정자치부장관, 경남도지사까지 아래로

부터 시작한 그의 관운이 대통령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김두관 지사가 올 연말 대통령선거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을 최종적으로 결정지었다. 그는 오는 8일 해남 땅끝마을에서 대권출마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도지사 임기 절반을 넘긴 지난 2일 아침 그는 도청직원 정례조회를 통해 이 같은 결심을 밝히고 공식화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약속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갑작스런 작별인사를 드리게 돼 서운하고 송구스럽다"고 운을 뗀 뒤 "이번 대선이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권위주의와 불평등·시장만능·대립과 증오의 시대를 끝내고, 정의와 평등·복지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절체절명의 선거인만큼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그는 또 "더 큰 김두관이 돼 돌아오겠다"는 말로 지사직을 중도 사퇴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신문과 방송은 그 이튿날 그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찬회동 내용을 크게 보도했다.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박 시장과의 조찬회동은 단번에 그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가 대권출마선언을 8일 오전 광주 망월동 묘지 참배로부터 시작해 해남 땅끝마을에서 지역 주민들이 마련하는 잔치형식으로 하는 것에도, 연이은 사흘간 세종시와 연평도를 거쳐 도라산까지 국토를 종단하고 마지막 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만난 뒤 국립현충원 참배로 마무리 짓는 횡보에도 '아래에서부터 커온 지역자치분권 세력의 대표'라는 그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공한 서민정부'를 향해 '아래로부터 시작한다'는 메시지, 민주통합당의 후보로서 호남의 민심부터 챙기는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이 보인다.

"아래에서부터 시작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이름 없는 들꽃들이 행복한 평등의 시대를 열겠다!" 그가 트위터에 올린 가장 최근의 글이다. 그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남해시대 THE NAMHAETIMES

제310호 (28면) 2012년 7월 5일 목요일 | 홈페이지 www.nhtimes.co.kr | 스마트폰 전용 홈페이지 m.nhtimes.co.kr | 대표전화 (055)863-3365

김두관, 8일 해남 땅끝마을서 출마선언

"정의와 평등·복지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 열겠다"
중도사퇴 "더 큰 김두관 돼 돌아오겠다"며 용서구해

남해사람 김두관! 어릴 적부터 가슴에 품어온 대통령의 꿈! 그 꿈을 과연 그가 정히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어마을 이장에서부터 남해군수, 행정자치부장관, 경남도지사까지 아래로부터 시작한 그의 관운이 대통령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김두관(사진) 지사가 올 연말 대통령선거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을 최종적으로 결정지었다. 그는 오는 8일 해남 땅끝마을에서 대권출마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도지사 임기 절반을 넘긴 지난 2일 아침 그는 도청직원 정례조회를 통해 이 같은 결심을 밝히고 공식화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약속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갑작스런 작별인사를 드리게 돼 서운하고 송구스럽다"고 운을 뗀 뒤 "이번 대선이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권위주의와 불평등·시장만능·대립과 증오의 시대를 끝내고, 정의와 평등·복지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절체절명의 선거인만큼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결심을 밝혔다. 그는 또 "더 큰 김두관이 돼 돌아오겠다"는 말로 지사직을 중도 사퇴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신문과 방송은 그 이튿날 그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찬회동을 크게 보도했다.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박 시장과의 조찬회동은 단번에 그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가 대권출마선언을 8일 오전 광주 망월동 묘지 참배로부터 시작해 해남 땅끝마을에서 지역 주민들이 마련하는 잔치형식으로 하는 것에도, 연이은 사흘간 세종시와 연평도를 거쳐 도라산까지 국토를 종단하고 마지막 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만난 뒤 국립현충원 참배로 마무리 짓는 횡보에도 '아래에서부터 커온 지역자치분권 세력의 대표'라는 그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공한 서민정부'를 향해 '아래로부터 시작한다'는 메시지, 민주통합당의 후보로서 호남의 민심부터 챙기는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이 보인다.

"아래에서부터 시작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이름 없는 들꽃들이 행복한 평등의 시대를 열겠다!" 그가 트위터에 올린 가장 최근의 글이다. 그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김광석 기자 nhsd@hanmail.net

▲ 2012년 7월 5일(목) 남해시대 1면

밥상머리교육 대상으로 삼아도 될 남해인물은

남해얼 살리기 지상포럼
4. 남해얼 남해사람

(전략)

들어가면서

본지가 남해교육지원청의 올해 역점사업인 '남해얼 계승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면서 '남해얼 살리기 포럼'의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게 된 것을 필자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필자는 홍성렬 교육장이 남해교육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라나는 어린 후세들에게 '남해인의 얼'을 꼭 심어주고 싶어 하는 깊은 뜻에 크게 공감한다. 아울러 홍 교육장의 뜻을 교육과정으로 프로그래밍해서 실천해나가는 오인태 장학사를 필두로 한 남해교육지원청의 모든 직원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남해얼 계승교육'을 펼쳐나가고 있는 모든 교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중략)

마치 이스라엘인들이 탈무드를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남해인 부모(특히, 출향인들과 그 2~3세들까지)가 밥상머리에서 자녀들에게 "너는 남해인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너는 남해인이기 때문에(네 몸 속에 흐르는 남해인의 기상과 지혜로)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남해만의 문화로 자리 잡은 상황을 가정하고 한번 연상해보자! 자녀들에게 몸으로 남해인의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과연 아무렇게나 자신의 삶을 내동댕이칠 수 있을까 말이다.

향토 문학의 큰별 이웃 문신수 선생

(전략) 사람은 죽고 난 뒤에야 진정한 평가를 받는다. 이웃 문신수 선생이 살아 있을 때는 선생이 그렇게 명징한 보석이었는지 몰랐는데 선생이 가고 난 다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선생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선생은 단 한 차례도 향토를 떠나지 않고 평생을 교단에 몸 바친 참 교육자요, 많은 작품을 남긴 문인이었다. 교육에의 열정, 향토에의 열정, 문학에의 열정, 소박함과 겸손함으로 일관된 삶을 사셨던 선생의 삶의 자세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도 한 치의 손색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선생이 생전 장학기금을 조성해놓았던 것도 가족들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선생이 남기고 간 문학작품들은 남해의 소중한 문화자산이 아닐 수 없고 언젠가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선생의 작품에는 한결같은 남해의 얼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웃 문신수 선생은 학문과 예술을 중시하고 후학을 가르치는데 열정을 다했으며 항상 근검절약하며 어디에서나 자신을 낮추는 외유내강의 선비정신을 실천했던 향토의 진정한 영웅이다. 다만 아직 우리가 그 영웅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영웅성이 발하는 빛의 세기는 커져나갈 것이다.

선생의 삶에는 다랭이정신, 바래정신, 찬새미정신 세 가지로 표현되는 남해의 얼이 고루 잘 녹아들어 있다는 평가를 필자는 하게 된다.

이장에서 대통령후보까지, 7전8기의 정치인 김두관

(전략)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아무래도 김두관일 것 같다. 그는 이어마을이장에서부터 시작해 남해군수, 행정자치부장관, 경남도지사를 거쳐 이제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반열에 올라서 있다.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섬에서 나온다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법하다. 하이도와 거제도, 그리고 남해. 섬에서 태어난 인물들이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섬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

지는 얼과 연관이 많을 것이다.

김두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자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더 자세한 설명은 불필요할 것 같다.

아무튼 김두관은 옳음에 대한 변하지 않는 신념,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남해의 얼 다랭이정신, 바래정신, 찬세미정신의 표상이라고 하면 그를 지나치게 잘 포장하는 것일까?

나오면서

사람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두렵다. 단지 필자의 주관일 뿐인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필자가 이 지상포럼의 집필자가 되겠다고 한 것이 무리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독자들의 아량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남해시대 2012년 7월 5일 목요일 특집 9

밥상머리교육 대상으로 삼아도 될 남해인물은

남해얼 살리기 지상포럼 4

1. 왜 남해얼 살리기 교육인가
2. 무엇이 남해얼인가
3. 남해의 어제와 오늘
4. 남해얼 남해사람
5. 남해 얼 계승교육 실천 사례

김 광 석 본지 선임기자

부모의 얼이 곧 자녀의 얼 범군민운동은 밥상머리교육으로

남해정신의 실체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현재화하여 미래 역량으로 키워나갈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답을 만들어가는 곳이 있다. 바로 남해교육지원청이다.

남해교육지원청에서는 '남해사랑 남해얼 계승교육'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삼아 이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10월엔 '남해사랑 남해얼 실천 사례발표대회'까지 예정해놓고 남해군과 남해문화원, 남해시대 등 지역사회에 이를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해왔다.

이에 남해시대는 남해군, 남해교육지원청, 남해문화원, 그리고 지역인사들과 함께 '남해얼 포럼'을 결성하여 지상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상포럼 내용에 더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독자들의 기고도 받을 예정이다.

남해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지면을 통해 분출될 수 있도록 독자님들의 많은 기고를 기다립니다. (편집자주)

들어가면서

본지가 남해교육지원청의 올해 역점사업인 '남해얼 계승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면서 '남해얼 살리기 포럼'의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게 된 것을 필자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필자는 홍성렬 교육장이 남해교육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라나는 어린 후세들에게 '남해인의 얼'을 꼭 심어주고 싶어 하는 깊은 뜻에 크게 공감한다. 아울러 홍 교육장의 뜻을 교육과정으로 프로그램화해서 실천해나가는 오인태 장학사를 필두로 한 남해교육지원청의 모든 직원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남해얼 계승교육'을 펼쳐나가고 있는 모든 교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

이 지상포럼의 네 번째 주제인 '남해얼 남해사람'은 남해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구체적인 인물을 탐색해보는 순서다. 이 주제의 집필자로 필자가 결정되면서 필자는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으로든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며, 누가 어떤 대상을 평가하든 그것은 주관적인 관점에 섬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점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남해의 얼을 상징화, 구체화 해보자는 이 일을 한 발짝 내딛게 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는 '남해얼 살리기 운동'이 범군민운동으로 발전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필자가 생각하는 범군민운동이란 다름 아닌 '밥상머리교육'이다. 부모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가 보는 것 이상으로 교육의 효과가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경우는 없다.

마치 이스라엘인들이 탑무드를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남해인 부모(특히, 출향인들과 그 2~3세들까지)가 밥상머리에서 자녀들에게 "너는 남해인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너는 남해인이기 때문에(네 몸 속에 흐르는 남해인의 기상과 지혜로)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남해만의 문화로 자리 잡은 상황을 가정하고 한번 연상해보자! 자녀들에게 몸으로 남해인의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과연 아무렇게나 자신의 삶을 내동댕이칠 수 있을까?

향토 문학의 큰별 이웃 문신수 선생

필자는 이제 우리 부모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할 교재로서 남해인의 얼을 가장 잘 실천한 삶을 산 표상이 될 만한 인물을 제시해야 할 차례다.

필자는 이웃 문신수 선생을 남해인의 표상으로 감히 제시한다. 필자는 이웃 문신수 선생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02년 5월 11일 선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시 남해신문 편집국장이었던 필자는 선생의 장례를 경남문화인장으로 격상시키자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크고 작은 실무를 관장했다. 그리고 이후 선생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념사업회를 만들었고 기념사업회는 매년 추도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선생이 남기고 간 불후의 명작 '세상살이 토막말'을 단행본으로 발간한데 이어 선생이 남기고 간 유작들을 모아 '못 다 부른 이름'이라는 유고집도 발간했다. 누가 주도해서가 아니라 선생의 삶을 아는 사람들이 선생을 흠모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형할 뿐이다.

사람은 죽고 난 뒤에야 진정한 평가를 받는다. 이웃 문신수 선생이 살아 있을 때는 선생이 그렇게 명징한 보석이었는지 몰랐는데 선생이 가고 난 다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선생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선생은 단 한 차례도 향토를 떠나지 않고 평생을 교단에 몸 바친 참 교육자요, 많은 작품을 남긴 문인이었다. 교육에의 열정, 향토에의 열정, 문학에의 열정, 소박함과 겸손함으로 일관된 삶을 사셨던 선생의 삶의 자세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도 한 치의 손색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선생이 생전 장학기금을 조성해놓았던 것도 가족들을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선생이 남기고 간 문학작품들은 남해의 소중한 문화자산이 아닐 수 없고 언젠가는 역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선생의 작품에는 한결같은 남해의 얼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웃 문신수 선생은 하문과 예술을 중시하고 후학을 가르치는데 열정을 다했으며 항상 근검절약하며 어디에서나 자신을 낮추는 외유내강의 선비정신을 실천했던 향토의 진정한 영웅이다. 다만 아직 우리가 그 영웅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영웅성이 발하는 빛의 세기는 커져나갈 것이다.

선생의 삶에는 다랭이정신, 바래정신, 찬세미정신 세 가지로 표현되는 남해의 얼이 고루 잘 녹아들어 있다는 평가를 필자는 하게 된다.

이장에서 대통령후보까지 7전8기의 정치인 김두관

사람은 자연을 닮는다. 사람의 기질은 자연환경이 반영된 것이다. 얽은 기질에 가깝다. 우리가 즐겨 쓰는 '고춧가루 서 말을 먹고 십리 물길을 건넌다', '송장 하나가 산 사람 열을 당한다'는 등의 남해속담은 남해사람들의 기질을 잘 나타내는 말이다. 이 말은 필자가 장가를 들기 위해 첫인사를 갔던 처가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다. 우리 출향인들 역시 살아가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일 것이다.

도시로 나간 남해인들 치고 똑 부러지게 자기영역을 개척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남해사람들은 근면하고 성실하며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한다. 이게 바로 '다랭이정신'이다. 사실 그러고 보면 모든 출향인들이 남해의 얼 다랭이정신을 상징하는 표상이요, 남해의 외교관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아무래도 김두관일 것 같다. 그는 이어마을이장에서부터 시작해 남해군수, 행정자치부장관, 경남도지사를 거쳐 이제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반열에 올라서 있다.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섬에서 나온다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법 하다. 하이도와 거제도, 그리고 남해. 섬에서 태어난 인물들이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섬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지는 얼과 연관이 많을 것이다.

김두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자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더 자세한 설명은 불필요할 것 같다.

아무튼 김두관은 옳음에 대한 변하지 않는 신념,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남해의 얼 다랭이정신, 바래정신, 찬세미정신의 표상이라고 하면 그를 지나치게 잘 포장하는 것일까?

나오면서

사람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두렵다. 단지 필자의 주관일 뿐인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필자가 이 지상포럼의 집필자가 되겠다고 한 것이 무리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독자들의 아량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다음호에 계속〉

▲ 2012년 7월 5일(목) 남해시대 9면

김두관 경남도지사, 대권도전 공식화

6일 퇴임, 8일 땅끝마을에서 대선 출마 선언 계획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대권도전을 선언했다.

김두관 도지사는 지난 2일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마음미래창조포럼 창립대회에서 김구 선생이 즐겨 읊은 것으로 알려진 서산대사의 시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불수호란행(不須胡亂行)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 – 눈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기는 발자국은 훗날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를 인용하며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입장을 밝혔다.

한마음미래창조포럼은 '불균등과 소통부재의 벽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가치사회 창조'를 목표로 제시한 학계 중심의 단체로 김 지사가 그동안 저서와 강연을 통해 주창해 온 '불균등 타파와 평등사회 구현'과 그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김 지사 캠프의 좌장격인 원혜영 의원(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해 조창섭 전 서울대 인문대학장, 최광 외국어대 교수 등 학계 인사 250여명을 포함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 전직 언론인 100여명, 정두근 예비역 중장 등 1000여명 이상의 일반시민이 참여했다. 한편 이중길 재경남해군향우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향우들과 남해 군민들도 대거 참석해 김 지사의 대권도전 의지에 힘을 보탰다.(후략)



남해시대 SEOUL NEWS 서울소식 2012년 7월 5일 목요일 20

서울지사장 이수범 M 010-8759-3315 / E-mail : milliemind@hanmail.net
서울주재기자 김희정 M 010-3012-3557 / E-mail : khjung35@hanmail.net

전국꽃배달서비스 전화상담 ☎863-5134 해바라기화원 축하화환/근조화환/개업식화환(리본·소품 등) 꽃다발·꽃바구니/주문제작가능 ▶위치 : 현대아파트 상가 맞은편 ▶홈페이지 : www.flower5435.com 김대일

김두관 경남도지사, 대권도전 공식화 | 6일 퇴임, 8일 땅끝마을에서 대선 출마 선언 계획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대권도전을 선언했다.

김두관 도지사는 지난 2일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마음미래창조포럼 창립대회에서 김구 선생이 즐겨 읊은 것으로 알려진 서산대사의 시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불수호란행(不須胡亂行)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 – 눈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기는 발자국은 훗날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를 인용하며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입장을 밝혔다.

한마음미래창조포럼은 '불균등과 소통부재의 벽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가치사회 창조'를 목표로 제시한 학계 중심의 단체로 김 지사가 그동안 저서와 강연을 통해 주창해 온 '불균등 타파와 평등사회 구현'과 그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김 지사 캠프의 좌장격인 원혜영 의원(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해 조창섭 전 서울대 인문대학장, 최광 외국어대 교수 등 학계 인사 250여명을 포함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 전직 언론인 100여명, 정두근 예비역 중장 등 1000여명 이상의 일반시민이 참여했다. (사진)

한편 이중길 재경남해군향우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향우들과 남해 군민들도 대거 참석해 김 지사의 대권도전 의지에 힘을 보탰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김 지사는 경남도청에서 열린 정례조회를 통해 오는 6일(금)까지 도지사직을 마무리하고 8일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예고하며 "사즉생의 각오 없이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역사의 부름에 응하면서 퇴로를 만들 수는 없었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 지사가 해남 땅끝마을을 출정식 장으로 선택한 것은 마을 이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경남지사까지 오른 경력이 자신의 적 제목처럼 '아래로부터' 서민과 함께해온 이미지와 부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해남에서 회복단 도라산 전망대까지 종단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경선 경쟁에 나설 예정이며 종단 과정에서는 광주 5·18 묘역과 세종시 등 야권의 상징적인 장소를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해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2012년 7월 5일(목) 남해시대 20면

김두관과 함께 평등사회로!

남해의 아들 김두관이 이장과 군수, 도지사를 넘어 이제 대통령의 길에 성큼 다가섰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마을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제18대 대통령 후보로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중략)

김 후보는 "저는 뼈속부터 서민이다. 농민의 아픔과 장애인의 서러움, 노인의 고독함과 여성의 고단함, 실업자의 고통을 함께 하겠다"며 "성장과 효율을 강조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나눌수록 파이가 커지는 평등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최저생계비 보장이 시급하고, 학비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지방 국공립대학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우리를 만든 어르신들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공약을 밝혀 지지자들에게 "진정한 서민 대통령"이라는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남해시대 THE NAMHAETIMES

제311호(28면) 2012년 7월 12일 목요일 | 홈페이지 www.nhtimes.co.kr | 스마트폰 전용 홈페이지 m.nhtimes.co.kr | 대표전화 (055)863-3365

김두관과 함께 평등사회로!

남해의 아들 김두관이 이장과 군수, 도지사를 넘어 이제 대통령의 길에 성큼 다가섰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마을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제18대 대통령 후보로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지지자로 해남 땅끝마을은 사상초유의 인파로 꽉 찼으며 곳곳에는 '남해의 아들, 김두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99%를 위한 대통령', 'DK? OK!', '두관이 명관이다' 등 김 후보를 지지하는 특색 있는 플랜카드와 젊은이들이 모인 '2030청년포럼'과 '자치분권연대', '모다함' 등 각양각색의 정치참여객들로 북적였다.

이날 김두관 후보는 '내게 힘이 되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가 이뤄지는 '평등국가'에 대한 희망을 전하면서 "국가는 극소수 기득권자를 위한 요새가 아닌 모두의 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권이 '국민 아래' 김두관 대 '국민 위' 근핍하는 박근혜와의 대결임을 천명했다.

김 후보는 "저는 뼛속부터 서민이다. 농민의 아픔과 장애인의 서러움, 노인의 고독함과 여성의 고단함, 실업자의 고통을 함께 하겠다"며 "성장과 효율을 강조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나눌수록 파이가 커지는 평등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최저생계비 보장이 시급하고, 학비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지방 국공립대학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우리를 만든 어르신들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공약을 밝혀 "진정한 서민 대통령"이라는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강영자 기자 nhsd@hanmail.net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특집 4 남해군민 이시동의 '땅끝 마을에서 본 희망' 5 김두관 후보 인터뷰 6~7 '김두관 대선 출정식' 현장

▲ 2012년 7월 12일(목) 남해시대 1면

김두관 후보 대선출정식을 다녀와서

대통령 김두관, 남해에 달렸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남해인의 역할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평등국가를 향하여'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대선출정식에서 내건 대표 슬로건입니다. 참 믿음직스러운 말입니다. 수 십 년간 보아온 그의 품성을 그대로 담아놓은 듯해서 더욱 공감이 갑니다.

지난 8일 남해와 비슷한 지명으로 낯설지 않은 땅끝마을 해남에서 이제 남해의 아들이 아닌 대한민국의 큰 아들로 우뚝 서고자 하는 김두관 전 지사의 대선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들으니 이날 전국 각지에서 7000여 명의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 남해에서도 수 십 여대의 버스와 자가용을 이용해 800여명의 군민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고 하니 우리가 설마하며 말해왔던 '남해출신 대통령'이 이제 마냥 꿈같은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후략)

서민의 아픔 아는 김두관

두 시간여 이어지는 출정식도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남의 바다를 배경으로 한 무대에 오른 김두관 전 지사는 평생의 신념으로 지녀온 '국민의 아래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로 모두가 평등한, 서민도 대접받는 국가를 만들고 싶다'며 대선출마의 각오를 야무지게 밝혔습니다. 늘 이웃같이 편안한 모습으로 기억되던 그였지만, 출마의 변을 밝히던 그의 모습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 갈만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그의 열정만큼이나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연설 중간 중간 '대통령 김두관'이라는 구호도 이어졌고,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감동의 박수도 터져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서민의 삶을 대변할 정책은 그저 책상 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것을. 젊은 나이에 고향을 위해 낙향해 이장을 시작으로 지역신문 창간, 시골군수 등을 거치는 동안 우리네 서민의 아픔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절실히 경험하고 배웠던 그였기에, 그 후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서민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했기에 이날 밝힌 공약은 신뢰로 가득한 국민과의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남해 이럴 때 아니다

하지만 출정식을 마치고 남해로 돌아오는 저에게 행사장에서의 감동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언가로 인해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이들이 이처럼 뙤약볕 아래에 모여 '대통령 김두관'을 외치며 하나의 믿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지만 정작 그 누구보다 맨 앞에서 염원해야할 우리 남해는 지금 정치적인 논리에 파묻혀 갑론을박하며 서로의 목소리 높이기에만 몰두하고 있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남해에서 왔노라고 쉽게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최근 정현태 군수에 대한 다른 정당의 연이은 사퇴압박을 보면서 저는 조금 의아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대다수의 군민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찬반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진심을 다해야 함이 옳다는 것이 많은 군민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김두관에 올인하자

우리는 지역의 책임자를 우리 군민들의 표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군민들은 그를 지켜볼 것이며, 다음 선거에서 다시 표로 냉정히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당연히 물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결과에는 깨끗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현태 군수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어떤 조치나 입장도 취하지 않았음에도 생각이 다른 정당에서 그 책임을 물으며 오직 사퇴만을 요구하는 것 또한 그 요구의 순수성을 그대로 받아 안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중략)

50만 남해인 저력 보여야

하지만 터널에 비친 한줄기 빛을 따라 어두운 위기의 시기를 벗어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김두관 전 지사에게 주어진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해사람이 먼저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만 내외 남해사람의 저력이라면 무엇이든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김두관 전 지사를 남해의 아들 아니 대한민국의 큰 아들로 만들고, 남해를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희망의 땅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후략)



4 특집 - 김두관 후보 대선 출정식 2012년 7월 12일 목요일 남해시대

김두관 후보 대선출정식을 다녀와서

대통령 김두관, 남해에 달렸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남해인의 역할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평등국가를 향하여'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대선출정식에서 내건 대표 슬로건입니다. 참 믿음직스러운 말입니다. 수 십 년간 보아온 그의 품성을 그대로 담아놓은 듯해서 더욱 공감이 갑니다.

지난 8일 남해와 비슷한 지명으로 낯설지 않은 땅끝마을 해남에서 이제 남해의 아들이 아닌 대한민국의 큰 아들로 우뚝 서고자 하는 김두관 전 지사의 대선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들으니 이날 전국 각지에서 7000여명의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 남해에서도 수 십 여대의 버스와 자가용을 이용해 800여명의 군민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고 하니 우리가 섬마하며 말해왔던 '남해출신 대통령'이 이제 마냥 꿈같은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해남사람들은 "땅끝마을 생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며 김두관 전 지사의 저력에 놀라워했습니다. 저 또한 놀랍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호남에 연고 하나 없는 영남사람이 대선출정식을 호남에서, 그것도 쉽게 가기 힘든 한반도의 가장 땅끝인 해남에서 한다고 했을 때 들었던 걱정은 그저 한낱 기우에 불과할 뿐이었고, 남해사람 김두관은 이제 더 이상 남해만의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변화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민의 아픔 아는 김두관

두 시간여 이어지는 출정식도 '끝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남의 바다를 배경으로 한 무대에 오른 김두관 전 지사는 평생의 신념으로 지녀온 '국민의 아래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로 모두가 평등한, 서민도 대접받는 국가를 만들고 싶다'며 대선출마의 각오를 야무지게 밝혔습니다. 늘 이웃같이 편안한 모습으로 기억되던 그였지만, 출마의 변을 밝히던 그의 모습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 갈만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그의 엄정한 말씀이나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연설 중간 중간 '대통령 김두관'이라는 구호도 이어졌고,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감동의 박수도 터져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서민의 삶을 대변할 정책은 그저 책상 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것을. 짧은 나이에 고향을 위해 낙향해 이장을 시작으로 지역신문 창간, 시골군수 등을 거치는 동안 우리네 서민의 아픔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절실히 경험하고 배웠던 그였기에, 그 후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서민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했기에 이날 밝힌 공약은 신뢰로 가득한 국민과의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남해 이럴 때 아니다

하지만 출정식을 마치고 남해로 들어오는 저에게 행사장에서의 감동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언가로 인해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이들이 이처럼 화약별 아래에 모여 '대통령 김두관'을 외치며 하나의 믿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지만 정작 그 누구보다 맨 앞에서 염원해야할 우리 남해는 지금 정치적인 논리에 파묻혀 갈등을박하며 서로의 목소리 높이기에만 몰두하고 있기에 여느 누구에게도 남해에서 왔노라고 쉽게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최근 정현태 군수에 대한 다른 정당의 연이은 사퇴압박을 보면서 저는 조금 의아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대다수의 군민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찬반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진심을 다해야 함이 옳다는 것이 많은 군민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김두관에 올인하자

우리는 지역의 책임자를 우리 군민들의 표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임기동안 군민들은 그를 지켜볼 것이며, 다음 선거에서 다시 표로 냉정히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당연히 물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결과에는 깨끗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현태 군수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어떤 조치나 입장도 취하지 않았음에도 생각이 다른 정당에서 그 책임을 물으며 오직 사퇴만을 요구하는 것 또한 그 요구의 순수성을 그대로 받아 안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논쟁보다 더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선 유력주자들은 이미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고향에서의 든든한 지지나 지원은 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힘일 것입니다. 평생 서민으로 살아오며 그 흔한 배경도 없는 남해 아들 김두관 전 지사에게도 남해는 영원한 배경이자 강력한 응원군입니다.

출정식날 광주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서울에서 남해의 아들 김두관을 대한민국의 큰아들로 만들겠다고 힘티길 마다않고 함께 모여 마음을 모으는데 정작 김두관 전 지사의 고향인 우리 남해는 마음을 모으기는커녕 정쟁의 소란으로 오히려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큰 길을 시작한 그에게 지금 남해는 든든한 배경이 아니라 내려놓고 싶은 등짐일 것 같기에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평생을 남해에서 살아왔지만 우리에게는 그동안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고, 지금 남해의 여러 환경들은 깊고 긴 어두운 터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며니 급기야 사람의 저력이라면 무엇이든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김두관 전 지사를 남해의 아들 아니 대한민국의 큰 아들로 만들고, 남해를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희망의 땅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천금같은 기회를 우리는 놓치는 우를 범하는 남해가 아니라 '내게 힘이 되는 나라'라는 김두관 전 지사의 슬로건처럼 그에게 힘이 되는 남해가 되길, 그러기 위해 정쟁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의 염원을 간절히 기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남해의 모습이 되길 해남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 파이팅을 외쳐봅시다!

이 시 동
남해군민

▲ 2012년 7월 12일(목) 남해시대 4면

“남해사람 자존심 지키는 당당한 자세로 대선에 임할 터”

【인터뷰】 대권도전 공식선언 후 고향마을 찾은 김두관 전 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지난 2일 도청직원 정례조회를 통해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5일 후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마을을 찾아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고향마을을 찾은 김 전 지사를 7일 이어리 자택에서 만났다.

오늘 선영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 궁금하다 = 대통령선거 출마를 고하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리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를 빌어 군민들과 향우분들께 인사를 한다면 = 군수와 장관, 도지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50만 군민들과 향우분들의 배려와 염려덕분이었고 이것이 또한 내 활동의 근본적인 힘이었다. 남해사람의 자존심을 지키는 당당한 자세로 대선에 임하겠다. 50만 내외군민의 지도와 편달을 기원드린다.

아내인 채정자 여사께서 출마를 반대하셨다고 하던데 = 아내는 처음엔 풀뿌리 활동가로서 도지사 임기를 다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이 8천만 국민과 민족의 운명이 걸린 승부라는 점을 들어 설득하고 아내도 이를 이해해줘 지금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군민사이에서는 대선출마 선언을 반기는 여론도 있지만 과연 될까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사실 경남도정도 엄청난 자리다. 그런 자리를 중도에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고 승리해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와 국정으로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

대선에서의 승리를 확신하나 = 민주진보진영이 총단결, 군민을 비롯한 향우분들의 염려, 지방자치 연대세력에 대한 기대가 있다. 나는 농민회, 책사랑나눔터, 남해신문 등 풀뿌리 현장에서 커왔다. 따라서 현장 사람들의 어려운 심정을 잘 아는 만큼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 오늘처럼 자신이 태어난 마을에서 격려 받고 출마하는 대선 후보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동안 마을에서 키워주고 도와줬고 남해군이 나를 키워졌다. 나는 근본이 남해사람이다.

자리를 빌어 군민들과 향우분들께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다면 = 가난해서 대학 못가는 학생이 없는 나라, 보육료 출산 걱정하는 젊은 부부가 없는 나라, 병원비가 없어서 걱정하는 국민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또한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는 평등국가를 만들겠다. 자유와 평등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이라는 헌법정신을 잊어버린 것 같다. 평등하지 않은 나라는 부유한 나라가 되지 못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신평등국가가 김두관의 비전이다.

‘대통령 마을’ 되고 싶은 이어리의 꿈

환영식 열어 김두관 대권도전에 힘 실어줘

대권도전을 선언한 김두관 전 지사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현 이어리 마을 주민환영회에 참석해 동민들과 남해군민들의 응원을 받고 본격적인 대권도전 대장정을 시작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7일 오후 7시 남해를 방문, 이어공동묘지에 있는 조부모와 선친의 묘소와 연죽공원묘원의 장인묘소를 참배하고 8시 남짓 이어마을의 주민 환영회에 참석했다.

이날 환영회에는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군내 유관기관단체 관계자와 지인, 친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김 전 지사의 새로운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여러 방송국과 신문기자들의 취재열기도 뜨거워 본격적인 대선행보를 시작한 김두관 전 지사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류근섭 이어마을 노인회장은 주민들을 대표해 "김 전 지사는 우리집 큰 아이들과 친군데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 이렇게 이장과 군수, 장관, 도지사를 거쳐 대통령에 도전하다니 정말 대단하다"며 "대선의 길에 기탄없이 정진해 반드시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전 지사는 "오늘 너무 행복하다. 대선후보 중 나고 자란 마을주민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출마 선언을 하는 후보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회를 열어 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어리에서 잔뼈 굵은 당당함으로 대선 승리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환영회장을 찾은 정현태 군수도 "이장출신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서민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김두관 대통령을 위해"라는 건배사를 통해 남해출신 대통령 배출이란 군민들의 바람을 전했다.

'망운산의 정기가 백두산까지'란 파격적인 현수막까지 내건 이어마을. 군수와 도지사를 배출한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왔던 이 마을이 다시 한 번 '대통령을 배출한 마을'로 전국적인 각광을 받을지 벌써부터 궁금증이 일고 있다.



남해시대 2012년 7월 12일 목요일 특집 - 김두관 후보 대선 출정식 5

Interview 고향마을 찾은 김두관 전 지사

"남해사람 자존심 지키는 당당한 자세로 임할 터"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지난 6일 도지사직을 사직하고 대권행보를 본격화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마을을 찾아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김 전 지사를 지난 7일 이어리 자택에서 만났다. <편집자 주>

오늘 선영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 궁금하다 =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고하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리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를 빌어 군민들과 향우분들께 인사를 한다면 = 군수와 장관, 도지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50만 군민들과 향우분들의 배려와 염려덕분이었고 이것이 또한 내 활동의 근본적인 힘이었다. 남해사람의 자존심을 지키는 당당한 자세로 대선에 임하겠다. 50만 내외군민의 지도와 편달을 기원드린다.

아내인 채정자 여사께서 출마를 반대하셨다고 하던데 = 아내는 처음엔 좀뿌리 활동가로서 도지사 임기를 다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야간의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이 8천만 국민과 민족의 운명이 걸린 승부라는 점을 들어 설득하고 아내도 이를 이해해 지금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대선출마 선언을 반기는 여론도 있지만 과연 될까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사실 경남도정도 염려나 걱정이다. 그런 자리를 중도에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고 대선에서 승리해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와 국정으로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

승리를 확신하나 = 민주진보진영의 총단결, 군민을 비롯한 향우분들의 염려, 지방자치 연대세력에 대한 기대가 있다. 나는 농민회, 해사람나눔터, 남해신문 등 좀뿌리 현장에서 커왔다. 따라서 현장사람들의 어려운 심정을 잘 아는 만큼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 오늘처럼 자신이 태어난 마을에서 격려 받고 출마하는 대선후보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동안 마을에서 키워주고 도와줬고 남해군이 나를 키워줬다. 나는 근본이 남해사람이다.

군민들과 향우분들께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다면 = 가난해서 대학 못가는 학생이 없는 나라, 보육료 출산 걱정하는 젊은 부부가 없는 나라, 병원비가 없어서 걱정하는 국민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또한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는 평등국가를 만들겠다. 편등하지 않은 나라는 부유한 나라가 되지 못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신평등국가가 김두관의 비전이다.

한종봉 기자

'대통령 마을' 되고 싶은 이어리의 꿈

환영식 열어 김두관 대권도전에 힘 실어줘

대권도전을 선언한 김두관 전 지사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마을을 찾아 어려 마을 주민환영회에 참석해 동민들과 남해군민들의 응원을 받고 본격적인 대권도전 대장정을 시작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7일 오후 7시 남해를 방문, 이어공동묘지에 있는 조부모와 선친의 묘소와 연죽공원묘원의 장인묘소를 참배하고 8시 남짓 이어마을의 주민 환영회에 참석했다. (사진)

이날 환영회에는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군내 유관기관단체 관계자와 지인, 친구 등 200여명이 참석해 김 전 지사의 새로운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여러 방송국과 신문기자들의 취재열기도 뜨거워 본격적인 대선행보를 시작한 김두관 전 지사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류근섭 이어마을 노인회장은 주민들을 대표해 "김 전 지사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 이렇게 이장과 군수, 장관, 도지사를 거쳐 대통령에 도전하다니 정말 대단하다"며 "대선의 길에 기탄없이 정진해 반드시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전 지사는 "오늘 너무 행복하다. 대선후보 중 나고 자란 마을주민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출마 선언을 하는 후보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회를 열어 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어리에서 잔뼈 굵은 당당함으로 대선 승리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환영회장을 찾은 정현태 군수도 "이장출신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서민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김두관 대통령을 위해"라는 건배사를 통해 남해출신 대통령 배출이란 군민들의 바람을 전했다. 군수와 도지사를 배출한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왔던 이 마을이 다시 한 번 '대통령을 배출한 마을'로 전국적인 각광을 받을지 벌써부터 궁금증이 일고 있다.

한종봉 기자 nhsd@hanmail.net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일정 이렇게 되나]

8월 25일~ 9월 23일 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진행

민주통합당이 대선후보 경선 방식과 일정이 확정됐다. 민주통합당 대선경선준비기획단에 따르면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은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권역별 순회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됐으며 현장 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결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8월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울산(26일), 강원(29일), 충북(9월 1일), 전북(2일), 인천(5일), 경남(8일), 광주 · 전남(9일), 부산(12일), 세종 · 대전 · 충남(15일), 대구 · 경북(16일), 경기(22일)에서 지역별 순회 경선을 치른 뒤 9월 23일 서울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선거인단 접수는 8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되며, 콜센터나 인터넷, 서부접수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 신청 시 동일아이피 중복 투표 사례를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콜센터 접수의 경우 대리투표 등 선거부정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는 본인 명의일 경우 1명만 가능하며, 일반 전화는 가족이 공유하는 경우를 고려해 한 번호 당 2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부접수는 '박스패키'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오는 30일(월) 1차 컷오프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후보 5명을 선출한다. 컷오프 방식은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압축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지만, 최종 결론은 오는(12일) 대선주자들간의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다.

한종봉 기자

▲ 2012년 7월 12일(목) 남해시대 5면



미니 인터뷰

두관이가 좋아서 요까지 왔구만

하동 강자야 · 김봉용

하동서 매실 농사짓는 우리지만 이웃집인 남해군수 때부터 좋아했지. 도지사도 우리가 맨들었는데 그 힘 몰아서 대통령 못 만들겠는가. 촌에는 거의 한나라당 텃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농촌도 달라지고 있지. 과감히 생각을 바꿔야할 때지.

두관이 얼굴이 좀 잘 생겼는가

해남 이진호 · 김병옥

즉석카메라도 만원 주고 샀어. 잘생긴 두관이 얼굴 찍어 갈라고. 인물이나 풍채나 뭣 하나 빠질 것 없는 대통령 감이야. 우리가 올해 80이 거든. 80먹은 우리도 두관이 팬이라고 이리 나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더 움직여야 혀.

제발 대통령 돼 달라고 편지썼다

서울 곽상원

뚝심 있고 공정할 것 같은 사람, 김두관의 가장 큰 매력이죠. 5년전 국회의원 선거 낙선했을 때부터 낙선하고도 멋과 힘이 느껴져 팬이었죠. 오죽했으면 도지사실로 편지만 두 번 썼다니까요. 제발 우리 대통령 돼 달라고요.

서민대통령, 중국에도 팬 많아요

부산 김윤재 · 최승현

다리수술로 목발까지 짚고 온 승현 씨는 3년 전 중국서 처음 김 후보를 만났다고. 서민적이면서 젊은 마인드가 무척 인상적이어서 그때부터 지지했죠. 생선장사하는 누님 등 노동자로 사는 식구모습만 봐도 뼛속까지 서민이란 게 삶으로 증명되잖아요. 강영자 기자

▲ 2012년 7월 12일(목) 남해시대 6면

【미니인터뷰】

두관이가 좋아서 요까지 왔구만

하동 강자야 · 김봉용

하동서 매실 농사짓는 우리지만 이웃집인 남해에서 군수 때부터 좋아했지. 도지사도 우리가 맨들었는데 그 힘 몰아서 대통령 못 만들겠는가. 촌에는 거의 한나라당 텃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농촌도 달라지고 있지. 과감히 생각을 바꿔야할 때지.

두관이 얼굴이 좀 잘 생겼는가

해남 이진호 · 김병옥

즉석카메라도 만원 주고 샀어. 잘생긴 두관이 얼굴 찍어갈라고. 인물이나 풍채나 뭣 하나 빠질 것 없는 대통령 감이야. 우리가 올해 80이거든. 80먹은 우리도 두관이 팬이라고 이리 나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더 움직여야 혀.

제발 대통령 돼달라고 편지썼다

서울 곽상원

뚝심 있고 공정할 것 같은 사람, 김두관의 가장 큰 매력이죠. 5년전 국회의원 선거 낙선했을 때부터 낙선하고도 멋과 힘이 느껴져 팬이었죠. 오죽했으면 도지사실로 편지만 두 번 썼다니까요. 제발 우리 대통령 돼 달라고요.

서민대통령, 중국에도 팬 많아요

부산 김윤재 · 최승현

무역일로 중국과 부산을 오가는데 3년 전 중국서 처음 뵈었죠. 서민적이면서 젊은 마인드가 무척 인상적이어서 그때부터 지지했죠. 생선장사하는 누님 등 노동자로 사는 식구모습만 봐도 뼛속까지 서민이란 게 삶으로 증명되잖아요.


“남해의 아들, 99%를 위한 대통령으로”

두관아 사랑해!

하늘이시여, 길을 열어주소서

김두관 출정식 날 새벽, 해남 바다서 기원천제 올려

▲ 2012년 7월 12일(목) 남해시대 6~7면

아래로부터 피는 서민의 희망

김두관 지지자들의 극성은 아이돌 스타의 팬 못지 않았다. 악수를 하려는 행렬은 줄을 이었고 행사장을 떠날 때까지 수백여명의 인파가 그를 둘러싸고 “김두관! 김두관!”을 외쳤다. 무대아래와 행사장 뒤쪽에 자리잡은 프레스존에도 취재기자들이 넘쳐났다. 김두관 전 지사가 ‘성공한 시민정부’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8일 해남 땅끝마을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동행취재기】

남해 촌놈이 틔운 희망

개인적으로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중도사퇴가 아쉬웠다. 그러나 출마선언장에 다녀와서 그가 왜 중도사퇴라는 멍에를 짊어지면서까지 대선에 출마하려는지 알 수 있었고 대권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 지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새로운 시작, 가장 아래를 상징하는 해남 땅끝마을의 열기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 성공한 시민정부를 바라는 전국 방방곳곳에서 모여 든 인파를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민, 평등, 현장, 아래’는 다른 후보는 말하기 쉽지 않은 그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마선언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오는 동안 ‘이장 출신 대통령, 감자탕집 주인이었던 영부인 탄생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두관이란 남해촌놈은 '잃어버린 기회의 평등'에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그렇게 희망의 움을 띄우고 있었다.

지금은 손잡아야 할 때

김두관 대통령 후보의 손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 해남은 들썩였다. 남해에서 버스 16대가 왔다고 자랑하던 기자에게 옆에 있던 한 전라도민은 나주에서만 버스 20대가 왔다며 김 후보 고향 치고 '약한 것 아니냐'는 농을 던졌다. 울산에서 4시간을 넘게 운전해서 3남매를 데리고 맨 앞자리에서 김두관을 외치던 엄마 이동귀 씨 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김두관 지지자임을, 너를 이겨야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네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는' 숲처럼 넉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인파에 묻혀, 그리고 삼엄한 경비에 둘러싸여 김두관 후보의 손을 잡지 못한 사람 또한 많았고 이들의 탄식 섞인 아쉬움도 들려왔다. 김두관 후보는 이제 시작이다. 아직 더 손을 내밀어야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서민의 손을 잡아 주어야 한다. 언덕은 낮춰보아도 사람은 내려보아서는 안 된다던 김 후보의 신념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첫 단추, 손을 마주 잡는 것 아닐까.

동행취재기

남해 촌놈이 틔운 희망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출마선언장에 다녀와서 그가 왜 중도사퇴라는 멍에를 짊어지면서까지 대선에 출마하려는지, 대권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 지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새로운 시작, 가장 아래를 상징하는 땅끝마을의 열기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 성공한 시민정부를 바라는 전국 방방곳곳에서 모여 든 인파를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민, 평등, 현장, 아래'는 다른 후보는 말하기 쉽지 않은 그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아 오는 동안 '이장 출신 대통령, 감자탕집 주인이었던 영부인 탄생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두관이란 남해촌놈은 '잃어버린 기회의 평등'에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의 움을 띄우고 있었다.

한중봉 기자

지금은 손잡아야 할 때

김두관 대통령 후보의 손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 해남은 들썩였다. 남해에서 버스 16대가 왔다고 자랑하던 기자에게 한 전라도민은 나주에서만 버스 20대가 왔다며 김 후보 고향 치고 '약한 것 아니냐'는 농을 던졌다. 울산에서 3남매를 데리고 맨 앞자리에서 김두관을 외치던 엄마 이동귀 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김두관 지지자임을, 너를 이겨야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네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는' 숲처럼 넉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김두관 후보는 이제 시작이다. 아직 더 손을 내밀어야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서민의 손을 잡아 줘야 한다. 언덕은 낮춰보아도 사람은 내려 보아서는 안 된다던 김 후보의 신념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첫 단추, 손을 마주 잡는 것 아닐까.

강영자 기자

▲ 2012년 7월 12일(목) 남해시대 7면

【시대생각】

50만 내외군민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김두관 전 지사가 지난 8일 해남 땅끝마을에서 남해출신 최초로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출마선언을 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고향 남해에서는 물론 전국각지에서 김두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어느 대선주자의 출정식보다 많은 7천여명이 모여 김두관이 이루고자 하는 평등세상을 향해 지지와 박수를 보냈다. 이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그의 대선출전에 함께했으나 정작 그의 전국지지율은 지난 10일 현재 2%에 머물고 있다.

그의 강력한 당내 경쟁자인 문재인의 10%에 비하면 보잘 것 없고 경쟁이 되겠나 싶을 정도다.

그의 선거를 돕기 위해 남해대학 총장직을 떠난 공민배 전 총장은 이에 대해 "그의 진가가 아직 국민속으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 지지율을 5%대로 높인다면 김두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5% 지지율 확보가 김두관이 가장 넘기 힘든 고개이자 대선레이스의 초반전 승부를 결정짓는 최대 승부처로 봤다.

공 총장은 왜 올림픽 전 5% 지지율에 주목하는 것일까.

런던 올림픽이 개최되면 연말대선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국민의 관심이 올림픽으로 쏠릴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문재인 지지율의 절반을 확보해야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가능성 있는 후보라는 인식이 국민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5%만 확보하면 전체 대선레이스를 이끌어갈 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이 5%가 강력한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게 하고 그의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표의 확장성에 탄력을 줘 대선에서 최종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중략)

남해사람 중에는 아직도 '과연 김두관이 대통령이 되겠냐'며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50만 내외 남해군민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김두관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해남 땅끝마을로 7천명이 모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의 도움이나 지원을 받아 동원된 것이 아닌 오직 김두관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순수하고 자발적인 참여라는 사실을. 어느 한 지역만 참여한 것이 아닌 전국에서 모였다는 사실을. 어느 한 계층만 참가한 것이 아닌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는 사실을. 남해의 김두관이 아닌 전국의 김두관이라는 사실을.

김두관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시골이장 출신이 군수, 도지사 하더니 대통령도 넘봐'라며 김두관을 깔보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무관심과 폄하를 남해사람이 앞장서 불식시켜야 한다.

아래로부터 시작된 그의 이력이 99% 서민을 위한 평등국가를 만들기 위한 얼마나 강력한 무기이자 힘인지를 알려야 한다.

이제 남해사람은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진보신당도 아닌 남해당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남해출신 대통령이라는 말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을까?

김두관 대통령 만들기에 50만 내외 남해군민이 온힘을 모을 때이다.

바로 지금이.

시대생각

편집국장 김창근



50만 내외군민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김두관 전 지사가 지난 8일 해남 땅끝마을에서 남해출신 최초로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출마선언을 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고향 남해에서는 물론 전국각지에서 김두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어느 대선주자의 출정식보다 많은 7천여명이 모여 김두관이 이루고자 하는 평등세상을 향해 지지와 박수를 보냈다. 이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그의 대선출전에 함께했으나 정작 그의 전국지지율은 지난 10일 현재 2%에 머물고 있다.

그의 강력한 당내 경쟁자인 문재인의 10%에 비하면 보잘 것 없고 경쟁이 되겠나 싶을 정도다.

그의 선거를 돕기 위해 남해대학 총장직을 떠난 공민배 전 총장은 이에 대해 "그의 진가가 아직 국민속으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 지지율을 5%대로 높인다면 김두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5% 지지율 확보가 김두관이 가장 넘기 힘든 고개이자 대선레이스의 초반전 승부를 결정짓는 최대 승부처로 봤다.

공 총장은 왜 올림픽 전 5% 지지율에 주목하는 것일까.

런던 올림픽이 개최되면 연말대선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국민의 관심이 올림픽으로 쏠릴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문재인 지지율의 절반을 확보해야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가능성 있는 후보라는 인식이 국민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5%만 확보하면 전체 대선레이스를 이끌어갈 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이 5%가 강력한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게 하고 그의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표의 확장성에 탄력을 줘 대선에서 최종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계산은 국민들로부터 관심만 받게 되면 김두관이 가진 장점에 지지자들이 모여들 것이라는데 있다. 이는 일반국민들보다 김두관의 진가를 먼저 알아보고 지지에 나선 사회지도층인 학자와 예술과 정치인의 지지선언에서 잘 알 수 있다

이 고비를 넘기 위해 이제 남해사람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김두관의 사람됨과 살아온 길, 가고자 하는 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50만 남해군민들이 나서서 밀어주고 끌어줘야 한다. 남해가 이 기회를 놓치면 김두관과 같은 강력한 대선후보를 언제 다시 가져 보겠는가. 전국의 그 어느 조직보다 탄탄하다고 하는 남해향우회와 남해사람이 모두 김두관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 5%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남해사람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남해사람 중에는 아직도 '과연 김두관이 대통령이 되겠냐'며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50만 내외 남해군민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김두관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해남 땅끝마을로 7천명이 모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의 도움이나 지원을 받아 동원된 것이 아닌 오직 김두관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순수하고 자발적인 참여라는 사실을. 어느 한 지역만 참여한 것이 아닌 전국에서 모였다는 사실을. 어느 한 계층만 참가한 것이 아닌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는 사실을. 남해의 김두관이 아닌 전국의 김두관이라는 사실을.

이제 남해사람은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진보신당도 아닌 남해당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남해출신 대통령이라는 말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을까?

김두관 대통령 만들기에 50만 내외 남해군민이 온힘을 모을 때이다.

바로 지금이.

▲ 2012년 7월 12일(목) 남해시대 27면

고향 남해에서 바라본 김두관1 – 이어마을 사람들

“두관이는 상여 메는 일에 한번도 빠진 적이 없제”

못짐 짊어지고 상여 메고… 마을 대소사 나서서 도와

제18대 대선에 당당히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후보는 50만 내외 군민이 알고 있듯 남해군 출신의 유일한 대권후보다. 현재 ‘내게 힘이 되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동체를 향한 상생을 추구하는 그는 이제 ‘나라의 이장’이 되려 한다.

그렇다면 남해의 아들, 김두관을 바라보는 고향 이어마을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 이에 지난 16일, 이어마을회관을 찾아 이문찬 현 이어마을 이장과 김필명 감사, 이어마을 경로당에서 주민들을 만나 김두관 후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다. 〈편집자 주〉

막걸리 한 잔 나눠 마시는 정을 알아

고현면 이어마을을 들어서는 순간 마을회관 앞에 걸린 두 개의 현수막에서 ‘아 이곳이 고향이구나’ 싶었다. 현수막에는 ‘망운산의 정기로 북한산까지’와 ‘부강한 대한민국 김두관이 만들어갑니다– 행복한 이어마을 일동’이 걸려 있었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이어마을 이문찬(48) 이장은 “나이차 나는 형님이지만 워낙 동생들한테도 스스럼없이 친구처럼 대해주셔서 우리 마을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김두관 후보 팬”이라는 말과 함께 “이장 때도 이것저것 가리는 것 없이 다 도와준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김필명 감사는 당시 김 후보에 대해 “막걸리 한 잔 나눠 마시는 그 재미에 고된 일도 마다 하지 않았다. 특히 상여 멜 때나 못짐(현재의 모판 나르기) 짊어지는 것도 비가 노다지 쏟아져도 매일 나와서 제 논 남의 논 할 것 없이 도왔고 덩치가 커서 잘 짊어져 어른들한테 귀여움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도지사 돼 몇 년간 편하리라 생각했으나

“학교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빠지지 않고 연말연시에 연하장을 보내줘서 고향 사람들이 참말로 좋아했다. 또 워낙 진실하게, 서민이랑 어울릴 줄 아니까 더 믿음이 갔고 그래서인지 두관이가 한다고만 하면 말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 (대선)만큼은 처음으로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는 김필명 감사. 그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도 같은 심정이었다고 한다.

이문찬 이장은 “군수, 국회의원, 도지사 등 얼마나 많은 선거를 치러왔는데. 그때마다 이어마을주민들이 다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똘똘 뭉쳤었다. 사실 도지사 딱 되고 나서 우리끼리 ‘이제 몇 년간은 좀 수월하겠구나’ 싶었는데 대권출마 한다고 하니 아이쿠 싶었다”고.

하지만 이 또한 김두관 후보를 아껴서 나온 걱정일 뿐 이미 이날 오전에 있었던 마을개발 회의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힘을 모아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박문선 노인회 총무는 “여지껏 동네사람들 다 어디든지 다녔는데 한번 움직일 때마다 버스 빌리는 것만 기본 80만원인데 여기에다 먹고 뭐 하고 하면 한번 움직이는 200만원이 금방 깨진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5개월 동안 응원하려면 아예 동네에서 중고버스를 하나 사자는 의견까지 나왔다”며 웃는다.

진실 그 자체인 김두관, 벌써부터 전국서 찾아와

이문찬 이장은 요즘 몸이 열 개라도 바쁠 지경이라고 한다. 대권출마설이 나돌기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이어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이다. 김두관 후보의 본가를 안내해달라는

연락이 절반 이상인데다 최근에는 전국 각지의 지관들까지 찾아와 이것저것 묻는 통에 영 입장이 난처하단다. “온 사람들을 쫓아 내보낼 수도 없고 사람 환장하겠대요. 한창 바쁜 농번기에 김 후보 부친 산소 자리를 알려달라는 지관들도 많이 있어서 참 곤란했다. 특히 김두관 후보가 절대 응하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했던 터라 더 마음고생이 심했다”한다.(후략)



4 특집 2012년 7월 19일 목요일 남해시대

고향 남해에서 바라본 김두관1- 이어마을 사람들

“두관이는 상여 메는 일에 한번도 빠진 적이 없제”

못짐 짊어지고 상여 메고 … 마을 대소사 나서서 도와

제18대 대선에 당당히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후보는 50만 내외 군민이 알고 있듯 남해군 출신 유일한 대권후보다. 현재 ‘내게 힘이 되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동체를 향한 상생을 추구하는 그는 이제 ‘나라의 이장’이 되려 한다. 그렇다면 남해 아들, 김두관을 바라보는 고향 이어마을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 이에 지난 16일, 이어마을회관을 찾아 이문찬 현 이어마을 이장과 김필명 감사, 이어마을 경로당에서 주민들을 만나 김두관 후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다. (편집자 주)

이어마을 김필명 감사.

이어마을 이문찬 이장이 김두관 후보의 집을 가리켰다.

막걸리 나눠 마시는 정을 알아

고현면 이어마을을 들어서는 순간 마을회관 앞에 걸린 두 개의 현수막에서 ‘아! 이런것이 고향이구나’ 싶었다. 현수막에는 ‘망운산의 정기로 북한산까지’와 ‘부강한 대한민국 김두관이 만들어갑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이어마을 이문찬(48) 이장은 “나이차 나는 형님이지만 워낙 동생들한테도 스스럼없이 대해주셔서 우리 마을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김두관 후보 팬”이라는 말과 함께 “이장 때도 이것저것 가리는 것 없이 다 도와준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김필명(64) 마을감사는 당시 김 후보에 대해 “막걸리 한 잔 나눠 마시는 그 재미에 고된 일도 마다 하지 않았다. 특히 상여 멜 때나 못짐(현재의 모판 나르기) 짊어지는 것도 비가 노다지 쏟아져도 매일 나와서 제 논 남의 논 할 것 없이 도왔고 덩치가 커서 잘 짊어져 어른들한테 귀여움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몇 년간 편하리라 생각했으나

“학교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빠지지 않고 연말연시에 연하장을 보내줘서 고향 사람들이 참말로 좋아했다. 또 워낙 진실하게, 서민이랑 어울릴 줄 아니까 더 믿음이 갔다. 그래서인지 두관이가 한다고만 하면 말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 (대선)만큼은 처음으로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는 김필명 감사. 그 뜻 아니라 마을주민도 같은 심정이었다고 한다.

이문찬 이장은 “군수, 국회의원, 도지사 등 엄마나 많은 선거를 치러왔는데, 그때마다 이어마을주민들이 다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똘똘 뭉쳤었다. 사실 도지사 딱 되고 나서 우리끼리 ‘이제 몇 년 간은 좀 수월하겠구나’ 싶었는데 대권출마 한다고 하니 아이루 싶었다”고.

하지만 김두관 후보를 아껴서 나온 걱정일 뿐 이미 이날 오전에 있었던 마을개발회의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힘을 모아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박분선 노인회 총무는 “여지껏 선거 때마다 동네사람들 다 모여 어디든지 다녔는데 한번 움직일 때마다 버스 빌리는 것만 기본 80만원인데 여기에다 먹고 뭐하고 하면 한번 움직이는데 200만원이 금방 깨지더라. 현실이 이렇다보니 5개월 동안 응원하려면 아예 동네에서 중고버스를 하나 사자는 의견까지 나왔다”며 웃는다.

진실 그 자체인 김두관, 벌써부터 전국서 찾아와

이문찬 이장은 요즘 몸이 열 개라도 바쁠 지경이라고 한다. 대권출마설이 나돌기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이어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이다.

김두관 후보의 본가를 안내해달라는 연락이 절반 이상인데다 최근에는 전국 각지의 지관들까지 찾아와 이것저것 묻는 통에 영 입장이 난처하단다. “온 사람들을 쫓아 내보낼 수도 없고 사람 환장하겠대요. 한창 바쁜 농번기에 김 후보 부친 산소 자리를 알려달라는 지관들도 많이 있어서 참 곤란했다. 특히 김두관 후보가 절대 응하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했던 터라 마음고생은 더 심했다”고 한다.

나 또한 본가를 안내해달라고 하자 이 이장은 웃으며 “거, 참 이러깁니까”하면서도 앞장선다.

단출한 농가주택이 보였다. 김 후보의 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자그마한 우물이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을 때도 이 우물 옆에서 시름을 달랬고, 대권출정식이 있던 지난 8일 새벽에도 김 후보는 이 우물을 길어 올렸다고 한다. 민심을 퍼 올리고 싶은 그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우물을 보고 있으니 출정식 연설에서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작은 이슬방울에도 우주의 원리가 담겨있습니다. 작은 마음이 이슬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우주입니다. 이제 그 우주에서 나눔과 배려와 연대를 실현하겠습니다. 평등국가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강영자 기자 nhsd@hanmail.net

김두관 전 지사, 21일 서울서 출판기념회

김두관 대선 후보가 오는 21일(토) 서울에서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전 지사 캠프의 서현준 홍보위원은 김 전 지사가 오는 21일 오후 3시 잠실체육관에서 자신의 정치에세이 ‘아래에서부터’와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등이 쓴 ‘김두관의 발견’의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뮤지컬 공연팀이 출연해 뮤지컬 형식으로 책을 소개하고 웹툰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등 젊은 층을 공략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란다.

이와 관련 류경완 남해자치분권연대 집행위원장은 “출마선언 후 김두관 후보의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만큼 서울에서 열리는 출판기념회가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군민과 함우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오는 29일(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에서도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한중봉 기자 nhsd@hanmail.net

▲ 2012년 7월 19일(목) 남해시대 4면

김두관 전 지사, 21일 서울서 출판기념회

김두관 대선 후보가 오는 21일(토) 서울에서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전 지사 캠프의 서현준 홍보위원은 김 전 지사가 오는 21일 오후 3시 잠실체육관에서 자신의 정치에세이 '아래에서부터'와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등이 쓴 '김두관의 발견'의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뮤지컬 공연팀이 출연해 뮤지컬 형식으로 책을 소개하고 웹툰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등 젊은 층을 공략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란다.

이와 관련 류경완 남해자치분권연대 집행위원장은 "출마선언 후 김두관 후보의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만큼 서울서의 출판기념회가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군민과 향우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오는 29일(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에서도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김두관에게 '힘이 되는 향우'

정치 이념과 정당 떠나 남해의 꿈 이루자

재경남해군향우회는 지난 12일 도화동 서울가든 호텔 무궁화홀에서 향우회 고문이자 전 경남도지사인 김두관 향우를 초청,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중길 회장은 향우회 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는 임원들에게 전하는 감사 인사로 간담회의 시작을 알렸고 "지난 8일 해남 땅끝마을에서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신평등국가 건설을 약속하며 대선 출정식을 가진 김두관 향우를 초청해 만남의 시간을 갖고 향우회 운영방향과 현안사업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는 뜻을 밝혔다.

김두관 향우는 "군민들과 향우들의 배려와 염려, 성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김두관이 있을 수 있었고, 이것은 또한 나의 근본적인 힘이었다"고 고마움을 전한 뒤 "희망찬 미래로의 새로운 시작에 큰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중길 군향우회장, 최봉구, 강태욱, 유광사 고문, 김재전 명예회장을 비롯해 군향우회 자문위원과 임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치 이념과 정당을 떠나 '지금은 남해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내게 힘이 되는 나라'라는 그의 슬로건처럼 '그에게 힘이 되는 향우'가 되길 바랐고, 참석자들은 김 향우의 열정만큼이나 뜨거운 응원과 격려의 박수로 힘을 보탰다.


남해시대 SEOUL NEWS 서울소식 2012년 7월 19일 목요일 20

김두관에게 '힘이 되는 향우'

정치 이념과 정당 떠나 남해의 꿈 이루자

환 김두관향우초청조찬간담회 영

▲ 2012년 7월 19일(목) 남해시대 20면

고향 남해에서 바라본 김두관 2 –
장묘문화혁신위해 전쟁 치룬 공무원들

멀리 가느냐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느냐를 고민하던 사람

'담당자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전적으로 신뢰했다'
'경청과 합리적인 토론이 몸에 배인 사람'
'공무원으로써 남해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최초의 공직을 '마을이장'으로 꼽는 남자. 이후 민선1·2기 남해군수로 당선된 남자, 경남도지사직을 내려놓고 '더 큰 김두관 되어 돌아오겠다'는 약속으로 용서를 구한 남자. 그가 제18대 대선에 당당히 출사표를 던진 남해의 건아, 당시의 누구나처럼 운동화 한번 신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농민의 아들, 김두관이다.

김두관 후보는 50만 내외 군민이 알고 있듯 남해군 출신의 유일한 대권후보다. 현재 '내게 힘이 되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동체를 향한 상생을 추구하는 그는 이제 '나라의 이장'이 되려 한다. 그렇다면 남해군청에서 7년간 한솥밥을 먹으며 행정지도자로서의 김두관을 바라보는 공무원은 김두관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김두관 군수시절 가장 첨예한 갈등의 한가운데 던져져 치열하게 고민했던 장사법 담당자와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았다. 〈편집자 주〉

법보다 높았던 뿌리 깊은 관습을 이겨낸 '방향성'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남해군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곳이 연죽 추모누리다. 1999년부터 1만5천여기의 분묘를 개장, 추모누리 납골당에 안치해 왔던 남해군이 전국의 모범사례로 꼽혀 정부의 묘지실태조사 시범지자체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적에 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 장의 올바른 방향과 판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두관 후보가 민선1기 군수일 때,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공공선이기에 했던 대표적인 일이 바로 불법묘지 근절이었다.(중략)

당시를 회상하면 "길가 아무 곳이나 묘를 쓸 만큼 묘지가 난립해 있던 상황이었다. 관광남해가 아니라 공동묘지 남해가 될 판이었다. 지금이야 선진사례로 벤치마킹도 오지만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들 주민들 눈치만 보고 겁이 나서 행하지 못할 때여서 장사법이 2001년 1월 3일자로 발효가 됐어도 매장을 선호하는 오랜 관습 때문에 오히려 법과 법을 적용하려는 군을 더 비난했다"고 말했다.

표를 먹고 사는 민선군수가 왜 이랍니까?

당시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원성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곽기두 담당자는 "불법으로 묘지를 쓴 경우 묘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관 뚜껑이 확 열려 식겁한 적도 있었다. 그때 화투장이 무덤에서 나와 그걸 김성근 담당자와 내가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주워서 다시 관에 넣어줬던 기억이 난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부유한 향우나 지역유지들이 꼭 그 곳에 묘를 쓰겠다고 고집을 부려 법정까지 가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 압박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정말 김두관 군수도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겠나. 하지만 정말 감동받았던 것은 결코 우리에게 내색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담당자들의 판단을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셨다"고 말했다.(중략)

그러자 김두관 당시 군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어느 누가 군수를 하든간에 이(묘지) 문제만큼은 피해갈 수 없고, 이게 해결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정책도 펼칠 수 없을뿐더러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누구라도 피하고픈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나라도 해야 안 되겠나. 이게 내가 남해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아직까지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장묘문화 개선은 '의식변화'가 관건이었다. 김두관 당시 군수는 군민들의, 그리고 부모같은 어르신들의 관습과 생각을 바꾸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당시 그 어떤 사업추진 때 보다 많은 안내문과 표어, 홍보물, 설명회와 숱한 언론 게재와 향우회마다 찾아가 자료 나눠주며 발표하기 등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공을 들인 시간이 많았다고. 그 당시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소통'이었을 것이다.

단순한 법 집행에 그쳤더라면 오늘날 해양레저와 관광남해로 향하는 첫 번째 길목은 더욱 더디게 열렸을지도 모르겠다.(후략)



6 특집 2012년 7월 26일 목요일 남해시대

고향 남해에서 바라본 김두관2- 장묘문화혁신위해 전쟁 치룬 공무원들

멀리 가느냐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느냐를 고민하던 사람

'담당자에게 일을 맡겨놓으면'전적으로 신뢰했다'
'경청과 합리적인 토론이 몸에 배인 사람'
'공무원으로써 남해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최초의 공직을 '마을이장'으로 꼽는 남자. 이후 민선1·2기 남해군수로 당선된 남자, 경남도지사직을 내려놓고 '더 큰 김두관 되어 돌아오겠다'는 약속으로 용서를 구한 남자. 그가 제18대 대선에 당당히 출사표를 던진 남해의 건아, 당시의 누구나처럼 운동화 한번 신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농민의 아들, 김두관이다.

김두관 후보는 50만 내외 군민이 알고 있듯 남해군 출신의 유일한 대권후보다. 현재 '내게 힘이 되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동체를 향한 상생을 추구하는 그는 이제 '나라의 이장'이 되려 한다. 그렇다면 남해군청에서 7년간 한솥밥을 먹으며 행정지도자로서의 김두관을 바라보는 공무원은 김두관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김두관 군수시절 가장 첨예한 갈등의 한가운데 던져져 치열하게 고민했던 장사법 담당자와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았다. 〈편집자 주〉

법보다 높았던 뿌리 깊은 관습을 이겨낸 '방향성'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남해군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곳이 연곡 추모누리다. 1999년부터 1만5천여기의 분묘를 개장, 추모누리 납골당에 안치해 왔던 남해군이 전국의 모범사례로 꼽혀 정부의 묘지실태조사 시범지자체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적에 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 장의 올바른 방향과 판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두관 후보가 민선1기 군수일 때,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공공선이기에 했던 대표적인 일이 바로 불법묘지 근절이었다.

김 후보는 당시 1998년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장묘문화혁신운동을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묘지가 이미 2천만 기를 넘어선 상태였다. 국민 1인당 주거공간이 4.3평인데 묘지는 평균 15평이나 되어 죽은 자의 공간이 산 자의 공간보다 무려 3~4배가 더 넓었다. 불법묘지는 주요사업추진에도 방해가 됐다. 남해는 특히 산림이 70%나 되는 지형이라 가용할 땅이 좁은데다 묘지가 너무 많아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2001년 당시 본격적인 장묘문화개선 업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은 정주철 사회복지팀장과 김성근 · 곽기두 사회복지과 담당자였다. 당시 김성근 주사는 시책전반과 공동묘지정비사업, 화장개장 장려금 지원업무 등을 맡고 있었고 당시 곽기두 주사는 묘지민원과 묘지 신고 허가, 불법묘지 단속업무를 맡고 있었다.

당시를 회상하면 "겁가 아무 곳이나 묘를 쓸 만큼 묘지가 난립해 있던 상황이었다. 관공남해가 아니라 공동묘지 남해가 될 판이었다. 지금이야 선진사례로 벤치마킹도 오지만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들 주민들 눈치만 보고 겁이 나서 행하지 못할 때여서 장사법이 2001년 1월 3일자로 발효가 됐어도 매장을 선호하는 오랜 관습 때문에 오히려 법과 그 법을 적용하려는 남해군을 더 비난했다"고 말했다.

표를 먹고 사는 민선군수가 왜 이랍니까?

당시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원성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곽기두 담당자는 "불법으로 묘지를 쓴 경우 묘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실체보관 푸젓이 확 열려 식겁한 적도 있었다. 그때 화투장이 무덤에서 나와 그럴 김성근 담당자와 내가 뛰리는 손으로 하나씩 주워서 다시 관에 넣어주며 '어르신, 좋은 곳에 가셔서 편히 쉬세요' 말했던 기억이 난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고인을 보낸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찾아가 설득하는 일이었다. 3일 밤을 새워 설득한 적도 있다. 또한 부유한 향우나 지역유지들이 꼭 그 곳에 묘를 쓰겠다고 고집을 부려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 압박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정말 김두관 군수도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겠나. 하지만 정말 감동받았던 것은 결코 우리에게 내색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담당자들의 판단을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셨다"고 말했다.

김성근 담당자 또한 "당시는(관선군수 시절의 관행이 남아있어서) 8급은 군수실 들어가지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김두관 군수는 오히려 담당실무자에게 보고를 듣는 것을 좋아하셨고 스스로 분석을 낳추고 어떤 경우에라도 먼저 경청하셨다. 늘 다 들은 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토론도 좋아하셨다"고 말했다.

묘지업무 1년차가 됐던 시기, 남해군 곳곳에서는 '남해대교 앞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총칼을 들고 상여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등 묘지업무와 관련해 흉흉한 소문과 유언비어들이 나돌아 특히 힘들었다고 한다.

이에 한 남, 곽기두 담당자가 당시 김두관 군수와 독대를 하며 물었단다. "군수님은 왜 이 가시밭길을 가시려 합니까? 군수님은 어차피 표 먹고 살 사람인데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자 김두관 당시 군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어느 누가 군수를 하든간에 이 (묘지)문제만큼은 피해갈 수 없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정책도 펼칠 수 없을뿐더러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누구라도 피하고픈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나라도 해야 안 되겠나. 이게 내가 남해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아직까지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장묘문화 개선은 '의식변화'가 관건이었다. 김두관 당시 군수는 군민들의, 그리고 부모같은 어르신들의 관습과 생각을 바꾸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당시 그 어떤 사업추진 때 보다 많은 안내문과 표어, 홍보물과 숱한 언론 게재와 향우회마다 찾아가 자료 나눠주며 설명회를 갖는 등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공을 들인 시간이 많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소통'이었을 것이다.

단순한 법 집행에 그쳤더라면 오늘날 해양레저와 관광남해로 향하는 첫 번째 길목은 더욱 더디게 열렸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소통을 위해 노력한 김두관이었다고 해도 여전히 그때 당시의 묘지 이전과 관련해 남해군민을 떠올리면 아직까지도 미안했던지 업무를 떠난지 몇 년이 흐른 지금도 늘 당시 담당자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웠다'고 말한다고. 이는 담당자를 역시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김성근 담당자는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청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아팠던 날들이 많았다. 지금 이 순간, 이 기사마저도 유족의 아픔을 흑여나 건드리는 일이 될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뜻이 바르면 길은 반드시 있듯이 정성을 다한 소통이었기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본다.

강영자 기자 nhsd@hanmail.net

▲ 2012년 7월 26일(목) 남해시대 6면

김두관의 도전 '아래에서부터 위로'

'북 뮤지컬' 열고 소통과 결집 나서

김두관 대선 후보는 지난 21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지율을 제고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김 후보의 정치에세이 '아래에서부터'와 그를 오랫동안 지켜본 명사들의 글을 엮은 책 '김두관의 발견'을 소재로 한 뮤지컬 공연과 디지털 영상, 김 후보와의 대담이 함께 어우러진 '북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 큰 호응을 얻었다.

유명 뮤지컬 〈그리스〉와 〈오페라의 유령〉 등의 명장면들을 책 내용에 맞춰 재구성한 공연에 깜짝 출연하기도 한 김 후보는 '그 어떤 순간이 와도 결코 그대를 잊지 않아요' 등의 가사가 담긴 노래로, 또 다른 공연에서는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너'라는 메시지로 대중과 후보 사이의 소통과 결집을 나타냈다.

한편 김 후보는 "서민 출신의 성공한 정치인이 서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민이, 서민의 눈높이에서, 서민을 중심으로 펼치는 것이 진짜 서민정치"라고 강조하며 자신과 형제자매, 가족들이 살아온 길을 담담히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을 아래로부터 섬겨 편 가르기가 없는,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원혜영 공동선대위원장은 "국민들은 지금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부터 위로'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있다. 김 후보는 아래로부터 위로를 실현할 인물이다. 여기는 김두관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다"라고 말하자 큰 박수가 터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의원을 비롯해 천정배, 원혜영 공동선대위원장과 선대위 관계자 등 1500여명 이상의 지지자들이 참여했다. 한편 재경남해군향우회에서도 이중길 회장 등 김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향우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달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대선 도전에 한 발 다가섰으며 지난 8일에는 해남 땅끝마을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 전국을 돌며 대선 예비후보로서 얼굴 알리기에 주력해 왔다. 오는 29일(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도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남해시대 SEOUL NEWS 서울소식 2012년 7월 26일 목요일 S14

서울 지사장 이수범 M 010-8738-3315 / E-mail : millemind@hanmail.net
서울주재기자 김희정 M 010-3012-3567 / E-mail : khjung35@hanmail.net

전국꽃배달서비스 전화상담 ☎863-5134 해바라기화원 축하화환/근조화환/개업식 화분(관엽·소품 등) 꽃다발·꽃바구니/주문제작 가능 ▶위치 : 현대아파트 상가 맞은편 ▶홈페이지 : www.flower5435.com 김대길

김두관의 도전 '아래에서부터 위로' | '북 뮤지컬' 열고 소통과 결집 나서

김두관 대선 후보는 지난 21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지율을 제고했다. (사진)

이날 출판기념회는 김 후보의 정치에세이 '아래에서부터'와 그를 오랫동안 지켜본 명사들의 글을 엮은 책 '김두관의 발견'을 소재로 한 뮤지컬 공연과 디지털 영상, 김 후보와의 대담이 함께 어우러진 '북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 큰 호응을 얻었다.

유명 뮤지컬 '그리스'와 '오페라의 유령' 등의 명장면들을 책 내용에 맞춰 재구성한 공연에 깜짝 출연하기도 한 김 후보는 '그 어떤 순간이 와도 결코 그대를 잊지 않아요' 등의 가사가 담긴 노래로, 또 다른 공연에서는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너'라는 메시지로 대중과 후보 사이의 소통과 결집을 나타냈다.

한편 김 후보는 "서민 출신의 성공한 정치인이 서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민이, 서민의 눈높이에서, 서민을 중심으로 펼치는 것이 진짜 서민정치"라고 강조하며 자신과 형제자매, 가족들이 살아온 길을 담담히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을 아래로부터 섬겨 편 가르기가 없는,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원혜영 공동선대위원장은 "국민들은 지금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부터 위로'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있다. 김 후보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가치를 실현할 인물이다. 여기는 김두관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다"라고 말하자 큰 박수가 터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의원을 비롯해 천정배, 원혜영 공동선대위원장과 선대위 관계자 등 1500여명 이상의 지지자들이 참여했다. 한편 재경남해군향우회에서도 이중길 회장 등 김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향우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달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대선 도전에 한 발 다가섰으며 지난 8일에는 해남 땅끝마을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 전국을 돌며 대선 예비후보로서 얼굴 알리기에 주력해 왔다. 오는 29일(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도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 2012년 7월 26일(목) 남해시대 14면

의 결 번 호	2012대선18(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서울21) 서울 중구 쌍림동 151-11 대표이사 고 재 구
심의대상기사	서울21 2012년 9월호(통권 제51호) 35면 「	특집	육영수와 박근혜」, 36~39면 「인물 초대석	강인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 "육영수 여사, 월남출정 때 눈물로 손 흔들어 줬다"」, 40~43면 「	특집	영원한 퍼스트레이디 故 육영수 여사 추모 38주년 "그녀는 역사의 제단위에 던져진 한국의 위대한 어머니였다"」, 44~45면 「사진으로 본 故 육영수 여사 제38주기 추도식」, 46~49면 「인물 초대석	김구철 '여풍당당 박근혜' 공동저자 및 TV조선 〈뉴스와이드 참〉 팀장 "박근혜가 대통령 될 것, 안철수는 검증 후 추락"」, 50~51면 「	기획특집 ①	박근혜의 정치미학 국민행복 디자이너, 대한민국 대통합 이룬다」, 52~53면 「	기획특집 ②	박근혜 '옥함상자' 열다 박근혜의 한국적 가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애국주의'」, 54~55면 「	기획특집 ③	박근혜 A to Z '한국적 스타일', 육영수 여자와 닮은 꼴」, 56~59면 「수리철학으로 풀어본 2012년 대선 전망	임선정 양박문화재단 원장 "연말 대권은 전생부터 준비된 者, 용천박 대박 난다" 예언」 제하의 기사 등 총 9건의 선거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한 호(號)에만 9건의 기사로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특집기획기사를 집중 보도하였다. 먼저 해당 예비후보자 친인척의 추모식 사실을 다루면서 해당 친인척에 우호적인 인사들의 인터뷰 기사를 집중적으로 게재하여 해당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한 측면이 있다. 또한 다량의 사진과 우호적인 기사제목을 활용하여 해당 예비후보자의 경력 및 이력, 의정활동 등을 부각했다. 나아가 해당 예비후보자에 관한 책을 저술한 인사가 해당 예비후보자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인터뷰 기사와 해당 예비후보자의 대선 승리를 암시하는 무속인의 인터뷰 기사도 게재하였다. 이는 선거기사를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6조(정치적 중립), 제8조(인용보도 및 인터뷰 기사), 제9조(특집기획기사), 제15조(기사제목), 제16조(사진게재)를 위반한 위 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특집】 육영수와 박근혜

영원한 퍼스트레이디 故 육영수 여사
"그녀는 역사의 제단 위에 던져진 한국의 위대한 어머니였다"

박근혜의 정치 미학

1 국민행복 디자이너, 대한민국 대통합 이룬다.
2 박근혜의 한국적 가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애국주의'
3 '한국적 스타일', 육영수 여사와 닮은 꼴

2012년 8월 15일, 고(故) 육영수여사 38주년 추도식, 오늘도 그날같이 눈물처럼 비가 온누리를 적셨다. 전국 각지에서 구름처럼 모여든 추모객들은 폭우를 온 몸으로 맞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어머니, 고(故) 육영수 여사'의 떠나심을 추도하며 참배했다.

2012년 8월 2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저의 삶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며 후보수락 연설을 하는 박근혜 후보는 '잊혀지지 않는 대한민국 퍼스트레이디, 육영수 여사'가 되살아 나 국민들 앞에 다시 선 것만 같았다.

역사의 제단 위에 던져진 한국의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꼭 빼닮은 딸 박근혜가 못 다한 어머니의 사랑을 위한 대한민국과의 결혼식장이 될 올 연말 대통령선거에 나섰다. [서울21]은 그 첫 번째 특집으로 [육영수와 박근혜]를 기획했다.



【인물초대석】

강인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

"육영수 여사, 월남출정 때 눈물배웅 잊을 수 없다"

"월남 전에 출정할 때 육영수 여사님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손을 흔들고 눈물을 훔치며 배웅해 주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나는 그 때 어머니가 전장터로 향하는 아들을 배웅하듯 한 애틋한 모정을 느꼈다. 그때 우리 월남참전 군인들 모두가 육 여사님이 보여 준 국민에 대한 사랑과 인류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강인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이 고(故) 육영수 여사와 고엽제전우회와의 깊은 인연을 회상하며 한 말이다. 육 여사가 평소 잔잔한 미소와 함박웃음으로 수많은 국민들을 위로했다면, 그때 육 여사는 '제발 살아서만 돌아오라'는 간절함의 격려였다.

군인의 아내로 셋방살이를 전전했던 젊은 날의 육영수 여사가 '눈물 젖은 빵'을 넘어 '피에 젖은 빵'을 위해 월남출병에 나서는 수십만 명의 대한민국 젊은 아들들을 향해 눈물을 흘린 것은 그의 '사랑의 심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강회장의 생각이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궁핍했던 대한민국, 가난을 벗고 부유한 나라가 되기까지 흘려야 했던 피와 땀과 눈물,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의 신화적인 역사 뒤에는 위대한 영웅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 회장은 강조했다.

강 회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 까지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밑바탕이 되었다"며 "이를 몸소 실천하고 다져주신 분이 고(故) 육영수 여사님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5000년의 기나긴 가난을 걷어 낸 중심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육영수 여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산업화를 통한 한국경제 발전에 월남참전 용사들의 숨은 공로도 한몫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21]은 지난달 27일 월남참전 용사들을 대표해 서울 후암동에 위치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실에서 강회장을 만나 '고 육영수 여사 제38주년 추도식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 인터뷰했다. 강 회장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육영수 여사님 같은 국모를 모시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의 강인함과 육영수 여사님의 인자함을 모두 가진 분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중략)

"고엽제 대미피해보상 베트남과 공동대책 마련"

강 회장은 최근 베트남고엽제협회를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강 회장에 따르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올해 베트남을 찾은 것은 해마다 8월 10일에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고엽제의 날(Orange Day)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는 한-베 수교 20주년(2012년 6월)을 맞이해 우리 측에서 베트남 쪽의 고엽제 환자를 초청한 행사를 통하여 환자 치료 및 시술 등을 지원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데 민간외교로서 크게 한몫했다.(중략)

"참전고엽제가 국가유공자면 유공자법 적용해야"

강 회장에 따르면 지난 1993년 3월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2011년 6월 30일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되어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국가유공자로 승격되

기까지 18년의 길고도 힘든 시간이 지났다.

강 회장은 "고엽제환자들이 그토록 원하던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받았으나 명칭에 걸 맞는 예우는 미흡하기 짝이 없어 아직 만족할 수가 없다"며 "모름지기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을 일컫는다. 그 희생에 보답하고자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참전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은 아직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가유공자와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주장이다.(중략)

"경합질환은 종합판정해야"

강 회장은 경합질환자는 종합 판정하는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에 따르면 현재 고엽제 환자들의 경우 질병의 종류에 따라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제는 고엽제환자들 대부분이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경합질환자들이 종합질환으로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본인의 건강상태에 비해 충분한 등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어떤 환자들의 경우 후유의증 질병이 약 6~7개가 해당됨에도 각 질병마다 정도가 중하지 않아 등외(본인 의약품만 지원)판정을 받은 환자도 상당수다.

강 회장은 "상이군경 등과 비교했을 때 고엽제 환자들의 경우 병명에 의해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판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전우회에서 제도를 계획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 만큼 국가보훈처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세 환자, 유족승계 이뤄져야"

강 회장에 따르면 고엽제는 크게 후유증, 후유의증, 2세 환자 셋으로 구분된다. 그 중 2세 환자는 후유증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2세 환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부모 세대가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인정되는 질병이 3가지로 제한되어 있어 지금까지 약 90여명(2011.07.31 현재)만 인정받은 상태이다.(중략)

"청소년은 우리 미래, 학교폭력 없는 사회 만들어야"

강 회장은 2세 환자들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노병들이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순찰활동과 학생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계도활동에 나선 것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인 만큼 그들이 밝고 명랑하게 자라나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보면 학교폭력 문제가 단순히 학교나 학생의 문제만이 아니란 입장에서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고, 때론 학부모의 심정으로 인생의 선배다운 면모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엽제전우회가 지난 5월 초 '학교폭력예방실천연합'을 발족한 배경이란 설명이다.

강 회장은 이에 따라 "고엽제전우회 전국 16개 지부와 219개 지회를 중심으로 관할 지역 내 학교와 학원가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과 계도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주 2회 이상 조를 편성해 차량으로 순찰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강 회장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경찰청과 협조하여 각 경찰관서 등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교 및 교사들과 학부모 등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태"라며 "학교폭력은 언제나 존재해 왔고 사건이 일어날 때만 일시적으로 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고엽제 전우회와 실천연합은 한시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영수 여사, 월남출병 때 눈물배웅 잊을 수 없다"

인물 초대석 **강인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

"월남 전에 출정할 때 육영수 여사님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손을 흔들고 눈물을 훔치며 배웅해 주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나는 그때 어머니가 전장터로 향하는 아들을 배웅하듯 한 애틋한 모정을 느꼈다. 그때 우리 월남참전 군인들 모두가 육 여사님이 보여 준 국민에 대한 사랑과 인류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강인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이 고(故) 육영수 여사와 고엽제전우회와의 깊은 인연을 회상하며 한 말이다. 육 여사가 평소 잔잔한 미소와 함박웃음으로 수많은 국민들을 위로했다면, 그때 육 여사는 '제발 살아서만 돌아오라'는 간절함의 격려였다. 군인의 아내로 셋방살이를 전전했던 젊은 날의 육영수 여사가 '눈물 젖은 빵'을 넘어 '피에 젖은 빵'을 위해 월남출병에 나서는 수십만 명의 대한민국 젊은 아들들을 향해 눈물을 흘린 것은 그의 '사랑의 심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강 회장의 생각이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궁핍했던 대한민국, 가난을 벗고 부유한 나라가 되기까지 흘려야 했던 피와 땀과 눈물,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의 신화적인 역사 뒤에는 위대한 영웅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 회장은 강조했다.

강 회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 까지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



▲ 월남전쟁으로 떠나는 파병장병들을 향해 故 박정희 前 대통령과 함께 손 흔드는 故 육영수 여사



▲ 파병 장병 환송식

"대한민국의 영원한 어머니, 육영수 여사. 대한민국이 가난이란 역사의 질곡을 딛고 가파른 분수령을 넘어설 때 육영수 여사는 역사의 제단 위에 던져졌다. 38년 전 그분을 잃은 것은 우리국민과 역사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강 회장은 육영수 여사를 이렇게 회고했다. 강 회장은 "육영수 여사하면 일하는 퍼스트레이디가 먼저 떠오른다"면서 "낙도 벽지의 어린이부터 한센인마을까지 육 여사는 언제나 그늘진 곳을 직접 찾아 밝은 희망의 빛을 비추고자 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록도와 익산을 비롯한 여럿의 한센인 마을을 찾아 그들의 손을 잡아 주던 모습은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아 있다"며 "진심어린 육 여사의 국민을 한가슴에 품는 사랑에 행복해 했다"고 전제한 뒤 "월남전에 출병하는 우리를 눈물로 배웅하던 모습을 보여 결의를 더욱 다졌다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추억했다.

강 회장은 특히 "월남 전에 참전했던 우리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지나온 국민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도 '육영수' 이름 세 글자는 생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국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하며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내 배 불릴 수 없다며 검소함을 신조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강 회장은 "육 여사가 비통하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 월남 참전과 그로 비롯된 고엽제환자들의 처우는 오늘과는 분명히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지난 8월 15일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수백 명의 우리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시간당 65mm가 내리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우비나 우산을 받쳐 들지 않은 채 온몸으로 그 많은 비를 맞으며 육영수 여사를 참배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 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고엽제 대미피해보상, 베트남과 공동대책 마련"

강 회장은 최근 베트남고엽제협회를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강 회장에 따르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올해 베트남을 찾은 것은 해마다 8월 10일에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고엽제의 날(Orange Day)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는 한-베수교 20주년(2012년 6월)을 맞이해 우리 측에서 베트남 쪽의 고엽제 환자를 초청한 행사를 통하여 환자 치료 및 시술 등을 지원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데 민간외교로서 크게 한몫했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베트남과는 지난날 적군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고엽제로 아픔을 함께하는 동지로서 교류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과 우방국 미국은 우리 월남 참전의 고엽제피해 보상을 모른 채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

력과 추진력이 밑바탕이 되었다"며 "이를 몸소 실천하고 다져주신 분이 고(故) 육영수 여사님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5000년의 기나긴 가난을 걷어 낸 중심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육영수 여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산업화를 통한 한국경제 발전에 월남참전 용사들의 숨은 공로도 한몫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21]은 지난달 27일 월남참전 용사들을 대표해 서울 후암동에 위치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실에서 강회장을 만나 '고 육영수 여사 제38주년 추도식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 인터뷰 했다. 강 회장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육영수 여사님같은 국모를 모시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의 강인함과 육영수 여사님의 인자함을 모두 가진 분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러면서 강 회장은 "앞으로도 고엽제 문제 대책방안 등을 위해 베트남과 교류를 활발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에 따르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참전국간 상호교류 협력을 위해 2002년부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교류를 맺어왔다. 2002년 3월에는 베트남 사회보장부(한국의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고엽제 피해에 대한 대미공동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방문하여 재향군인회, 적십자사 등을 예방하고 지원금 및 물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04년 10월 11일에는 베트남고엽제피해자협회(VAVA)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적극적으로 베트남과 고엽제 문제를 위한 교류를 활발히 해왔다. 이어 2006년 3월에는 제1차 국제고엽제세미나를 베트남에서 개최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월남전 참전국 및 화학전 피해국들과 향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올해 8월까지 3차에 걸친 국제고엽제세미나에 참석했다.

"참전고엽제가 국가유공자면 유공자법 적용해야"

강 회장에 따르면 지난 1993년 3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2011년 6월 30일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되어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국가유공자로 승격되기까지 18년의 길고도 힘든 시간이 지났다.

강 회장은 "고엽제환자들이 그 토록 원하던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받았으나 명칭에 걸 맞는 예우는 미흡하기 짝이 없어 아직 만족할 수 가 없다"며 "모름지기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을 일컫는다. 그 희생에 보답하고자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참전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은 아직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있다"과 말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가유공자와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주장이다.

강 회장은 이와 관련 "연금 및 유족승계, 수송시설 등의 무상이용, 자립을 위한 대부 지원 등이 국가유공자와 후유의증 환자들과의 차이점"이라며 "후유의증 환자들의 경우 본인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본인 사망 후 유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후유의증 환자 유족들은 한 집안의 가장을, 아버지를 나라에 헌신하고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강 회장은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과 명칭에 걸맞는 예우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족승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외에는 유족에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어 2006년도부터 전우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후유의증 미망인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주고 있다.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을 전우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후유의증 유족들을 위한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본인에게 지원되던 수당도 사망 후 유족에게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생계곤란에 처하는 유족들이 많은 만큼 유족승계와 더불어 안정된 생활을 위한 대부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합질환은 종합판정해야"

강 회장은 경합질환자는 종합판정하는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에 따르면 현재 고엽제 환자들의 경우 질병의 종류에 따라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제는 고엽제환자들 대부분이 한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경합질환자들이 종합질환으로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본인의 건강상태에 비해 충분한 등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어떤 환자들의 경우 후유의증 질병이 약 6~7개가 해당됨에도 각 질병마다 정도가 중하지 않아 등외(본인 의약품만 지원) 판정을 받은 환자도 상당수다.

강 회장은 "상이군경 등과 비교했을 때 고엽제 환자들의 경우 병명에 의해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판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전우회에서 제도를 계획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 만큼 국가보훈처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세 환자, 유족승계 이뤄져야"

강 회장에 따르면 고엽제는 크게 후유증, 후유의증, 2세 환자 셋으로 구분된다. 그 중 2세 환자는 후유증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2세 환자로 인정을 받으려



◀ 대회사 하는 강인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

▶ 김성욱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이 지난 2006년 3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고엽제 세미나' 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엽제전우회〉



면 부모 세대가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인정되는 질병이 3가지로 제한되어 있어 지금까지 약 90여명(2011.07.31현재)만 인정받은 상태이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사실상 고엽제 환자의 자녀들은 법적으로 인정된 3가지 질병 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러나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법정 인정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강 회장은 이어 "더 마음이 아픈 건 본인들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평생을 아이들에게 마음의 짐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바로 며칠전에도 한 회원의 딸이 말초신경병으로 2세환자로 판정받아 본회 회원으로 등록하고 6개월만에 세상을 떴났다"고 한숨 지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아비된 심정으로 자식을 앞세운 심정이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눈물을 훔쳤다.

"청소년은 우리 미래, 학교폭력 없는 사회 만들어야"

강 회장은 2세 환자들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노병들이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순찰활동과 학생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계도활동에 나선 것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인 만큼 그들이 밝고 명랑하게 자라나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보면 학교폭력 문제가 단순히 학교나 학생의 문제만이 아니란 입장에서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고, 때론 학부모의 심정으로 인생의 선배다운 면모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엽제전우회가 지난 5월 초 '학교폭력예방실천연합' 을 발족한 배경이란 설명이다.

강 회장은 이에 따라 "고엽제전우회 전국 16개 지부와 219개 지회를 중심으로 관할 지역 내 학교와 학원가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과 계도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되는 것을 원천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주 2회 이상 조를 편성해 차량으로 순찰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강 회장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경찰청과 협조하여 각 경찰관서 등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교 및 교사들과 학부모 등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태"라며 "학교폭력은 언제나 존재해 왔고 사건이 일어날 때만 일시적으로 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고엽제 전우회와 실천연합은 한시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담=서원호 취재국장〉 os@ilyoseoul.co.kr

강인호 회장 프로필

출생 및 학력
△ 경남 창원
△ 창원 남중학교 졸업
△ 마산 창신고 졸업
△ 창원 전문대학 졸업
△ 창원 박물대학 졸업

병역
△ 해병대 입대 및 월남참전(청룡부대)
△ 해병대 중사 제대

경력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현)
△ 창원시 장애인연합회 후원회 위원(현)
△ 창원시 새마을후원회장(현)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상임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원시협의회장
△ 제8대 해병대 창원시천지봉 전우회장
△ 해병대 창원시 천지봉 전우회 이사
△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사무차장
△ 제2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남지부장
△ 창원시 체육회 고문
△ 경상남도 시의회 의장단 부회장
△ 통합 창원시의회 의회 운영위원장
△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경상남도 사격연맹 부회장
△ 제3대 창원시 의회 전후반기 의장
△ 제2대 창원시 의회 부의장
△ 제1대 창원시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창원시 새마을동협의회 회장 및 사무처장 (18년 역임)
△ 한나라당 협의회장
△ 한나라당 창원을지구 부위원장
△ (주)삼진건설 대표이사

상훈
△ 국민훈장 석류장
△ 내무부장관상 표창

【특 집】영원한 퍼스트레이디 故 육영수 여사 추모 38주년

"탕!…탕! 탕! 탕!"

한 발의 강력한 총소리가 울린 뒤 세 발의 총성이 연이어 터지는 동시에 검은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사내가 앞으로 뛰쳐나왔다. 객석에서 난데없이 튀어나온 괴한은 연신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있는 단상을 향해 뛰어가며 방아쇠를 당겼다. 첫 총성이 울리고, 모두 일곱 발의 총성이 경축식장을 쩌렁쩌렁 울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20초가 되지 않았다. 장내는 이내 아수라장으로 돌변했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대통령을 가로막고 일어선 경호실장이 검은 옷의 괴한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그 순간 단상 좌석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던 육영수 여사의 상체가 옆으로 힘없이 쓰러졌다. 대통령과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의 목소리가 라디오에 녹음돼 장내의 긴박함은 이렇게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남성 : 가만히 계십시오.
대통령 : 잡혔나?
남성 : 네.

1974년 8월 15일 오전 10시 23분 해방 29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열린 서울 남산 국립극장 전무후무한 퍼스트레이디의 총격 사망 사건은 지금은 잊혀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충격적인 한 장면으로 기록돼 있다.

"그녀는 역사의 제단 위에 던져진 한국의 위대한 어머니였다"

굵은 장대비가 세차게 내리던 지난달 15일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에서 열린 故 육영수 여사 38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육 여사의 큰 딸이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동생인 지만 씨를 비롯해 김종인 ·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 등 캠프 관계자와 친박계 인사들, 지지자 8000명이 참석했다.

평소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박 후보는 추도식에서 "38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많은 분들이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은 생전 어머니가 밝은 곳 보다 어두운 곳, 따뜻한 곳보다 추운 곳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어머니 육영수 여사께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는 가르침이 자리 잡았던 것 같다"며 "국민의 삶을 챙기고 나라를 바꾸는데 중심이 돼야 할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치를 개혁하고 제도화해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치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굳은 의지를 다졌다. 그런 뒤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게 어머님의 생각이었다"면서 "여성의 근로 여건이 나아지고 일할 수 있는 분야가 현실적으로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나라를 만드는 어머님의 꿈이 이제 저의 꿈이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정희 중령의 아내

"맞선 보던 날 군화를 벗고 계시는 뒷 모습이 말할 수 없이 든든해 보였어요. 사람은 얼굴로는 남을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은 남을 속이지 못하는 법이거든요. 그 후 몇 번 만나뵈니까. 그 직감이 틀림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미덥고 소박하고 아주 정겨운 분이세요."

이는 훗날 영부인이 된 육영수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육영수는 박정희를 만나던 날, 그의 모습을 하나하나 관찰했다. 눈에는 빛이

나고, 자신감이 넘치는 믿음직한 모습, 그것이 박정희를 본 첫 느낌이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1950년 9월 15일 박정희는 중령으로 진급했고, 바로 그날은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던 날이기도 했다. 육영수가 박정희를 처음 만난 것은 전쟁통에 부산 영도의 양과자점이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약혼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둘의 결혼을 반대했다. 그 이유는 박정희가 군인이라는 점과 그해 26살이었던 딸 육영수보다 8살 많은 이혼남이라는 것이 싫었다. 다음은 전인권 씨가 쓴 박정희 평전의 기록이다. "육영수와 박정희 결혼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육영수는 옥천 갑부의 딸이었으나, 박정희는 나이가 8살이 많고, 한 번 결혼한 경력이 있는, 육영수 아버지 육종관의 표현처럼 '집안의 내력을 알 수 없는 군인'이었을 뿐이다. 1960년대 이후 군인의 사회적 지위는 많이 높아졌지만 1950년 당시 양반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의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또한 박정희가 이제 막 군대에 복직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육종관이 박정희를 좋아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오직 두 사람의 인간적인 교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두 사람이 맺어진 데에는 아무래도 독특한 가정환경 속에서 그 나름의 세계를 꾸준히 추구해왔던 육영수의 인생관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남편 독재 염려한 청와대의 야당"

"나와 가장 가까우면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게 바로 임자야. 난 청와대 야당이 제일 무서워" 박정희 대통령은 아내의 한 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며 농을 담아 이런 말을 곧잘 했다고 한다. 남편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한편, 스스로 본보기가 됐던 육영수 여사. 그녀는 새벽 1시에 잠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거른 적이 없다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간신문을 읽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이면 석간신문을 읽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발행이 금지된 신문까지도 관심을 가졌다. 청와대에 입성하고 첫 번째 연말을 맞았을 때 육 여사는 신문을 읽던 중에 한 소녀에 대한 기사를 접한다.(중략)

사랑과 인정많던 영원한 퍼스트레이디

(중략) 그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육 여사가 여권의 대권주자 박근혜 후보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38년 전 한 사람의 아내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온정을 아낌없이 국민에게 쏟았던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오죽했으면 남편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54년 6월에 쓴 일기에 "아내 영수는 내 마음의 어머니"라고 썼을 정도였을까.

공동저자인 이영호 씨는 박 전 대통령 집권시절 청와대 경호원으로 육 여사를 자주 뵐 기회가 있었다. 그는 "참으로 인자하고 자애로운 분이셨다.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 식사 한 끼니 사소한 것 하나도 빠트리는 일 없이 오직 나라를 위하며, 헐벗고 굶주린 서민들 걱정에 한 순간도 마음 편히 쉬는 일이 없었다"고 술회했다.

좌익이건 우익이건 심지어 이북의 선전단체들도 그 고마운 마음을 모르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정치색을 떠나 육 여사의 생애는 뜻밖의 비극으로 굴곡진 현대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스토리는 역사 속의 감동으로 지금도 생생히 전승되고 있다.

그녀가 몸소 보여주었던 가슴 뭉클한 교훈들은 힘든 삶에 지쳐 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따뜻한 눈으로 국민을 보듬어 줄 자애로운 어머니 리더십의 롤 모델로 회자되고 있다.

특집 영원한 퍼스트레이디 **故 육영수 여사** 추모 38주년



"탕!…탕! 탕! 탕!"

한 발의 강력한 총소리가 울린 뒤 세 발의 총성이 연이어 터지는 동시에 검은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사내가 앞으로 뛰쳐나왔다. 객석에서 난데없이 튀어나온 괴한은 연신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있는 단상을 향해 뛰어가며 방아쇠를 당겼다. 첫 총성이 울리고, 모두 일곱 발의 총성이 경축식장을 쩌렁쩌렁 울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20초가 되지 않았다. 장내는 이내 아수라장으로 돌변했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대통령을 가로막고 일어선 경호실장이 검은 옷의 괴한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그 순간 단상 좌석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던 육영수 여사의 상체가 옆으로 힘없이 쓰러졌다. 대통령과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의 목소리가 라디오에 녹음돼 장내의 긴박함은 이렇게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남성 : 가만히 계십시오.
대통령 :잡혔나?
남성 : 네.

1974년 8월 15일 오전 10시 23분 해방 29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열린 서울 남산 국립극장 전무후무한 퍼스트레이디의 충격 사망 사건은 지금은 잊여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충격적인 한 장면으로 기록돼 있다.

"그녀는 역사의 제단 위에 던져진 한국의 위대한 어머니였다"

굵은 장대비가 세차게 내리던 지난달 15일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에서 열린 故 육영수 여사 38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육 여사의 큰 딸이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동생인 지만 씨를 비롯해 김종인 ·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 등 캠프 관계자와 친박계 인사들, 지지자 8000명이 참석했다.

평소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박 후보는 추도식에서 "38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많은 분들이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은 생전 어머니가 밝은 곳 보다 어두운 곳, 따뜻한 곳보다 추운 곳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어머니 육영수 여사께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는 가르침이 자리 잡았던 것 같다"며 "국민의 삶을 챙기고 나라를 바꾸는데 중심이 돼야 할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치를 개혁하고 제도화해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치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굳은 의지를 다졌다. 그런 뒤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게 어머님의 생각이었다"면서 "여성의 근로 여건이 나아지고 일할 수 있는 분야가 현실적으로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나라를 만드는 어머님의 꿈이 이제 저의 꿈이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정희 중령의 아내

"맞선 보던 날 군화를 벗고 계시는 뒷모습이 말할 수 없이 든든해 보였어요. 사람은 얼굴로는 남을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은 남을 속이지 못하는 법이거든요. 그 후 몇 번 만나뵈니까. 그 직감이 틀림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미덥고 소박하고 아주 정겨운 분이세요."

이는 훗날 영부인이 된 육영수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육영수는 박정희를 만나던 날, 그의 모습을 하나하나 관찰했다. 눈에서 빛이 나고, 자신감이 넘치는 믿음직한 모습, 그것이 박정희를 본 첫 느낌이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1950년 9월 15일 박정희는 중령으로 진급했고, 바로 그날은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던 날이기도 했다. 육영수가 박정희를 처음 만난 것은 전쟁통에 부산 영도의 양과자점이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약혼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둘의 결혼을 반대했다. 그 이유는 박정희가 군인이라는 점과 그해 26살이었던 딸 육영수보다 8살 많은 이혼남이라는 것이 싫었다. 다음은 전인권 씨가 쓴 박정희 평전의 기록이다. "육영수와 박정희 결혼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육영수는 옥천 갑부의 딸이었으나, 박정희는 나이가 8살이 많고, 한 번 결혼한 경력이 있는, 육영수 아버지 육종관의 표현처럼 '집안의 내력을 알 수 없는 군인이었을 뿐이다. 1960년대 이후 군인의 사회적 지위는 많이 높아졌지만 1950년 당시 양반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의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또한 박정희가 이제 막 군대에 복직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육종관이 박정희를 좋아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오직 두 사람의 인간적인 교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두 사람이 맺어진 데에는 아무래도 독특한 가정환경 속에서 그 나름의 세계를 꾸준히 추구해왔던 육영수의 인생관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은 1950년 12월 12일 대구 계산동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육영수의 아버지는 끝내 결혼식에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5.16의 서막이 오르고 1951년~1960년까지 육영수의 살림살이는 빡빡한 박정희 일정만큼이나 팍팍했다. 10년 동안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근무지를 따라 옮겨 다니는 와중에 박정희는 1960년을 맞이했다. 4.19 의거가 일어나던 그 무렵 박정희는 육군 군수기지사령관으로 전보돼 근무지를 부산으로 옮기게 된다.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그해 6월 15일 내각책임제 헌법이 통과하면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새롭게 구성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다할 수 없었고, 다하지도 못했다. 국민들의 삶은 피폐한 수렁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몇 달이 지나고 박정희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11월 9일 서울 신당동 박정희의 집에 젊은 장교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평소 박정희가 가까이 하던 장교들이었다. 이날의 회동은 박정희를 지도자로 추대하기 위한 역사적인 모임이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모임에서 신념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첫째, 우리나라는 정치에서 초연해야 할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여 정치인과 야합함으로써 정치의 부패를 조장시켰다. 그러한 부패 속에서 권력의 왕좌에 군림하여 군 본래의 숭고한 정신을 더럽힌 자는 단연코 축출하고 악한 요소는 과감하게 일대 수술을 가해야 한다. 둘째, 농어촌의 실정이 비참함이 정치의 부패·무능에 기인한 것임을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정부에서는 날로 범람하는 농어촌 고리채 문제만 하더라도 헛구호만 내놓을 뿐, 이렇다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과감한 실천을 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셋째, 사회적으로 퇴폐한 풍조가 퍼져 사회 도의는 땅에


1965년 5월 17일 미국방문 오찬회에서 내외신 기자들에게 극찬 받은 육 여사의 한복 차림.

떨어진 지 오래이며, 마치 '깡패 왕국'을 이루는 공포의 거리로 변했다. 이러한 무법, 불법의 암흑사회는 정치 권력이 불법 폭력단체와 결탁함으로써 그들의 악을 조장해온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부조리한 악의 요소가 그대로 이 나라에 풍미하고 있는 이상,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이룩한다는 것은 '진흙 속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직 순수한 우리 애국애족 청년장교들의 단결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군수사기관에서 우리들을 주시하고 있지만 모든 책임은 나 한 사람이 지겠으니, 여러분은 맡은 부서별로 열과 성을 다해주길 바란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위시한 젊은 장교들은 정권을 장악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해 7월 3일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됐고, 가족들은 신당동 집을 떠나 의장 공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한 남자의 아내이자 세 아이들의 어머니, 또 다른 부분의 딸이기도 했던 그녀가 이제 온 국민들을 보듬어야 하는 자리에 앉게 된 것이다.

이 시기의 역사를 '혁명'과 '쿠데타'로 바라보는 입장과 정치적 관점에 따라 엇갈리지만 육영수는 군부 최고 권력자의 아내로서 국모의 위치에 올랐어도 근검절약하는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군정을 끝내고 1962년 8월 30일 전역식을 거행한 박정희는 이듬해인 1963년 12월 17일에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육영수는 영부인이 된 첫해 이런 글을 남긴다.

"이제 나의 능력, 나의 성의, 그리고 나의 성실을 모든 사람 앞에 마음껏 이용해 달라고 내놓았습니다. 누구나 나를 부를 수 있고 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여하한 비난의 대상도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밀어주어야 할 국민 여러분의 책임이 새삼 중대함을 나는 느낍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진정 국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나의 새해에 간절한 소망으로 귀담아 주십시오."(육영수 저 '나의 간절한 소망은' 중에서) 제3공화국의 퍼스트레이디가 되던 해 육영수 여사의 나이는 서른여덟이었다.

남편 독재 염려한 청와대의 야당"

"나와 가장 가까우면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게 바로 임자야. 난 청와대 야당이 제일 무서워"

박정희 대통령은 아내의 한 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며 농을 담아 이런 말을 곧잘 했다고 한다. 남편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한편, 스스로 본보기가 됐던 육영수 여사. 그녀는 새벽 1시에 잠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거른 적이 없다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간신문을 읽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이면 석간신문을 읽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발행이 금지된 신문까지도 관심을 가졌다. 청와대에 입성하고 첫 번째 연말을 맞았을 때 육 여사는 신문을 읽던 중에 한 소녀에 대한 기사를 접한다.


새마을 운동의 현장에 직접 참여했던 모습.


봉사활동에도 소매를 걷어붙였던 육 여사.


청와대 거실에서 단란한 한때.


헌혈운동에도 앞장 선 모습.


휴가장병에게 라면을 대접하는 육 여사.

서울 변두리 성동구 응봉동 산 위 동네 판잣집에 사는 모녀가 교과서를 팔아 끓여놓은 국수 한 그릇을 두고 울었다는 보도였다. 육 여사는 기사에 난 주인공을 찾아 직접 돕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경호원 몰래 청와대를 나가 남몰래 어려운 이들의 손목을 잡아주고 격려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서슬 퍼렇던 시절에도 육 여사의 가슴은 언제나 인정이 넘쳤고, 자애로 청와대의 야당으로서 시대의 어둠을 어루만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자신의 저서 '동행'에서 "육 여사는 따뜻하고 반듯한 성품을 지녔으며, 남편의 독재를 많이 염려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속의 야당인 듯했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육 여사의 영결식 때 박정희 前 대통령과 박근혜

사랑과 인정많던 영원한 퍼스트레이디

"살아생전 故 육영수 여사는 인정 많고 눈물 많은 퍼스트레이디였다."

40여년 전 흉탄에 맞아 서울의대 부속병원으로 이송돼 9시간의 사투 끝에 세상을 떠난 육영수 여사를 그리워하는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단어는 '따뜻한 인품'의 자상한 어머니로 남아 있다.

당시 문화방송(MBC) 추모방송 아나운서로 투입됐다던 재미언론인 문무일 씨가 최근 공동 저자로 〈육영수의 사랑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책을 내놓았다. 그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육 여사가 여권의 대권주자 박근혜 후보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38년 전 한 사람의 아내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온정을 아낌없이 국민에게 쏟았던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오죽했으면 남편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54년 6월에 쓴 일기에 "아내 영수는 내 마음의 어머니"라고 썼을 정도였을까.

공동저자인 이영호 씨는 박 전 대통령 집권시절 청와대 경호원으로 육 여사를 자주 뵐 기회가 있었다. 그는 "참으로 인자하고 자애로운 분이셨다.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 식사 한 끼니 사소한 것 하나도 빠트리는 일 없이 오직 나라를 위하며, 헐벗고 굶주린 서민들 걱정에 한 순간도 마음 편히 쉬는 일이 없었다"고 술회했다.

좌익이건 우익이건 심지어 이북의 선전단체들도 그 고마운 마음을 모르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정치색을 떠나 육 여사의 생애는 뜻밖의 비극으로 굴곡진 현대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스토리는 역사 속의 감동으로 지금도 생생히 전승되고 있다.

그녀가 몸소 보여주었던 가슴 뭉클한 교훈들은 힘든 삶에 지쳐 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따뜻한 눈으로 국민을 보듬어줄 자애로운 어머니 리더십의 롤 모델로 회자되고 있다.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사진제공=도서출판 행복에너지〉

사진으로 본 故 육영수 여사 제38주기 추도식

'고(故) 육영수 여사 제38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는 8000여명(주최측 추산)의 추모객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폭우가 쏟아진 궂은 날씨에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추도식은 30분 만에 마무리됐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조원진 의원과 조윤선 대변인의 아내를 받으며 참배를 마친 추모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오후 1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이날 추도식에는 새누리당 쪽에서 이정현 최고위원과 조원진 · 유정복 의원이, 대선캠프의 김종인 ·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과 최경환 총괄본부장, 이주영 특보단장과 조윤선 대변인을 비롯해 김용환 전 선대위 고문, 정하균 전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자리 잡은 퇴역군인들은 군복을 입은 채 참석자들을 안내했으며, 고엽제전우회, 박사모, 근혜동산 등 박후보를 지지하는 여러 단체들도 간이부스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에 나섰다.


사진으로 본 故 육영수 여사 제38주기 추도식

▼ 눈물 닦는 박근혜 후보

'故 육영수 여사'의 육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육 여사가 대학생인 박 후보에 "근혜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으면 여학생들이 부럽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짧은 치마는 안 된다"고 하자 박 후보는 주위를 둘러보며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금세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를 추억했다.

◀ 헌화하는 박근혜 후보

박 후보는 이날 육영수 여사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며 헌화하고 묵념을 하는 것으로 추도식을 시작했다.

'고(故) 육영수 여사 제38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는 8000여명(주최측 추산)의 추모객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폭우가 쏟아진 궂은 날씨에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추도식은 30분 만에 마무리됐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조원진 의원과 조윤선 대변인의 안내를 받으며 참배를 마친 추모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오후 1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이날 추도식에는 새누리당 쪽에서 이정현 최고위원과 조원진 · 유정복 의원이, 대선캠프의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과 최경환 총괄본부장, 이주영 특보단장과 조윤선 대변인을 비롯해 김용환 전 선대위 고문, 정하균 전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자리 잡은 퇴역군인들은 군복을 입은 채 참석자들을 안내했으며, 고엽제전우회, 박사모, 근혜동산 등 박후보를 지지하는 여러 단체들도 간이부스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에 나섰다.

글 · 사진=서원오 취재국장

▼ 참배를 기다리는 고엽제전우회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고엽제전우회의 이형규 총회장, 김성욱 사무총장, 박근규 서울시장 등 회원 수백 명이 '故 육영수 여사'의 참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ᄒᆞ 대표로 인사말 하는 박근혜 후보

ᄉᆞ는 이날 유족대표 인사에서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보다 제도화해 깨끗하 ᄇᆡ받는 정치로 바꿀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개혁의지를 표명한 다음 "아직까지 ᄎᆞᆫ들이 어머니를 기억해 주시는 것은 생전에 어머니께서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에, 따 ᄀᆞᆫ보다는 추운 곳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기 때문"이라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도 ᄇᆡ를 수 있는 나라가 어머니의 꿈이었는데 이제 저의 꿈이 됐다. 앞으로 어머니께 부끄 ᄅᆞᆷ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ᄐᆞ보와 인사하는 고엽제전우회 수뇌부

총회장, 김성욱 사무총장이 '故 육영수 여사'의 참배를 마친후 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폭우 속에 분향하는 이형규 총회장

형규 총회장이 고엽제전우회를 대표해 분향하고 있다.

▲ '故 육영수 여사 추도식'에 참석한 수천의 참배객들

'故 육영수 여사 추도식'에 참석한 참배객 수천 명의 추모행렬이 끝 모르게 이어져 있다.

【인물 초대석】 김구철 '여풍당당 박근혜' 공동저자 및 TV조선〈뉴스와이드 참〉 팀장

'여풍당당 박근혜'의 공동저자인 김구철 TV조선 〈뉴스와이드 참〉 팀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18대 대선의 최종 승리자로 예상했다. 그의 예상대로라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다.

김 팀장은 KBS 정치부·특집부·경제부·국제부를 거치면서 세 번의 대선을 발로 뛴 경험과 함께 평상시 박 후보를 지켜봤던 내용을 조용하고 차분한 말투로 풀어갔다. 그는 박 후보의 장점을 위기관리 능력, 최고의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자질,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통한 외교 노선 다변화 등으로 꼽았다. 또한 잠재력이 풍부한 인물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에게 차갑게 비춰지는 것은 문제라며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팀장은 수차례 선거를 경험한 기자로서 "박 후보는 이미 검증이 끝난 인물"이라며 대항마로 손꼽히는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 "현재 지지율은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팀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을 지적하며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의혹이 발생한 것은 이 대통령이 사적(私的) 영역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필요한 '도덕성'이 결여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서울21]은 지난달 7일 오후 김구철 TV조선 〈뉴스와이드 참〉 팀장을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두 시간가량 인터뷰했다.

"박근혜가 대통령 될 것, 안철수는 검증 후 추락"

– 저자는 세 차례 대통령선거를 현장에서 취재한 정치부 기자로 유명하다. 대선현장 취재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 지금까지 세 번의 대선을 뛰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97년도 대선 당시 기자들이 연판장을 돌린 사건이다. 당시 중앙 언론사 부국장 한 명이 소속사가 회사 차원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몰래 선거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 사실이 젊은 기자들의 공분을 샀다. 물론 언론사가 어떤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지만, 누구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보도해야 한다. 겉으로는 불편부당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언론사나 개인으로서의 언론이 특정 정당이나 언론을 지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후진성, 언론의 후진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저는 이 책에서 한 챕터를 썼는데 이것을 두고도 말들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기자가 그럴 수 있느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정치부 기자, 경제부 기자가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해 책을 쓰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 '두 얼굴의 리더십'을 얘기했는데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합리적 핵심'은 무엇인가

▲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많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에게는 기업체 CEO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더욱 강도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한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걱정됐던 부분이 있었다. 사적(私的) 영역에서만 일했었기 때문에 공적(公的) 영역에서 요구하는 덕목 중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생각했었다. 바로 도덕성 문제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건너온 지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검증을 거쳤

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착시 현상이었다.

공적 영역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검증이 되어 있다. 국가관이나 국정 철학, 도덕성 등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중략)

박 후보는 식사를 할 때도 이미 메뉴를 다 파악하고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한 명씩 차례로 의견을 물어본다. 답답할 정도로 꼼꼼하다. 세트 메뉴인데도 메뉴를 조정하기도 한다. 보통 주문에만 15~20분이 걸릴 정도다. 그러나 그렇게 꼼곰하기 때문에, 좌중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기 때문에 큰 실수가 적다.

– 결정적 실수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은 무슨 의미인가

▲ 4·11 총선 후 박 후보에게 돌발 이슈가 2개 발생했다. 하나가 문대성·김형태 의원 건이고 다른 하나는 공천헌금 문제다. 박 후보는 초기에, 문대성·김형태 의원은 지키려 했고, 현기환·현영희 의원에 대해서도 별 코멘트 없이 안고 가려는 모습을 취했다. 그러나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심사숙고 후 방향을 바꿨다. 박 후보는 방향을 한번 정한 후에는 냉정할 정도로 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총선 당시 한명숙 대표와 비교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김용민 후보로 인해 총선에서 졌다. 김용민 살리려다 15석 이상을 날렸는데 결과적으로 김용민도 구하지 못했다. 그 때 한 대표가 바른 결단을 했다면 15석을 날리지 않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한명숙은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했을 것이다.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다. 한명숙, 문재인이 각각 30%대의 지지율을 얻어 박근혜:한명숙:문재인의 지지율이 4:3:3 비율이 됐을 것이다. 한 대표는 안철수 원장만큼의 지지율을 얻었을 수도 있었다. 대권 구도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한명숙과 박근혜의 차이다. 박후보가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꼼꼼한 성격이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안철수 원장을 어떻게 보는가

▲ 안철수 원장은 문국현 전 의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검증이라는 것은 검증 대상 인물의 용도와 직위, 즉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인지에 따라 검증의 넓이와 세기, 깊이, 지속성이 모두 달라진다. 안 원장은 현재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이다. 지금은 본격적인 검증도 아니다. 검증 시스템에 시동도 안 걸린 상태다.

요컨대 안 원장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검증을 피해야 하고, 검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11월쯤에 선거에 뛰어들어 후다닥 해치우는 방법밖에 없다.(중략)

– 박후보가 사람에 대한 태도, 인간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 박 후보가 영남대학교 이사장 시절, 총장이나 학장처럼 점잖은 분들은 다가가기 힘들다고 거리를 뒀다고 하더라. 그런데 말단 사환이나 비서, 운전기사 등은 박 후보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박 후보는 인원 동원 능력이 있다. 박 후보가 나오면 모두들 손을 잡으려 한다. 마치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손을 잡으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 박 후보에게 '준비된 세계화'라고 얘기했는데 '준비된 대통령'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보인다.

▲ 저는 박 후보의 정책능력은 잘 모른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에게 모든 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 21세기 한국이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아서 결정할 만큼 단순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기시

의 결단력, 본인이 직접 일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일할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제무대에서 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도가 대통령의 역할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박근혜의 장점이 많다고 본다.

박 후보는 영어로 능통하게 소통할 수 있는 첫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영어뿐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만이 아닌 외교 다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들과 편하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한다면 박 후보는 준비된 인물이다. 야당 후보들도 국제화 얘기는 안 한다. 얘기를 꺼내는 순간 필패기 때문이다.

– 책에서 박 후보를 향해 '원칙·규칙에 집착하는 고질병이 있다'고 꼬집었다. 탄력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 원칙은 지키는 것이 맞다. 하지만 원칙은 제한적으로 큰 틀에서 정의해야지 모든 사소한 것까지 원칙이 되면 개인과 조직을 옭죄게 된다.

예를 들어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과는 끝까지 함께 간다'라는 원칙과 '부정부패는 결코 용서치 않는다'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앞서 제시했던 두 돌발사태 즉 문대성·현기환 전 의원의 사례에 적용하면 충돌이 발생한다. 원칙은 서너 가지만 정해놓고 철저히 지켜야 한다. 파사현정(破邪顯正)과 불편부당(不偏不黨)이라는 원칙도, 프로파간다나 캐치프레이즈로서는 양립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모든 상황에서 과연 양립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과 약속이 결과적으로 못 지켜진 것은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은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 볼 수 있다. 개발독재시대에나 가능한 공약이었다.

– 다음 대통령으로 박 후보를 예상하는가

▲ 그렇다. DJ도 지지율 30%±a에서 움직였다. 하지만 박 후보는 40%±a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못해도 30%대이다. 안 원장은 검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면 나락의 끝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먼저 나온 사람만 공동의 목표물이 된다. 지금은 97년 선거 때는 DJ가 타깃이었고, 2002년에는 이회창, 이번에는 박 후보가 타깃이 되고 있다. 우리 선거의 큰 병폐인 네거티브 캠페인이 없어지려면 대통령선거만이라도 기간을 늘려 후보 등록을 미리 해야 한다. 그래야 네거티브 아닌,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다.

– 얘기한 것처럼 박 후보의 지지율은 견고한 40%대이다. 5년간 평균 45%를 유지하고 있지만 5%가 부족하다.

▲ 나중에 보면 알 것이다. 지금 야당은 부산·경남 지역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좋아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 쪽 사람들 만나봤는데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하더라.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에서도 의석 두 개를 모두 얻지는 못했다. 선거 지형상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곳인데도 그렇다. 부산경남은 크게 보면, 울산에서 시작해 해안선을 따라가면서 통영을 제외하고 사천까지 모두 산업화된 지역이다. 때문에 유입된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정서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관건은 충청도라고 본다. 역시 천안의 탕정단지, 서산의 대산화학단지 등 몇 군데 큰 공단이 들어섰다. 예전의 충청도가 아니다. 거기서 몇 퍼센트를 얻느냐가 이번 대선의 판도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 2002년 대선에서는 행정수도 논쟁으로 노무현 후보가 충청도 표를 이회창 후보의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갔다.



'여풍당당 박근혜'의 공동저자인 김구철 TV조선 〈뉴스와이드 참〉 팀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18대 대선의 최종 승리자로 예상했다. 그의 예상대로라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다.

김 팀장은 KBS 정치부·특집부·경제부·국제부를 거치면서 세 번의 대선을 발로 뛴 경험과 함께 평상 시 박 후보를 지켜봤던 내용을 조용하고 차분한 말투로 풀어갔다. 그는 박 후보의 장점을 위기관리 능력, 최고의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자질,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통한 외교 노선 다변화 등으로 꼽았다. 또한 잠재력이 풍부한 인물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에게 차갑게 비춰지는 것은 문제라며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팀장은 수차례 선거를 경험한 기자로서 "박 후보는 이미 검증이 끝난 인물"이라며 대항마로 손꼽히는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 "현재 지지율은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팀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을 지적하며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의혹이 발생한 것은 이 대통령이 사적(私的) 영역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필요한 '도덕성'이 결여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서울21]은 지난달 7일 오후 김구철 TV조선 〈뉴스와이드 참〉 팀장을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두 시간가량 인터뷰했다.

인물 초대석 **김구철** '여풍당당 박근혜' 공동저자 및 TV조선 〈뉴스와이드 참〉 팀장

"박근혜가 대통령 될 것, 안철수는 검증 후 추락"

– 저자는 세 차례 대통령 선거를 현장에서 취재한 정치부 기자로 유명하다. 대선현장 취재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 지금까지 세 번의 대선을 뛰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97년도 대선 당시 기자들이 연판장을 돌린 사건이다. 당시 중앙 언론사 부국장 한 명이, 소속사가 회사 차원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몰래 선거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 사실이 젊은 기자들의 공분을 샀다. 물론 언론사가 어떤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지만, 누구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보도해야 한다. 겉으로는 불편부당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언론사나 개인으로서의 언론이 특정 정당이나 언론을 지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후진성, 언론의 후진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저는 이 책에서 한 챕터를 썼는데 이것을 두고도 말들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기자가 그럴 수 있느냐' 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정치부 기자, 경제부 기자가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해 책을 쓰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1997년 내가 영국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 전기를 번역해서 책을 냈는데, 그 책 또한 영국의 공영방송사인 BBC의 정치부 기자가 쓴 것이다. 선진국에는 그런 제약이 없다. 만일 그 때도 문제의 그 언론사가 '우리는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다' 고 공개선언을 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면 문제는 달랐을 것이다.

– '두 얼굴의 리더십' 을 얘기했는데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합리적 핵심' 은 무엇인가

▲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많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에게는 기업체 CEO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더욱 강도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한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걱정됐던 부분이 있었다. 사적(私的) 영역에서만 일했었기 때문에 공적(公的) 영역에서 요구하는 덕목 중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생각했었다. 바로 도덕성 문제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건너온 지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착시 현상이었다.

공적 영역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검증이 되어 있다. 국가관이나 국정 철학, 도덕성 등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적 영역에서 일했던 사람은 다르다. 겉으로는 이미지가 참 좋은데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을 수 있다. 1992년 이래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급부상했던 대부분의 제 3 후보가 급전직하, 거품이 빠지는 현상도 공적 분야에서의 혹독한 검증 과정을 견디지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대선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적사항인 것 같다

▲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가장 걱정됐던 것은 공인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 제가 책에서 쓴 국정 조정기능, 전략기획, 홍보 · 마케팅 기능 등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예컨대, 내곡동 사저가 그렇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이 검찰에 가서 조사 받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차라리 자신이 수갑 차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에게 수갑을 채우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식을 살리는 것은 범인(凡人)의 행동이다. 대통령이라면, 공인이라면 필요하다면 자식도 희생해야 한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 한번도 안 받고 그걸 넘기면 되겠나.

결국 민간인 사찰 부분도 마찬가지다. 민간인이라는, 사찰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도 있지만 사찰의 주체, 즉 사찰을 담당했던 공무원의 업무가 그쪽이냐 아니냐도 중요하다. 민주사회는 결과의 실체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인사' 와 '사정' 을 위해 필요하다면, 경찰이나 검찰, 국정원 등 공적인 라인을 통해 공적으로 진행하고 처리할 사안이다. 그런데 노동부 공무원이 사찰을 했다.

– 박근혜 후보를 '위기에 강한 여자' 로 평가했다

▲ 박 후보가 98년 정치권에 복귀한 뒤 지금까지 두세 차례 위기가 있었다. 박 후보는 이미 20대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 물론 당시는 권위적인 시대였기에 법치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대신 그 때는 위의 명령이라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위기관리가 쉬웠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2004년 탄핵 국면이나 올해 4 · 11 총선은 적어도 보수진영의 큰 위기였다. 그런 상황에서 박 후보의 위기관리 능력이 도드라졌다.

박 후보는 식사를 할 때도 이미 메뉴를 다 파악하고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한 명씩 차례로 의견을 물어본다. 답답할 정도로 꼼꼼하다. 세트 메뉴인데도 메뉴를 조정하기도 한다. 보통 주문에만 15~20분이 걸릴 정도다. 그러나 그렇게 꼼꼼하기 때문에, 좌중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기 때문에 큰 실수가 적다.

– 결정적 실수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은 무슨 의미인가

▲ 4 · 11 총선 후 박 후보에게 돌발 이슈가 2개 발생했다. 하나가 문대성 · 김형태 의원 건이고 다른 하나는 공천헌금 문제다. 박 후보는 초기에, 문대성 · 김형태 의원은 지키려 했고, 현기환 ·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도 별 코멘트 없이 안고 가려는 모습을 취했다. 그러나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심사숙고 후 방향을 바꿨다. 박 후보는 방향을 한번 정한 후에는 냉정할 정도로 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총선 당시 한명숙 대표와 비교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김용민 후보로 인해 총선에서 졌다. 김용민 살리려다 15석 이상을 날렸는데 결과적으로 김용민도 구하지 못했다. 그 때 한 대표가 바른 결단을 했다면 15석을 날리지 않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한명숙은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했을 것이다.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다. 한명숙, 문재인이 각각 30%대의 지지율을 얻어 박근혜:한명숙:문재인의 지지율이 4:3:3 비율이 됐을 것이다. 한 대표는 안철수 원장만큼의 지지율을 얻었을 수도 있었다. 대권 구도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한명숙과 박근혜의 차이다. 박 후보가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꼼꼼한 성격이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안철수 원장을 어떻게 보는가

▲ 안철수 원장은 문국현 전 의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검증이라는 것은 검증 대상 인물의 용도와 직위, 즉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인지에 따라 검증의 넓이와 세기, 깊이, 지속성이 모두 달라진다. 안 원장은 현재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이다. 지금은 본격적인 검증도 아니다. 검증 시스템에 시동도 안 걸린 상태다.

요컨대 안 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검증을 피해야 하고, 검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11월쯤에 선거에 뛰어들어 후다닥 해치우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 문재인은 안 원장을 공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 본인의 지지율이 20%에 근접하면 그 때는 달라질 것이다. 본인이 20% 정도가 된다면 안 원장이 30% 정도에 머문다는 뜻이다. 그럼 문재인, 이해찬 이런 사람들이 함께 안 원장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 책에서 '청와대 아웃소싱 역량' 즉 국정의 조정역량을 거론했다. 박 후보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 책에서 박 후보의 국정 조정역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박 후보가 조정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 다만 박 후보는 아주 어릴 때부터 20여 년간 청와대에서 살았다. 따라서 공적 부문에 대한 신뢰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적인 과정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 끝나고 나서 대선까지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 안에 조정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 대통령의 역할을 최고 커뮤니케이터(CCO, Chief Communication Officer)라면서 다음 대통령은 국민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 면에서 박 후보가 유리하다고 평가했는데

▲ 커뮤니케이터는 메시지를 만들고, 압축하고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얼마나 자연스럽게 설명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박 후보는 본질을 꿰뚫고 압축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본다. 18년 동안 칩거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독서와 명상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칩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능력은 뛰어나다고 본다. 또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는 편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박 후보는 편한 사람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후보는 커뮤니케이션의 잠재적 역량은 뛰어나지만 포장 능력은 좀 더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거운 주제를 재미있고 가볍게 툭툭 던지는 그런 능력 말이다.

– 야당은 박 후보의 '불통'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 커뮤니케이션은 소통 이상의 것임에도 우리는 단순한 소통으로 생각하고 있다. 메시지를 창출하고 압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3단계의 과정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박근혜 후보의 '불통'을 강조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현재의 핵심은 편한 사람이냐 아니냐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후보가 편한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의 공격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잠재력은 많지만 차갑고 다가서기 쉽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불통은 아니다. 이 부분은 참모진의 책임도 있다. 야당에서 계속해서 잽을 날릴 텐데 그 때마다 얘기하지 않으면 '거 봐라. 대답 별로 안 하는 사람 아니냐' 라고 비판할 것이다. 제가 야당 쪽에 있어도 그렇게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의미라면 안철수 원장 역시 마찬가지다. 편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대학생들 입장에서만 보면, 자신들을 위해 시간을 내서 몇 백 번씩이나 강의를 했으니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안 원장이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건 아니다. 언론의 입장에서는 전혀 접촉이 안 된다. 공적 영역에서 일하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불통의 대명사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친근한 이미지다. 참으로 희한하다.

– 박 후보가 사람에 대한 태도, 인간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 박 후보가 영남대학교 이사장 시절, 총장이나 학장처럼 점잖은 분들은 다가가기 힘들다고 거리를 뒀다고 하더라. 그런데 말단 사환이나 비서, 운전기사 등은 박 후보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박 후보는 인원 동원 능력이 있다. 박 후보가 나오면 모두들 손을 잡으려 한다. 마치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손을 잡으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 박 후보에게 '준비된 세계화'라고 얘기했는데 '준비된 대통령'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보인다

▲ 저는 박 후보의 정책능력은 잘 모른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에게 모든 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 21세기 한국이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아서 결정할 만큼 단순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기시의 결단력, 본인이 직접 일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일할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제무대에서 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도가 대통령의 역할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박근혜의 장점이 많다고 본다.

박 후보는 영어로 능통하게 소통할 수 있는 첫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영어뿐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만이 아닌 외교 다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들과 편하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한다면 박 후보는 준비된 인물이다. 야당 후보들도 국제화 얘기는 안 한다. 얘기를 꺼내는 순간 필패기 때문이다.

– 책에서 박 후보를 향해 '원칙 · 규칙에 집착하는 고질병이 있다' 고 꼬집었다. 탄력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 원칙은 지키는 것이 맞다. 하지만 원칙은 제한적으로 큰 틀에서 정의해야지 모든 사소한 것까지 원칙이 되면 개인과 조직을 옭죄게 된다.

예를 들어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과는 끝까지 함께 간다' 라는 원칙과 '부정부패는 결코 용서치 않는다' 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앞서 제시했던 두 돌발사태 즉 문대성 · 현기환 전 의원의 사례에 적용하면 충돌이 발생한다. 원칙은 서너 가지만 정해놓고 철저히 지켜야 한다. 파사현정(破邪顯正)과 불편부당(不偏不黨)이라는 원칙도, 프로파간다나 캐치프레이즈로서는 양립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모든 상황에서 과연 양립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과 약속이 결과적으로 못 지켜진 것은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은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 볼 수 있다. 개발독재시대에나 가능한 공약이었다.

– 다음 대통령으로 박 후보를 예상하는가

▲ 그렇다. DJ도 지지율 30%±a에서 움직였다. 하지만 박 후보는 40%±a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못해도 30%대이다. 안 원장은 검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면 나락의 끝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먼저 나온 사람만 공동의 목표물이 된다. 지금은 97년 선거 때는 DJ가 타깃이었고, 2002년에는 이회창, 이번에는 박 후보가 타깃이 되고 있다. 우리 선거의 큰 병폐인 네거티브 캠페인이 없어지려면 대통령 선거만이라도 기간을 늘려 후보 등록을 미리 해야 한다. 그래야 네거티브 아닌,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다.

– 얘기한 것처럼 박 후보의 지지율은 견고한 40%대이다. 5년간 평균 45%를 유지하고 있지만 5%가 부족하다

▲ 나중에 보면 알 것이다. 지금 야당은 부산 · 경남 지역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좋아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 쪽 사람들 만나봤는데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하더라.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에서도 의석 두 개를 모두 얻지는 못했다. 선거 지형상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곳인데도 그렇다. 부산경남은 크게 보면, 울산에서 시작해 해안선을 따라가면서 통영을 제외하고 사천까지 모두 산업화된 지역이다. 때문에 유입된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정서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관건은 충청도라고 본다. 역시 천안의 탕정단지, 서산의 대산화학단지 등 몇 군데 큰 공단이 들어섰다. 예전의 충청도가 아니다. 거기서 몇 퍼센트를 얻느냐가 이번 대선의 판도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 2002년 대선에서는 행정 수도 논쟁으로 노무현 후보가 충청도 표를 이회창 후보의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갔다.

〈대담=서원호 취재국장〉 os@ilyoseoul.co.kr
〈정리=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차, 대응 늦은 것이 아닌 심사숙고하는 것… 융통성 발휘도 필요

대선 전 지지율 30%대 DJ도 당선… 차, 이미 40% 넘어





국민행복 디자이너, 대한민국 대통합 이룬다

누군가 '만남이란 자기 혁신의 기회이다'라고 갈파했다. 국가 지도자의 혁신은 곧 국민 행복을 위한 혁신이 되기도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감 넘치는 국민 대통합의 파격적인 행보로 출발부터 국민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달 20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바로 다음 날인 21일 이른 아침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대통령 내외, 박정희 대통령 내외,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차례로 참배했다. 또 이 날 오후에는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헌화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박 후보의 노 전 대통령 묘소 참배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고문은 "국민 통합을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또 다른 유력대선 주자인 안철수 교수도 "이런 것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라고 말했다.

박 후보의 국민감동의 파격행보는 그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이희호 여사, 그리고 자신을 '칠푼이'라 비난한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찾아가 조언과 권면의 이야기를 청취한 것이 그것이다. 이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박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이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아버지 기념관을 결정해 주셨다"고 했고 이 여사는 "(박 후보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고 했다. 1997년 대선의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정적(政敵) 관계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生家)를 찾아가 "박 전 대통령과 나는 생각의 차이는 있었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했다"면서 "동서(東西) 화합을 이루고 싶다"고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산업화 세력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화 세력을 대표한다.

두 진영은 우리 정치의 두 축으로서 대립하고 경쟁해 왔다. 그러나 박 후보의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와 유가족 방문이 우리 정치가 경쟁할 때와 하나가 되는 때를 아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박 후보의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예상을 뛰어넘은 확연한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저의 삶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 후보의 이러한 행보 배경엔 국민 대통합이 깔려 있다. "저의 삶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중에 한 말이다. 박 후보는 수락 연설문에서 "100% 대한민국"를 내걸었다.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모두가 함께 가는 국민대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 "산업화의 가치를 계승하는 이가, 다른 가치를 대변하는 이들을 포용하며 통합을 이루는 것" 그가 생각하는 국민 대통합이다. 그동안 좌·우파의 분열은 이 나라에 많은 상처를 입혔다. 정치인들은 애꿎은 국민들만 팔았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는 깊어만 갔다. 박 후보는 바로 이 대목에서 구국의 일념과 행동으로 몸소 실천하는 지도자로 분연히 일어서며 선언했다.

박근혜 후보의 국민대통합 약속은 계속되고 있다. 세대 간의 갈등 치유 행보다. "등록금 부담, 분명하게 반드시 반으로 맞추겠다는 것,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8월 23일 전국 39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참석한 반값 등록금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비전을 밝힌 것이다. 젊은 층과의 스킨십을 통한 '세대통합'을 위한 소통에 본격 나선 것이다. 정치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젊은층과 소통을 위해서라면 찢어진 청바지는 얼마든지 입을 수 있다"며

변화와 소통을 위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국민 대통합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동·서 지역 간의 화합이다. 박 후보의 이에 대한 행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박 후보는 그동안 수차례 5·18묘역을 참배했다. 2004~2006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매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2004년 당시 박 대표가 5·18묘역을 참배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열린우리당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은 박 대표의 분향 모습을 사진으로 찍을 정도로 관심이 증폭되기도 했다. 박 후보는 2004년 발표한 '5·18 성명'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이 이제 특정지역이나 집단, 특정계층을 넘어 한반도 전체 민주발전의 계기가 돼야 한다. 광주지역이건 타 지역이건 열린 마음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한 단계 승격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의 동·서 화합을 통한 지역통합 행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천에 옮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 국민대통합은 경제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박 후보의 생각이다. "국가의 성장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 시대로 바뀌었다"며 이를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그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리고 일자리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다. 신(新)빈곤층 출현, 노후 불안, 청년 실업 확산 등 사회 경제적 양극화 현상의 현실을 정확히 읽고 있다.

"자기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땀 흘려 노력하면 내 꿈이 이뤄지는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희망이 없으니 미래를 꿈꿀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경제민주화를 하면, 정부가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인프라와 법, 제도를 지키는데 믿음을 줄 수 있다면 그 꿈을 꿀 수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삶이 고달파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박 후보의 경제관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조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나라"

여성이 우리나라 주요 정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은 박 후보가 처음이다. 박 후보는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집권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아버지에 이어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드문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2002년 대선 패배 이후 한나라당은 대선자금 수사로 크나큰 위기에 봉착했고 박 후보는 대표 경선에 나서 위기의 한나라 호를 구할 선장으로 선출됐다.

천막당사에서 배수진을 치고 탄핵 정국 속에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121석을 얻는데 성공하여 당을 다시 위기에서 구했다. 당 대표를 지내며 4번의 재보선에서 4번 모두 승리하여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학법 개정을 막아내기도 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한 번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모습인 것이다. 2007년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한 이후 깨끗이 승복하며 다시 비주류의 길을 걸어 왔지만 정권 말 악재가 거듭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또다시 집권여당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으며 19대 총선에서의 승리를 일궈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할 지 국내외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아버지에 이어 그 딸도 대통령에 오르는 현대 정치사의 새로운 대기록을 직접 쓰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후략)

기·획·특·집 ❶ 박근혜의 정치미학

국민행복 디자이너, 대한민국 대통합 이룬다



지난달 22일 오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이희호 여사를 예방하고 환담하고 있다. 〈뉴시스〉

누군가 '만남이란 자기 혁신의 기회이다' 라고 갈파했다. 국가 지도자의 혁신은 곧 국민 행복을 위한 혁신이 되기도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감 넘치는 국민 대통합의 파격적인 행보로 출발부터 국민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달 20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바로 다음 날인 21일 이른 아침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대통령 내외, 박정희 대통령 내외,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차례로 참배했다. 또 이 날 오후에는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헌화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박 후보의 노 전 대통령 묘소 참배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고문은 "국민 통합을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또 다른 유력 대선 주자인 안철수 교수도 "이런 것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라고 말했다.

박 후보의 국민감동의 파격행보는 그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이희호 여사, 그리고 자신을 '칠푼이' 라 비난한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찾아가 조언과 권면의 이야기를 청취한 것이 그것이다. 이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박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이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아버지 기념관을 결정해 주셨다"고 했고 이 여사는 "(박 후보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고 했다. 1997년 대선의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정적(政敵) 관계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生家)를 찾아가 "박 전 대통령과 나는 생각의 차이는 있었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했다"면서 "동서(東西) 화합을 이루고 싶다"고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산업화 세력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화 세력을 대표한다.

두 진영은 우리 정치의 두 축으로서 대립하고 경쟁해 왔다. 그러나 박 후보의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와 유가족 방문이 우리 정치가 경쟁할 때와 하나가 되는 때를 아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박 후보의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예상을 뛰어넘은 확연한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저의 삶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 후보의 이러한 행보 배경엔 국민 대통합이 깔려있다. "저의 삶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중에 한 말이다. 박 후보는 수락 연설문에서 "100% 대한민국"를 내걸었다.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모두가 함께 가는 국민 대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 "산업화의 가치를 계승하는 이가, 다른 가치를 대변하는 이들을 포용하며 통합을 이루는 것" 그가 생각하는 국민 대통합이다. 그동안 좌·우파의 분열은 이 나라에 많은 상처를 입혔다. 정치인들은 애꿎은 국민들만 팔았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는 깊어만 갔다. 박 후보는 바로 이 대목에서 구국의 일념과 행동으로 몸소 실천하는 지도자로 분연히 일어서며 선언했다.

박근혜 후보의 국민대통합 약속은 계속되고 있다. 세대 간의 갈등 치유 행보다. "등록금 부담, 분명하게 반드시 반으로 맞추겠다는 것.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8월 23일 전국 39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참석한 반값 등록금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비전을 밝힌 것이다. 젊은 층과의 스킨십을 통한 '세대통합' 을 위한 소통에 본격 나선 것이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후보 확정을 위한 제2차 전당대회가 열린 20일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경선 후보들과 손을 맞잡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다. 정치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선 "젊은 층과 소통을 위해서라면 찢어진 청바지는 얼마든지 입을 수 있다"며 변화와 소통을 위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국민 대통합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동 · 서 지역 간의 화합이다. 박 후보의 이에 대한 행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박 후보는 그동안 수차례 5 · 18묘역을 참배했다. 2004~2006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매년 5 · 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2004년 당시 박 대표가 5 · 18묘역을 참배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열린우리당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은 박 대표의 분향 모습을 사진으로 찍을 정도로 관심이 증폭되기도 했다. 박 후보는 2004년 발표한 '5 · 18 성명'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이 이제 특정지역이나 집단, 특정계층을 넘어 한반도 전체 민주발전의 계기가 돼야 한다. 광주지역이건 타 지역이건 열린 마음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한 단계 승격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의 동 · 서 화합을 통한 지역통합 행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천에 옮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 국민대통합은 경제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박 후보의 생각이다. "국가의 성장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 시대로 바뀌었다"며 이를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그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리고 일자리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다. 신(新)빈곤층 출현, 노후 불안, 청년 실업 확산 등 사회 경제적 양극화 현상의 현실을 정확히 읽고 있다.

"자기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땀 흘려 노력하면 내 꿈이 이뤄지는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희망이 없으니 미래를 꿈 꿀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경제민주화를 하면, 정부가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인프라와 법, 제도를 지키는데 믿음을 줄 수 있다면 그 꿈을 꿀 수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삶이 고달파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박 후보의 경제관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조화롭게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이다.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나라"

여성이 우리나라 주요 정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은 박 후보가 처음이다. 박 후보는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집권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아버지에 이어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드문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2002년 대선 패배 이후 한나라당은 대선자금 수사로 크나큰 위기에 봉착했고 박 후보는 대표 경선에 나서 위기의 한나라 호를 구할 선장으로 선출됐다.

천막당사에서 배수진을 치고 탄핵 정국 속에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121석을 얻는데 성공하여 당을 다시 위기에서 구했다. 당 대표를 지내며 4번의 재보선에서 4번 모두 승리하여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학법 개정을 막아내기도 했다. 세종 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한 번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모습인 것이다. 2007년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한 이후 깨끗이 승복하며 다시 비주류의 길을 걸어 왔지만 정권 말 악재가 거듭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또다시 집권여당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으며 19대 총선에서의 승리를 일궈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할 지 국내외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아버지에 이어 그 딸도 대통령에 오르는 현대 정치사의 새로운 대기록을 직접 쓰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는 박 후보가 내건 슬로건이다. 국민들은 지금 국민대통합의 기치를 내건 박근혜 후보가 제시하는 국가 비전과 정책 그리고 이를 펼쳐 나가는 행보에 한껏 기대가 부풀어 있다. 박근혜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은 곧 5000만 국민 행복의 시작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원호 취재국장〉 os@ilyoseoul.co.kr

대통령의 딸에서 퍼스트레이디 거쳐 '대통령후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올해 환갑이다. 그는 3김 정치가 종식된 이후 대한민국에 가장 영향력 높은 정치인이다.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모친인 육영수 여사가 서거한 이후에는 퍼스트레이디로 생활했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흉탄에 맞아 사망한 뒤 18년 동안엔 높은 곳에서 내려와 대한민국 파워그룹이 아닌 '보통사람'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 그러던 그녀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은 1998년 4월 2일. 대구 달성군에서 벌어진 재·보궐 선거였다. 이후 한나라당 부총재, 당 대표, 대통령 후보 경선을 거치고 대망의 2012년을 맞이해 막강한 대권후보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처럼 박 후보는 롤러코스터처럼 살아왔다. 이처럼 굴곡진 그녀의 삶과 함께 지금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올랐지만 아직까지도 그녀의 인간적인 따스한 정과 애환 등이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어 우리들을 자못 궁금하게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녀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어떤 것인지 조명해봤다.

2012년 대권에 도전하는 박근혜 후보의 삶을 보면 한편의 역사물을 보는듯한 착각에 빠진다. 1952년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영관급 군인으로 따뜻한 사랑을 지닌 아버지와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은 현모양처의 어머니 슬하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지냈다. 그러던 그에게 첫 번째 인생의 전환점은 10살이던 해였다.

아버지인 박정희가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면서 삶이 바뀌었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지만 군사혁명이 무슨 의미인지의 정도는 알 수 있는 나이였다. 거사를 치루는 날. 육 여사는 박정희 장군이 거사를 위해 나서면서 '총을 챙겨 달라'고 말하자 '딸 숙제를 봐주고 나가라'는 말에 큰 일을 앞두고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딸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이 어느 정도 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후보는 이후 성심여중에 진학했고 청와대 생활에 접어들었다. 그녀가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입학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산업역군이 되어 나라에 기여 하겠다'는 포부였다. 그런 박근혜에게 두 번째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왔다. 프랑스 유학생활을 하던 중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서거'라는 비보를 듣게 된 것이다. 22살 약관의 나이로 그 때부터 박근혜는 어머니를 대신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

어머니 서거 직후 박근혜 첫 공식행사장에서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영부인 생활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경험일 수밖에 없다. 5년간의 생활동안 아버지 박정희로부터 정치수업을 받았고 그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였다. 여기서 에피소드 둘. 그녀가 영부인 역할을 맡고 일주일도 안 돼서 참석한 '영부인배 쟁탈 어머니 배구대회' 장내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박근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계실 때보다 더 훌륭한 경기를 보여주십시오."

박근혜는 인사말을 하는 동안 울음을 끝까지 참았고 이를 본 사람들은 '그 어머니에 그 딸'이라고 생각했다고 자서전에 적혀 있다. 본격적으로 정치 수업에 들어간 그의 사부는 단연 아버지였다. '승용차 대화', '식탁 대화'를 통해 수시로 국정현안에 대해 문답이 오갔다. 당시 제왕적 대통령이었던 아버지를 지근거리에서 보면서 아버지 그 이상의 신화적 존재로 여기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박근혜 역시 70년대 후반 유신통치하에서 '국모'로 불리며 그 위세가 대단했다. 새마음봉사단 총재를 지내며 가진 시·도 단위 모임에는 수천 명이 참석해 그 열기는 대단했다. 대중정치에 능하다는 것은 이때부터 생겨난 셈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979년 박근혜의 운명은 다시 한 번 국가의 역사와 함께 바뀌게 된다. 이번엔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박근혜는 아버지의 죽음을 듣는 충격적인 순간에도 '전방에는 이상이 없습니까?'라는 말로 침착함을 보여줬다. 하지만 자서전에는 "한분도 아니고 부모님 모두 총탄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가혹한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핏물이 가시지 않은 아버지의 옷을 빨며 남들이 평생 울 만큼의 눈물을 흘렸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박근혜는 아버지에 대한 매도가 이어지면서 6년간은 추도식을 하지 못했고 12년간 은둔생활 아닌 은둔생활을 해야만 했다. 박근혜하면 따라다니는 '얼음공주'라는 별명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는 이 시기를 "나는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 살고 있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중략)

터키소녀에서 애국소녀로 "인생 후회 없다"

이후 2007년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패해 깨끗이 승복하고 대선을 도왔다. 한나라당 내 비주류가 됐지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유력한 대선후보다.

이제 박근혜는 환갑의 나이다.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되어 재차 쓰러지는 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서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 당이 '좌 클릭' 한다고 불만이다. 일각에선 '이제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고 단언하기도 한다.

박근혜는 보수층으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녀를 결정짓는 단어에는 '신뢰와 원칙', '애국심', '봉사정신', '절제된 언어', '바른 행동양식' 등이다. 박근혜가 정치영역에 몸담으면서 추구해온 가치들이다. 관통하는 것은 아버지 박정희 코드다. 여기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이 없다. 오히려 '애국주의'에 가깝다. 애국심이 높다고 보수고 낮다고 진보는 아니다.

2001년 박근혜는 외신기자들과 회견에서 자신을 'GH'(Great Harmony, 대화합)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그는 대화합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의 해소,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정책,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증진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대목이다.

박근혜가 지역에서 대학생들과 만났을 때 누군가 물었다. '정치인이 된 게 후회되지 않느냐'고. 이에 박근혜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고 답해 상대방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본심은 아니었던 것 같다. 1979년부터 1993년 쓴 일기 중에 그는 "한때 TV에서 터키 소녀에게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으니 '17세에 결혼해 평생 밭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 소녀가 누리는 소박한 꿈과 행복이 부러웠다"(1990년 5월 16일 일기)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터키소녀가 되고 싶다던 박근혜가 2012년 재차 대권 도전에 나선다. 보수·진보, 영·호남, 여성·남성이라는 대결구도를 넘어 '애국주의자' 박근혜로 우뚝 서려고 하는 것이다.

〈사진제공=도서출판 행복에너지〉



기·획·특·집 ❷ 박근혜 '옥함상자'를 열다

대통령의 딸에서 퍼스트레이디 거쳐 '대통령후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올해 환갑이다. 그는 3김 정치가 종식된 이후 대한민국에 가장 영향력 높은 정치인이다.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모친인 육영수 여사가 서거한 이후에는 퍼스트레이디로 생활했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흉탄에 맞아 사망한 뒤 18년 동안엔 높은 곳에서 내려와 대한민국 파워그룹이 아닌 '보통사람'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 그러던 그녀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은 1998년 4월2일, 대구 달성군에서 벌어진 재·보궐 선거였다. 이후 한나라당 부총재, 당 대표, 대통령 후보 경선을 거치고 대망의 2012년을 맞이해 막강한 대권후보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처럼 박 후보는 롤러코스터처럼 살아왔다. 이처럼 굴곡진 그녀의 삶과 함께 지금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올랐지만 아직까지도 그녀의 인간적인 따스한 정과 애환 등이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어 우리들을 자못 궁금하게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녀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어떤 것인지 조명해봤다.

2012년 대권에 도전하는 박근혜 후보의 삶을 보면 한편의 역사물을 보는듯한 착각에 빠진다. 1952년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영관급 군인으로 따뜻한 사랑을 지닌 아버지와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은 현모양처의 어머니 슬하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지냈다. 그러던 그에게 첫 번째 인생의 전환점은 10살이던 해였다.

아버지인 박정희가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면서 삶이 바뀌었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지만 군사혁명이 무슨 의미인지의 정도는 알 수 있는 나이였다. 거사를 치루는 날, 육 여사는 박정희 장군이 거사를 위해 나서면서 '총을 챙겨 달라' 고 말하자 '딸 숙제를 봐주고 나가라' 는 말에 그 큰일을 앞두고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딸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이 어느 정도 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후보는 이후 성심여중에 진학했고 청와대 생활에 접어들었다. 그녀가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입학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산업역군이 되어 나라에 기여 하겠다' 는 포부였다. 그런 박근혜에게 두 번째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왔다. 프랑스 유학생활을 하던 중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서거' 라는 비보를 듣게 된 것이다. 22살 약관의 나이로 그 때부터 박근혜는 어머니를 대신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

어머니 서거 직후 박근혜 첫 공식행사장에서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영부인 생활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경험일 수밖에 없다. 5년간의 생활동안 아버지 박정희로부터 정치 수업을 받았고 그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였다. 여기서 에피소드 둘. 그녀가 영부인 역할을 맡고 일주일도 안 돼서 참석한 '영부인배 쟁탈 어머니 배구대회' 장내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박근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계실 때보다 더 훌륭한 경기를 보여주십시오."

박근혜는 인사말을 하는 동안 울음을 끝까지 참았고 이를 본 사람들은 '그 어머니에 그 딸' 이라고 생각했다고 자서전에 적혀 있다. 본격적으로 정치 수업에 들어간 그의 사부는 단연 아버지였다. '승용차 대화', '식탁 대화' 를 통해 수시로 국정현안에 대해 문답이 오갔다. 당시 제왕적 대통령이었던 아버지를 지근거리에서 보면서 아버지 그 이상의 신화적 존재로 여기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박근혜 역시 70년대 후반 유신통치하에서 '국모' 로 불리며 그 위세가 대단했다. 새마음봉사단 총재를 지내며 가진 시·도 단위 모임에는 수천 명이 참석해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박근혜의 한국적 가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애국주의'
애국의 가치는 김대중-노무현-박근혜 모두 같아

그 열기는 대단했다. 대중정치에 능하다는 것은 이때부터 생겨난 셈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979년 박근혜의 운명은 다시 한 번 국가의 역사와 함께 바뀌게 된다. 이번엔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박근혜는 아버지의 죽음을 듣는 충격적인 순간에도 '전방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라는 말로 침착함을 보여줬다. 하지만 자서전에는 "한분도 아니고 부모님 모두 총탄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가혹한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핏물이 가시지 않은 아버지의 옷을 빨며 남들이 평생 울 만큼의 눈물을 흘렸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박근혜는 아버지에 대한 매도가 이어지면서 6년간은 추도식을 하지 못했고 12년간 은둔생활 아닌 은둔생활을 해야만 했다. 박근혜하면 따라다니는 '얼음공주' 라는 별명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는 이 시기를 "나는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 살고 있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박근혜가 고난의 시기이자 성숙의 시기를 거쳐 1997년 구국의 결단을 내린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IMF가 터지면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를 선언했다. 다시 정치영역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다. 박근혜의 지원으로 국민들 반응은 뜨거웠지만 대선에선 패배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후 2002년 대선 전까지 2인자로 살았지만 이후 당 대표로 선출 돼 공히 '1인자' 의 자리를 지켜왔다. 특히 그는 2002년 대선 패배이후 가진 당 대표 경선에서 "저는 부모님도 없고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받치겠습니다."라며 한나라당 선장이 됐다.

터키소녀에서 애국소녀로 "인생 후회 없다"

이후 2007년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패해 깨끗이 승복하고 대선을 도왔다. 한나라당 내 비주류가 됐지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유력한 대선 후보다.

이제 박근혜는 환갑의 나이다.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되어 재차 쓰러지는 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서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당이 '좌 클릭' 한다고 불만이다. 일각에선 '이제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 고 단언하기도 한다.

박근혜는 보수층으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녀를 결정짓는 단어에는 '신뢰와 원칙', '애국심', '봉사정신', '절제된 언어', '바른 행동양식' 등이다. 박근혜가 정치영역에 몸담으면서 추구해 온 가치들이다. 관통하는 것은 아버지 박정희 코드다. 여기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이 없다. 오히려 '애국주의' 에 가깝다. 애국심이 높다고 보수고 낮다고 진보는 아니다.

2001년 박근혜는 외신기자들과 회견에서 자신을 'GH' (Great Harmony, 대화합)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그는 대화합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의 해소,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증진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대목이다.

박근혜가 지역에서 대학생들과 만났을 때 누군가 물었다. '정치인이 된 게 후회되지 않느냐' 고. 이에 박근혜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고 답해 상대방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본심은 아니었던 것 같다. 1979년부터 1993년 쓴 일기 중에 그는 "한때 TV에서 터키 소녀에게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으니 '17세에 결혼해 평생 밭일을 하고 싶다' 고 했다. 그 소녀가 누리는 소박한 꿈과 행복이 부러웠다"(1990년 5월16일 일기)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터키소녀가 되고 싶다던 박근혜가 2012년 재차 대권 도전에 나선다. 보수 · 진보, 영 · 호남, 여성 · 남성이라는 대결구도를 넘어 '애국주의자' 박근혜로 우뚝 서려고 하는 것이다.

〈진정성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옷차림 통해 정치기상도 드러낸다.

지금 정치인의 화두는 '여성 정치인 전성시대'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박 후보는 차기 대선 주자 중 가장 탄탄한 지지기반을 가진 정치인으로 대선 정국에서의 그녀의 행보에 많은 국민의 눈이 쏠려 있다. 대선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박 후보의 패션 스타일 등 이미지 메이킹에서부터 자기관리 비법까지 알아봤다.

정치기상도 나타내는 옷차림

박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는 머리 양 옆을 단단히 고정한 '올림머리'다. 박 후보는 고 육영수 여사를 연상케 하는 올림머리를 통해 중장년층에게 향수를 자극하고 고전적이고 깔끔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이른바 중장년층의 표심을 잡는 전략 중 하나로 머리스타일이 작용한 것. 박 위원장은 손이 많이 가지 않고 인자하고 우아한 느낌을 줘 이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해서 박 후보가 이 스타일만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박 후보는 2007년 앞머리를 풍성하게 내리고 올림머리 대신 파마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 내렸다. 상대적으로 정적인 이미지였던 올림머리 대신 긴 단발의 파마머리인 내림머리를 한 박 후보는 '동적인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올림머리가 육영수 여사의 향수를 되살려 줬다면 내림머리는 도회적인 이미지를 박 후보에게 부여해줬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박 후보는 올림머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박 위원장은 올림머리를 풀어 긴 단발머리를 하고 한다. 이 때문에 박 위원장의 내림머리는 '전투머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헤어스타일에 대해 박 후보도 한 방송에 출연해 "헤어스타일의 포인트는 자연스러움이며, 앞머리와 헤어스타일 포인트도 옛날하곤 조금씩 달라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박 후보의 14년간 헤어스타일은 가르마나 머리가 쏠린 방향은 같았지만 앞머리 디테일은 조금씩 달라졌다.

박 후보의 헤어스타일 못지않게 자주 언급되는 것이 옷차림이다. 박 후보는 모델라인이 주최한 '코리아 베스트 드레서상' 2006년 여성 정치인 수상자로 뽑히는 등 패션으로 말하는 대표적 정치인 중 한명이다. 박위원장은 여성 정치인의 선입견을 깨고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바지를 주로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활동이 많거나 중대 발표가 있는 날에는 바지를 선호한다. 4.11 총선 전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 대선 후보가 된 지금은 톤 다운된 강한 색상을 주로 선택하고 활동성이 있는 품이 넓은 디자인의 바지를 입는다. 특히 박 후보가 결의를 다지거나 정국이 고비일 때 정장바지를 선택하고 카키색과 네이비, 그레이, 와인, 올리브 등 존재감 강한 색상의 의상을 입어 이를 주변에선 '전투복'으로 부르기도 한다.

반면에 지난해 4월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유럽을 방문했을 때는 화려한 원색 의상을 입어 발랄한 느낌을 선보이기도 했다. 박 후보는 2030을 의식해 유연한 모습의 스타일링도 한다. 심플한 옷차림에 왼쪽에 브로치를 꽂아 우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풍긴다. 액세서리를 통해 바지정장의 경직된 느낌을 희석시키는 것. 또 브로치를 통해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는 등 시선 분산 효과를 노린다. 허리선이 강조된 재킷이나 벨트가 있는 상의를 입는 등 '페미닌 룩'을 선보이기도 한다. 이는 올림머리와 함께 고 육영수 여사를 연상시킨다. 이처럼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해야 할 때에는 정장바지 대신 정장치마를 입기도 한다. 한 패션에디터는 '정치인의 옷차림은 정치적 성명 발표와 같다'고 한 말처럼 박 후보는 옷차림을 통해 정치기상도를 드러내곤 한다.

박 후보는 "집에 갖고 있는 옷들을 번갈아

가며 직접 골라서 입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박 위원장은 따로 코디네이터를 두지 않고 의상을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티크에서 옷을 맞춰 입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방도 명품 보다는 국산 브랜드를 선호하는 등 소박한 스타일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중 흡입력의 비법은 화법

스타일링 못지않게 대중을 사로잡는 박 후보의 흡입력은 무엇보다 '화법'이다. 박 위원장의 화법은 소탈하고 간단명료하다.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한다. 그는 스타킹이 '빵꾸나서' 창피했던 경험을 수줍게 털어놓거나 젊은 시절(중학교 이후) 비키니 입은 사진을 보고 "젊었을 땐 몸매가 좀 받쳐줬다"며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곤 한다.

또 2005년 지방선거 유세중 커터 칼에 테러를 당한 후 측근에게 처음으로 물은 말이 지원유세를 걱정한 '대전은요'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후 박 후보는 퇴원 직후 대전으로 내려가 대전시장 선거 지원에 나서면서 선거판세를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저력을 발휘해 이미지 정치인의 대명사가 됐다.(중략)

대중과의 소통

박 후보는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의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하는 정치인 중 한명이다. 그는 소셜네트워크 시대에 발맞춰 SNS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일반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해 10·26 재보선 지원에 나서면서부터 페이스북을 본격 시작하게 됐다. 최근 영향력이 커진 SNS를 활용해 젊은 층과의 직접 소통을 넓히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분석됐다. 박 후보는 지난달 20일 자신의 새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이름도 '수첩공주'에서 '친근혜'로 바꿨다. 새 페이스북 계정에는 수첩을 손에 든 캐리커처 대신 두 손으로 하트를 만들고 있는 캐리커처로 바꿨다.

기존에 사용하던 '수첩공주'는 정치인들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부정적 별명이었으나 박 후보는 "수첩에 적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도 되지 않느냐"며 페이스북 이름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 이름을 '친근혜'로 바꾸며 "쇄신과 변화가 필요한 새해를 맞아 페친(페이스북 친구)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친근혜'라고 이름을 바꾸려 한다"고 바뀌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자기관리 철저

박 후보는 자기관리가 철저한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매일 1시간가량 단전호흡으로 심신을 맑게 가다듬고 산책을 즐긴다. 정치 입문 전에는 전국 문화유산 순례를 할 정도로 여행을 좋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규칙적인 생활로 유명한 박 후보는 아침 5시에 일어나 단전호흡을 하고 요가로 굳은 몸을 풀어준다. 팔굽혀펴기와 물구나무서기도 가뿐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운동을 하면서 새벽에 조용히 명상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는 국선도 단전호흡은 지금까지 내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비법이다"라고 건강비결을 소개하기도 했다.

단전호흡과 아침 운동 외에도 운동을 즐기는데 그 중에서도 테니스와 탁구를 과거 청와대 시절부터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쁜 정치일정 때문에 운동을 하기 힘들 때는 '만보기'를 차고 가급적 많이 걷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 이같이 철저한 건강관리 덕분에 선거지원유세와 같은 강행군도 너끈히 소화한다.

아침은 우유에 콘프레이크 또는 토스트에 커피 등 간단히 먹는다.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등 음식을 가리지는 않지만 현미밥과 두릅나물 같은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며 채식 위주의 소식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기·획·특·집 ❸ 박근혜 A to Z

옷차림 통해 정치기상도 드러낸다

지금 정치인의 화두는 '여성 정치인 전성시대'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박 후보는 차기 대선 주자 중 가장 탄탄한 지지기반을 가진 정치인으로 대선 정국에서의 그녀의 행보에 많은 국민의 눈이 쏠려있다. 대선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박 후보의 패션 스타일 등 이미지 메이킹에서부터 자기관리 비법까지 알아봤다.

정치기상도 나타내는 옷차림

박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는 머리 양 옆을 단단히 고정한 '올림머리'다. 박 후보는 고 육영수 여사를 연상케 하는 올림머리를 통해 중장년층에게 향수를 자극하고 고전적이고 깔끔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이른바 중장년층의 표심을 잡는 전략 중 하나로 머리스타일이 작용한 것. 박 위원장은 손이 많이 가지 않고 인자하고 우아한 느낌을 줘 이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해서 박 후보가 이 스타일만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박 후보는 2007년 앞머리를 풍성하게 내리고 올림머리 대신 파머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 내렸다. 상대적으로 정적인 이미지였던 올림머리 대신 긴 단발의 파마머리인 내림머리를 한 박 후보는 '동적인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올림머리가 육영수 여사의 향수를 되살려 줬다면 내림머리는 도회적인 이미지를 박 후보에게 부여해줬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박 후보는 올림머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박 위원장은 올림머리를 풀어 긴 단발머리를 하곤 한다. 이 때문에 박 위원장의 내림머리는 '전투머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헤어스타일에 대해 박 후보도 한 방송에 출연해 "헤어스타일의 포인트는 자연스러움이며, 앞머리와 헤어스타일 포인트도 옛날하곤 조금씩 달라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박 후보의 14년간 헤어스타일은 가르마나 머리가 쏠린 방향은 같았지만 앞머리 디테일은 조금씩 달라졌다.

박 후보의 헤어스타일 못지않게 자주 언급되는 것이 옷차림이다. 박 후보는 모델라인이 주최한 '코리아 베스트 드레서상' 2006년 여성 정치인 수상자로 뽑히는 등 패션으로 말하는 대표적 정치인 중 한명이다. 박 위원장은 여성 정치인의 선입견을 깨고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바지를 주로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활동이 많거나 중대 발표가 있는 날에는 바지를 선호한다. 4.11 총선 전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 대선 후보가 된 지금은 톤 다운된 강한 색상을 주로 선택하고 활동성이 있는 품이 넓은 디자인의 바지를 입는다. 특히 박 후보가 결의를 다지거나 정국이 고비일 때 정장바지를 선택하고 카키색과 네이비, 그레이, 와인, 올리브 등 존재감 강한 색상의 의상을 입어 이를 주변에선 '전투복'으로 부르기도 한다.

반면에 지난해 4월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유럽을 방문했을 때는 화려한 원색 의상을 입어 발랄한 느낌을 선보이기도 했다. 박 후보는 2030을 의식해 유연한 모습의 스타일링도 한다. 심플한 옷차림에 왼쪽에 브로치를 꽂아 우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풍긴다. 액세서리를 통해 바지 정장의 경직된 느낌을 희석시키는 것. 또 브로치를 통해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는 등 시선 분산 효과를 노린다. 허리선이 강조된 재킷이나 벨트가 있는 상의를 입는 등 '페미닌 룩'을 선보이기도 한다. 이는 올림머리와 함께 고 육영수 여사를 연상시킨다. 이처럼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해야 할 때에는 정장바지 대신 정장치마를 입기도 한다. 한 패션에디터는 '정치인의 옷차림은 정치적 성명 발표와 같다'고 한 말처럼 박 후보는 옷차림을 통해 정치기상도를 드러내곤 한다.

박 후보는 "집에 갖고 있는 옷들을 번갈아가며 직접 골라서 입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박 위원장은 따로 코디네이터를 두지 않고 의상을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티크에서 옷을 맞춰 입

육영수 여사 연상케 하는 올림머리로 향수 자극…기로의 순간엔 '전투머리'
말 한마디로 선거판세 역전시키는 저력 발휘한 이미지 정치인의 대명사

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방도 명품 보다는 국산 브랜드를 선호하는 등 소박한 스타일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중 흡입력의 비법은 화법

스타일링 못지않게 대중을 사로잡는 박 후보의 흡입력은 무엇보다 '화법'이다. 박 위원장의 화법은 소탈하고 간단명료하다.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한다. 그는 스타킹이 '빵꾸나서' 창피했던 경험을 수줍게 털어놓거나 젊은 시절(중학교 이후)비키니 입은 사진을 보고 "젊었을 땐 몸매가 좀 받쳐줬다"며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곤 한다.



또 2005년 지방선거 유세 중 커터 칼에 테러를 당한 후 측근에게 처음으로 물은 말이 지원유세를 걱정한 '대전은요' 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후 박 후보는 퇴원 직후 대전으로 내려가 대전시장 선거 지원에 나서면서 선거 판세를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저력을 발휘해 이미지 정치인의 대명사가 됐다.

박 후보의 주량은 와인 한 잔, 소주 2~3잔으로 술을 거의 못하지만 술자리에서 자신의 유머시리즈를 선보여 화제가 되곤 한다. 박 후보는 술을 마시는 것보다 제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지인들이나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을 제조하며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폭탄주도 이공계 식으로 한다"며 "제가 정확하다. 비율을 잘 맞춰야 되고, 술 따르는 각도 중요하고, 손에서 적외선이 나온다. 쥐고 하는데 영향을 받는다"라고 농담을 던져 좌중을 폭소케 한다. 이 외에도 '멍달이 시리즈'와 '사오정 시리즈' 등의 유머를 선보인다.

대중과의 소통

박 후보는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의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하는 정치인 중 한명이다. 그는 소셜네트워크 시대에 발맞춰 SNS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일반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해 10 · 26 재보선 지원에 나서면서부터 페이스북을 본격 시작하게 됐다. 최근 영향력이 커진 SNS를 활용해 젊은 층과의 직접 소통을 넓히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분석됐다. 박 후보는 지난달 20일 자신의 새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이름도 '수첩공주'에서 '친근혜'로 바꿨다. 새 페이스북 계정에는 수첩을 손에 든 캐리커처 대신 두 손으로 하트를 만들고 있는 캐리커처로 바꿨다.

기존에 사용하던 '수첩공주'는 정치인들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부정적 별명이었으나 박 후보는 "수첩에 적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도 되지 않느냐"며 페이스북 이름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 이름을 '친근혜'로 바꾸며 "쇄신과 변화가 필요한 새해를 맞아 페친(페이스북 친구)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친근혜'라고 이름을 바꾸려 한다"고 바뀌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자기관리 철저

박 후보는 자기관리가 철저한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매일 1시간가량 단전호흡으로 심신을 맑게 가다듬고 산책을 즐긴다. 정치 입문 전에는 전국 문화유산 순례를 할 정도로 여행을 좋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규칙적인 생활로 유명한 박 후보는 아침 5시에 일어나 단전호흡을 하고 요가로 굳은 몸을 풀어준다. 팔 굽혀펴기와 물구나무서기도 가뿐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운동을 하면서 새벽에 조용히 명상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는 국선도 단전호흡은 지금까지 내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비법이다"라고 건강비결을 소개하기도 했다.

단전호흡과 아침 운동 외에도 운동을 즐기는데 그 중에서도 테니스와 탁구를 과거 청와대 시절부터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쁜 정치일정 때문에 운동을 하기 힘들 때는 '만보기'를 차고 가급적 많이 걷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 이같이 철저한 건강관리 덕분에 선거 지원유세와 같은 강행군도 너끈히 소화한다.

아침은 우유에 콘프레이크 또는 토스트에 커피 등 간단히 먹는다.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등 음식을 가리지는 않지만 현미밥과 두릅나물 같은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며 채식 위주의 소식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수리철학으로 풀어본 2012년 대선 전망】 임선정 양백문화재단 원장

'임진년 2012, 임란진자(壬亂眞者) 추운겨울 북해에 파도를 뒤치는 흑룡의 형상으로 혁명의 해' 이는 주역에 밝고 수리철학에 조예가 깊은 임선정 양백문화재단 원장(불교아카데미 대자원)이 밝힌 2012년 연말의 대통령선거 판세다. 임 원장은 국운의 고비 때마다 국가 중대사를 예언해 온 것으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임 원장은 "올해 2012년 세운(歲運)은 능생만물지상 성공운(能生萬物之像 成功運)으로 국운 충자발생"이라며 "하극상 신음 속에 임란어박(壬亂於朴) 난중영웅"이라고 진단했다. 이로써 "18대 대권은 천양백(天兩白), 용천배기 용천박 대박난다"며 "천강유수 천강월 월인천강 수월관음, 해인을 깨달은 자 해원천도 성취하니 십승(十勝)황호인생어인(寅生於人) 나오신다"고 예언했다. 특히 그는 "양호(兩虎) 3. 8 대개지운, 흑사정사 남북통일 도덕군자 비남비녀 세상 어머니"가 2012년 대선을 움켜 쥘 '진자'라고 해석했다.

[서울21]은 최근 충북 단양의 양백산에 위치한 양백문화재단 대자원에서 임 원장을 만나 '역술인이 바라본 2012년 대통령선거 판세 및 결과에 대한 예언'에 대해 인터뷰 했다. 임 원장은 지난 2011년 신묘년 국운에서 "김정일은 결판을 보겠다는 의지가 크게 발동하는 수로 동지를 모으려 하나 되는 일이 없고 난경에 빠지며 김정은은 윗사람을 밀치고 그 자리에 올라서는 아주 강건한 상으로 기세가 당당하다"고 예언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연말 대권은 전생부터 준비된 者, 용천박 대박난다" 예언

임 원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4강 신화'의 기적을 정확히 예언했고, 히딩크 감독이 탁월한 리더십으로 여러 논란을 잠재우고 크게 성공을 거둔다고 족집게 예언을 한 사례는 유명하다.

노무현 당선 · 나로호 발사 실패 족집게 예언 유명

또 임원장은 21세기 예언서(진자풍술천도)인 자신의 저서 '신의 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띠 노무현 대통령 당선, 민주당정권 재창출 등을 예언했고, 한나라당 형국을 '모래를 찧어 밥을 만든다'는 증사작반(蒸沙作飯)을 역설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어 그는 2009년 8월, 2010년 6월 나로호 발사 실패를 예언, 알만한 이들에게 알려 막으려 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운에 대한 가르침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자 임 원장은 선거 때마다 정치권 인사들의 방문을 피해 산 중에 칩거하기도 하고, 때론 위정자를 찾아가기도 했다. 임 원장은 "예언은 인류역사를 창조하는 에너지의 원천"이라며 "역대 국력신장에 목숨을 거셨던 선대의 예언가들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이어 "도선국사가 왕건으로 하여금 고려 창업을 하고자 도선비결로 예언했고 무학대사가 청구비결로 조선창업을 도왔으며, 조선 중기의 무신인 격암은 임진왜란을 막고자 격암유록으로 예언했다"면서 "예언서란 하늘과 땅의 도리를 증거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그 예언으로 새 역사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2012년 올해 하반기 국운은 어떤가요?

▲ 임진년 2012년 세운(歲運)의 수(數)는 황룡롱주격(黃龍弄珠格) 능생만물지상(能生萬物之像)으로 황룡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상으로 한국이 세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해입니다. 매사 부족함이 없이 안정적인 기반을 스스로 만들어

가며 결실이 있는 해로 중용의 덕을 갖춘 자가 중추적인 일에서 더욱 빛나는 해로 대개혁, 대변화, 대혁명으로 발전하는 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같은 급변하는 시대를 대비하려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조화와 상생이 필요합니다.(중략)

– 정치 전문가들도 16대, 17대 대선 때 당선자를 예상하기 어려웠는데 족집게처럼 맞춰 주목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예언했던 수리 이치를 설명해줄 수 있나요?

▲ 16대 대통령은 지양백(地兩百), 17대 대통령을 인양백(人兩百)으로 풀었습니다. 16대 대통령은 지양백, 즉 땅의 밝음이 들어간 지명, 명륜동(明倫洞)에서 나온 그 분이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뜻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그 집을 팔았고 옥새 없는 대통령으로 더욱 힘을 잃은 상이었습니다. 17대 대통령은 인양백으로 풀었고 소도해인(小島海印)이라고 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섬에서 인물이 나온다는 말이었죠. 바로 일본에서 태어난 이명박 대통령을 일컫는 말이었고, 그 이름 속에 있는 밝을 명자가 모든 어두움을 이기고 정권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6대 9번째 용상의 운기는 대재 무용지상이고 17대 10번째 용상의 운기가 공허 무용지상으로 재목이 너무 커서 쓰지 못하는 상이라 옥새 없는 대통령이라 했지만 오는 18대 11번째 대통령은 갱신흥가지상이니 새로운 비책으로 나를 부흥할 하늘이 쓰실 천양백(天兩百)으로 '용천배기 用天朴'이라 했습니다. 정보의 바다로 모이는 해인(海印)시대에 일체를 초월한 부처의 경지로 대인이며 깨달은 자, 준비된 자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전생부터 준비된 자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대박납니다."

– 북한에는 김정은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남북관계는 어떻게 풀릴까요?

▲ 현재의 남북문제는 댐(Dam)에 물이 꽉 차 둑이 터질 형상입니다. 큰 뚝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질 수 있는데 극에 달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표면은 밝고 화려해도 이면에 어둠이 깃들어 걱정과 다툼이 있고 비밀이 숨겨져 있어 오랫동안 쌓여있던 분쟁을 결말지어야 하는 수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북한은 지금이 최고의 고비이며 남쪽 성군을 기다리고 있는 상입니다. 남북이 음양의 조화로 결합하는 것은 하늘의 천도입니다. 조화로운 대통령의 출현으로 남북문제를 시급히 하여 남한의 양의 기운과 북한의 음의 기운이 서로 화합하는 상입니다. 하늘의 큰 이치에 따라 남북문제가 조화롭게 풀리고 남남북녀가 결혼하듯 음양이 조화롭고 남북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 사실 17대 대선 때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대통령에 목말라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 대선에도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까요?

▲ 안타깝게도 경제는 인력으로나 의지의 힘으로나 어쩔 도리가 없는 수로 발버둥 칠수록 불리하지만 중반 이후에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내년 2013년에는 세계가 경제 대란을 겪어야하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성실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 18대 대선 정세는 좌파우파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권이 바뀔까요?

▲ 18대 대통령은 국민과 민족을 위해 크게 기여할 준비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천양백으로 하늘이 낸 대통령입니다. 내면에 그래도 진보된 보수입니다. 보수이나 중도로 나라를 이끌 사람입니다. 중도에서 좌(左)도 우(右)도 같이 안배해서 나라를 이끌 강직한 사람입니다.

글쎄요. 집을 바꾸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한다는 표현이 맞을 거에요.

– “해인의 시대”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한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주역에 하도낙서해인(河圖落書海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 하(河) 그림 도(圖), 녹도문자를 쓰던 상생의 시대를 지나 낙서(落書)의 시대, 물이 흐르고 글을 쓰는 시대가 문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문명은 물 흐르듯 전쟁과 경쟁 속에서 발전됐습니다. 그러한 과학 문명의 발전이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입니다. 해인의 시대는 바로 ‘인터넷 정보의 시대’를 말합니다. 해인의 시대는 좌시천리(坐視千里) 입시만리(立視萬里)입니다. 다시 말해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보는 시대입니다. 해인시대는 물이 바다에서 모이듯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평화의 시대이고 화합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닫힌 시대, 전쟁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인을 깨우친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해인시대에는 한국이 세계 정신의 중심국이 됩니다. 조화, 교화, 치화, 그 모두를 조화롭게 이루어낼 하늘이 쓰실 지도자가 18대 대통령이 되어 해인시대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 요즘 언론에서 이 시대를 난세라고 평가하고 난세영웅이 나타날 것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북문제가 힘든 상황이지만 남북문제는 곧 세계의 인류평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난세영웅이라는 말은 난세를 수습하면 영웅이 되니까 난세영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난세영웅의 시대라기보다는 난세영웅의 조화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깨달은 진자가 나와 세상을 조화롭게 할 것입니다. 정책도 남북문제도 차기 대통령이 많은 조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남북관계도 조화롭게 평화를 이뤄낼 것이며 “신·언·서·판”을 갖춘 판단력이 있는 사람, 강직한 카리스마가 있지만 지혜롭고 모두를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진공묘유’를 깨우친 자(者)로 애국의 유전자가 피 속에 흐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번 말했지만 위정자나 국민 모두가 북한을 적대하지 말고 내나라 내국민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미 천도는 남북 평화를 이뤘습니다.

임선정 원장은 누구?

임 원장은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하는 남북통일이라는 ‘해원’으로 우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예언서인 ‘진자풍술’ 3편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렇듯 사심 없이 국가와 민족의 움직임을 보며 수(數)를 풀고 주역의 괘를 잡아 말을 풀어썼기에 말 한대로 이루어진다는 임 원장의 성장과정은 좀 독특하다.

임 원장은 혼전에 가톨릭 신자였으며 초등학교 때 부라우니-스카웃을 통해 선행을 공부했고 남미의 신부님을 통해 정신공부를 했다. 시집의 가풍을 따라 불교에 귀의해 광덕 큰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고 마음공부를 하고 수행하던 중 출진해 자비실천 모심회를 발족해 불교미술 자선전, 평생 가족 삼각결연사업 등 선행 사업에도 이바지해 왔다.

특히 탑골공원 원각사 복원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불교문화 보존에도 노력해온 임 원장은 불교아카데미 대자원을 개원해 불교생활화에 매진하고 있다. 효천 큰 스승으로부터 해동 천년 비기 수생결 법맥을 계승, 정진해 독자적으로 상수철학을 정립해 오랫동안 국운과 국가 중대사에 대해 정확한 예언을 해왔다. 그는 기도와 수행을 통한 법력으로 충북 단양 양백산이 민족 성지임을 깨닫고 남북평화통일과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한 국조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SEOUL 21 | 경제

수리철학으로 풀어본 2012년 대선 전망 ◀ 임선정 양백문화재단 원장



'임진년 2012, 임란진자(壬亂眞者) 추운겨울 북해에 파도를 뒤지는 흑룡의 형상으로 혁명의 해' 이는 주역에 밝고 수리철학에 조예가 깊은 임선정 양백문화재단 원장(불교아카데미 대자원)이 밝힌 2012년 연말의 대통령 선거 판세다. 임 원장은 국운의 고비 때마다 국가 중대사를 예언해 온 것으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임 원장은 "올해 2012년 세운(歲運)은 능생만물지상 성공운(能生萬物之像 成功運)으로 국운 충자발생"이라며 "아극상 신음 속에 임란어박(壬亂於朴) 난중영웅"이라고 진단했다. 이로써 "18대 대권은 천양백(天兩白), 용천배기 용천박 대박난다"며 "천강유수 천강월 월인천강 수월관음, 해인을 깨달은 자 해원천도 성취하니 십승(十勝)황호 인생어인(寅生於人) 나오신다"고 예언했다. 특이 그는 "양호(兩虎)3.8 대개지운, 흑사정사 남북통일 도덕군자 비남비녀 세상 어머니"가 2012년 대선을 움켜 잘 '진자'라고 해석했다.

[서울21]은 최근 충북 단양의 양백산에 위치한 양백문화재단 대자원에서 임 원장을 만나 '역술인이 바라본 2012년 대통령 선거 판세 및 결과에 대한 예언'에 대해 인터뷰 했다. 임 원장은 지난 2011년 신묘년 국운에서 "김정일은 결판을 보겠다는 의지가 크게 발동하는 수로 동지를 모으려 해나 되는 일이 없고 난경에 빠지며 김정은은 윗사람을 밀치고 그 자리에 올라서는 아주 강건한 상으로 기세가 당당하다"고 예언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연말 대권은 전생부터 준비된 者, 용천박 대박난다" 예언

임란어박 난중영웅 … 비남비녀 세상 어머니
지금은 난세 영웅 조화의 시대… 18대 대통령은 해인의 시대 이끌어 갈 것

임 원장은 2002년 한 · 일 월드컵 당시 '4강 신화' 의 기적을 정확히 예언했고, 히딩크 감독이 탁월한 리더십으로 여러 논란을 잠재우고 크게 성공을 거둔다고 족집게 예언을 한 사례는 유명하다.

노무현 당선 · 나로호 발사 실패 족집게 예언 유명

또 임 원장은 21세기 예언서(진자풍술천도)인 자신의 저서 '신의 땅' 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띠 노무현 대통령 당선, 민주당정권 재창출 등을 예언했고, 한나라당 형국을 '모래를 찧어 밥을 만든다' 는 증사작반(蒸沙作飯)을 역설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어 그는 2009년 8월, 2010년 6월 나로호 발사 실패를 예언, 알만한 이들에게 알려 막으려 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운에 대한 가르침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자 임 원장은 선거 때마다 정치권 인사들의 방문을 피해 산 중에 칩거하기도 하고, 때론 위정자를 찾아가기도 했다. 임 원장은 "예언은 인류역사를 창조하는 에너지의 원천"이라며 "역대 국력신장에 목숨을 거셨던 선대의 예언가들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이어 "도선국사가 왕건으로 하여금 고려창업을 하고자 도선비결로 예언했고 무학대사가 청구비결로 조선창업을 도왔으며, 조선 중기의 무신인 격암은 임진왜란을 막고자 격암유록으로 예언했다"면서 "예언서란 하늘과 땅의 도리를 증거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그 예언으로 새 역사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2012년 올해 하반기 국운은 어떤가요?

▲ 임진년 2012년 세운(歲運)의 수(數)는 황룡롱주격 (黃龍弄珠格) 능생만물지상(能生萬物之像)으로 황룡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상으로 한국이 세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해입니다. 매사 부족함이 없이 안정적인 기반을 스스로 만들어 가며 결실이 있는 해로 중용의 덕을 갖춘 자가 중추적인 일에서 더욱 빛나는 해로 대개혁, 대변화, 대혁명으로 발전하는 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같은 급변하는 시대를 대비하려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조화와 상생이 필요합니다. 도전의식이 강한 나머지 이기성이 발동하면 큰 뜻이 무너지니 겸손과 조화가 필요한 해로 중용의 덕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 연말 대선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임진년에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한다고 언급했는데 어떤 뜻인가요?

▲수월관음(水月觀音)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월은 천강(千江)에 비친 달로 세상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관음(觀音)은 관세음의 줄인 말로 세상의 소리를 모두 들어주시는 보살로 세상의 어머니입니다. 사람의 소리뿐 아니라 모든 생명의 소원을 관하여 들어주는 대자대비의 뜻으로 진자(眞者)이며 능히 평정하여 다스리는 능력으로 진공묘유를 깨친 자 대인이니 해인을 깨친 자죠. 관음은 음 기운으로 물을 상징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뜻합니다. 이제 한반도에는 새 역사를 순산할 어머니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년에는 비산비야(非山非野) 즉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승도 아니고 속도 아닌,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신성한 어머니로 깨달은 자가 나올 것입니다. 세상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관음이 나라를 구합니다. 그래서 18대 대권자는 천강유수(千江有水) 천강월(千江月), 월인천강(月印千江)이라 했습니다. 18대 대권자는 달이 천강을 비추듯 온 국민의 마음을 비추는 월인천강의 깨달은 자입니다. 해인(海印)의 깨달음으로 네 편, 내 편이 없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관음의 화신으로 세상의 소리를 수용하는 자가 18대 옥새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남북문제, 영호남문제를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진자가 옥새의 주인입니다. 그렇다고 유순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러나 18수가 강건 발전수로 강직한 조화를 가진 자로 어머니는 강합니다.

– 진자(眞者)라는 말이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 한민족은 천손민(天孫民)으로서 홍익의 큰 사랑 정신의 대자대비입니다. 우리 민족은 잠재의식 속에 이미 홍익인간의 근본인 큰 사랑 정신을 모두 갖추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흘러 내려오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으로 홍익정신이 잠재의식 속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개천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 바로 홍익의 무애 대비한 큰사랑 정신입니다. 내가 말하는 진자라는 것은 그것을 깨우친 사람, 그것을 쓰는 사람으로 대인입니다. 그러한 진자가 내년에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개천사상, 홍익사상, 삼일(三一)정신, 평등 평화 자유정신 등은 인류가 모두 평화롭고 화합하는데 그 근본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모두 깨어나도록 해야 하고 그것을 깨우친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민족이라는 데에 묶여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우리



임선정 양백문화재단원장이 한여름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달 4일 충북 단양의 양백산 도량에 마련한 '천년초 농장'에서 잡초 제거작업을 하던 중 구슬땀을 훔치고 있다. 임 원장은 이날 "우리 민족의 천년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천년초 농장을 경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는 한반도라는 식민사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말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 정치 전문가들도 16대, 17대 대선 때 당선자를 예상하기 어려웠는데 족집게처럼 맞춰 주목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예언했던 수리 이치를 설명해줄 수 있나요?

▲ 16대 대통령은 지양백(地兩百), 17대 대통령을 인양백(人兩百)으로 풀었습니다. 16대 대통령은 지양백, 즉 땅의 밝음이 들어간 지명, 명륜동(明倫洞)에서 나온 그분이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뜻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그 집을 팔았고 옥새 없는 대통령으로 더욱 힘을 잃은 상이었습니다. 17대 대통령은 인양백으로 풀었고 소도해인(小島海印)이라고 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섬에서 인물이 나온다는 말이었죠. 바로 일본에서 태어난 이명박 대통령을 일컫는 말이었고, 그 이름 속에 있는 밝을 명자가 모든 어두움을 이기고 정권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6대 9번째 용상의 운기는 대재 무용지상이고 17대 10번째 용상의 운기가 공허 무용지상으로 재목이 너무 커서 쓰지 못하는 상이라 옥새 없는 대통령이라 했지만 오는 18대 11번째 대통령은 갱신흥가지상이니 새로운 비책으로 나라를 부흥할 하늘이 쓰실 천양백(天兩百)으로 '용천배기 用天朴'이라 했습니다. 정보의 바다로 모이는 해인(海印)시대에 일체를 초월한 부처의 경지로 대인이며 깨달은 자, 준비된 자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전생부터 준비된 자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대박납니다."

– 북한에는 김정은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남북관계는 어떻게 풀릴까요?

▲ 현재의 남북문제는 댐(Dam)에 물이 꽉 차 둑이 터질 형상입니다. 큰 둑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질 수 있는데 극에 달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표면은 밝고 화려해도 이면에 어둠이 깃들어 걱정과 다툼이 있고 비밀이 숨겨져 있어 오랫동안 쌓여있던 분쟁을 결말지어야 하는 수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북한은 지금이 최고의 고비이며 남쪽 성군을 기다리고 있는 상입니다. 남북이 음양의 조화로 결합하는 것은 하늘의 천도입니다. 조화로운 대통령의 출현으로 남북문제를 시급히 하여 남한의 양의 기운과 북한의 음의 기운이 서로 화합 하는 상입니다. 하늘의 큰 이치에 따라 남북문제가 조화롭게 풀리고 남남북녀가 결혼하듯 음양

이 조화롭고 남북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 사실 17대 대선 때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대통령에 목말라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 대선에도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까요?

▲ 안타깝게도 경제는 인력으로나 의지의 힘으로나 어쩔 도리가 없는 수로 발버둥 칠수록 불리하지만 증반 이후에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내년 2013년에는 세계가 경제 대란을 겪어야하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을 섬기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성실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 18대 대선 정세는 좌파우파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권이 바뀔까요?

▲ 18대 대통령은 국민과 민족을 위해 크게 기여할 준비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천양백으로 하늘이 낸 대통령입니다. 내면에 그래도 진보된 보수입니다. 보수이나 중도로 나라를 이끌사람입니다. 중도에서 좌(左)도 우(右)도 같이 안배해서 나라를 이끌 강직한 사람입니다.

글쎄요. 집을 바꾸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한다는 표현이 맞을 거에요.

– 해인의 시대"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한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주역에 하도낙서해인(河圖落書海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 하(河) 그림 도(圖), 녹도문자를 쓰던 상생의 시대를 지나 낙서(落書)의 시대, 물이 흐르고 글을 쓰는 시대가 문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문명은 물 흐르듯 전쟁과 경쟁 속에서 발전됐습니다. 그러한 과학문명의 발전이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입니다. 해인의 시대는 바로 '인터넷 정보의 시대'를 말합니다. 해인의 시대는 좌시천리(坐視千里) 입시만리(立視萬里)입니다. 다시 말해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보는 시대입니다. 해인시대는 물이 바다에서 모이듯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평화의 시대이고 화합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닫힌 시대, 전쟁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인을 깨우친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해인시대에는 한국이 세계 정신의 중심국이 됩니다. 조화, 교화, 치화, 그 모두를 조화롭게 이루어낼 하늘이 쓰실 지도자가 18대 대통령이 되어 해인시대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 요즘 언론에서 이 시대를 난세라고 평가하고 난세영웅이 나타날 것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북문제가 힘든 상황이지만 남북문제는 곧 세계의 인류평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난세영웅이라는 말은 난세를 수습하면 영웅이 되니까 난세영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난세영웅의 시대라기보다는 난세영웅의 조화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깨달은 진자가 나와 세상을 조화롭게 할 것입니다. 정책도 남북문제도 차기 대통령이 많은 조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남북관계도 조화롭게 평화를 이뤄낼 것이며"신 · 언 · 서 · 판"을 갖춘 판단력이 있는 사람, 강직한 카리스마가 있지만 지혜롭고 모두를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진공묘유'를 깨우친 자(者)로 애국의 유전자가 피속에 흐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번 말했지만 위정자나 국민 모두가 북한을 적대하지 말고 내나라 내국민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미 천도는 남북 평화를 이뤘습니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임선정 원장은 누구?



임 원장은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하는 남북통일이라는 '해원'으로 우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예언서인 '진자풍술' 3편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렇듯 사심 없이 국가와 민족의 움직임을 보며 수(數)를 풀고 주역의 괘를 집아 말을 풀어썼기에 말 한대로 이루어진다는 임 원장의 성장과정은 좀 독특하다.

임 원장은 혼전에 기톨릭 신자였으며 초등학교때 부라우니-스카웃을 통해선행을 공부했고 남미의 신부님을 통해 정신공부를 했다. 시집의 가풍을 따라 불교에 귀의해 광덕 큰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고 마음공부를 하고 수행하던 중 출진해 자비실천 모심회를 발족해 불교미술 자선전, 평생 가족 삼각결연사업 등 선행 사업에도 이바지해 왔다.

특히 탑골공원 원각사 복원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불교문화 보존에도 노력해온 임 원장은 불교아카데미 대자원을 개원해 불교 생활화에 매진하고 있다. 효천 큰 스승으로부터 해동 천년비기 수생결 법맥을 계승, 정진해 독자적으로 상수철학을 정립해 오랫동안 국운과 국가 중대사에 대해 정확한 예언을 해왔다. 그는 기도와 수행을 통한 법력으로 충북 단양 양백산이 민족 성지임을 깨닫고 남북평화통일과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한 국조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 결 번 호	2012대선20(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경북도민일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2동 82-4 대표이사 윤 두 영
심의대상기사	경북도민일보 2012년 8월 30일자 19면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외면한 안철수 강의」, 9월 3일자 19면 「탈세용 '페이퍼 컴퍼니'와 안철수용 '페이퍼 정당'」, 9월 5일자 19면 「안철수의 '아파트 딱지'와 '대선불출마' 암시」, 9월 13일자 19면 「민주당 문재인과 안철수의 '위험한 동거'」, 9월 17일자 19면 「기어코 대선 출마하겠다는 안철수에게」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신상과 행보에 비판적인 칼럼을 여러 번 지속적으로 게재하면서 단정적이고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사용하는 한편, 자극적인 제목을 게재하고 부정적인 사실만 선별·적시함으로써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는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제1항, 제15조(기사제목)을 위반한 위 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외면한 '안철수 강의'

서울대생들 "안철수 교수는 이중 개념주의자"

"안철수 2학기강의 수강신청 0명
학생들이 안 원장의 대선출마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그는 우리 사회에 소중한 인적자산이다.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고, 이를 무료로 배포한 '공익의식'은 칭찬받을 만 하다. 정치권이 젊은이들의 고민을 외면할 때 '청춘콘서트'로 대학을 찾아다니며 희망을 불어 넣은 것도 평가받을 일이다. 대선 출마용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지만 '안랩'(안철수연구소) 주식 기부를 통해 '안철수재단'을 설립한 것 역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으로 평가하는 데 인색할 필요가 없다.

이런 '고고한' 안 원장이 '검증'이라는 도마 위에 올려지면서 상처입고 그슬리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룸살롱' 출입을 했느니 안했느니, 군대 갈 때 가족에게 알렸느니 안 알렸느니 하는 사소한 거짓말 논란에서부터, 재벌 2세들과 만든 'V-소사이어티' 투자, 1조 5000억원 분식회계 범죄자 SK 최태원 회장 선처 탄원서 제출, 'V-소사이어티'의 '재벌은행' 추진 동참 등 개운치 않은 기록으로 안 원장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다. 심지어 '로또사업'에까지 진출했다는 뉴스는 충격이다.



경북도민일보 제 2217 호 오피니언

도민시론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외면한 '안철수 강의'

-서울대생들 "안철수 교수는 이중 개념주의자"

한 동 윤
(주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그는 우리 사회에 소중한 인적자산이다.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고, 이를 무료로 배포한 '공익의식'은 칭찬받을 만 하다. 정치권이 젊은이들의 고민을 외면할 때 '청춘콘서트'로 대학을 찾아 다니며 희망을 불어 넣은 것도 평가받을 일이다. 대선 출마용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지만 '안랩'(안철수연구소) 주식 기부를 통해 '안철수재단'을 설립한 것 역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으로 평가하는 데 인색할 필요가 없다.

이런 '고고한' 안 원장이 '검증'이라는 도마 위에 올려지면서 상처입고 그늘지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룸살롱' 출입을 했느니 안했느니, 군대 갈 때 가족에게 알렸느니 안 알렸느니 하는 사소한 거짓말 논란에서부터, 재벌 2세들과 만든 'V-소사이어티' 투자, 1조 5000억원 분식회계 범죄자 SK 최태원 회장 선처 탄원서 제출, 'V-소사이어티'의 '재벌은행' 추진 동참 등 개운치 않은 기록으로 안 원장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다. 심지어 '로또사업'에 까지 진출했다는 뉴스는 충격이다.

가장 최근 드러난 안 원장 관련 언론보도는 "안철수 2학기강의 수강신청 0명"이라는 내용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안 원장의 2학기 개설 강의인 '대학원논문연구'가 수강 신청 인원 제로(0)인 상태로 24일 마감됐다"는 것이다. 9월 초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학생들이 추가 신청하지 않으면 이 과목은 자동 폐강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는 대학원장인 안 교수 강의에 수강신청이 '0'인 이유를 학생들이 안 원장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안 원장으로부터 강의를 듣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나온 안 원장에 대한 온갖 의혹보다 치명적인 뉴스다.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하건 않건 그는 현재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으로 그는 '공무원' 신분이다. 연봉만 8,000만원 가량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안 원장은 공무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안 원장이 2학기에 '대학원논문연구' 강의를 개설한 것도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수강 신청 학생이 '제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선판을 기웃거리는 안 원장이 '대학원논문연구'라는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학생들이 판단해 아예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안 원장은 대학원장으로서, 교육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자기 강의를 듣겠다

"안철수 2학기강의 수강신청 0명 학생들이 안 원장의 대선출마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

에 없다는 뉴스처럼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

방학 때이긴 하지만 안 원장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선출마'에 대한 여론을 탐지중이다. 전북을 방문해서는 자신을 지지한 전북대 강준만 교수를 비밀리에 만났고, 곽노현 후보 단일화와 민주-통진 야권연대를 '거간(居間)'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도 만났다. 백 교수는 안 원장에게 "무조건 대선에 나와 야당을 도우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생들이 어떻게 안 원장의 '대학원논문연구' 강의를 수강하겠다고 용기를 낼 수 있겠는가?

안 원장은 작년 6월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서울대에 정교수로 동시 특채되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았다. 안 원장은 대학원장에 취임하자마자 몇 달 되지 않아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한다고 소란을 떨다 포기했다. 학교로 돌아가는 듯 하더니 "정치도 감당할 수 있다"며 대선출마를 강력히 암시하고 강연이다, 책 출간이다, 힐링 캠프 출연이다 대권행보를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안 원장 강의를 대학원생들이 모두 기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서울대 강원택 정치학과 교수와 재학생 62명은 지난 4월 총선현장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3명을 지켜본 뒤 자체 토론 및 공동 글쓰기를 거쳐 '서울대생들이 본 2012년 총선과 대선 전망'이란 책을 출간했다. 서울대생들은 책에서

▲ 2012년 8월 30일(목) 경북도민일보 19면

파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수강 신청 학생이 '제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선판을 기웃거리는 안 원장이 '대학원논문연구'라는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학생들이 판단해 아예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안 원장은 대학원장으로서, 교육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자기 강의를 듣겠다는 학생이 단 한명도 없는 교수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게 옳은 일인가? 안 원장 강의에 수강생이 전무하고, 따라서 안 원장이 개설한 강의가 자동 폐강될 수밖에 없다는 뉴스처럼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

방한 때이긴 하지만 안 원장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선출마'에 대한 여론을 탐지중이다. 전북을 방문해서는 자신을 지지한 전북대 강준만 교수를 비밀리에 만났고, 곽노현 후보 단일화와 민주-통진 야권연대를 '거간(居間)'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도 만났다. 백 교수는 안 원장에게 "무조건 대선에 나와 야당을 도우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생들이 어떻게 안 원장의 '대학원논문연구' 강의를 수강하겠다고 용기를 낼 수 있겠는가?

안 원장은 작년 6월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서울대에 정교수로 동시 특채되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았다. 안 원장은 대학원장에 취임하자마자 몇 달 되지 않아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한다고 소란을 떨다 포기했다. 학교로 돌아가는 듯 하더니 "정치도 감당할 수 있다"며 대선 출마를 강력히 암시하고 강연이다, 책 출간이다, 힐링 캠프 출연이다 대권행보를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안 원장 강의를 대학원생들이 모두 기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서울대 강원택 정치학과 교수와 재학생 62명은 지난 4월 총선현장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3명을 지켜본 뒤 자체 토론 및 공동 글쓰기를 거쳐 '서울대생들이 본 2012년 총선과 대선 전망'이란 책을 출간했다. 서울대생들은 책에서 안 원장에 대해 "이슈별로 다른 이념적 잣대를 대는 이중 개념주의자"로 규정했다. 대권을 넘보면서 서울대 교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안 원장에 대한 '냉혹한' 평가다.

탈세용 '페이퍼 컴퍼니'와 안철수용 '페이퍼 정당'

–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와 다단계 가설정당 잔머리 –

민주통합당의 이종걸 최고위원이 지난 6월 21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민주당 간 대선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안 원장과 민주당이 제3의 영역에서 가설정당을 만들어 단일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을 때만 해도 "설마" 했다. 아무리 권모술수가 난무한다 해도 정치가 다단계 사기극도 아닌 데 무슨 '다단계 가설정당'이란 말인가?

이 최고위원의 '가설정당'은 일단 '제3의 지대'에 '신당'을 만들어 여기에 안 원장이 입당하고, 민주당이 가세해 가설신당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만든다는 것이다. 부패와 무능으로 낙인찍힌 민주당에는 "죽어도" 입당하지 않겠다는 안 원장을 배려한답시고 낸 아이디어다. 경기고, 서울법대에 사법고시 출신인 이 최고위원 머리에서 나온 정치적 다단계 '잔머리'다.

그로부터 2개월 남짓. 지금 그 황당무계한 이종걸식 다단계 가설정당이 구체화되고 더 정교해지고 있다. 심지어 안 원장 쪽에서 '안철수 신당'을 만든 뒤 민주당과 합당해 또 다른 신당에서 범 야권후보를 낸다는 아이디어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사실상의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 대선후보만 급조하겠다는 '다단계' 발상이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발 심



경북도민일보 제 2219 호 오 피 니 언

도민시론

탈세용 '페이퍼 컴퍼니'와 안철수용 '페이퍼 정당'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와 다단계 가설정당 잔머리-

한 동 윤
(주필)

민주통합당의 이종걸 최고위원이 지난 6월 21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민주당 간 대선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안 원장과 민주당이 제3의 영역에서 가설정당을 만들어 단일화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을 때만 해도 "설마" 했다. 아무리 권모술수가 난무한다 해도 정치가 다단계 사기극도 아닌 데 무슨 '다단계 가설정당'이란 말인가?

이 최고위원의 '가설정당'은 일단 '제3의 지대'에 '신당'을 만들어 여기에 안 원장이 입당하고, 민주당이 가세해 가설신당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만든다는 것이다. 부패와 무능으로 낙인찍힌 민주당에는 "죽어도" 입당하지 않겠다는 안 원장을 배려한답시고 낸 아이디어다. 경기고, 서울법대에 사법고시 출신인 이 최고위원 머리에서 나온 정치적 다단계 '잔머리'다.

그로부터 2개월 남짓. 지금 그 황당무계한 이종걸식 다단계 가설정당이 구체화되고 더 정교해지고 있다. 심지어 안 원장 쪽에서 '안철수 신당'을 만든 뒤 민주당과 합당해 또 다른 신당에서 범 야권후보를 낸다는 아이디어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사실상의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 대선후보만 급조하겠다는 '다단계' 발상이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발 심리에 올라타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대선후보 반열까지 오른 안 원장 주변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안철수 신당' '페이퍼 정당' 소리만 들어도 서울 '거마지역'에 독버섯처럼 번져 대학생들을 파멸로 밀어 넣는 '다단계 사기극'을 보는 듯해 속이 매스껍다.

안 원장과 민주당의 '가설정당' 잔머리는 돈과 조직이 없는 안 원장, 인물이 부족한 민주당이 서로 '윈 윈' 한답시고 잔머리를 짜낸 다단계 피라미드 수법이다. 안 원장으로서는 현재의 지지율을 표로 옮길 방법이 부족하다. 청춘콘서트로 젊은 층을 사로 잡았지만 조직적으로 이를 묶어 낼 방법이 없다. 대선을 치를 천문학적 자금도 없다. 민주당에 입당하면 이런 결점이 한방에 해결되지만 민주당에 입당하는 순간 안 원장은 '사망선고'를 받을지 모른다. 지지층의 상당수가 민주당 입당을 반대하고, 안 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하면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비율도 높다. 안 원장으로서는 민주당이 해산을 선언하고 자기 밑으로 "헤쳐모여"하는 게 최선이다.

반면 민주당에는 조직이 있고 돈도 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후보가 부족하다. 문재인 후보가 뜬다지만 그는 '투신자살한' 노무현 프레임에 갇혀 있다.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중 "부산저축은행을 선처하라"는 전화를 금감원에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그 후 부산저축은행은 그와 노무현의 변호사 사위가 재임한 법무법인에 60억원 가까운 사건을 위탁했다. 부산의 한 로펌이 하루아침에 '전국 2위'의 대형 로펌으로 뜬 것이다. 문재인을 앞세워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갑갑한 노릇이다. 그래서 나온 게 '다단계 정당'이다.

'다단계 페이퍼 정당'을 만들면 안 원장은 민주당에 지급되는 대선국고보조금 152억원과, 국회의원 107명, 시장·군수·구청장 95명의 민주당 조직을 동원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도 문재인 후보가 여의치 않으면 안 원장을 밀어 정권의 한 귀퉁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안 원장이 민주당과 손잡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상황을 재앙으로 여기고 있다. 작년 서울시장 보선처럼 '불임정당'을 감수하며 '무소속 박원순'을 밀어야 했던 '악몽'이 재연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달 여 전만해도 '이종걸의 잔머리'로 치부되던 '다단계 정치사기극'이 현실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페이퍼 정당'은 재벌과 기업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조세회피지역'에 주로 설립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안 원장과 민주당이 범죄 냄새가 진동하는 재벌의 조세회피 수법을 정치에 접목한 격이다. 민주당은 그렇다 치고 혼자 고고한 척, 도덕적인 척 해온 안 원장이 '페이퍼 정당'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부터가 황당하다. 입만 열면 "국민을 갈라놓는 '구태'가 여전하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해온 안 원장이 민주당의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상투수법인 합당, 분당, 이합집산, 야합에 끼어든다는 뉴스가 보도된 것만으로도 안 원장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안 원장을 포함한 '다단계 신당'이 만들어지면 그 신당 이름은 무엇이 될까? '안철수 다단계 피라미드당'이라고 하면 어떨까?

▲ 2012년 9월 3일(월) 경북도민일보 19면

임 중 "부산저축은행을 선처하라"는 전화를 금감원에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그 후 부산저축은행은 그와 노무현의 변호사 사위가 재임한 법무법인에 60억원 가까운 사건을 위탁했다. 부산의 한 로펌이 하루아침에 '전국 2위'의 대형 로펌으로 뜬 것이다. 문재인을 앞세워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갑갑한 노릇이다. 그래서 나온 게 '다단계 정당'이다.

'다단계 페이퍼 정당'을 만들면 안 원장은 민주당에 지급되는 대선국고보조금 152억 원과, 국회의원 107명, 시장 · 군수 · 구청장 95명의 민주당 조직을 동원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도 문재인 후보가 여의치 않으면 안 원장을 밀어 정권의 한 귀퉁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안 원장이 민주당과 손잡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상황을 재앙으로 여기고 있다. 작년 서울시장 보선처럼 '불임정당'을 감수하며 '무소속 박원순'을 밀어야 했던 '악몽'이 재연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달 여 전만해도 '이종걸의 잔머리'로 치부되던 '다단계 정치사기극'이 현실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페이퍼 정당'은 재벌과 기업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조세회피지역'에 주로 설립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안 원장과 민주당이 범죄 냄새가 진동하는 재벌의 조세회피 수법을 정치에 접목한 격이다. 민주당은 그렇다 치고 혼자 고고한 척, 도덕적인 척 해온 안 원장이 '페이퍼 정당'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부터가 황당하다. 입만 열면 "국민을 갈라놓는 '구태'가 여전하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해온 안 원장이 민주당의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상투수법인 합당, 분당, 이합집산, 야합에 끼어든다는 뉴스가 보도된 것만으로도 안 원장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안 원장을 포함한 '다단계 신당'이 만들어지면 그 신당 이름은 무엇이 될까? '안철수 다단계 피라미드당'이라고 하면 어떨까?

안철수의 '아파트 딱지'와 '대선불출마' 암시

자기 모습에 반해 강물에 뛰어든 나르시스 안철수

"'세인트 찰스'라 믿었던 안철수
온갖 거짓말 들통난 와중에
대선불출마설 이상할 것 없어"

마침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입에서 '대선불출마'를 암시하는 말이 흘러 나왔다. 안 원장이 지난 31일 충남 홍성군 문당마을을 찾아 농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권도전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다"고 말한 것이다. 또 "나는 한 번도 스스로 대선에 나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호출 당한 케이스"라고도 했다. 재단을 만들고, 책을 내고, 힐링캠프에 두 차례나 출연해 바람을 잡던 안 원장이 스스로의 대권 행보에 바람을 빼는 모습이다.

12월 대선이라는 '전장(戰場)'을 눈앞에 둔 안 원장의 '회군(回軍)' 암시는 그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그의 거짓말이 하나 둘 사실로 드러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술은 입에도 대지 못 한다"는 그가 재벌 총수, 2세들과 룸살롱을 드나 든 증언이 속출하고, 안철수연구소 직원들까지 그의 '폭음'을 언급함으로써 안 원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말았다. "군대 가는 날 바이러스 백신을 새벽까지 개발하느라 가족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는 그의 주장은 "기차 타는 곳까지 배웅하고 돌아왔다"는 부인의 증언으로 거짓말로 확인되고 말았다.

경제사범에 대해 "그거 사형시킬 수 없나요?"라고 정의의 사도로 행세한 그가 1조 5000억 원 분식회계로 구속된 SK 최태원 회장 구명 탄원서에 재벌 총수들과 서명한 사실, '삼성동물원' 'LG동물원' 운운하며 재벌을 비난한 그가 재벌 2세들과 '재벌은행' 설립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난 것도 치명적이었다. "나의 회사에 친인척은 단 한명도 없다"던 그의 연구소에 장

인과 부인, 동생이 이사, 감사 등으로 재직했던 사실 역시 그에게는 '괴로운 과거' 였을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안철수의 거짓말'은 "오랜 동안 전세 생활 때문에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는 능청스런 가식이다. 그러나 안 원장은 24년 전인 1988년 4월27일 '딱지'로 서울 사당동 대림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여 89년 12월 부인과 함께 입주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안 원장은 "관습대로 부모가 사준 집"이라고 했다.

1993년에는 '조합원 아파트' 몫으로 배정된 서울 강남 역삼동 럭키아파트에 입주했다. 이 역시 모친이 사준 집이다. 안 원장이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는 전세생활은 채 1년도 안 된다. 그러자 안 원장은 "KAIST에 근무하면서 지방에 전세로 살았다"고 변명했다. 서울에 자기집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지에 임시로 산 전세가 '집 없는 설움'인가?



경북도민일보 제 2221 호 오피니언

도민시론

안철수의 '아파트 딱지'와 '대선불출마' 암시

-자기 모습에 반해 강물에 뛰어든 나르시스 안철수

한 동 윤
(주필)

마침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입에서 '대선불출마'를 암시하는 말이 흘러 나왔다. 안 원장이 지난 31일 충남 홍성군 문당마을을 찾아 농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권도전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다"고 말한 것이다. 또 "나는 한 번도 스스로 대선에 나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호출 당한 케이스"라고도 했다. 재단을 만들고, 책을 내고, 힐링캠프에 두 차례나 출연해 바람을 잡던 안 원장이 스스로의 대권 행보에 바람을 빼는 모습이다.

12월 대선이라는 '전장(戰場)'을 눈앞에 둔 안 원장의 '회군(回軍)' 암시는 그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그의 거짓말이 하나 둘 사실로 드러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술은 입에도 대지 못 한다"는 그가 재벌 총수, 2세들과 룸살롱을 드나 든 증언이 속출하고, 안철수연구소 직원들까지 그의 '폭음'을 언급함으로써 안 원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말았다. "군대 가는 날 바이러스 백신을 새벽까지 개발하느라 가족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는 그의 주장은 "기차 타는 곳까지 배웅하고 돌아왔다"는 부인의 증언으로 거짓말로 확인되고 말았다.

경제사범에 대해 "그거 사형시킬 수 없나요?"라고 정의의 사도로 행세한 그가 1조 5000억원 분식회계로 구속된 SK 최태원 회장 구명 탄원서에 재벌 총수들과 서명한 사실, '삼성동불원' 'LG동불원' 운운하며 재벌을 비난한 그가 재벌 2세들과 '재벌은행' 설립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난 것도 치명적이었다. "나의 회사에 친인척은 단 한명도 없다"던 그의 연구소에 장인과 부인, 동생이 이사, 감사 등으로 재직했던 사실 역시 그에게는 '괴로운 과거' 였을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안철수의 거짓말'은 "오랜 동안 전세 생활 때문에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는 능청스런 가식이다. 그러나 안 원장은 24년 전인 1988년 4월27일 '딱지'로 서울 사

"'세인트 찰스'라 믿었던 안철수 온갖 거짓말 들통난 와중에 대선불출마설 이상할 것 없어"

당동 대림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여 89년 12월 부인과 함께 입주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안 원장은 "관습대로 부모가 사준 집"이라고 했다.

1993년에는 '조합원 아파트' 몫으로 배정된 서울 강남 역삼동 럭키아파트에 입주했다. 이 역시 모친이 사준 집이다. 안 원장이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는 전세생활은 채 1년도 안 된다. 그러자 안 원장은 "KAIST에 근무하면서 지방에 전세로 살았다"고 변명했다. 서울에 자기집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지에 임시로 산 전세가 '집 없는 설움'인가?

더 기막힌 가식과 위선은 이제부터다. 안 원장은 '철수생각'에서 서울 용산 재개발 참사에 대해 "거주민들을 고려치 않고 개발 논리만 밀어붙이다 참사를 초래했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또 "도시 재개발은 세입자 등 약자의 입장을 더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안 원장이 바로 1988년 "거주민들을 고려치 않고 개발 논리만 밀어붙이다 참사를 초래한" 서울 사당동 재개발 지역 아파트 딱지를 구입했다. 그런 몇 년 후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팔아치웠다.

안 원장은 '철수생각'에서 "부모에게 손 벌리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자립심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사당동 아파트는 어머니가 장만했다"고 했다. 모친에게 손 벌린 것도 모자라 '딱지'를 산 부도덕한 행위를 모친 책임으로 떠넘겼다. 안 원장의 '대선불출마' 암시는 이같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온갖 거짓말이 들통 난 와중에 나온 것이다.

안 원장의 별명은 '세인트 찰스'다. '세인트'는 '성인(聖人)'이라는 의미고 '찰스'는 '철수'의 영어 발음이다. 안 원장이 한 점 부끄러움조차 없는,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한 인물처럼 행세해온 것을 비꼬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안철수 역시 세속의 때가 덕지덕지 묻은 '범인(凡人)'이라는 사실이 약식 검증을 통해 드러났다. 문제는 안 원장의 흠집과 결함에 있지 않다. 누구나 저지를 수 있고 누구에게나 있는 결함을 숨기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해왔다는 점이다. 안 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 물속으로 뛰어 들어 목숨을 잃은 나르시스, 안철수의 비극이다.

▲ 2012년 9월 5일(수) 경북도민일보 19면

더 기막힌 가식과 위선은 이제부터다. 안 원장은 '철수생각'에서 서울 용산 재개발 참사에 대해 "거주민들을 고려치 않고 개발 논리만 밀어붙이다 참사를 초래했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또 "도시 재개발은 세입자 등 약자의 입장을 더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안 원장이 바로 1988년 "거주민들을 고려치 않고 개발 논리만 밀어붙이다 참사를 초래한" 서울 사당동 재개발 지역 아파트 딱지를 구입했다. 그런 몇 년 후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팔아치웠다.

안 원장은 '철수생각'에서 "부모에게 손 벌리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자립심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사당동 아파트는 어머니가 장만했다"고 했다. 모친에게 손 벌린 것도 모자라 '딱지'를 산 부도덕한 행위를 모친 책임으로 떠넘겼다. 안 원장의 '대선불출마' 암시는 이 같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온갖 거짓말이 들통 난 와중에 나온 것이다.

안 원장의 별명은 '세인트 찰스'다. '세인트'는 '성인(聖人)'이라는 의미고 '찰스'는 '철수'의 영어 발음이다. 안 원장이 한 점 부끄러움조차 없는,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한 인물처럼 행세해온 것을 비꼬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안철수 역시 세속의 때가 덕지덕지 묻은 '범인(凡人)'이라는 사실이 약식 검증을 통해 드러났다. 문제는 안 원장의 흠집과 결함에 있지 않다. 누구나 저지를 수 있고 누구에게나 있는 결함을 숨기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해왔다는 점이다. 안 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 물속으로 뛰어 들어 목숨을 잃은 나르시스, 안철수의 비극이다.

민주당 문재인과 안철수의 '위험한 동거'

안철수 "민주당 후보 확정되면 출마 선언하겠다"

"문재인 후보경선 10연승하자
존재감 드러내려는 안철수
민주, 더 강도 높은 검증 거쳐야"

민주통합당이 작심하고 뭔가 해보려고 나서면 꼭 안철수라는 '장애물'에 걸려 발을 헛딛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작년 10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 원장이 박원순 변호사를 지원하는 바람에 서울시장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불임정당'으로 전락한 이래 중요한 대목마다 안 원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스타일을 구긴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으로 분위기를 잡으려 하자 '안철수재단' 설립이다, '안철수의 생각' 출간이다, '힐링 캠프' 출연으로 김을 뺀 것도 안 원장이다. 급기야 민주당 내에서 대선후보 경선이 '2부 리그'라는 한탄이 쏟아져 나오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했다 하면 사고가 터지는 '모바일 투표'에도 문제가 있지만 안 원장이 야권대선후보로서 국민들의 관심을 휘몰아간 데 따른 현상이다.

안팎의 악재 속에 문재인 후보가 후보경선에서 10연승을 기록하고, 마침내 야권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앞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웬걸? 문 후보가 한숨 돌리자마자 안 원장이 뛰어 들었다.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면 대선에 관한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장막을 치고 나온 것이다. 안 원장의 '대선에 관한 입장'은 보나마나 '출마'다. 문 후보가 안 원장을 앞섰다는 뉴스는 안 원장의 "출마 기정사실화" 뉴스에 파묻혀버렸다. 찬물을 뒤집어 쓴 민주당과 문 후보 진영에서 '왕짜증'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안 원장 심기를 거스를까 속으로 삭이는 모습이다. 안 원장이 행여 불출마로 돌아서거나, 출마할 경우에도 민주당

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을 두려워한 것이다.

안 원장 의도는 빤하다. 안 원장은 최근 자신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나고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에게 역전당하자 존재감을 드러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면 '컨벤션 효과(전당대회 직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로 문 후보 지지율이 오를 경우 자신의 존재가 묻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민주당 후보 확정 직후 "대선출마"를 선언해 그 효과를 저지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으로서는 안 원장의 의도를 간파하면서도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 안 원장을 '2002년의 정몽준'으로 써먹으려면 안 원장 심기를 건드려선 안되기 때문이다.

경북도민일보 제 2227 호 오피니언

도민시론

민주당 문재인과 안철수의 '위험한 동거'

-안철수 "민주당 후보 확정되면 출마선언하겠다"

한 동 윤
(주필)

민주통합당이 작심하고 뭔가 해보려고 나서면 꼭 안철수라는 '장애물'에 걸려 발을 헛딛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작년 10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 원장이 박원순 변호사를 지원하는 바람에 서울시장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불임정당'으로 전락한 이래 중요한 대목마다 안 원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스타일을 구긴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으로 분위기를 잡으려 하자 '안철수재단' 설립이다, '안철수의 생각' 출간이다, '힐링 캠프' 출연으로 김을 뺀 것도 안 원장이다. 급기야 민주당 내에서 대선후보 경선이 '2부 리그'라는 한탄이 쏟아져 나오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했다 하면 사고가 터지는 '모바일 투표'에도 문제가 있지만 안 원장이 야권대선후보로서 국민들의 관심을 휘몰아간 데 따른 현상이다.

안팎의 악재 속에 문재인 후보가 후보경선에서 10연승을 기록하고, 마침내 야권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앞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웬걸? 문 후보가 한숨 돌리자마자 안 원장이 뛰어 들었다.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면 대선에 관한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장막을 치고 나온 것이다. 안 원장의 '대선에 관한 입장'은 보나마나 '출마'다. 문 후보가 안 원장을 앞섰다는 뉴스는 안 원장의 "출마 기정사실화" 뉴스에 파묻혀버렸다. 찬물을 뒤집어 쓴 민주당과 문 후보 진영에서 '왕짜증'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안 원장 심기를 거스를까 속으로 삭이는 모습이다. 안 원장이 행여 불출마로 돌아서거나, 출마할 경우에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을 두려워한 것이다.

안 원장 의도는 빤하다. 안 원장은 최근 자신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나고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에게 역전당하자 존재감을 드러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면 '컨벤션 효과(전당대회 직후 지지율이 상승

"문재인 후보경선 10연승하자
존재감 드러내려는 안철수
민주, 더 강도 높은 검증 거쳐야"

하는 효과)'로 문 후보 지지율이 오를 경우 자신의 존재가 묻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민주당 후보 확정 직후 "대선출마"를 선언해 그 효과를 저지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으로서는 안 원장의 의도를 간파하면서도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 안 원장을 '2002년의 정몽준'으로 써먹으려면 안 원장 심기를 건드려선 안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대선후보 확정은 추석(9월 30일) 직전이다. 추석 민심을 겨냥한 택일이다. 그러나 안 원장이 민주당 후보 확정 직후 "대선출마"를 발표하면 추석 민심을 반분할 수 있다. 귀성길에서, 그리고 제상 앞에서 정치 화제를 민주당 후보가 독식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순진한 모습을 해온 안 원장의 정치적 계산이 간단하지않다.

그러나 민주당과 안 원장의 '위험한 동거'는 깨지기 마련이다. 안 원장은 민주당을 포함한 기성 정당을 "나쁜 정치" "구태"라고 비난해왔다. 더구나 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 불공정 논란으로 사분오열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일어난 공천헌금 비리의혹이 당을 휘감고 있다. 그 중심에 문재인과 '담합'했다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있다. 안 원장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야권후보단일화에 나서려면 이런 민주당과 뺨을 비벼야 한다.

야권후보 단일화에 나서도 가시밭길이다. 민주당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모바일선거'를 선호하겠지만 안 원장은 결사 반대다.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주장할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과 '여론조사'로 후보를 단일화했기 때문에 안 원장 요구를 거부하기도 힘들다.

결정적인 것은 후보단일화 과정이다. 민주당은 안 원장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 없다. 요즘 튀어 나온 안철수 거짓말보다 몇 십 배 강도 높은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 후보가 12월 대선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안 원장에게 밀리면 작년 10월 서울시장 선거처럼 민주당은 '불임정당'으로 전락하고 만다. 아마 당을 해산해야 할지 모른다.

민주당과 안 원장이 서로 애지중지하며 '후보단일화'의 꿈을 꾸지만 그 '위험한 동거'가 위기에 처할 날도 머지않았다.

▲ 2012년 9월 13일(목) 경북도민일보 19면

민주당의 대선후보 확정은 추석(9월 30일) 직전이다. 추석 민심을 겨냥한 택일이다. 그러나 안 원장이 민주당 후보 확정 직후 "대선출마"를 발표하면 추석 민심을 반분할 수 있다. 귀성길에서, 그리고 제상 앞에서 정치 화제를 민주당 후보가 독식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순진한 모습을 해온 안 원장의 정치적 계산이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과 안 원장의 '위험한 동거'는 깨지기 마련이다. 안 원장은 민주당을 포함한 기성 정당을 "나쁜 정치" "구태"라고 비난해왔다. 더구나 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 불공정 논란으로 사분오열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일어난 공천헌금 비리의혹이 당을 휘감고 있다. 그 중심에 문재인과 '담합'했다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있다. 안 원장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야권후보단일화에 나서려면 이런 민주당과 뺨을 비벼야 한다.

야권후보 단일화에 나서도 가시밭길이다. 민주당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모바일선거'를 선호하겠지만 안 원장은 결사 반대다.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주장할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과 '여론조사'로 후보를 단일화했기 때문에 안 원장 요구를 거부하기도 힘들다.

결정적인 것은 후보단일화 과정이다. 민주당은 안 원장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 없다. 요즘 튀어 나온 안철수 거짓말보다 몇 십 배 강도 높은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 후보가 12월 대선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안 원장에게 밀리면 작년 10월 서울시장 선거처럼 민주당은 '불임정당'으로 전락하고 만다. 아마 당을 해산해야 할지 모른다.

민주당과 안 원장이 서로 애지중지하며 '후보단일화'의 꿈을 꾸지만 그 '위험한 동거'가 위기에 처할 날도 머지않았다.

기어코 대선 출마하겠다는 안철수에게

"좋아하는 일부터 하라"던 '의사' '교수' 안철수의 외도

"국가경영에 필요한 이력 전무
외교 · 안보 · 대북문제 경험 전무
安, 대통령될 자격 있는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기어코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모양이다. 작년 서울시장 보선 이래 1년 동안 출마 여부를 놓고 우물쭈물해온 안 원장이 느닷없이 광주 5 · 18 묘역을 참배하더니, 측근들에게 '출마선언문' 작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대선을 불과 90여일 앞두고 있다. 그에게는 정당도 없고 지지하는 국회의원도 드물다. 그야말로 필마단기다.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안 원장에게는 구체적인 '공약'도 없다. 오로지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힌 '복지'와 '정의'라는 공자말씀 뿐이다. '안철수의 생각'도 저술한 것도 아니라 기자출신과 묻고 답한 대담이 전부다. 외교 안보와 대북 문제에는 거의 '백치' 수준이다. 지지율이 높다지만 '나홀로' 출마선언하려는 안 원장의 용기가 놀랍다.

안 원장이 대선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와 각오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섰을 법하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안 원장의 국가경영에 관한 '청사진'을 접해보지 못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은 이미 제시됐지만 안 원장이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인 대한민국호를 어떻게 이끌지 항해도가 없는 것이다.

주변 인물들도 극히 제한적이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만났고, 최상용 전 주일대사, 김호기 연세대 · 강준만 전북대 · 고원 서울과기대 교수, 이재웅 다음 창업주, 조용경 포스코엔지니어링 부회장 등이 안 원장 사람들로 거론된다. 또 금태섭 변호사, 안 원장 비서실장 격인 강인철

변호사, 조광희 변호사, 민주당 의원인 송호창 변호사도 안철수 인맥이다. 이 밖에 안 원장이 북한문제를 과외공부한 경남대 김근식 교수, 김효석 전 민주당 의원도 멘토에 해당된다. 대권을 보좌할 진용으로는 초라하다.

안철수 본인의 '스펙'은 어떤가? 안 원장은 외과의사다. 군대도 군의관으로 마쳤고, 박사 학위도 의학박사가 유일하다. 의사였던 그는 컴퓨터바이러스 (V3)를 만들어 유명해졌고, 이를 토대로 '안철수연구소'를 설립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MBA를 취득한 뒤, KAIST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2011년 서울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맡았다. 이상이 전부다. 정치나 행정, 국가경영에 필요한 이력은 전무하다.

기어코 출마하겠다는 안 원장에게 간곡하게 당부할 말이 너무 많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권력의지와 경험, 그 의지와 경험을 실천할 정책, 그리고 이를 입법화할 정당 배경, 각 분야의 검증된 인재가 존재하느냐고 묻고 싶은 것이다.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다" "나는 징발된 케이스"라는 등 강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로는 대선에 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안 원장은 서울시장선거 출마를 시도할 때 안 원장 '멘토'였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회의원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충고하자 "국회에는 하는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입법부에 대한 몰상식을 드러낸 바 있다. 안 원장은 입법-사법-행정 3부가 맞물려 작동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자문 자답해보기 바란다.

안 원장은 작년 김정일이 급사하자 햇볕론자인 김근식 교수로부터 과외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권은 달러를 퍼붓고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지만 2002년 서해에서 북한도발로 봉변을 당했다. 노무현 정권이 정성을 기울였지만 핵실험으로 보답한 북한이다. 이런 남북관계가 대학교수의 '쪽지과외'로 해결될 일인가?

안 원장은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모바일소동'으로 수권야당 모습과 동떨어져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했고, 북한규탄결의안조차 반대한 집단이다. 연평도 포격이 벌어지자 북한 비난보다 "이명박 정부 탓'에 열을 올린 정당이다.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양경숙 공천헌금' 수렁 속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 고고한 척, 깨끗한 척 해온 안 원장이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는가? "좋아하는 일부터 하라"는 건 다른 사람의 말이었는가?

경북도민일보 제 2229 호 오피니언

도민시론

기어코 대선 출마하겠다는 안철수에게

-"좋아하는 일부터 하라"던 '의사' '교수' 안철수의 외도

한 동 윤
(주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기어코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모양이다. 작년 서울시장 보선 이래 1년동안 출마 여부를 놓고 우물쭈물해온 안 원장이 느닷없이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더니, 측근들에게 '출마선언문' 작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대선을 불과 90여 일 앞두고다. 그에게는 정당도 없고 지지하는 국회의원도 드물다. 그야말로 필마단기다.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안 원장에게는 구체적인 '공약'도 없다. 오로지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힌 '복지'와 '정의'라는 공자말씀 뿐이다. '안철수의 생각'도 저술한 것도 아니라 기자출신과 묻고 답한 대담이 전부다. 외교안보와 대북 문제에는 거의 '백치' 수준이다. 지지율이 높다지만 '나홀로' 출마선언하려는 안 원장의 용기가 놀랍다.

안 원장이 대선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와 각오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섰을 법하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안 원장의 국가경영에 관한 '청사진'을 접해보지 못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은 이미 제시됐지만 안 원장이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인 대한민국호를 어떻게 이끌지 항해도가 없는 것이다.

주변인물들도 극히 제한적이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만났고, 최상용 전 주일대사, 김호기 연세대· 강준만 전북대· 고원 서울과기대 교수, 이재웅 다음 창업주, 조용경 포스코엔지니어링 부회장 등이 안 원장 사람들로 거론된다. 또 금태섭 변호사, 안 원장 비서실장 격인 강인철 변호사, 조광희 변호사, 민주당 의원인 송호창 변호사도 안철수 인맥이다. 이 밖에 안 원장이 북한문제를 과외공부한 경남대 김근식 교수, 김효석 전 민주당 의원도 멘토에 해당된다. 대권을 보좌할 진용으로는 초라하다.

안철수 본인의 '스펙'은 어떤가? 안 원장은 외과의사다. 군대도 군의관으로 마쳤고, 박사

"국가경영에 필요한 이력 전무
외교·안보·대북문제 경험 전무
安, 대통령될 자격 있는가?"

학위도 의학박사가 유일하다. 의사였던 그는 컴퓨터바이러스 (V3)를 만들어 유명해졌고, 이를 토대로 '안철수연구소'를 설립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MBA를 취득한 뒤, KAIST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2011년 서울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맡았다. 이상이 전부다. 정치나 행정, 국가경영에 필요한 이력은 전무하다.

기어코 출마하겠다는 안 원장에게 간곡하게 당부할 말이 너무 많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권력의지와, 경험, 그 의지와 경험을 실천할 정책, 그리고 이를 입법화할 정당 배경, 각 분야의 검증된 인재가 존재하느냐고 묻고 싶은 것이다.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다" "나는 징발된 케이스"라는 등 강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로는 대선에 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안 원장은 서울시장선거 출마를 시도할 때 안 원장 '멘토'였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회의원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충고하자 "국회에는 하는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입법부에 대한 몰상식을 드러낸 바 있다. 안 원장은 입법-사법-행정 3부가 맞물려 작동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자문 자답해보기 바란다.

안 원장은 작년 김정일이 급사하자 햇볕론자인 김근식 교수로부터 과외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권은 달러를 퍼붓고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지만 2002년 서해에서 북한 도발로 봉변을 당했다. 노무현 정권이 정성을 기울였지만 핵실험으로 보답한 북한이다. 이런 남북관계가 대학교수의 '쪽지과외'로 해결될 일인가?

안 원장은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모바일소동'으로 수권야당 모습과 동떨어져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했고, 북한규탄결의안조차 반대한 집단이다. 연평도 포격이 벌어지자 북한 비난보다 "이명박 정부 탓'에 열을 올린 정당이다.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양경숙 공천헌금' 수렁 속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 고고한 척, 깨끗한 척 해온 안 원장이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는가? "좋아하는 일부터 하라"는 건 다른 사람의 말이었는가?

▲ 2012년 9월 17일(월) 경북도민일보 19면

의 결 번 호	2012대선21(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대구일보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0 대표이사 이 태 열
심의대상기사	대구일보 2012년 5월 7일자 26면 「안철수 불가론」, 7월 30일자 26면 「안철수 불가론(2)」, 8월 6일자 26면 「안철수 불가론(3)」, 9월 3일자 26면 「안철수의 '위대한' 이미지 조작」, 9월 10일자 26면 「안철수 검증은 네거티브일 수 없다」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신상과 행보에 비판적인 칼럼을 여러 번 지속적으로 게재하면서 단정적이고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사용하는 한편, 자극적인 제목을 게재하고 부정적인 사실만 선별·적시함으로써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는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제1항, 제15조(기사제목)을 위반한 위 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안철수 불가론

최근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부친은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은 안철수 대 박근혜의 구도가 아니겠나"고 했다. 물론 아들의 말은 아니지만 중대한 발언이다. 따라서 이제는 안 교수에 대한 대통령감으로서의 검증은 본격화되어야 할 때다. 대통령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일까. 깨끗한 이미지로 한 때 대통령 후보 중 인기투표 1위였던 박찬종씨의 말이다. "내가 대통령 안 되는 게 나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유로 "그 때 난 부패 방지 계책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게다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누구도 놀랄만한 너무도 솔직한 고백이다.

정치력 없으면 정치 못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 명제는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는 많은 일을 했다. 국제금융위기도 잘 극복했고 G-20으로 국가위상도 높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잘한 대통령이라 평가 하지 않는다. 국가를 온통 불만의 나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잠깐 정치를 했지만 정치초년병이나 다름없다. 미국쇠고기 촛불시위 때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도 들었다"며 "나도 한 때는 운동권이었는데…"하며 얍삽한 면을 보일 게 아니라 "내일부터 당장 저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다"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을 위해서는 죽음도 각오하

는 신념의 정치지도자상을 보였어야 했다. 국민의 마음을 잘못 읽은 것이다. "안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일을 잘 해놓고도 욕 먹는, 그래서 불만의 나라가 된 것은 오직 정치력의 부족 때문이다.

정치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된 경우 이런 실패사례가 많다. 자수성가형 기업인인 미국의 하딩 대통령과 성공한 기업인 출신의 후버 대통령이나 하버드 박사출신의 멕시코의 살리나스 대통령, 그리고 이태리의 베를루스코니 총리 등등 사례가 수가 없다.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 그것은 정치를 하려면 암묵지(暗默知)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지기 때문이다. 안 교수라면 공부해서 얻는 형식지(形式知)라면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암묵지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안 교수는 그런 정치력이 있다고 우긴다. 그 논리가 바로 "조직 관리를 해본 사람은 피식 웃는다. 수영하는 사람에게는 수심 2m나 태평양이나 똑 같다"는 수영론이 그것이다.

하긴 정치력은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국민 마음만 잘 읽으면 소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가는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청춘콘서트로는 청춘의 마음은 읽었을지 모르나 전 국민의 마음을 읽지는 못 했음은 인정해야 한다.

우파상식 다르고 좌파상식 다르다

그리고 안 교수의 상식론도 그렇다. 그는 '굳이 좌파 우파로 나눠야 한다면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 물론 청춘콘서트에서는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일종의 말장난인데다 생각이 비슷한 학생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회에 나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소행이다'는 우파에게는 상식이고 좌파에게는 비상식이다.

세상을 '좌파냐 우파'냐 혹은 '진보냐 보수냐'로 나눌 수는 있어도 상식이냐 비상식이냐로는 나누어 지지 않는 것이다. 이념대결에 시달려온 국민으로서는 잠시 신선하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분석법이다.

지도자는 예견력이 있어야 한다. 경부고속도 건설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예지력은 세계가 인정하는 바이지만 안 교수의 예지력은 별로 인 것 같다. 지난해 8월게 당시 분위기는 애플의 위세에 눌려 삼성전자 마치 위기에 빠진 듯한 느낌이었다. 그 때 안 교수는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는 한국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다"고 했다. 그런데 그 후 삼성은 몰락이 아니라 스마트폰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1위로 등극했다.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착한 사람이 하는 자리가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 하는 자리다. 성인이었던 공자가 노나라 대사구가 되었지만 노나라는 강국도 이상국가도 되지 못했다.

안철수 불가론



우당칼럼

서상호
주필

최근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부친은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은 안철수 대 박근혜의 구도가 아니겠냐"고 했다. 물론 아들의 말은 아니지만 중대한 발언이다. 따라서 이제는 안 교수에 대한 대통령감으로서의 검증은 본격화되어야 할 때다.

대통령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일까. 깨끗한 이미지로 한 때 대통령 후보 중 인기투표 1위였던 박찬종씨의 말이다.

"내가 대통령 안 되는 게 나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유로 "그 때 난 부패 방지 계책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게다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누구도 놀랄만한 너무도 솔직한 고백이다.

정치력 없으면 정치 못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 명제는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는 많은 일을 했다. 국제금융위기도 잘 극복했고 G-20으로 국가위상도 높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잘한 대통령이라 평가 하지 않는다. 국가를 온통 불만의 나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잠깐 정치를 했지만 정치초년병이나 다름없다. 미국쇠고기 촛불시위 때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도 들었다"며 "나도 한 때는 운동권이었는데…"하며 얍삽한 면을 보일 게 아니라 "내일부터 당장 저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다"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을 위해서는 죽음도 각오하는 신념의 정치지도자상을 보였어야 했다. 국민의 마음을 잘못 읽은 것이다. "안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일을 잘 해놓고도 욕 먹는, 그래서 불만의 나라가 된 것은 오직 정치력의 부족 때문이다.

정치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된 경우 이런 실패사례가 많다. 자수성가형 기업인인 미국의 하딩 대통령과 성공한 기업인 출신의 후버 대통령이나 하버드 박사출신의 멕시코의 살리나스대통령, 그리고 이태리의 베를루스코니 총리 등등 사례가 수가 없다.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 그것은 정치를 하려면 암묵지(暗默知)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지기 때문이다. 안 교수라면 공부해서 얻는 형식지(形式知)라면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암묵지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안 교수는 그런 정치력이 있다고 우긴다. 그 논리가 바로 "조직 관리를 해본 사람은 피식 웃는다. 수영하는 사람에게는 수심 2m 나 태평양이나 똑 같다"는 수영론이 그것이다.

하긴 정치력은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국민마음만 잘 읽으면 소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가는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청춘콘서트로는 청춘의 마음은 읽었을지 모르나 전 국민의 마음을 읽지는 못 했음은 인정해야 한다.

우파상식 다르고 좌파상식 다르다

안 교수의 상식론도 그렇다. 그는 '굳이 좌파 우파로 나눠야 한다면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 물론 청춘콘서트에서는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일종의 말장난인데다 생각이 비슷한 학생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회에 나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소행이다'는 우파에게는 상식이고 좌파에게는 비상식이다.

세상을 '좌파냐 우파'냐 혹은 '진보냐 보수냐'로 나눌 수는 있어도 상식이냐 비상식이냐로는 나누어 지지 않는 것이다. 이념대결에 시달려온 국민으로서는 잠시 신선하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분석법이다.

지도자는 예견력이 있어야 한다. 경부고속도 건설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예지력은 세계가 인정하는 바이지만 안 교수의 예지력은 별로 인 것 같다. 지난해 8월게 당시 분위기는 애플의 위세에 눌려 삼성전자 마치 위기에 빠진 듯한 느낌이었다. 그 때 안 교수는 "구글의 모토롤라인수는 한국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다"고 했다. 그런데 그 후 삼성은 몰락이 아니라 스마트폰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1위로 등극했다.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착한 사람이 하는 자리가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 하는 자리다.

▲ 2012년 5월 7일(월) 대구일보 26면

안철수 불가론(2)

지난 5월에 안철수 불가론을 썼다. 안 교수 스스로도 '대통령은 정치인이 하는 자리'라며 정치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정치력 불비(不備)의 지도자는 안 된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도 진보와 보수 대신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 그럼 김일성 가족의 3대 세습은 종북좌파에게는 상식인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요지였었다.

그런데 안 교수는 최근 자서전 출판과 SBS의 힐링캠프에 출연하면서 사실상의 출마선언을 했다. 따라서 그때 못한 안 교수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많은 이유 중 두 가지만 말하고자 한다.

안 교수는 힐링캠프에서 "우리나라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버렸다"고 했다.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실패한 역사'라는 발언을 연상케 한다. 지금 세계경제는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은 아니다.

낭떠러지론은 선거공학?

우선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그렇다. 최근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우리나라 은행들을 골드만 삭스나 도이체방크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투자은행들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국가등급도 미국 독일 일본 영국 강대국들은 깎였거나 깎일 예정으로 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향조정 했다.

안 교수 측이 이 정도의 사정을 몰랐을 리는 없다. 그러나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는 대선의 구도를 구 패러다임과 신 패러다임, 구 가치와 새로운 가치의 대결로 몰고 가려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구 패러다임이 이룩해 놓은 업적은 너무 훌륭하다. TV, 휴대폰 세계 1위 등 경제적 업적이나 한류 등 문화적 업적 등이다. 따라서 정책대결로는 불리하니, 자연 선거공학상 이미지 전략으로 '위기론' 즉 '낭떠러지론'으로 덮어씌우기 전략과 같은 '단어'를 구사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과거 '차떼기' 한 마디가 선거를 거의 끝내 버린 것처럼 한 마디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방송국의 예고편 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 실패한 작전으로 평가한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 아마추어라더니 정치 프로보다 더 정치공학적이고, 착하다더니 거짓말이 자주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팩트(fact)하나 없이 이미지 관리만으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아무리 기성정치권이 국민에 실망을 줘 반(反)정치 풍토가 형성돼 있다 해도 그렇다.

TV에 나와 그는 백신개발에 몰두하다 군에 간다는 말을 가족에게 하지 않고 입대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역까지 바래다 줬다'고 했다. 안철수대세론도 '모른다'고 했다. 거짓말까지 동원한 지나친 이미지 관리다. 그리고 무책임하다.

잘못된 가정서 나온 결론은 허구다

또 하나는 경제인식에 대한 문제다. 기업의 경제활동 목적을 설명하면서 빵집 이야기를 했다. 좋은 재료에 적정 값으로 판다면 빵집도 득 보고 이웃도 득을 본다. 돈 벌려고 빵집을 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니 결과로 돈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익만 생각하는 빵집은 그 반대라는 논리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가정의 모순이 있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기본으로 한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이웃이 좋은 재료, 적정 값으로 팔면 다른 집도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 청춘콘서트에서나 통할 수 있는 말이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실패와 더불어 자본주의 4.0이라든가 이타적 경제학이라든가 하는 새로운 경제이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동시에 기업은 이익창출의 목적 외 사회적 책임이 더 강조되고 있다. 심지어 경제의 기본을 이기심에다 이타심까지 넣는 이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쟁을 도외시하지는 않는다.

안 교수는 장점이 많은 개인이다. 끝없는 도전정신이나 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배포한 것이나 1천5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사회에 환원한 기부정신 등이 그렇다. 그러나 대통령은 다르다. 착한 기업인보다는 위대한 기업인이 더 훌륭하듯 착한 정치인보다는 위대한 정치인이 더 요구되는 자리다. 도덕군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일이 없다.

오피니언 idaegu.com 대구일보

안철수 불가론(2)



우당찰첨

서상호
주필

지난 5월에 안철수 불가론을 썼다. 안 교수 스스로도 '대통령은 정치인이 하는 자리'라며 정치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정치력 불비(不備)의 지도자는 안 된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도 진보와 보수 대신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 그럼 김일성 가족의 3대 세습은 종북좌파에게는 상식인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요지였었다.

그런데 안 교수는 최근 자서전 출판과 SBS의 힐링캠프에 출연하면서 사실상의 출마선언을 했다. 따라서 그때 못한 안 교수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많은 이유 중 두 가지만 말하고자 한다.

안 교수는 힐링캠프에서 "우리나라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버렸다"고 했다.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실패한 역사'라는 발언을 연상케 한다. 지금 세계경제는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은 아니다.

낭떠러지론은 선거공학?

우선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그렇다. 최근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우리나라 은행들을 골드만 삭스나 도이체방크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투자은행들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국가등급도 미국 독일 일본 영국 강대국 들은 깎였거나 깎일 예정으로 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향조정 했다.

안 교수 측이 이 정도의 사정을 몰랐을 리는 없다. 그러나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는 대선의 구도를 구 패러다임과 신 패러다임, 구 가치와 새로운 가치의 대결로 몰고 가려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구 패러다임이 이룩해 놓은 업적은 너무 훌륭하다. TV, 휴대폰 세계 1위 등 경제적 업적이나 한류 등 문화적 업적 등이다. 따라서 정책대결로는 불리하니, 자연 선거공학상 이미지 전략으로 '위기론' 즉 '낭떠러지론'으로 덮어씌우기 전략과 같은 '단어'를 구사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과거 '차떼기'한 마디가 선거를 거의 끝내 버린 것처럼 한 마디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방송국의 예고편 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 실패한 작전으로 평가한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아마추어라더니 정치프로보다 더 정치공학적이고 합리적이라 [illegible]이 자주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팩트(fact)하나 없이 이미지 관리만으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아무리 기성정치권이 국민에 실망을 줘 반(反)정치 풍토가 형성돼 있다 해도 그렇다.

TV에 나와 그는 백신개발에 몰두하다 군에 간다는 말을 가족에게 하지 않고 입대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역까지 바래다 줬다'고 했다. 안철수대세론도 '모른다'고 했다. 거짓말까지 동원한 지나친 이미지 관리다. 그리고 무책임하다.

잘못된 가정서 나온 결론은 허구다

또 하나는 경제인식에 대한 문제다. 기업의 경제활동 목적을 설명하면서 빵집 이야기를 했다. 좋은 재료에 적정 값으로 판다면 빵집도 득 보고 이웃도 득을 본다. 돈 벌려고 빵집을 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니 결과로 돈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익만 생각하는 빵집은 그 반대라는 논리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가정의 모순이 있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기본으로 한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이웃이 좋은 재료, 적정 값으로 팔면 다른 집도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 청춘콘서트에서나 통할 수 있는 말이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실패와 더불어 자본주의4.0이라든가 이타적 경제학이라든가 하는 새로운 경제이론의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동시에 기업은 이익창출의 목적 외 사회적 책임이 더 강조되고 있다. 심지어 경제의 기본을 이기심에다 이타심까지 넣는 이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쟁을 도외시하지는 않는다.

안 교수는 장점이 많은 개인이다. 끝없는 도전정신이나 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배포한 것이나 1천5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사회에 환원한 기부정신 등이 그렇다. 그러나 대통령은 다르다. 착한 기업인보다는 위대한 기업인이 더 훌륭하듯 착한 정치인보다는 위대한 정치인이 더 요구되는 자리다. 도덕군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일이 없다.

▲ 2012년 7월 30일(월) 대구일보 26면

안철수 불가론(3)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에는 안철수 교수가 10만클럽에서 강연한 동영상이 떴었다. "경제사범은 잡아오면 반쯤 죽여 놔야 한다. 왜 사형은 못 시키나"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지지자들이 띄운 동영상이었다. "이래도 안철수가 우유부단하냐"는 긍정적 반응이 주류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다가 7월말, 2003년도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1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을 때 '국가근간 산업을 부흥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탄로났다. 당연히 인터넷 안철수 동영상에서의 반응은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것이 검증이다.

이상은 모두가 아는 내용이다. 그래도 다시 거론한 것은 그것은 바로 "왜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검증기간은 길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신비주의로 한몫 보는 사람일수록 등장을 꺼린다. 제2의 '탄원서 사건'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증기간이 짧아 성공한 박원순 모델도 보았다. 하기야 공적인 검증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되는 미국서도 후보경선에 일찍 나서기를 꺼린다고 하니 무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도 미국은 1년 6개월에 걸친 검증기간이 있다. 선두를 달리던 케인이나 깅리치 후보의 낙마가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한 나라의 운명을 맡을 사람이므로 철저한 검증은 당연하다.

도덕적 출마시한은 지났다

이 논리로 보면 '국민의 생각을 들어보고 결정한다'는 구실로 검증기간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는 것은 나라의 지도자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오만이자 부도덕의 극치다. 안 교수가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해 '사람모이는 것은 좋은 일인데 무엇이 두려운가'하는 질문을 던졌다. 똑같은 논리로 되묻고 싶다. '무엇이 두려워 등장하지 못 하는가'.

절대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은 '안철수는 이제 시한을 넘긴 쉰 음식'이라고들 한다. 멘토인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대표도 '6월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안 교수는 정치도의상의 시한을 두 달이나 넘겼다. 따라서 이제 출마를 선언한다 해도 법률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지만 정치도의상으로는 '부도덕한 짓'이 된다. 안 교수가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안 교수가 입버릇처럼 '국민의 생각을 들어 보겠다'라고 하던 바로 그 국민의 생각이다.

아이젠하워와는 너무 다르다

안 교수 측 인사들은 연초부터 당선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성공사례를 말하곤 했다. 1952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아이크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으로부터 후보영입의 교섭을 받았다. 그런데 아이크는 정치경험이 없는 신인답지 않게 국민이 나설 때까지 기다렸다. 드디어 시민조직이 생겨 '나와라 아이젠하워운동'을 벌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1년 늦게 등장한 그는 그해 7월 공화당 전당대회서 후보가 됐고 11월 대선에서 당선됐다.

그런데 다른 것이 더 많다. 왜 그런지 몰라도, 기다려도 기다려도 '나와라 안철수운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자질론에서도 그렇다. 우선 유럽을 구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과 세계 백신 프로그램 업계서 50위안에도 못 드는 안 교수와는 비중면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지난해 안 교수는 "300명 정도 경영하면 3만명을 경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그 유명한 '수영장이나 태평양이나 같다'는 명언을 뱉어냈다.

500명 정도면 인간관계 리더십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287만 6천명을 거느리는 유럽진공연합

군사령관이라면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를 고려하는 종합적 개념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미 아이크는 대통령자격을 갖춘 것이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정치혐오증과 재벌혐오증이 너무 깊다. 정치 안 한다는 정치를 한 오세훈은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정치에 초연한 척한 박원순도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정치에 초연한 척하는 안철수는 인기면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는 자신이 싫어했던 바로 그 정치의 실패 때문이다.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단지 정치에 초연하고 사회환원에 공이 있는 '성인'이 정치 잘했다는 역사기록을 본 적이 없다. 특히 검증기간마저 줄이려는 꼼수를 쓰는 '성인'은 더욱 그러하다.

오피니언 idaegu.com 대구일보

안철수 불가론(3)



우당찰필

서상호
주필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에는 안철수 교수가 10만클럽에서 강연한 동영상이 떴었다. "경제사범은 잡아오면 반쯤 죽여 놔야 한다. 왜 사형은 못 시키나"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지지자들이 띄운 동영상이었다. "이래도 안철수가 우유부단하나"는 긍정적 반응이 주류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다가 7월말, 2003년도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1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을 때 '국가근간 산업을 부흥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탄로 났다. 당연히 인터넷 안철수 동영상에서의 반응은 '말따로, 행동따로'라는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것이 검증이다.

이상은 모두가 아는 내용이다. 그래도 다시 거론한 것은 그것은 바로 "왜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검증기간은 길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신비주의로 한류 보는 사람일수록 등장을 꺼린다. 제2의 '탄원서사건'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증기간이 짧아 성공한 박원순 모델도 보았다. 하기야 공적인 검증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되는 미국서도 후보경선에 일찍 나서기를 꺼린다고 하니 무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도 미국은 1년 6개월에 걸친 검증기간이 있다. 선두를 달리던 케인이나 깅리치 후보의 낙마가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한 나라의 운명을 말을 사람이므로 철저한 검증은 당연하다.

도덕적 출마시한은 지났다

이 논리로 보면 '국민의 생각을 들어보고 결정한다'는 구실로 검증기간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는 것은 나라의 지도자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오만이자 부도덕의 극치다. 안 교수가 광우병촛불시위에 대해 '사람모이는 것은 좋은 일인데 무엇이 두려운가'하는 질문을 던졌다. 똑같은 논리로 되묻고 싶다. '무엇이 두려워 등장하지 못 하는가'.

절대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은 '안철수는 이제 시한을 넘긴 쉰 음식'이라고들 한다. 멘토인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대표도 '6월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안 교수는 정치도의상의 시한을 두 달이나 넘겼다. 따라서 이제 출마를 선언한다 해도 법률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지만 정치도의상으로는 '부도덕한 짓'이 된다. 안 교수가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안 교수가 입버릇처럼 '국민의 생각을 들어 보겠다.'라고 하던 바로 그 국민의 생각이다.

아이젠하워와는 너무 다르다

안 교수 측 인사들은 연초부터 당선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성공사례를 말하곤 했다. 1952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아이크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으로부터 후보영입의 교섭을 받았다. 그런데 아이크는 정치경험이 없는 신인답지 않게 국민이 나설 때까지 기다렸다. 드디어 시민조직이 생겨 '나와라 아이젠하워운동'을 벌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1년 늦게 등장한 그는 그해 7월 공화당 전당대회서 후보가 됐고 11월 대선에서 당선됐다.

그런데 다른 것이 더 많다. 왜 그런지 몰라도, 기다려도 기다려도 '나와라 안철수운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자질론에서도 그렇다. 우선 유럽을 구한 제2차세계대전의 영웅과 세계백신프로그램 업계서 50위안에도 못 드는 안 교수와는 비종면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지난해 안 교수는 "300명 정도 경영하면 3만명을 경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그 유명한 '수영장이나 태평양이나 같다'는 명언을 뱉어냈다.

500명 정도면 인간관계 리더십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287만6천명을 거느리는 유럽진공연합군사령관이라면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를 고려하는 종합적 개념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미 아이크는 대통령자격을 갖춘 것이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정치혐오증과 재벌혐오증이 너무 깊다. 정치 안 한다는 정치를 한 오세훈은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정치에 초연한 척한 박원순도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정치에 초연한 척하는 안철수는 인기면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는 자신이 싫어했던 바로 그 정치의 실패 때문이다.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단지 정치에 초연하고 사회환원에 공이 있는 '성인'이 정치 잘했다는 역사기록을 본 적이 없다. 특히 검증기간마저 줄이려는 꼼수를 쓰는 '성인'은 더욱 그러하다.

▲ 2012년 8월 6일(월) 대구일보 26면

안철수의 '위대한' 이미지 조작

우리가 열광하고 있는 안철수의 상은 허상인가? 실상인가? 시중에는 한국적 메시아라는 주장과 뻥이 좀 심한 허풍쟁이라는 주장이 맞서있다. 이를 반영하듯 책방에는 안 교수에 대해 '허상이다'는 책과 '실상이다'는 책이 고루 널려있다.

실상론은 다 알기에 허상론에만 초점을 맞춰보자. 무릎팍도사는 물론 초중고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 1991년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느라 새벽까지 일하다 군에 입대하여 "내무반에 들어가서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온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인은 "기차 태워 보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서 다른 말을 했다. 결국, 안 교수는 일에 미친 순수한 연구가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게다가 수법도 교묘했다. '넛지효과(nudge effect)'라는 것이 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소변바로보기 팻말보다는 파리를 그려놓은 것이 낫다'는 그런 효과다. 즉 대놓고 말하기보다는 에둘러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말이다.

즉 '나는 순수한 의미의 일중독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뉴턴이 연구에 몰두하다보니 달걀 대신 시계를 끓는 냄비에 넣었다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야기로 풀었다. 그래서 전 국민은 감동했다. 동시에 순수, 정직, 성실, 희생 등의 이미지를 심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결국은 뻥으로 드러나 이미지는 다소 훼손됐다.

들통나는 위선들

룸살롱 소동도 마찬가지다. 무릎팍도사 출연에서 그는 "예? 노래방? 그런 게 단란한 거예요? 라며 단란주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말해 '술집에 안 간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했다. 넛지효과가 있어 그는 일만 아는 착한 기업인, 술집에도 안가는 깨끗한 기업인이라는 이미지를 심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말이 문제였다. 신동아 9월호에 구체적인 술집 위치가 나오고 같이 간 사람의 윤곽이 어슴푸레 알 수 있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하다가 문제가 심각해지자 안 교수는 보도자료를 내어 "술집에 갔어도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말 실망이다. 문제는 '술을 마셨느냐 아니냐' 혹은 '술집에 갔느냐 안 갔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거짓말을 하느냐'에 있었다. 슬쩍 핵심을 술을 마셨느냐로 돌렸다. 국민은 바보인 줄 아나보다. 불통(不通)을 넘어 그가 말하는 낡은 정치스타일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최근 아무 근거도 없이 거짓을 만들어 내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것이 낡은 시대 낡은 방식"이라고 일갈했다. 이런 언론 탓은 대체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하는 말들이다. 그런데 그는 벌써 자신에 불리한 보도는 사실왜곡이라며 몰아붙이고 있다. '허위에 대해선 분명하게 대응하고 조치하겠다'는 말까지도 했다. 이러한 안 교수 방식이야말로 '낡은 시대 낡은 방식'이다.

그 역시 낡은 정치가일 뿐

허위 사실이면 허위임을 밝히면 되는 일이다. 그래서 검증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대통령의 자리인데 양심상 어떻게 3달 검증도 받으려 하지 않는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그의 말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미지조작에 대한 말썽은 도청에 나오고 있다. 구 민주당출신 황장수씨가 쓴 '안철수, 만들어진 신화'라는 책을 보면 그의 위선과 뻥은 가히 수준급이다. 바이러스 백신 무료 배포와 당시의 경영환경, 미국 대기업인 맥아피의 1천만 달러 인수제의의 진위여부, 직원에 대한 주식 무장증자의 뻥튀기기 문제 등등 끝이 없다.

이제 '안 교수가 말하면 신화가 되는 시기'는 지났다. 안 교수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안교수는 성인이 아니다. 실수도 한다"고 했다. 그동

안 성인인척 하다가 한 가지씩 베일이 벗겨지니 이제 와서 성인이 아니라고 한다. 그동안 국민이 지지한 것은 낡은 정치를 바꿀 '성인경지'에 이른 새로운 사람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통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대선후보로는 더 이상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다.

흔히들 구악이 물러나고 나면 그 자리에는 선(善)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신악이 들어선다고 한다. 그동안 안 교수가 책을 통해 보여준 그의 새정치는 구정치의 연장이었을 뿐이다. 정치혐오증에 걸린 국민을 들먹이며 등장을 미루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낡은 방식이며 지식인으로서는 책임회피이자 얍삽한 행위이다. 정말 새스타일리스트의 옷을 입은 구스타일리스트인가.

오피니언

idaegu.com 대구일보

안철수의 '위대한' 이미지 조작



우당칼럼

서상호
주필

우리가 열광하고 있는 안철수의 상은 허상인가? 실상인가? 시중에는 한국적 메시아라는 주장과 뻥이 좀 심한 허풍쟁이라는 주장이 맞서있다. 이를 반영하듯 책방에는 안 교수에 대해 '허상이다'는 책과 '실상이다'는 책이 고루 널려있다.

실상론은 다 알기에 허상론에만 초점을 맞춰보자. 루블팎도사는 물론 초중고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 1991년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느라 새벽까지 일하다 군에 입대하여 "내무반에 들어가서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온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인은 "기차 태워 보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서 다른 말을 했다. 결국, 안 교수는 일에 미친 순수한 연구가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게다가 수법도 교묘했다. '넛지효과(nudge effect)'라는 것이 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소변바로보기 팻말보다는 파리를 그려놓은 것이 낫다'는 그런 효과다. 즉 대놓고 말하기보다는 에둘러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말이다.

즉 '나는 순수한 의미의 일중독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뉴턴이 연구에 몰두하다보니 달걀 대신 시계를 끓는 냄비에 넣었다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야기로 풀었다. 그래서 전 국민은 감동했다. 동시에 순수, 정직, 성실, 희생 등의 이미지를 심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결국은 뻥으로 드러나 이미지는 다소 훼손됐다.

들통나는 위선들

물샐틈소동도 마찬가지다. 루블팎도사 출연에서 그는 "예? 노래방? 그런 게 단란한 거예요?라며 단란주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말해 '술집에 안 간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했다. 넛지효과가 있어 그는 일반 아는 착한 기업인, 술집에도 안가는 깨끗한 기업인이라는 이미지를 심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말이 문제였다. 신동아 9월호에 구체적인 술집 위치가 나오고 같이 간 사람의 윤곽이 어슴푸레 알 수 있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하다가 문제가 심각해지자 안 교수는 보도자료를 내어 "술집에 갔어도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말 실망이다. 문제는 '술을 마셨느냐 아니냐' 혹은'술집에 갔느냐 안 갔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거짓말을 하느냐'에 있었다. 슬쩍 핵심을 술을 마셨느냐로 돌렸다. 국민은 바보인 줄 아나 보다. 불통(不通)을 넘어 그가 말하는 낡은 정치스타일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최근 아무 근거도 없이 거짓을 만들어 내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것이 낡은 시대 낡은 방식"이라고 일갈했다. 이런 언론 탓은 대체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하는 말들이다. 그런데 그는 벌써 자신에 불리한 보도는 사실왜곡이라며 몰아붙이고 있다. '허위에 대해선 분명하게 대응하고 조치하겠다'는 말까지도 했다. 이러한 안 교수 방식이야말로 '낡은 시대 낡은 방식'이다.

그 역시 낡은 정치가일 뿐

허위 사실이면 허위임을 밝히면 되는 일이다. 그래서 검증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대통령의 자리인데 양심상 어떻게 3달 검증도 받으려 하지 않는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기위해 노력해 왔다'는 그의 말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미지조작에 대한 말썽은 도처에 나오고 있다. 구 민주당출신 황장수씨가 쓴 '안철수, 만들어진 신화'라는 책을 보면 그의 위선과 뻥은 가히 수준급이다. 바이러스백신 무료배포와 당시의 경영환경, 미국대기업인 맥아피의 1천만달러 인수제의의 진위여부, 직원에 대한 주식무장증자의 뻥튀기기 문제 등등 끝이 없다.

이제 '안 교수가 말하면 신화가 되는 시기'는 지났다. 안 교수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안교수는 성인이 아니다. 실수도 한다"고 했다. 그동안 성인인척 하다가 한 가지씩 베일이 벗겨지니 이제 와서 성인이 아니라고 한다. 그동안 국민이 지지한 것은 낡은 정치를 바꿀 '성인경지'에 이른 새로운 사람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통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대선후보로는 더 이상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다.

흔히들 구악이 물러나고 나면 그 자리에는 선(善)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신악이 들어선다고 한다. 그동안 안 교수가 책을 통해 보여준 그의 새정치는 구정치의 연장이었을 뿐이다. 정치혐오증에 걸린 국민을 들먹이며 등장을 미루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낡은 방식이며 지식인으로서는 책임회피이자 얍삽한 행위이다. 정말 새스타일리스트의 옷을 입은 구스타일리스트인가.

▲ 2012년 9월 3일(월) 대구일보 26면

안철수 검증은 네거티브일 수 없다

"안철수가 왜 대통령 후보로 올랐는가?" 다아는 질문이다. 구시대적 정치에 대한 환멸과 신시대정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닌가. 특히 그는 구시대정치의 타락한 정치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성인(聖人)정치인일 것만 같은 이미지, 탐욕의 이미지인 구시대 기업인과는 다른 신시대의 착한 기업인 이미지 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따라서 당연히 그가 진짜 성인인지 아닌지, 착한 기업인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은 필연의 수순이다. 그런데 그동안 안철수 교수측의 대응을 보면 정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구상과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가령 며칠 전 안 교수 측근인 김효석 전의원은 "정치권이 자꾸 성인군자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신상털기를 한다"고 비난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동안 성인군자인 것처럼 놀아 대통령 후보반열에 올랐는데 이제 검증이 시작되니 '보통사람'이라니 말이다. 특히 이미지만 있을 뿐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후보이기에 더욱 그에 대한 신상털기는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국민과 반대당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이를 피하려 하는 안 교수 측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도전이고 헌법정신 위배다.

성인인지 아닌지 확인 민주선거 기본

지난 6일 안 교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의 안 교수에 대한 협박과 불출마종용을 폭로했다. 물론 정 전 공보위원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정치공학적 냄새가 난다는 데 있다. 조직생활을 하고 있는, 검사출신의 금 변호사가 선거캠프의 공보위원 정도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사퇴를 운운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모른 척했다. 너무 구태의연하고 노회한 것 아닌가. 또 친구개념에서는 안철수 상식 다르고, 일반인 상식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됐다. 그는 또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언론기관이 적법한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보도하고…'하면서 거대권력의 개입을 주장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오해다. 다만 경쟁자의 제보나 권력기관에 대한 취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까지 권력의 개입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안 교수측이 음모론으로 제기한 상당 부분은 권력기관이 아니라도 취재가 가능하다. 가령 '딱지매입' 문제는 부동산등기부, 포스코이사 재직시 '거수기 노릇'이라는 문제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안 역시 법률가라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변호사는 모른 척했다. 신공작정치 아닌가. 그동안 언론사들도 거짓 신화창조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가령 안 교수를 성인군자로 만든 주식무료배분이나 바이러스백신 무료분배는 어이없는 과장이고 맥아피사의 1천만달러 매수조건 거부 등은 자가발전일 뿐이라는 사실 등을 확인도 않고 보도했다.

실망 큰 안철수식 정치모델

안 교수는 2000년에 주식무상배분이 있었다. 무릎팍도사 출연은 2009년이다. 비록 10년의 간격이 있지만 무상배분행위가 착한 기업인이었기 때문인지, 직원을 붙들려는 방편이었는지는 단박에 알 수 있다. 네이버, 구글, KINDS를 통하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안철수식 정치'를 요약해 보면 언론에 직접은 나타나지 않는 안개정치, 대변인이나 측근변호사만 나서는 수렴정치, 박원순 효과를 보고는 가능한 한 출마선언을 미루는 승리지상주의정치, 그리고 비판을 용납하지 못하는 신권위주의 정치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안철수정치'는 국민이 염원해온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바꿀 개혁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판을 더 악화시킬 '악마의 모델'이다. 왜냐하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권력욕뿐이고, 개혁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인지심리학 등을 이용한 보다 과학적이고 고도화되어 있고 그래서 악랄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idaegu.com 대구일보

안철수 검증은 네거티브일 수 없다



우당칼럼

서상호
주필

"안철수가 왜 대통령 후보로 올랐는가?" 다 아는 질문이다. 구시대적 정치에 대한 환멸과 신시대정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닌가. 특히 그는 구시대정치의 타락한 정치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성인(聖人)정치인일 것만 같은 이미지, 탐욕의 이미지인 구시대 기업인과는 다른 신시대의 착한 기업인 이미지 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따라서 당연히 그가 진짜성인인지 아닌지, 착한 기업인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은 필연의 수순이다. 그런데 그동안 안철수 교수측의 대응을 보면 정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구상과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가령 며칠 전 안 교수 측근인 김효석 전의원은 "정치권이 자꾸 성인군자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신상털기를 한다"고 비난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동안 성인군자인처럼 놀아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랐는데 이제 검증이 시작되니 '보통사람'이라니 말이다. 특히 이미지만 있을 뿐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후보이기에 더욱 그에 대한 신상털기는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국민과 반대당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이를 피하려 하는 안 교수측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도전이고 헌법정신 위배다.

성인인지 아닌지 확인 민주선거 기본

지난 6일 안 교수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의 안 교수에 대한 협박과 불출마종용을 폭로했다. 물론 정 전 공보위원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정치공학적 냄새가 난다는 데 있다. 조직생활을 하고 있는, 검사출신의 금 변호사가 선거캠프의 공보위원 정도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사퇴를 운운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모른 척했다. 너무 구태의연하고 노회한 것 아닌가. 또 친구개념에서는 안철수 상식 다르고, 일반인 상식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됐다. 그는 또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언론기관이 적법한 방법으로는 과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보도하고…'하면서 거대권력의 개입을 주장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오해다. 다만 경쟁자의 제보나 권력기관에 대한 취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까지 권력의 개입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안 교수측이 음모론으로 제기한 상당 부분은 권력기관이 아니라도 취재가 가능하다. 가령 '딱지매입' 문제는 부동산등기부, 포스코이사 재직시 '거수기 노릇'이라는 문제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안 역시 법률가라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변호사는 모른 척했다. 신공작정치 아닌가. 그동안 언론사들도 거짓 신화창조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가령 안 교수를 성인군자로 만든 주식무료배분이나 바이러스백신 무료분배는 어이없는 과장이고 맥아피사의 1천만달러 매수조건 거부 등은 자가발전일 뿐이라는 사실 등을 확인도 않고 보도했다.

실망 큰 안철수식 정치모델

안 교수는 2000년에 주식무상배분이 있었다. 무릎팍도사 출연은 2009년이다. 비록 10년의 간격이 있지만 무상배분행위가 착한 기업인이었기 때문인지, 직원을 불들려는 방편이었는지는 단박에 알 수 있다. 네이버, 구글, KINDS를 통하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안철수식 정치'를 요약해 보면 언론에 직접은 나타나지 않는 안개정치, 대변인이나 측근변호사만 나서는 수렴정치, 박원순효과를 보고는 가능한 한 출마선언을 미루는 승리지상주의정치, 그리고 비판을 용납하지 못하는 신권위주의정치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안철수정치'는 국민이 염원해온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바꿀 개혁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판을 더 악화시킬 '악마의 모델'이다. 왜냐하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권력욕뿐이고, 개혁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실장은 인지심리학 등을 이용한 보다 과학적이고 고도화되어 있고 그래서 악랄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최근 R&R과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에서 '안철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가식적'이라는 응답이 나왔을까. 여든 야든 선거에서는 모든 것을 밝혀야 하고 또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산다. 공정하고 진실 된 정보라야 유권자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짓과 날조가 아니라면 검증이 네거티브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밀려나서는 안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후퇴다.

▲ 2012년 9월 10일(월) 대구일보 26면

의 결 번 호	2012대선23(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심의대상기사	조선일보 2012년 10월 10일자 A33면 「불굴혼 박정희」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다. 이 같은 광고는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3조(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高山高正一 · 實錄大河小說 · 不屈魂朴正熙

불굴혼 박정희

그는 조국명운을 성찰, 잠 못 이루며 원대한 국가중흥 마스터플랜을 세운다. 의식혁명→경제발전→조국근대화→핵개발→민주주의→조국통일 우선순위 정하고 "강렬한 공적열망! 치열한 문제의식! 청렴헌신적 자세! 현장장악 끊임없는 독력! 이것이 세계가 놀라고 찬송하는 박정희 STATECRAFT (국가통치능력)다"

김영삼 · 김대중은 박정희의 철학 · 비전 · 국가관리 능력은 물론, 도덕 · 윤리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자식들은 불법 축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가 목표들을 흐려놓았으며, 정치적 편의에 기대 자신들의 개인 · 가족적인 목표와 이익에 교묘하게 관련된 대규모 부정자금을 조달했고, 이는 결국 박정희 통치시기에 함양되었던 국민적 사회 · 제도 · 도덕적 근간을 약화, 와해시키는 데 기여했다. 여기에 대중들의 변덕스러운 조급성과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정치인들과 방만, 무책임한 대중매체들이 가세, 도덕적 해이, 사회기강 문란을 더욱 부추겼다.

조이제/시카고대학 경제학교수

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치우려 하지 않는 겹겹이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오염된 지역 전체를 삽으로 퍼내듯이 모든 사회악을 뿌리 뽑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헌정제도를 운영하면서 과거의 행동을 겸허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비능률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았을까? 때대로 자유를 방종과 혼돈하지 않았을까?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독재라는 이름으로 비난하지 않았을까? 파쟁과 갈등을 민주주의로 착각하지 않았을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란 탄탄한 경제적 바탕이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 경제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정치나 문화보다 중요하다. 민족우선주의 정책과 경제 제일주의 정책을 우리 사회의 새로운 리더십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제일주의, 건설우선주의 그리고 노동 신성시 등의 가치는 더욱 고양되고 북돋아져야 한다. 혁명의 기본적 요소는 한국의 산업혁명을 단행하는 것이었다. 나의 주 관심은 경제혁명이었다. 인간은 우선 먹고, 숨쉬고 나서 비로소 정치, 사회,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나를 민족의 제단에 바친다.

박 정 희

초인의 탄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세상엔 초인적 의지와 천재적 역량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세에 태어나 인고의 세월을 떨치고 겨레를 가난에서 구해낸 박정희는 질곡의 5천년 '우리 역사가 낳은 지도자'입니다. 그가 작사작곡한 '새마을 노래'는 국민들의 신기(神氣)를 불러일으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로써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주의와 선진대국의 발판을 다진 그에게 친일과 독재의 올가미를 씌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명목으로 역사를 거꾸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 등 화려한 수식어를 내세우며 나라를 지난날 맹목과 가난의 질곡으로 다시 몰아넣으려 합니다.

혁명 그리고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

4·19로 집권한 민주당은 이승만시대보다 더 무능 부패했습니다. 무너지는 법질서 속에서 시민들은 '배고픈 자유'의 허망함에 절망했습니다. 6·25를 겪은 국민들은 김일성을 따르자는 공산선동에 "군은 나서지 않고 뭣 하느냐" 나무랄 정도였습니다. 박정희와 젊은 장교단은 이 국민여망과 시대정신에 응한 것입니다. 서구와 역사적 문화적 가치관이 다른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려면 먼저 경제발전을 통해 국민생활과 의식구조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경제성장 없는, 산업화 없는 민주화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2차 대전 뒤 독립한 나라 가운데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는 철저한 군인정신에서 화랑정신을 부활시킨 박정희가 민족주의를 기초로 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제시하여, 압축성장의 신화를 이뤄낸 덕분입니다.

에르하르트 서독수상의 눈물!

한국경제를 일으키자면 포항제철 울산공업단지를 세우고, 배(조선)도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 IT산업도 육성해야 하는데, 우리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이에 박정희는 온갖 반대저항에도 한일회담 대일청구권 문제를 관철, 일본으로부터 8억 달러를 받아냈습니다. 그때 우리에겐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서독에서 한국 간호사들은 시체를 닦고, 광부들은 지하 4,000m 지열 속에서 석탄을 캐내야 했습니다. 이를 위문하고 차관을 구하러 서독을 방문한 박정희는 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는 울음이 복받쳐 말을 더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과 간호사, 광부들의 눈물로 강당 안은 곧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이 광경을 TV로 지켜보던 에르하르트 서독수상이 눈시울을 붉히며 "아! 저런 민족, 저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라면 우리가 차관을 줬다가 돈을 떼여도 좋다" 외쳤다 합니다.

경제혁명!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건설!

1970년 농가의 80%는 초가지붕이었고, 전기 들어오는 집은 겨우 20%였습니다. 박정희가

'근면, 자조, 협동'을 내세워 이끈 새마을운동은 이런 농촌의 인프라를 다지고, 농민의식개혁에 성공, 농가소득을 월등히 증가시켰습니다. 1970년 7월 7일에는 서울~부산간 고속도로가 착공 2년 5개월 만에 개통됐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역사로 총공사비는 국가예산의 23.6%에 이르렀으나, ㎞당 약 1억 원으로 전세계 고속도로 건설사상 유례없는 싼 가격이었습니다. 기차로 15시간 걸리던 것이 4시간으로 줄었고, 자동차산업이 발전,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경제발전 기폭제가 됐습니다.

양날의 칼 중화학공업 핵개발 도전!

시월유신이 공포된 1972년, 중국·북한·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민탄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부르짖던 케네디 대통령과 킹 목사가 한낮에 암살당하고, 반민주적 반인권적 인종차별이 버젓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런 세계 상황 속에서 박정희는 경제가 일정 수준에 오르자 마침내 자신감을 갖고 유신을 단행, 중화학공업과 핵개발에 들어갑니다.(중략)

케말파샤 나세르 박정희 세계 3대 혁명!

5·16은 쿠데타로 시작되었지만, 혁명으로 종결되었습니다. 5·16은 숙명적인 절대빈곤을 끝내고 민족역량 중산층을 두껍게 키웠습니다. 이 중산층은 한국 민주주의 든든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1922년 터키 케말파샤, 1952년 이집트 나세르, 1961년 대한민국 박정희, 역사가들은 이들을 성공한 근대 3대혁명가로 꼽습니다. 이들에게 쿠데타는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었습니다. 근대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분출한 5·16이 없었다면 피터 드러커가 '20세기 인류사의 기적'이라 격찬한 한국의 국가개조와 경제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정희를 벤치마킹한 덩샤오핑!

세계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박정희의 국가통치능력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박정희의 외교·경제정책을 본받아 실사구시 개방전략을 구사, 미국과 협조적 관계를 유지, 중국을 다국적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덩사오핑은 민주화를 열망하며 천안문광장에 모인 100만 학생시민에게 탱크를 동원, 발포해 2천여 명이 죽고, 1만 2천 명이 다치는 참사를 빚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그를 천하대란에 빠진 나라를 구한 은인으로 추앙합니다. 푸틴은 공산체제를 개방한 러시아가 경제난에 빠지자 박정희 경제정책 관련 서적들을 연구, 경제를 살려낸 공적으로 대통령에 재선되었습니다. 박정희 정책을 모델삼은 리콴유는 국민의 인권·언론을 통제, 길거리에 휴지 한 장 버려도 곤장 20대, 마약소지자는 사형, 무시무시한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를 아시아 최고 부국으로 만들었기에 국민은 그를 독재자라고 비난하지 않으며 나라경제 살린 영웅으로 우러릅니다.

민족의 제단에 몸을 바치다!

민족시인 이은상이 말했습니다. "박정희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합해놓은 인물이다. 세종은 한글창제를 비롯 나라 안팎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나 백성들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순신은 적과 싸워 이기고 목숨 바쳐 나라를 구했지만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백번 싸워 백번 다 이김이 최상은 아니다.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박정희는 김일성과 싸우지 않고 이긴 사람이다." 박정희! 그라고 어찌 인간적 결함과 실책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가 백척간두 휘몰아치는 광풍 앞에 결연히 맞서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신념으로 운명을 극복해 이 나라 이 민족의 제단에 몸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의 마음에 신바람을 불어넣은 「불굴혼 박정희」를 찾아갑니다.

위기에 강한 박근혜! 목숨걸고 대한민국 구할 박근혜! 나라 걱정하다 27살에 운명적 정치를 배우기 시작한 박근혜! 정치판 확 바꾸고! 재벌판 확 다잡고! 북한판 확 깨친다!

1978년(27세), "건강해야 조깅도 하죠(김일성특공대33명청와대습격)" 부인 로잘린에게 근혜말 전해 들은 카터 대통령 감동하여 철군유보. 1979년(28세), 아버지 암살당하자 "휴전선은요?" 2002년 북한 김정일 만나 의연하게 적진탐색. 2004년 노무현 탄핵폭풍 때 "천막당사로 튀시다!" 2012년 추락하는 새누리당 비대위로 살려내다!

선동정치는 나라 망치고 자신도 망친다!
부산저축은행 곪아갈 때! 바다이야기 서민 울릴 때! '그 놈의 헌법' 대통령 자살할 때! 무얼 했는가?
청춘콘서트! 무릎팍도사! 힐링캠프! 급조 동지로 정치 경제 북한 개혁할 수 있을까?
정몽준은 정주영 대업을 도운 박근혜 대의를 잊고 방관만 한단 말인가?
이재오는 이명박 탄생을 도운 박근혜 대의를 잊고 방관만 한단 말인가?
새누리당 캠프장들이여 임명직 포기 선언하라! 우국충정 있다면…!
지만·근영은 나라 사랑한 아버지 어머니를 가슴에 안고 5년 유학 떠나라!

박정희는 나라위해 목숨바쳤다! 대한민국 위기인데 무엇을 못하랴!


민주와란 산업화가 곱나이란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자유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된다. 이를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망이 되지 않는다.
앨런 토플러/미래학자


그의 인권탄압이나 독재 정권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국력을 키웠다. 그는 다른 후진국 지도자와는 달리 결코 부패하지 않았다.
브루스 커밍스/커넬대교수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의 목표는 자립경제력을 갖춘 현대국가의 건설이었다. 그는 성공했고 세계가 놀랐다. 박정희에 관한 자료 모두 수집하라!
푸틴/러시아대통령


공동성은 아시아 네 마리 용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의 경제발전, 사회질서, 사회 정세도 반드시 따라붙어야 한다. 특히 박정희를 주목하라!
당샤오핑/중국정치가


러시아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잘 알고 있음인가 박정희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두번이 증명되었다.
키신저/미 전국무장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이룩한 성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박정희의 위대한 지도력으로 경제발전 이룩한 대한민국이다.
피터 드러커/경영학자



양장본 370쪽 총6권 각권 15,000원
동서문화사 (02) 546-0333 www.DongSuhBook.com

高山高正一·實錄大河小說·不屈魂朴正熙

불굴혼 박정희

그는 조국영운을 성찰, 잠못이루며 원대한 국가중흥 마스터플랜을 세운다.
의식혁명-경제발전-조국근대화-핵개발-민주주의-조국통일 우선순위 정하고
"강렬한 공적열망/ 치열한 문제의식/ 청렴한신적 자세/ 현장장악 끊임없는 독려/
이것이 세계가 놀라고 칭송하는 박정희 STATECRAFT(국가통치능력)다"

김영삼·김대중은 박정희의 철학·비전·국가관리 능력은 물론, 도덕·윤리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자식들은 불법축재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가 목표를 흐려놓았으며, 정치적 편의에 기대 자신들의 개인·가족적인 목표와 이익에 교묘하게 관련된 대규모 부정자금을 조달했고, 이는 결국 박정희 통치시기에 함양되었던 국민적 사회·제도·도덕적 근간을 와해, 와해시키는 데 기여했다. 여기에 대중들의 변덕스러운 조급심과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정치인들과 방만, 부패임한 대중매체들이 가세, 도덕적 해이, 사회기강 문란을 더욱 부추겼다. 조이제/시카고대학 경제학교수

나는 사람들이 한번도 지우려 하지 않는 검경이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오염된 지역 전체를 삽으로 파내듯이 모든 사회악을 뿌리 뽑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흥수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현존제도를 운영하면서 과거의 폐동을 경험의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비능률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았을까? 때때로 자유를 방종과 혼돈하지 않았을까?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독재라는 이름으로 비난하지 않았을까? 파괴과 갈등을 민주주의로 착각하지 않았을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란 탄탄한 경제적 바탕이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 경제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정치나 문화보다 중요하다. 민족우선주의 경제과 경제 제일주의 정책을 우리 사회의 새로운 리더십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제일주의, 건설우선주의 그리고 노동 신성시 등의 가치는 더욱 고양되고 북돋아져야 한다. 혁명의 기본적 요소는 한국의 산업혁명을 단행하는 것이었다. 나의 주 관심은 경제혁명이었다. 인간은 우선 먹고, 숨쉬고 나서 비로소 정치, 사회,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나를 민족의 제단에 바친다. 박정희

초인의 탄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세상엔 초인적 의지와 천재적 역량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세에 태어나 인고의 세월을 헤치고 개혁을 가난에서 구해낸 박정희는 질곡의 5천 년 '우리 역사가 낳은 지도자'입니다. 그가 작사자곡한 '새마을노래'는 국민들의 신기(神氣)를 불러일으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로써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랬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주의의 선진대국의 발판을 다진 그에게 진심과 독려의 울기더를 좌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들은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명목으로 역사를 거꾸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심층정부 등 좌파연수식어를 내세우며 나라를 지난날 명목과 가난의 질곡으로 다시 끌어넣으려 합니다.

혁명 그리고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

4·19로 집권한 민주당은 이승만시대보다 더 무능 부패했습니다. 무너지는 빌딩서 속에서 시민들은 '헤고픈 자유의 허망함에 절망했습니다. 6·25를 겪은 국민들은 김일성을 따르자는 공산선동에 "굳은 나라지 않고 못 하느냐" 나무랄 정도였습니다. 박정희와 젊은 장교단은 이 국민여망과 시대정신에 응한 것입니다. 서구와 역사적 문화적 가치관이 다른 한국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려면 먼저 경제발전을 통해 국민생활과 의식구조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경제성장 없는, 산업화 없는 민주화는 캠대기에 불과합니다. 2차대전 뒤 독립한 나라 가운데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는 철저한 군인정신에서 희생정신을 부활시킨 박정희가 민족주의를 기초로 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제시하여, 압축성장의 신화를 이뤄낸 덕분입니다.

에르하르트 서독수상의 눈물!

한국경제를 일으키자면 포항제철 울산공업단지를 세우고, 베트남전도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 IT산업도 육성해야 하는데, 우리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이에 박정희는 온갖 반대저항에도 한일회담 대일청구권 문제를 관철, 일본으로부터 8억달러를 받아냈습니다. 그때 우리에겐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서독에서 한국 간호사를 은시를 모아, 광부들은 지하 4,000m 지열 속에서 석탄을 캐내야 했습니다. 이를 위문하고 차관을 구하러 서독을 방문한 박정희는, 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는 울음이 복받쳐 말을 더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과 간호사, 광부들의 눈물로 강당 안은 곧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이 광경을 TV로 지켜보던 에르하르트 서독수상이 눈시울을 붉히며 "아! 저런 민족, 저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라면 우리가 차관을 줬다가 돈을 떼어도 좋다" 외쳤다 합니다.

경제혁명!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건설!

1970년 농가의 80%는 초가지붕이었고, 전기 들어오는 집은 겨우 20%였습니다. 박정희가 '근면, 자조, 협동'을 내세워 이른 새마을운동을 이뤄 놀랜의 언프라를 다지고, 농민의식개혁에 성공, 농가소득을 월등히 증가시켰습니다. 1970년 7월 7일에는 서울~부산간 고속도로가 착공 2년 5개월 만에 개통됐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역사로 총공사비는 국가예산의 23.6%에 이르렀으나, km당 약 1억 원으로 전세계 고속도로 건설사상 유례 없는 한 가격이었습니다. 기차로 15시간 걸리던 것이 4시간으로 줄었고, 자동차산업의 발전,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경제발전 기폭제가 됐습니다.

양날의 칼 중화학공업 핵개발 도전!

시멘유산이 공포된 1972년, 중국·북한·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민탄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간권 존엄과 평등을 부르짖던 케네디 대통령과 킹 목사가 한낮에 암살당하고, 반인주적 반인권적 인종차별이 버젓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런 세계 상황 속에서 박정희는 경제가 일정 수준에 오르자 대한내 자신감을 갖고 유신을 단행, 중화학공업과 핵개발에 들어갑니다. 그가 유신과 중화학공업이라는 '양날의 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경제의 기적도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경제철학 밑바탕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시장을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부정하지도 않고 시장의 이점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둘째, 놀라운 수완으로 기업가를 통제했을 나다. 그 편면한 이병철과 배짱 좋은 정주영도 자신 없어 못하겠다는 것을 박정희가 육박질러 만들게 한 게 세계제일 상성전자 반도체·현대조선·현대자동차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돈 벌어들인 대통령

경제과 과학에 뛰어났던 박정희는 기업인과 과학기술자들을 후원, 한국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대통령이지만, 한결같이 청렴했습니다. 청와대 화장실 양변기 물통엔 벽돌을 넣었고 예복엔 대신 부태를 썼습니다. 그가 떠난 지금 한국정치는 민주주의를 구호로만 외치는 함량부족 정치인, 이익집단 군중선동, 포퓰리즘 등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유신시절 재야그룹 중심인물 백기완은 이런 말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박정희는 우리 같은 운동권들을 못살게 했지만, 당장 민주화를 부르짖는 정치꾼들은 국민 3천만 명을 못살게 했다."

케말파샤 나세르 박정희 세계3대혁명!

5·16은 쿠데타로 시작되었지만, 혁명으로 종결되습니다. 5·16은 숙명적인 절대빈곤을 끝내고 민족여랑 중산층을 두껍게 키웠습니다. 이 중산층은 한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1922년 터키 케말파샤, 1952년 이집트 나세르, 1961년 대한민국 박정희. 역사가들은 이들을 성공한 근대 3대혁명가로 꼽습니다. 이들에게 쿠데타는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었습니다. 근대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분출한 5·16이 없었다면 피터 드러커가 "20세기 인류사의 기적"이라 격찬한 한국의 국가개조와 경제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정희를 변치마킹한 덩샤오핑!

세계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박정희의 국가통치능력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박정희의 외교·경제정책을 본받아 실사구시 개방전략을 구사, 미국과 협조적 관계를 유지, 중국을 다국적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덩샤오핑은 민주화를 열망하여 천안문광장에 모인 100만 학생시민에게 탱크를 동원, 발포해 2천여 명이 죽고, 1만 2천 명이 다치는 참사를 빚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그를 천하대란에 빠진 나라를 구한 은인으로 추앙합니다. 루틴은 공산체제를 개방한 러시아가 경제난에 빠지자 박정희 경제정책 관련 서적들을 연구, 경제를 살려낸 공적으로 대통령에 재선되었습니다. 박정희 정책을 모델삼은 리콴유는 국민의 인권·언론을 통제, 집기대에 휘지 한 장 바래도 곤장 20대, 마약소지자는 사형, 무시무시한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를 아시아 최고 부국으로 만들었기에 국민은 그를 독재자라고 비난하지 않으며 나라경제 살린 영웅으로 우러릅니다.

민족의 제단에 몸을 바치다!

민족시인 이은상이 말했습니다. "박정희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합해놓은 인물이다. 세종은 한글창제를 비롯 나라 안팎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나 배성들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순신은 적과 싸워 이기고 목숨 바쳐 나라를 구했지만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백번 싸워 백번 다 이김이 최상은 아니다.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박정희는 강압성과 싸우지 않고 이긴 사람이다." 박정희! 그리고 어찌 인간적 결함과 실책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가 백척간두 위험이라는 공통 앞에 경연히 앞서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신념으로 운명을 극복해 이 나라 이 민족의 제단에 몸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인의 마음에 산화람을 불어넣은 '불굴혼 박정희'를 찾아라는!

의 결 번 호	2012대선24(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일요시사신문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07-2 대표이사 이 용 범
심의대상기사	일요시사 2012년 9월 30일(제873호) 16~17면 「대통령 운명 타고난 '흑룡' 승천한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 제시 없이 특정 예비후보자들의 당락 여부에 관한 역술인의 주관적인 해석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였다. 언론이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것은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유권자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7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제8조(인용보도 및 인터뷰기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추석특집】
【2012 천기누설】 2 백운비 원장이 본

대선주자 3인 사주

임진년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천간 중 검은색에 해당하는 임(壬)과 용을 뜻하는 진(辰)이 더해져 '흑룡(黑龍)의 해'로 불린다. 2012년 올해는 더욱 특별하다.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그 흑룡의 해에 대선과 총선이 함께 열리기 때문이다. 마침내 세 잠룡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고 흑룡으로 거듭날 천인은 과연 누구일까. 그 해답을 사주풀이의 대가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으로부터 구해봤다.

대통령 운명 타고난 '흑룡'승천한다

"2012년은 난고(難苦)가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지난 2012년 1월 백운비 원장은 국운을 이처럼 내다봤다. 그의 말대로 2012년 들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해외발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데다가 한 · 중 · 일 갈등도 극단으로 치닫는 등 말 그대로 '다사다난' 한 해가 되고 있다.

그런데 백 원장은 "내년 역시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대선이 '국운'을 좌지우지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이 곧게 세워질 수도 있고, 지금 이대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신성대길(新星大吉)]

원칙과 소신 지키야

"재상 운을 타고나 갑자기 환히 빛난다"

백 원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운세

에 대해 '일취월장'할 것이라며 사주풀이를 시작했다. 그는 "박 후보는 아버지의 리더십을 70% 닮고 어머니의 포용력을 30% 닮아 음양이 잘 조화된 명인"이라며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천운을 타고 태어났다"고 표현했다. 이어 "관상을 보아도 가식이 없고 진심이 묻어나온다"고 평했다. 한마디로 귀한 인물이라는 것.

백 원장은 "올해야말로 박 후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세력이 광범위하게 넓어질 것"이라며 "지금의 화를 잘 넘긴다면 박 후보의 진가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 후보는 1964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따라 청와대에 입성해 10여 년을 '공주'로 지냈고 모친인 육영수 여사의 뒤를 이어 '퍼스트레이디'로 살아왔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박 후보는 정치인으로 데뷔한 후 승승장구했다. 1998년 대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각종 선거에서 전승을 거두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대선경선에서는 삐끗하며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대선후보 자리를 내주었다. 이를 두고 백 원장은 "박 후보는 다 좋은데 마무리 운이 약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5년이 지나 올해 대선이 다가오자 당내에 적수가 없는 박 후보는 일찌감치 대권행보에 나섰다. 각종 외부 특강 및 정책세미나에 나서는가 하면 언론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해왔다. 특히 당의 최대 위기라던 지난 4 · 11 총선에서 박 후보는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개명하고, 전국을 직접 돌며 표심을 얻는 데 성공해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지난 7월에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들고 야심차게 대선출마를 선언, '박근혜 대세론'에 불을 붙였다. 당시만 해도 박 후보의 앞길은 거칠 것이 없어 보였다.

백 원장은 "대권은 천운이 따라야 하는데 박 후보는 그 천운을 받은 만큼 국운을 이끌어가야 할 존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좌익들이 득세하여 이북식 이념과 사상이 판을 치고 있고 투쟁을 좋아하는 좌익들 때문에 평화가 깨져 민심이 나빠지고 사람들이 독해지고 있다"며 "박 후보야말로 유일한 구원투수"라고 풀이했다.

박 후보의 굳건했던 아성은 대선을 석 달 앞둔 9월부터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 후보는 '국민 대통합' 행보를 시작하며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와 직접 만나고 노동운동의 상징 전태일 열사의 재단을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달려 중도층 표심 공략에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과거사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역사관이 발목을 잡은 형국이다.

그럼에도 백 원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백 원장은 박 후보의 최근 행보를 두고 "좌익들의 비위에 맞추어 갈 것이 아니라 보수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선에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면 좌익들이 득세해 국가는 물론 국민 전체가 막중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백 원장은 "이제 모든 위기는 넘겼고 타고난 운이 강한 만큼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며 "박 후보의 타고난 약점은 인덕이 적고 마지막 운이 약하다는 것인데 흑룡의 해를 맞아 박 후보의 운이 더해지고 있으니 소신과 기력을 아낌없이 발휘하라"고 조언했다.

[문재인 욕비불기(慾飛不起)]

"인정 많고 관운 있어 입신양명할 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후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참여정부 시절 어떻게든 정치에서

발을 빼려는 행보를 보여 왔던 것을 떠올려보면 문 후보는 '180도' 마음을 바꿔먹은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최근 들어 대선승리를 향한 권력의지까지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난 9월16일 결국 문 후보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얻으며 13연승이라는 '파죽지세'를 달려 지난 16일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문 후보는 예능프로그램에 몇 차례 출연하며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아내와의 감동적인 러브스토리, 노 전 대통령과의 운명 같은 만남, 강제로 끌려간 특전사 복무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원칙을 지키고 반듯하면서도 소탈한 인상을 강화해 왔다.

문 후보는 성격적으로도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쑥스러워한다고 알려졌다. 대중정치인으로서는 약점일 수 있겠지만 카리스마형 지도자보다는 배려와 나눔, 공감, 헌신의 지도자상을 원하는 요즘의 시대정신에 비춰보면 국가지도자로서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평이다.

백 원장도 "문 후보는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며 "관운이 있어 입신양명할 수 있다"는 평을 했다. 실제 문 후보는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 졸업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경남지역 시국사건을 함께 맡으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문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 차례, 그리고 시민사회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노 전 대통령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왔다.

욕심 모두 버려야

하지만 백 원장은 문 후보를 두고 "대통령감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문 후보는 '군신상회(君臣相會)' 운을 타고나 운명적으로 신하는 될 수 있어도 임금은 될 수 없다"며 "국회의원으로 머물거나 대통령을 지원하는 참모 역할에서 만족해야 한다"고 평했다. 백 원장에 따르면 문 후보의 경청하는 자세는 좋으나 그만큼 남의 말에 자신의 뿌리를 지키지 못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통치자로서의 자질은 약하다는 것이었다.

참여정부 당시 문 후보는 몸을 낮춘 채 노 전 대통령을 보필했다. 청와대에 들어간 뒤 술과 함께 인맥이나 지연, 학연을 모두 끊고 지낸 것. 노 전 대통령은 문 후보를 법무부 장관 등 주요 보직 앉히길 원했고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마다 출마를 권유하기도 했지만 당시 문 후보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지난해 대망론이 제기될 당시에도 문 후보는 "(자신보다) 내공을 쌓고 경력과 능력을 검증받은 후보들도 많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2012년 대선이 다가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끌어야 하는 대선정국이 도래하자 문 후보는 자신이라도 나서야겠다는 '소명의식'에 대선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예능프로에 출연해 적극적으로 얼굴을 알리기도 하고 노 전 대통령의 지방선거 출마 제안을 고사하던 모습을 버리고 4 · 11 총선 당시 부산 사상구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백 원장은 이 같은 문 후보의 행보를 심히 우려했다. 그는 문 후보를 향해 "인재를 흡수하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나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또 여러 파로 갈리게 해 단합과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명적으로 대통령감이 아닌데 자기 범위를 벗어난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여기에서 만족하라"고 딱 잘라 말했다.

[안철수 영웅실쟁(英雄失爭)]

"재능과 지혜가 비범해 세상 이끌 인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혜성처럼 나타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10·26재보선이 예정되면서 안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되며 안 후보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하지만 안 후보는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지지 선언을 하며 재야로 돌아갔다. 안 후보는 '대인의 풍모'를 풍기며 당시 박 후보에게 '아름다운 양보'를 해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것이다.

어김없이 다가온 올해 대선. 국민들의 '안철수 사랑'은 못 말리는 수준에 이르렀다. 안 후보는 대선출마를 선언하기까지 대선출마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왔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열망은 식을 줄 몰랐고 한시라도 빨리 안 후보가 대권에 출마하길 기다렸다. 결국 지난 9월 19일 안 후보는 지지자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으며 대권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하지만 백 원장은 안 후보의 폭발적인 인기가 "'추화단기(秋花短期)'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봄에 피는 꽃과 달리 가을에 핀 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미다. 현재 대권직행을 결심한 안 후보에게 그리 달갑지 않은 말이다.

명성·재산 잃을 수도

백 원장은 안 후보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듯했다. 그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음양오행의 섭리에 따라 운명이 정해지고 각자 자기 길이 있다"며 "안 후보는 학자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한참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 후보는 학운이 있어 학계에 남으면 대학교 총장을 넘어서 국내는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우뚝 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고 "안 후보는 재복도 있어서 재물도 자연스레 따라붙게 되는 선학후재(先學後財)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안 후보는 학문의 길을 닦아 승승장구해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안 교수는 의학 석사, 박사과정을 마친 뒤 27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단국대학교 의대 최연소 학과장을 맡기도 했다.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 V3라는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했다. 그러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매년 증가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안 후보는 14년 동안 이어진 의사의 삶을 벗어던지고 '안철수 연구소'를 설립해 튼실한 벤처기업의 CEO로 변모했다.

안 후보는 2005년부터 안철수 연구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학업의 길로 접어들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벤처비즈니스 과정을 밟고 한국에 돌아와 카이스트 석좌교수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부도 잇따랐다.

안 후보의 대권출마를 두고 백 원장은 "안 후보는 치입부덕(治入不德)의 운세를 타고나 정치에 뛰어들게 되면 모든 덕이 흩어져 자리는 물론 돈도 잃게 되는 허장산금(虛場散金)의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안 후보의 좌익성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안 후보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백 원장은 "안 후보는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선 때처럼 다른 사람을 밀어주고 빠져야 할 것"이라며 "안 후보가 정치에 뛰어들면 자신도 다칠 뿐 아니라 이 나라의 국운까지 바닥낼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비 원장은?〉

40년 외고집 역학인생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학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16 일요시사 추적 특집 2012년 9월30일(일요일) 제873호

2012 전개 누설 ② 백운비 원장이 본

대통령 운명 타고

대선주자 3인 사주

임진년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천간 중 검은색에 해당하는 임(壬)과 용을 뜻하는 진(辰)이 더해져 '흑룡(黑龍)의 해'로 불린다. 2012년 올해는 더욱 특별하다.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그 흑룡의 해에 대선과 총선이 함께 열리기 때문이다. 마침내 세 잠룡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고 흑룡으로 거듭날 천인은 과연 누구일까. 그 해답을 사주풀이의 대가 백운비 백운비역학원 원장으로부터 구해봤다.

"2012년은 난고(難苦)가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지난 2012년 1월 백운비 원장은 국운을 이처럼 내다봤다. 그의 말대로 2012년 들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해외발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데다가 한·중·일 갈등도 극단으로 치닫는 등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해가 되고 있다.

그런데 백 원장은 "내년 역시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대선이 '국운'을 좌지우지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이 곧게 세워질 수도 있고, 지금 이대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신성대길(新星大吉) 원칙과 소신 지켜야

백 원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운세에 대해 '일취월장'할 것이라며 사주풀이를 시작했다. 그는 "박 후보는 아버지의 리더십을 70% 닮고 어머니의 포용력을 30% 닮아 음양이 잘 조화된 명인"이라며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천운을 타고 태어났다"고 표현했다. 이어 "관심을 보아도 가식이 없고 진심이 묻어나온다"고 평했다. 한마디로 귀한 인물이라는 것.

백 원장은 "올해야말로 박 후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세력이 광범위하게 넓어질 것"이라며 "자금의 화를 잘 넘긴다면 박 후보의 진가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 후보는 1964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따라 청와대에 입성해 10여 년을 '공주'로 지냈고 모친인 육영수 여사의 뒤를 이어 '퍼스트레이디'로 살아왔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박 후보는 정치인으로 데뷔한 후 승승장구했다. 1998년 대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각종 선거에서 전승을 거두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대선경선에서는 삐끗하며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내주었다. 이를 두고 백 원장은 "박 후보는 다 좋은데 마무리 운이 약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5년이 지나 올해 대선이 다가오자 당내에 적수가 없는 박 후보는 일찌감치 대권행보에 나섰다. 각종 외부 특강 및 정책세미나에 나서는가 하면 언론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해왔다. 특히 당의 최대 위기라던 지난 4·11 총선에서 박 후보는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개명하고, 전국을 직접 돌며 표심을 얻는 데 성공해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지난 7월에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들고 야심차게 대선출마를 선언, '박근혜 대세론'에 불을 붙였다. 당시만 해도 박 후보의 앞길은 거칠 것이 없어 보였다.

백 원장은 "대권은 천운이 따라야 하는데 박 후보는 그 천운을 받는 만큼 국운을 이끌어 가야 할 존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좌익들이 득세하여 이북식 이념과 사상이 판을 치고 있고 투쟁을 좋아하는 좌익들 때문에 평화가 깨져 민심이 나빠지고 사람들이 동해지고 있다"며 "박 후보야말로 유일한 구원투수"라고 풀이했다.

박 후보의 굳건했던 아성은 대선을 석 달 앞둔 9월부터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 후보는 '국민 대통합' 행보를 시작하며 김해 봉하 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와 직접 만나고 노동운동의 상징 전태일 열사의 재단을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달려 중도층 표심 공략에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과거사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역사관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그럼에도 백 원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백 원장은 박 후보의 최근 행보를 두고 "좌익들의 비위에 맞추어 갈 것이 아니라 보수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선에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면 좌익들이 득세해 국가는 물론 국민 전체가 막중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원장은 "이제 모든 위기는 넘겼고 타고난 운이 강한 만큼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며 "박 후보의 타고난 약점은 인덕이 적고 마지막 운이 약하다는 것인데 흑룡의 해를 맞아 박 후보의 운이 더해지고 있으니 소신과 기력을 아낌없이 발휘하라"고 조언했다.

문재인 욕비불기(慾飛不起) 욕심 모두 버려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후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참여정부 시절 어떻게든 정치에서 발을 빼려는 행보를 보여 왔던 것을 떠올려보면 분 후보는 180도 마음을 바꿔먹은 것으로 보인다. 분 후보는 최근 들어 대선승리를 향한 권력의지까지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난 9월16일 분 후보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얻으며 13연승이라는 '파죽지세'를 달려 최종 대선후

박근혜 "재상운을 타고나 갑자기 환히 빛나"

안철수 "재능과 지혜 비범해 세상 이끌 인물"

문재인 "인정 많고 관운 있어 입신양명할 운"

난 '흑룡' 승천한다

보로 선출됐다.

문 후보는 예능프로그램에 몇 차례 출연하며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아내와의 감동적인 러브스토리, 노 전 대통령과의 운명 같은 만남, 강제로 끌려간 특전사 복무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원칙을 지키고 반듯하면서도 소탈한 인상을 강화해 왔다.

문 후보는 성격적으로도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쑥스러워 한다고 알려졌다. 대중정치인으로서는 약점일 수 있겠지만 카리스마형 지도자보다는 배려와 나눔, 공감, 헌신의 지도자상을 원하는 요즘의 시대정신에 비춰보면 국가지도자로서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평이다.

백 원장도 "문 후보는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며 "관운이 있어 입신양명할 수 있다"는 평을 했다. 실제 문 후보는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 졸업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경남지역 시국사건을 함께 맡으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문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 차례, 그리고 시민사회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노 전 대통령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왔다.

하지만 백 원장은 문 후보를 두고 "대통령감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문 후보는 '군신상회(君臣相會)'운을 타고나 운명적으로 신하는 될 수 있어도 임금은 될 수 없다"며 "국회의원으로 머물거나 대통령을 지원하는 참모 역할에서 만족해야 한다"고 평했다. 백 원장에 따르면 문 후보의 경청하는 자세는 좋으나 그만큼 남의 말에 자신의 뿌리를 지키지 못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통치자로서의 자질은 약하다는 것이었다.

참여정부 당시 문 후보는 몸을 낮춘 채 노 전 대통령을 보필했다. 청와대에 들어간 뒤 술과 함께 인맥이나 지연, 학연을 모두 끊고 지낸 것.



노 전 대통령은 문 후보를 법무부 장관 등 주요 보직 앉히길 원했고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마다 출마를 권유하기도 했지만 당시 문 후보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지난해 대망론이 제기될 당시에도 문 후보는 "(자신보다) 내공을 쌓고 경력과 능력을 검증받은 후보들도 많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2012년 대선이 다가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끌어야 하는 대선정국이 도래하자 문 후보는 자신이라도 나서야 겠다는 '소명의식'에 대선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예능프로에 출연해 적극적으로 얼굴을 알리기도 하고 노 전 대통령의 지방선거 출마 제안을 고사하던 모습을 버리고 4·11 총선 당시 부산 사상구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백 원장은 이 같은 문 후보의 행보를 심히 우려했다. 그는 문 후보를 향해 "인재를 흡수하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나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또 여러 파로 갈리게 해 단합과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명적으로 대통령감이 아닌데 자기 범위를 벗어난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여기에서 만족하라"고 딱 잘라 말했다.

안철수
영웅실쟁(英雄失爭)
명성·재산 잃을 수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혜성처럼 나타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10·26 재보선이 예정되면서 안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되며 안 후보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하지만 안 후보는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지지 선언을 하며 재야로 돌아섰다. 안 후보는 '대인의 풍모'를 풍기며 당시 박 후보에게 '아름다운 양보'를 해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것이다.

어김없이 다가온 올해 대선. 국민들의 '안철수 사랑'은 못 말리는 수준에 이르렀다. 안 후보는 대선출마를 선언하기까지 대선출마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왔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열망은 식을 줄 몰랐고 한시라도 빨리 안 후보가 대권에 출마하길 기다렸다. 결국 지난 9월19일 안 후보는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으며 대권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하지만 백 원장은 안 후보의 폭발적인 인기가 '추화단기(秋花短期)'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봄에 피는 꽃과 달리 가을에 핀 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미다. 현재 대권직행을 결심한 안 후보에게 그리 달갑지 않은 말이다.

백 원장은 안 후보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듯했다. 그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음양오행의 섭리에 따라 운명이 정해지고 각자 자기 길이 있다"며 "안 후보는 학자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한참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 후보는 학운이 있어 학계에 남으면 대학교 총장을 넘어서 국내는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우뚝 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고 "안 후보는 재복도 있어서 재물도 자연스레 따라붙게 되는 선학후재(先學後財)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안 후보는 학문의 길을 닦아 승승장구해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안 교수는 의학 석사, 박사과정을 마친 뒤 27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단국대학교 의대 최연소 학과장을 맡기도 했다.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 V3라는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했다. 그러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매년 증가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안 후보는 14년 동안 이어진 의사의 삶을 벗어던지고 '안철수 연구소'를 설립해 튼실한 벤처기업의 CEO로 변모했다.

안 후보는 2005년부터 안철수 연구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학업의 길로 접어들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벤처비즈니스 과정을 밟고 한국에 들아와 카이스트 석좌교수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부도 잇따랐다.

안 후보의 대권출마를 두고 백 원장은 "안 후보는 치입부덕(治入不德)의 운세를 타고나 정치에 뛰어들게 되면 모든 덕이 흩어져 자리는 물론 돈도 잃게 되는 허장산금(虛場散金)의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안 후보의 좌익성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안 후보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백 원장은 "안 후보는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선 때처럼 다른 사람을 밀어주고 빠져야 할 것"이라며 "안 후보가 정치에 뛰어들면 자신도 다칠 뿐 아니라 이 나라의 국운까지 바닥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백운비 원장은?

40년 외고집 역학인생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학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02-742-8470)



의 결 번 호	2012대선32(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심의대상기사	조선일보 2012년 11월 10일자 A32면 「나는 왜 18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해야 하는가?」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고 후보자 명의의 저술이 드러난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13조(의견광고) 및 제14조(상업광고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나는 왜 18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해야 하는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면에 부족하고 미천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여수에서 배타고 2시간 가야하는 '낭도'라는 조그만 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통령에 대한 비전을 갖고 비록 목사가 되었으나 평생 동안 국가를 위한 사명을 마음속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는 남모르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연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으나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생사기로의 나날이 다반사였습니다. 저는 살기위해 몸부림쳤으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모르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도 수없이 들었습니다만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기도로 버티면서 오늘까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 전부터 주님께서 기도 중에 "민족을 위한 책을 쓰라."는 영감을 주어서 책 3권을 썼습니다.(1권 한국혁명을 일으킬 민족의 영웅이 나와야 한다. 2권 세계를 감동시킬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3권 따뜻한 나라 만들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지금은 막강한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목사가 대통령후보로 나가려 하느냐!"하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치부할지 모르나 그 이유를 우선에 30가지로 밝히고자 합니다.

1. 싸움판으로 일관된 정치 풍토를 바꾸어 좋은 나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같은 풍토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투쟁이 더 심해서 아무 것도 못한다고 봅니다. 어떤 이의 말로는 "한국정치 앞으로 5년은 잃어버린 5년이 되기 쉽다."고 한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정치는 경험이 있어야 하고 들러리가 튼튼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경험이나 경력이 있어 잘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한민족의 모든 문제는 정치 논리로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앞으로 한민족의 모든 문제는 정치경력으로는 한발자국도 못 나갈 것입니다. 요즈음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광해」에서 우리는 크게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지금은 비제도권(장외)에서 누가 나와서 몇 년 동안이라도 정치판에 새바람을 일으켜 선정을 베풀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후보는 누가 되든지 비정치권에서 나와서 거국내각 즉 국민 대통합 내각, 용광로 내각을 해서 국가를 추슬러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안보셨습니까? 새누리당이 거대 여당이 되어도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문제 하나 처리 못하고, 계속 싸움판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정치로 못 푸는 문제를 막간이라도 비정치인이 풀 수 있습니다. 정치로 막힌 문제를 무경험자가 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내뱉지 말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 신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은 영화 「광해」에 나오는 "하선"처럼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헌법을 4년 중임으로 바꾸고, 4년만 하되 절대 당을 만들지 않고 끝까지 중립을 지키므로 정치풍토를 바꿀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2. 후보마다 무책임한 공약난발로 인한 포퓰리즘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후보들이 공약한 것만 해도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어 몇 년 못 가서 나라 곳간이 거덜날 것입니다. 물론 선거운동 하다 보니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후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놓지 않으려면 지나친 선심성 공약은 국민을 철저히 속이는 것입니다. 현재 각 후보마다 전국을 돌며 다니는 민생탐방 선거풍토는 경비도 많이 들고 공약을 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돈으로 하지 않으려면 지나친 선거 공약은 국가 재앙입니다. (중략)

8. 통 큰 지도자가 나와서 국론을 통일하고 모처럼 온 국가적 기회를 십분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은 영웅 기질의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은 통 큰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은 뱃장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지도자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 욕도 얻어먹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국민의 다수를 위해 부담도 가질 때도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지도자는 어렵고 힘든 자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을 세분화해서 과학부, 체신부, 문화부, 체육부를 독립하여 각 부서를 넓히고 종교청, 다문화청, 자살방지청, 재외국민청, 워킹푸어청 등을 두어 자상한 정치를 해야겠습니다. 대학입학시험도 엄청난 경비 드는 수능을 과감히 없애고, 대학 자율의 본고사에 맡기고, 기여입학제도를 각 학교당 30명 내외로 도입하므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는 가진 자가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겠습니다.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자살방지 운동으로 가장 먼저 3조 모금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또는 인류가 홍수와 가뭄대비 물탱크 만들기를 전세계적으로 일으켜서 인류를 살리는 기업광고를 물탱크에 넣는 조건으로 전세계 대기업체들로부터 200조를 모금해서 100조는 한국에서 물탱크를 생산하므로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 국가로 일거양득의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보다 훨씬 통큰 대사면 복권을 집행유예 조건으로 하여 국민대통합을 이루어야겠습니다.(흉악범, 성폭행범 제외)(후략)

나는 왜 18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해야 하는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면에 부족하고 미천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여수에서 태어나 2시간 가야하는 '남도' 라는 조그만 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통령에 대한 비전을 갖고 비록 목사가 되었으나 평생 동안 국가를 위한 사명을 마음속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는 남모르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연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길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으나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생사기로의 나날이 다반사였습니다. 저는 살기위해 몸부림쳤으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모르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도 수없이 들었습니다만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기도로 버티면서 오늘까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 전부터 주님께서 기도 중에 "민족을 위한 책을 쓰라."는 영감을 주어서 책 3권을 썼습니다.(1권 한국혁명을 일으킬 민족의 영웅이 나와야 한다. 2권 세계를 감동시킬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3권 따뜻한 나라 만들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지금은 막강한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목사가 대통령후보로 나가려 하느냐?"하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치부할지 모르나 **그 이유를 우선에 30 가지로 밝히고자 합니다.**

1. 싸움판으로 일관된 정치 풍토를 바꾸어 좋은 나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같은 풍토으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무쟁이 더 심해서 아무 것도 못한다고** 봅니다. 어떤 이의 말로는 "한국정치 앞으로 5년은 잃어버린 5년이 되기 쉽다."고 한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분은 "정치는 정힘이 있어야 하고 들려지가 튼튼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경험이나 경력이 있어 잘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한민족의 모든 문제는 정치논리로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앞으로 한민족의 모든 문제는 정치경력으로는 한발자국도 못 나갈 것입니다. 요즈음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광해'에서 우리는 크게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지금은 비례도권(장외)에서 누가 나와서 몇 년 동안이라도 정치판에 새바람을 일으켜 선정을 베풀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후보는 누가 되든지 비정치권에서 나와서 거국대각 즉 국민대통합내각, 융합으로내각을 해서 국가를 추슬러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안보셨습니까? 새누리당이 거대 여당이 되어도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문제 하나 처리 못하고, 계속 싸움판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정치로 못 푸는 문제를 박근이라도 비정치인이 풀 수 있습니다. 정치로 박힌 문제를 무정힘자가 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내뱉지 말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 신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은 영화'광해'에 나오는 '하선'처럼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헌법을 4년 중임으로 바꾸고, 4년만 하되 절대 당을 만들지 않고 끝까지 중립을 지키므로 정치풍토를 바꿀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2. 후보마다 무책임한 공약난발로 인한 포퓰리즘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자금까지 후보들이 공약한 것만 해도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어 몇 년 못 가서 나라 곳간이 거덜날 것입니다. 물론 선거운동 하다 보니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후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놓지 않으려면 지나친 선심성 공약은 국민을 철저히 속이는 것입니다. 현재 각 후보마다 전국을 돌며 다니는 민생탐방 선거풍토는 정비도 많이 들고 공약을 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돈으로 하지 않으려면 지나친 선거 공약은 국가 재앙입니다. 무상복지도 필요하나 생산적 복지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복지 공약의 모든 것은 국가 재정의 범위 안에서 신중히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저는 세 후보들의 공약을 언론을 통해 볼 때마다 국가 장래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세금폭탄으로 한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크게 생각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3. 생산적인 국가 정책 비전이 거의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도자는 생산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자가 올바른 자입니다. 지도자는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의 대안을 발표하는 자가 이 시대 일꾼입니다.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정확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경제개발 5개년 계획"같은 명쾌한 밑그림을 제시할 줄 아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나가고 되는대로 해나가는 것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복표와 목적이 투명한 정책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선거운동도 정책대안을 놓고 깊은숙박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과거나 물고 늘어지면서 상대후보를 짐물시키려는 저질적인 선거운동은 영원히 추방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수준이 그렇게 절대 저급하지 않습니다. 정치판에서는 튄가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밑은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듣고는 있어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4. 지나친 양극화 현상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질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 대립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커지면 결국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 결국 나라 끝장나는 것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극대화되면 결국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겠습니다. 야당 말도 나름대로 맞고, 여당 말도 나름대로 크게 맞습니다. 보수 말도 일리는 있고, 진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대로만 나간다면 아무 것도 못하고 계속 싸우고, 계속 투쟁하고, 계속 갈등 국면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이조 오백년 역사에서 이 민족이 망한 것도 남인, 북인, 노론, 소론하며 계속 싸우고, 다투고, 권모술수 쓰고, 정쟁으로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여 서로 죽이려다 일본한테 나라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나라 잃은 설움을 겪고서도 또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8.15 해방을 맞이했어도 이념대립으로 결국 남 · 북이 나뉘졌으며, 민족상쟁의 6.25 재앙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당이 되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이 되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보가 되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수가 되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진짜 국민대통합을 이루려면 이번에는 장외에서 나와야 합니다. 진짜 융합으로내각을 만들려면 이번에는 비정치권에서 나와야 합니다.

5. 각 후보들이 외교에 대한 실제적인 비전이 거의 안 보입니다.

현 정부는 국격을 높이고, 외교에 발전을 가져온 것은 높이 칭찬해주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은 이대통령보다 외교에 능한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한 · 일 관계, 한 · 중 관계, 남 · 북 관계, 한 · 러 관계를 명쾌하게 풀 지도자가 시급합니다. 차기 지도자는 외교에 비전이 없으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외교에 최고 심력 발휘를 할 때입니다. FTA로 경제영토를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FTA라는 경제고속도로를 넓혀 놓았으면 마음껏 활용해야지 그것을 마음껏 활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애물단지로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체나 대기업이 마음껏 세계를 달릴 수 있도록 적절 진두지휘할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국민들이 저를 선택해주신다면 전세계를 중소기업체 사장들을 모시고 종횡무진 하여 1조 달러 시대 무역을 2조 달러 시대 무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전쟁보다 외교에 능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지도자는 국제 감각에 민감해서 국제 정치 질서를 선도할 자가 반드시 나와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6. 경제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지나친 재벌 때리기 정책을 내놓는 것은 국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각 후보마다 이구동성으로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것은 옳심이고, 민심으로 받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나친 재벌 때리기나 법적인 제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못하면 버룩을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 될 수 있으며, 황금알 때문에 거위 죽이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전에 시도했으나 사실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재벌들을 추악한 집단으로 매도할것만 아니라 그들의 노고도 칭찬해주면서 상생해야 합니다. 법이나 제도보다 가진 자가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게, 넘분 있게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정책과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가 더 가지려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모르는 거지 인생을 10여년 살아보았기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피부로 느끼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차원 높은 솔로몬의 지혜로, 애국심 고취로, 더불어 함께 사는 정신 순화로 풀어나가야겠습니다.**

7. 거국내각을 통해 지역이나 학연, 지연을 떠나 인재를 등용하므로 나라가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각 당마다 세력 확장 파시로 편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나라 망할 일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내 편 많이 만들어서 나라를 이끌려는 것은 소인배 짓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도 헤븐(보온)인사에 시달려서 나라아 어쩌되든지 낙하산 인사에 편중할 수밖에 없고, 누가 되든지 반대세력으로 더 무심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세력 없이서 정직 못할 것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 안되겠습니다. 이 시대 합당한 지도자만 쯩히면 훌륭한 인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욱이 여 · 야와 보수 · 진보를 아울러서 대 탕평책을 쓰므로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인물로 선거를 치루고 국가적인 대단한 인재를 발굴해서 써야 민족의 장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회전문 인사 정책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도자는 자기 보호 울타리도 중요하나 진짜 인재를 발굴해서 이 시대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깊이 생각해보아야겠습니다.

8. 통 큰 지도자가 나와서 국론을 통일하고 모처럼 온 국가적 기회를 십분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은 영웅 기질의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은 통 큰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은 뱃장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지도자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 욕도 얻어먹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국민의 다수를 위해 부담도 가질 때도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심자가도 져야 합니다. 지도자는 어렵고 힘든 자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을 새로운해에서 과학부, 체신부, 문화부, 체육부를 독립하여 각 부서를 넓히고 종교청, 다문화청, 자살방지청, 재외국민청, 위기부여청등을 두어 자살한 정치를 해야겠습니다.** 대학입학시험도 입청난 정비 드는 수능을 과감히 없애고, 대학 자율의 본고사에 맡기고, 기여입학제도를 각 학교당 30명 내외로 도입하므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는 가진 자가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어야겠습니다.

재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자살방지 운동으로 가장 먼저 3조 모금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또는 인류가 홍수와 가뭄대비 물탱크 만들기를 전세계적으로 일으켜서 인류를 살리는 기업정고를 물탱크에 넣는 조건으로 전세계 대기업체들로부터 200조를 모금해서 100조는 한국에서 물탱크를 생산하므로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 국가로 일거양득의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보다 훨씬 통큰 대사면 복권을 집행유예 조건으로 하여 국민대통합을 이루어야겠습니다.(홍악빌, 성폭행빌 제외)

9.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최첨단으로 건설하여 제2인천국제공항의 기적을 이루어야겠습니다.

10. 경기만을 개발하여 2,000조의 국부를 창출하고 최후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11. 유실수 심기 운동을 충청도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일으켜서 전세계 관광객들이 한국의 맛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과수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혜서 강사로 쓰겠습니다.)

12. 예비군 제도를 없애고 군체제를 장기복무자를 보충해서 정차 80만으로 늘리므로 통일을 대비해야겠습니다.(이제는 30억 이상 기부하면 정식 명예대대 제도도 도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13. 가난의 대물림인 워킹푸어(Working poor)청(강원도, 제주도, 전남 · 북, 경기도, 경남 · 북)을 만들어 가난의 대물림을 끊도록 해야겠습니다.

14. 청문회 제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나라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15. 선거 제도에 혁명을 일으켜서 국민의 혈세를 줄이고 국민자에게 4대 보험을 제공해야겠습니다.

16. 서울시를 경기도 일부(김포, 고양, 부천, 광양, 과천, 안양, 시흥, 군포, 의왕, 성남, 광주, 판교, 구리, 하남, 남양주)를 포함하므로 통일 수도의 큰 그릇을 준비해서 일본 동경과 미국 뉴욕이나 중국 상하이보다 우대한 서울을 만들어야겠습니다.

17.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대폭적으로 넓혀 정치판을 순화시켜야겠습니다.

18. 음식물 쓰레기 1년에 8,000억 들여 소각하지 말고 퇴비화 하여 기름진 국토를 만들어야겠습니다.

19. 새만금을 세계적인 국제 명품 복합 도시로 개발해야겠습니다.

20. 미래 식량 무기화 시대를 반드시 대비해야겠습니다.

21.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소시오패스(Sociopath)가 생기는 사회현상을 하루빨리 바꿔야겠습니다.

22. 매년 10만명 이상 되는 가출 청소년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야겠습니다.

23. 대통령 권한 축소 없이 일단 대통령 임기만이라도 4년 중임으로 고쳐야겠습니다.

24. 이제는 북한을 형제애로 끌어안고 민족애를 닥실히므로 평화무드를 조성해야겠습니다.

25. 따뜻한 나라를 만들 정신혁명을 일으켜야겠습니다.

26. 고령화 시대에 노인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노인 에너지를 극대화시켜야겠습니다.

27. 삼국을 통일한 김춘추같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겠습니다.

28.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29. 교도 행정에 획기적인 변화의 혁명을 이루어야겠습니다.

30. 군인, 경찰, 소방관, 교사들을 예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저서 세 권에 나온 것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가격 13,000원



가격 13,000 원



가 격 13,000원

※ 농신판매 계좌 30,000원 농협 100045-52-297071 신예할 ※ 입금 후 문자로 주소 보내주세요. HP 010-8617-0601
※ 인터넷 시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토) 오후 3시 최영장군 묘 입구에서 18대 대통령후보 출정식이 있습니다.
(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70-2번지)

따뜻한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최 옥석 HP 010-6694-2008

의 결 번 호	2012대선40(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아시아투데이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34 대표이사 백 석 기
심의대상기사	아시아투데이 2012년 11월 15일자 1~2면 「"文 이중플레이로 단일화 협상 중단"」 제하의 기사 등 총 30건의 기사(아래 참조)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행보 및 선거 이슈 등을 보도하면서 해당 예비후보자에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1면 등 주요 지면에 여러 차례 비중 있게 게재하고 상대방의 비방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 제7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아시아투데이 심의대상기사

보도일	지면	기 사 제 목
11월 15일	1~2면	- "文 이중플레이로 단일화 협상 중단"
	3면	- 文측 양보론이 발단… 文·安 단일화 파경? 봉합?
11월 16일	1면	- 文의 참모형 리더십 한계
	3면	- 민주 자초 단일화 파행… 결국 부메랑?
		- 분열 아이콘 '親盧 패권에 국민 등 돌린다
		- 민주 구태정치에 선 긋는 안철수
	4면	- "文 흑색선전만… 권력집착 스토커 같다"
		- 새누리, 文 에 십자포화 "민주 전매특허는 여론 왜곡"
11월 19일	1면	- 文 '신불자 게이트' PK민심 이반 조짐
	3면	- 단일화에 목맨 文·安, 결국 테이블로
		- 그때그때 다른 지역공약 '文 말바꾸기' 논란
11월 20일	1면	- 文 언론정책에 '진실성' 의구심
	3면	- "여론조사도 수용" 文 자신감… 믿는 건 조직 세몰이?
		- "文, 복지재원 106조 확보는 허구"
11월 21일	1면	- 文 '통큰양보'는 포장된 통큰욕심?
	3면	- '무늬만 큰형님'… 文 리더십 다시 도마위에

보도일	지면	기 사 제 목
11월 22일	4면	– “문재인은 옹졸하다”
		– “문재인 ‘盧 NLL 발언’ 거짓 가능성”
		– “朴 출산 그림의 폭력 · 가학성 민주당 본래 속성과 일맥상통”
	1면	– ‘버스 반발’ 불지른 문 등 책임 불가피
		– 저축銀 피해자들 “文, 대통령 될 자격 없다.”
	2면	– “두 사람, 앞에선 형님 · 동생… 뒤에선 너죽고 나살자”
	4면	– ‘무늬만 용광로’ 文캠프
		– 文 공보단장 우상호의 ‘과잉’
		– 벌써 선거운동? 기호 2번 文 홍보차량 등장
		– ‘단일’ 김칫국
11월 23일	1~3면	– 文 공보 · 홍보라인은 아마추어?
	3면	– 절박한 文 ‘가상대결+적합도’ 승부수
		– 文, 단일화토론서 ‘맏형 모습’ 없었다.

보도내용

“文 이중플레이로 단일화 협상 중단”

安 캠프 “민주당서 언론플레이로 네거티브 공세” 양보론 확산 · 협상팀 인신공격 의혹… 불만 폭발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개시 하루 만에 암초에 걸렸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은 14일 ‘민주통합당의 언론플레이와 네거티브 공세’로 인해 “단일화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의 협상 중단 선언은 지난 13일 양측 각 3명의 인사로 구성된 ‘단일화 실무단’이 상견례를 갖고 단일화 방식에 대해 첫 협의를 가진지 불과 하루 만이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늘까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과 민주당이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단일화 협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을 듣지 못했다. 따라서 단일화 협의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문 후보측의 겉의 말과 속의 행동이 다르다. 유불리를 따져 안 후보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 말고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른바 ‘안 후보 양보론’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중략)

김현 민주당 대변인 “安 후보측의 중단 선언 정치 도의에 벗어난 것”

박인복 안철수 캠프 민원실장은 “안 후보가 문 후보에게 단일후보 자리를 양보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제보가 가장 많이 오고 있다”며 “지지자들이 ‘우리를 기망하는 것이냐, 양보하기로 해놓고’라고 전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측의 협상 파트너 비방

문 후보의 측근인 백원우 전 의원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진도 양측의 분열을 야기하는 원인이 됐다.

안 후보측 관계자는 "어제 첫 협의를 시작할 때 문 후보측에 의해 우리측 실무팀에 대한 인신공격이 있었고, 실무팀 협의 내용 이외의 자의적 발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 시작 전 시점에 문 후보의 정무특보인 백원우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우리 측 실무팀원인 이태규 미래기획실장에 대한 인신공격이 있었다"며 "거기에는 민주당 김현 대변인 등이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백 전 의원은 전날 트위터에 '안철수 단일화 협상팀 이태규? 한나라당 정권을 만들었던 사람, 개혁적 실용정권을 꿈꾸었던 사람 이태규'라는 글과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광고 사진을 리트윗하고 '모욕감을 느낀다'라는 코멘트를 달았다. 논란이 일자 백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페이스북 친구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에티켓 수준의 행위"라며 "이 실장의 과거행적을 사실대로 적은 것을 인신공격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인신공격"이라고 비판했다.(후략)

"文 이중플레이로 단일화 협상 중단"

安 캠프 "민주당서 언론플레이로 네거티브 공세"
양보론 확산·협상팀 인신공격 의혹… 불만 폭발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개시 하루 만에 암초에 걸렸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은 14일 '민주통합당의 언론플레이와 네거티브 공세'로 인해 "단일화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의 협상 중단 선언은 지난 13일 양측 각 3명의 인사로 구성된 '단일화 실무단'이 상견례를 갖고 단일화 방식에 대해 첫 협의를 가진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늘까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과 민주당이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단일화 협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을 듣지 못했다. 따라서 단일화 협의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문 후보측의 겉의 말과 속의 행동이 다르다. 유불리를 따져 안 후보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 말고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른바 '안 후보 양보론'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安 캠프 뒤흔든 '안철수 양보론'

안 후보 측은 이날 오전부터 다소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양보론'에 대한 기사가 '문재인 후보 측 핵심관계자'의 발언으로 인용돼 보도됐기 때문이다.

안 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안 후보가 문 후보를 만나 양보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언론 기사를 인용해 지역에 유포시키고, 잊어버릴 만하면 언론에 흘려 기사가 나오게 한다"며 민주당의 '안철수 양보론' 확산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 측은 지난 6일 '문재인-안철수 단독회동' 이후 '안철수 양보론', '신당 창당설'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해 왔다. 안 후보의 조광희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 후보 측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통해 유감을 표하며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민주당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안 후보 측은 결국 '단일화 협상 중단'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유 대변인이 이날 긴급브리핑을 갖고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안철수 양보론'이 보도된 후 안철수 캠프 민원실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로 몸살을 앓았다.

/윤희훈 기자 realyhh@

>>2면에 계속 / 관련기사 3·4면

>>1면 '文 이중플레이'서 계속

김현 민주당 대변인 "安 후보측의 중단 선언 정치 도의에 벗어난 것"

박인복 안철수 캠프 민원실장은 "안 후보가 문 후보에게 단일후보 자리를 양보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제보가 가장 많이 오고 있다"며 "지지자들이 '우리를 기망하는 것이냐, 양보하기로 해놓고' 라고 전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측의 협상 파트너 비방

문 후보의 측근인 백원우 전 의원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진도 양측의 분열을 야기하는 원인이 됐다.

안 후보측 관계자는 "어제 첫 협의를 시작할 때 문 후보측에 의해 우리측 실무팀에 대한 인신공격이 있었고, 실무팀 협의 내용 이외의 자의적 발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 시작 전 시점에 문 후보의 정무특보인 백원우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우리 측 실무팀원인 이태규 미래기획실장에 대한 인신공격이 있었다"며 "거기에는 민주당 김현 대변인 등이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백 전 의원은 전날 트위터에 '안철수 단일화 협상팀 이태규? 한나라당 정권을 만들었던 사람, 개혁적 실용정권을 꿈꾸었던 사람 이태규'라는 글과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광고 사진을 리트윗하고 '모욕감을 느낀다'라는 코멘트를 달았다. 논란이 일자 백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페이스북 친구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에티켓 수준의 행위"라며 "이 실장의 과거행적을 사실대로 적은 것을 인신공격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인신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영을 떠나 정치에 기본적 도의가 있는 것인데 (안 후보 측의 중단 선언은) 이에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 후보측은 백 전 의원의 거취 문제를 서둘러 정리하는 등 조기 진화를 시도했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캠프 차원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안 후보측을 자극했다는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향후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사소한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백 전 의원은 이날 문 후보의 정무특보직에서 물러났다.

/윤희훈 기자 realyhh@

文측 양보론이 발단… 文 · 安 단일화 파경? 봉합?

협상 재개 관측속 신뢰 무너져 결렬 배제 못해 단일화 협상 이뤄져도 시너지 효과는 반감될 듯

(전략) 두 후보 간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최근 문 후보 측에서 나온 '안철수 양보론'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유민영 대변인은 "'안 후보 양보론'은 터무니없다. 문 후보 측에 최대한 빠른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지금까지 성실한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당분간 단일화 협의는 중단된다"며 문 후보 측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안 후보 측의 협의 중단 선언은 지난 13일 양측 각 3명의 인사로 구성된 '단일화 실무단'이 상견례를 갖고 단일화 방식에 대해 첫 협의를 가진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안 후보 측이 문제삼은 것은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이 안 후보 측 협상단인 이태규 미래기획실장의 새누리당 전력을 문제삼는 글을 트위터 상에서 리트윗하고, 문 후보 측 캠프 관계자 발로 안 후보의 양보론이 언론에서 거론된 부분이다.

안 후보 측은 이날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를 항의하면서 시정을 요구했고, 오후부터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측은 문 후보 측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지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살포하는 등 조직적인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양측은 경제복지정책팀과 통일외교안보정책팀 첫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양측은 또 전날 밤 '새정치공동선언'에 대한 잠정합의를 도출해 이날 중 두 후보가 공동선

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문 후보가 부산에서 상경하는 15일 오후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안 후보 측의 단일화 협상 중단 선언이 공동선언 발표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文측 양보론이 발단… 文·安 단일화 파경? 봉합?

협상 재개 관측속 신뢰 무너져 결렬 배제 못해
단일화 협상 이뤄져도 시너지 효과는 반감될 듯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측이 1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과의 야권 후보단일화 물협의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의 물협의 중단 선언은 양측 각 3명의 인사로 구성된 '단일화 실무단'이 지난 13일 상견례를 갖고 단일화 방식에 대해 첫 협의를 가진 지 하루 만이다. /연합

14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전격 중단되면서 파행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대선 후보 등록일(25~26일)로 예정된 단일화 시한을 불과 열흘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협상이 암초에 부딪힘에 따라 단일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단일화가 성사된다고 해도 당초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는 반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특히 협상 초반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할 단일화 협의가 대치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일정 기간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일화 시한이 열흘 남짓으로 빠듯하고 단일화 논의를 전면 폐기하기에는 사안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 때문에 양측이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안 후보 측이 후보 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한 정치개혁의 내용을 담은 '새정치공동선언'에 대해 양 측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 점도 협상 재개의 전망을 밝게 한다.

하지만 '새정치공동선언'이 단일화를 결렬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안 후보 측이 주장해온 '기성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선언에 포함되고, 이를 고리로 한 안 후보 측의 압박이 강해지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 후보 측은 "문 후보 측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후보 단일화' 의제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문 후보 측을 압박하고 있다.

두 후보 간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최근 문 후보 측에서 나온 '안철수 양보론'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유민영 대변인은 "'안 후보 양보론'은 터무니없다. 문 후보 측에 최대한 빠른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지금까지 성실한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당분간 단일화 협의는 중단된다"며 문 후보 측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안 후보 측의 협의 중단 선언은 지난 13일 양측 각 3명의 인사로 구성된 '단일화 실무단'이 상견례를 갖고 단일화 방식에 대해 첫 협의를 가진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안 후보 측이 문제삼은 것은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이 안 후보 측 협상단인 이태규 미래기획실장의 새누리당 전력을 문제삼는 글을 트위터 상에서 리트윗하고, 문 후보 측 캠프 관계자 발로 안 후보의 양보론이 언론에서 거론된 부분이다.

안 후보 측은 이날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를 항의하면서 시정을 요구했고, 오후부터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측은 문 후보 측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지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살포하는 등 조직적인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양측은 경제복지정책팀과 통일외교안보정책팀 첫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양측은 또 전날 밤 '새정치공동선언'에 대한 잠정합의를 도출해 이날 중 두 후보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문 후보가 부산에서 상경하는 15일 오후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안 후보 측의 단일화 협상 중단 선언이 공동선언 발표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엄지연 기자 reah@

文의 참모형 리더십 한계

장악력 떨어지고 친노에 끌려가고…

당내 비주류, 단일화 협상 파행 책임론 제기
"안철수 양보론 등 물밑공작 상황도 파악 못해"

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간 단일화 협상 파행이 15일 이틀째 계속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문 후보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캠프 내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이 문 후보의 통제 밖에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문 후보의 리더십 부재가 캠프 인사들의 전횡으로 이어졌고, 결국 안 후보 측에 협상 중단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호남 지역 한 초선 의원은 15일 "지금 선거대책위 내부에서 친노 인사들의 전횡이 심각한 수준인데 문 후보가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2선으로 물러났다던 이해찬 대표와 퇴진한 친노 9인이 버젓이 캠프에 관여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했다. 이 의원은 "문 후보가 참모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모들에게 문 후보가 끌려다니는 형국"이라고도 했다.

문 후보가 캠프 내부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후보 측은 협상을 중단하며 민주당발(發)

'안철수 양보론' 등 마타도어(흑색선전), 조직적 세몰이, 여론조사 영향력 행사 등을 문제 삼았다. 안 후보 측은 특히 문 후보 캠프 인사들이 흑색선전과 세몰이 등에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부산 중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양보론에 대해 "선대위나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다.(후략)

文의 참모형 리더십 한계 장악력 떨어지고 친노에 끌려가고…

당내 비주류, 단일화 협상 파행 책임론 제기
"안철수 양보론 등 물밑공작 상황도 파악 못해"

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간 단일화 협상 파행이 15일 이틀째 계속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문 후보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캠프 내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이 문 후보의 통제 밖에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문 후보의 리더십 부재가 캠프 인사들의 전횡으로 이어졌고, 결국 안 후보 측에 협상 중단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호남 지역 한 초선 의원은 15일 "지금 선거대책위 내부에서 친노 인사들의 전횡이 심각한 수준인데 문 후보가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2선으로 물러났다던 이해찬 대표와 퇴진한 친노 9인이 버젓이 캠프에 관여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했다. 이 의원은 "문 후보가 참모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모들에게 문 후보가 끌려다니는 형국"이라고도 했다.

문 후보가 캠프 내부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후보 측은 협상을 중단하며 민주당발(發) '안철수 양보론' 등 마타도어(흑색선전), 조직적 세몰이, 여론조사 영향력 행사 등을 문제 삼았다. 안 후보 측은 특히 문 후보 캠프 인사들이 흑색선전과 세몰이 등에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부산 중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양보론에 대해 "선대위나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비주류 의원은 "캠프 인사들이 '안철수 양보론'을 마치 안철수 캠프 측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언론에 흘렸는데 문 후보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획이나 공작같은 구태정치는 문 후보의 스타일이 아니다"며 "문 후보가 참모들이 물밑에서 어떤 공작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도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 브리핑에서 "지금이라도 문 후보가 캠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이 문 후보의 '참모형 리더십'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인사는 "문 후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모'로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에 '끌기'보다는 '끌려다니기'에 더 익숙한 사람이다"며 "현재 문 후보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이런 참모형 리더십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송기영 기자 rckye@

관련기사 3·4면

민주 자초 단일화 파행… 결국 부메랑?

文 "제가 대신해서 사과… 중단돼 국민께 죄송"
安 "깊은 실망" 사실상 수용거부… 장기화 조짐

(전략) 문 후보 캠프는 전날 심야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대책회의를 갖는 등 해법 모색에 나섰다.

그러나 안 후보는 문 후보의 사과 발언 이후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깊은 실망을 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단일화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며 "단일화를 경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결과로 이기는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 측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안철수 양보론', 여론조사를 앞둔 조직적인 세몰이 등을 "낡은 구태정치"로 규정하고 문 후보 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거듭 요구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캠프에 참 실망스럽다"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단일화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양측이 가합의한 '새정치공동선언'의 발표 시점도 오리무중이다.

특히 단일화 중단이 장기화됨으로써 두 후보가 밝힌 '후보등록(25일) 전까지 단일화'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 자초 단일화 파행… 결국 부메랑?

文 "제가 대신해서 사과… 중단돼 국민께 죄송"

安 "깊은 실망" 사실상 수용거부…장기화 조짐

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중단된 지 2일째를 맞은 15일 단일화 협상 파행 사태로 대선 정국이 휘청거리고 있다.

안 후보 측의 '협상 중단 선언'으로 양측의 협상 테이블이 열리지 못한 채 문 후보의 사과를 안 후보가 사실상 거부하면서 '협상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중구 전국해상산업노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혹여라도 우리 캠프 사람들이 뭔가 저쪽(안 후보 쪽)에 부담을 주거나 자극하거나 불편하게 한 일들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단일화 협상 곳곳에 암초는 있게 마련인데 이렇게 모이자마자 중단되는 모습을 보여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문 후보 캠프는 전날 심야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대책회의를 갖는 등 해법 모색에 나섰다.

그러나 안 후보는 문 후보의 사과 발언 이후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깊은 실망을 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단일화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며 "단일화를 경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결과로 이기는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 측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안철수 양보론', 여론조사를 앞둔 조직적인 세몰이 등을 "낡은 구태정치"로 규정하고 문 후보 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거듭 요구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캠프에 참 실망스럽다"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단일화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양측이 가합의한 '새정치공동선언'의 발표 시점도 오리무중이다.

특히 단일화 중단이 장기화됨으로써 두 후보가 밝힌 '후보등록(25일) 전까지 단일화'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희훈 기자 realyhh@

분열 아이콘 '親盧 패권'에 국민 등 돌린다

安 양보론 · 파트너 흠집내기 등 '전형적 계파주의' 단일화 중단 원인으로… 당 내부선 자성 목소리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 잠정 중단 사태에 대한 핵심 원인으로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의 부활이 꼽히고 있다.

'친노 패권주의'는 그동안 야권을 분열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진영의 승리보다 계파의 이익을 먼저 따진다'며 친노 세력은 '분열의 아이콘'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손학규 후보는 "당이 공중분해 위기에 처했다"며 "더 직접적으로 말해 친노 패권주의가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고 정권교체의 희망을 가물가물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 된 후 문 후보에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는 '친노 색깔 빼기'였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비노(비노무현)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용광로 선대위'를 꾸리고 탈계파의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캠프에서 실권을 쥐고 핵심 역할을 하는 실무진에는 친노 인사가 대거 포진해 '친노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중략)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우리만 잘못한 것이냐', '그런 문제 가지고 협상을 중단하기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조금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한 부분이 있었다면 책임있는 조치를 포함해 대승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범야권에서는 두 캠프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법학)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 안철수 캠프가 각자 역량을 총동원해 단일후보가 되도록 노력하는 건 당연하

다"며 "문은 정당 조직을 활용하고 안은 바람으로 여론몰이를 해야 하는데, 이때 자기의 강점과 경쟁 후보의 약점을 강조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를 넘어 우리는 '순수와 정의', 상대는 '불순과 불의'라고 단정하고, 나아가 상대가 되느니 '박근혜가 되는게 낫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모두 망한다"고 지적했다.

분열 아이콘 '親盧 패권'에 국민 등 돌린다

安 양보론·파트너 흠집내기 등 '전형적 계파주의' 단일화 중단 원인으로… 당 내부선 자성 목소리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 잠정 중단 사태에 대한 핵심 원인으로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의 부활이 꼽히고 있다.

'친노 패권주의'는 그동안 야권을 분열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진영의 승리보다 계파의 이익을 먼저 따진다'며 친노 세력은 '분열의 아이콘'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손학규 후보는 "당이 공중분해 위기에 처했다"며 "더 직접적으로 말해 친노 패권주의가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고 정권교체의 희망을 가물가물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 된 후 문 후보에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는 '친노 색깔 빼기'였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비노(비노무현)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용광로 선대위'를 꾸리고 탈계파의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캠프에서 실권을 쥐고 핵심 역할을 하는 실무진에는 친노 인사가 대거 포진해 '친노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문 캠프에서 실무를 담당한 친노(친노무현) 핵심 9명은 "정권교체의 노둣돌(말에 오르거나 내릴 때 발돋움하기 위해 놓는 큰 돌)이 되겠다"며 지난달 21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괄 퇴진했다.

하지만 '단일화 협상 파행'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안철수 양보론'과 '협상 파트너 흠집내기'는 전형적인 계파주의의 모습으로 지적되며 '친노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친노 진영의 계파주의 행동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효석 전 민주당 의원은 15일 "아직도 두 사람의 만남을 세력통합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후보 단일화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며 "후보 단일화로 받아들이는 순간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지상과제가 되어 버리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두 후보가 만난 것은 승자와 패자로 갈리는 게임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런 일을 어떻게 분담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한다"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존중과 배려에서 신뢰는 시작되고 협상의 베이스에 파트너십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우리만 잘못한 것이냐', '그런 문제 가지고 협상을 중단하기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조금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한 부분이 있었다면 책임있는 조치를 포함해 대승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범야권에서는 두 캠프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법학)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안철수 캠프가 각자 역량을 총동원해 단일후보가 되도록 노력하는 건 당연하다"며 "문은 정당 조직을 활용하고 안은 바람으로 여론몰이를 해야하는데, 이때 자기의 강점과 경쟁 후보의 약점을 강조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를 넘어 우리는 '순수와 정의', 상대는 '불순과 불의'라고 단정하고, 나아가 상대가 되느니 '박근혜가 되는게 낫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모두 망한다"고 지적했다.

/윤희훈 기자

민주 구태정치에 선 긋는 안철수

安 "단일화를 경쟁으로만 보면 대선 승리 못해"
흑색선정·조직 세몰이 등에 책임 있는 조치 요구

(전략)안 후보는 문 후보가 민주당 내의 '옛날 방식의 정치경쟁'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문 후보와 서로 (후보 등록일 전 단일화를 위한) 7개항을 공동으로 합의한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계속 매일 이런 일들이 있어서 문 후보께 알리라고 한 부분도 있었는데, (통화를 해) 보니까 보고를 못 받으셨더라"며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문 후보 측에 '가시적인 조치와 책임'을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안 후보 캠프는 문 후보 측의 '안철수 양보론' 등 마타도어(흑색선전)와 조직적 세몰이, 여론조사 영향력 행사 등을 '구태 정치'로 규정하고,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단일화 진전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문 후보의 직접 사과에 대해 "문 후보의 발언보다 제 심경을 말하겠다"면서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어 "단일화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을 통해 양 지지자를 설득해야 한다"면서 "단일화를 경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결과로 이기는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사실상 문 후보의 직접 사과를 수용하지 않고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그만큼 안 후보 자신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 후보가 직접 단일화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측의 단일화 협상 파행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민영 대변인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가 받는 제보에 근거해보면 그런 것들(민주당 측의 '안철수 양보론' 문자 살포 등)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옛날 기성정치의 방식으로 동원하고 줄세우기하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서로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대충해서 단일화 합의를 하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문 후보 측을 압박했다.

안 후보 실무단은 매주 월·목 열리는 실무회의에서도 캠프의 강경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의 현재 모습은 새 정치와 거리가 있으며, 문 후보 진영이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안 후보 측이 '구태 정치'로 규정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단일화를 진행하면 향후 새 정치를 표방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은 안 후보의 존립 근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안 후보 측은 단일화가 초반부터 파행을 빚은 것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 캠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면전환용' 단일화 중단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후략)

민주 구태정치에 선 긋는 안철수

安 "단일화를 경쟁으로만 보면 대선 승리 못해"
흑색선전·조직 세몰이 등에 책임있는 조치 요구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5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화 룰 협상' 중단 이후 단일화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의 거듭된 사과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전날밤 문 후보와의 통화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있어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짧게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옛날 방식의 정치경쟁,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결과 위주로,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경쟁상대로만 바라보는 관점들, 그런 관점이 바닥에 깔려 있으면 거기서 온갖 문제가 파생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문 후보가 민주당 내의 '옛날 방식의 정치경쟁'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문 후보와 서로 (후보 등록일 전 단일화를 위한) 7개항을 공동으로 합의한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계속 매일 이런 일들이 있어서 문 후보께 알리라고 한 부분도 있었는데, (통화를 해) 보니까 보고를 못 받으셨더라"며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문 후보 측에 '가시적인 조치와 책임'을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안 후보 캠프는 문 후보 측의 '안철수 양보론' 등 마타도어(흑색선전)와 조직적 세몰이, 여론조사 영향력 행사 등을 '구태 정치'로 규정하고,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단일화 진전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문 후보의 직접 사과에 대해 "문 후보의 발언보다 제 심경을 말하겠다"면서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어 "단일화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을 통해 양 지지자를 설득해야 한다"면서 "단일화를 경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결과로 이기는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사실상 문 후보의 직접 사과를 수용하지 않고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그만큼 안 후보 자신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 후보가 직접 단일화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측의 단일화 협상 파행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민영 대변인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가 받는 제보에 근거해보면 그런 것들(민주당 측의 '안철수 양보론' 문자 살포 등)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옛날 기성정치의 방식으로 동원하고 줄세우기하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서로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대충해서 단일화 합의를 하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문 후보 측을 압박했다.

안 후보 실무단은 매주 월·목 열리는 실무회의에서도 캠프의 강경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의 현재 모습은 새 정치와 거리가 있으며, 문 후보 진영이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안 후보 측이 '구태 정치'로 규정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단일화를 진행하면 향후 새 정치를 표방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은 안 후보의 존립 근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안 후보 측은 단일화가 초반부터 파행을 빚은 것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 캠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면전환용' 단일화 중단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 본부장은 "이번 협상 중단선으로 우리 측이 손해 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치공학적 접근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정치 개혁이라는 것은 모든 선거 과정에서 이뤄지지 못하면 선거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한 것도 함께 혁신하자고 하고 정 반대의 모습을 (문 후보측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임지연 기자 reah@

野단일화 협상 중단에 네티즌 비판 여론 확산

"文 흑색선전만… 권력집착 스토커 같다"

"정책 사라지고 지지율 · 모금액 경쟁만"
일부 유권자들, 단일화 피로감 호소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여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중단되면서 '야권 단일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는 15일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협상 중단 관련 반응들이 뜨거웠고, 양측의 지지자들 사이에는 설전이 오갔다.

일부 네티즌들은 문 후보에게 "협상이 아닌 흑색선전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이디 @junXXXX는 "문 후보, 단일화 협의는 안하고 '자기가 여론 조사 우세다', '안 후보가 양보할 듯'이라며 언론플레이만하고 있다"면서 "이러니 안 후보 심기가 틀어졌다. 대체 뭐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아이디 @leeXXXX는 "문 후보가 권력욕 때문에 안 후보에게 집착하는 것이 마치 스토커같다"고 평했다.

이 외에도 "문죄인 되지 않기를", "이러다가는 후보단일화고 뭐고 간에 선거 패배하는거 아닌지 걱정된다"는 글도 있었다.

만화가 강풀씨는 전날(14일) 문 후보의 트위터에 지지한다는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을 읽은 네티즌들에게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반면 문 후보의 지지자들은 안 후보측이 주장하고 있는 정당 조직 가동설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野단일화 협상 중단에 네티즌 비판 여론 확산

"文 흑색선전만… 권력집착 스토커 같다"

"정책 사라지고 지지율·모금액 경쟁만"
일부 유권자들, 단일화 피로감 호소도

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중단되면서 '야권 단일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는 15일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협상 중단 관련 반응들이 뜨거웠고, 양측의 지지자들 사이에는 설전이 오갔다.

일부 네티즌들은 문 후보에게 "협상이 아닌 흑색선전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이디 @jumXXXX는 "문 후보, 단일화 협의는 안하고 '자기가 여론 조사 우세다', '안 후보가 양보할 듯'이라며 언론플레이만하고 있다"면서 "이러니 안 후보 심기가 틀어졌다. 대체 뭐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아이디 @leeXXXXX는 "문 후보가 권력욕 때문에 안 후보에게 집착하는 것이 마치 스토커같다"고 평했다.

이 외에도 "문죄인 되지 않기를", "이러다가는 후보단일화고 뭐고 간에 선거 패배하는거 아닌지 걱정된다"는 글도 있었다.

만화가 강풀씨는 전날(14일) 문 후보의 트위터에 지지한다는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을 읽은 네티즌들에게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반면 문 후보의 지지자들은 안 후보측이 주장하고 있는 정당 조직 가동설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아이디 @KwoXXXX는 "무소속 출마는 당신이 선택한 것"이라면서 "근데 이제와서 대선후보가 당 조직 가동하지 말라고?"라고 지적했다. @OriXXXXX 역시 "당의 후보를 돕기 위해 당원과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낡은 정치??"라며 의문을 표시했다.

또 @julXXXXXX은 "안 후보의 단일화 협상중단으로 여론이 안 후보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면서 "간을 많이 봤다"고 했다.

그러나 야권 단일화 협상 중단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낸 모습이다. 뚜렷한 성과 없이 협상만 질질 끄는 상황에 유권자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더욱 극심해진 것이다.

아이디 @vinXXXXXX는 문 후보의 "야권 단일화 , 뚜벅뚜벅 대범하게 해야"한다는 말에 대해 "말이좋아 뚜벅뚜벅이지 펀드모집에 열올리시는 문·안 후보를 보면, 정책은 사라지고 '지지율'과 '모금액'경쟁만 돋보인다"고 지적했다.

/진경진 기자 jkjin@

새누리, 文에 십자포화 "민주 전매특허는 여론 왜곡"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맹공

"안철수, 민주 재집권 불쏘시개 덫에 걸려"

"문재인·친노 변호사들과 신용불량자 등골 빼먹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2연평해전, 천안함 전사자 유족의 방문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영석씨(제2연평해전 서후원 중사 부친), 박 후보, 윤정자(천안함 민평기 상사 모친)·황은대(제2연평해전 황도현 중사 부친)씨. /이병화 기자 photolbh@

새누리당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정조준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단일화 마감 시한으로 잡은 후보등록 마감일인 오는 26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보다 문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를 벌이는 모양새다. 이는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한데다 '단일화 성사 시 문 후보로 단일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당내에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야권의 후보 단일화 시도 자체를 '안철수 불쏘시개'를 이용한 '친노(친노무현) 부활 프로젝트'로 규정해 안 후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15일 안 후보 측의 야권 단일화 협상중단 선언과 관련, "새누리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안 후보가 민주당의 재집권 구도에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그 예견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안 후보가 이제야 민주통합당의 덫에 걸린 사실을 깨달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안 후보의 협상중단 선언은 이 같은 깨달음의 결과"라며 "안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 응하는 순간부터 이 같은 결과는 예정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 입장에서 볼 때 안 후보는 애당초 같은 식구가 아니었다"며 "마타도어(흑색선전) 퍼뜨리기, 인신공격, 여론조사 왜곡시도 등은 민주당의 전매특허로, 안 후보가 자신의 의도대로 여론조사만을 통한 단일화에 합의하더라도 친노 전문가들이 이길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본부장은 또 문 후보가 재직한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수임료로 받은 것과 관련, 이를 '신불자 게이트'로 규정해 대대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부산'과 친노 성향 법무법인이 신용불량자 채권소멸 시효연장과 관련한 일감을 싹쓸이했다면서 "문 후보와 친노 변호사 친구들이 신용불량자들의 등골을 빼내 자신들의 잇속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재인 때리기'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며 "안 후보에 대한 견제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백대우 기자 run4free@

새누리, 文 에 십자포화 "민주 전매특허는 여론 왜곡"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맹공

"안철수, 민주 재집권 불쏘시개 덫에 걸려" "문재인·친노 변호사들과 신용불량자 등골 빼먹어"

새누리당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정조준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단일화 마감 시한으로 잡은 후보등록 마감일인 오는 26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보다 문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를 벌이는 모양새다. 이는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한데다 '단일화 성사 시 문 후보로 단일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당내에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중략)

그는 '부산'과 친노 성향 법무법인이 신용불량자 채권소멸 시효연장과 관련한 일감을 싹쓸이했다면서 "문 후보와 친노 변호사 친구들이 신용불량자들의 등골을 빼내 자신들의 잇속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재인 때리기'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며 "안 후보에 대한 견제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文 '신불자 게이트' PK민심 이반 조짐

새누리, '부산저축銀·캠코 관련 수임료 특혜' 맹공
PK지역 지지율 하락세로… 文 "전형적 흑색선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신용불량자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부산·울산·경남(PK) 민심 잡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16일 발표한 일간 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는 PK지역에서 38.4% 지지율을 얻어 전주(40.8%)보다 소폭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지 않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PK지역에서의 문 후보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문재인과 친노(친노무현) 변호사 친구들의 신불자 게이트'로 규정하고 '새누리당 문재인 서민착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문재인 서민착취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문 후보의 지지율 변화 가능성에 대해 가상준 단국대 교수(정치학)는 1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PK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문 후보의 이번 사태가 PK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문 후보가 이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친노 성향의 변호사들이 퇴출된 부산저축은행과 캠코(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소멸 시효 연장 소송 수임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등 정부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문재인 서민착취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캠코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신용불량자들의 채권 시효연장을 위해 법무법인 부산에 약 700억원 가량의 수임료를 지급했다. 그 가운데 307억원을 친노 성향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들에게 지급했다. 이 기간 중 캠코 고문변호사 90여명 중 민변 출신은 50명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전국 변호사 중 민변 소속은 5% 불과하다. 특정 그룹에 수입이 집중된 것이다.(후략)

文 '신불자 게이트' PK민심 이반 조짐

새누리, '부산저축銀·캠코 관련 수임료 특혜' 맹공
PK지역 지지율 하락세로… 文 "전형적 흑색선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신용불량자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부산·울산·경남(PK) 민심 잡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16일 발표한 일간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는 PK지역에서 38.4% 지지율을 얻어 전주(40.8%)보다 소폭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지 않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PK지역에서의 문 후보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문재인과 친노(친노무현) 변호사 친구들의 신불자 게이트'로 규정하고 '새누리당 문재인 서민착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문재인 서민착취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문 후보의 지지율 변화 가능성에 대해 가상준 단국대 교수(정치학)는 1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PK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문 후보의 이번 사태가 PK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문 후보가 이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친노 성향의 변호사들이 퇴출된 부산저축은행과 캠코(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소멸 시효 연장 소송 수임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등 정부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문재인 서민착취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캠코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신용불량자들의 채권 시효연장을 위해 법무법인 부산에 약 700억원가량의 수임료를 지급했다. 그 가운데 307억원을 친노 성향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들에게 지급했다. 이 기간 중 캠코 고문변호사 90여명 중 민변 출신은 50명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전국 변호사 중 민변 소속은 5% 불과하다. 특정 그룹에 수입이 집중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캠코와 별도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정리하는 예금보험공사 산하 KR&C(옛 정리금융공사)에서도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송 선임료로 356억원을 지출하면서 이 가운데 113억 원을 민변 출신 변호사에게 몰아줬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2003년 7월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던 부산저축은행의 김양 대표이사 등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자 금감원 A국장에게 압력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금감원 간부에게 청탁한 혐의로 문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 박광온 대변인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며 "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의 해당 사건 수임 때 이미 퇴사했고, 소송 진행이나 이익 배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났다"고 해명했다. /진경진 기자 jkjin@

단일화에 목맨 文·安, 결국 테이블로

중단 장기화땐 '지지층 이탈 등 역풍' 우려
협상 재개돼도 등록일 전 성사여부 불투명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18일 전격 회동하면서 중단됐던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이 재개됐다.

안 후보가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언론사 인터뷰 등을 모두 취소하고 문 후보와의 회동에 대비했다.

유민영 캠프 대변인은 "빠른 시간 내에 두 후보가 만나도록 조광희 비서실장이 문 후보 측에 연락을 하고 있다. 시간은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안 후보는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후보 측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오늘 저녁 두 후보의 단일화 회동에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한 만큼 국민들의 열망에 답할 수 있는 결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면서 "그간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후보가 직접 단일화 논의 중단 사태 봉합에 나선 것은 단일화를 피하는 모양새를 보일 경우 지지층의 거센 역풍에 부딪혀 향후 대선 레이스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우상호 문 후보 측 공보단장은 "안 후보 측과 모든 협상 테이블을 총가동해서 주초부터는 단일화 국면으로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남은 기간이라도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국민의 희망이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안 후보가 요구해 온 '가시적인 정치 쇄신안'에 대해 문 후보측이 성의를 보인 것으로 풀이돼 향후 두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문 후보가 이날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안 후보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두 후보의 만남 이후 그동안 중단됐던 단일화 실무협상과 새정치공동선언, 정책 협의 등이 조속히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단일화 룰'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 논란… 두 대선후보의 속내는

단일화에 목맨 文·安, 결국 테이블로

중단 장기화땐 '지지층 이탈 등 역풍' 우려
협상재개돼도 등록일 전 성사여부 불투명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해찬 대표 사퇴 및 단일화 협상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병희 기자 photobyhr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금수장관광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언론사 합동인터뷰에서 활짝 웃고 있다. /연합

LH공사 유치 놓고 진주선 "차질없이 추진"
전주선 "빼앗긴 일 해결"

그때그때 다른 지역공약
'文 말바꾸기' 논란

목포~제주 해저터널도 도마에
與 "눈앞 이익 급급해 둘러대"

(전략)문 후보는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토지주택공사(LH공사) 유치 문제가 대표적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25일 경남 함안체육관에서 열린 경남 선거대책위 출범식에서 "LH공사 이전이 포함된 진주 혁신도시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로의 LH공사 이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보름전인 지난달 10일 LH공사 유치를 놓고 진주와 경합을 벌인 전북 전주를 방문해서는 다른 말을 했다.

문 후보는 전북도당에서 열린 '전북발전공약 전달, 핵심당원 및 시민캠프 간담회'에 참석해 "빼앗긴 LH공사를 저의 일처럼 해결해나가겠다"며 "참여정부와 제가 여러분께 진 빚을 확실히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빼앗겼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진주시로의 LH공사 이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말바꾸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논란에 문 후보는 지난 15일 창원을 찾아 "LH공사를 전북으로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북으로 이전시키겠다고 한 것인데 핵심 부서인 기금관리기구만 서울에 남기겠다고 했다"며 "전북에서는 기금관리기구까지 유치해야 LH공사의 빈 부분을 충당한다는 입장이었고 그 점을 최대한 돕겠다고 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LH공사 유치 놓고 진주선 "차질없이 추진" 전주선 "빼앗긴 일 해결"

그때그때 다른 지역공약 '文 말바꾸기' 논란

목포~제주 해저터널도 도마에
與 "눈앞 이익 급급해 둘러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8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 "신속한 타결을 위해 여론조사 방식이든 '여론조사+α'든 단일화 방안을 안 후보측이 결정하도록 맡기겠다"고 말해 단일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 후보의 제안을 '통 큰 결단'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문 후보는 16일 안 후보 측의 협상 중단에 대해 "크게 문제가 돼 판이 깨질만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안 후보와 정면 충돌했었다. 문 후보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 후보는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토지주택공사(LH공사) 유치 문제가 대표적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25일 경남 함안체육관에서 열린 경남 선거대책위 출범식에서 "LH공사 이전이 포함된 진주 혁신도시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로의 LH공사 이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보름전인 지난달 10일 LH공사 유치를 놓고 진주와 경합을 벌인 전북 전주를 방문해서는 다른 말을 했다.

문 후보는 전북도당에서 열린 '전북발전공약 전달, 핵심당원 및 시민캠프 간담회'에 참석해 "빼앗긴 LH공사를 저의 일처럼 해결해나가겠다"며 "참여정부와 제가 여러분께 진 빚을 확실히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빼앗겼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진주시로의 LH공사 이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말바꾸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논란에 문 후보는 지난 15일 창원을 찾아 "LH공사를 전북으로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북으로 이전시키겠다고 한 것인데 핵심 부서인 기금관리기구만 서울에 남기겠다고 했다"며 "전북에서는 기금관리기구까지 유치해야 LH공사의 빈 부분을 충당한다는 입장이었고 그 점을 최대한 돕겠다고 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도 '말바꾸기' 논란에 올랐다. 지난 7일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약속 16개항'을 발표하며 목포~제주간 해저터널 건설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반발했고, 신공항 건설 추진이라는 제주도와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에게 보고된 사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는 8일 제주를 찾아 "신공항이 우선이며 해저터널은 신공항 수요를 해소하지 못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문 후보는 말바꾸기의 달인"이라며 "눈앞의 정치적 이익에만 급급해 수시로 말을 바꾸는 문 후보에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배 기자 jayman1@

文 언론정책에 '진실성' 의구심

"언론자유 보장" 발언에 盧정부 '기자실 통 · 폐합' 비판 대두

(전략)이 같은 문 후보의 언론정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 언론탄압 조치인 '기자실 통·폐합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문 후보는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때 노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 언론의 비판이 심해지자 "특권과 유착, 반칙, 뒷거래 청산에 완강히 저항하는 집단이 언론"이라며 '몇몇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서 기사나 담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각 부처 기자실의 운영실태를 보고 받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방안의 주요 내용은 부처별 기자실을 없애 합동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와 취재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기자실을 3곳으로 통합하고 기자들이 직접 공무원을 취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공무원은 언론의 직접 취재는 대변인이나 공보관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응해야 하고, 전화 취재는 사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2005년 7월 대(對)언론소송을 지원하는 법률공단 설립을 추진했고 2005년 4월 '정책보도 모니터링제'를 통해 언론보도를 건전비판 · 정책참고보도 · 오보 · 문제성 보도로 분류해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끊임없이 언론과 마찰을 빚어 왔다.

정부의 언론에 대한 조치에 대해 기자들은 소속 매체의 성향을 막론하고 '말로만 취재지원, 사실상 취재통제'라며 "헌법상 권리인 취재 접근권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면서 통합브리핑센터 사용을 거부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인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5공 때도 없던 언론 탄압이다.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후략)

文 언론정책에 '진실성' 의구심

"언론자유 보장" 발언에 盧정부 '기자실 통·폐합' 비판 대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9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언론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하고 언론에 정치가 개입해 중립성을 해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5일 언론민주주의 회복 선언식에 참석해 "민주주의가 완전히 과거로 되돌아가는 걸 막아낸 게 언론 아닌가 싶다"면서 '언론을 정부 홍보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언론정책을 정언유착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 같은 문 후보의 언론정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 언론탄압 조치인 '기자실 통·폐합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문 후보는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때 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 언론의 비판이 심해지자 "특권과 유착, 반칙, 뒷거래 청산에 완강히 저항하는 집단이 언론"이라며 '몇몇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서 기사나 담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각 부처 기자실의 운영실태를 보고 받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방안의 주요 내용은 부처별 기자실을 없애 합동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취재지원 서비스 강화와 취재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기자실을 3곳으로 통합하고 기자들이 직접 공무원을 취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공무원은 언론의 직접 취재는 대변인이나 공보관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응해야 하고, 전화 취재는 사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2005년 7월 대(對)언론소송을 지원하는 법률공단 설립을 추진했고 2005년 4월 '정책보도 모니터링제'를 통해 언론보도를 건전비판·정책참고보도·오보·문제성 보도로 분류해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끊임없이 언론과 마찰을 빚어 왔다.

정부의 언론에 대한 조치에 대해 기자들은 소속 매체의 성향을 막론하고 '말로만 취재지원, 사실상 취재통제'라며 "헌법상 권리인 취재 접근권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면서 통합브리핑센터 사용을 거부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인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5공 때도 없던 언론 탄압이다.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은 5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의결해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고 기자들은 새로 마련된 통합브리핑실에서 정부 브리핑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등 저항을 계속했다. 이에 국정홍보처는 10월 기존 각 부처 기자실의 강제 폐쇄조치를 단행해 각 부처별 기자실이 없어졌고 길거리로 내몰린 기자들은 기존 기자실 출근투쟁으로 계속 대항했다.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는 "이 조치로 인해 언론의 정부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는 그 만큼 제한받게 됐다"며 "과거 군사정부의 무지막지한 언론탄압을 경험한 한국 언론은 민간정부 역시 교묘한 방식으로 언론에 재갈물리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태범 기자 bum@



“여론조사도 수용” 文 자신감… 믿는 건 조직 세몰이?

토론회서 “담판 통해서라도 단일화” 강조

선거캠프 “단일화하기만 하면 승리” 전망

민주당, 여론조사대비 당조직 풀가동 나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9일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 “안 후보 측이 원하면 여론조사 방식이라도 불가피하고, 더 시간에 쫓겨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도 쉽지 않다면 안 후보를 만나뵙고 담판을 통해서라도 단일화를 이루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 후보 캠프 내부에서도 비슷한 자신감이 보이고 있다. 캠프 내 인사들 중 상당수는 안 후보가 어떤 방식이든 단일화에만 응하기만 하면 승리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중략)

여론조사 대상을 2,000명으로 할 경우 오차범위는 ±2.2.%이다.

문·안 후보가 현재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단일화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주당의 조직이 동원되면 충분히 여론조사 승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조사원의 스타일이나 숙련도, 조사 매뉴얼 등에 따라 응답자들이 영향을 받아 발생할 수 있는 비표본오차의 경우 조작과 왜곡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당시 정 후보 측 대변인을 지낸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은 “조사기관 선정, 샘플링, 면접원의 조사, 데이터 입력, 통계적 분석 등 비표본오차가 표본오차보다 더 큰 문제”라며 “비표본오차가 개입하는 순간마다 조작 및 왜곡이 가능해 이 문제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깔끔하지 못한 승리를 거머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文, 복지재원 106조 확보는 허구"

전문가 "MB정부 세법 개정으로 세수 64兆 감소… 부자증세 조달방안 실효성 의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복지 재원 대책에 대해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이 특혜를 받고 있는 법인세율 재조정, 고소득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으로 연간 150조~160조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문 후보의 재원 마련 방안이 제대로 된 검토나 연구가 없는 허구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만큼 국세감면율을 낮추면 2017년에 약 8조원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세 감면율은 노무현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 12.5%로 낮아졌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15%대까지 뛰었다. 그러나 올해 이미 국세 감면율은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한 12%대로 낮아졌다.

따라서 국세 감면율을 낮춰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민주당 측 주장은 폐기해야할 위기에 놓였다.

또 문 후보가 주장하는 대기업 특혜 철회도 사실상 재원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일반론이다.

현재 총 30조원, 17개 조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은 최대 5조원 정도다. 이를 모두 철회한다고 해도 연간 5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되는데 그친다.

대기업 법인세도 현 정부 들어 22%로 낮아진 것을 25%로 되돌리자는 게 문 후보의 공약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동안 법인세 인하로 올해까지 33조8000억원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대기업 법인세가 25%로 인상돼도 연간 5조~6조원 정도의 세수가 더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100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까지 부자감세로 90조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단행한 직후였던 2009년에 예산정책처가 감세규모를 90조원으로 추산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문 후보가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10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동안 세법 개정으로 세금 수입이 63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문 후보가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증세방안의 경우도 세수 확보의 실효성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간이과세자 축소와 주식양도차익과세의 전면적 실시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모두 실시할 경우 연간 7조~8조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내년 이후 세수는 저성장으로 정부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기업 법인세 인상이나 고소득층 부가가세 등 '부자증세'가 세수 확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문 후보의 재원확보 방안만 놓고 보면 부자증세로 연간 150조~16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은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기업 활동의 축소를 우려해 가파른 증세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증세가 오히려 저소득층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후략)

"文, 복지재원 160조 확보는 허구"

전문가 "MB정부 세법 개정으로 세수 64兆 감소… 부자증세 조달방안 실효성 의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복지 재원 대책에 대해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이 특혜를 받고 있는 법인세율 재조정, 고소득자에 대한 부가가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으로 연간 150조~160조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문 후보의 재원 마련 방안이 제대로 된 검토나 연구가 없는 허구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만큼 국세감면율을 낮추면 2017년에 약 8조원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세 감면율은 노무현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 12.5%로 낮아졌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15%대까지 뛰었다. 그러나 올해 이미 국세 감면율은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한 12%대로 낮아졌다.

따라서 국세 감면율을 낮춰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민주당 측 주장은 폐기해야할 위기에 놓였다.

또 문 후보가 주장하는 대기업 특혜 철회도 사실상 재원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일반론이다.

현재 총 30조원, 174개 조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은 최대 5조원 정도다. 이를 모두 철회한다고 해도 연간 5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되는데 그친다.

대기업 법인세도 현 정부 들어 22%로 낮아진 것을 25%로 되돌리자는 게 문 후보의 공약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동안 법인세 인하로 올해까지 33조8000억원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법인세가 25%로 인상돼도 연간 5조~6조원정도의 세수가 더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100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까지 부자감세로 90조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단행한 직후였던 2009년에 예산정책처가 감세규모를 90조원으로 추산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문 후보가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10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세법 개정으로 세금 수입이 63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문 후보가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증세방안의 경우도 세수 확보의 실효성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간이과세자 축소와 주식양도차익과세의 전면적 실시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모두 실시할 경우 연간 7조~8조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내년 이후 세수는 저성장으로 정부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기업 법인세 인상이나 고소득층 부가가세 등 '부자증세'가 세수 확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문 후보의 재원확보 방안만 놓고 보면 부자증세로 연간 150조~16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은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기업 활동의 축소를 우려해 가파른 증세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증세가 오히려 저소득층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적 경제성장의 지원이라는 다소 상충하는 목표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며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의 대폭적 인상과 같은 가파른 증세정책에는 민간 투자와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결국 사회 취약계층을 더욱 어려운 경제적 처지로 내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영 기자

文 '통큰양보'는 포장된 통큰욕심?

TODAY FOCUS

文"한발 물러서자" 입장 변경
安측, 민주 단일화방식 부정

20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단일화 룰 협상에 날선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문 후보가 직접 가세했다.

문 후보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누가 봐도 양쪽이 한 발씩 물러서서 객관적 방안을 잘 마련했구나, 그 방식으로 하면 저쪽도 승복할 수 있겠구나 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단일화 문항이 필요하다"며 문 후보가 안 후보에게 '한 발씩 물러서기'를 주문했다.

문 후보가 안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것이라는 이른바 '맏형이미지'를 내세우며 '통 큰 양보'를 약속한지 하루가 채 안된 시점에서 말을 바꾼 것이다.

50년 전통의 정통야당의 대선 후보인 문 후보가 지나치게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자,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점잖게 말씀드리는데 '맏형'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는 문 후보 측이 룰 협상에서 실질적인 양보 없이 '통큰 양보'를 하는 '맏형'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을 비판한 발언이다.

유 대변인은 이어 문 후보가 토론회에서 "공론조사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식 등 안 후보 측 요구대로 다 받고 있다", "남은 것은 공론조사의 경우 패널 모집하는 방식과 여론조사 문항"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이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대의원의 경우 구성이 다양해 문 후보를 100% 지지하는 게 아닌 반면 안 후보 후원자는 적극적 지지층"이라면서 "안 후보측이 이를 뻔히 알면서 이런 안을 가져온 게 참으로 어이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해명에 나섰다.

유 대변인은 "안 후보 지지층은 조직된 것도 아니고 정치 경험이 없는 분도 많다. 강성·열성 지지자라고 할 수 없다"면서 안 후보 측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을 들고 왔다는 우단장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임지연 기자 reah@

>>2면에 계속 / 관련기사 3면

文 '통큰양보'는 포장된 통큰욕심?

文 "한발 물러서자" 입장 변경
安측, 민주 단일화방식 부정

(전략)문 후보가 안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것이라는 이른바 '맏형이미지'를 내세우며 '통 큰 양보'를 약속한지 하루가 채 안된 시점에서 말을 바꾼 것이다.

50년 전통의 정통야당의 대선 후보인 문 후보가 지나치게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자,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점잖게 말씀드리는데 '맏형'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는 문 후보 측이 룰 협상에서 실질적인 양보 없이 '통큰 양보'를 하는 '맏형'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을 비판한 발언이다.

유 대변인은 이어 문 후보가 토론회에서 "공론조사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식 등 안 후보 측 요구대로 다 받고 있다", "남은 것은 공론 조사의 경우 패널 모집하는 방식과 여론조사 문항"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이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대의원의 경우 구성이 다양해 문 후보를 100% 지지하는 게 아닌 반면 안 후보 후원자는 적극적

지지층"이라면서 "안 후보측이 이를 뻔히 알면서 이런 안을 가져온 게 참으로 어이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해명에 나섰다.

유 대변인은 "안 후보 지지층은 조직된 것도 아니고 정치 경험이 없는 분도 많다. 강성·열성 지지자라고 할 수 없다"면서 안 후보 측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을 들고 왔다는 우 단장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무늬만 큰형님'… 文 리더십 다시 도마위에

安측과 파열음 지속… 盧정부 국정 조율도 한계 노출
경선불공정 시비·'이해찬 상왕설' 등 대표성 떨어져

(전략)지난 9월 민주당 경선 당시 손학규 후보는 "투표율 45%짜리, 기권의 의사표시가 용납되지 않고 조직된 모바일 세력이 당심과 민심을 왜곡하는 경선을 만들어냈다"며 "경선 연설도 하기 전에 대부분의 투표가 끝나는 기상천외의 경선방식을 개발했다"고 비판하는 등 당 지도부가 문 후보의 경선을 지원해 불공정 경선이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안 후보 측 쇄신요구로 민주당 지도부가 사퇴한데 대해 문 후보의 리더십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이해찬 대표에게 끌려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18일 "이 대표의 사퇴는 타협이나 조정을 이뤄내지 못하는 정치력과 통솔력을 가진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라며 "한 석을 가진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대선 한 달여를 앞두고 당 대표를 몰아내는 리더십과 통솔력으로는 국민에게 피해만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장은 지난달 24일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실세총리로 이해찬 대표가 굉장한 활동을 했다"며 "문 후보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이해찬은 문재인의 상왕노릇을 능히 할 만한 모습들과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 자신의 강점으로 꼽는 '청와대 국정경험'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부안 방폐장 부지 선정 문제와 화물연대·철도노조 파업, 천성산 터널공사 등의 현안에 적극 나섰지만 확실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갈등만 키웠다는 분석이다.(후략)



'무늬만 큰형님'… 文 리더십 다시 도마위에

安측과 파열음 지속… 盧정부 국정 조율도 한계 노출
경선 불공정 시비·'이해찬 상왕설' 등 대표성 떨어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과 재개 과정에서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일임하겠다"며 '통 큰 양보'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문 후보의 '큰형님' 이미지에 대해 실제로는 '무늬만 큰형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문 후보의 리더십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 후보는 20일 단일화 논의의 핵심인 룰 협상과정에서 안 후보 측이 제시한 방안을 "불리한 룰"이라며 사실상 거부해 안 후보 측으로부터 "통 큰 양보는 없었다"고 비판받았다.

또 문 후보가 안 후보와 단일화 담판 가능성을 시사하며 "100만 선거인단이 선출한 후보로 양보 불가능"이라고 강조했지만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시비, 당내 갈등과 분열로 인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9월 민주당 경선 당시 손학규 후보는 "투표율 45%짜리, 기권의 의사표시가 용납되지 않고 조직된 모바일 세력이 당심과 민심을 왜곡하는 경선을 만들어냈다"며 "경선 연설도 하기 전에 대부분의 투표가 끝나는 기상천외의 경선방식을 개발했다"고 비판하는 등 당 지도부가 문 후보의 경선을 지원해 불공정 경선이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안 후보 측 쇄신요구로 민주당 지도부가 사퇴한데 대해 문 후보의 리더십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이해찬 대표에게 끌려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18일 "이 대표의 사퇴는 타협이나 조정을 이뤄내지 못하는 정치력과 통솔력을 가진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라며 "한 석을 가진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대선 한 달여를 앞두고 당 대표를 몰아내는 리더십과 통솔력으로는 국민에게 피해만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장은 지난달 24일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실세총리로 이해찬 대표가 굉장한 활동을 했다"며 "문 후보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이해찬은 문재인의 상왕노릇을 능히 할 만한 모습들과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 자신의 강점으로 꼽는 '청와대 국정경험'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부안 방폐장 부지 선정 문제와 화물연대·철도노조 파업, 천성산 터널공사 등의 현안에 적극 나섰지만 확실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갈등만 키웠다는 분석이다.

'천성산 지킴이'로 알려진 지율 스님은 지난 6월 문 후보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 기술된 천성산 터널공사 관련 내용을 문제삼고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불교계 사안으로 만든 것은 참여정부였다"며 "갈등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한 사건과 다름이 아니다"면서 문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문 후보가 2007년 비서실장 당시 핵심적인 내용들이 타결된 '주한미군기지 반환 협상'에 대해서도 '졸속적인 반환절차, 반환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로 국회 정문희가 열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환경부 등 부처 사이의 이견 조율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한미 간의 합의 조차 지켜지지 않는 일방적인 기지반환절차 종료, 오염기지에 대한 치유합의도 없이 진행되는 반환합의협상, 미군기지 오염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차단과 기만 등 정부당국은 반환미군기지 협상과정에서 최소한의 환경주권을 내버려왔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 선대위에서 총무본부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펀드를 총괄하고 있다. /최태범 기자 bum@

"문재인은 옹졸하다"

與 "탐욕스런 신경전, 국민 피곤" 비난

새누리당은 20일 야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태도에 대해 "옹졸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 공동 대변인은 "문 후보는 단일화 방식을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맡기겠다고 하고는 협상테이블에서는 옹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안 후보가 제시한 방식이 불리하기 때문에 못받겠다며 퇴짜를 놓고는 안 후보를 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또 "(후보 단일화는) 한 후보가 필연코 퇴출당해야 하는 만큼 양 진영에서 아름답지 못한 말을 주고 받으며 서로 삿대질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면서 "이런 두 후보 진영의 티격태격은 오로지 각자의 유불리만 따지는데서 비롯됐다"고 했다.

그는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고 정치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만 바라보고 가겠다던 문·안 후보의 의중에는 유불리만 있을 뿐 국민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은 옹졸하다"

與 "탐욕스런 신경전, 국민 피곤" 비난

새누리당은 20일 야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태도에 대해 "옹졸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 공동 대변인은 "문 후보는 단일화 방식을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맡기겠다고 하고는 협상테이블에서는 옹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안 후보가 제시한 방식이 불리하기 때문에 못받겠다며 퇴짜를 놓고는 안 후보를 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또 "(후보 단일화는) 한 후보가 필연코 퇴출당해야 하는 만큼 양 진영에서 아름답지 못한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 삿대질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면서 "이런 두 후보 진영의 티격태격은 오로지 각자의 유불리만 따지는데서 비롯됐다"고 했다.

그는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고 정치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만 바라보고 가겠다던 문·안 후보의 의중에는 유불리만 있을 뿐 국민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는 선전용으로 국민을 이야기할 뿐이지 사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두 후보 측은 탐욕스러운 신경전으로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면서도 여전히 정치쇄신을 입에 올리고 있으니 위선도 보통 위선이 아니고 기만도 보통 기만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두 후보는 대선이 이제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싸우느라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전과 정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대선후보 사퇴 거래만 몰두하며 헐뜯고 싸움만 하는 문·안 두 진영이 이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은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경진 기자 jkjin@

"문재인 '盧 NLL 발언' 거짓 가능성"

정옥임 새누리 대변인, 녹취록 확인 월간지 증언 인용

"대선 타격 걱정하나 대화록 열람 수용해 통 큰 모습 보여달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또다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다. NLL에 관련한 문 후보의 발언이 거짓 증언이거나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일성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남한엔 아직도 NLL을 영토선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안보 지도로서의 NLL 대신 경제 지도를 긋자"는 등의 발언이 전해졌지만 문 후보가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63시티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문 후보는 이에 대해 "10·4 정상회담 때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것은 국정원과 통일부 장관에 의해 이미 확인 됐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녹취록을 확인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문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정옥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공동대변인은 "한 월간지 12월호 보도 내용을 읽으면 당시 대화 녹취록을 읽은 이들은 '너무 창피하고 화가나 다 읽을 수가 없었다', '교사한테 보고하는 학생 같았다. 김정일한테 칭찬 받으려고 애쓰는 형국이었다', '거의 매국노 수준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했다.

해당 월간지에 실린 증언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남한에는 아직도 NLL을 영토선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안보 지도가 아니라 경제 지도를 긋자'고 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그렇다면 NLL 관련법을 폐기하시오'하고 명령조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문재인 '盧 NLL 발언' 거짓 가능성"

정옥임 새누리 대변인, 녹취록 확인 월간지 증언 인용

"대선 타격 걱정하나 대화록 열람 수용해 통 큰 모습 보여달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또다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다. NLL에 관련한 문 후보의 발언이 거짓 증언이거나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일성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남한엔 아직도 NLL을 영토선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안보지도로서의 NLL 대신 경제 지도를 긋자"는 등의 발언이 전해졌지만 문 후보가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63시티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문 후보는 이에 대해 "10·4 정상회담 때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것은 국정원과 통일부 장관에 의해 이미 확인 됐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녹취록을 확인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문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정옥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공동대변인은 "한 월간지 12월호 보도 내용을 읽으면 당시 대화 녹취록을 읽은 이들은 '너무 창피하고 화가나 다 읽을 수가 없었다', '교사한테 보고하는 학생 같았다. 김정일한테 칭찬 받으려고 애쓰는 형국이었다', '거의 매국노 수준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했다.

해당 월간지에 실린 증언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남한에는 아직도 NLL을 영토선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안보 지도가 아니라 경제 지도를 긋자'고 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그렇다면 NLL 관련법을 폐기하시오'하고 명령조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통치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믿기도 어렵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증언이 사실이라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다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그리고 문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아 우리 국민들의 혼란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또 "민주당과 문 후보에게 묻는다"면서 "대화록 열람을 거부하고 버티는 까닭이 무엇이냐. 노 전 대통령의 굴욕적인 발언이 알려져 대선에서 타격을 받을까봐 걱정하기 때문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당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적인 비난이 두려워 숨긴다고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다"면서 "대화록 열람을 수용하고 문 후보가 그토록 강조한 통 큰 정치인의 모습을 진정성있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진경진 기자 jkjin@

"朴 출산 그림의 폭력·가학성 민주당 본래 속성과 일맥상통"

이정현 "민주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네거티브"

이정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20일 홍성담씨가 그린 '박근혜 출산 그림'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위해 네거티브를 대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딸이 아버지를 낳는다는 그림을 그려 선거에 이용하려는 이러한 풍자는 인륜을 넘어 천륜까지 거스르는 것으로 이렇게 상대 후보를 폄하해서라도 정권을 잡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그림은 '홍성담-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라는 풍자화다. 그림 속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수술대 위에서 환자복을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갓 태어난 아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하게 했다.

이 단장은 "이 그림과 민주당은 공통점이 있다"면서 "이 그림에서는 폭력성과 가학성, 잔인함이 드러나고 있고 민주당의 본래 속성도 급진성·과격성·모험성인데 하나도 다르지 않고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네거티브 중에서도 이 그림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네거티브 중에서도 이보다 더 할 수 없는 최악의 네거티브"라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또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 후보의 누드 패러디 사진을 게재했던 것을 거론하며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몇몇 분들이 과도한 열등의식, 여성비하, 정치보복 심리 등을 무의식중에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경진 기자

"朴 출산 그림의 폭력 · 가학성 민주당 본래 속성과 일맥상통"

이정현 "민주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네거티브"

이정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20일 홍성담씨가 그린 '박근혜 출산 그림'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위해 네거티브를 대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딸이 아버지를 낳는다는 그림을 그려 선거에 이용하려는 이러한 풍자는 인륜을 넘어 천륜까지 거스르는 것으로 이렇게 상대 후보를 폄하해서라도 정권을 잡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그림은 '홍성담-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라는 풍자화다. 그림 속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수술대 위에서 환자복을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갓 태어난 아이는 박정희 전대통령을 연상하게 했다.

이 단장은 "이 그림과 민주당은 공통점이 있다"면서 "이 그림에서는 폭력성과 가학성, 잔인함이 드러나고 있고 민주당의 본래 속성도 급진성 · 과격성 · 모험성인데 하나도 다르지 않고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네거티브 중에서도 이 그림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네거티브 중에서도 이보다 더 할 수 없는 최악의 네거티브"라고 지적했다.(후략)

‘버스 반발’ 불지른 文 등 책임 불가피

대선후보 3인 모두 찬성… 文은 공약으로까지
2005년 盧정부, 택시운행 면허자격 조건 낮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을 통과시켜 비난을 사고 있다. 택시법은 12·19 대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민원성 법안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택시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법 개정에 반대해 온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버스업계는 22일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택시법 통과에는 대선 주자 빅3가 적극 나섰다. 대선 주자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택시법 통과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문 후보는 지난 4일 전북 익산역에서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택시가 이제는 값비싼 교통수단이 아니다. 자가용 없는 분들은 누구나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대중교통수단”이라며 택시 대중교통화를 공헌했다. 법사위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택시의 대중교통화는 민주당 당론이고 문 후보의 공약”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택시대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취업 기회를 늘린다는 이유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해 택시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 개정안은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또 2006년 무분별한 택시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려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부딪혀 실패한 바 있다. 문 후보는 택시 총량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버스운송 조합회 측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하려는 것은 실패한 택시 정책의 책임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지난달 22일 택시업계와 만나 제한적이지만 택시의 대중교통 진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16일 택시기사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택시의 대중교통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적극 검토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송기영 기자 rckye@

‘버스 반발’ 불지른 문 등 책임 불가피

대선후보 3인 모두 찬성… 文은 공약으로까지
2005년 盧정부, 택시운행 면허자격 조건 낮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을 통과시켜 비난을 사고 있다. 택시법은 12·19 대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민원성 법안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택시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법 개정에 반대해 온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버스업계는 22일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택시법 통과에는 대선 주자 빅3가 적극 나섰다. 대선 주자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중략)

노무현 정부는 또 2006년 무분별한 택시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려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부딪혀 실패한 바 있다. 문 후보는 택시 총량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버스운송 조합회 측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하려는 것은 실패한 택시 정책의 책임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지난달 22일 택시업계와 만나 제한적이지만 택시의 대중교통 진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16일 택시기사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택시의 대중교통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적극 검토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저축銀 수임 의혹을 흑색선전으로 매도하다니…

저축銀 피해자들 "文, 대통령 될 자격없다"

김옥주 대책委長 "민주당 관계자 '고발취소' 회유 전화 두차례"

민주통합당 부산 지역 당직자가 개인적 친분을 이용, 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접촉해 두 차례 고발 취소를 청탁했다.

김옥주 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안면식이 있는 민주당 부산 지역 관계자로부터 지난 18일과 19일 두 번에 걸쳐 '고발을 취소해달라'는 (회유성)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새누리당이 제기한 금융감독원 청탁전화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수임 의혹에 대해 정치적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일에 입을 다물고 흑색선전이라며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후보의 청탁전화로 인해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 후보를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청탁전화 혐의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문 후보가 2003년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 수석비서관으로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할 때 경영개선 권고조치 등으로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전화를 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후보의 전화가 청탁성인가'라는 질문에 "2003년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조사가 이뤄질 때 부산저축은 대주주 박형선씨가 청와대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금감원 담당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전화한다는 것 자체는 업무상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박씨가 찾아간 그 자리에서 전화한다는 것은 청탁에 따른 압력성 전화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부산지검 공안부는 문 후보가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압력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지난 15일 김 위원장이 문 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태범 기자

부산저축銀 수임 의혹을 흑색선전으로 매도하다니…

저축銀 피해자들 "文, 대통령 될 자격 없다."

김옥주 대책委長 "민주당 관계자 '고발취소' 회유 전화 두차례"

민주통합당 부산 지역 당직자가 개인적 친분을 이용, 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접촉해 두 차례 고발 취소를 청탁했다.

김옥주 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안면식이 있는 민주당 부산 지역 관계자로부터 지난 18일과 19일 두 번에 걸쳐 '고발을 취소해 달라'는 (회유성)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새누리당이 제기한 금융감독원 청탁전화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수임 의혹에 대해 정치적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일에 입을 다물고 흑색선전이라며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후보의 청탁전화로 인해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 후보를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청탁전화 혐의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문 후보가 2003년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 수석비서관으로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할 때 경영개선 권고조치 등으로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전화를 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후략)



“두사람, 앞에선 형님·동생… 뒤에선 너죽고 나살자”

새누리, 문재인·안철수 단일화에 날선 비판
“한명 퇴출시점 달하자 서로 노골적 짓밟고 있다”

새누리당은 2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 각종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너 죽고 나 살기 식 이전투구’, ‘생존을 위한 단일화’라고 비판했다.

이상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 ‘저쪽이 뻔뻔하다’ 등 양 진영은 험한 말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얼굴을 할퀴느라 여념이 없다”며 “후보 사퇴 거래를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쌈박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유불리 따지지 않고 새정치를 향한 국민의 열망만 보고 가겠다’,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겠다’고 큰소리 친 게 얼마 전인데 유불리만 따지며 서로 삿대질하니 추악하다”며 “아름다운 단일화 운운하며 화장발을 선보였으나 한 명은 필연코 퇴출돼야하는 시점에 임박하자 노골적으로 상대를 짓밟으려는 탐욕적 맨얼굴을 드러냈다”고 비꼬았다.

그는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의 ‘맏형’ 발언에 대해서도 “맏형 이미지를 선점하려 했던 문 후보 측은 안 후보가 제시한 (단일화 방안을) 못받겠다 하더니 이제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하자고 한다. 협상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슬쩍 언론에 흘리면서 문 후보 측 입장을 일방 홍보하는 꼼수도 부린다”며 “안 후보 진영은 문 후보 측의 장난에 화가 많이 난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두 후보는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에서 현란한 미사여구로 국민을 위하는 척 할지 모른다. 하지만 오직 다른 한 후보를 (자신이) 불쏘시개로 쓸 흑심으로 가득할지 모른다”며 “(양측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옥임 대변인은 “말로는 새 정치를 주창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권력경쟁에만 매몰돼 서로 갈 데까지 가는 이전투구의 모습만 연출하고 있다”면서 “결국은 단일화할 것을 (그 과정에서) 결렬의 악순환을 반복해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데 이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한국정치에도 명백한 오명”이라고 지적했다.

안형환 대변인도 “(민주당은) 문 후보를 ‘100만 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후보라고 했는데 (후보 경선에 참여한) 100만 국민의 뜻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몇 천명의 뜻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며 “여론조사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뽑는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뽑힌 후보는 결국 ‘로또’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양측이 그렇게 외친 ‘국민의 뜻’, ‘국민공감’, ‘아름다운 단일화’는 어디 갔느냐”며 “결국 싸우다 싸우다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 선출하기로 하고, 이젠 그 방식 놓고 다투고 있으니 양측 처지가 공허하다”고 덧붙였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 같은 ‘파열음’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안 후보로 단일화 때 민주당이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문 후보로 단일화 때 안 후보의 지지기반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겉으로는) ‘큰 형님, 착한 동생’하면서도 밑에서는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열음을 내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백대우 기자 run4free@

“두 사람, 앞에선 형님 · 동생…
뒤에선 너죽고 나살자”

새누리, 문재인 · 안철수 단일화에 날선 비판
“한명 퇴출시점 달하자 서로 노골적 짓밟고 있다”

새누리당은 2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 각종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너 죽고 나 살기 식 이전투구’, ‘생존을 위한 단일화’라고 비판했다.

이상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 ‘저쪽이 뻔뻔하다’ 등 양 진영은 험한 말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얼굴을 할퀴느라 여념이 없다”며 “후보 사퇴 거래를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쌈박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유불리 따지지 않고 새정치를 향한 국민의 열망만 보고 가겠다’,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겠다’고 큰소리 친 게 얼마 전인데 유불리만 따지며 서로 삿대질하니 추악하다”며 “아름다운 단일화 운운하며 화장발을 선보였으나 한 명은 필연코 퇴출해야 하는 시점에 임박하자 노골적으로 상대를 짓밟으려는 탐욕적 맨 얼굴을 드러냈다”고 비꼬았다.(중략)

안형환 대변인도 “(민주당은) 문 후보를 ‘100만 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후보라고 했는데(후보 경선에 참여한) 100만 국민의 뜻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몇 천명의 뜻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며 “여론조사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뽑는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뽑힌 후보는 결국 ‘로또’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양측이 그렇게 외친 ‘국민의 뜻’, ‘국민공감’, ‘아름다운 단일화’는 어디 갔느냐”며 “결국 싸우다 싸우다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 선출하기로 하고, 이젠 그 방식 놓고 다투고 있으니 양측 처지가 공허하다”고 덧붙였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 같은 ‘파열음’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안 후보로 단일화 때 민주당이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문 후보로 단일화 때 안 후보의 지지기반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겉으로는) ‘큰 형님, 착한 동생’하면서도 밑에서는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열음을 내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무늬만 용광로' 文캠프

현안 불통의 소통본부장 한나라출신 조정식 의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가 '무늬만 용광로 선거대책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캠프가 온전히 하나로 통합되지 못해서다. 특히 문 후보와 경쟁했던 손학규 상임고문의 계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캠프 내에 용해되지 못한채 겉돌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문 후보 선대위 '민주캠프'에서 소통1본부장을 맡고 있는 3선의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사진)은 지난 9월 25일 선임된 이후 50여일 동안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통' 본부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언론과의 접촉도 피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조 의원은 2007년, 2012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손 상임고문을 지지했다. 그는 손 상임고문과 마찬가지로

움직임 없고 언론 접촉 최소
당적 옮겨가며 정치적 성장
3선이지만 당내 입지 약해

한나라당에 몸담은 경력이 있다. 그가 손 상임고문에게 붙는 '한나라당 출신' 딱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2012년 당내 경선에서 '손 상임고문이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약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까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02년 16대 대선 당시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캠프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무현 불가론'을 적극적으로 설파하기도 했다. 당시를 기억하는 새누리당 관계자는 "조 의원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 대한민국이 적화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의원이 당시 이회창 후보와 대립했던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3년 동안 칩거하면서 집 밖에 나오지 않은 점을 거론하면서 비방성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제정구 전 의원과 함께 꼬마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옮겼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풍이 불던 2004년 4·15 총선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여러 차례 당적을 옮기면서 정치인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8명의 후보 중 7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3선이지만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시아투데이는 조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같은 한나라당 출신으로 조 의원이 지지했던 손 상임고문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후 문 후보를 지원사격하는 대신 칩거에 들어갔다. 경쟁자였던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정세균 상임고문이 지방 일정까지 동행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과 사뭇 다른 행보다.

/박정배 기자 jayman1@

현안 불통의 소통본부장
한나라출신 조정식 의원

'무늬만 용광로' 文캠프

움직임 없고 언론 접촉 최소
당적 옮겨가며 정치적 성장
3선이지만 당내 입지 약해

(전략)조 의원은 2007년, 2012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손 상임고문을 지지했다. 그는 손 상임고문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에 몸담은 경력이 있다. 그가 손 상임고문에게 붙는 '한나라당 출신' 딱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2012년 당내 경선에서 '손 상임고문이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약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까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02년 16대 대선 당시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캠프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무현 불가론'을 적극적으로 설파하기도 했다. 당시를 기억하는 새누리당 관계자는 "조 의원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 대한민국이 적화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의원이 당시 이회창 후보와 대립했던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3년 동안 칩거하면서 집 밖에 나오지 않은 점을 거론하면서 비방성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제정구 전 의원과 함께 꼬마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옮겼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풍이 불던 2004년 4·15 총선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여러 차례 당적을 옮기면서 정치인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8명의 후보 중 7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3선이지만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후략)

文 공보단장 우상호의 '과잉'

맏형론 공개로 安측 비판 자초
공보단장 역할보다 대변인 노릇
각종 현안들 방향 제시도 못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의 무리한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우 단장은 지난 20일 단일화 방식 협상 내용을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이 먼저 언론에 흘렸다고 비판하는 브리핑에서 '맏형론'을 언급했다가 안 후보 측의 비판을 샀다.

그는 "우리가 맏형으로서 할 말이 있어도 참고 양보하고 인내했지만 이제는 방어차원에서 협상 내용을 공개할 수 밖에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점잖게 말씀드리는데 맏형 이야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에서 '맏형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후 "새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고 말했다.

우 단장의 '맏형론'은 문 후보의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 동시에 민주당이 '통 큰' 배려를 하는 '형님 이미지'를 굳히고 안 후보 측은 '떼쓰는 동생'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안 후보 측의 반발을 샀고, 경선을 협상에서 '통 큰' 양보가 없으면서 '선한 맏형' 이미지만 얻으려는 '욕심'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 단장은 21일에는 "(안 후보 측에서) 시간을 너무 끈다. 이번처럼 오래 끄는 협상은 처음 봤다"며 안 후보 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우 단장의 '맏형론'은 안 후보 측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386 후배격인 유민영 대변인의 반박에 우 단장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에서 연이어 대변인을 맡아온 최장수 '입'으로서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우 단장의 문 후보 선거대책위 내 역할도 모호하다. 공보단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대변인과 다를 바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종 현안에 대한 방향 제시나 이해관계 조정보다는 자신의 특기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입' 역할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배 기자

文 공보단장 우상호의 '과잉'

맏형론 공개로 安측 비판 자초
공보단장 역할보다 대변인 노릇
각종 현안들 방향 제시도 못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의 무리한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우 단장은 지난 20일 단일화 방식 협상 내용을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이 먼저 언론에 흘렸다고 비판하는 브리핑에서 '맏형론'을 언급했다가 안 후보 측의 비판을 샀다.

그는 "우리가 맏형으로서 할 말이 있어도 참고 양보하고 인내했지만 이제는 방어차원에서 협상 내용을 공개할 수 밖에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점잖게 말씀드리는데 맏형 이야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에서 '맏형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후 "새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고 말했다.

우 단장의 '맏형론'은 문 후보의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 동시에 민주당이 '통 큰' 배려를 하는 '형님 이미지'를 굳히고 안 후보 측은 '떼쓰는 동생'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안 후보 측의 반발을 샀고, 경선을 협상에서 '통 큰' 양보가 없으면서 '선한 맏형' 이미지만 얻으려는 '욕심'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 단장은 21일에는 "(안 후보 측에서) 시간을 너무 끈다. 이번처럼 오래 끄는 협상은 처음 봤다"며 안 후보 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우 단장의 '맏형론'은 안 후보 측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386 후배격인 유민영 대변인의 반박에 우 단장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에서 연이어 대변인을 맡아온 최장수 '입'으로서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우 단장의 문 후보 선거대책위 내 역할도 모호하다. 공보단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대변인과 다를 바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종 현안에 대한 방향 제시나 이해관계 조정보다는 자신의 특기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입' 역할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벌써 선거운동? 기호 2번 文 홍보차량 등장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한 것을 가정해 제작한 홍보용 유세차량 부스가 2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견됐다.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 신고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문구와 사진을 삭제 또는 철거했다.

파주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 길가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 문 후보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사진이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결과 파주지역의 모 홍보차량 제작업체가 차량을 만들어 500m가량 떨어진 공터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홍보부스에는 '아름다운 단일화!', '정권교체의 선택', '기호 2번'이라는 문구와 문 후보의 흑백 사진이 인쇄돼 있다.

파주선관위는 문제가 되는 '아름다운 단일화' 문구와 사진 등을 지우도록 조치했다.

/윤희훈 기자 realyhh@

벌써 선거운동? 기호 2번 文 홍보차량 등장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한 것을 가정해 제작한 홍보용 유세차량 부스가 2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견됐다.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 신고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문구와 사진을 삭제 또는 철거했다.

파주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 길가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 문 후보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사진이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결과 파주지역의 모 홍보차량 제작업체가 차량을 만들어 500m 가량 떨어진 공터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홍보부스에는 '아름다운 단일화!', '정권교체의 선택', '기호 2번'이라는 문구와 문 후보의 흑백사진이 인쇄돼 있다.

파주선관위는 문제가 되는 '아름다운 단일화' 문구와 사진 등을 지우도록 조치했다.

'단일' 김칫국

야권 단일화 TV토론을 앞둔 21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견된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문구가 들어간 민주통합당 유세차량 부스.



'단일' 김칫국 야권 단일화 TV토론을 앞둔 21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견된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문구가 들어간 민주통합당 유세차량 부스. /연합

文 공보 · 홍보라인은 아마추어?

잇단 말실수 취소하고 홈피 편향적 홍보물 삭제하고 공보단 폐쇄성 지적… 내부 보고도 실종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공보·홍보 라인이 '대형 사고'를 잇달아 저지르고 있다. 캠프 내부에서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앞둔 상황에서 공보·홍보 라인이 문 후보의 표를 깎아먹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22일 문·안 후보의 TV토론회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갖고 안 후보에 대해 "문 후보에 비해서는 한 수 아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진 대변인은 곧바로 "한 수 아래였다는 말씀을 취소하겠다"며 "TV토론을 보고 너무 취해서 경황이 없이 그런 발언을 하게 됐다"고 말을 바꿨다.

진 대변인은 전날 저녁 단일화 협상 과정을 브리핑하며 "안 후보 측이 '가상대결 조사 외에는 다른 방안에 응할 수 없다. 제발 가상조사 대결을 받아달라'고 얘기 했다"고 했다. 그는 잠시 후 "'제발'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한다"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은 이 표현을 문제 삼으며 진 대변인에 대한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그런 표현과 태도로 임한 적이 없고, 그런 허위사실을 말한 대변인의 사과와 자체적인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 분은 (문제되는 언행이) 누적되

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중략)

논란이 커지자 캠프는 이 게시물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공보·홍보 라인에서 이 같은 실책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공보·홍보 라인의 폐쇄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문 후보 캠프는 외부 공보위원을 영입하지 않고 우상호 공보단장과 대변인단·부대변인단, 대변인 행정실 실무진으로 소규모 공보단을 꾸렸다.

외부인사 한명 없이 기존 민주당 공보라인이 캠프 공보라인으로 이어지다 보니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보단이 소규모라 최근 업무량이 늘면서 사실상 공보단 간에도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보·홍보단을 소규모로 구성한 것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이었다"며 "사고가 빈번하니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하다. 최근에는 공보·홍보단 간에 정보 교류도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文 공보·홍보라인은 아마추어?

잇단 말실수 취소하고 홈피 편향적 홍보물 삭제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공보·홍보 라인이 '대형 사고'를 잇달아 저지르고 있다. 캠프 내부에서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앞둔 상황에서 공보·홍보 라인이 문 후보의 표를 깎아먹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22일 문·안 후보의 TV토론회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갖고 안 후보에 대해 "문 후보에 비해서는 한 수 아래였다"고 했다. 그러나 진 대변인은 곧바로 "한 수 아래였다는 말씀을 취소하겠다"며 "TV토론을 보고 너무 취해서 경황이 없이 그런 발언을 하게 됐다"고 말을 바꿨다.

진 대변인은 전날 저녁 단일화 협상 과정을 브리핑하며 "안 후보 측이 '가상대결 조사 외에는 다른 방안에 응할 수 없다. 제발 가상조사 대결을 받아달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그는 잠시 후 "'제발'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한다"며 수습에 나섰다.



'대선생활백서' 홍보물. /출처=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홈페이지.

그러나 안 후보 측은 이 표현을 문제 삼으며 진 대변인에 대한 '엄중조치'를 요구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그런 표현과 태도로 임한 적이 없고, 그런 허위사실을 말한 대변인의 사과와 자체적인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 분은 (문제되는 언행이) 누적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 후보가 최근 캠프 홈페이지에 올린 홍보물도 논란이 됐다. 캠프는 최근 모두 8건의 '대선생활백서'라는 홍보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송기영 기자 rckye@

>>기사 3면에 계속

>>1면 '文캠프는 아마'서 계속

공보단 폐쇄성 지적… 내부 보고도 실종

이 중 '직장동료 포섭하기'에는 싫어하는 직장 상사에 대해 "사람을 무시하고 힘으로만 하는 짓이 딱 ○○○ 지지자 같더라. ○○○ 지지자는 하나같이 다그래"라는 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는 내용이다.

'대선 왕따' 편에는 "선거철이 다가오자 특별한 이유없이 갑자기 친구들의 연락이 끊기는 현상,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모든 인간관계가 끊기는 경우도 있다!"고 쓰여 있고, '최후통첩'에는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이성친구에게 지지후보를 바꾸지 않으면 헤어지겠다는 마지막 경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홍보물에는 후보의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문 후보를 안 찍으면 왕따가 되고 연인하고 헤어지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냐"며 "'사람이 먼저'라던 문 후보가 어떻게 자신을 지지하지 않으면 왕따가 된다고 홍보하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캠프는 이 게시물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공보·홍보 라인에서 이 같은 실책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공보·홍보 라인의 폐쇄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문 후보 캠프는 외부 공보위원을 영입하지 않고 우상호 공보단장과 대변인단·부대변인단, 대변인 행정실 실무진으로 소규모 공보단을 꾸렸다.

외부인사 한명 없이 기존 민주당 공보라인이 캠프 공보라인으로 이어지다 보니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보단이 소규모라 최근 업무량이 늘면서 사실상 공보단 간에도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보·홍보단을 소규모로 구성한 것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이었다"며 "사고가 빈번하니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하다. 최근에는 공보·홍보단 간에 정보 교류도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송기영 기자 rckye@

절박한 文 '가상대결+적합도' 승부수

〈50%·安측 제안〉 〈50%·文측 제안〉

어제 담판 회동 결렬되자
'섞어찌개' 새협상안 제시
安측 "회의서 확인해 볼 것"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2일 사진전 관람을 위해 서울 동숭동 상명대 예술디자인센터에 입장하다 단일화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22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가상대결(50%)과 적합도(50%) 병행 실시'를 제안했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정치개혁과 단일화를 위한 문화예술인·종교인 모임이 성명을 내고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했다"며 "안 후보측이 제안한 가상대결을 50% 반영하고 우리가 제안한 후보적합도 50%를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우 단장은 "우리는 가상대결 문항에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국민들의 정권교체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이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 제안에 대해 안 후보 측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문 후보와 논의했나'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해결방식이 된다면 (문 후보가) 제안해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이 교착상태이나 우리는 안 후보 측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며 "수정안을 그쪽에서 받는다면 오늘 논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우 단장의 제안을 논의해 보겠다"면서 "(제안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논의에 대해 "문·안 후보나 양측 실무팀 접촉 모두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단일화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문·안 후보는 이날 오전 공개 양자회동을 갖고 단일화 방식 담판에 나섰으나 아무런 소득없이 결렬됐다.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와의 단일화 룰 협상을 위한 회동에 대해 "협의에 진전이 없었고, 두 후보의 결단이 남았다"면서 "안 후보는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안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단일화 방식에 대한 협의했다.

양측은 단일화 룰의 핵심쟁점인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 측은 "야권 단일 후보로 문 후보와 안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적합도 조사'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안 후보 측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상대로 각각 양자대결 조사를 실시해 더 높은 지지율을 얻는 후보를 단일후보로 뽑는 '가상 양자대결'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시기에 대해서도 문 후보 측은 금·토요일(23~24일), 안 후보 측은 토·일요일(24~25일)을 선호하고 있다.

문·안 후보는 담판회동을 위해 이날 아침 일찍 보고서를 검토하거나 선대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 후보는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윤희훈·임지연·최태범 기자 realyhh@

절박한 文 '가상대결+적합도' 승부수

어제 담판 회동 결렬되자 '섞어찌개' 새협상안 제시
安측 "회의서 확인해 볼 것"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22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에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가상대결(50%)과 적합도(50%) 병행 실시'를 제안했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정치개혁과 단일화를 위한 문화예술인·종교인 모임이 성명을 내고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했다"며 "안 후보측이 제안한 가상대결을 50% 반영하고 우리가 제안한 후보적합도 50%를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우 단장은 "우리는 가상대결 문항에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국민들의 정권교체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이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 제안에 대해 안 후보 측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문 후보와 논의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해결방식이 된다면(문 후보가) 제안해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이 교착상태이나 우리는 안 후보 측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며 "수정안을 그쪽에서 받는다면 오늘 논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우 단장의 제안을 논의해 보겠다"면서 "(제안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논의에 대해 "문·안 후보나 양측 실무팀 접촉 모두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단일화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문·안 후보는 이날 오전 공개 양자회동을 갖고 단일화 방식 담판에 나섰으나 아무런 소득없이 결렬됐다.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서울 공평동 진실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와의 단일화를 룰 협상을 위한 회동에 대해 "협의에 진전이 없었고, 두 후보의 결단이 남았다"면서 "안 후보는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후략)

文, 단일화토론서 '맏형 모습' 없었다.

누리꾼 "일임 한다면서 요구만… 구태정치 못 벗어" 일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1일 TV토론에서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시종일관 단일화 문제로 공세적인 자세를 보여 "일임한다면서 많은 요구를 했다", "맏형모습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후보는 토론회 시작인 모두발언부터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자신의 국정운영 경험을 강조하면서 대선 후보 적합성을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도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 했다.

그는 첫 주제인 정치분야 토론에서 안 후보에게 "단일화 협상팀이 지지부진한데 내일 당장이라도 만나보겠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이에 안 후보는 "만나서 좋은 방안이 도출되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문 후보는 "월요일부터 단일화 협상에 들어갔는데 진전이 없다"며 "안 후보 측이 공론조사와 여론조사를 하자고 해서 동의했는데, 공론조사 대상자 모집 방법과 여론조사 문항 등 처음 주장과 달라진게 없어 절충이 필요한데 안 후보가 동의해주면 안되느냐"면서 안 후보의 양보를 요구했다.(중략)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문 후보가 정치적인 문제나 단일화 문제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왔다"고 했고, 김성식 선대본부장은 "문 후보는 안 후보에게 여러 가지 양보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토론회를 시청한 전 모 씨(27·회사원·서울 강서구 화곡동)는 토론회 시청소감을 묻자 "그냥 단일화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했고, 김 모 씨(23·대학생·경기 성남)는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지적해온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트위터 아이디 'hanwo***' 이용자는 문 후보의 토론에 대해 "여유있는 형님의 태도를 보였으나 날카롭지 못한 동문서답"이라고 했다.

또 아이디 'supersniper****' 이용자는 "어제 문재인, 안철수의 토론을 보면 자기네 둘이서 어떻게든 야합하여 단일화하려는 내용만 주구장창 쏟아내고 국민은 자신들의 정권을 잡기 위한 도구로 밖에 생각 안됐다"고 말했다.



文, 단일화토론서 '맏형 모습' 없었다

누리꾼 "일임 한다면서 요구만… 구태정치 못 벗어" 일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1일 TV토론에서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시종일관 단일화 문제로 공세적인 자세를 보여 "일임한다면서 많은 요구를 했다", "맏형모습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후보는 토론회 시작인 모두발언부터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자신의 국정운영 경험을 강조하면서 대선 후보 적합성을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도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 했다.

그는 첫 주제인 정치분야 토론에서 안 후보에게 "단일화 협상팀이 지지부진한데 내일 당장이라도 만나보겠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이에 안 후보는 "만나서 좋은 방안이 도출되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문 후보는 "월요일부터 단일화 협상에 들어갔는데 진전이 없다"며 "안 후보 측이 공론조사와 여론조사를 하자고 해서 동의했는데, 공론조사 대상자 모집 방법과 여론조사 문항 등 처음 주장과 달라진게 없어 절충이 필요한데 안 후보가 동의해주면 안되느냐"면서 안 후보의 양보를 요구했다.(중략)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문 후보가 정치적인 문제나 단일화 문제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왔다"고 했고, 김성식 선대본부장은 "문 후보는 안 후보에게 여러 가지 양보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토론회를 시청한 전 모 씨(27·회사원·서울 강서구 화곡동)는 토론회 시청소감을 묻자 "그냥 단일화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했고, 김 모 씨(23·대학생·경기 성남)는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지적해온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트위터 아이디 'hanwo***' 이용자는 문 후보의 토론에 대해 "여유있는 형님의 태도를 보였으나 날카롭지 못한 동문서답"이라고 했다.

또 아이디 'supersniper****' 이용자는 "어제 문재인, 안철수의 토론을 보면 자기네 둘이서 어떻게든 야합하여 단일화하려는 내용만 주구장창 쏟아내고 국민은 자신들의 정권을 잡기 위한 도구로 밖에 생각 안됐다"고 말했다.

/최태범 기자 bum@

3. 주 의

의 결 번 호	2012대선11(자심)
언 론 사	경남매일신문 주식회사 경남 김해시 외동 1104번지 경남매일빌딩 대표이사 이 미 호
심의대상기사	경남매일 2012년 7월 16일자 3면 「김두관 지지율 꿈틀댄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특정 대선 후보 예정자의 지지율 상승 사실을 보도했으나, 해당 조사 실시 기관, 조사 일시,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결과 공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5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두관 지지율 꿈틀댄다

출마선언 전 2%→ 5%대…
“전반적 흐름 괜찮다” 자신감

민주통합당 김두관(사진) 전 경남지사가 지난 13일 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나자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 전 지사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난 8일 출마선언 전 지지율이 2%대였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5%대로 상승하면서 당내 주자 중 손학규 상임고문을 제치고 문재인 상임고문에 이어 2위로 올라선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이와 관련 그는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고 같이 일하는 분이 애를 태우고 있지만 조금씩 올라가니 신이 난다”며 “전반적 흐름이 괜찮다. (대선 경선이) 2파전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제 인지도가 30%인데 지지율이 5.5%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것”이라며 “인지도가 높아지면 지지율이 따라붙는 것은 어렵지 않다. 8월 중하순에는 10% 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지사는 당내 주자 중 자신의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확신하며, 표의 확장성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차별성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그는 “저는 영남 출신이면서도 호남의 지지를 받고, 진보개혁 진영으로 분류되면서도 중도층의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친노로 분류되면서도 비노의 지지도 있다”고 확장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 “박 전 위원장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후보가 김두관”이라며 박 전 위원장과 자신의 역정을 조목조목 비교했다.

그는 “저는 자치를 통해 정치를 배워온 사람이지만 박 전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통치를 통해 정치를 배운 사람이어서 근본적으로 다르

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생활고 해결을 위해 뼈다귀해장국집을 운영한 일화를 소개한 뒤 "박 전 위원장이 귀족을 상징한다면 저는 서민을 상징하고 있다"며 "서민의 정서나 약자의 어려움을 가장 잘 체화하고 있는 후보가 김두관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매일 2012년 7월 16일 월요일

김두관 지지율 꿈틀댄다

출마선언 전 2%→5%대… "전반적 흐름 괜찮다" 자신감

민주통합당 김두관(사진) 전 경남지사가 지난 13일 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나자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 전 지사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난 8일 출마선언 전 지지율이 2%대였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5%대로 상승하면서 당내 주자 중 손학규 상임고문을 제치고 문재인 상임고문에 이어 2위로 올라선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이와 관련 그는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고 같이 일하는 분이 애를 태우고 있지만 조금씩 올라가니 신이 난다"며 "전반적 흐름이 괜찮다. (대선 경선이) 2파전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제 인지도가 30%인데 지지율이 5.5%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것"이라며 "인지도가 높아지면 지지율이 따라붙는 것은 어렵지 않다. 8월 중하순에는 10% 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위원장과 근본적으로 달라"

김 전 지사는 당내 주자 중 자신의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확신하며, 표의 확장성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차별성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그는 "저는 영남 출신이면서도 호남의 지지를 받고, 진보개혁 진영으로 분류되면서도 중도층의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친노로 분류되면서도 비노의 지지도 있다"고 확장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 "박 전 위원장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후보가 김두관"이라며 박 전 위원장과 자신의 역정을 조목조목 비교했다.

그는 "저는 자치를 통해 정치를 배워온 사람이지만 박 전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통치를 통해 정치를 배운 사람이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생활고 해결을 위해 뼈다귀해장국집을 운영한 일화를 소개한 뒤 "박 전 위원장이 귀족을 상징한다면 저는 서민을 상징하고 있다"며 "서민의 정서나 약자의 어려움을 가장 잘 체화하고 있는 후보가 김두관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구 기자〉

의 결 번 호	2012대선14(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일요시사신문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07-2 대표이사 이 용 범
심의대상기사	일요시사 2012년 7월 29일자(864호) 4~5면 「언제 그랬나 쏙 들어간 '박근혜 대세론'」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다른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분석하였다.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할 경우에는 최소한 원 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또는 원 보도 매체, 실시 일자 등을 밝혀야 하는데 위 기사는 이러한 출처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5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언제 그랬나 쏙 들어간 '박근혜 대세론'

'박근혜 대세론'이 잠잠해졌다. 갑자기 몰아친 '안풍'에 눌러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쏙 들어갔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인 박 캠프는 비상이 걸렸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대책과 묘안을 짜내느라 분주하다. 비장의 카드가 있을까. 그렇다면 뭘까.

박근혜 '안풍 트라우마' 막전막후

책내고 방송 출연한 안철수 지지율 급상승
'비상' 박 캠프 대책마련 분주… 견제 본격화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후보의 대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야권 잠룡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서다. 안 원장은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을 출간한데 이어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줄곧 40%대 유지하다 갑자기 20%대로 추락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안 원장이 박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따라잡거나 이미 역전해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양상이다. 대체적으로 안 원장은 상승세인 반면 박 후보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 조사에선 총선 이후 줄곧 40%대를 유지하던 박 후보가 안 원장의 등판 직후 20%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박 후보 측은 겉으론 대수롭지 않다는 투다. '박근혜 경선캠프'의 홍사덕 공동 선대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안 원장은) 파도와 같다. 파도는 계속 치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갈 것인 만큼 일일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김종인 공동 선대위원장도 "TV 출연해 봐야 별 영향이 있겠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시간이 가면 지지율도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후략)

언제 그랬나 쏙 들어간 '박근혜

'박근혜 대세론'이 잠잠해졌다. 갑자기 몰아친 '안풍'에 놀라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쏙 들어갔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인 박 캠프는 비상이 걸렸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대책과 묘안을 짜내느라 분주하다. 비장의 카드가 있을까. 그렇다면 뭘까.

박근혜 '안풍 트라우마' 막전막후



겉으론 여유만만 속으론 안절부절 실제론 사면초가

책 내고 방송 출연한 안철수 지지율 급상승 '비상' 박 캠프 대책마련 분주…견제 본격화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후보의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야권 잠룡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서다. 안 원장은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을 출간한데 이어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줄곧 40%대 유지하다 갑자기 20%대로 추락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안 원장이 박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따라잡거나 이미 역전해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양상이다. 대체적으로 안 원장은 상승세인 반면 박 후보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 조사에선 **총선 이후 줄곧 40%대를 유지하던 박 후보가 안 원장의 등판 직후 20%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박 후보 측은 걸으론 대수롭지 않다는 투다. '박근혜 경선캠프'의 홍사덕 공동 선대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안 원장은) 파도와 같다. 파도는 계속 치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갈 것인 만큼 일일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김종인 공동 선대위원장도 "TV 출연해 봐야 별 영향이 있겠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시간이 가면 지지율도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친박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현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안철수라는 새로운 인물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대선후보 지지율과는 다르다"며 "대선 출마나 정치적 노선을 걸으면 반작용으로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의 속사정은 다르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표정.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박 후보가 안 원장에게 추월당하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책을 짜내느라 분주하다.

우선 예전과 달리 노골적으로 안 원장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박 후보 측은 안 원장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선언을 하거나 야권 후보로 정해질 때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전략이었다. 박 후보는 캠프 출범 전후 "절대로 네거티브는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 닥친 '안풍'이 심상치 않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안철수 때리기'를 본격화한 것이다.

그 선봉엔 새누리당이 섰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안 원장은 국정운영 능력이나 자질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베일 속 신비주의로 인기관리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안 원장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고 직접 토론하거나 정책을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다"며 "지금 책 한 권, 예능프로 하나를 갖고 마치 이 사람이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볼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원장을 겨눈 박 캠프 쪽의 칼날은 더욱 예리하다. 캠프 인사들은 안 원장의 행보를 비꼬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타깃은 책과 방송이다.

캠프 정치발전위원인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안 원장의 신간에 대해 "정치인 안철수의 비전이라기보다는 평론가 입장과 비슷하다"고 혹평했다. 최경환 총괄본부장은 안 원장의 방송 출연과 관련해 "TV 프로그램 하나 나온다고 대통령이 될 거 같냐"며 "나라의 운명을 TV 프로그램에 맡겨선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캠프 내에선 '안 원장과 지지율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맞물려 '안 원장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순 없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때려도 꿈쩍하지 않기 때



안철수 원장이 출연한 SBS 〈힐링캠프〉

2012년 7월29일(일요일) 제864호 정치 일요시사 5

대세론'

시사만평

이 원 석 bstone@ilyosisa.co.kr



'외곽 검증팀' 극비리 가동해 정보수집
'손 안대고 코 풀' 민주당 자극 전략도

문에 훨씬 강도가 높은 '공격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실제 박 후보 측은 안 원장에 대한 '검증'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해 캠프 외곽에 '안철수 검증팀'을 극비리에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장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인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훨씬 강도 높은 공격 카드 준비"

이 관계자는 "안 원장은 대선출마선언과 동시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검증대에 필수적으로 올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파상공세가 시작되면 아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안 원장 지지율 상승의 근원인 책과 방송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측은 안 원장의 '바른 이미지'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과거 발언과 다른 거짓말에 중점을 두고 꼬투리 잡을 태세다. 벌써부터 일부 보수 언론들은 박 캠프 발로 안 원장의 거짓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캠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안 원장의 행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안 원장이 대선에 뛰어들면 직접 공격이 시작될 텐데 그 강도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박 후보 측은 민주통합당을 자극해 간접적으로 안 원장을 밀어내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한마디로 손 안대고 코 풀겠다는 심산이다.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경우 역풍이 불어 오히려 안 원장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대선경선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안 원장의 무임승차 준비행사"라며 "정당이 저렇게 모욕당하는 것도 처음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 "손학규 후보 같은 사람은 '우리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손 후보나 김두관 후보가 모욕을 당하면서 탈락하면 그 지지자들이 우리한테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도 "(안 원장이) 부전승으로 링에 오르겠다는 국민을 우롱하는 대선전략"이라며 "출마할거면 공식적으로 출마해서 검증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여권 한 당직자는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안 원장을 무턱대고 검증할 수 없지 않냐"며 "그전까지 견제만 하면서 민주당과 안 원장이 싸우도록 유도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캠프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캠프 안팎에서 안 원장의 지지율 상승은 당장 어쩔 수 없더라도 박 후보의 정체 내지 하락을 못 막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지부진한 박 후보의 지지율은 단순히 안 원장이 원인이 아닌 기존의 지지층이 지지를 철회하거나 유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후보의 5·16 발언과 불통 이미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캠프의 전략 부재 등이 지지율을 깎아먹은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박 후보가 현 정권 문제에 침묵하면서 불거진 MB정부와의 모호한 관계가 부동층의 이탈을 부추긴 것으로 파악된다.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은 당사자인 박 후보의 대응이다. '안철수 때리기'에 직접 나설지 주목된다.

박 후보는 지난 3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그분(안 원장)이 어떤 (정치적) 태도를 갖든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죠"라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도 "사실 잘 모르겠다. 뭐를 생각하고 계신지"라고 언급했다. 안 원장이 책을 출간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엔 "출마를 정식으로 했냐"며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국민에게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안 원장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였다.

박 후보와 안 원장이 지지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박 후보는 지난해 안 원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지지율이 급등하자 다소 민감하게 반응했었다. 박 후보는 당시 기자들이 안 원장에 대해 묻자 "병 걸리셨어요? 여기서는 정치 얘기 그만하라"고 잘라 말했다.

박, 언제 나서나 비장의 카드는?

이는 박 후보가 '박근혜 대세론'이 위협 당하자 예민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증이었다. 정치권에선 철두철미한 박 후보답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 상황도 비슷하다. '박근혜 대세론'이 잠잠해졌다. 갑자기 몰아친 '안풍'에 놀려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쏙 들어갔다. 박 후보의 묘안은 뭘까. 그 비장의 카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나꼼수〉 예언 화제
곧 '연풍' 분다?
"신동엽 · 강호동 소환 임박"


신동엽


강호동

인기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가 대선을 앞두고 '연풍'을 예상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나꼼수〉는 최근 방송에서 "검찰이 거물급 MC들의 스캔들을 이용해 더 거대한 무엇인가를 덮으려 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신동엽과 강호동을 곧 소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꼼수〉는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지난 5월 자숙중인 연예인 신정환을 소환해 조사했다"며 "다음 타깃은 최근 피습된 은경표 전 PD와 이 두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꼼수〉는 "검찰이 1년 동안 만지작거린 연예인 사건을 써먹을 때가 왔다. 이 말은 뭔가 크게 덮어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라며 "언제 어떻게 써먹을지가 앞으로의 관전포인트"라고 전했다.

〈수〉

의 결 번 호	2012대선15(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심의대상기사	조선일보 2012년 7월 25일자 A31면 「'남한정부가 채찍만 써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안철수 씨는 國籍(국적)이 어디인가?」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시민단체의 의견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3조(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남한정부가 채찍만 써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안철수 씨는 國籍(국적)이 어디인가?

2008년 이후 북괴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를 사살하고, 임진강 홍수를 일으켜 피서객 6명을 죽이고, 천안함 폭침공격으로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4명, 총 57명을 죽였다. 그럼에도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사람이 과연 韓國人(한국인)인가?

1. 안철수 씨는 최근 나온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

〈이명박 정부는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채찍 위주의 강경책, 기계적 상호주의를 고수한 것은…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고 생각해요〉 2008년 이후 북괴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를 사살하고, 임진강 홍수를 일으켜 피서객 6명을 죽이고, 천안함 폭침공격으로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4명, 총 57명을 죽였다. 이렇게 얻어맞기만 한 대한민국이 강경책만 썼다고 욕하는 안철수 씨는 6·25 남침 때 국군이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였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나?

2. 安 씨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선 '정부 발표는 기본적으로 믿지만 이견을 무시하는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사이비 좌파들이 조작설을 떠들어대다가 밀리니까 토 달고 나서는 것까지 똑같다.

3. 그는 從北정권 10년간 北에 갖다 바친 돈이 핵개발에 쓰이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약 100억 달러어치의 금품이 김정일에게 들어갔다. 그 돈이 군사력 증강에 쓰이지 않았다면 왜 북한주민들이 굶었나. 연간 3억 달러어치의 옥수수만 수입했어도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는데…

4. 안철수 씨는 〈지난 5년 동안 정당한 요구, 정당한 호소, 정당한 의사표현이 많이 억압되지 않았습니까?

'법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한 요구들마저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됐고, 이 때문에 시민의 분노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했다. 광우병 난동 때 불법 폭력 시위대가 '명박산성'이라는 장벽을 쌓고 경찰을 공격한데 대하여는 이렇게 말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선 사람 모이는 것은 대개 잔치이고 좋은 일이라 여겨왔습니다. 정부가 사람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통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몽둥이로 경찰관을 패고(500명 이상 부상) 경찰차를 뒤엎으면서(100대 이상 파괴) 공권력을 공격한 폭력 시위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드는 자가 서울대학교 교수이다!

5. 그는 또 〈거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 논리만으로 밀어붙이다가 용산 참사 같은 사건을 초래했다〉고 했다.

전문 시위꾼들이 주민 보상이 다 끝난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건물을 점령, 大路(대로)에 화염병을 던지다가 투입된 경찰에 저항, 불을 질러 경찰관과 농성자들이 죽은 사건인데, 정부 탓을 한다. 이런 자를 선전하고 미화하는데 공중파를 낭비한 SBS를 규탄한다. 비판정신을 잃은 한국의 기자들은 다 죽었는가?

6. 그는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그렇다면 지식경제부는 재벌을 대변해야 하나? 정부는 게임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불편부당한 심판 역할을 해야지 공을 차라고? 사이비 좌익이 프로그래밍한 대로 자판기처럼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안철수 씨는 지금도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나"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하다.

국민행동본부
National Action Campaign
본부장 徐貞甲 육·해·공·해병대 (예)대령연합회 명예회장



의 결 번 호	2012대선16(자심)
언 론 사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양 상 우
심의대상기사	한겨레 2012년 7월 25일자 30면 「5·16 군사반란을 미화하는 박근혜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의견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3조(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5·16군사반란을 미화하는 박근혜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감연히 나섰던 우리 4월 혁명세대는 5·16 군사반란과 유신쿠데타에 대하여 특히 보수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망언이 난무하는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켜켜이 쌓아온 공분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다.

우리는 52년전의 4월혁명 정신으로 되돌아가 다시 한 번 역사와 국민 앞에 외치고자 한다.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군사반란 세력은 숭고한 4·19 혁명을 짓밟았으며 그 후 민주정치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설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통령 예비후보인 박근혜가 5·16군사반란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한 망언에 대해 우리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박근혜는 우선 그 발언이 군사반란 수괴 박정희의 딸이라는 사인의 입장인지, 아니면 현재 집권여당의 대통령 예비후보라는 공인으로서 역사관인지 밝히기 바란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은 이미 우리의 헌법 전문에 명기돼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했으며 그것은 국민 합의의 결과이다. 그런 4월혁명정신에 바탕하여 마련된 제2공화정 헌법을 총칼로 유린한 5·16 군사반란이 최선이었다는 박근혜의 망발은 헌법 전문에 대한 부정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폄하하고 훼손했다. 우리는 박근혜의 5·16 군사반란과 유신체제에 대한 망언을 '제2의 쿠데타'기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의 망언은 민주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위험한 역사 인식의 소산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가 이처럼 위험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는 얼마 전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국가에서 군사반란을 정당시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국가관은 없다.

박근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통령예비후보를 포함한 모든 공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작년은 5·16쿠데타가 일어난 지 50년이었고 올해로 유신쿠데타 40년을 맞는다. 두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하고 또 강화한 박정희에 대해 국민적 역사 평가가 긴요한 시점이다. 박정희 권력의 반민주 유전자가 오늘날 한국정치에 끼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그 독재체제의 역사적 교훈을 깊이 천착하고 널리 공유해야 할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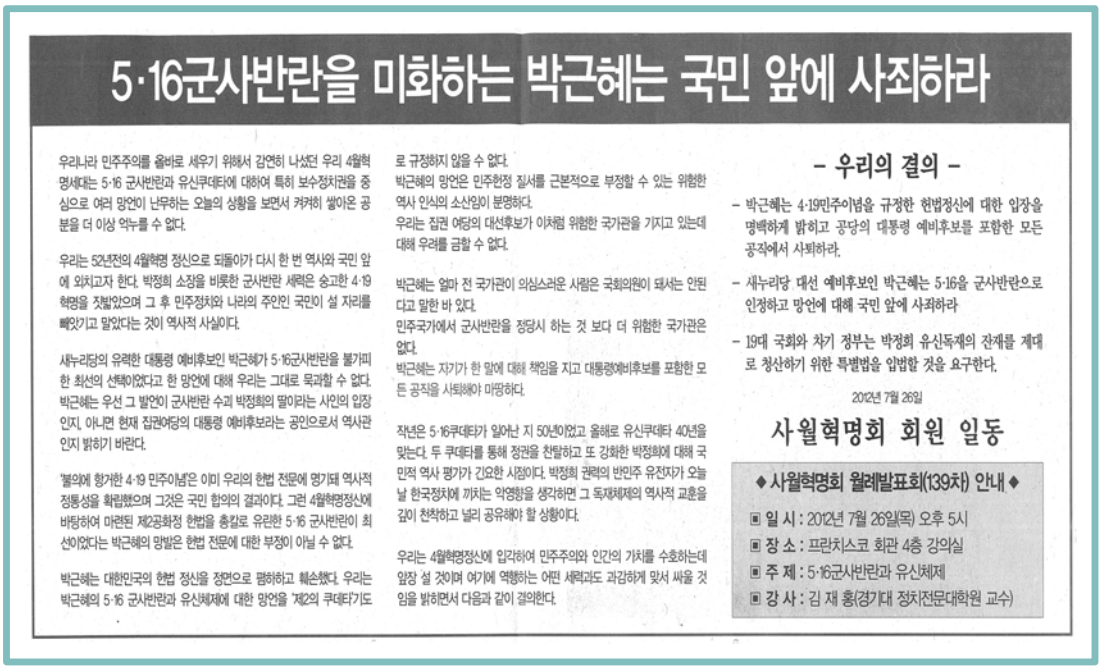
우리는 4월혁명정신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와 인간의 가치를 수호하는데 앞장 설 것이며 여기에 역행하는 어떤 세력과도 과감하게 맞서 싸울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

- 박근혜는 4·19민주이념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대한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고 공당의 대통령 예비후보를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
-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인 박근혜는 5·16을 군사반란으로 인정하고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 19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기 위한 특별법을 입법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7월 26일

사월혁명회 회원 일동



5·16군사반란을 미화하는 박근혜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감연히 나섰던 우리 4월혁명세대는 5·16 군사반란과 유신쿠데타에 대하여 특히 보수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망언이 난무하는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켜켜히 쌓아온 공분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다.

우리는 52년전의 4월혁명 정신으로 되돌아가 다시 한 번 역사와 국민 앞에 외치고자 한다.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군사반란 세력은 숭고한 4·19혁명을 짓밟았으며 그 후 민주정치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설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통령 예비후보인 박근혜가 5·16군사반란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한 망언에 대해 우리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박근혜는 우선 그 발언이 군사반란 수괴 박정희의 딸이라는 사인의 입장인지, 아니면 현재 집권여당의 대통령 예비후보라는 공인으로서 역사관인지 밝히기 바란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은 이미 우리의 헌법 전문에 명기돼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했으며 그것은 국민 합의의 결과이다. 그런 4월혁명정신에 바탕하여 마련된 제2공화정 헌법을 총칼로 유린한 5·16 군사반란이 최선이었다는 박근혜의 망발은 헌법 전문에 대한 부정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짓밟아 훼손했다. 우리는 박근혜의 5·16 군사반란과 유신체제에 대한 망언을 '제2의 쿠데타'기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의 망언은 민주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위험한 역사 인식의 소산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가 이처럼 위험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는 얼마 전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국가에서 군사반란을 정당시 하는 것 보다 더 위험한 국가관은 없다.

박근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통령예비후보를 포함한 모든 공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작년은 5·16쿠데타가 일어난 지 50년이었고 올해로 유신쿠데타 40년을 맞는다. 두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하고 또 강화한 박정희에 대해 국민적 역사 평가가 긴요한 시점이다. 박정희 권력의 반민주 유전자가 오늘날 한국정치에 끼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그 독재체제의 역사적 교훈을 깊이 천착하고 널리 공유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는 4월혁명정신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와 인간의 가치를 수호하는데 앞장 설 것이며 여기에 역행하는 어떤 세력과도 과감하게 맞서 싸울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

- 박근혜는 4·19민주이념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대한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고 공당의 대통령 예비후보를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
-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인 박근혜는 5·16을 군사반란으로 인정하고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 19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기 위한 특별법을 입법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7월 26일

사월혁명회 회원 일동

♦사월혁명회 월례발표회(139차) 안내♦

▣ 일 시 : 2012년 7월 26일(목) 오후 5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회관 4층 강의실
▣ 주 제 : 5·16군사반란과 유신체제
▣ 강 사 : 김 재 홍(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의 결 번 호	2012대선17(자심)
언 론 사	유한회사 광주전남타임즈 광주시 동구 계림동 893번지 청송 B/D 5층 대표이사 서 정 구
심의대상기사	광주타임즈 2012년 9월 3일자 2면「안철수, 지지율 상승세」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예비후보자들의 지지율 추이를 분석하여 보도하면서 기사 내용과 다른 수치를 기사 부제목에 잘못 적시하였다. 이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7조(객관성 및 사실보도)제2항을 위반한 위 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안철수, 지지율 상승세

安 45.5% 朴 40%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모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주자 양자대결 구도에서 안 원장의 지지율은 전달 대비 7.5% 포인트 오른 45.5%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박 후보의 지지율은 47.9%로 안 원장에 비해 2.4% 포인트 앞섰지만 전달대비 5.5% 포인트 떨어져 하락세를 나타냈다.

다자대결 구도에서도 안 원장은 지난 달에 비해 5.3% 포인트 오른 29.2%로 2위를 차지했다. 박 후보는 3.2% 포인트 상승한 45.5%로 1위를 지켰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다. 문 후보는 양자대결 구도에서 전달 대비 4.5% 포인트 오른 38.2%를 기록, 52.3%를 나타낸 박 후보를 추격했다.

다만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전달 대비 0.1% 포인트 하락, 13.1%를 기록하며 박 후보와 안 원장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민주당 김두관·손학규·정세균 후보 순으로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안 원장 간 단일화가 이뤄져 여야대결을 벌일 경우 박근혜 후보가 48.0%로 야권단일후보(42.8%)에 비해 5.2% 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정당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이 전달 대비 1.9% 포인트 하락했지만 43.6%로 1위를 지켰고 민주당은 0.3% 포인트 오른 23.4%로 2위를 차지했다.

공약을 가장 잘 지킬 것 같은 후보로는 박 후보(46.5%)가 꼽혔다. 2위는 안 원장(28.3%), 3위는 문 후보(13.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를 실시한 모노리서치 이재환 책임연구원은 안 원장의 상승세와 관련 "각종 의

혹에 노출되면서 오히려 지지층 결집 효과가 나타났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초기 파행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야권의 유력 주자로 재부각, 지지율 상승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0일 전국 성인남녀 1041명에게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와 ARS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3% 포인트다.

안철수, 지지율 상승세

安 45.5% 朴 40%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모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주자 양자대결 구도에서 안 원장의 지지율은 전달 대비 7.5% 포인트 오른 45.5%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박 후보의 지지율은 47.9%로 안 원장에 비해 2.4% 포인트 앞섰지만 전달 대비 5.5% 포인트 떨어져 하락세를 나타냈다.

다자대결 구도에서도 안 원장은 지난 달에 비해 5.3% 포인트 오른 29.2%로 2위를 차지했다. 박 후보는 3.2% 포인트 상승한 45.5%로 1위를 지켰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다. 문 후보는 양자대결 구도에서 전달 대비 4.5% 포인트 오른 38.2%를 기록, 52.3%를 나타낸 박 후보를 추격했다.

다만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전달 대비 0.1% 포인트 하락, 13.1%를 기록하며 박 후보와 안 원장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민주당 김두관 · 손학규 · 정세균 후보 순으로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안 원장 간 단일화가 이뤄져 여야대결을 벌일 경우 박근혜 후보가 48.0%로 야권단일후보(42.8%)에 비해 5.2% 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정당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이 전달 대비 1.9% 포인트 하락했지만 43.6%로 1위를 지켰고 민주당은 0.3% 포인트 오른 23.4%로 2위를 차지했다.

공약을 가장 잘 지킬 것 같은 후보로는 박 후보(46.5%)가 꼽혔다. 2위는 안 원장(28.3%), 3위는 문 후보(13.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를 실시한 모노리서치 이재환 책임연구원은 안 원장의 상승세와 관련, "각종 의혹에 노출되면서 오히려 지지층 결집 효과가 나타났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초기 파행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야권의 유력 주자로 재부각, 지지율 상승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30일 전국 성인남녀 1041명에게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와 ARS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3% 포인트다.

서울=노상득 기자

의 결 번 호	2012대선25(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07-2 대표이사 고 재 구
심의대상기사	일요서울 2012년 10월 22일(제964호) 62~63면 「大예언 18대 대통령은 바로 이 사람… "이번에 되는 대통령은 최고의 성군될 것"」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 제시 없이 특정 예비후보자들의 당락 여부에 관한 역술인의 주관적인 해석을 여과 없이 보도하였다. 언론이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것은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유권자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7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제8조(인용보도 및 인터뷰기사)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특별인터뷰】 백운산 한국역술인협회 중앙회장

大예언 18대 대통령은 바로 이 사람

"이번에 되는 대통령은 최고의 성군될 것"

18대 대통령선거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양자대결 양상으로 막상막하의 박빙의 선거전이 될 것이란 예언이 나왔다. 또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항 가운데 하나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사이의 '야권단일화'는 오는 11월 중에 이루어지며, 안 후보가 문 후보에 흡수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언됐다.

백운산 한국역술인협회 중앙회장은 [일요서울]과 지난 16일 서울 역삼동의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는 모두 대통령의 운세를 갖고 있다"면서도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출마선언을 할 때 머리카락이 군왕상의 이마를 가렸기 때문에 올해 선거에서는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예언했다.

백운산 중앙회장은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 "관상으로는 학(鶴)상으로 용상(龍床)과 가장 어울리지만, 용띠가 아닌 토끼띠로 사주에 문제가 있어 (현재 시점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예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서는 "관상으로는 사자상으로 좋지만 안광(眼光)이 흐리다는 약점이 있다"면서 "사주로 볼 때 양력은 뱀띠지만 음력은 용띠가 돼 운세가 좋다"고 말했다.

백운산 중앙회장은 이어 "올해 12월 이후부터 10년간 지금까지 몇십 년 중에서 가장 좋은 운이 이어져 우리나라 역사 이래 제일 좋은 경제 운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에 되는 대통령은 최고의 성군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밖에 백운산 중앙회장은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될 것"이고, "우리나라 연말 대선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도 내놓았다.

백운산 중앙회장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역술

인협회 중앙회장과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중앙회장, 관인 한국역학대학철학학원 원장을 비롯해 한국 역리 뉴스지 발행인 겸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정상회담 예언 적중' 등 방송 언론에 출연과 인터뷰를 통해 수없이 많은 '국운 예언'을 해온 예언가로 유명하다.

– 흑룡의 해인 2012년 임진년 올해 연말 국운을 어떻게 보는가요.

▲ 지금 우리나라 남한의 인구가 5000만 명으로 보는데, 모두가 목(木)과 화(火)를 씁니다. 나무와 불이 들어오면 모두가 잘살 수 있는 개인적인 사주입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이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국운 자체가 목화(木火), 나무에 불이 붙는 그런 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013년 9월이 지나면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발전돼서 우리나라 국운은 향후 10년간 지금까지 몇십 년간 중에서 가장 좋은 운이 이어져서 정말 차기 대통령이 될 분도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역사 이래 제일 좋은 경제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되신 대통령은 어느 분이 되더라도 최고의 성군이 될 뿐만 아니라 국운이 좋으니까, '과연 잘 뽑았다', '이런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 잘 살고 경제가 일어나고 진짜 선진국이 됐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들어 왔습니다.

– 우리나라 경제 사정을 보게 되면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여러모로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질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 어렵게 살아왔고, 경제발전이 됐지만 불황이고 못산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역학으로 볼 때는 내년부터 대운이 들어와 잘살게 됩니다. 내년이 계사년(癸巳年)인데, 초반에는 안 좋습니다. 후반으로 들어선 음력 9월 이후부터 좋아집니다. 절기로는 한로(寒露) 이후입니다.

– 올해 세계 많은 나라에서 권력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한달 먼저 대통령선거가 치러집니다. 중국도 시진핑으로의 권력이동이 예견돼 있습니다. 주변국의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 연말 대선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이고,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 미국은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재선됩니다. 이것은 제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확실한 예언을 하지 못하지만 11월 중순에 제가 예언을 할 겁니다.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각 언론과 매스컴에 낼 거거든요. 왜 못하는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진년이 들어오면 임수(壬水), 곧 하늘에 있는 물이 폭풍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는 천기(天機)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11월 15일 지나면 임수가 다 내려옵니다. 그 큰 바닷물이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늘의 천기가 보여서 지금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분은 운이 다 좋은 분들입니다.

– 미국은 예언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11월 15일 이후로 예언을 미루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 미국과 중국은 금수(金水) 용신(用神)이에요. 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목화 용신(木火 用神)을 쓰는데, 천간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불이 나무에 붙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이 다 내려와야 불이 붙습니다. 우리나라만 딱 불(火)이 목(木)에 붙지를 못하고 꺼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천기가 안 보인다 이거죠.

– 임수란 임진년의 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천간의 그 임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늘을 덮어놔서요. 천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11월 중순되면 싹 다 빠져 나와요. 그러면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나옵니다. 지금 세 사람 다 대통령 운이 좋아요. 단 안철수 후보는 임금의 관상이고, 대통령의 관상이지만 그분이 이마를 지금 머리로 가렸잖습니까. 그 이마에 대통령 될 수 있는 것을 가졌는데, 이마 앞을 가리고 출마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올해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행으로 하면 수생목(水生木)이 되고, 목생화(木生火)가 되어서 불(火)이 더욱 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 아닙니다. 목생화(木生火)라는 것은 불을 나무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데,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권력 변화가 남한의 연말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북한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대선에서 뭐라할까, 약간 침략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을 것이니까, 도발 같은 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상반기와 같은 수준의 평온한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 그럼 세 후보 가운데 남북문제를 시대와 민족의 입장에서 가장 잘 풀어갈 수 있는 운세는 누구에게 있나요.

▲ 세 분 다 남북 문제를 다 잘 할 분들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원래 지난 정권 때 그쪽하고 잘했고, 박근혜 후보는 지난번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왔고, 안철수 후보도 남북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세 분 다 남북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누가 더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 세 후보의 사주를 볼 때 연말 대선 운은 어떻습니까.

▲ 사주로 볼 때 박근혜 후보는 운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셨고, 문재인 후보도 대단히 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200만 국민들이 참여한 경선과 모바일투표를 통해 후보가 된 것 아닙니까. 야당 쪽에선 선거로 후보가 됐어요.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성원해서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세 사람 다 운은 막강하게 좋고, 대통령 운세를 갖고 있는데 다만 이 가운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천기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 천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네, 천기는 있지요. 사주로 볼 때 박근혜 후보는 사주상 토끼띠로 봅니다. 용띠라면 대단히 좋은 사주죠. 그러면 지금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토끼띠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양력으로 하면 뱀띠지만, 음력으로 하면 용띠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올해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이분이 처음 선거에서 된 것이거든요. 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호랑이 띠로 알려져 있습니다. 띠보다는 관상으로 봐서 군왕감이라 합니다. 다만, 출마선언을 할 때 이마를 머리카락으로 가려서 어렵게 됐습니다.

12지간에서는 청룡 백호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문재인과 안철수는 사자상이고, 박근혜

는 학상입니다. 박근혜가 용띠면 박근혜 후보가 바로 대통령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몇일 사이로 절기가 바뀌어서 토끼띠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계속 구설이 들기도 합니다. 임수가 다 내려오는 11월 중순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세 후보의 관상을 봤을 때 용상(龍床)하고 가장 어울리는 상은 어떤 상인가요.

▲ 그것은 지금 말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만, 학상은 용상과 가장 어울리지만, 박 후보의 사주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관상으로 볼 때 세 후보들의 약점은 '박 후보는 얼굴이 앞으로 내려와 머리가 무겁다', '문 후보는 안광(眼光)이 흐리다', '안 후보는 머리카락으로 이마를 가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안 후보의 경우 군주가 될 수 있는 이마를 가리고 출마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헤어스타일을 바꾼다고 해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사자형이었고, 전두환은 범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규하는 하마상이었습니다. 정몽준은 기린상입니다. 관상가인 우리가 물형으로 보는 상이 다 있습니다.

– 국민의 관심 사항 중 하나는 문 후보와 안 후보 간의 후보단일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후보단일화가 되나요, 안되나요. 역학적으로 어떤가요.

▲ 역학 적으로는 '양력 11월 중 단합'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역으로 볼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괘상은 수산건(水山蹇)입니다. 좋은 괘는 아닙니다. 힘들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상처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후보단일화는 문 후보와 안 후보의 통합보다는 안 후보가 문 후보에 흡수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 이 말씀은 후보단일화는 '문 후보로 이루어진다'는 예언으로 해석됩니다.

▲ 네. 문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다고 봐야지요. 후보등록일인 11월 25일 이전에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박근혜와 문재인 간의 양자대결로 막상막하의 대선이 될 것입니다.

– 역학에 몸 담으신지는 얼마 되셨나요.

▲ 제가 27세부터 해서 올해 70세이니까 43년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되는 대통령은 최고의 성군될 것"

특별 인터뷰 **백 운 산** 한국역술인협회 중앙회장

18대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양자대결 양상으로 막상막하의 박빙의 선거전이 될 것이란 예언이 나왔다. 또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항 가운데 하나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사이의 '야권단일화'는 오는 11월 중에 이루어지며, 안 후보가 문 후보에 흡수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언됐다.

백운산 한국역술인협회 중앙회장은 [일요서울]과 지난 16일 서울 역삼동의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는 모두 대통령의 운세를 갖고 있다"면서도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출마선언을 할 때 머리카락이 군왕상의 이마를 가렸기 때문에 올해 선거에서는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예언했다.

백운산 중앙회장은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 "관상으로는 학(鶴)상으로 용상(龍床)과 가장 어울리지만, 용띠가 아닌 토끼띠로 사주에 문제가 있어 (현재 시점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예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서는 "관상으로는 사자상으로 총지만 안광(眼光)이 으리다는 약점이 있다"면서 "사주로 볼 때 양력은 뱀띠지만 음력은 용띠가 돼 운세가 좋다"고 말했다.

백운산 중앙회장은 이어 "올해 12월 이후부터 10년간 지금까지 몇십 년 중에서 가장 좋은 운이 이어져 우리나라 역사 이래 제일 좋은 경제 운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에 되는 대통령은 최고의 성군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밖에 백운산 중앙회장은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될 것"이고, "우리나라 연말 대선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도 내놓았다.

백운산 중앙회장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역술인협회 중앙회장과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중앙회장, 관인 한국역학대학철학학원 원장을 비롯해 한국 역리뉴스지 발행인 겸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정상회담 예언 적중' 등 방송언론에 출연과 인터뷰를 통해 수없이 많은 '국운 예언'을 해온 예언가로 유명하다.

- 흑룡의 해인 2012년 임진년 올해 연말 국운을 어떻게 보는가요.

▲ 지금 우리나라 남한의 인구가 5000만 명으로 보는데, 모두가 목(木)과 화(火)를 씁니다. 나무와 불이 들어오면 모두가 잘살 수 있는 개인적인 사주입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이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국운 자체가 목화(木火), 나무에 불이 붙는 그런 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013년 9월이 지나면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발전돼서 우리나라 국운은 향후 10년간 지금까지 몇십 년간 중에서 가장 좋은 운이 이어져서 정말 차기 대통령이 될 분도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역사 이래 제일 좋은 경제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되신 대통령은 어느 분이 되더라도 최고의 성군이 될 뿐만 아니라 국운이 좋으니까, '과연 잘 뽑았다', '이런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 잘 살고 경제가 일어나고 진짜 선진국이 됐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들어 왔습니다.

- 우리나라 경제 사정을 보게 되면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여러모로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질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 어렵게 살아 왔고, 경제발전이 됐지만 불황이고 못산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역학으로 볼 때는 내년부터 대운이 들어와 잘살게 됩니다. 내년이 계사년(癸巳年)인데, 초반에는 안 좋습니다. 후반으로 들어선 음력 9월 이후부터 좋아집니다. 절기로는 한로(寒露) 이후입니다.

- 올해 세계 많은 나라에서 권력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한달 먼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중국도 시진핑으로의 권력이동

이 예견돼 있습니다. 주변국의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 연말 대선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이고,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 미국은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재선됩니다. 이것은 제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확실한 예언을 하지 못하지만 11월 중순에 제가 예언을 할 겁니다.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각 언론과 매스컴에 낼 거거든요. 왜 못하는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진년이 들어오면 임수(壬水), 곧 하늘에 있는 물이 폭풍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는 천기(天機)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11월 15일 지나면 임수가 다 내려옵니다. 그 큰 바닷물이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늘의 천기가 보여서 지금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분은 운이 다 좋은 분들입니다.

- 미국은 예언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11월 15일 이후로 예언을 미루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 미국과 중국은 금수(金水) 용신(用神)이예요. 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목화 용신(木火用神)을 쓰는데, 천간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불이 나무에 붙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이 다 내려와야 불이 붙습니다. 우리나라만 딱 불(火)이 목(木)에 붙지를 못하고 꺼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천기가 안 보인다 이거죠.

- 임수란 임진년의 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천간의 그 임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늘을 덮어 놔서요. 천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11월 중순되면 싹 다 빠져나와요. 그러면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나옵니다. 지금 세 사람 다 대통령 운이 좋아요. 단 안철수 후보는 임금의 관상이고, 대통령의 관상이지만 그분이 이마를 지금 머리로 가렸잖습니까. 그 이마에 대통령 될 수 있는 것을 가졌는데, 이마 앞을 가리고 출마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올해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행으로 하면 수생목(水生木)이 되고, 목생화(木生火)가 되어서 불(火)이 더욱 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 아닙니다. 목생화(木生火)라는 것은 불을 나무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데,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권력 변화가 남한의 연말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북한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대선에서 뭐라할까,



약간 침략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을 것이니까, 도발 같은 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상반기와 같은 수준의 평온한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 그럼 세 후보 가운데 남북문제를 시대와 민족의 입장에서 가장 잘 풀어갈 수 있는 운세는 누구에게 있나요.

▲ 세 분 다 남북 문제를 다 잘 할 분들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원래 지난 정권 때 그쪽하고 잘했고, 박근혜 후보는 지난번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왔고, 안철수 후보도 남북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세 분 다 남북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누가 더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 세 후보의 사주를 볼 때 연말 대선 운은 어떻습니까.

▲ 사주로 볼 때 박근혜 후보는 운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셨고, 문재인 후보도 대단히 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200만 국민들이 참여한 경선과 모바일투표를 통해 후보가 된 것 아닙니까. 야당 쪽에선 선거로 후보가 됐어요.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성원해서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세 사람 다 운은 막강하게 좋고, 대통령 운세를 갖고 있는데 다만 이 가운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천기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 천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네, 천기는 있지요. 사주로 볼 때 박근혜 후보는 사주상 토끼띠로 봅니다. 용띠라면 대단히 좋은 사주죠. 그러면 지금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토끼띠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양력으로 하면 뱀띠지만, 음력으로 하면 용띠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올해 국회의원이 됐지 않니까, 국회의원도 이분이 처음 선거에서 된 것이거든요. 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호랑이 띠로 알려져 있습니다. 띠보다는 관상으로 봐서 군왕감이라 합니다. 다만, 출마선언을 할 때 이마를 머리카락으로 가려서 어렵게 됐습니다.

12지간에서는 청룡 백호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문재인과 안철수는 사자상이고, 박근혜는 학상입니다. 박근혜가 용띠면 박근혜 후보가 바로 대통령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몇일 사이로 절기가 바뀌어서 토끼띠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계속 구설이 들기도 합니다. 임수가 다 내려오는 11월 중순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세 후보의 관상을 봤을 때 용상(龍床)하고 가장 어울리는 상은 어떤 상인가요.

▲ 그것은 지금 말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만, 학상은 용상과 가장 어울리지만, 박 후보의 사주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관상으로 볼 때 세 후보들의 약점은 '박 후보는 얼굴이 앞으로 내려와 머리가 무겁다', '문 후보는 안광(眼光)이 흐리다', '안 후보는 머리카락으로 이마를 가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안 후보의 경우 군주가 될 수 있는 이마를 가리고 출마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헤어스타일을 바꾼다고 해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사자형이었고, 전두환은 범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규하는 하마상이었습니다. 정몽준은 기린상입니다. 관상가인 우리가 물형으로 보는 상이 다 있습니다.

- 국민의 관심 사항 중 하나는 문 후보와 안 후보 간의 후보단일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후보단일화가 되나요, 안되나요. 역학적으로 어떤가요.

▲ 역학 적으로는 '양력 11월 중 단합'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역으로 볼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괘상은 수산건(水山蹇)입니다. 좋은 괘는 아닙니다. 힘들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상처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후보단일화는 문 후보와 안 후보의 통합보다는 안 후보가 문 후보에 흡수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 이 말씀은 후보단일화는 '문 후보로 이루어진다'는 예언으로 해석됩니다.

▲ 네. 문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대통령선거에 나올 수 있다고 봐야지요. 후보등록일인 11월 25일 이전에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박근혜와 문재인 간의 양자대결로 막상막하의 대선이 될 것입니다.

- 역학에 몸 담으신지는 얼마 되셨나요.

▲ 제가 27세부터 해서 올해 70세이니까 43년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대담 · 정리 = 서원호 취재국장〉
os@ilyoseoul.co.kr
〈사진 =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백운산 중앙회장 주요 프로필〉

학력 및 경력
- △ 단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 △ (사)한국역술인협회/ (사)한국역리학회 중앙회장
- △ 관인 한국역학대학철학학원 원장
- △ 한국 역리 뉴스지 발행인 회장
- △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청소년육성회 법인 이사
- △ 한국명사 100인에 선정 신지사인 선정
- △ 세계 국제 역학계 전 세계 명예회장
- △ 2009년 세계 국제역학대회 대회장(마카오 중국대회 27개국 참가)
-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역학 특강 강사
- △ 성균관대학원 유학대학원 작명반 특강

저서
- △ 신작명보감/ 역학백과사전/ 사주정설 상하
- △ 창조적 한대인의 관상과 수상
- △ 백운산 관상보감
- △ 운이 좋고 복이 많은 꿈풀이
- △ 역마살소설/ 불청객
- △ 선생님 손님 받으세요/ 로댕의 가리
- △ 육아잡지 프랑스 암탉(산생아)이름작명
- △ 한국인물사 보감 선정
- △ 공복 40년사 선정 등 다수 출판

인생상담 (베스트셀러)
- △ 대한민국 최고의 명리학자 백운산의 인생상담
- △ 2007년 1월 29일 출판

표창
- △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증서(2011/10/01)
- △ 대통령 훈표창(2009/03/ 25)
- △ 통일부장관 표창(2007/03/29)
- △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장(2000/07/19)
- △ 참전유공자 증서 대통령 강재창(1999/10/20) 등 다수의 감사장과 표창장

의 결 번 호	2012대선26(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재 호
심의대상기사	동아일보 2012년 10월 25일자 A35면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을 모집합니다!!』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예비후보자를 연상시키고 해당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다. 이 같은 광고는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3조(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을 모집합니다!!

"조국근대화의 주역 박정희 대통령의 위업을 이어받을 대통령을 이번에는 반드시 민초들의 힘으로 선출합시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 행태를 볼 때 풍전등화(風前燈火)라는 말이 너무나 실감나는 현실에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진입을 앞두고 친북, 종북정권 10년에 이처럼 국가정체성이 무너지고 국가안보의 기둥인 국군의 기강이 이처럼 해이하여 질 줄을 그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혀 억장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무너져가는 국가정체성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제는 '민초'들이 일어서야 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몇몇 동지들이 나서서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의 모임"을 결성, 애국운동에 앞장서고자 모임을 확산하려고 나섰습니다. 하오니 애국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가족과 이웃에 적극 전파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벽돌을 함께 쌓는다면 더 없는 기쁨이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애국시민들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5·16혁명이나 유신을 비난하는 자, 그대들은 그 당시 국가안보와 국제정세, 국가경제 상황이 어떠했으며 조국근대화의 의미나 알고 떠드는가?

그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경영계획과 강력한 추진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취는 없었다. 박대통령의 참 뜻을 국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철통안보와 경제건설에 일로 매진하였기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의 기적을 이룩했다는 것을 우리 민초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총을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가 그 당시 우리들의 가슴을 울린 구호였다. 세계 최하위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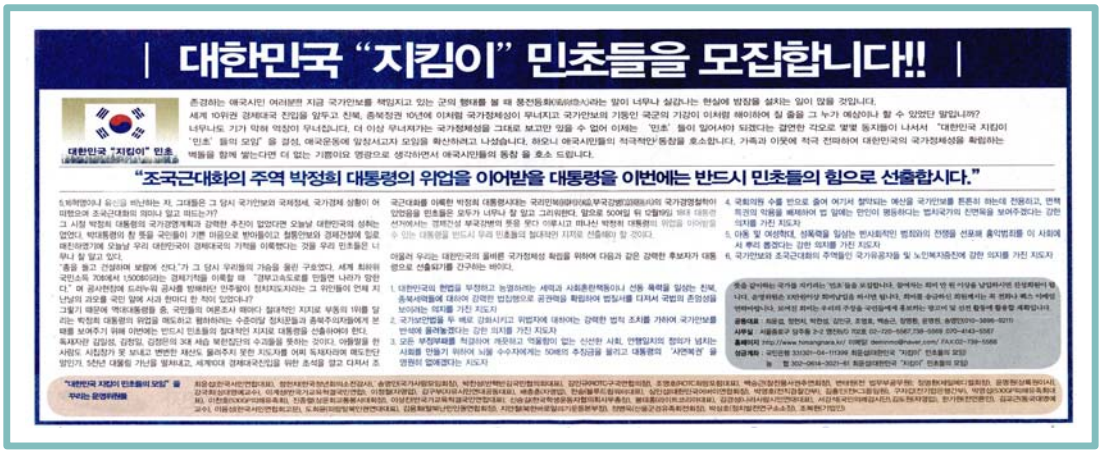
민소득 70$에서 1,500$이라는 경제기적을 이룩할 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면 나라가 망한다."며 공사현장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하던 민주팔이 정치지도자라는 그 위인들이 언제 지난날의 과오를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있었더냐?

그렇기 때문에 역대대통령들 중, 국민들의 여론조사 때마다 절대적인 지지로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업을 매도하고 폄하하려는 수준미달 정치꾼들과 종북주의자들에게 본 때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민초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대통령을 선출하여야 한다.

독재자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 북한집단의 수괴들을 뜻하는 것이다. 아들딸을 한 사람도 시집장가 못 보내고 변변한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 지도자를 어찌 독재자라며 매도한단 말인가. 5천년 대물림 가난을 떨쳐내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진입을 위한 초석을 깔고 다져서 조국근대화를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시대는 국리민복(國利民福), 부국강병(富國强兵)의 국가경영철학이 있었음을 민초들은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그리워한다. 앞으로 50여일 뒤 12월 19일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경제건설 부국강병의 뜻을 못다 이루시고 떠나신 박정희 대통령의 위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대통령을 반드시 우리 민초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강력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간구하는 바이다.

1.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능멸하려는 세력과 사회혼란책동이나 선동 폭력을 일삼는 친북, 종북세력들에 대하여 강력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을 확립하여 법질서를 다져서 국법의 존엄성을 보이려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
2. 국가보안법을 두 배로 강화시키고 위법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가하여 국가안보를 반석에 올려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
3.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억울함이 없는 신선한 사회, 언행일치의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뇌물 수수자에게는 50배의 추징금을 물리고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영원히 없애겠다는 지도자
4.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여 여기서 절약되는 예산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전용하고, 면책특권의 악용을 배제하여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국가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
5. 아동 및 여성학대, 성폭력을 일삼는 반사회적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흉악범죄를 이 사회에서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
6. 국가안보와 조국근대화의 주역들인 국가유공자들 및 노인복지증진에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을 모집합니다!!

"조국근대화의 주역 박정희 대통령의 위업을 이어받을 대통령을 이번에는 반드시 민초들의 힘으로 선출합시다."

의 결 번 호	2012대선27(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심의대상기사	조선일보 2012년 10월 25일자 A34면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을 모집합니다!!」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예비후보자를 연상시키고 해당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다. 이 같은 광고는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3조(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제2대선 26(자심) 보도내용과 동일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을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1976. 8. 18. 판문점 도끼 만행 당시 북한군은 미군장교 2명을 살해하고 병사 9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내 군화와 철모를 당장 가져오라" 하면서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라며 특명을 내려 64명의 특전사 장병들을 중무장 출동시켜 미루나무 제거는 물론 북한군 5-6-7-8초소를 초토화시켰으며, 평양상공에는 전투기를 집결시켰고, 명령만 내리면 폭격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써 김일성의 간장을 써늘케 하여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김일성은 전쟁은 모면했으나 자존심은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총을 들고 건설하여 보람에 산다." 가 우리 민초들의 가슴을 울린 구호였습니다. 세계 최하위 국민소득 70불에서 1,500불라는 경제기적을 이룩할 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면 나라가 망한다." 며 공사현장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하던 민주팔이 정치지도자라는 그 위인들이 언제 자난날의 과오를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있었습니까?

"조국근대화의 주역 박정희 대통령의 위업을 이어받을 대통령을 이번에는 반드시 민초들의 힘으로!!!"

우리 민초들은 12월 19일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경제건설과 부국강병의 뜻을 못다 이루시고 떠나신 박정희 대통령의 철통같은 안보관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가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지도자라는 분들이나 군의 행태를 볼 때 풍전등화(風前燈火)라는 말이 너무나 실감나는 현실에 방점을 셀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혀 억장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무너져가는 국가정체성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제는 '민초' 들이 일어서야 되겠다는 광연한 각오로 많은 동지들이 나서서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 들의 모임" 을 결성, 애국운동에 일장서고자 모임을 확산하려고 나섰습니다.
민초[民草]란 "백성을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잡초(雜草)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로 "위기에 처한 국가를 피와 땀으로 지켜온 주체는 항상 우리 민초였습니다.
하오니 애국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가족과 이웃에 적극 전파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백돌을 함께 쌓는다면 더 없는 기쁨이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애국시민들의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1.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농멸하려는 세력과 사회혼란책동이나 선동 폭력을 일삼는 친북, 종북세력들에 대하여 강력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을 확립하여 법질서를 다져서 국법의 존엄성을 보이려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
2. 국가보안법을 두 배로 강화시키고 위법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가하여 국가안보를 반석에 올려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
3.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폐풍하고 억울함이 없는 신선한 사회 인행일치의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뇌물 수수자에게는 50배의 추징금을 물리고 대통령의 '사면복권' 을 영원히 없애겠다는 지도자
4.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여 여기서 절약되는 예산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전용하고, 면책특권의 악용을 배제하여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국가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
5. 아동 및 여성학대, 성폭력을 일삼는 반사회적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흉악범죄를 이 사회에서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
6. 국가안보와 조국근대화의 주역들인 국가유공자들 및 노인복지증진에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

뜻을 같이하는 국가를 지키려는 '민초'들을 모집합니다. 함께하는 회비 만 원 이상을 납입하시면 정성회원이 됩니다. 운영위원은 10만원이상 회비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회비를 송금하신 회원께서는 꼭 전화나 팩스 이메일 연락바랍니다. 보내신 회비는 우리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광고비 및 선전 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동대표 : 최은섭, 장한식, 박학범, 김인규, 박승근, 고종욱, 장영환, 윤경환, 송영진(010-3696-9211)
사무실 : 서울종로구 창신동 2-2 영진빌딩 702호 02-720-5567,735-5566 070-4143-5507
홈페이지 : http://www.himangnara.kr/ 이메일: deminmo@naver.com/ FAX:02-739-5568
성금계좌 : 국민은행 331301-04-111399 최은섭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의 모임
농 협 302-0614-3021-61 최은섭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의 모임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의 모임"을 꾸리는 운영위원들

의 결 번 호	2012대선28(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경북도민일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2동 82-4 대표이사 윤 두 영
심의대상기사	경북도민일보 2012년 11월 12일자 1면 「'18조 규모 국민행복기금 설치'」, 3면 「文 "사람이 먼저, 가치실천 토건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 「安 "이기는 단일화 원칙 입각 모든 테이블 열고 머리맞대야"」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주요 예비후보자들이 같은 날 발표한 정책 공약을 보도하면서, 특정 예비후보자 관련 기사는 1면에 사진과 함께 게재한 반면, 타 예비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을 다룬 기사는 3면에 사진 게재 없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으로 처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고, 불충분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18조 규모 국민행복기금 설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1일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 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대책에 따르면 3000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배당액 출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고유계정 차입금 7000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여재원 8700억원 등 1조 8700억원을 바탕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우선 이 기금으로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채무를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게 채무조정을 하고 채무 감면율을 인상해 이들의 신용회복을 돕기로 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 초단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이용하는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연체는 없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DTI가 40~60%인 채무자(연체징후자) 가운데 사정이 극히 어려운 이를 선별, 상환기간 연장 또는 금리 조정 등을 실시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됐다.

박 후보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방안도 제시했다.

연체된 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방안과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분할상환제도,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취업후 상환 대출(ICL)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금융채무불이행자 전락의 사전 방지를 위해 신용불량 위기의 다중채무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 독촉이나 법적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기금 마련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을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322만명,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114만명, 1000만원 한도내 저금리 전환 96만명, 프리워크아웃제 확대 69만명, 연체징후자 지원 57만명 등 총 658만명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배드뱅크 이외에 채권 매각시 채무자 동의를 받는 것과 신용평가회사가 개인 평가결과를 사전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원에 '개인신용평가 구제 심판원'을 설치해 금융이용자 항변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8조 규모 국민행복기금 설치'

박근혜 후보, 가계부채 해결 위한 7대 정책과제 발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1일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 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대책에 따르면 3000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배당액 출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고유계정 차입금 7000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여재원 8700억원 등 1조 8700억원을 바탕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우선 이 기금으로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한

채무불이행자 채무조정
1000만원내 저금리 전환
658만명 혜택 받을 듯

연체채권을 매입,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채무를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게 채무조정을 하고 채무 감면율을 인상해 이들의 신용회복을 돕기로 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 초단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이용하는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연체는 없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DTI가 40~60%인 채무자(연체징후자) 가운데 사정이 극히 어려운 이를 선별, 상환기간 연장 또는 금리 조정 등을 실시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됐다.

박 후보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방안도 제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연체된 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방안과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분할상환제도,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취업후 상환 대출(ICL)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금융채무불이행자 전락의 사전 방지를 위해 신용불량 위기의 다중채무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 독촉이나 법적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기금 마련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을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322만명,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114만명, 1000만원 한도내 저금리 전환 96만명, 프리워크아웃제 확대 69만명, 연체징후자 지원 57만명 등 총 658만명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배드뱅크 이외에 채권 매각시 채무자 동의를 받는 것과 신용평가회사가 개인 평가결과를 사전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원에 '개인신용평가 구제 심판원'을 설치해 금융이용자 항변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경북도민일보

대구 6/14℃ 포항 7/14℃ hidomin.com 제 2271 호 2012년 11월 12일 월요일

청담바디&스킨 T.054)281-1313 T.054)273-1313
大長今 예약문의: 054)275-9898

대역사 포항동빈운하 순항

현 공정 30% 착착 진행…내년 10월 준공 가시화

동빈내항 푸른 물 넘실 세계적 미항 만든다

포항시가 대형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빈운하 건설이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는 11일 동빈운하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0%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송도교, 송림교, 해도교 등 3개 교량 건설이다. 이 가운데 송도교와 송림교는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다.

송도교 길이는 35m, 너비 25.5m이며 송림교는 길이 80.2m, 너비 20.5m. 또 해도교는 길이 51m, 너비 17.3m이다. 교량은 수면에서 3m 높이다. 교량은 운하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다.

동빈운하가 완공되면 소형 유람선이 운행된다. 또 양측편의 수문을 이설하고 있으며, 마침 현대E&C 및 수로원예공사와 함께 동빈운하의 넓은 물 조성을 위해 총 길이 1270m의 생활오수관로를 매설하고 있다.

이 밖에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인접한 형산강 문치에는 형산강 물관리센터 공사가 한창이다.

연면적 611㎡(185평)에 설치되는 물관리센터는 물을 충분히 확보해 갈수기에 물이 부족하거나 유속이 느릴 경우 동빈내항으로 물을 공급한다.

동빈운하 건설은 포항시의 중장기 최대 프로젝트인 '동빈내항 복원사업 TF'의 첫번째 사업이다.

운하 건설에 1400억원이 투자된다. 지난 5월 22일 착공에 들어가 내년 10월 준공된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동빈운하 건설을 시작으로 동빈내항을 세계적인 미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정수기자 jslee@idomin.com



포항의 미래 동빈운하 건설 한창 동빈운하가 내년 10월이면 준공돼 푸른 물이 넘실대는 세계적 미항을 자랑하게 된다. 시민들도 벌써 기대에 부풀고 있다. 포항의 새 역사를 공정 점검한다. 시건·포항시 제공

경북도 내년 예산 6조5618억원

올해 당초예산 대비 6.9% 증액…도청이전, 경제 활성화 초점

경북도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6조561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6조1357억원보다 6.9%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5조5280억원으로 올해보다 7.3%, 특별회계는 1조338억원으로 올해대비 4.9% 늘었다.

경북도 전체 예산규모의 증가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비 확보에 따른 국가부지에산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또는 이스탄불경주문화엑스포 개최나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등 도정 역점사업을 비롯해 자역경제 활성화, 관광자원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로보면 사회복지·보건 1조456억원, 농림해양수산 9172억원, 일반행정·교육 6638억원, 지역개발·교통 6274억원, 환경보호 5230억원이다. 또는 청년창업이나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3172억원, 모바일융합기술센터·마스큘린크한국연구소 설립 등 투자유치 기반조성에 807억원을 편성했다.

또 이스탄불경주문화엑스포와 3대 문화권 관광개발 등 관광자원개발에 2483억원,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 및 문화재보수 등 문화예술산업과 체육진흥에 1679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내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조3880억원, 지방교부세가 1조8433억원, 국고보조금이 2조9757억원이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가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는 800억원이다.

/정혜윤기자 jhy@idomin.com

'18조 규모 국민행복기금 설치'

박근혜 후보, 가계부채 해결 위한 7대 정책과제 발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1일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 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여러 금융 등을 활용해 재원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대책에 따르면 3000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외에 금융 출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고유계정 자입금 7000억원, 신용회복기금 전액재원 8700억원 등 1조8700억원을 바탕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우선 이 기금으로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한 **채무불이행자 채무조정 1000만원내 저금리 전환 658만명 혜택 받을 듯**

연체채권을 매입,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이 채무를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게 채무조정을 하고 채무 감면율을 인상해 이들의 신용회복을 돕기로 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 초단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이용하는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연체는 없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DTI가 40~60%인 채무자(연체징후자) 가운데 사정이 곤한 여러운 이들 선별, 상환기간 연장 또는 금리 조정 등을 실시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했다.

박 후보는 대책냄의 확자금 대출 부담 경감 방안도 제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

연체된 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수십을 일정기간 경감하는 방안과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분할상환제도,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취업후 상환 대출(ICL)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금융채무불이행자 관리의 사전 방지를 위해 신용불량 위기의 다중채무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빛 독촉이나 법적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기금 마련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을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322만명,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11만명, 1000만원 한도내 저금리 전환 96만명, 프리워크아웃제 확대 69만명, 연체징후자 지원 57만명 등 총 658만명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사가 배드뱅크 이외에 채권 매각시 채무자 동의를 받는 조과 신용평가회사가 개인 평가결과를 사전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원에 "개인신용평가 구제 심판원"을 설치해 금융이용자 항변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idomin.com

신공항 타당성조사 '없던 일'로

국토부 "내년 예산 10억 확보 무산"…새정부 출범 이후 검토 전망

'연말 대통령 선거 오해 낳을 수 있다'

정부가 1년 앞당겨 내년에 실시하기로 한 신공항 건설 등을 위한 조사 자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물거품이 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내년에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 조사를 하려고 신청한 예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공항 사업 분체는 새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이후에나 검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작년 1월 발표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서 신공항 건설과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를 2016년에 하도록 못 박았다가 시기를 1년 앞당겨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 10억원을 신청했다.

일부 공항의 항공콘과 이용승객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시급한 실태조사를 요구하자 전국 17개 공항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 이전 또는 확장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특히 포화상태에 도달한 제주국제공항에 대해선 신공항 건설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수요 예측 등 조사를 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연말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자칫 부정적인 인식이나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예산 배정이 불발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대선 후보들은 잇따라 제주도를 방문해 신공항 추진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달 제주를 찾아 제주 신공항 필요성에 대해 "장이으로 꼭 (추진)하겠다"며 "확장할지 신공항이 필자는 제주도민의 뜻을 담아 전문가의 연구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지난 8일 제주를 방문해 "현재 제주공항은 포화상태"라며 "신공항 건설 또는 제주공항의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공항 건설이나 기존 공항 확장 문제는 선거 때마다 표심공략을 위한 공약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idomin.com

울진원전도 전열관 결함

우원식 의원, 은폐의혹 제기

한수원이 올진3, 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결함에 대한 조사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에 올진3, 4호기의 전열관 결함이 확인된 수량이 각각 2423개와 7861개로 전년도의 조사결과보다 각각 6.5배와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진4호기의 경우는 2009년 3667개의 전열관 결함으로 논란이 있어 2012.1-7월까지 별도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확인된 결함수가 무려 전체 전열관 수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경호기자 skh@idomin.com



文 "사람이 먼저, 가치실천 토건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

'5개 門' 종합정책 발표 정치권 특권 · 기득권 포기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시해 국가 재정을 4대강 등 토건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진 종합정책 발표회에서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이미 시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지만, 검토 단계에 있는 대규모 토건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서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5개의 문(門)'으로 제시했던 ▲일자리 혁명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새정치 ▲평화와 공존 등 5대 분야별 비전 · 정책을 정리한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후략)

安 "이기는 단일화 원칙 입각 모든 테이블 열고 머리 맞대야"

공약집 '안철수 약속' 발표 文에 새정치 공동선언 함께 경제개혁 · 안보평화도 제안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후보 단일화 파트너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새정치 공동선언'과 함께 경제개혁 · 안보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도 각각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대선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하면서 "다음 대통령의 우선적 핵심과제는 경제, 안보, 새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후략)



경북도민일보 제 2271 호

朴 "野 후보 빨리 결정을 이벤트 성공한 사례 없어"

선대위 회의서 단일화 비판… "국민 선동 안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1일 대선 38일을 앞두고도 야권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막힌 사실"이라며 "지금도 말이 안되지만 빨리 (후보를) 결정해야 하고 우리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께 충분히 검증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나라와 삶을 위해 옳은 길인가 판단할 기회를 드려야 하는데 (야권에서는) 계속 단일화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며 내년 글로벌 경제위기 가능성을 언급, "만만치 않은 도전이 놓여있는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국민이 중대한 선택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선"이라며 "우리나라 운명과 미래를 얼마든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선거인데 여태까지 이벤트로 성공한 사례가 그동안 없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국민의 판단을 믿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은 선동하면 흥하는 그런 만만한 분이 아니다. 그런게 통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뉴

文 "사람이 먼저, 가치실천 토건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

'5개 門' 종합정책 발표
정치권 특권·기득권 포기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시해 국가 재정을 4대강 등 토건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진 종합정책 발표회에서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이미 시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지만, 검토 단계에 있는 대규모 토건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서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5개의 문(門)'으로 제시했던 ▲일자리 혁명▲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새정치 ▲평화와 공존 등 5대 분야별 비전·정책을 정리한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국민이 정치에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면 특권과 기득권이 바뀌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힌 후 "대통령을 비판,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뉴

安 "이기는 단일화 원칙 입각 모든 테이블 열고 머리맞대야"

공약집 '안철수 약속' 발표
文에 새정치 공동선언 함께
경제개혁·안보평화도 제안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후보 단일화 파트너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새정치 공동선언'과 함께 경제개혁·안보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도 각각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대선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하면서 "다음 대통령의 우선적 핵심과제는 경제, 안보, 새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기는 단일화 원칙에 입각한 모든 테이블을 열고 머리를 맞대 국민이 원하는 새정치와 정권교체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일화 빙식 협상도 착수할 것을 제의했다. 뉴

의 결 번 호	2012대선29(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경북매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빈1가 60-14 대표이사 최 윤 채
심의대상기사	경북매일 2012년 11월 12일자 3면 「박근혜 "가계부채 해결 추진하겠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주요 예비후보자들이 같은 날 모두 정책 공약을 발표하였음에도 특정 예비후보자 관련 기사는 1면에 인물 사진과 함께 비중 있게 게재한 반면, 여타 예비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은 다루지 않음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고, 불충분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근혜 "가계부채 해결 추진하겠다"

18조원 규모 국민행복기금 마련… 서민 고금리 부담줄이고 신용회복 지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1일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3천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배당액 출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에서의 차입금 7천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여재원 8천700억원 등 1조8천700억원을 바탕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이 기금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박 후보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방안도 제시했다.

연체된 학자금 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방안과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분할상환제도,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박 후보는 "부채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이 있어 채무자 지원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한편 선제적 대응으로 대출의 원전 부실화를 막는 등 3대 원칙을 갖고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 "가계부채 해결 추진하겠다"

18조원 규모 국민행복기금 마련… 서민 고금리 부담줄이고 신용회복 지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1일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경제과제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3천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외에 금융 배당액 출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에서의 차입금 7천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여재원 8천700억원 등 1조8천700억원을 바탕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이 기금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박 후보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방안도 제시했다.

연체된 학자금 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방안과 채무상환 능력에 따른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분할상환제도,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박 후보는 "부채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불평심, 심판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이 있어 채무자 지원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한편 선제적 대응으로 대출의 관전 부실화를 막는 등 3대 원칙을 갖고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경제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열린 새누리당 경북도당 포항 남·울릉 당원협의회의 필승결의대회에서 김순견 위원장이 강석호 경북도당위원장의 박수를 받으며, 대선 승리를 기원하고 있다.

새누리 포항 남·울릉 대선필승 결의대회

새누리당 경북도당 포항 남·울릉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순견)의 필승결의대회 및 당원교육이 지난 9일 오후 티피나빌딩 5층 컨벤션홀에서 당원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석 국회부의장, 홍문종 국회의원(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 강석호 국회의원(경북도당위원장,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윤진규 국회의원(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 지방자치본부장) 등 거물급 현직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박승호 포항시장, 김성화 전 국회의원(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 지역소통특별본부장), 장주식 중앙위원회 사무총장, 심종규 경북도당 상임부위원장 및 경북도당 당직자와 포항시 남구 시·도의원 , 원로등 당 협의회장들도 참석했다.

행사는 박근혜 후보의 격려동영상 상 상영, 주요 선대위원 임명장 수여, 홍문종 조직총괄본부장 및 합진규 지방자치본부장의 당원교육 강의와 필승결의문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또 이 자리에서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포항 남·울릉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 및 부위원장, 고문단, 정책자문 교수단, 자문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지도위원회 및 선대위 본부와 각종 본부위원장 등 140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임재학기자 imjh@kbmaeil.com

대구시의회 오늘부터 정례회… 의안 심의

대구시의회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45일간 제211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각 실·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2013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예산안도 심사한다. 청남인 1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전체회기를 결정하고, 김범일 대구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앙정치권에 대한 심층적인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이어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각 실·국 및 사업소, 지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접수한 각종 제보를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개선 및 시정사항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대구시의회, 대구 도시브랜드 마케팅 세미나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구시포럼(회장 이재년 의원)은 12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 도시브랜드 마케팅 전략과 앞으로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구시포럼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도시 간의 치열한 경쟁 추세에 대구시가 살아남으려면 차별화된 도시이미지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되돌아 봐야 한다는 시의원들의 요구로 마련됐다.

이재년 회장은 "도시브랜드 마케팅과 전략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의원 연수에서 함께 연구해 결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인교기자

"객관적인 투자보조금 기준 마련하라"

경북도의회 행정감사 김영기 도의원 지적

경북도의회(의장 송광각)는 지난 9일 제25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사흘째를 맞아 경북도 및 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기획경제위원회= 투자유치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진원(영덕) 기획경제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사항과 미진한 부분은 조속한 시정·보완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기욱(예천)부위원장은 경북통상(주)에 대한 출자지분내역과 농수산물 수출현황 등 제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출자전환에 따른 최대주주인 경북도가 점당한 배당금 권리를 행사하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원(영주) 의원은 경북도 유럽통상투자지원센터의 수출지원 및 투자유치 등 활동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하수(봉도) 의원은 해외통상주재관 근무와 관련 미국, 일본, 중국 등 특정국가에 편중되고 해외근무 경력이 없는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희수(포항) 의원은 경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에 대해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각 권도군 무상임대 등 활성화 방안 강구를 지적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꼽타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봉교(구미)의원은 경북도와 코트라간 협력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투자유치 실적이 미진한 대 대한 앞으로 추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말분(비례대표)의원은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현황 및 교류실적을 감증검의원과 대외홍보원이 이닌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기(청송) 의원은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투자보조금 지원 때 명확한 지원기준 없이 임의대로 지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을 조속히 마련토록 했다.

▲문화환경위원회= 류경해양산업 김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홍(영덕) 의원은 입업인 후계자를 위한 보증리장학기금 확충을 주문하고 숲 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을 권장해 일자리 창출과 녹화경제를 병행토록 했다.

김명호(안동) 의원은 낙동강 수질을 정화하려면 안동호와 임하호의 지하 하천에 대한 퇴폐작업이 우선이장며 하천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기진(상주) 의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상수도관망신진화 사업, 하수 관도망 BLT 사업 등 예산집행실태 파악의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추진상황을 중간 중간 점검하라고 지적했다.

백병훈(경주) 의원은 각종 위원회 구성 때 도의원을 참여시켜 도의원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낙동강 물주간행사시 5일간 12억원이 들었는데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고 경제이 밥 빠트게 나서서 2015 세계포럼이 차질 없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봉화서 공명선거 캠페인

봉화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길)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봉화군 의회의원보궐선거(다 선거구 : 법전면·춘양면·소천면·석포면)를 위해 전 임직원, 선거부정감시단, 바선모, 청렴 부 회원, 춘양면사무소 직원 등 30여 명이 9일 춘양 재래시장 5일 장날을 이용, 깨끗한 선거 관심 제고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용성화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 홍보용 전단 및 물티슈 배부' 등 거리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

봉화군 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군의원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의 특성상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금품·음식물 제공, 선거관련 단체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감시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지도 예방활동과 감시단속활동을 병행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하며, 일선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역 주민들의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봉화/박종희 기자 pjh4500@kbmaeil.com



의 결 번 호	2012대선30(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경북일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579-12 대표이사 정 정 화
심의대상기사	경북일보 2012년 11월 12일자 1면 「"국민행복기금 18조 조성 가계부채 해결"」, 3면 「문 · 안, 종합정책자료 발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주요 예비후보자들이 같은 날 발표한 정책 공약을 보도하면서, 특정 예비후보자 관련 기사는 1면에 사진과 함께 게재한 반면, 타 예비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을 다룬 기사는 3면에 사진 게재 없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으로 처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고, 불충분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경북일보

영세업체 '외상담보대출 폭탄' 맞나

"국민행복기금 18조 조성 가계부채 해결"

국민대통합

학교 회계직원노조 오늘 업무복귀

박근혜, 2차 지방투어…오늘 광주 방문

독도예산 20억원 증액

문 · 안, 종합정책자료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1일 각각 분야별 비전, 실천과제 등을 정리한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헌정기념관에서 종합정책 발표회를 열고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시해 국가재정을 4대강 등 토건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히며 60세 정년연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약속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상위 1%의 소득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6배"라며 공정경제를 위한 △재벌개혁 △골목상권 보호 및 중소상인 지원 등을 제시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도 이날 7개 비전과 25개 정책 과제를 담은 종합정책공약집인 '안철수의 약속'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 경제민주화도 격차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정치개혁을 선결과제로 삼고 청와대 이전을 추진, 국가 미래전략 전담부서 신설, 시민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정책 참여 강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안 후보는 지방 분권발전을 위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 구성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개혁 및 지방교부세 확충 △지역인재 할당제 등을 제시했다.

문·안, 종합정책자료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1일 각각 분야별 비전, 실천과제 등을 정리한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헌정기념관에서 종합정책 발표회를 열고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시해 국가재정을 4대강 등 토건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히며 60세 정년연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약속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상위 1%의 소득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6배"라며 공정경제를 위한 △재벌개혁 △골목상권 보호 및 중소상인 지원 등을 제시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도 이날 7개 비전과 25개 정책 과제를 담은 종합정책공약집인 '안철수의 약속'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 경제민주화도 격차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정치개혁을 선결과제로 삼고 청와대 이전을 추진, 국가 미래전략 전담부서 신설, 시민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정책 참여 강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안 후보는 지방 분권발전을 위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 구성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개혁 및 지방교부세 확충 △지역인재 할당제 등을 제시했다.

이상민기자 lsmlaw@kyongbuk.co.kr

의 결 번 호	2012대선31(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뉴아시아일보(아시아일보)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5, 808호 대표이사 정 영 춘
심의대상기사	아시아일보 2012년 11월 12일자 1면 「安, 반값선거운동 선언」, 「문재인, 5대 공약 발표」, 2면 「朴, 18조원 규모 국민행복기금 조성」, 3면 「문재인 대선공약 '일자리' 강조…책임총리제 공약」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주요 예비후보자들이 같은 날 발표한 정책 공약을 보도하면서, 특정 예비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관련 기사는 1면과 3면에 인물 사진과 함께 비중 있게 게재한 반면, 특정 예비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다룬 기사는 2면에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으로 처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고, 불충분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安, 반값선거운동 선언

"법정선거비용 절반만 쓰겠다"

朴·文에 동참 제안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반값 선거비'를 제안, 정치권 안팎의 파장이 예상된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저는 국민 세금으로 치러지는 법정선거비용 560억원의 절반만으로 이번 대선을 치를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도 절반만의 비용으로 대선을 치를 것을 제안 드린다"며 "두 분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리겠다. 두 분의 결단만 있으면 아마도 이번 대선은 가장 큰 정치혁신과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이번 제안은 '돈 안 드는 정치'라는 명분을 세워 나머지 두 후보를 압박하려는 카드로 보인다. 동시에 자금력 면에서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려는 일종의 양수겸장으로 풀이된다.

일단 안 후보는 이번 제안으로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박 후보와 문 후보를 겨냥했다. 정치권의 선거비용 과다지출에 반감을 드러내던 유권자들을 자극함으로 정치를 혐오해온 중도무당파의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술인 셈이다. 특히 이번 제안은 두 후보 중 박근혜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는 담쟁이펀드를 통해 대선자금의 확보·집행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박 후보의 경우 대선자금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안 후보는 박 후보를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

으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 후보가 '취약한 자금력'이라는 약점을 오히려 '돈 안 드는 선거'라는 강점으로 바꾸는 전술적 선택을 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간 안 후보는 조정래 후원회장을 내세워 후원금 모금활동을 실시하고 있을 뿐 국민펀드 모금작업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두 거대정당의 후보와 상대하기 위한 '총알'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공격을 받았지만, 이번 제안을 통해 오히려 나머지 후보를 향해 반격을 가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반값선거비 제안을 위해 국민펀드 모금 일정을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다. 동시에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희망돼지' 운동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데 성공했던 점을 감안, 선거비용 절감이라는 검증된 카드를 10년 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후보의 이번 제안이 실현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광고와 신문광고, 인쇄물 제작 등에 드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평도 있다. 이같은 지적에 안 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값 선거운동은 달라진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면 기존 선거비용의 절반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박 본부장은 "법정 선거운동 상한인 559억 7700만원은 변화된 국민의 생활 환경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구성이 아니다"면서 "외부로부터 '유세차 사용하지 말아라', '현수막이 많다' 등 선거운동 비용을 줄이라는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며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가 토론했고,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5대공약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다섯 개의 문, 단 하나의 문, 5대 문정책 공약'을 발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01년 3월 15일 창간 대표전화 02.588.2996 asiailbo.co.kr 2012년 11월 12일 월요일 제2452호

安, 반값선거운동 선언

"법정선거비용 절반만 쓰겠다"

朴·文에 동참 제안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반값선거비'를 제안, 정치권 안팎의 파장이 예상된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는 국민 세금으로 치러지는 법정선거비용 560억원의 절반만으로 이번 대선을 치를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도 절반만의 비용으로 대선을 치를 것을 제안 드린다"며 "두 분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두 분의 결단만 있으면 이번 대선은 가장 큰 정치혁신과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이번 제안은 '돈 안 드는 정치'라는 명분을 내세 나머지 두 후보를 압박하려는 카드로 보인다. 동시에 자금력 면에서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려는 일종의 양수겸장으로 풀이된다.

실제 안 후보는 이번 제안으로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박 후보와 문 후보를 겨냥했다. 정치권의 선거비용 과다지출에 반감을 드러내온 유권자들을 자극함으로써 정치를 혐오해온 중도무당파의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술인 셈이다. 특히 이번 제안은 두 후보 중 박근혜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는 당내이견으로 통해 대선자금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안 후보는 박 후보를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으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 후보가 '취약한 자금력'이라는 약점을 오히려 '돈 안 드는 선거'라는 강점으로 바꾸는 전술적 선택을 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간 안 후보는 조정래 후원회장을 내세워 후원금 모금활동을 실시하고 있을 뿐 국민펀드 모금작업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두 거대정당의 후보와 상대하기 위한 '총알'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공격을 받았지만, 이번 제안을 통해 오히려 나머지 후보를 향해 반격을 가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반값선거비 제안을 위해 국민펀드 모금 일정을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다. 동시에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희망돼지' 운동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데 성공했던 점을 감안, 선거비용 절감이라는 검증된 카드를 10년 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후보의 이번 제안이 실현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 광고와 신문광고, 인쇄물 제작 등에 드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평도 있다. 이같은 지적에 안 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값 선거운동은 달라진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면 기존 선거비용의 절반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박 본부장은 "법정 선거운동 상한인 559억7700만원은 변화된 국민의 생활 환경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구성이 아니다"면서 "외부로부터 '유세차 사용하지 말아라', '현수막이 많다' 등 선거운동 비용을 줄이라는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며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가 토론했고,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손복선기자

문재인, 5대공약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다섯 개의 문, 단 하나의 문, 5대 문정책 공약'을 발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unicef

아시아일보

ABS아시아방송은 한국ABC협회 웹사이트 매체에 참여하여 인증을 받은 매체입니다.

2001년 3월 15일 창간 대표전화 02.588.2996 asiailbo.co.kr 2012년 11월 12일 월요일 제2452호

安, 반값선거운동 선언

"법정선거비용 절반만 쓰겠다"

朴·文에 동참 제안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반값선거'를 제안, 정치권 안팎의 파장이 예상된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공동 캠프에서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는 국민 세금으로 치러지는 법정선거비용 560억원의 절반만으로 이번 대선을 치를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도 절반만의 비용으로 대선을 치를 것을 제안 드린다"며 "두 분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두 분의 결단만 있으면 이미도 이번 대선은 가장 큰 정책선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이번 제안은 '돈 안 드는 정치'라는 명분을 세워 나머지 두 후보를 압박하려는 카드로 보인다. 동시에 자금력 면에서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려는 일종의 양수겸장으로 풀이된다.

실제 안 후보는 이번 제안으로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박 후보와 문 후보를 겨냥했다. 정치권의 선거비용 과다지출에 반감을 드러내온 유권자들을 자극함으로써 정치를 혐오해온 중도 무당파의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술인 셈이다. 특히 이번 제안은 두 후보 중 박근혜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는 담철이라도를 통해 대선자금의 회보·집행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박 후보의 경우 대선자금과 관련한 내용을 밝혔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안 후보는 박 후보를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지도 거부하지도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으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 후보가 '귀막한 자금력'이라는 약점을 오히려 '돈 안 드는 선거'라는 강점으로 바꾸는 전술적 선택을 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간 안 후보는 조찬에 후원회장을 내세워 후원금 모금활동을 실시하고 있을 뿐 국민경선도 모금작업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두 거대정당의 후보와 상대하기 위한 '종잣' 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공격을 받았지만, 이번 제안을 통해 오히려 나머지 후보를 향해 반격을 가할 수 있게 됐다.

입장에서는 이번 반값선거비 제안을 위해 국민경선 모금 일정을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동시에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희망돼지' 운동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데 성공했던 점을 감안, 선거비용 절감이라는 검증된 카드를 10년 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는 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후보의 이번 제안이 실현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 광고와 신문광고, 인쇄물 제작 등에 드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관도 있다. 이같은 지적에 안 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값 선거운동은 달라진 생활임식 등을 고려하면 기존 선거비용의 절반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박 본부장은 "법정 선거운동 상한인 559억7700만원은 변화된 국민의 생활 환경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구성이 아니다"면서 "외부로부터 '유세차 사용하지 말아라', '현수막이 많다' 등 선거운동 비용을 줄이라는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며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가 토론했고,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손복선 기자



문재인, 5대공약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다섯 개의 문, 5대 문정책 공약' 을 발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경기, 美 자동차·IT기업 투자 유치

6박8일간 디트로이트·샌프란시스코에 실무단 파견

경기도가 미국 자동차 및 정보통신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 기업 유치에 나선다.

도는 12일부터 8박8일간 투자유치 전문인력 등 3명으로 구성된 실무단을 미국 디트로이트와 샌프란시스코에 파견한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실무단은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디트로이트에서 한국진출 희망기업 30여 곳을 대상으로 도내 자동차 시장 현황과 투자환경을 설명한다. 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관세 효과 등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관심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무단은 또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장비 세계 1위인 A사를 비롯해 개별 직업 10여 곳을 직접 방문해 상담한다.

실리콘밸리 내에는 투자유치 진행 중인 첨단 반도체 기업이 많아 이번 방문은 신규투자 및 증액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도는 전했다.

최원규 해외투자유치팀장은 "도내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 환경을 적극 설명해 감재적 투자가를 발굴하고, 첨단 IT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일 기자



영광원전 3호기 결함

제어봉 안내관 균열 발견

지역주민 불안… 시위 예고

영광3호기가 계획 예정이 중 제어봉 안내관 8개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품질보증서 위조사건으로 5·6호기가 중단된 후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3호기까지 국내원전에서는 처음으로 해상부품인 제어봉 안내관까지 균열되어 주민들의 불안감과 분노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원전 5·6호기에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공급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정의당 핵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 3월 부품 납품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한수원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 김제남, 정진후 의원은 이날 오후 영광군청을 방문,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3월 부품 납품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한수원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 김제남, 정진후 의원은 이날 오후 영광군청을 방문,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3월 3일부터 5일간 영광 3·6호기에 대한 품질보증 감사를 진행, 6 등급의 계전기 구매 과정에서 유자격 제작사의 부품을 납품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납품된 부품은 영광 3·6호기 발전소 제어계통에 334개가 사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품질검증서 등을 한수원에 제출 중인했어야 하지만 이를 제출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혔됐다.

핵안전특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수원은 납품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은폐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며 탈핵 특별법 제정, 고리 1호기·월성 1호기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등 '핵 없는 나라 3대 공약'을 제시했다.

영광 3·6호기의 가동 중단에 이어 영광 3호기에서도 결함이 발견되자 영광군의회를 중심으로 한 8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범 군민 대책위를 구성하여 지난 9일 1차 회의를 마친 후 4명의 공동위원장과 영광군의회 윤면복의 김정모위원장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임 한 후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 오는 15일 영광원전 앞에서 약 3000여명의 군민이 참여한 거듭에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김관용 기자

경기, 시화·반월산단 기업 수출 지원 8면

경기교육 100년의 약속
행복한 교육공화국을 만들어갑니다.



미래를 꿈꾸는 나

학문의 스승이기에 앞서 마음의 스승이고자 하는 선생님과
아이의 진정한 성취와 마음을 헤아리는 부모가 함께하는
너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약교.
경기교육이 만들어 갑니다.

혁신학교 운영 및 지정 문의 : 031)249-0525
홈페이지 안내 : http://hyeoksinschool.goe.go.kr

경기도교육청

인천경제청, 7개 분야 18개 사업

GCF사무국 지원책 마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송도 유치와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IFEZ는 먼저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과 녹색 금융 클러스터, 서비스산업 육성에 중점을 다할 방침이다.

IFEZ는 이를 위해 7개 분야 18개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IFEZ는 특히 헤드의 국제학교 입학 특례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다문화학거리 타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GCF 사무국 직원과 관계 기관의 정착 지원을 위해 원스톱 행정이 가능토록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글로벌 서비스센터를 회재 운영할 계획이다.

IFEZ는 이와 함께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영문표기를 채택, 도로 영문 표기를 규정한 도로표지 규칙 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LN관련 자료와 외국어서 지원을 위해 LN기재도시관을 국제도시관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IFEZ는 송도지구내 지안을 위해 경찰 지구대 신설을 요청하는 한편 이달 말 추가 사업 발굴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 IFEZ는 행정안전부에 경제청 지방재원으로 발행액 7316억원의 승인을 요청하고 특별교부세 70억과 30억원에 대한 인력 증원을 건의했다.

IFEZ 관계자는 "GCF 유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위상을 높이고 재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계속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기동 기자

경기 연천군 전곡읍 마포리에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착공

2014년까지 526억 투입

남북교류의 거점, 남북청소년교류센터(이하 센터)가 11월 9일 오후 3시 연천군 전곡읍 마포리 센터 예정부지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우식 통일부 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영우 국회의원,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김규년 연천군수 등을 비롯한 장·관계 주요인사, 지역주민 등 약 250여명 참석했다.

센터는 2014년 9월까지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 총 538억 원을 들여 약 8만평 부지에 건축연면적 51만6천여㎡ 4층(별) 규모로 500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된다.

도관계자는 "센터가 완공되면 남북청소년들간의 교류와 협력 및 통일체험 공간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남북이산가족상봉, 정부·민간차원의 대화와 협력 등 남북간에 다방면의 교류와 행사가 이뤄지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양희 기자

朴, 18조원 규모 국민행복기금 조성

가계부채 문제 해소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11일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데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이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는 ▲자활의지 채무자 선별지원 ▲금융회사 손실분담 ▲선제적 대응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한 가계부채 해법을 공약으로 내놨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는 최대 18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행복기금이 활용된다. 직접적인 재원 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우선 초단기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부업체 대부금 등 연 20~3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 증가와 관련해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고금리로 긴급 생활자금 등을 조달한 분들이 높은 이자부담과 연체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 후 신청자에 한해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채무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현재 180여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와 민간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140여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약 322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무감면율의 경우 일반 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는 최대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영수 기자

문재인 대선공약 '일자리' 강조… 책임총리제 공약

'다섯 개의 문' 주제 각 분야 정책 총망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40만개 확충하고,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정책 발표는 지금까지 문 후보 정책의 '종합판'으로 △일자리 혁명의 문 △복지국가의 문 △경제민주화의 문 △새로운 정치의 문 △평화와 공존의 문 등 '다섯 개의 문'이란 주제 아래 각 분야의 정책이 총망라됐다. 문 후보는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하겠다", "한정된 국가 재정을 '4대강'과 같은 토건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면서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편집자 주

◇ 일자리 정책

일자리는 문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다. 문 후보 일자리정책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바꾸고, 지키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그는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견기업 4000개 육성으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개의 일자리가 자식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현재 2조2교대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3조2교대제 또는 3조3교대제로 전환하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위해 2017년까지 전 산업의 비정규직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기 내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을 통해 일자리 차별을 철폐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최저임금수준을 2017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는 한국형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도입을 제시했다. 장기실업자와 폐업 영세업자에게 월 50만을 지급하고 6개월마다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년 연장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공무원에만 적용된 '법정정년 60세'를 2015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을 생각했지만, 이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라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을 역설했다.

그는 "일자리가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내수를 확대하고, 내수확대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때"라고 강조했다.

◇ 복지 정책

문 후보의 복지 정책은 각종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현재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18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향후 이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자에게는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원)으로 지급하고,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

에게는 '구직촉진급여'를 매월 50만원으로 최대 2년간 지급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육비 절감을 위해 임기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을 실시해 교육비를 절감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2018년까지 10%, 장기적으로 15%까지 확대해 서민 주거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양성평등 고용촉진 5개년 계획 추진 △0세아 아버지 휴가 2주 제도화 △육아휴직급여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후략)

문재인 대선공약 '일자리' 강조… 책임총리제 공약

'다섯 개의 문' 주제 각 분야 정책 총망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40만개 확충하고,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정책 발표는 지금까지 문 후보 정책의 '종합편'으로 △일자리 혁명의 문 △복지국가의 문 △경제민주화의 문 △새로운 정치의 문 △평화의 공존의 문 등 '다섯 개의 문'이란 주제 아래 각 분야의 정책이 총망라됐다. 문 후보는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하겠다", "한정된 국가 재정을 '4대강'과 같은 토건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면서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관련기사 7면

◇일자리 정책

일자리는 문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다. 문 후보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바꾸고, 자키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그는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견기업 4000개 육성으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개의 일자리가 자식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현재 2.3조2교대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3.3조2교대제 또는 3.3조3교대제로 전환하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위해 2017년까지 전 산업의 비정규직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기 내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국민 고용공동체' 재정을 통해 일자리 차별을 철폐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최저임금수준을 2017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일자리를 자키기 위한 정책으로는 한국형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도입을 제시했다. 장기실업자와 폐업 영세업자에게 월 50만을 지급하고 6개월마다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년 연장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공무원에만 적용된 '법정정년 60세'를 2013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을 생각했지만, 이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라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을 역설했다.

그는 "일자리가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내수를 확대하고, 내수확대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때"라고 강조했다.

◇복지 정책

문 후보의 복지 정책은 각종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현재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18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향후 이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자에게는 '청년희망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원)으로 지급하고,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는 '구직촉진급여'를 매월 50만원으로 최대 2년간 지급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육비 절감을 위해 임기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을 실시해 교육비를 절감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2018년까지 10%, 장기적으로 15%까지 확대해 서민 주거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문 후보의 경제정책은 '공정경제'로 대표된다. 그는 "시장에도 1인 1표의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 그러야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경제"라고 설명했다.

'시장경제'와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도 더해졌다. 문 후보는 "시장경제를 살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다. 이것이 정글경제를 탈출하는 저의 가치와 철학, 방법론이며 우리는 이것을 경제민주화라 부른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방안

문 후보의 정치개혁의 핵심은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다.

그는 "여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책임총리제와 정당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구 의석은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100석으로 늘리는 한편,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현정회 연금 폐지,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당 기득권 타파를 위해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중앙당의 권한을 시·도당위원회로 이양 ▲중앙당 정책 기능 강화 △지정위원회, 대학위원회 설치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시민 참여 '검찰위원회' 권한 강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확대 등 정찰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국가정보원위원회 부활, 대통령 및 대통령후보자의 형제·자매 재산 공개,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및 비리 행위자에 대한 공직임용 금지 등의 부정부패 근절 방안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 구상을 밝혔다. 남북 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10·4선언의 48개 합의사항을 비롯, 남북기본합의서와 6·15선언에서 합의한 경제분야 관련 사항을 실천한다는 내용이다.

한반도 평화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 공동시장을 만들고 반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인수위 때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초안을 만들어 2013년에 한미, 한중 정상들과 조율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에는 6자회담 참가국가 정상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합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안보정책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 정례화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군사당국자간 핫라인 우선 개설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의식한 듯 'NLL을 확실히 수호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해 NLL을 안전하게 자키면서도 평화경제권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 복무기간을 '국방개혁 2020'의 계획대로 18개월로 단축하고, 군의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일보 종합 2012년 11월 12일 월요일 3

문재인 대선공약 '일자리' 강조… 책임총리제 공약

'다섯 개의 문' 주제 각 분야 정책 총망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40만개 확충하고,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지금까지 문 후보 정책의 '종합판'으로 △일자리 혁명의 문 △복지국가의 문 △경제민주화의 문 △새로운 정치의 문 △평화와 공존의 문 등 '다섯 개의 문'이란 주제 아래 각 분야의 정책이 총망라됐다. 문 후보는 "국가의 지향해분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하겠다", "한정된 국가 재정을 '4대강' 과 같은 토건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면서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편집자 주

○일자리 정책

일자리는 문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다. 문 후보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바꾸고, 지키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그는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견기업 4000개 육성으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법정 노동시간인 주수해도 70만개의 일자리가 자식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현재 3조3조대책을 시행하는 사업장은 3조3교대제 또는 3조3교대제로 전환하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위해 2017년까지 전 산업의 비정규직 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기 내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국인 고용공동법' 제정을 통해 일자리 차별을 철폐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최저임금수준을 2017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는 한국형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도입을 제시했다. 장기실업자와 폐업 영세업자에게 월 50만을 지급하고 6개월마다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연장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공무원에만 적용된 '법정정년 60세'를 2015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자금까지 우리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만을 생각했지만, 이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을 역설했다.

그는 "일자리가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내수를 확대하고, 내수확대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 정책

문 후보의 복지 정책은 작동 소득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현재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18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향후 이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자에게는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원)으로 지급하고,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는 '구직촉진금여'를 매월 50만원으로 최대 3년간 지급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의료비 걱감을 위해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육비 걱감을 위해서는 이자해합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이른바 '3해한 3법'을 도입하고, 현재 변동금리 · 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경제정책은 '공정경제'로 대표된다. 그는 "시장에도 1인 1표의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경제'라고 설명했다.

'사람경제'와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도 이해했다. 문 후보는 "사람경제를 실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다. 이것이 정당경제를 탈출하는 제3 가치와 철학, 방법론이며 우리는 이것을 경제민주화라 부른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방안

문 후보의 정치개혁의 핵심은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다.

그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책임총리제와 정당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구 의석은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100석으로 늘리는 한편, 공약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헌정의 연금 폐지,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당 기득권 타파를 위해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중앙당의 권한을 시 · 도당위원회로 이양 ▲중앙당 정책 기능 강화 △지정이원회, 대학위원회 설치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시민 참여 '검찰위원회' 권한 강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확대 등 검찰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국가정보원위원회 부활, 대통령 및 대통령후보자의 형제 · 자매 재산 공개, '5대 중에 부패' 법제자 및 비리 행위자에 대한 공직임용 금지 등의 부정부패 근절 방안도 포함했다.

○외교 · 안보 및 대북정책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 구상을 밝혔다. 남북 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10 · 4선언의 4개 합의사항을 비롯, 남북기본합의서와 6 · 15선언에서 합의한 경제분야 관련 사항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이다.

한반도 평화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 공동시장을 민족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인수위 때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초안을 만들어 2013년에 한미, 한중 정상들과 조율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에는 6자회담 참가국가 정상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합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안보정책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 정례화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군사합국자간 핫라인 우선 개설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의식한 듯 "NLL을 확실히 수호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해 NLL을 단단하게 지키면서도 통해경제공간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 복무기간을 '국방개혁 2025'의 계획대로 18개월로 단축하고, 군의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배치참고표 심매경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첫번째 주말인 11일 오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학가스텍디가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진행 했다 한 수험생이 핸드폰 조명을 이용해 입시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다.

환율 심리적 지지선 1090원 깨져

"타격 제한적" vs "수출기업 피해 커질 것"

원 · 달러 환율의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1090원선이 붕괴되면서 환율이 어느 수준까지 추락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원 · 달러 환율이 미국 대선 이후 하락 속도마저 가파른 모습이어서 수출주들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진 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으로 기존의 통화 정책 관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달러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내년 한국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환율 하락 추세와 영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진단을 내놓고 있다.

○심리적 지지선 1090원선 붕괴…엇갈리는 '전망'

지난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 ·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원 내린 1087.6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소폭(3.9원) 오른 이후 또 다시 내림 세다.

외환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 폭락과 누적된 레벨 부담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선 지난 7일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5.3원 내린 1085.4원으로 마감해 9일 만에 1090원선이 붕괴됐다. 이는 지난해 9월 9일 1077.3원 이후 14개월 만의 최저치다.

증권업계와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경제 전망보고서를 잇달아 내고 환율 하락의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율 하락 속도와 그 정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원화 강세 기조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을 택시했다.

LG경제연구원은 "달러당 1100원선에서도 원화가치 여전히 저평가"라고 보고서에서 1100원 아래로 떨어진 원 · 달러 환율이 앞으로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원화 가치가 과거 경상수지 균형시기와 비교했을 때 약 10%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원화 저평가 정도와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고려하면 원 · 달러 환율 추가하락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며 "내년에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며 원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이달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들을 대상으로 연 '2013년 경제한산 점검' 강의에서 내년 원 · 달러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철희 동양증권 수석연구원은 "최근의 환율 하락 지나치게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면 원화의 강세현상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그 근거로 달러약세 현상이 종료된 점과 원화 강세 기조가 위안화 강세에 따른 동조화 현상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반면 한민규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최근 미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유럽 재정 위기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며 "신흥국의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원화를 비롯한 주요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비교적 견고한 데다 국책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잇달아 상향조정 하면서 해외의 시각이 개선된 점도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경제 타격 제한적" VS "수출기업 중심 피해 커질 것"

환율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환율 하락으로 입을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지만, 일부에서는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마주옥 키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원화 강세가 국내 수출회복세를 훼손시킨 적이 없었다"며 "지난 1988년 이후 원 · 달러 환율과 국내 수출물량지수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 연구원은 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원 · 달러 환율보다 원 · 엔 환율"이라며 엔화의 추세적 약세 가능성도 낮다"고 덧붙였다.

반면 환율 하락으로 국내 주력 수출업종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환율 급등에 따른 업종별 피해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500개)들의 수출 마진 확보를 위한 환율 마지노선은 1086.2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일 현재 원달러 환율이 1085.4원으로 환율 마지노선 밑으로 하락한 상태다.

업종별로 보면 '가전'(1106.5원), '석유화학'(1104.3원), '반도체 · 디스플레이'(1099.0원), '철식료'(1090.4원)는 업종별 환율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수출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했고 '자동차'(1084.9원), '철강 · 금속'(1084.2원), '조선 · 플랜트 · 기자재'(1083.3원)도 위험 신호가 켜졌다.

규모별 환율 마지노선은 대기업이 1076.1원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1090.4원으로 환율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원화 강세에 따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조사됐다.

손영기 대한상공회의소 거시경제팀장은 "가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받는 이들 품목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한다"며 "이들 기업의 수출 채산성 악화는 내수가 집복된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위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내려가는 환율

새정치공동선언 4차 회의서도 결론 못내

의원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등서 합의 난항겪는 듯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11일 새정치 공동선언 4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따라서 양측이 당초 12일 공동선언 최종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참비에서 공동선언문 문안 작성 협의를 벌인 양측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협의 내용이) 상당 부분 정리가 됐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와 상안 작업을 (내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종합적인 정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은 별도의 발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일은 적합한 시간에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조율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공동선언문 문안 협의와 관련,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본 상태지만 몇가지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무팀 협의에는 문 후보 측 팀장인 정해구 새로운정치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김현미 의원, 윤호중 전략기획실장이, 안 후보 측에서는 팀장인 김상식 공동선거대책본부장과 심지연 교수, 김민전 교수가 참석했다.

양측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1차 협의 때 합의한 4대 의제(△새정치의 필요성과 방향 △정치 · 정당 개혁의 과제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의 방향 △새정치 실천을 위한 약속) 중 정치 · 정당 개혁의 의제와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앞서 정치 · 정당 개혁 의제와 관련,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등을 정치권에 제안했지만 여야 정치권은 안 후보의 요구를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양측은 실무 협의에서도 이 같은 구체적인 정치쇄신 과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문 후보 측은 새정치 공동선언이 양측 모두 동의하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안 후보 측은 구체적인 혁신 과제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손복선 기자

특임검사, 유진그룹 · 검사 자택 등 압수수색

현직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수장 특임검사팀은 11일 김모(51)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임검사팀은 수사 착수 이틀째인 이날 오전 10시께 김 부장검사의 자택과 사을 서초동 서울고검 사무실, 유진그룹 본사 사무실과 금융채공자 강모씨의 자택 등 5~6곳에 대검찰청 전문 수사요원 등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 10일 법원에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집행했다. 다만 김 부장검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의 결 번 호	2012대선33(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일간시사서울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7길 13 대표이사 나 정 영
심의대상기사	시사서울 2012년 11월 13일자 3면 「박근혜 지지자들의 '생각'」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 칼럼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들의 면면을 다룬 칼럼을 게재하면서 여타 예비후보자들은 부정적인 평가로 일관하는 반면, 특정 예비후보자는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다룸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는 개인 또는 언론사 내부필진의 의견을 게재할 때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2조(기고 등)제1항을 위반한 위 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근혜 지지자들의 '생각'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전국적으로 약 40%~45%에 달하며, 그 충성도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공고하다. 역대 어떤 대통령후보도 이와 같은 절대적인 지지를 그것도 수년간이나 계속적으로 받은 적이 없는 까닭에 박근혜후보는 10여 년 가까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안철수-문재인 후보 간의 단일화는 국민을 속이는 야합이라고 박근혜후보 지지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텃밭으로 해서 우후죽순처럼 자라난 가라지후보라고 보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은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대체로 50% 정도에 이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근혜 지지자들은 이 같은 '변화의 마음'을 통째로 훔친 사람이 바로 안철수 후보라는데 이견이 없다. 그는 국민 0.01%도 들어가기 힘든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중고교 때 성적이 좋지 못했다고 담담히 말한다. 공부의 영웅을 겨냥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인으로 성공한 후에도 무결점의 경영인으로 자신을 포장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이어 대권후보로서 어떠한 현안도 국민의 마음에 따르겠으므로 현재로서는 "자신도 모르겠다"는 말로써 검증을 회피하면서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뒤늦게 그를 "기회포착의 달인"으로 깨달으면서 몹시 우려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후보도 검증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1년 전만해도 문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을 당시 단 자리수의 지지율을 보여 왔다. 그러나 여당의 강력한 대권 주자인 박근혜 후보의 대항마가 필요하다는

야권의 필요성과 앞서 지적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합쳐지면서 20%대의 지지율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문 후보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는 것 외에는 정치적인 경력이 없다. 문 후보가 훌륭한 사람인 것은 인정하지만, 18대 대통령 그릇은 아니라는 것이 박근혜지지자들의 확신이다.

이 분들에 비하면 박근혜 후보는 철저히 검증된 정치인이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오명 속에 풍전등화의 위기 맞아 박후보를 당 대표로 선출했고 박후보는 천막당사로 당사를 이전해서 한나라당을 살려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연설을 하려고 단상에 오르려다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큰 상처를 입고도 의연하게 대처해서 국민들을 감동시켰다. 2008년 세종시 이전을 무산시키려는 이명박정부의 정책은 당시 야당은 물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으나 박근혜의원의 결연한 반대로 수도권 이전은 현재 법대로 집행되고 있다. 박근혜후보가 정권교체의 대상이 되기에는 불합리한 이유다. 지난 4. 11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된 것도 정치적으로 기적에 가까운 일로 공인되고 있다.

대통령후보로서 이만한 경력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18일 발표된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대선공약은 박 후보가 서민(+국민)의 대통령후보라는 점을 각인시켜 줄만한 획기적인 제안이다.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 칼 럼 |

본사 부회장 대기자 **도승희**

박근혜 지지자들의 '생각'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전국적으로 약 40%-45%에 달하며, 그 충성도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공고하다. 역대 어떤 대통령후보도 이와 같은 절대적인 지지를 그것도 수년간이나 계속적으로 받은 적이 없는 까닭에 박근혜후보는 10여 년 가까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안철수-문제인 후보 간의 단일화는 국민을 속이는 야합이라고 박근혜후보 지지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제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텃밭으로 해서 우후죽순처럼 자라난 가라지후보라고 보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은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대체로 5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근혜지지자들은 이 같은 '변화의 마음'을 통째로 훔친 사람이 바로 안철수 후보라는데 이론이 없다. 그는 국민 0.01%도 들어가기 힘든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중고교 때 성적이 좋지 못했다고 담담히 말한다. 공부의 영웅을 겨냥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인으로 성공한 후에도 무결점의 경영인으로 자신을 호도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이어 대권후보로써 어떠한 현안도 국민의 마음에 따르겠음으로 현재로서는 "자신도 모르겠다"는 말로서 검증을 회피하면서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뒤늦게 그를 "기회포착의 달인"으로 깨달으면서 몹시 우려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인 후보도 검증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1년 전만해도 문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을 당시 단 자리수의 지지율을 보여 왔다. 그러나 여당의 강력한 대권 주자인 박근혜 후보의 대항마가 필요하다는 야권의 필요성과 앞서 지적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합쳐지면서 20%대의 지지율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문 후보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는 것 외에는 정치적인 경력이 없다. 문 후보가 훌륭한 사람인 것은 인정하지만, 18대 대통령 그릇은 아니라는 것이 박근혜지지자들의 확신이다.

이 분들에 비하면 박근혜 후보는 철저히 검증된 정치인이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오명 속에 풍전등화의 위기 맞아 박후보를 당 대표로 선출했고 박후보는 천막당사로 당사를 이전해서 한나라당을 살려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연설을 하려고 단상에 오르려다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큰 상처를 입고도 의연하게 대처해서 국민들을 감동시켰다. 2008년 세종시 이전을 무산시키려는 이명박정부의 정책은 당시 야당은 물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으나 박근혜의원의 결연한 반대로 수도권 이전은 현재 법대로 집행되고 있다. 박근혜후보가 정권교체의 대상이 되기에는 불합리한 이유다. 지난 4.11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게된 것도 정치적으로 기적에 가까운 일로 공인되고 있다.

대통령후보로서 이만한 경력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18일 발표된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대선공약은 박 후보가 서민(=국민)의 대통령후보라는 점을 각인시켜 줄만한 획기적인 제안이다.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의 결 번 호	2012대선34(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문화일보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68번지 대표이사 이 병 규
심의대상기사	문화일보 2012년 11월 14일자 39면 「'노빠', '폐족' 들이 다시 활개치기 시작, 경제 · 안보, 또 흔들리게 할 것인가?」 15일자 31면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을 모집합니다!!」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이나 예비후보자를 연상시키고 해당 정당이나 예비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다. 이 같은 광고는 해당 정당이나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3조(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ノ빠', '폐족'들이 다시 활개치기 시작, 경제 · 안보, 또 흔들리게 할 것인가?

선진화시민행동 1인 시위

11월 15일(목) 11:30 시작 : 서울 광화문광장-종로-동대문-을지로-시청앞-광화문 시내 일주 시위~12월 18일까지 매일 계속

남녀노소 국민들은 현명하고 위대하다
영토선 NLL 포기음모, 'ノ빠'들은 사죄하라
교육망친 전교조를, 표를 모아 심판하자
단일화는 정치음모, 두 번 다시 속지말자
국내외의 경제위기, 풋내기에 맡길건가
종북좌파 무상공약, 기업죽고 경제파탄
'ノ빠'들의 반미 · 종북, 경험하고도 속을거냐
전교조의 사상교육, 우리아이 다 망친다
국민무시 단일화 쇼, '새정치' 약속 어디갔나?
우리가 세운 경제 · 안보, 판단 잘못 무너질래!

선진화시민행동(상임대표 : 서경석 목사)

‘노빠’, ‘폐족’들이 다시 활개치기 시작, 경제·안보, 또 흔들리게 할 것인가?

선진화시민행동 1인 시위

11월 15일(목) 11:30 시작: 서울 광화문광장–종로–동대문–을지로–시청앞–광화문 시내 일주 시위 ~ 12월18일까지 매일 계속

남녀노소 국민들은 현명하고 위대하다	종북좌파 무상공약, 기업죽고 경제파탄
영토선 NLL 포기음모, ‘노빠’들은 사죄하라	‘노빠’들의 반미·종북, 경험하고도 속을거냐
교육망친 전교조를, 표를 모아 심판하자	전교조의 사상교육, 우리아이 다 망친다
단일화는 정치음모, 두 번 다시 속지말자	국민무시 단일화 쇼, ‘새정치’약속 어디갔나?
국내외의 경제위기, 풋내기에 맡길건가	우리가 세운 경제·안보, 판단 잘못 무너질라!

1인시위에는 서경석(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목사), 이상구(국민행동본부 중앙자문위원), 현소환(연합뉴스–YTN 전임사장), 김길자(대한민국사랑회 회장), 김종록(외무부 전임 대사), 김 호(소망교회 원로장로), 송강룡(예비역 해군대령), 주옥순(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등이 각각 앞장서 참여합니다.
나라의 위기를 맞아 애국충정으로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010–3809–4001(박찬우 사무총장)로 연락주십시요.

선 진 화 시 민 행 동 (상임대표: 서경석 목사) ※후원계좌: 농협 360–01–056880

|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을 모집합니다!!! |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1976. 8. 18. 판문점 도끼 만행 당시 북한군은 미군장교 2명을 살해하고 병사 9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내 군화와 철모를 당장 가져오라”** 하면서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라며 특명을 내려 64명의 특전사 장병들을 중무장 출동시켜 미루나무 제거는 물론 북한군 5-6-7-8초소를 초토화시켰으며, 평양상공에는 전투기를 집결시켰고, 명령만 내리면 폭격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써 김일성의 간장을 싸늘케 하여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김일성은 전쟁은 모면했으나 자존심은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총을 들고 건설하여 보림에 산다.”** 가 우리 민초들의 가슴을 울린 구호였습니다. 세계 최하위 국민소득 70$에서 1,500$라는 경제기적을 이룩할 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면 나라가 망한다.”** 며 공사현장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하던 민주팔이 정치지도자라는 그 위인들이 언제 지난날의 과오를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있었습니까?

“조국근대화의 주역 박정희 대통령의 위업을 이어받을 대통령을 이번에는 반드시 민초들의 힘으로!!!”

우리 민초들은 12월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경제건설과 부국강병의 뜻을 못다 이루시고 떠나신 박정희 대통령의 철통같은 안보관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가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지도자라는 분들이나 군의 행태를 볼 때 풍전등화(風前燈火)라는 말이 너무나 실감나는 현실에 비참을 설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혀 억장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무너져가는 국가정체성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제는 ‘민초’ 들이 일어서야 되겠다는 절연한 각오로 많은 동지들이 나서서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 들의 모임” 을 결성, 애국운동에 앞장서고자 모임을 확산하려고 나섰습니다.
민초(民草)란 “백성을 곤질긴 생명력을 지닌 잡초(雜草)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로 위기에 처한 국가를 피와 땀으로 지켜온 주체는 항상 우리 민초였습니다.
허오니 애국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가족과 이웃에 적극 전파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백돌을 함께 쌓는다면 더 없는 기쁨이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애국시민들의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강력한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능멸하려는 세력과 사회혼란책동이나 선동 폭력을 일삼는 친북, 종북세력들에 대하여 강력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을 확립하여 법질서를 다져서 국법의 존엄성을 보이려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
2. 국가보안법을 두 배로 강화시키고 위법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가하여 국가안보를 반석에 올려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
3.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억울함이 없는 신선한 사회, 언행일치의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뇌물 수수자에게는 50배의 추징금을 물리고 대통령의 ‘사면복권’ 을 영원히 없애겠다는 지도자
4.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여 여기서 절약되는 예산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전용하고, 면책특권의 악용을 배제하여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국가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
5. 아동 및 여성학대, 성폭력을 일삼는 반사회적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흉악범죄를 이 사회에서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
6. 국가안보와 조국근대화의 주역들인 국가유공자들 및 노인복지증진에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

뜻을 같이하는 국가를 지키려는 민초들을 모집합니다. 참여하는 회비 만 원 아상을 납입하시면 신성회원이 됩니다. 운영위원은 10만원이상 회비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회비를 송금하신 회원에서는 꼭 전화나 팩스 이메일 연락바랍니다. 모아진 회비는 우리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광고비 및 선전 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동대표 : 최용섭, 정한치, 박찬성, 김인구, 박승근, 고종국, 김명희, 윤명희, 송영인(010-3696-9211)
사무실 : 서울종로구 등두동 2-2 명진B/D 702호 02-720-5567,736-5568 070-4143-5567
홈페이지 : http://www.himangnara.kr/ 이메일: deminmo@naver.com/ FAX:02-739-5568
신규회원 : 국민은행 33\301-04-11099 최용섭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의 모임
농 협 302-0614-3021-61 최용섭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의 모임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의 모임”을 꾸리는 운영위원들

최용섭(한국사진인연합회회장), 정한치(한국정보화미디어산업사), 송영인(한국기사식당모임회장), 박찬성(박찬성인권변호사회), 김인구(나라사랑푸른군인회), 박승근(국정인권연합사추주연회장), 고종국(정보통신협력부사장), 김명희(정보통신협력부장), 윤명희(한국기술복지연합), 이정희(대한민국기술복지결의연합), 이정희(대한민국기술복지결의연합), 김구하(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배준호(기업인), 한승철(주간경향), 신인섭(대한민국국어바로쓰기협회), 박정희(전직경찰간부), 김홍진(한국그룹회원), 구자갑(전경찰청장), 박정섭(300K무궤유주회회장), 이인호(300K무궤유주회), 이인호(300K무궤유주회), 전홍렬(삼모교통주식회장), 이정진(한국기술복지결의연합), 이정희(대한민국기술복지결의연합), 김대홍(한국기술복지결의연합), 박두철(국가통합추진위), 서인석(국민의해외고시인), 김도현(사업인), 한기정(전인문본인), 김규근(통계자문위원), 이종성(한국사진인연합회고문), 도희준(국민협력연합인권연대회), 신종현(협력연합인권연대회), 지만철(북한국제기업협회부장), 정명희(전통군인주식회장회장), 박정희(한국사진인연합회고문), 김홍순(한국사진인연합회고문), 김명순(한국사진인연합회고문), 김명순(한국사진인연합회고문), 김명

의 결 번 호	2012대선35(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대표이사 이 철 휘
심의대상기사	서울신문 2012년 11월 15일자 31면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을 모집합니다!!」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이나 예비후보자를 연상시키고 해당 정당이나 예비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다. 이 같은 광고는 해당 정당이나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3조(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2012 대선 34(자심) 보도내용과 동일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을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1976. 8. 18. 판문점 도끼 만행 당시 북한군은 미군장교 2명을 살해하고 병사 9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내 군화와 철모를 당장 가져오라" 하면서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라며 특명을 내려 64명의 특전사 장병들을 중무장 출동시켜 미루나무 제거는 물론 북한군 5-6-7-8초소를 초토화시켰으며, 평양상공에는 전투기를 집결시켰고, 명령만 내리면 폭격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써 김일성의 간장을 써늘케 하여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김일성은 전쟁은 모면했으나 자존심은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총을 들고 건설하여 보람에 산다." 가 우리 민초들의 가슴을 울린 구호였습니다. 세계 최하위 국민소득 708에서 1,500불라는 경제기적을 이룩할 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면 나라가 망한다." 며 공사현장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하던 민주팔이 정치지도자라는 그 위인들이 언제 자신날의 과오를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있었습니까?

"조국근대화의 주역 박정희 대통령의 위업을 이어받을 대통령을 이번에는 반드시 민초들의 힘으로!!!"

우리 민초들은 12월 19일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경제건설과 부국강병의 뜻을 못다 이루시고 떠나신 박정희 대통령의 철통같은 안보관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가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지도자라는 분들이나 군의 행태를 볼 때 풍전등화(風前燈火)라는 말이 너무나 실감나는 현실에 빙점을 설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혀 억장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무너져가는 국가정체성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제는 '민초' 들이 일어서야 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많은 동지들이 나서서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 들의 모임" 을 결성, 애국운동에 앞장서고자 모임을 확산하려고 나섰습니다.
민초(民草)란 "백성을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잡초(雜草)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로 위기에 처한 국가를 피와 땀으로 지켜온 주체는 항상 우리 민초였습니다.
하오니 애국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가족과 이웃에 적극 전파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백돌을 함께 쌓는다면 더 없는 기쁨이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애국시민들의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의 모임"을 꾸리는 운영위원들

이울러 우리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강력한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농멸하려는 세력과 사회혼란책동이나 선동 목력을 일삼는 친북, 종북세력들에 대하여 강력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을 확립하여 법질서를 다져서 국법의 존엄성을 보이려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
2. 국가보안법을 두 배로 강화시키고 위법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가하여 국가안보를 반석에 올려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
3.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폐단하고 억울함이 없는 신선한 사회, 연령일치의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뇌물 수수자에게는 50배의 추징금을 물리고 대통령의 '사면복권' 을 영원히 없애겠다는 지도자
4.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여 여기서 절약되는 예산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전용하고, 면책특권의 악용을 배제하여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국가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
5. 아동 및 여성학대, 성폭력을 일삼는 반사회적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흉악범죄를 이 사회에서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
6. 국가안보와 조국근대화의 주역들인 국가유공자들 및 노인복지증진에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

의 결 번 호	2012대선36(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시 중구 정동 22번지 대표이사 송 영 승
심의대상기사	경향신문 2012년 11월 16일자 2면 「2012 정권교체와 국민후보단일화를 촉구하는 복음주의 기독인 300인 선언」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이나 예비후보자를 연상시키고 해당 정당이나 예비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다. 이 같은 광고는 해당 정당이나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3조(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2012 정권교체와 국민후보단일화를 촉구하는 복음주의 기독인 300인 선언

지난 5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시도한 역사의 역주행으로 많은 고통과 혼란을 겪었다. 다가오는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정치를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겸비한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날 올바른 가치의 선포를 포기하고 바알적 권력욕에 무릎을 꿇은 기독인들이 있었음을 부끄럽게 여기도 있다. 이를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역사적 부르심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선언하고자 한다.

1.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정부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일제와 군사독재의 청산, 분단시대의 극복, 민주주의 정착과 공동체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한일은 4대강 사업 강행과 공기업 사유화 추진, 언론 통제 등 환경파괴와 반민주적 사익추구의 권력 카르텔 강화였다. 이미 역사의 유물이 되었던 성장제일주의를 부활시키고 정당화함으로서 중산층의 몰락과 극심한 양극화, 그리고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했다.

2. 새 시대의 도래를 위해 정권교체는 불가피하다.

현 정부와 여당은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하에서 자행된 공동체의 분열과 파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당의 이름을 바꿔서 역사적 책임을 면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혹시라도 "묻지마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민족공동체의 암적 요소인 반공주의와 지역감정을 다시 동원하려 한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18대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를 위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국민적 열망이 뜨겁다.

이제 우리는 생명과 생태, 평화와 복지, 참여민주주의 정치개혁 등 새 시대적 가치로의 전면적 전환을 선택해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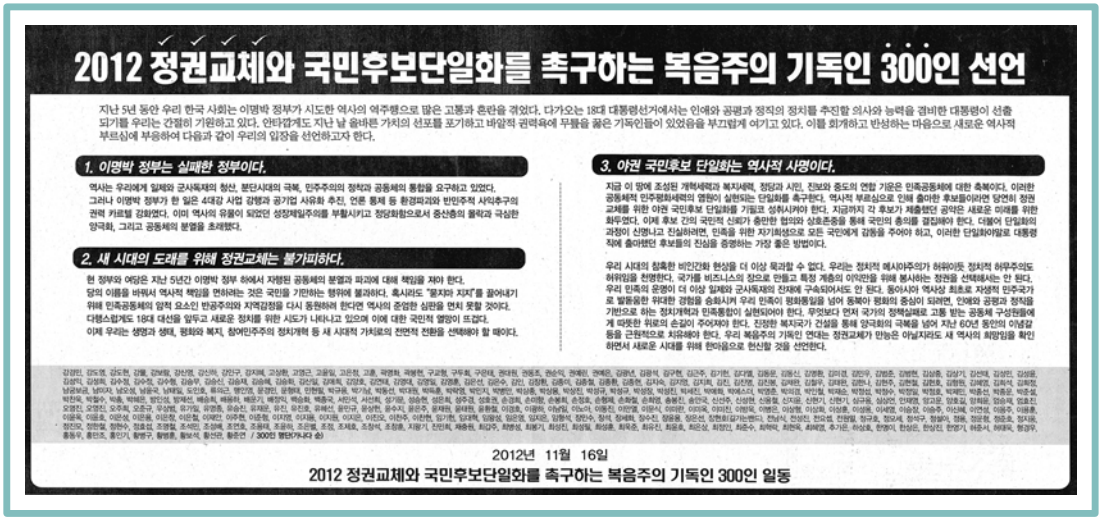
3. 야권 국민후보 단일화는 역사적 사명이다.

지금 이 땅에 조성된 개혁세력과 복지세력, 정당과 시민, 진보와 중도의 연합 기운은 민족공동체에 대한 축복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민주평화세력의 염원이 실현되는 단일화를 촉구한다. 역사적 부르심으로 인해 출마한 후보들이라면 당연히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국민후보 단일화를 기필코 성취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각 후보가 제출했던 공약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화두였다. 이제 후보 간의 국민적 신뢰가 충만한 협의와 상호존중을 통해 국민의 총의를 결집해야 한다. 더불어 단일화의 과정이 신명나고 진실하려면, 민족을 위한 자기희생으로 모든 국민에게 감동을 주어야 하고, 이러한 단일화야말로 대통령직에 출마했던 후보들의 진심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 시대의 참혹한 비인간화 현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주의가 허위이듯 정치적 허무주의도 허위임을 천명한다. 국가를 비즈니스의 장으로 만들고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는 정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더 이상 일제와 군사독재의 잔재에 구속되어서도 안 된다. 동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자생적 민주국가로 발돋움한 위대한 경험을 승화시켜 우리 민족이 평화통일을 넘어 동북아 평화의 중심이 되려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개혁과 민족통합이 실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국가의 정책실패로 고통 받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주어져야 한다. 진정한 복지국가 건설을 통해 양극화의 극복을 넘어 지난 60년 동안의 이념갈등을 근원적으로 치유해야 한다. 우리 복음주의 기독인 연대는 정권교체가 만능은 아닐지라도 새 역사의 희망임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선언한다.

2012년 11월 16일

2012 정권교체와 국민후보단일화를 촉구하는
복음주의 기독인 300인 일동



2012 정권교체와 국민후보단일화를 촉구하는 복음주의 기독인 300인 선언

지난 5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시도한 역사의 역주행으로 많은 고통과 혼란을 겪었다. 다가오는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정치를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겸비한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날 올바른 가치의 선포를 포기하고 바알적 권력욕에 무릎을 꿇은 기독인들이 있었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이를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역사적 부르심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선언하고자 한다.

1.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정부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일제와 군사독재의 청산, 분단시대의 극복, 민주주의의 정착과 공동체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은 4대강 사업 강행과 공기업 사유화 추진, 언론 통제 등 환경파괴와 반민주적 사익추구의 권력 카르텔 강화였다. 이미 역사의 유물이 되었던 성장제일주의를 부활시키고 청산화합으로서 중산층의 몰락과 극심한 양극화, 그리고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했다.

2. 새 시대의 도래를 위해 정권교체는 불가피하다.

현 정부와 여당은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자행된 공동체의 분열과 파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당의 이름을 바꿔서 역사적 책임을 면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혹시라도 "묻지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민족공동체의 압력 요소인 반공주의와 지역감정을 다시 동원하려 한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18대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를 위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겁다. 이제 우리는 생명과 생태, 평화와 복지, 참여민주주의 정치개혁 등 새 시대적 가치로의 전면적 전환을 선택해야 할 때이다.

3. 야권 국민후보 단일화는 역사적 사명이다.

지금 이 땅에 조성된 개혁세력과 복지세력, 정당과 시민, 진보와 중도의 연합 기운은 민족공동체에 대한 축복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민주평화세력의 염원이 실현되는 단일화를 촉구한다. 역사적 부르심으로 인해 출마한 후보들이라면 당연히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국민후보 단일화를 기필코 성취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각 후보가 제출했던 공약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화두였다. 이제 후보 간의 국민적 신뢰가 충만한 협의와 상호존중을 통해 국민의 총의를 결집해야 한다. 더불어 단일화의 과정이 신명나고 진실하려면, 민족을 위한 자기희생으로 모든 국민에게 감동을 주어야 하고, 이러한 단일화야말로 대통령직에 출마했던 후보들의 진심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 시대의 참혹한 비인간화 현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주의가 허위이듯 정치적 허무주의도 허위임을 천명한다. 국가를 비즈니스의 장으로 만들고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는 정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더 이상 일제와 군사독재의 잔재에 구속되어서도 안 된다. 동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자생적 민주국가로 발돋움한 위대한 경험을 승화시켜 우리 민족이 평화통일을 넘어 동북아 평화의 중심이 되려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개혁과 민족통합이 실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국가의 정책실패로 고통 받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주어져야 한다. 진정한 복지국가 건설을 통해 양극화의 극복을 넘어 지난 60년 동안의 이념갈등을 근원적으로 치유해야 한다. 우리 복음주의 기독인 연대는 정권교체가 만능은 아닐지라도 새 역사의 희망임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선언한다.

2012년 11월 16일

2012 정권교체와 국민후보단일화를 촉구하는 복음주의 기독인 300인 일동

의 결 번 호	2012대선38(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시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송 필 호
심의대상기사	중앙일보 2012년 11월 13일자 B1, B3면 「대선 공약 집중 해부 전문가 10인이 평가한 가계부채 대책 / 박 · 안 6.3점, 문 6.0점… 빛 안나는 빛 대책」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주요 예비후보자들의 정책 및 공약에 대해 비교 · 평가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후보자별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고 유권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2(정책 ·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 제11조(정책 ·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대선 공약 집중 해부】

전문가 10인이 평가한 가계부채 대책

박 · 안 6.3점(10점 만점), 문 6.0점…
빛 안나는 빛 대책

박 '행복기금' 찬반 엇갈려
문 '피에타 3법' 최저점수
안 '새출발펀드'도 논란 많아

"약자를 보듬자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국가 만능주의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주요 대선주자의 가계부채 공약이 낙제점을 겨우 벗어나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권과 학계 · 연구기관의 경제 전문가 10명이 후보들의 핵심공약에 대해 점수를 매긴 결과다. 공약 평가는 박근혜 · 문재인 · 안철수 후보가 최근 내놓은 대책 중 구체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대표 공약 3개씩을 대상으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 부작용 우려 등을 따져 각 정책을 0점(최약)~10점(최고)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박근혜 ·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평균 6.3점,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평균 6.0점으로 나타났다. '낙제점(6점)'을 겨우 넘어선 수준이다. 임기영 외국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공약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성격이 강해 후보 간 차이가 크지 않다"며 "표를 의식해 단기 대책에 치우치다 보니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세부 공약 가운데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받은 건 하우스푸어 대책이었다. "집중인과 은행 간의 '사적 채무재조정'을 통해 하우스푸어와 '깡통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 후보의 공약은 과반수 전문가로부터 7~9점을 받아 평균 6.5점을 기록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집

없는 서민도 많은데 하우스푸어 대책이 이렇게 시급한지는 의문"이라고 전제한 뒤 "금융권과 채무자가 책임을 분담하고 국가재정 투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해결을 도모한 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박 후보)는 국가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보다 낮은 6.4점을 받았다.

문 후보의 '대출 구조 장기화 유도'는 6.3점으로 평가됐다. 가계의 금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원리금 일시상환식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취지가 좋고 부작용도 작지만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이어서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했다. 이보다 0.1점 높은 점수를 받은 박 후보의 '국민행복기금' 18조원 조성 공약은 전문가 평가가 가장 엇갈렸다. 중산층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힐링정책'이라는 찬성론과 막대한 재원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거라는 반대론이 팽팽했다.

안 후보의 '진심 새출발 펀드' 조성 약속(6.2점)도 논란이 됐다. "1인당 최대 300만원씩 모두 2조원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효과를 본다면 괜찮은 정책"이라는 입장과 "그 돈으로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박 후보 · 6.1점)과 신용불량자 및 파산자를 위한 '힐링통장' 도입(문 후보 · 6.0점), 개인파산제도 개선(안 후보 · 6.1점) 공약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익명을 원한 전문가는 "박 후보의 학자금 대책은 청년층의 빚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가 좋지만 원금까지 깎아주는 것은 시장원리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셋 다 표 의식한 일시처방… 도덕적 해이 우려"

'힐링통장'과 '개인파산제도 개선'에 대해선 "패자 부활을 돕자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됐다.

'법정 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자'는 문 후보의 이른바 '피에타 3법'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9개의 공약 중 유일하게 6점이 안되는 5.8점에 그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법 사금융이 비제도권으로 확산되면서 오히려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도 "명분만 있고 실리는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쓴 소리'도 내놓았다. 홍정훈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 후보 공약은 모두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표를 의식한 일시적 처방"이라며 "단기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시장 질서가 왜곡돼 정책을 하기가 오히려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후보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 '정부 만능주의'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위험이 크고, 문 후보는 시장과 동떨어진 금리 규제로 오히려 서민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공약이 두루뭉실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했다고 평가됐다.

신성호 우리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결과인 가계부채를 공약으로 단기에 해결하는 데엔 무리가 있다"며 "정부와 시장의 역할, 이해당사자들의 책임 분담에 관한 원칙을 각 후보가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10인의 대선 후보 가계부채 정책 평가 (가나다순)

■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

"각 후보의 대책은 사후약방문, 누가 집권하든 매크로 정책을 잘 펼쳐야 가계부채 해결의 물꼬 터진다"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부채유예 · 금리인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필요하나 부채 자체를 탕감해주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 신성호 우리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박 후보의 경우 재정 부담 과도, 문 후보의 경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안 후보의 경우 도덕적 해이 만연 등이 문제점"

■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가계부채 문제는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 세 후보 모두 일시적인 해결책만 제시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문 후보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어. 그러나 채무자의 판단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워"

■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특혜를 베푸는 정책투성이다. 재원 조성 규모가 작은 안 후보의 정책이 그나마 시장을 적게 왜곡시킬 것 같다"

■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먼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에 대한 원칙을 수립한 뒤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돼야"

■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조사연구센터장

"세 후보 모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고 있음. 가계부채 문제는 공약이 아니라 중대 정책으로 인식해 정교하게 짜야"

■ 허석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포장을 보면 박 후보가 가장 세련됐다. 정책이 서로 많이 겹치고, 재원 마련 방법도 구체적이지 않아 높은 점수는 못 주겠다"

■ 홍정훈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박, 안 후보의 하우스푸어 정책은 재원 부담 크지 않아 환영. 문 후보의 대출구조 장기화는 주택금융 안정에 도움 될 것"



"셋 다 표 의식한 일시처방 … 도덕적 해이 우려"

» B1면 '대선 공약 집중 해부'에서 계속

'힐링통장'과 '개인파산제도 개선'에 대해선 "패자 부활을 돕자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됐다.

'법정 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자'는 문 후보의 이른바 '피에타 3법'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9개의 공약 중 유일하게 6점이 안 되는 5.8점에 그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법 사금융이 비제도권으로 확산되면서 오히려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도 "명분만 있고 실리는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쓴소리'도 내놓았다. 홍정훈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 후보 공약은 모두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표를 의식한 일시적 처방"이라며 "단기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시장 질서가 왜곡돼 정책을 하기가 오히려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후보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 '정부 만능주의'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위험이 크고, 문 후보는 시장과 동떨어진 금리 규제로 오히려 서민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공약이 두루뭉실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했다고 평가됐다.

신성호 우리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결과인 가계부채를 공약으로 단기에 해결하는 데엔 무리가 있다"며 "정부와 시장의 역할, 이해당사자들의 책임 분담에 관한 원칙을 각 후보가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10인의 대선 후보 가계부채 정책 평가 (가나다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
"각 후보의 대책은 사후약방문, 누가 집권하든 매크로 정책을 잘 펼쳐야 가계부채 해결의 물꼬 터진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부채유예·금리인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필요하나 부채 자체를 탕감해주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신성호 우리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박 후보의 경우 재정 부담 과도, 문 후보의 경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안 후보의 경우 도덕적 해이 만연 등이 문제점"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가계부채 문제는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 세 후보 모두 일시적인 해결책만 제시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문 후보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어. 그러나 채무자의 판단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워"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특혜를 베푸는 정책투성이다. 재원 조성 규모가 작은 안 후보의 정책이 그나마 시장을 적게 왜곡시킬 것 같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먼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에 대한 원칙을 수립한 뒤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돼야"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조사연구센터장
"세 후보 모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고 있음. 가계부채 문제는 공약이 아니라 중대 정책으로 인식해 정교하게 짜야"

■하석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포장을 보면 박 후보가 가장 세련됐다. 정책이 서로 많이 겹치고, 재원 마련 방법도 구체적이지 않아 높은 점수는 못 주겠다"

■홍정훈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박, 안 후보의 하우스푸어 정책은 재원 부담 크지 않아 환영. 문 후보의 대출구조 장기화는 주택금융 안정에 도움 될 것"

의 결 번 호	2012대선39(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재 호
심의대상기사	동아일보 2012년 11월 15일자 A1면 「빅3 일자리공약 평균 5.8점」, A5면 「朴 해결의지 부족… 文 뜬구름 잡기… 安 좌우정책 혼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주요 예비후보자들의 정책 및 공약에 대해 비교·평가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후보자별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고 유권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 제11조(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빅3 일자리공약 평균 5.8점(10점 만점)

고용–노동전문가 10명 평가…
청년실업 해법 5.5점 최저

10점 만점에 5.8점.

일자리 전문가들이 세 명의 주요 대선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을 평가해 내린 종합점수다. 전체적인 점수가 낮을 뿐 아니라 세 후보의 공약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능력'과 '실현 가능성' 면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본보 14일자 A1·4·5면 참조, A5면에 관련 기사

고용·노동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일자리 공약 평가단은 14일 동아일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서 제출받은 일자리 관련 세부 공약들을 △적합성 △실현 가능성 △일자리의 질 △일자리의 양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가능성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분석하고 점수를 매겼다.

평가 결과 후보별 종합점수는 박 후보가 6.0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 후보는 5.8점, 안 후보는 5.6점이었다. 모두 낙제점(5점)을 조금 넘긴 수준으로 후보 간 편차도 0.4점에 그쳤다.

공약의 적합성과 실현 가능성 면에서는 박 후보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박 후보는 '공약이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과 정책 우선순위로 봤을 때 적합한가'라고 묻는 질문에서 6.7점을 받아 문 후보(6.5점)와 안 후보(5.9점)를 앞섰다. '재정 상황, 기업 현실, 고용 환경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박 후보가 6.3점으로 세 후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각 후보의 공약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묻는 질문에는 세 후보가 모두 5.5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공약으로는 문 후보(6.1점)가 가장 앞섰고, '일자리의 양'을 높이는 공약으로는 박 후보와 문 후보가 5.9점으로 안 후보(5.5점)보다 높았다.

5개 항목별 평균점수로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이 모두 5.5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화 02-2020-0114 구독·배달안내 1588-2020

2012년 11월 15일 목요일 단기4345년(음력 10월 2일 庚辰)

빅3 일자리공약 평균 5.8점

〈10점 만점〉

고용-노동전문가 10명 평가
청년실업 해법 5.5점 최저

청년드림

10점 만점에 5.8점. 일자리 전문가들이 세 명의 주요 대선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을 평가해 내린 종합점수다. 전체적인 점수가 낮을 뿐 아니라 세 후보의 공약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능력'과 '실현 가능성' 면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본보 14일자 A1·4·5면 참조, A5면에 관련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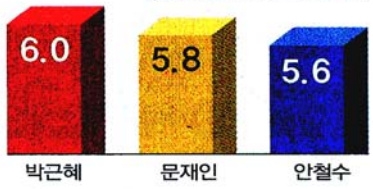
고용·노동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일자리공약 평가단은 14일 동아일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서 제출받은 일자리 관련 세부 공약들을 △적합성 △실현 가능성 △일자리의 질 △일자리의 양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가능성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분석하고 점수를 매겼다.

평가 결과 후보별 종합점수는 박 후보가 6.0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 후보는 5.8점, 안 후보는 5.6점이었다. 모두 낙제점(5점)을 조금 넘긴 수준으로 후보 간 편차도 0.4점에 그쳤다.

공약의 적합성과 실현 가능성 면에서는 박 후보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대선후보 3인의 일자리 공약 성적표

(전문가 10명 평가·10점 만점)



박 후보는 '공약이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과 정책 우선순위로 봤을 때 적합한가'라고 묻는 질문에서 6.7점을 받아 문 후보(6.5점)와 안 후보(5.9점)를 앞섰다. '재정 상황, 기업 현실, 고용 환경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박 후보가 6.3점으로 세 후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각 후보의 공약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묻는 질문에는 세 후보가 모두 5.5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공약으로는 문 후보(6.1점)가 가장 앞섰고, '일자리의 양'을 높이는 공약으로는 박 후보와 문 후보가 5.9점으로 안 후보(5.5점)보다 높았다.

5개 항목별 평균점수로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이 모두 5.5점으로 가장 낮았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청년드림】

대선후보 일자리 공약 점검,
〈下〉고용노동 전문가 10인의 평가

朴 해결의지 부족… 文 뜬구름 잡기… 安 좌우정책 혼란

朴, 적합성-실현성에서 우위

기존 성장 논리에 의존
고용-복지 연계 노력 미흡

文, 적극적 의욕은 앞서

규제 통한 일자리 창출 한계
청년고용할당, 무리한 정책

安, 교과서 같은 대책

일자리 질 높이는 데 치중
이것저것 짜맞춰 급조 느낌

주요 대선후보 3인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고용·노동 전문가들은 낙제점이나 다름없는 성적을 매겼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뜬구름' 잡는 주장이 많을 뿐 아니라 '어디선가 본 듯한' 공약들이 대부분으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또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들은 모두 전체적 완성도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함이 있어 누가 집권하든 차기 정부가 일자리 문제, 특히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현실적이지만 의지 부족한 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현실성은 높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박 후보의 공약을 요약하면 기존 성장논리에 의존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미온적인 대책이 대부분"이라며 "지금은 일자리 문제에서 좀 더 분명한 목표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의 '창조경제' 관련 일자리 구상이 긴급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박 후보가 산업정책을 통한 고용창출을 강조해 일자리 문제의 '모범답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구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서는 집중력이 다소 부족하다"며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정책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전반적인 평가는 박 후보의 공약이 다른 두 후보에 비해 높았다. 조동훈 한림대 교수(경제학)는 "박 후보의 창조적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강조해 정작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비해 방향을 잘 잡았다는 평가다.

○ 의욕적이지만 뜬구름 잡는 文

다수의 전문가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지지층이 많은 노동계의 주장을 많이 반영하다보니 '규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지나치게 의존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소기업 일자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 4000개를 중견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공약이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중견기업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의 벤처 열풍처럼 정부 지원이 끊긴 뒤에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후보의 청년고용할당제,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공무원 증원 등은 '무리한 정책'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는 인기는 있겠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결국 숫자만 끼워 맞추려고 할 것"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조동훈 교수도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인위적으로 해소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 후보의 공약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의 질과 양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당장은 근로자들의 소득과 직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정부가 규제하면 기업들이 당장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 일자리 정책도 좋은 말만 많은 安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대선 주자 3인 중 총점이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구체성이 결여됐다" "교과서적인 정책 나열에 불과하다"는 등의 평가를 내렸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안 후보는 공약이 급조된 느낌이 많이 든다"며 "여기서 좋은 것, 저기서 좋은 것 다 가져다가 공약이라고 내세우고 있어 철학과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준모 교수도 "기술혁신, 벤처정신을 강조한 것은 우파적이지만 좌파적인 규제정책도 다수 담겨 있다"며 "고용정책이 이념적으로 섞여 있어 일자리 정책의 정체성이 혼돈스럽다"고 평가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통상학)는 "대통령 직속 국민합의기구와 노사정 대화기구를 활성화해 고용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허황되고 자기도취적"이라며 "이미 노사정위원회가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 · 사회정책 연구부장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너무 치중해 과연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세 후보 모두 실패한 공약의 답습"

세 후보가 공히 이전 선거 때마다 나왔던 공약을 되풀이하는 것 같다는 지적은 여전했다. 실패로 돌아갔던 과거의 공약들을 답습하고 있어 이번 일자리 공약들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 후보 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공약들에 참신성이 없다"며 "이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공약들뿐"이라고 지적했다.

후보들이 좀 더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영봉 교수는 "세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 증대 방안, 성장동력 발굴과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이 전무하다"며 "이런 방안이 빠진 공약을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朴 해결의지 부족… 文 뜬구름 잡기… 安 좌우정책 혼란

청년드림 〈下〉 고용노동 전문가 10인의 평가

주요 대선후보 3인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고용·노동 전문가들은 낙제점이나 다름없는 성적을 매겼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뜬구름' 잡는 주장이 많을 뿐 아니라 '어디선가 본 듯한' 공약들이 대부분으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또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들은 모두 전체적 완성도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함이 있어 누가 집권하든 차기 정부가 일자리 문제, 특히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현실적이지만 의지 부족한 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현실성은 높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박 후보의 공약을 요약하면 기존 성장논리에 의존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미온적인 대책이 대부분"이라며 "지금은 일자리 문제에서 좀 더 본질한 목표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의 '창조경제' 관련 일자리 구상이 긴급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박 후보가 산업정책을 통한 고용창출을 강조해 일자리 문제의 '모범답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구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서는 집중력이 다소 부족하다"며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정책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전반적인 평가는 박 후보의 공약이 다른 두 후보에 비해 높았다. 조동훈 한림대 교수(경제학)는 "박 후보의 창조적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강조해 정작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비해 방향을 잘 잡았다는 평가다.

● 의욕적이지만 뜬구름 잡는 文

다수의 전문가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지지층이 많은 노동계의 주장을 많이 반영하다보니 '규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지나치게 의존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소기업 일자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 4000개를 중견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공약이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중견기업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의 벤처 열풍처럼 정부 지원이 끊긴 뒤에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후보의 청년고용할당제,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공무원 증원 등은 "뚜렷한 정책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는 인기는 있겠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결국 숫자만 꾀워 맞추려고 할 것"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조동훈 교수도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인위적으로 해소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 후보의 공약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의 질과 양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당장은 근로자들의 소득과 직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정부가 규제하면 기업들이 당장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 일자리 정책도 좋은 말만 많은 安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대선주자 3인 중 총점이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구체성이 결여됐다" "교과서적인 정책 나열에 불과하다"는 등의 평가를 내렸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안 후보는 공약이 급조된 느낌이 많이 든다"며 "여기서 좋은 것, 저기서 좋은 것 다 가져다가 공약이라고 내세우고 있어 철학과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준모 교수도 "기술혁신, 벤처정신을 강조한 것은 우파적이지만 좌파적인 규제정책도 다수 담겨 있다"며 "고용정책이 이념적으로 섞여 있어 일자리 정책의 정체성이 혼돈스럽다"고 평가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통상학)는 "대통령 직속 국민합의기구와 노사정 대화기구를 활성화해 고용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허황되고 자기도 취적"이라며 "이미 노사정위원회가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너무 치중해 과연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세 후보 모두 실책한 공약의 답습"

세 후보가 공히 이전 선거 때마다 나왔던 공약을 되풀이하는 것 같다는 지적은 여전했다. 실제로 돌아갔던 과거의 공약들을 답습하고 있어 이번 일자리 공약들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 후보 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공약들에 참신성이 없다"며 "이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공약들뿐"이라고 지적했다.

후보들이 좀 더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영봉 교수는 "세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 증대 방안, 성장동력 발굴과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이 전무하다"며 "이런 방안이 빠진 공약을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철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철중 기자 tnt@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朴, 적합성-실현성에선 우위

기존 성장 논리에 의존
고용-복지 연계 노력 미흡

文, 적극적 의욕은 앞서

규제 통한 일자리 창출 한계
청년고용할당, 무리한 정책

安, 교과서 같은 대책

일자리 질 높이는 데 치중
이것저것 짜맞춰 급조 느낌

의 결 번 호	2012대선41(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한겨레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양 상 우
심의대상기사	한겨레 2012년 11월 20일자 10면 「해외동포들이 6 · 15 10 · 4 통일대통령을 바라며, 2012 대선후보들과 국민들께 드리는 공동호소문」 제하의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 및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다. 이 같은 광고는 여타 정당 및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및 제13조(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해외동포들이 6 · 15 10 · 4 통일대통령을 바라며, 2012 대선후보들과 국민들께 드리는 공동 호소문

역사적인 6 · 15공동선언과 10 · 4선언이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으로 향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우리 미국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해외동포들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이 곧 실현되기를 갈망하면서 역사적인 2012년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신 후보님들께 동포애의 정을 담아 경의를 표합니다.

분단 67년을 지난 2012년 우리 나라의 대선은 민족사적인 의의를 지닌 대통령선거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업을 이룩할 사명을 안고 2012 대선에 나선 후보님들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비록 이역만리에 떨어져 있지만 조국과 민족의 장래가 곧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내외 동포들은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하여 6 · 15 10 · 4 시대정신에 충실한 6 · 15 10 · 4 통일대통령을 세워 온 겨레가 행복한 희망의 나라를 실현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업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뼈 속 깊이 경험을 한 대로 6 · 15 10 · 4선언의 거역은 전쟁의 위험을 극대화하면서 민족을 공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이며, 6 · 15 10 · 4선언의 완수는 우리 민족의 행복과 평화번영으로의 길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역사는 6 · 15 10 · 선언을 완수할 6 · 15 10 · 4 통일대통령을 부르고 있습니다. 2012 대선은 우리 민족과 조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입니다. 6 · 15 10 · 4 통일대통령을 선출하여 우리들은 지난 한 세기 우리 민족을 참혹한 고통 속에 빠뜨린 외세의 지배와 예속, 분단체제를 극복 청산함으로써 온 겨레가 행복을 누릴 6 · 15 10 · 4 자주통일 평화번영 체제를 실현하여야 할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은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6일 발표한 7개항의 정치혁신과 정권교체를 위한 후보단일화 합의 선언을 읽고 감격하고 열렬히 지지 환영합니다. 이를 위한 국민연대는 6 · 15 10 · 4선언의 완수를 중심으로 모든 정당사회단체가 광범하게 참여하는 6 · 15 10 · 4 국민연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문재인-안철수 후보께 두 후보가 내놓을 '새정치공동선언'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핵심으로 포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을 외면한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남북해외 8천만 거래에게 희망을 주는 새정치를 위해, 2012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공동으로 6·15 10·4선언을 완수할 6·15 10·4 거국내각을 공약하고 누가 이러한 역사적인 민족적 과업을 가장 잘 이행할 6·15 10·4 통일대통령의 적임자인가를 유권자들이 선택하도록 합시다!"

둘째,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6·15 10·4 헌법으로의 개헌을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것을 제안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모든 대선후보님들이 이러한 6·15 10·4 통일대통령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6·15 10·4 거국내각과 6·15 10·4 헌법을 공동으로 공약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2012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우리 민족의 염원을 실현하는 6·15 10·4 통일대통령이 탄생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생 문제의 해결은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선언들의 완수가 곧 밥이며, 민생을 살리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일자리 문제와 보편적 복지를 비롯한 민생경제의 해법은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개발해 민족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6·15 10·4 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에 있습니다. 이런 선언들을 외면하면서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빈말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밝습니다.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평화번영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2 대선에서 6·15 10·4 통일대통령이 탄생하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통일대통령의 취임식은 북측 대표단과 해외동포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해외 온 겨레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내년 6·15 공동선언 기념일에는 남북 정상이 함께 만나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창출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완수의 믿음을 갖고 조국의 휘황찬란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6·15 10·4 통일대통령을 바라는 해외동포 유권자운동을 힘차게 벌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한 조국에 계신 동포들이 6·15 10·4 통일대통령을 결정하는 유권자운동을 이끌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해내외 동포들이 서로 지혜와 힘을 모으면 준엄한 역사적 요청인 6·15 10·4 통일대통령을 만들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2012 대선에서 6·15 10·4 대통령을 선출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6·15 10·4 통일대통령의 사명을 안고 있는 대선후보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15일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룰 6·15 10·4 통일대통령을 갈망하는 재미동포와 캐나다 동포

해외동포들이 6·15 10·4 통일대통령을 바라며, 2012 대선후보들과 국민들께 드리는 공동 호소문



의 결 번 호	2012대선44(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경제풍월 서울 중구 필동 1가 43-1 동화빌딩 508호 대표이사 배 병 휴
심의대상기사	경제풍월 2012년 11월호(통권 159호) 21~23면 「또 햇볕정책 망령」, 52~55면 「국민이 공과 평가한다」, 56~58면 「어찌 벌주자고 하는가」, 100~101면 「죽기 살기 야권 단일화」, 102~103면 「노 후계자 어쩔 셈인가」, 109~111면 「세 번 無血革命 완성」, 112~115면 「안철수식 거짓말들」, 12월호(통권 160호) 96~97면 「여성대통령 혁신시대」 제하의 기사 등 총 8건의 선거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주요 정당 및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칼럼 및 특집기획기사를 집중 보도했다. 먼저 특정 예비후보자 친인척의 공적을 다루면서 해당 친인척에 상당히 우호적인 칼럼과 기사를 게재하고 해당 예비후보자 대통령 당선의 당위를 주장하는 칼럼을 보도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얻게 한 측면이 있다. 반면 여타 정당의 정책과 선거 행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예비후보자의 면면을 충분한 반론을 고려치 않고 비판한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거기사를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6조(정치적 중립), 제8조(인용보도 및 인터뷰 기사), 제9조(특집기획기사)를 위반한 위 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동길 박사】 '이게 뭡니까'

'아웅산'을 어찌 잊어

또 햇볕정책 망령

후보단일화는 무슨 망발인가

역사를 외면하는 지도자가 있다. 그런 지도자를 따라 가는 국민이 있다. 그것은 멸망하는 길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죄 없는 유태인들이 히틀러의 부하들에 의해 학살당한 사실을 망각했다면 이스라엘은 산산조각이 난 지 오래일 것이다. 오늘 그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은 선전포고도 없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이 터졌다. 그 사실 때문에 미국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미국을 지키기 위해 분발하였다. 그래서 생긴 구호가 "진주만을 기억하라(Remember Pearl Harbor)"였다. 미국 국민은 그 국호를 외치며 선전하여 마침내 4년 뒤의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을 받았다. 남쪽에 세워진 대한민국은 북에 자리 잡은 인민공화국에 의해 끊임없이 시달리다 마침내 인민군이 남침하여 저 참혹한 6.25를 겪었고, 29년 전 한글날에는 미얀마 아웅산에서 '북괴특수기관'이 설치한 시한폭탄이 터져 서석

준 부총리를 비롯해 16명이 졸지에 목숨을 잃었다. 아웅산을 잊었거나, 아웅산을 외면하거나, 아웅산은 '북괴'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북의 테러집단의 앞잡이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도 거북한데 그런 자들 중에서 만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 망한 몇 나라 중의 한 나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모름지기 선거철을 맞은 이 나라의 유권자들은 "아웅산을 잊지 말라"를 마음속에 새겨두고, 투표소를 찾아가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또 다시 햇볕정책 망령인가

김대중이 창안하여 그로 하여금 노벨평화상까지 타서 자시게 했고, 그의 정신적 아들인 동시에 정치적 후계자인 노무현이 물려받아 4년 동안 울궈먹은 그 햇볕정책을 다시 들고 나와, 10.4 공동성명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적 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허위선전을 일삼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었다는 것은 진실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마치 햇볕정책이 남북 간의 전쟁을 억제한 듯 '자화자찬' – 과대평가로 순진한 국민을 기만한 사실은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데, 2012년의 가을을 맞아 그 망령이 다시 춤을 추며 백주에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하늘 아래 나타났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죽기 전에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햇볕정책'의 그 망령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만이 아니라 죽은 뒤에도 나는 반드시 칼을 빼들고 이 귀신과는 또 한 번 죽을 각오를 하고 맞붙어 싸울 것이다. 이 고약한 망령이 서울의 하늘 밑을 배회하는 동안은 한반도의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 왜 우리 역사를 실은 기관차는 앞으로 달릴 생각은 않고 뒷걸음치려고만 하는 겁니까. 그 '망령'을 퇴치하지 않고는 국가적 번영이나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 햇볕정책의 망령은 결국 분쟁이나 전쟁으로 남북을 몰고 갈 것이 뻔하지 않는가.

남북통일이 안 되는 까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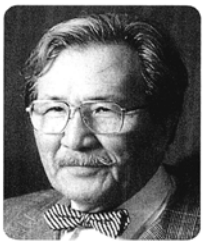
해방이 되고 38선이 생겨 남북이 분단되었다. 그 뒤에 곧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열려 평양과 서울 사이를 양국의 대표들이 오고 갔던 사실을 지금도 기억한다. 그들이 아무리 만나고 또 만나도 38선을 철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1950년에는 적화통일 하겠다는 북의 인민군이 6월 25일 새벽에 북에서 치고 내려왔다. 그래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졌으나 통일은 되지 않았고 38선 근처에서 휴전선이 생기고 다시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북은 그 동안에도 잔인무도한 짓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남쪽 하늘 밑에 사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7.4 공동성명, 6.15 공동성명, 그리고 10.4 공동성명 등이 '자주적 평화통일'의 명목 하에 1972년부터 줄곧 이어졌고 번번이 '자주적 평화통일'이란 슬로건이 공동성명서에 기재되었지만, 북이 약속을 지킬 의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였을 뿐이다. 어선 납북, KAL기 납치 그리고 폭파,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금강산 관광갔던 가정주부 총살, 잦은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끈질긴 간첩남파와 각종 '간접침략' – 모두 공동성명과는 거리가 먼 짓만 골라서 하는 북의 독재자들!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자들은 무슨 짓이라도 하는데, "우리들끼리 평화통일 합시다"는 헛소리 아니면 공염불이지요. 따지고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다.(중략)

김동길 박사
'이게 뭡니까'

'아웅산'을 어찌 잊어

또 햇볕정책 망령

후보단일화는 무슨 망발인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태평양위원회 이사장

아웅산을 잊을 수 있는가

역사를 외면하는 지도자가 있다. 그런 지도자를 따라 가는 국민이 있다. 그것은 멸망하는 길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죄 없는 유태인들이 히틀러의 부하들에 의해 학살당한 사실을 망각했다면 이스라엘은 산산조각이 난 지 오래일 것이다. 오늘 그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은 선전포고도 없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이 터졌다. 그 사실 때문에 미국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미국을 지키기 위해 분발하였다. 그래서 생긴 구호가 "진주만을 기억하라(Remember Pearl Harbor)"였다. 미국 국민은 그 국호를 외치며 선전하여 마침내 4년 뒤의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을 받았다.남쪽에 세워진 대한민국은 북에 자리 잡은 인민공화국에 의해 끊임없이 시달리다 마침내 인민군이 남침하여 저 참혹한 6.25를 겪었고, 29년 전 한글날에는 미얀마 아웅산에서 '북괴특수기관'이 설치한 시한폭탄이 터져 서석준 부총리를 비롯해 16명이 졸지에 목숨을 잃었다.아웅산을 잊었거나, 아웅산을 외면하거나, 아웅산은 '북괴'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북의 테러집단의 앞잡이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도 거북한데 그런 자들 중에서 만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 망한 몇 나라 중의 한 나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모름지기 선거철을 맞은 이 나라의 유권자들은 "아웅산을 잊지 말라"를 마음속에 새겨두고, 투표소를 찾아가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또 다시 햇볕정책 망령인가



▲1983년10월9일 아웅산 테러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각료들의 마지막 모습

김대중이 창안하여 그로 하여금 노벨평화상까지 타서 자시게 했고, 그의 정신적 아들인 동시에 정치적 후계자인 노무현이 물려받아 4년 동안 울궈먹은 그 햇볕정책을 다시 들고 나와, 10.4 공동성명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적 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허위선전을 일삼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었다는 것은 진실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김대중도 노무현도 마치 햇볕정책이 남북 간의 전쟁을 억제한 듯 '자화자찬' – 과대평가로 순진한 국민을 기만한 사실은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데, 2012년의 가을을 맞아 그 망령이 다시 춤을 추며 백주에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하늘 아래 나타났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죽기 전에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햇볕정책'의 그 망령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만이 아니라 죽은 뒤에도 나는 반드시 칼을 빼들고 이 귀신과는 또 한 번 죽을 각오를 하고 맞붙어 싸울 것이다. 이 고약한 망령이 서울의 하늘 밑을 배회하는 동안은 한반도의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왜 우리 역사를 실은 기관차는 앞으로 달릴 생각은 않고 뒷걸음치려고만 하는 겁니까. 그 '망령'을 퇴치하지 않고는 국가적 번영이나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 햇볕정책의 망령은 결국 분쟁이나 전쟁으로 남북을 몰고 갈 것이 뻔하지 않는가.

남북통일이 안 되는 까닭

해방이 되고 38선이 생겨 남북이 분단되었다. 그 뒤에 곧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열려 평양과 서울 사이를 양국의 대표들이 오고 갔던 사실을 지금도 기억한다. 그들이 아무리 만나고 또 만나도 38선을 철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1950년에는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북의 인민군이 6월 25일 새벽에 북에서 치고 내려왔다. 그래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졌으나 통일은 되지 않았고 38선 근처에서 휴전선이 생기고 다시 60년의 세월이 흘렀다.북은 그 동안에도 잔인무도한 짓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남쪽 하늘 밑에 사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7.4 공동성명, 6.15 공동

성명, 그리고 10.4 공동성명 등이 '자주적 평화통일'의 명목 하에 1972년부터 줄곧 이어졌고 번번이 '자주적 평화통일'이란 슬로건이 공동성명서에 기재되었지만, 북이 약속을 지킬 의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였을 뿐이다.어선 납북, KAL기 납치 그리고 폭파,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금강산 관광 갔던 가정주부 총살, 잦은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끈질긴 간첩남파와 각종 '간접침략' – 모두 공동성명과는 거리가 먼 짓만 골라서 하는 북의 독재자들!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자들은 무슨 짓이라도 하는데, "우리들끼리 평화통일 합시다"는 헛소리 아니면 공염불이지요. 따지고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북이 원하는 것은 적화통일인데 그것은 역사를 역행하는 일이라 허락할 수 없고, 민주적 통일을 하면 그것은 '김 씨 왕조'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니 독재체제가 용납할 수 없어서 통일이 안 되고 우리는 허송세월이다. 미국 대통령 데오도 루즈벨트의 말이 틀린 것 아니다. "말은 부드럽게 하여라. 그러나 큰 몽둥이 하나는 가지고 다녀라" (Speak softly, but carry a big stick)

단일화를 위한 혈투라면

대통령 선거일이 앞으로 두 달 밖에 안 남았다는데 이게 어찌된 망발인가. 문재인과 안철수는 서로 "단일화를 한다면 내가 후보가 돼야지 왜 네가 돼냐"하며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데 국민의 눈에는 정말 '꼴불견'이다. 왜 야권의 후보는 단일화가 돼야 하는 것인지 그 동기부터 분명하게 합시다.오늘의 새누리당이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여당이던 한나라당은 죽었지 않는가. 한나라당은 여당이었는데 이미 죽은 지 한참 되고, 지난 4.11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은 아무런 '기득권'도 누리지 못한 채 선거에 임했는데 그래도 여당이란 말인가.대통령이나 그 주변의 측근들의 입김이 작용하여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고 박근혜라는 신예 정치인이 홀로 지휘봉을 든 사람이 당내의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종래에 김대중 당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아무런 가책 없이 새누리당에 입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따라서 박근혜는 누구라도 뜻만 같으면 "누구나 다 오라"고 손짓할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5년 동안 저지른 크고 작은 잘못을 몽땅 새누리당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에는 여권은 없고 야권에서 세 사람이 출마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100미터 경주에 나선 세 선수가 모두 경기의 룰을 철저히 지키며 완주하여 1등한 사람이 월계관을 써야 마땅하다. 후보 단일화란 '상금'을 나누어먹기 위한 반칙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어떤 커피 회사의 광고대로, "인생은 짧은 것이니, 정신 차리세요" (Life is short. Stay awake for it).

오는 대선에 꼭 필요한 말 아닌가.

경제풍월

【국 · 가 · 비 · 전】

국민이 체험한 역사
국민이 공과평가 한다
5.16과 유신, 박정희역사 책임한계
역대정권 빛과 그림자도 역사 계승

대선정국의 경쟁구도가 언제 어떤 변덕을 부릴런지 알 수 없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경쟁판세를 저울질한 후 문재인,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마도 어느 쪽으로 단일화해야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느냐는 계산을 두고 물밑경쟁이 한참 지속될 것이다.

국민이 알고 있는 역대정권의 공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친노세력을 기반으로 제1야당을 사실상 접수한 확고한 지위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박원순 시장을 무소속으로 당선시킨 '한방의 돌품'을 믿을 것이다. 양 후보는 각각의 강점을 배경으로 단일화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며 박근혜 후보의 5.16 역사관을 이슈로 판세를 끌어 올리는데 주력할 것이다.

양 후보는 '민주 대 반민주'는 한물갔지만 박정희시대의 5.16과 유신은 반박(反朴)의 영원한 소재가 아니냐고 판단하는 데는 입장이 같을 것이다. 박 후보가 아버지시대를 국민의 판단,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했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근현대사를 직접 체험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너무 지루하고 신물이 날 지경이다. 국민 각자도 5.16과 유신을 체험한 경우 나름대로 판단과 인식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박정희시대 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의 빛과 그림자가 있었고 정권마다 시대상황과 역사적 의미가 있었기에 공과(功過)가 섞여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기존 정치권 못지 않게 국민들도 체험한 역사에 대한 공과를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우리가 겪고 눈으로 본 5.16 혁명

대선후보들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발길에서 부터 역사와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행보를 보여줬다. 이는 아직도 감정적, 선동적 정치문화로 갈등과 대결을 통해 표를 얻겠다는 전략일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묘소를 참배하고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묘소도 참배했으니 국민통합을 위한 진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묘소만 참배하고 이승만, 박정희 묘소는 참배하지 않고 역사인식의 차별화를 나타냈다. 그뒤 안철수 후보는 전직 대통령 묘소를 고루 참배하고 공(功)은 계승하고 과(過)는 교훈으로 삼자고 말했다.

우리가 체험한 격동과 굴절의 역사도 이승만 건국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대통령, 김대중 민주화 대통령으로 큰 구도의 역사평가가 자리잡아 가는 단계라고 믿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후보를 겨냥하여 5.16과 유신에 대한 평가를 대역죄인양 몰아 부치니 아버지와 딸을 연좌시키자는 셈인가.

20대 대학생 시절에 겪은 5.16은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로 암담하던 시기의 역사 물줄기를 바꾼 획기적인 전환이었다. 당시 윤보선 대통령 마저 "올 것이 왔구나"라고 촌평했다. 당시 배고픈 국민의 절망은 덮어둔 채 무능한 정치권은 신파와 구파로 갈라져 싸움질 하느라고 나라가 망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지 않았는가.

5.16 정부는 강력한 규율 아래 전광석화식 경제개발로 배고픈 국민에게 밥 먹여주는 혁명을 이룩한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지켜봤다.

6.29 민주화후 역대 대통령들

오늘의 민주화는 6.29 선언후 노태우 대통령으로 부터 시작되어 민주화 투쟁세력이 골고루 집권하고 누려오지 않았는가. 마치 민주화 운동을 권력투기처럼 인식하여 가신(家臣)그룹과 운동권 출신들이 득세했던 시절을 되돌아 보라.

DJ와 결별했던 YS는 3당 합당으로 팔자를 고쳐 집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각제 합의각서를 파기하고 집권한 후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역사바로세우기'로 전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구속한 5.18 소급법을 제정, 역사를 단절시키려 했다.

DJ는 유신본당으로 자처한 김종필과 DJP 연합하고 박정희 산업화와 화해하여 집권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으로 '제2건국 운동'을 벌여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했었다. 또 DJ의 정치적 유산을 바탕으로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이름으로 '과거사 뒤집기'에 열중했으니 이를 두고 민주화 대통령들의 '역사병'이라고 부른다.

노무현은 재임중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막말도 하고 탄핵도 받고 임기를 채웠지만 퇴임후 부인의 비자금 관련 수사 도중에 투신자살 했으니 대통령의 역사병이 서글프지 않는가.

5공의 악업(惡業)을 덮어쓴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수의를 입고 수갑 찬 모습을 국내외에 보여주었다. 그러나 거액의 비자금만 아니었다면 10.26 국변 후 국가위기관리와 물가안정 등 혼란기의 리더십으로 평가됐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된다. 또 노태우 대통령도 비자금이 아니었다면 직선제에 의한 민주화 첫 대통령으로 평가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전임자이자 친구인 전두환을 백담사로 유배 보내고 '물태우'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민주화시대를 연 업적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평범한 국민시각으로 봐도 역대 대통령시대는 빛과 그림자와 공과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근현대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딸이 책임질 수 없는 '정치벌'

민주화시대 들어 정치적 권리를 한껏 누린 민주화 투쟁세력이 누린 혜택도 박정희 시대 산업화의 바탕에서 나왔다. 그들이 5.16과 유신의 죄를 딸에게 묻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책임질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덮어 씌우려는 '정치벌'의 성격이 아닌가.

박 후보 아버지의 역사는 '구국의 결단'이었지만 고통과 희생의 피해자가 있었으니 딸이 사과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이상 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격동과 전환기 시대 역사 속의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는 명백하게 기억된다. 민주화의 상징인 YS와 DJ시대의 어둠과 얼룩도 오늘의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수많은 가신그룹과 아들, 친인척 등의 권력남용, 부정부패로 재임중 국민에게 사과했고 눈물로 퇴임하지 않았는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친노 측근, 형님, 딸, 후원자 등의 온갖 비리가 얼마이며 비자금 수사도중에 왜 투신했는지 뭐라고 해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 출신으로 폐족(廢族)이라고 선언한 친노세력의 부활로 후보가 되지 않았는가.

현 이명박 대통령 마저 형님과 측근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퇴임에 대비한 사저용 땅 매입 관련 특검수사를 받게 됐다. 아마도 대통령이란 권력이 측근과 친인척을 부패시킬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후략)

국민이 체험한 역사

국민이 공과평가 한다

5.16과 유신, 박정희역사 책임한계
역대정권 빛과 그림자도 역사 계승

대선정국의 경쟁구도가 언제 어떤 변덕을 부릴런지 알 수 없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경쟁판세를 저울질한 후 문재인,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마도 어느 쪽으로 단일화해야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느냐는 계산을 두고 물밑경쟁이 한참 지속될 것이다.



▲5.16 당일 시청앞 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국민이 알고있는 역대정권의 공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친노세력을 기반으로 제1야당을 사실상 접수한 확고한 지위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박원순 시장을 무소속으로 당선시킨 '한방의 돌풍'을 믿을 것이다. 양 후보는 각각의 강점을 배경으로 단일화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며 박근혜 후보의 5.16 역사관을 이슈로 판세를 끌어 올리는데 주력할 것이다.

양 후보는 '민주 대 반민주'는 한물갔지만 박정희시대의 5.16과 유신은 반박(反朴)의 영원한 소재가 아니냐고 판단하는데는 입장이 같을 것이다. 박 후보가 아버지시대를 국민의 판단,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했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근현대사를 직접 체험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너무 지루하고 신물이

날 지경이다. 국민 각자도 5.16과 유신을 체험한 경우 나름대로 판단과 인식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박정희시대 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의 빛과 그림자가 있었고 정권마다 시대상황과 역사적 의미가 있었기에 공과(功過)가 섞여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기존 정치권 못지 않게 국민들도 체험한 역사에 대한 공과를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우리가 겪고 눈으로 본 5.16혁명

대선후보들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발길에서 부터 역사와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행보를 보여줬다. 이는 아직도 감정적, 선동적 정치문화로 갈등과 대결을 통해 표를 얻겠다는 전략일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묘소를 참배하고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묘소도 참배했으니 국민통합을 위한 진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묘소만 참배하고 이승만, 박정희 묘소는 참배하지 않고 역사인식의 차별화를 나타냈다. 그뒤 안철수 후보는 전직 대통령 묘소를 고루 참배하고 공(功)은 계승하고 과(過)는 교훈으로 삼자고 말했다.

우리가 체험한 격동과 굴절의 역사도 이승만 건국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대통령, 김대중 민주화 대통령으로 큰 구도의 역사평가가 자리잡아 가는 단계라고 믿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후보를 겨냥하여 5.16과 유신에 대한 평가를 대역죄인양 몰아 부치니 아버지와 딸을 연좌시키자는 셈인가.

20대 대학생 시절에 겪은 5.16은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로 암담하던 시기의 역사 물줄기를 바꾼 획기적인 전환이었다. 당시 윤보선 대통령 마저 "올것이 왔구나"라고 촌평했다. 당시 배고픈 국민의 절망은 덮어둔 채 무능한 정치권은 신파와 구파로 갈라져 싸움질 하느라고 나라가 망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지 않았는가.

5.16 정부는 강력한 규율 아래 전광석화식 경제개발로 배고픈 국민에게 밥 먹여주는 혁명을 이룩한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지켜봤다.

6.29 민주화후 역대 대통령들

오늘의 민주화는 6.29 선언후 노태우 대통령으로 부터 시작되어 민주화 투쟁세력이 골고루 집권하고 누려오지 않았는가. 마치 민주화 운동을 권력투기 처럼 인식하여 가신(家臣)그룹과 운동권 출신들이 득세했던 시절을 되돌아 보라.

DJ와 결별했던 YS는 3당 합당으로 팔자를 고쳐 집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각제 합의각서를 파기하고 집권한 후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역사바로세우기'로 전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구속한 5.18 소급법을 제정, 역사를 단절시키려 했다.

DJ는 유신본당으로 자처한 김종필과 DJP 연합하고 박정희 산업화와 화해하여 집권했



▲6.29 민주화 선언 후 역대 대통령들

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으로 '제2 건국 운동'을 벌여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했었다. 또 DJ의 정치적 유산을 바탕으로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이름으로 '과거사 뒤집기'에 열중했으니 이를 두고 민주화 대통령들의 '역사병'이라고 부른다.

노무현은 재임중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막말도 하고 탄핵도 받고 임기를 채웠지만 퇴임 후 부인의 비자금 관련 수사 도중에 투신자살했으니 대통령의 역사병이 서글프지 않는가.

5공의 악업(惡業)을 덮어쓴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수의를 입고 수갑 찬 모습을 국내외에 보여주었다. 그러나 거액의 비자금만 아니었다면 10.26 국변후 국가위기관리와 물가안정 등 혼란기의 리더십으로 평가됐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된다. 또 노태우 대통령도 비자금이 아니었다면 직선제에 의한 민주화 첫 대통령으로 평가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전임자이자 친구인 전두환을 백담사로 유배 보내고 '물태우' 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민주화시대를 연 업적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평범한 국민시각으로 봐도 역대 대통령시대는 빛과 그림자와 공과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근현대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딸이 책임질 수 없는 '정치벌'

민주화시대 들어 정치적 권리를 한껏 누린 민주화 투쟁세력이 누린 혜택도 박정희 시대 산업화의 바탕에서 나왔다. 그들이 5.16과 유신의 죄를 딸에게 묻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책임질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덮어 씌우려는 '정치벌'의 성격이 아닌가.

박 후보 아버지의 역사는 '구국의 결단'이었지만 고통과 희생의 피해자가 있었으니 딸이 사과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이상 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격동과 전환기 시대 역사 속의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는 명백하게 기억된다. 민주화의 상징인 YS와 DJ시대의 어둠과 얼룩도 오

늘의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수많은 가신그룹과 아들, 친인척 등의 권력남용, 부정부패로 재임중 국민에게 사과했고 눈물로 퇴임하지 않았는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친노 측근, 형님, 딸, 후원자 등의 온갖 비리가 얼마이며 비자금 수사 도중에 왜 투신했는지 뭐라고 해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 출신으로 폐족(廢族)이라고 선언한 친노세력의 부활로 후보가 되지 않았는가.

현 이명박 대통령 마저 형님과 측근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퇴임에 대비한 사저용 땅 매입 관련 특검수사를 받게 됐다. 아마도 대통령이란 권력이 측근과 친인척을 부패시킬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개헌론이 나오고 친인척의 발목을 잡아 묶어 두자는 정치쇄신론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가지 배경으로 보면 5.16과 유신의 평가를 딸에게 주문하며 올 대선이슈로 삼는 것은 비정(非情)의 선거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더구나 아버지시대 역사를 딸에게 단죄하라고 압박하고 유죄로 모는 것은 반헌법적 연좌제 임을 모르는가.

지성과 인격의 선거운동 역할

대선정국에 최고의 지성과 인격을 자랑하는 교수와 변호사 등이 대거 출동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민운동가, 종교계, 문화예술계 등에서 활동력과 재능을 과시한 사람들도 몰려 간 느낌이다.

정치쇄신과 선거문화 개선을 위해 지성과 인격이 필요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들이 정책개발과 선거전략에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거짓과 비방이 없는 선거문화가 확립되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종래의 경험에서 보듯 지성과 인격도 정치권에서 뚜렷한 공적을 올린 적이 없으니 행여 권력투기를 위해 지식과 인격을 팔러 나간 것이 아닐까 두려운 것이다.

교수, 변호사는 물론 각계에서 중요한 본업(本業)으로 바쁜 분들이 각종 포럼에서 자문그룹, 멘토그룹, 후원그룹 등에 이름을 올려놓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나중에 제발 '선거공신'이란 이름으로 청와대나 행정부 및 정치권에 진입하는 꼴을 더 이상 보여주지 말기를 신신 당부한다.

대선정국의 국민은 경제살리기, 일자리 등을 기다리고 경제계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포퓰리즘이 어디까지 갈런지 두려워한다. 여기에 과거사와 역사병을 들이대고 SNS시대 악의적인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국민여론을 오도할 수 있는 풍토를 개선하는데 '선거일자리'로 찾아 나간 지성과 인격의 큰 역할을 간절히 소망한다. 아울러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어떤 보상이나 권력분배에 참여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경제풍월

【국 · 가 · 비 · 전】

‘아버지역사’를 딸에게…

어찌 벌주자고 하는가

최성규목사, ‘아버지와 딸’ 소신성명
‘효가 살아야 나라산다’ 효운동강조

박근혜 후보의 역사관을 따지는 대선정국에 대해 “딸에게 아버지의 역사를 묻느냐”는 고고한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담임목사가 “효(孝)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요지의 ‘아버지와 딸’이라는 광고 성명을 발표했다.(9.21 조선일보)

대한민국 역사에 부모 빼앗겼다

최 목사는 지난 8월 16일에도 ‘5.16과 나’라는 제하에 “5.16은 역사의 필연이었다”는 소신 광고를 발표했었다.(동아일보)

최 목사는 ‘아버지와 딸’에서 박 후보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역사 이전에 아버지로서 5.16과 유신은 실체를 밝혀 공과를 따져야 겠지만 “아버지가 한 일을 딸에게 평가하고 정죄하고 사과하라 하느냐”고 물었다. 또 박 후보는 대한민국 역사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빼앗긴 딸로서 “잘했거나 잘못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 아니냐”고 물었다.

최 목사는 ‘표를 얻기 위해 아버지를 파는 딸’, ‘아버지를 정죄하는 딸’, 정권을 잡기 위해 ‘아버지를 버리는 딸’을 누가 원하느냐고도 물었다.

좌익이라고 아내 버려야 하느냐

최 목사는 2007년 7월 국회가 ‘효행장려 및 지원법’을 통과시키기 까지 효행 연구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으로 입법지원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 뒤 효비전 선언문을 선포하고 효운동단체 결성, 효나라운동 중앙회 설립, 미 · 중 등서 한국효 심포지엄 개최 등의 이력을 밝혔다.

이같은 효운동을 전개해 온 최 목사는 박 후보가 아버지 일로 세상여론에 곤경을 당하는 것이 안타까워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소신을 밝혔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02년 민주당 후보 경선시 이인제 후보가 “노무현 후보의 장인이 좌익으로 양민학살에도 가담했다”고 폭로한 사례를 들었다. 이때 노 후보가 “장인의 좌익활동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제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라고 항변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최 목사는 박 후보가 5.16을 역사에 맡기자고 한 말은 박 대통령의 공과를 국민이 판단해 달라는 뜻으로 아버지를 좋다, 나쁘다로 자신이 평가할 수 없다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선동가 아닌 선구자가 필요하다

최 목사는 8.16일자 ‘5.16과 나’에서 ‘나보다 나라가 먼저다’라는 국가관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신이 체험해 온 역사가 심어준 교훈이라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열살 때 6.25를 만나 아버지를 잃고 두 분의 작은 아버지도 잃었다고 소개했다. 그 뒤 4.19 학생혁명으로 들어선 장면 정부의 무능과 무질서를 지켜보고 야간고 3년 때 5.16 혁명을 만나 ‘역사적 필연’이라고 생각했다.

최 목사는 박정희의 5.16이 보릿고개를 넘고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등 길을 내고 굴뚝을 올리고 해외로도 나가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배를 채워줬다고 해석했다. 이어 올 대선정국에서는 5.16 평가는 공과를 구분하여 그림자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목사는 나이 일흔이 넘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돌아보니 나라는 ‘말쟁이’가 아니라 ‘일쟁이’가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사람은 ‘선동가’가 아닌 ‘선구자’로서 청소년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후략)

국 · 가 · 비 · 전

'아버지역사'를 딸에게…

어찌 벌주자고 하는가

최성규목사, '아버지와 딸' 소신성명
'효가 살아야 나라산다' 효운동강조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담임목사

박근혜 후보의 역사관을 따지는 대선정국에 대해 "딸에게 아버지의 역사를 묻느냐"는 고고한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담임목사가 "효(孝)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요지의 '아버지와 딸'이라는 광고 성명을 발표했다. (9.21 조선일보)

대한민국 역사에 부모 빼앗겼다

최 목사는 지난 8월 16일에도 '5.16과 나'라는 제하에 "5.16은 역사의 필연이었다"는 소신광고를 발표했었다. (동아일보)

최 목사는 '아버지와 딸'에서 박 후보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역사 이전에 아버지로서 5.16과 유신은 실체를 밝혀 공과를 따져야 겠지만 "아버지가 한 일을 딸에게 평가하고 정죄하고 사과하라 하느냐"고 물었다. 또 박 후보는 대한민국 역사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빼앗긴 딸로서 "잘했거나 잘못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 아니냐"고 물었다.

최 목사는 '표를 얻기 위해 아버지를 파는 딸', '아버지를 정죄하는 딸', 정권을 잡기 위해 '아버지를 버리는 딸'을 누가 원하느냐고도 물었다.

좌익이라고 아내 버려야 하느냐

최 목사는 2007년 7월 국회가 '효행장려 및 지원법'을 통과시키기 까지 효행 연구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으로 입법지원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뒤 효비전 선언문을 선포하고 효운동단체 결성, 효나라운동 중앙회 설립, 미 · 중 등서 한국효 심포지엄 개최 등의 이력을 밝혔다.

이같은 효운동을 전개해 온 최 목사는 박 후보가 아버지 일로 세상여론에 곤경을 당



아버지와 딸

효(孝)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효의 나라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효(孝)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상산효대학원대학교를 설립했고, 상산청소년효재단을 통해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삽다. 효를 행하면 모두가 행복하다."고 줄기차게 외쳐왔습니다. 특히 2005년 7월2일 효행 및 지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하도록 연구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 것이 세 번째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효비전 선언문도 작성해 선포했고, 한국효운동단체총연합회를 결성하고, 효나라운동중앙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효운동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 [illegible]에서 효에 대한 심포지움을 열어 가는 곳마다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효를 섬기 위해서 아버지를 뽀는 말.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정복하는 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아버지를 버리는 말.

우리의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아버지 노아가 실수로 하체를 드러냈습니다(창 9:23). 둘째 아들 함은 자기가 본 것을 형과 동생에게 본 대로 말했습니다(창 9:22). 셈과 야벳은 그 부끄러운 꼴을 가려드렸습니다. "형과 아벗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창 9:23). 하나님은 함의 이런 가나안을 저주하시고, 셈과 야벳은 복 주셨습니다. [illegible]

나에게 알으로 어떻게 질처를 할 것인지를 물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들렸습니다.

2006년 5월 18일 아침 9시, 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장소는 국장 입이었습니다. 곡하는 큰 뜻같은 결심이었습니다. 대충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부정하는 다빈치코드 영화 상영관에 관람동가"였습니다. 성도들은 직절했습니다. "정도 상하고, 마음도 상한다." "KNCC와 한기총의 대표회장까지 하신 분이 1인 시위가 웬 말이냐." 시샘 섞은 말들입니다. "1인 시위를 해도 영화는 상영된다." "그런 시위를 하면 오히려 영화를 홍보해주는 꼴이다." 그런데도 동구하고 나는 1인 시위를 택아 했습니다. 그때 나는 기자은 심정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의 재사림 지표서 기독교 [illegible] 입장에 나섰다. 하

▲ '아버지와 딸' 광고성명. (9.21 조선일보)

하는 것이 안타까워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소신을 밝혔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02년 민주당 후보 경선 시 이인제 후보가 "노무현 후보의 장인이 좌익으로 양민학살에도 가담했다"고 폭로한 사례를 들었다. 이때 노 후보가 "장인의 좌익활동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제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라고 항변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최 목사는 박 후보가 5.16을 역사에 맡기자고 한 말은 박 대통령의 공과를 국민이 판단해 달라는 뜻으로 아버지를 좋다, 나쁘다로 자신이 평가할 수 없다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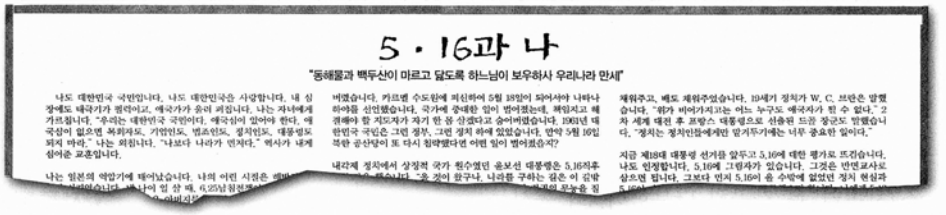
선동가 아닌 선구자가 필요하다

최 목사는 8.16일자 '5.16과 나'에서 '나보다 나라가 먼저다' 라는 국가관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신이 체험해 온 역사가 심어준 교훈이라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열살 때 6.25를 만나 아버지를 잃고 두 분의 작은 아버지도 잃었다고 소개했다. 그뒤 4.19 학생혁명으로 들어선 장면 정부의 무능과 무질서를 지켜보고 야간고 3년 때 5.16 혁명을 만나 '역사적 필연'이라고 생각했다.

최 목사는 박정희의 5.16이 보릿고개를 넘고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등 길을 내고 굴뚝을 올리고 해외로도 나가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배를 채워줬다고 해석했다. 이어 올 대선정국에서는 5.16 평가는 공과를 구분하여 그림자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목사는 나이 일흔이 넘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돌아보니 나라는 '말쟁이'가 아니라 '일쟁이'가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5 · 16과 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도 대한민국은 사랑합니다. 내 심장에도 태극기가 펄럭이고,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나는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애국심이 있어야 한다. 애국심이 필요땐 목회자도, 기업인도, 법조인도, 정치인도, 대통령도 되지 마라." 나는 외칩니다. "나보다 나라가 먼저다." 역사가 내게 심어준 교훈입니다.

나는 일본의 악압기에 태어났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 [illegible]

버렸습니다. 카르멘 수도한에 피신하여 5월 18일이 되어서야 나타나 하야를 선언했습니다. 국가에 중대한 일이 벌어졌는데,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지도자가 자기 한 몸 살겠다고 숨어버렸습니다. 1961년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정부, 그런 정치 하에 있었습니다. 만약 5월 16일 혁란 공산당이 또 다시 침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내각제 정치에서 상징적 국가 원수였던 윤보선 대통령은 5.16직후 [illegible] "우 경이 합구냐, 나라를 구하는 길은 이 길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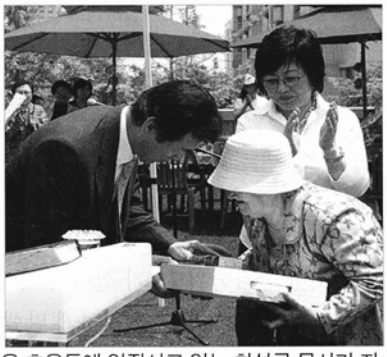
채워주고, 배도 채워주었습니다. 19세기 정치가 W. C.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역가 비어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애국자가 된 수 없다." 2차 세계 대전 후 프랑스 대통령으로 선출된 드골 장군도 말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 중요한 일이다."

지금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16에 대한 평가로 뜨겁습니다. 나도 인정합니다. 5.16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됩니다. 그보다 먼저 5.16이 올 수밖에 없었던 정치 현실과

▲ '5.16과 나' 광고성명(8.16 동아일보)

국 · 가 · 비 · 전





▲효나라운동중앙회 '효와 나눔 실천 결의 및 확산대회'. 오른쪽은 효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최성규 목사가 지역 어른신을 초청해 효잔치를 열었다.

알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사람은 '선동가'가 아닌 '선구자'로서 청소년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나라먼저', 정부는 '국민먼저'

최 목사는 지난 6월 보훈의 달 설교문에서 6.25를 비롯하여 최근의 서해교전, 연평 포격 등을 교훈 삼아 '나라가 먼저다'라는 인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국민은 '나라 먼저', 정부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먼저'라는 인식으로 가야한다는 국가관이 투철하다.

최 목사는 한국 교회가 멀리 3.1운동 부터 나보다 먼저 나라운동의 전통을 이어 왔다고 말하고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다', '나라가 있어야 한국 교회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5월 가정의 달에는 '부모, 어른, 스승 공경'을 간곡히 당부했다. 최 목사는 부모공경이 없는 신앙은 '죽은신앙'이라고 말하고 어른공경이 없으면 미래가 없고 스승에 대한 존경과 제자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효가 있는 가정, 부부사랑이 있는 행복은 이 시대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 회장, 한국기독교 총연합회(CCK) 대표회장을 역임한 교계 지도자로 오랫동안 효(孝) 운동은 전개해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성산효대학원대 설립자 및 총장, 한국효운동단체 총연합회 대표회장, (재)성산 청소년 효재단 이사장 등으로 효나라 운동을 이끌고 있다. 최 목사의 효사상과 '나보다 나라 먼저' 사상이 '아버지와 딸' 성명을 발표한 배경으로 이해된다.

6.25를 겪고 5.16 정부하의 경제개발을 지켜본 세대는 최 목사의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풍월

【논객들의 세상보기】

대선정국 3각 구도
죽기살기 야권 단일화
국민통합 대 오리무중 싸움

박근혜 후보 통합의 중앙선대위 발족

결국 18대 대통령 후보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장외 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3각 구도로 압축됐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후보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극복, 10월 12일 정치쇄신과 국민통합 그리고 당내 화합에 초점을 맞춘 중앙 선대위원회를 발족시켜 본격적인 대선전에 뛰어들었다.

이 시점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야권 후보의 단일화에 모아졌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정치권이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이룩됐는지 국민의 동의가 없는 현 시점에서 야권의 단일화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규정했다. 그는 야권의 단일화가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이룩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논의 할 수 없다고 거부한 셈이다.

그렇다면 안 후보와 문 후보는 각자 독자행보를 통해 지지율 경쟁을 한 뒤 10월경의 결과에 따라서 단일화 협상을 벌일 것이다. 현재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겨룰 최종적인 야권 후보는 문, 안 둘이 될지 아니면 하나로 단일화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안 후보는 "정치경험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수평적 리더십과 디지털 마인드가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한 대선 출마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되면 야권 후보의 단일화는 오리무중이다.

안, 문의 단일후보 오리무중

또한 정치권의 경험부족인 안 교수가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자기변명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이란 자리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는 다르다. 국가와 국민의 명운이 걸린 수많은 국정과제와 함께 갈등과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들이 대통령의 책상위에 쉴새없이 올라올 것이고 이를 즉각 척결해야 한다.

안 교수는 수영장에서 수영할 줄 알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도 수영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아연 실색했다. 왜냐하면 바람과 파도가 없는 실내의 수영장과 폭풍과 태풍이 휘몰아치는 태평양과 같은 수준으로 비유하는 것 자체가 백면서생의 치기적 발언이다.

어쨌든 안 교수는 대통령 후보가 된 이상 신비주의 커튼을 걷어치우고 모진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검증의 장에 당당히 나서라. 개인적인 이력이나 사생활의 검증은 피할 수 없는 필수 코스다.

이승만, 박정희 참배한 안철수를 긍정평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가 첫 행보로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의 묘소를 모두 참배했다. 극히 자연스러운 처사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만 참배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우리의 정치풍토에서 가장 타기해야할 것은 갈등과 분열이다. 극한적인 대립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마저 거부한다. 그 결과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까지 편을 가르고 심지어 묘소참배도 거부한다.

전직 대통령은 정파를 넘어 이미 우리의 역사적 인물이 됐다. 이승만은 건국대통령으로, 박정희는 산업화 대통령으로, 김대중은 민주화 대통령으로 역사에 자리매김 됐다.(후략)



논객들의 세상보기

대선정국 3각구도

죽기살기 야권 단일화

국민통합 대 오리무중 싸움

글/ 宋孝彬 편집위원(한국일보 전 논설위원)

박근혜 후보 통합의 중앙선대위 발족

결국 18대 통령 후보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장외 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3각구도로 압축됐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후보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극복, 10월 12일 정치쇄신과 국민통합 그리고 당내 화합에 초점을 맞춘 중앙 선대위원회를 발족시켜 본격적인 대선전에 뛰어들었다.

이 시점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야권후보의 단일화에 모아졌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정치권이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이룩됐는지 국민의 동의가 없는 현 시점에서 야권의 단일화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규정했다. 그는 야권의 단일화가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이룩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논의 할 수 없다고 거부한 셈이다.

그렇다면 안 후보와 문 후보는 각자 독자 행보를 통해 지지율 경쟁을 한 뒤 10월경의 결과에 따라서 단일화 협상을 벌일 것이다. 현재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겨룰 최종적인 야권 후보는 문. 안 둘이 될지 아니면 하나로 단일화 될지 아무도 알수 없다.

안 후보는 "정치경험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수평적 리더십과 디지털 마인드가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한 대선 출마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되면 야권 후보의 단일화는 오리무중이다.

안, 문의 단일후보 오리무중

또한 정치권의 경험부족인 안 교수가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자기변명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이란 자리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는 다르다. 국가와 국민의 명운이 걸린 수많은 국정과제와 함께 갈등과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들이 대통령의 책상위에 쉴새없이 올라 올 것이고 이를 즉각 처결해야한다.

안 교수는 수영장에서 수영할 줄 알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도 수영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야권 실색했다. 왜냐하면 바람과 파도가 없는 실내의 수영장과 폭풍과 태풍이 휘몰아치는 태평양과 같을 수준으로 비유하는 것 자체가 백면서생의 치기적 발언이다.

어쨌든 안 교수는 대통령 후보가 된 이상 신비주의 커튼을 걷어치우고 모진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검증의 장에 당당히 나서라. 개인적인 이력이나 사생활의 검증은 피할 수 없는 필수 코스다.

이승만, 박정희 참배한 안철수를 긍정평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가 첫 행보로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의 묘소를 모두 참배했다. 극히 자연스러운 처사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만 참배 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우리의 정치풍토에서 가장 타기해야할 것은 갈등과 분열이다. 극한적인 대립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마저 거부한다. 그 결과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까지 편을 가르고 심지어 묘소참배도 거부한다.

전직 대통령은 정파를 넘어 이미 우리의 역사적 인물이 됐다. 이승만은 건국대통령으로, 박정희는 산업화 대통령으로, 김대중은 민주화 대통령으로 역사에 자리매김 됐다.

이런 관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모든 전직 대통령의 참배가 바람직하다. 안 후보는 역사를 배우는 자세로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면서 전직 대통령의 공은 계승하고 과는 바로잡는 마음가짐을 갖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의 시대정신은 국민통합이다. 박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 것을 야속하고 곧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뿐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묘소를 참배하기위해 봉하마을까지 찾아갔다. 이는 지지층 뿐아니라 반대자까지도 끌어안겠다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또한 10월 11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과거 박 정권 때 반 정부인사로 고초를 받았던 인사와 김대중 정부에 참여했던 호남출신과 당내 비박 계 인사 모두를 참여시킨 '통합행보'를 보여줬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의 시대정신은 '변화'와 '혁신'이다. 그런데 문 후보는 이승만 과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지 않았다. 참배하지 않은 이유로 가해자 측의 반성을 내세웠다. 연좌제 냄새가 물씬난다. 그러나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쇄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실행키 위해 정치권의 혁신을 주장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광복이후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최빈국에서 오늘의 경제 10대 대국으로 급성장했다.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중에서 하나라도 빠졌다면, 세계에 유례없는 이런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는가. 정치평론

100 ▪ 2012년 11월호

정치평론 ▪ 101

【논객들의 세상보기】

NLL 무효화 약속?

노 후계자 어쩔 셈인가

지금도 북측이 난리치고 있지 않나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을 때, 김정일에게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시키겠다는 다짐을 했대서, 방금 들끓고 있다.

「노」라는 사람의 기본인식은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식으로 그어놓은 선일뿐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현은 어쨌든 그 비슷한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은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그려진 선이므로 별 의미가 없으니 남북이 공동 관리를 하는 평화선으로 유지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고, 그것을 빌미로 북한은 그 때의 약속을 계속성을 지닌 이후의 정권이 지켜야 한다고 난리를 치며 난폭하고 막무가내하게 나오는 것이 현상인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 시절 노무현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그 노선을 충실하게 지켜나갈 것을 선거공약으로 철석같이 맹세하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입후보자는, 이 사실을 길길이 뛰며 부정하고 있다. 노무현이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너무 펄펄 뛰며 호들갑스럽게 부정을 하니까 오히려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행태를 기억하는 우리는, 이 말이 아주 그럴 듯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말투를 아주 쉽게 쓰곤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설은 근거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천박한 구어체로 중요한 국가 정책을 희화화시키는 데 특기가 있었던 그의 말 본새와 아주 닮았기 때문이다.

원래 NLL은 휴전 협정이 성립되어 휴전선이 그어질 때는 없었던 선이다. 서해는 몽땅 우리 쪽 소속이어서 북측은 군함 한 대도 띄울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유엔군과 우리 해군이 압록강 앞에까지 드나들어도 손놓고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었다. 그래도 영토에 따라 바다도 열려 있어야 국가 기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정 선까지는 드나들 수 있기를 우리측이 허락한 것이 NLL이다.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이 이 결정을 했을 때 김일성은 『처분만 바라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아이들 「땅따먹기」 식으로 노무현에게는 인지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쟁을 일으켜서 이쪽 땅을 다 유린하여 저희 것으로 만들려고 왕창 「땅따먹기」 전쟁을 일으켜 온 삼천리를 핏빛으로 물들이다가 마침내 밀려서 압록강 저쪽까지 밀려갔던 것은 김일성과 그 일당들이다.

그때의 환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 기회만 있으면 NLL을 침범하고 걸핏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협박하는 것이 그 정권을 세습으로 이은 김정일이었다.

실제로 바로 그 「NLL」을 도둑처럼 넘어 들어와 천안함을 공격하고, 그로써 젊은 대한민국 병사의 목숨을 수십명이나 앗아간 것이 그들이다.(후략)



논객들의 세상보기

NLL 무효화 약속?

노 후계자 어쩔 셈인가

지금도 북측이 난리치고 있지 않나

글/宋貞淑 편집위원 (전 장관,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을 때, 김정일에게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시키겠다는 다짐을 했대서, 방금 들끓고 있다.

「노」라는 사람의 기본인식은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식으로 그어놓은 선일 뿐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현은 어쨌든 그 비슷한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은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그려진 선이므로 별 의미가 없으니 남북이 공동관리를 하는 평화선으로 유지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고, 그것을 빌미로 북한은 그 때의 약속을 계속성을 지닌 이후의 정권이 지켜야 한다고 난리를 치며 난폭하고 막무가내하게 나오는 것이 현상인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 시절 노무현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그 노선을 충실하게 지켜나갈 것을 선거공약으로 철석같이 맹세하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입후보자는, 이 사실을 길길이 뛰며 부정하고 있다. 노무현이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너무 펄펄 뛰며 호들갑스럽게 부정을 하니까 오히려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행태를 기억하는 우리는, 이 말이 아주 그럴 듯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말투를 아주 쉽게 쓰곤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설은 근거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천박한 구어체로 중요한 국가 정책을 희화화시키는 데 특기가 있었던 그의 말 본새와 아주 닮았기 때문이다.

원래 NLL은 휴전 협정이 성립되어 휴전선이 그어질 때는 없었던 선이다. 서해는 몽땅 우리 쪽 소속이어서 북측은 군함 한 대도 띄울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유엔군과 우리 해군이 압록강 앞에까지 드나들어도 손놓고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었다. 그래도 영토에 따라 바다도 열려 있어야 국가 기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정 선까지는 드나들 수 있기를 우리측이 허락한 것이 NLL이다.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이 이 결정을 했을 때 김일성은 『처분만 바라는』입장이었다. 그래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아이들「땅따먹기」식으로 노무현에게는 인지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쟁을 일으켜서 이쪽 땅을 다 유린하여 저희 것으로 만들려고 왕창「땅따먹기」전쟁을 일으켜 온 삼천리를 핏빛으로 물들이다가 마침내 밀려서 압록강 저쪽까지 밀려갔던 것은 김일성과 그 일당들이다.

그때의 환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 기회만 있으면 NLL을 침범하고 걸핏하면『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협박하는 것이 그 정권을 세습으로 이은 김정일이었다.

실제로 바로 그「NLL」을 도둑처럼 넘어 들어와 천안함을 공격하고, 그로써 젊은 대한민국 병사의 목숨을 수십명이나 앗아간 것이 그들이다.

그 사건이 났을 때 문제인을 중심으로 한 노무현의 후계그룹들은 그것이 남쪽의 자작극일지 모른다는 말을 퍼뜨리는 세력에 오랫동안 동조했었다.

그리고 온갖 과학과 증거를 동원하여 그 사실을 규명한 사실을 놓고도 북한을 의심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못하게 했던 좌파 야당들은, 천안함사건으로 희생된 우리의 고귀한 젊은 영령들의 장례는 물론 묘소 앞에서는 일을 단 한사람도 한 적이 없었다. 흡사 그렇게 함으로써 북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이려는 것 같았던 사람들 중의 대표격인 문재인이란 사람이, 최근에 처음으로 그 묘소를 참배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노무현의 「땅따먹기 이론」의 충실한 복창자인 셈인 그가 영령앞에 서서 어떤 속 마음을 가졌을까 궁금하다.

아이들의 「땅따먹기」놀이에도 규칙은 있다. 한번 따먹고 그은 금은 그냥은 지우지 않는다. 불리하다고 쓱쓱 뭉개고 억지를 부리는 아이들의 떼거리는 들어주면 번번이 기어올라 함께 놀 수가 없다.

하물며 국가간이나 정부간에 그어진 금은 침범할 수 없다. 그것을 침범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전쟁의 촉발을 뜻한다. NLL을 무너뜨리고 나면 곧바로 인천에서 서울까지를 「불바다」로 만들기에 곧장 가능한 바다가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음놓고 들락거리게 해달라는 것이 북이 바라는 바다. 노무현이 NLL을 무효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노무현을 계승한 사람들은 정권을 잡으면 북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일 뿐이다.

그런 마음으로 천안함 순국 장병들의 앞에 가서 분향을 하는 일은 그냥 위선의 행동일 뿐일 것이다.

『NLL은 대한민국의 영토선이다. 노무현과 김정일 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되었건 나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는 선언을 대명천지 밝은 낮에 확고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경제풍월

【논객들의 세상보기】

박정희 전 대통령 33주기
'掘起의 章' 화끈한 용틀임

세 번 無血革命 완성

朴正熙시대 "퇴행적 역사논쟁 마침표 찍어야"

역사는 시대의 陽陰明暗 담은 우리의 自畵像

60~70년대는 대통령 박정희를 상징한다. 근대화의 주춧돌을 박고 뼈대를 완성한 한국 현대사의 청년기다. '굴기'(掘起)의 시간이었다. 한국사회의 역동적인 에너지 분출현상은 역사상 가장 화끈한 용틀임이었다.

보다 폭넓게 거론하자면 '박정희의 혁명'은 5.16 이후 두 번에 걸친 또 다른 거사를 통해 완성도를 공고히 했다. 지구촌 최빈(最貧)의 농경사회를 신흥 공업국가로 탈바꿈 시킨 웅장한 대역사(大役事)였다.

숙명적인 국가빈곤의 틀을 통째로 갈아엎은 '산업혁명'이 그 하나다.

'한강의 기적'은 결코 제 발로 굴러온 개벽이 아니다. 국민 총화를 통한 치열한 도전의 결산이다.

또 하나는 무력감의 늪에 빠진 패배의식을 스스로 깨트리고 '할 수 있다'(Cando)는 자신감을 되살린 한국인의 정신사(精神史)에 자랑스럽게 새겨진 '명예혁명'이다. 뿌리 깊은 자학의 '엽전의식'을 퇴치한 것이야말로 박정희가 성취한 진정한 혁명성공 모델의 진수다.

한국인의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은 새마을운동에서 입체적으로 완성된다. 한국인의 위대한 가능성을 과시한 박정희 무혈(無血)혁명 시리즈가 아닌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정희에 대한 역사논쟁이 정치판을 달구고 있다.

역사란 무엇인가? 어려운 숱한 말들은 건너뛰자. 너와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의 발자취가 아니던가. 한 시대의 양음명암(陽陰明暗)을 죄다 쓸어 담고 살아 숨쉬는 우리의 자화상인 것이다.

어찌 영욕이 엇갈리지 않겠는가. 역사를 바로 보는 눈동자는 맑아야 한다.

콩깍지가 끼면 제대로 읽을 수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다가서야 한다는 점이다. 겸손해야만 비로소 역사의 '맨얼굴'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인식은 독과점의 대상일 수 없다. 선거 때만 되면 과거와 현재간의 갈등조장으로 정략적 이익을 챙기려는 악순환이 재연돼왔다. 자의적인 잣대로 역사를 함부로 토막 내어 한쪽 단면만을 부각시키는 짓은 역사 모독이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는 실종되는 법이다. 대선후보들이 과거사에만 매달린다. 먼 미래를 여는 열쇠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올바른 역사관찰은 주관과 객관이 상호 보완하는 균형잡힌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더 맑은 제 3의 시선, 朴正熙觀

박정희 시대를 객관적인 제3의 시선으로 판독하는 증언들을 살펴볼 가치는 충분하다.

그들은 박정희를 '영웅'으로 본다. 우리 속의 일부 빗나간 인식은 '독재자'로 본다. 여기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증언이 있다.

가장 선명하게 '박정희 정치'를 비난해온 것으로 유명한 미국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박정희관이다.

"그의 독재정권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국력을 키웠다. 그는 다른 후진국 지도자와는 달리 결코 부패하지 않았다"

세계적인 석학인 피터 드러커 박사의 논평은 어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이룩한 성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박정희의 위대한 지도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이다."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와 한국을 수

평적 선상에 올려놓고 비교 논평했다. "러시아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잘 알고 있잖은가. 박정희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뚜렷이 증명되었다."

1980년대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오늘의 대중국 실현의 이정표를 세운 덩샤오핑(鄧小平)이 "박정희의 개발전략을 몽땅 수집하여 내 책상위에 가져오라"고 엄명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화다. 그의 '흑묘백묘'(黑描白描)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이 제일이라는 뜻)은 박정희의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를 벤치마킹한데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그는 공개회의 석상에서도 '박정희를 주목하라'고 다그쳤다.(후략)



논객들의 세상보기

박정희 전 대통령 33주기

'掘起의 章' 화끈한 용틀임

세 번 無血革命 완성

朴正熙시대 "퇴행적 역사논쟁 마침표 찍어야"

글/정재호 (한정회 전 부회장, 9·10대의원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논설위원)

역사는 시대의 陽陰明暗 담은 우리의 自畵像

60~70년대는 대통령 박정희를 상징한다. 근대화의 주춧돌을 박고 뼈대를 완성한 한국 현대사의 청년기다. '굴기'(掘起)의 시간이었다. 한국사회의 역동적인 에너지 분출현상은 역사상 가장 화끈한 용틀임이었다.

보다 폭넓게 거론하자면 '박정희의 혁명'은 5.16 이후 두 번에 걸친 또 다른 거사를 통해 완성도를 공고히 했다. 지구촌 최빈(最貧)의 농경사회를 신흥 공업국가로 탈바꿈시킨 웅장한 대역사(大役事)였다.

숙명적인 국가빈곤의 틀을 통째로 갈아엎은 '산업혁명'이 그 하나다.

'한강의 기적'은 결코 제 발로 굴러온 개벽이 아니다. 국민 총화를 통한 치열한 도전의 결산이다.

또 하나는 무력감의 늪에 빠진 패배의식을 스스로 깨트리고 '할 수 있다'(Cando)는 자신감을 되살린 한국인의 정신사(精神史)에 자랑스럽게 새겨진 '명예혁명'이다. 뿌리 깊은 자학의 '엽전의식'을 퇴치한 것이야말로 박정희가 성취한 진정한 혁명성공 모델의 진수다.

한국인의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은 새마을운동에서 입체적으로 완성된다. 한국인의 위대한 가능성을 과시한 박정희 무혈(無血)혁명 시리즈가 아닌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정희에 대한 역사논쟁이 정치판을 달구고 있다.

역사란 무엇인가? 어려운 숱한 말들은 건너뛰자. 너와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의 발자취가 아니던가. 한 시대의 양음명암(陽陰明暗)을 죄다 쓸어 담고 살아 숨쉬는 우리의 자화상인 것이다.

어찌 영욕이 엇갈리지 않겠는가. 역사를 바로 보는 눈동자는 맑아야 한다.

콩깍지가 끼면 제대로 읽을 수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다가서야 한다는 점이다. 겸손해야만 비로소 역사의 '맨얼굴'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인식은 독과점의 대상일 수 없다. 선거 때만 되면 과거와 현재간의 갈등조장으로 정략적 이익을 챙기려는 악순환이 재연돼왔다. 자의적인 잣대로 역사를 함부로 토막 내어 한쪽 단면만을 부각시키는 짓은 역사 모독이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는 실종되는 법이다. 대선후보들이 과거사에만 매달린다면 미래를 여는 열쇠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올바른 역사관찰은 주관과 객관이 상호 보완하는 균형잡힌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더 맑은 제 3의 시선, 朴正熙觀

박정희 시대를 객관적인 제3의 시선으로 관독하는 증언들을 살펴볼 가치는 충분하다.

그들은 박정희를 '영웅'으로 본다. 우리 속의 일부 빗나간 인식은 '독재자'로 본다. 여기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증언이 있다.

가장 선명하게 '박정희 정치'를 비난해온 것으로 유명한 미국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박정희관이다.

"그의 독재정권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국력을 키웠다. 그는 다른 후진국 지도자와는 달리 결코 부패하지 않았다"

세계적인 석학인 피터 드러커 박사의 논평은 어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이룩한 성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박정희의 위대한 지도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이다"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와 한국을 수평적 선상에 올려놓고 비교 논평했다. "러시아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잘 알고 있잖은가. 박정희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

경제풍월 • 109



논객들의 세상보기

▲지구촌 최빈의 농경사회를 신흥 공업국가로 탈바꿈시킨 대역사를 이룬 박정희 전 대통령.

110 • 2012년 11월호



▲우리 속의 일부 빗나간 인식은 그를 '독재자'로 보는 반면 박정희 시대를 객관적으로 판독하는 제3의 시선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영웅'으로 평가한다.

이 뚜렷이 증명되었다."

1980년대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오늘의 대중국 실현의 이정표를 세운 덩샤오핑(鄧小平)이 "박정희의 개발전략을 몽땅 수집하여 내 책상위에 가져오라"고 엄명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화다. 그의 '흑묘백묘'(黑描白描)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이 제일이라는 뜻)은 박정희의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를 벤치마킹한데서 나왔다는 분석이 다.

그는 공개회의 석상에서도 '박정희를 주목하라'고 다그쳤다.

대러시아 건설을 지상 목표로 내건 푸틴 대통령의 육성이다. "박정희 정권 18년동안의 목표는 자립경제를 갖춘 현대국가의 건설이었다. 그는 성공했고 세계가 놀랐다. 박정희에 관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라"

'산업혁명'의 성공은 당시의 시대정신인 질주본색(疾走本色)이 만들어낸 우리의 초상이다.

빨리빨리 문화로 채워진 60~70년대의 과속(過速)과정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은 많다. 시대의 아픔이라고 얼버무리고 지나칠 순 없다.

민족사적인 웅비의 길목에서 불이익과 양심적 가치를 빼앗긴 영혼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오늘의 역사인식은 보다 겸허하고 진솔한 '힐링'(Healing) 마인드로 접근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야가 함께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역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소통과 통합으로 가는 대문이다.

오늘의 퇴행적 논쟁은 시대 전개의 발목을 잡는 역주행일 뿐이다.

박정희(朴正熙)는 건국대통령 이승만(李承晩)과 더불어 끝끝내 지워질 수 없는 한반도의 웅대한 백두대간(白頭大幹)이다.

경제풍월

【논객들의 세상보기】

착한도련님, 유복도련님

안철수식 거짓말들

책속에 거짓 써놓고 정치쇄신 이야기

안철수는 왜 사소한 거짓말을 잘하는 것일까. 출마 선언한지 불과 한 달 남짓 됐지만 쉰 한살 된 이 중년남자는 그동안 살살 '거짓말'을 해왔다는 게 하나 둘 알려지고 있다. 그래선지 안철수라는 인물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인품의 소유자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그가 버젓이 해온 거짓말들을 들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다. 왜 그랬을까? 어이가 없을 정도다.

할아버지 유산 50만이라고

안철수라는 사람의 인품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으니 이해하고 말고도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후보로 나선 인물인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과연 안철수라는 인간에게 대한민국을 맡겨도 될지를 일단은 꼼꼼히 챙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안철수 관련 보도'를 비교적 유심히 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우리네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짓말들을 이 '무소속 대선후보'는 아주 태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지적을 하면 안철수 지지자들은 난리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대학가를 돌아다니면서 '청춘콘서트'인지 뭔지를 통해 확보한 안철수의 '팬'들은 너무도 순수한 젊은이들이기에 단순히 '외면적인 안철수'만을 보고 열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걱정도 든다.

오늘 아침, 온라인 뉴스에 보도된 안철수 관련 뉴스 하나는 또 미간을 찌푸리게 한다.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는 고3 때 할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다고 한다. '유복한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일반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하지만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

안철수는 자신이 쓴 책 '행복바이러스 안철수'에서 "내가 살면서 할아버지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직접적인 큰 도움을 받지는 않았다"며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50만원 통장이 유산의 전부라고 밝혔던 것이다. 자, 이쯤 되면 '안철수식 거짓말'이 또 하나 발견된 셈이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쓴 죄 탓에 안철수는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대학시절 2층집 증여받아 놓고

안철수 후보가 대학 시절 소유했던 '부산 수영구 남천동 2층 주택'의 폐쇄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그는 고교 3학년이던 1979년 12월 31일 할아버지로부터 이 주소지의 토지 224.5㎡(약 69평) 가운데 일부(약 41㎡·약 12평)를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1983년 1월 12일 해당 토지의 단독주택(99.18㎡·약 30평)을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안 후보가 3분의 1씩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겠는가. 토지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의문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안철수가 증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매매를 가장해 사실상 증여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는 것이다. 1983년 1월 주택을 증여받고 12년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각각 증여세와 양도세를 납부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아 세금탈루 의혹도 일고 있다고 한다.

안 후보와 가족은 이 주택을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설립(1995년 3월 15일) 직전인 1994년 12월 25일 매도했다.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만 2억3000여만 원이었으며 안 후보 가족은 토지와 주택 매매를 통해 4억~5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전 이 정도 액수라면 꽤 큰돈이다. '할아버지 유산'으로 50만원 저금통장을 받은 게 전부라는 안철수의 말은 '완전 거짓말'로 입증된 것이다. 과연 그는 왜 그런 거짓말을 버젓이 했을까. 그 이유를 알고 싶다.

다운계약, 논문표절, 군대 이야기

지난 추석 직전 터져 나온 '다운 계약서' 논란만 해도 그렇다. 처음엔 서울의대 교수로 있는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보도되면서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바로 "이유야 어찌됐든 잘못했다"는 공식사과를 했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이번엔 정작 안철수 본인이 딱지로 구입한 사당동 철거민 아파트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사안은 부인의 다운계약서보다 더 '죄질'이 안 좋은 것이었지만 '몇 시간 전 한 사과로 갈음 하겠다'는 대변인의 '이하동문 식' 발언으로 웃음거리가 됐다. 물론 안철수 본인은 이 대목에 대해 가타부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슬쩍 넘어갔다.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전세살이의 설움을 잘 안다'는 건 새빨

간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 났지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아무 소리 없이 넘어간 것이다.

집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말한 바로 그 시점에 안철수는 모친이 사준 집 한채가 따로 있을 정도로 유복했다. 행여 '착한 도련님' 안철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 시절인데 자신만 '유복한 건 죄'라는 '시대적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청춘 콘서트'의 인기 강사로 '가난한 청춘'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 그런 '착한 거짓말'을 한 걸까? 어쨌든 안철수의 그런 거짓말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

논문표절과 논문재탕 문제도 그렇다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자신의 논문 문제로 세상을 그렇게 시끄럽게 했으면 가타부타 정확한 해명을 해야만 하는 게 '기본 도리'라고 본다. 그런데도 안철수는 기자들의 질문에 '하하하'라고 호탕하게 웃고 넘겨버렸다고 한다. 이런 자세가 과연 '정치 쇄신'을 하겠다는 신인 정치인의 바른 자세인지를 그에게 묻고 싶다.

별 건 아니지만 '군 입대'할 때 가족도 모르게 갔다고 했지만 부인은 서울역까지 배웅했다는 말로 '남편의 사소한 거짓말'을 만천하에 알리기도 했다. 이것도 사소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꺼림칙하게 만든다. 더 우스운 건 이 거짓말이 초등학교와 중고교 교과서에 여전히 실려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에 이런 류의 스토리를 싣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도 거짓 이야기였다는 건 교육상 너무 안 좋은 소재다.

아마 안철수 지지자들은 그럴 것이다. 겨우 그런 사소하고 시시한 문제들로 우리 안철수 후보를 괴롭히냐고, 기성 정치인들의 온갖 허물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후략)



논객들의 세상보기

착한도련님, 유복도련님

안철수식 거짓말들

책속에 거짓 써놓고 정치쇄신 이야기

글/朴美靜편집위원(스카이뷰커뮤니케이션즈 편집장)

안철수는 왜 사소한 거짓말을 잘 하는 것일까. 출마 선언한지 불과 한 달 남짓 됐지만 쉰한살 된 이 중년남자는 그동안 살살 '거짓말'을 해왔다는 게 하나 둘 알려지고 있다. 그래선지 안철수라는 인물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인품의 소유자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그가 버젓이 해온 거짓말들을 들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다. 왜 그랬을까? 어이가 없을 정도다.

할아버지 유산 50만이라고

안철수라는 사람의 인품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으니 이해하고 말고도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후보로 나선 인물인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과연 안철수라는 인간에게 대한민국을 맡겨도 될지를 일단은 꼼꼼히 챙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안철수 관련 보도'를 비교적 유심히 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우리네 상식으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짓말들을 이 '무소속 대선후보'는 아주 태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지적을 하면 안철수 지지자들은 난리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대학가를 돌아다니면서 '청춘콘서트'인지 뭔지를 통해 확보한 안철수의 '팬'들은 너무도 순수한 젊은이들이기에 단순히 '외면적인 안철수'만을 보고 열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걱정도 든다.

오늘 아침, 온라인 뉴스에 보도된 안철수 관련 뉴스 하나는 또 미간을 찌푸리게 한다.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는 고3 때 할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다고 한다. '유복한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일반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하지만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

안철수는 자신이 쓴 책 '행복바이러스 안철수'에서 "내가 살면서 할아버지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직접적인 큰 도움을 받지는 않았다"며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50만원 통장이 유산의 전부라고 밝혔던 것이다. 자, 이쯤 되면 '안철수 식 거짓말'이 또 하나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쓴 책에서 조부로부터 받은 50만 원 통장이 유산의 전부라고 밝혔으나 최근보도에 따르면 고3 때 조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있다.

발견된 셈이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쓴 책 탓에 안철수는 '거짓말 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대학시절 2층집 증여받아 놓고

안철수 후보가 대학 시절 소유했던 '부산 수영구 남천동 2층 주택'의 폐쇄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그는 고교 3학년이던 1979년 12월 31일 할아버지로부터 이 주소지의 토지 224.5m²(약 69평) 가운데 일부(약 41m² · 12평)를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1983년 1월 12일 해당 토지의 단독주택(99.18m² · 약 30평)을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안 후보가 3분의 1씩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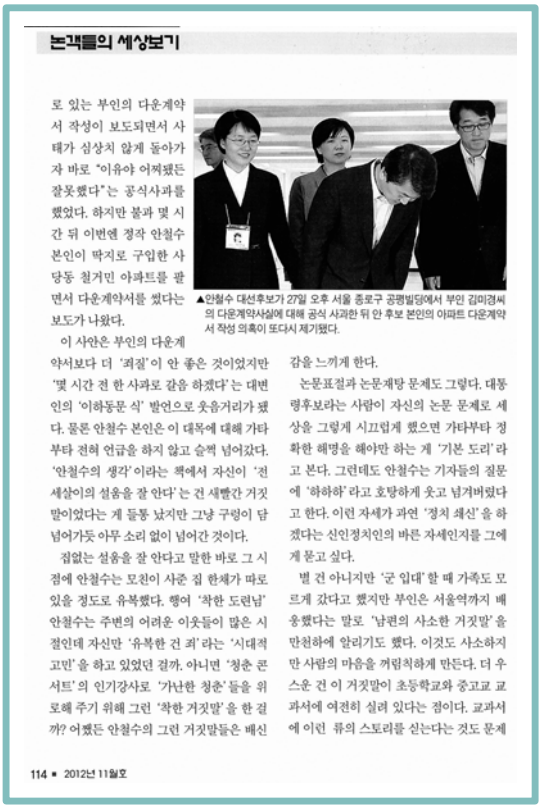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겠는가. 토지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의문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안철수가 증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매매를 가장해 사실상 증여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는 것이다. 1983년 1월 주택을 증여받고 12년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각각 증여세와 양도세를 납부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아 세금 탈루 의혹도 일고 있다고 한다.

안 후보와 가족은 이 주택을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설립(1995년 3월 15일) 직전인 1994년 12월 25일 매도했다.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만 2억3000여만 원이었으며 안 후보 가족은 토지와 주택 매매를 통해 4억~5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전 이 정도 액수라면 꽤 큰돈이다. '할아버지 유산'으로 50만원 저금통장을 받은 게 전부라는 안철수의 말은 '완전 거짓말'로 입증된 것이다. 과연 그는 왜 그런 거짓말을 버젓이 했을까. 그 이유를 알고 싶다.

다운계약, 논문표절, 군대 이야기

지난 추석 직전 터져 나온 '다운 계약서' 논란만 해도 그렇다. 처음엔 서울의대 교수



논객들의 세상보기

로 있는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보도되면서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바로 "이유야 어찌됐든 잘못했다"는 공식사과를 했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이번엔 정작 안철수 본인이 딱지로 구입한 사당동 철거민 아파트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보도가 나왔다.

▲안철수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빌딩에서 부인 김미경씨의 다운계약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한 뒤 안 후보 본인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 사안은 부인의 다운계약서보다 더 '죄질'이 안 좋은 것이었지만 '몇 시간 전 한 사과로 갈음 하겠다'는 대변인의 '이하동문 식' 발언으로 웃음거리가 됐다. 물론 안철수 본인은 이 대목에 대해 가타부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슬쩍 넘어갔다.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전 세살이의 설움을 잘 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 났지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아무 소리 없이 넘어간 것이다.

집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말한 바로 그 시점에 안철수는 모친이 사준 집 한채가 따로 있을 정도로 유복했다. 행여 '착한 도련님' 안철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 시절인데 자신만 '유복한 건 죄'라는 '시대적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청춘 콘서트'의 인기강사로 '가난한 청춘'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 그런 '착한 거짓말'을 한 걸까? 어쨌든 안철수의 그런 거짓말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

논문표절과 논문재탕 문제도 그렇다. 대통령후보라는 사람이 자신의 논문 문제로 세상을 그렇게 시끄럽게 했으면 가타부타 정확한 해명을 해야만 하는 게 '기본 도리'라고 본다. 그런데도 안철수는 기자들의 질문에 '하하하'라고 호탕하게 웃고 넘겨버렸다고 한다. 이런 자세가 과연 '정치 쇄신'을 하겠다는 신인정치인의 바른 자세인지를 그에게 묻고 싶다.

별 건 아니지만 '굳 입대'할 때 가족도 모르게 갔다고 했지만 부인은 서울역까지 배웅했다는 말로 '남편의 사소한 거짓말'을 만천하에 알리기도 했다. 이것도 사소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켜림칙하게 만든다. 더 우스운 건 이 거짓말이 초등학교와 중고교 교과서에 여전히 실려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에 이런 류의 스토리를 싣는다는 것도 문제

114 ■ 2012년 11월호



지만 그나마도 거짓 이야기였다는 건 교육상 너무 안 좋은 소재다.

아마 안철수 지지자들은 그럴 것이다. 겨우 그런 사소하고 시시한 문제들로 우리 안철수 후보를 괴롭히냐고, 기성 정치인들의 온갖 허물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자신을 속이고 국민도 속일 참인가

하지만 지금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들 중 유독 안철수만 '거짓말'이 계속 들통 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느끼는지 묻고 싶다. 안철수는 툭하면 기성정치인들을 꾸짖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자신에 대해선 의외로 관대한 것 같다.

안철수 후보의 이 '거짓말 시리즈'는 모두 자신이 쓴 '저서'들로 인해 밝혀진 것이다. 자승자박인 셈이다. 안철수 지지자들과 안철수 본인은 일련의 '안철수 식 거짓말들'이 관점에 따라선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는' 시시하고 사소한 '언행 불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별 것 아닌 걸로 안 후보를 음해하려는 수작이라고 외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우리 속담처럼 그런 사소한 거짓말들 속에 숨어 있는 이중적이고도 위선적인 마인드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사실 우리는 안철수라는 신인 정치인에 대해 아는 게 너무도 없다.

그렇기에 '인심 좋은' 호남 쪽에선 안철수를 거의 '메시아 스타일'로 여기는 기류도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지난 9월 '뒤늦은 출마 선언' 이후 안철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저런 헤프닝들은 실망스러울 뿐이다. 엊그제 '정책비전'이랍시고 발표한 것들을 보면 그 구태스러움에 하품이 나올 지경이다. 하나마나한, 고교생 정도면 다 생각할 수 있는 진부한 이야기들이다.

그런 와중에 '사실'과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 저렇게 하나 둘씩 거의 매일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건 예삿일이 아니라고 본다. '안철수 거짓말 스타일'은 과연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후보로서 존재 가능한 인물인지를 묻고 싶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 언제 또 무슨 거짓말을 할지 걱정스러울 지경이다.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어린 대학생들에게 '세계적 석학 대접'까지 받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생긴 자만감과 자신감으로 '구국의 영웅'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출마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는 일이다. 오늘 당장 안철수 후보는 거울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바라보라고 권하고 싶다. '자성의 시간'을 가져보라는 말이다.

지금 안철수 후보에겐 기성 정치인들을 향한 사자후를 토하는 것 보다는 먼저 자신의 허물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한 듯하다. 그리고 그동안 왜 이런 사소한 '안철수 식 거짓말들'을 해왔었는지를 국민 앞에 진실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경제풍월

경제풍월 ■ 115

【논객들의 세상보기】

시대정신 세대, 지역통합
여성대통령 혁신기대
경제풍월 논객 13년의 소신

첫 여성대통령, 그 자체가 정치적 혁신

새누리당의 박근혜 18대 대통령후보는 세대와 지역간의 화합과 통합의 시대정신에 맞춰 건곤일척의 대통령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박 후보는 대통합의 시대정신으로 정권을 창출, 첫 여성 대통령이 되는 것이 오늘의 정치적 혁신이며 사명이다.

대통합위원장과 공약위원장을 겸직한 박위원장은 대통합위원 18명중 과거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투사가 7명이고 호남인사가 5명이나 참여했다. 그 중에도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독립기념관 이사가 부위원장을 맡아 눈길을 끈다.

이는 박 후보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극복하고 국민총합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감동없는 야권의 단일화는 밀실야합

우리는 87년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직접 대통령선거로 전두환 군사정권을 끝내고 5명의 대통령을 선출했다.

보수정권으로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고 좌파정권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졌다.

87년 체제의 특징은 대체로 10년 주기로 우파정권과 좌파정권이 시계추처럼 정권을 평화적으로 주고받았다는 점이다.

이처럼 10년 주기의 좌우정권교체기를 적용하며, 이명박 정권 다음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설 차례다.

이런 판국에 통합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무당파의 안철수 후보가 단둘이 45분 동안 만나서 단일화를 선언한 것은 야합이며 정권 나눠먹기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두 후보는 11월 6일 서울 백범 기념관에서 배석자 없이 1시간 15분 동안 만나 후보등록 전에 단일 후보를 결정하고 정당혁신과 정권교체를 위한 새 정치공동선언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야권의 단일화 움직임은 여러 변수에 따라 첩첩 산중의 고비를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강력한 여론에 따라 야권의 단일화시동이 걸린 이상, 간단없이 계속될 것이다.

야권의 단일화 카드에 맞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개헌 '카드'를 직접 들고 나왔다. 과연 국민 여론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박근혜 후보는 51%대 49%의 박빙의 진검승부를 벌려야 할 힘겨운 판세로 보인다.

통합이 시대정신, 박 '다르크'를 뽑자

100% 국민 통합이 오늘의 시대정신이다.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의 국운을 가름할 중대한 선거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우리나라의 첫 '여자대통령'으로 뽑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과 '정치혁신'을 이룩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정과 부정부패를 끈질기게 들춰내어 민심을 MB정권의 심판론으로 몰아가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권 재창출을 가로막겠다는 전략이다.(후략)



논객들의 세상보기

시대정신 세대, 지역통합

여성대통령 혁신기대

경제풍월 논객 13년의 소신

글/宋孝彬 편집위원(한국일보 전 논설위원)

첫 여성대통령, 그 자체가 정치적 혁신

새누리당의 박근혜 18대 대통령후보는 세대와 지역간의 화합과 통합의 시대정신에 맞춰 건곤일척의 대통령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박 후보는 대통합의 시대정신으로 정권을 창출, 첫 여성 대통령이 되는 것이 오늘의 정치적 혁신이며 사명이다.

대통합위원장과 공약위원장을 겸직한 박 위원장은 대통합위원 18명중 과거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투사가 7명이고 호남인사가 5명이나 참여했다. 그 중에도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독립기념관 이사가 부위원장을 맡아 눈길을 끈다.

이는 박 후보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감동없는 야권의 단일화는 밀실야합

우리는 87년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직접 대통령선거로 전두환 군사정권을 끝내고 5명의 대통령을 선출했다.

보수정권으로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고 좌파정권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졌다.

87년 체제의 특징은 대체로 10년 주기로 우파정권과 좌파정권이 시계추처럼 정권을 평화적으로 주고받았다는 점이다.

이처럼 10년 주기의 좌우정권교체기를 적용하면, 이명박 정권 다음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설 차례다.

이런 판국에 통합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무당파의 안철수 후보가 단둘이 45분 동안 만나서 단일화를 선언한 것은 야합이며 정권 나눠먹기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두 후보는 11월 6일 서울 백범 기념관에서 배석자 없이 1시간 15분 동안 만나 후보등록 전에 단일 후보를 결정하고 정당혁신과 정권교체를 위한 새 정치공동선언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야권의 단일화 움직임은 여러 변수에 따라 첩첩 산중의 고비를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강력한 여론에 따라 야권의 단일화시동이 걸린 이상, 간단없이 계속될 것이다.

야권의 단일화 카드에 맞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개헌 '카드'를 직접 들고 나왔다. 과연 국민 여론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박근혜 후보는 51%대 49%의 박빙의 진검승부를 벌려야 할 힘겨운 판세로 보인다.

통합이 시대정신, 박 '다르크'를 뽑자

100% 국민 통합이 오늘의 시대정신이다.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 18대 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의 국운을 가름할 중대한 선거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위해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우리나라의 첫 '여자대통령'으로 뽑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과 '정치혁신'을 이룩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정과 부정부패를 끈질기게 들춰내어 민심을 MB정권의 심판론으로 몰아가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권 재창출을 가로막겠다는 전략이다.

어쨌거나 이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인세의 감면과 출자총액제한폐지, 금산분리완화 등 친 재벌정책을 단행, 대기업의 수출호조에 의해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제일 먼저 탈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재벌들이 수 조원의 적립금을 쌓아 놓고서도 하청업체에게 는 어음을 끊어주고,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불공정거래가 만연한 것은 정부가 그들의 몰염치한 탐욕을 방관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탄생을 확신하고 절필

1999년 8월 20일 경제풍월을 창간한 배병휴 사장의 권유로 경제풍월에 기고 한 이래, 13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이어진 좌파정권 10년의 비정을 비평해 왔다.

온 국민은 5백 만표의 압도적 승리로 탄생한 이명박 정권의 탄생에 환호했다. 하지만 곧 바로 MB 정권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파동에 의한 촛불시위로, 얼이 빠져 1년여를 허송세월했고 이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에 실망을 넘어 국민은 분노했다.

그러나 미국의 니먼부라더스의 금융부정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를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탈출한 것은 누가 뭐래도 MB정권의 큰 업적이다.

MB정권 5년에 이어 보수정치 5년의 박근혜 정권의 탄생은 시대정신이며 순리다.

박근혜 후보는 거문고 줄을 풀어 다시 매는 심정으로, 경장혁신 (更張革新),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워라. 대한민국이 동양의 등불로 우뚝 설 것 이라고 굳게 믿는다.

한국일보 35년의 기자생활과 경제풍월 10여년의 논객으로서의 언론인 생활을 끝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펜을 놓는다. 경제풍월

96 ▪ 2012년 12월호

경제풍월 ▪ 97

의 결 번 호	2012대선45(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서울신문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이 철 휘
심의대상기사	서울신문 2012년 11월 29일자 5면 「가계부채 해법, 朴 고통분담 지원책 초점·文 제도 개편에 무게」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주요 예비후보자들의 정책 및 공약에 대해 비교·평가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후보자별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고 유권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 제11조(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가계부채 해법, 朴 고통분담 지원책 초점·文 제도 개편에 무게

【대선 정책 검증】 (2) 가계부채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강력한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 폭발력은 '외환위기 사태' 이상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해 18대 대선 공약 중 우선 순위 첫 번째와 세 번째로 각각 올려놓았다. 그러나 심각한 상황 판단과 달리 유권자의 '표'(票)를 의식한 탓에 가계빚 대책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공약을 실현 가능성과 참신성, 정책 효과로 세분화해 평가했을 때 문 후보 보다 박 후보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줬다. 박 후보는 고통을 덜어주는 지원책에 초점을 맞춘 반면 문 후보는 제도 개편에 무게를 뒀다는 측면이 고려된 듯하다. 박 후보는 '반쪽 대책'이기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고, 문 후보는 여야 합의로 입법화가 결정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 리스크(위험)가 있다는 의미다. 박 후보는 실현 가능성에서 10점 만점에 7.3점을, 문 후보는 5.4점을 받았다. 참신성에서는 박 후보가 6.0점을, 문 후보가 5.6점을 받아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정책 효과에서는 박 후보가 6.0점을, 문 후보가 5.4점을 얻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공약의 문제점으로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을 외면하고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을 꼽았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빚을 갚아야 하는데 '빚진 자'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표를 의식한 행보라고 꼬집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28일 "과도한 기금 조성이나 무리한 법 개정, 일방적인 채무자 지원책은 시장 기능을 교란하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더구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확산시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실현 가능성 朴 7.3 vs 文 5.4

'포퓰리즘' 공약 많고, 가계빚 근본대책 없어
朴 '18조 국민행복기금',
文 '피에타 3법' 실효성 커

●**실현 가능성** "우리나라의 가계빚 문제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증가 속도가 빠르며, 대출 구조가 구조적으로 취약(변동금리, 단기거치식)하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본질적 대책은 가계부채를 축소하고 현재의 대출 구조를 보다 안전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그러나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 유권자의 '표'와 대책의 실효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듯하다. 그렇다 보니 대책 중 실현 가능한 내용과 포퓰리즘적인 내용이 서로 뒤엉켜 있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 측이 제시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은 충분히 가능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 상환의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은행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므로 재정 투입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또 신용평가를 할 때 결과를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더 낮게 나왔다. 이자제한법과 공정대출법, 임의 경매금지, 서민 대출시장 육성 등은 금융시장의 논리상 맞지 않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오히려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사채시장으로 내몰 가능성까지 있다고 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자율의 상한선을 25%로 내리고, 금리 10%대의 서민 대출시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구체성은 있지만 시장 논리에 어긋나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금지는 민간 부문의 금융 관행을 크게 바꾸는 것이어서 금융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자제한법과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 3법' 도입은 제도를 바꾸는 것인 만큼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협조해 입법화를 추진한다면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달리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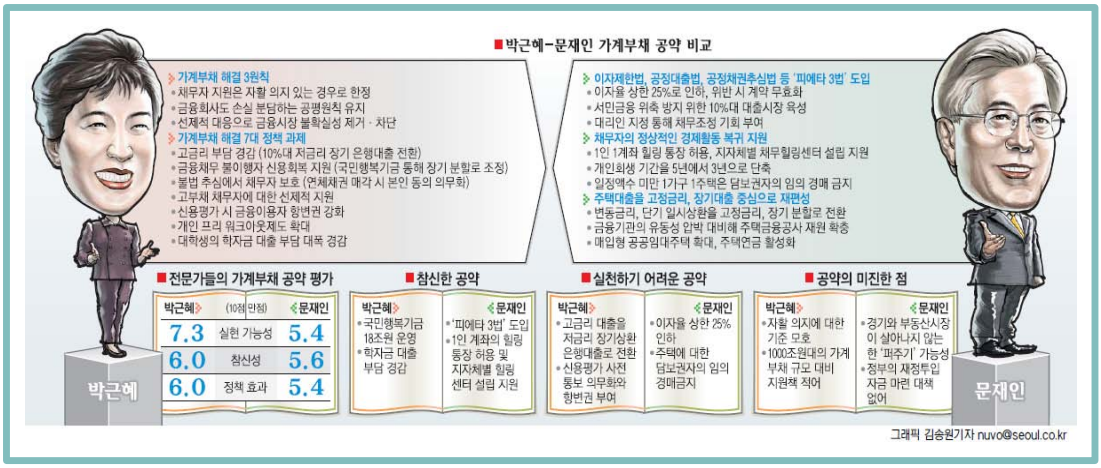
참신성 朴 6.0 vs 文 5.6

기존 정책 확대에 불과
美 등 외국정책 짜깁기도

●**참신성** 참신성에서는 두 후보 모두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 정책의 확대와 미국 등 외국 정책의 짜깁기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 후보가 내놓은 국민행복기금 18조원 조성과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은 가계와 청년들의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교수는 "고부채 채무자에 대한 상환 기간과 금리 조정, 대학생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 매입 등은 기존 정책에서 더 나아간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김진욱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것은 참신한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의 1인 1계좌 '힐링통장'과 지자체별 '힐링센터' 설립은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하 교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참신성이 있다."면서 "이런 제도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책 효과 朴 6.0 vs 文 5.4

"효과 커" "언발에 오줌누기" 검증단 평가 엇갈려, 朴 '자활의지' 기준 모호, 文 '퍼주기 공약' 우려

●**정책 효과** 박 후보 공약의 정책 효과는 다소 엇갈렸다.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과 "100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감안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해석도 있다.

김 교수는 "박 후보의 대책대로 시행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89%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특히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총부채 상환 비율이 높은 채무자, 저소득 자영업자 등을 위한 정책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 교수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규모에 비해 지원책이 작아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 공약의 경우도 전문가 사이에 온도차가 컸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효과보다는 금융시장의 역행으로 서민들을 고리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 위험이 있다."고 예상한 반면 박 교수는 "제도는 바꾸는 것이 어렵지 바꾼다면 박 후보의 대책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면서 "'피에타 3법'은 금융시장의 틀을 바꾸는 것인 만큼 실시된다면 은행들이 장사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후보 공약의 미진한 점으로는 자활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해결책과 자활 의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꼽았다. 문 후보 공약의 경우 퍼주기 가능성과 재원 조달, 금융시장의 역행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재원 마련의 실현 가능성과 금융 논리 등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하 교수는 "의도는 좋지만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소화해 주는 등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해법, 朴 고통분담 지원책 초점·文 제도 개편에 무게

대선 정책검증 〈2〉 가계부채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강력한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 폭발력은 '외환위기 사태' 이상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해 18대 대선 공약 중 우선 순위 첫 번째와 세 번째로 각각 올려놓았다. 그러나 심각한 상황 판단과 달리 유권자의 '표'(票)를 의식한 탓에 가계빚 대책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공약을 실현 가능성과 참신성, 정책 효과로 세분화해 평가했을 때 문 후보 보다 박 후보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줬다. 박 후보는 고통을 덜어주는 지원책에 초점을 맞춘 반면 문 후보는 제도 개편에 무게를 뒀다는 측면이 고려된 듯하다. 박 후보는 '반쪽 대책'이기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고 문 후보는 여야 합의로 입법화가 결정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 리스크(위험)가 있다는 의미다. 박 후보는 실현 가능성에서 10명 만점에 7.3점을 문 후보는 5.4점을 받았다. 참신성에서는 박 후보가 6.0점을, 문 후보가 5.6점을 받아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정책 효과에서는 박 후보가 6.0점을, 문 후보가 5.6점을 받았다. 점수 차이가 0.4점을 넘으면 '유의미한 차이'로 본다.

실현 가능성 朴 7.3 vs 文 5.4

'포퓰리즘' 공약 많고
가계빚 근본대책 없어
朴 '18조 국민행복기금'
文 '피예타 3법' 실효성 커

참신성 朴 6.0 vs 文 5.6

기존 정책 확대에 불과
美등 외국정책 짜깁기도

정책 효과 朴 6.0 vs 文 5.4

"효과 커" "언발에 오줌누기"
검증단 평가 엇갈려
朴 '자활 의지' 기준 모호
文 '퍼주기 공약' 우려

◈**실현 가능성** "우리나라의 가계빚 문제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증가 속도가 빠르며, 대출 구조가 구조적으로 취약(변동금리, 단기거치식)하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본질적 대책은 가계부채를 축소하고 현재의 대출 구조를 보다 안전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그러나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 유권자의 '표'와 대책의 실효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듯하다. 그렇다 보니 대책 중 실현 가능한 내용과 포퓰리즘적인 내용이 서로 뒤엉켜 있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 측이 제시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은 충분히 가능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 상환의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은행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므로 재정 투입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또 신용 평가를 할 때 결과를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더 낮게 나왔다. 이자제한법과 공정대출법, 임의 경매금지, 서민 대출시장 육성 등은 금융시장의 논리상 맞지 않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오히려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사채시장으로 내몰 가능성까지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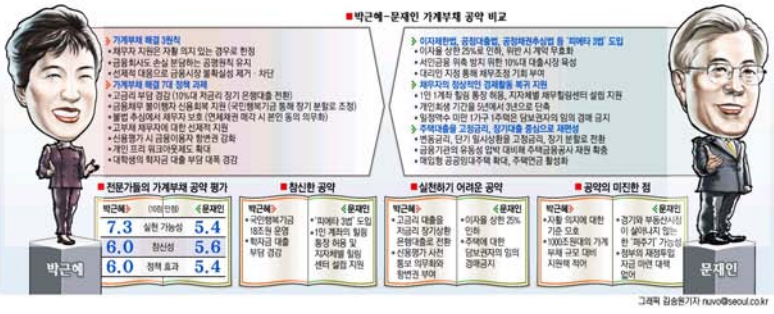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자율의 상한선을 25%로 내리고, 금리 10%대의 서민 대출시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구체성은 없지만 시장 논리에 어긋나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금지는 민간 부분의 금융 관행을 크게 바꾸는 것이어서 금융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자제한법과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예타 3법' 도입은 제도를 바꾸는 것인 만큼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협조해 입법화를 추진한다면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검증단 명단

김진욱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박근혜-문재인 가계부채 공약 비교



그래픽 김송원기자 nuvo@seoul.co.kr

◈**참신성** 참신성에서는 두 후보 모두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 정책의 확대와 미국 등 외국 정책의 짜깁기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 후보가 내놓은 국민행복기금 18조원 조성과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은 가계와 청년층의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교수는 "고부채 채무자에 대한 상환 기간과 금리 조정, 대학생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 매입 등은 기존 정책에서 더 나아간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김진욱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것은 참신한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의 1인 1계좌 '힐링통장'과 지자체별 '힐링센터' 설립은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하 교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참신성이 없다."면서 "이런 제도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책 효과** 박 후보 공약의 정책 효과는 다소 엇갈렸다.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과 "100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감안하면 연 발에 오줌 누기"라는 해석도 있다.

김 교수는 "박 후보의 대책대로 시행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80%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특히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총부채 상환 비율이 높은 채무자, 저소득 자영업자 등을 위한 정책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 교수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규모에 비해 지원책이 작아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 공약의 경우도 전문가 사이에 온도차가 컸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효과보다는 금융시장의 여명으로 서민들을 고리의 볼썸 사채시장으로 내몰 위험이 있다."고 예상한 반면 박 교수는 "제도는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꾼다면 박 후보의 대책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면서 "'피예타 3법'은 금융시장의 틀을 바꾸는 것인 만큼 실시된다면 은행들이 장사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후보 공약의 미진한 점으로는 자활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해결책과 자활 의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꼽았다. 문 후보 공약의 경우 과주기 가능성과 재원 조달, 금융시장의 여명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재원 마련의 실현 가능성과 금융 논리 등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하 교수는 "의도는 좋지만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소화해 주는 등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의 결 번 호	2012대선48(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여성신문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69 연남동 567-11 IK빌딩 5층 대표이사 김 효 선
심의대상기사	여성신문 제1214호(2012년 12월 1일~7일) 1면「평균 'C' 학점… 여성공약 다시 써라」, 6면「"후보들의 여성정책 철학을 볼 수 없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주요 후보자들의 정책 및 공약에 대해 비교·평가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후보자별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고 유권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 제11조(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여성정책공약평가단 대선 후보 평가 결과

평균 'C' 학점… 여성공약 다시 써라

14인 각계 전문가 일·가정 양립, 여성인권 등 5개 분야 공약 분석

박근혜 부끄러운 '준비된 여성 대통령' 구호
문재인 시간계획성·참신성 다듬어야
이정희 진보 가치 무색하게 낙제점

각 당 대선 후보가 공개한 여성 관련 공약을 살펴본 결과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누가 선출되든 차기 정부 여성정책 약화가 우려된다. 이는 여성신문이 이번 대선에 발족한 여성정책 공약평가단(단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의 각계 전문가 14인이 여성공약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여성정책공약평가단은 정당별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대표성 ▲여성인권(복지) ▲성폭력 예방 5개 분야 세부 공약을 살펴본 후 이를 ▲적합성 ▲실현 가능성 ▲일관성 ▲시간 계획성 ▲참신성 등 5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했다. 0~10점 사이에서 0점은 '아주 미흡', 5점은 '보통', 10점은 '아주 우수'를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겼다.

분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총평 결과, 박근혜 후보(5.36점)와 문재인 후보(6.43점)는 대체적으로 '보통' 수준을 유지했고, 이정희 후보(3.36점)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특히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 후보의 경우, 총체적 공약 평가 7개 분야에서 모두 문재인 후보보다 낮았다. 더구나 5개 세부 공약에서도 모두 문 후보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중 수준 높고 내실 있는 여성공약을 다시 내놓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박 후보는 특히 여성 일자리 창출(박근혜

4.92점, 문재인 6.69점)과 여성인권(박근혜 4.92점, 문재인 6.92점)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각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 평가일 뿐 총체적으로 시간 계획성과 참신성 측면에서 보통 이하의 점수(각 4.21점, 4.86점)를 받아 이 부분을 좀 더 다듬고 개선하지 않으면 엇비슷한 공약을 가지고 급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이정희 후보는 모든 분야에서 주로 2~3점대를 기록하며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아 진보 기치를 내걸면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 가치에 무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여성 일자리 창출 분야에선 비정규직 탈출,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원칙론적 선언에 그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공약 근거가 부족, 1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단 전문 위원들이 여성공약 평가 시 가장 중요한 것(공약의 상대적 중요성)으로 꼽은 것은 '실현 가능성'과 '적합성'이었다. '실현 가능성'에서 박 후보는 4.86점, 문 후보는 5.07점, 이 후보는 3.14점을, 적합성에서 박 후보는 5.07점, 문 후보는 6.43점, 이 후보는 2.79점을 받았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시간 계획성(Time Table)에서는 박근혜 3.14점, 문재인 4.21점, 이정희 2.21점으로 세 후보 모두 특히 취약했다.

평가단 단장 김형준 교수는 "각 후보들의 기대 이하의 여성정책공약 점수는 대선 후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 여성정책이 유야무야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성정책공약평가단엔 김 교수를 비롯해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협동과정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융합연구실장,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이기호 한신대 평화와공공성센터 소장, 이명선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특임교수,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실장, 최성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홍승아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1588-2001 KOREAN AIR

여성신문

24 womennews.co.kr

제1214호 2012년 12월 1일~12월 7일

서울우유 The Original Milk

여성정책공약평가단 대선 후보 평가 결과

평균 'C' 학점… 여성공약 다시 써라

14인 각계 전문가 일 · 가정 양립, 여성인권 등 5개 분야 공약 분석

박근혜 부끄러운 '준비된 여성 대통령' 구호

문재인 시간계획성 · 참신성 다듬어야

이정희 진보 가치 무색하게 낙제점

후보별 여성정책공약 성적표

여성신문 여성정책공약평가단

“후보들의 여성정책 철학을 볼 수 없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공개한 여성 관련 공약 평가에 참여한 여성신문 여성정책공약단 14명 위원들의 공통 의견은 전반적으로 공약들이 대동소이해 후보 간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일 · 가정 양립’ 관점에서 출산과 보육에 집중돼 분야별 공약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각 주요 공약에 대한 세부 계획이 분명하지 않아 공약의 구체성이 크게 떨어지고, 공약 이행을 위한 시간 계획성이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참여 평가 위원들은 “후보별 여성정책 철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은 “기존 법과 제도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정책 결정 과정상의 변화와 개혁을 담보할 수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가 없으면 실현 가능성은 기대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기호 한신대 평화와공공성센터 소장도 “전체적 비전과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큰 틀의 정책, 또 이를 구현할 세부 정책이 가지런히 정리되지 않아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연혁 스웨덴 남스톡홀름대 교수(정치학)는 “세 후보가 5년 앞까지도 생각하는 성평등 사회 국가 비전과 경제의 역동성, 그리고 저출산 · 고령화를 포괄적으로 고민하는 가족정책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18대 대통령은 성평등 가치 실현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정책 전반에서 성주류화 정책을 추동해낼 수 있는 조정 및 평가 권한을 가진 전담 기구 설립과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을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채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각 후보들의 공약상 여성문제를 ‘여성정책’으로만 게토화해서는 풀 수 없다는 문제의식은 평가 위원들에게서 뚜렷이 드러난다.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융합연구실장은 “여성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정책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여성에 대한 시혜나 특혜로 비칠 경우 정책 추진의 현실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임윤경 연세대 교수(문화협동과정)는 “여성 삶의 변화를 제도 변화에서만 찾으려 한다”며 “여성 삶의 주기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 임금노동 참여에서 젠더(gender) 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한다”고 꼬집는다. 그는 특히 여성문제와 관련해 남성의 문제도 고찰해보는 통합적 사고가 전무함을 아쉬워했다.

후보별 세부 공약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박근혜 후보는 ‘일 · 가정 양립’ 분야에서 출산 · 보육료 및 인프라 지원, 근로시간 단축, 방과 후 교실 운영 확대 등 포괄적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성 일자리’ 공약은 적극적 조치의 내용이 여성 관리직에만 집중돼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일 · 가정 양립’ 정책이 보육정책에 집중돼 있는 제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여성 일자리’ 공약은 성평등고용촉진 5개년의 시간 계획 속에서 여성고용률 확대를 도모하고, 비정규직 축소와 처우 개선에 주력하는 균형적 성격을 띤다”고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명선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특임교수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 “여성정책을 성평등 · 여성평등의 관점이 아니라 여성지원 혹은 여성복지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려 한다”는 일갈을, 문재인 후보에 대해선 “참여정부에서 수행해온 여성정책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이번 후보 진영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내용은 함량 미달”이라고 비판했

다. 이정희 후보에 대해선 “진보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이 제안되고 있지 않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실장은 박 후보는 출산장려정책 관련 공약이, 문 후보는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관련 공약이 상대적으로 눈에 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의 경우 매우 중요한 여성정책 분야임에도 공약을 통해 비전을 엿보기 어려웠다”고 난색을 표했다.

일 · 가정 양립을 위해 모든 후보들이 집중하고 있는 보육정책에 관해 평가위원들은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최성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원 측면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정책은 일 · 가정 양립정책과 보육정책”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현행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국공립 확대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식별하지 않고, 무조건 국공립 시설 30% 확대 등 재원 투입으로 해결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보육재정의 현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은영 충북대 교수(아동복지학과)는 일 · 가정 양립 분야에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공공책임 강화와 가정책임 강화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구조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한 정책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돼 실현성 측면에서 일정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박근혜 후보의 출산휴가 3개월 중 1개월을 ‘아빠의 달’로 도입하겠다는 안은 여성의 출산 전후 보호와 회복이 필요한 시기를 오히려 줄이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내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 아동수당제도는 초기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원 마련과 실행 계획이 보다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두 후보 모두 일 · 가정 양립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시장의 변화, 특히 노동시간의 변화, 가족시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관련 공약에 대해 표창원 경찰대 교수(행정학과)는 “모든 후보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취약 여성 ·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예방 · 대응조치, 그리고 안전환경 조성문제”라며 “후보마다 온라인상의 음란물에 대한 제재를 구체화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안전환경 디자인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신문 여성정책공약평가단

"후보들의 여성정책 철학을 볼 수 없다"


김은경 소장
"여성 대표성 확대 없이 여성정책 변혁 불가능"


이기호 소장
"전체 비전 속에 통합적 큰 틀의 정책 비전돼야"


최연혁 교수
"5년 앞까지 성평등 비전과 정책 수립해야"


김은주 소장
"남녀 동수 내각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해야"


류장아 실장
"여성 특혜로 비치는 여성정책은 곤란해"


나임윤경 교수
"여성문제와 남성문제 함께 고민한 정책안 보여"


송태수 교수
"여성 일자리 공약, 성 평등 고용 촉진 면에서 멀고가야"


이명선 교수
"온종일 초등 돌봄교실이 일 · 가정 양립 지원핵인가"


정형옥 실장
"여성 일자리 공약, 중요도에 비해 비전 보기 어려워"


최성은 연구위원
"보육문제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최은영 교수
"일 · 가정 양립 공약, 공공책임과 가정책임이 혼선 빚고 있어"


홍승아 연구위원
"일 · 가정 양립에 노동시간 변화, 가족 시간 반영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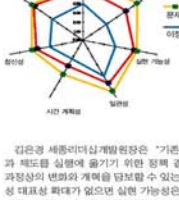

표창원 교수
"(성폭력에 대해) 취약 여성 · 아동 보호, 잠재적 가해자 대응 간과해"

후보별 세부 여성정책공약 평가

대선후보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대표성	여성인권복지	성폭력 예방
박근혜	5.77	4.92	5.15	4.92	4.84
문재인	6.54	6.69	5.85	6.92	5.23
이정희	3.31	0.92	3.54	3.00	3.85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공개한 여성 관련 공약 평가에 참여한 여성신문 여성정책공약단 14명 위원들의 공통 의견은 전반적으로 공약들이 대동소이해 후보 간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일 · 가정 양립' 관점에서 출산과 보육에 집중해 분야별 공약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각 주요 공약에 대한 세부 계획이 분명하지 않아 공약의 구체성이 크게 떨어지고, 공약 이행을 위한 시간 계획성이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참여 평가 위원들은 "후보별 여성정책 철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프1> 후보별 여성정책공약 평가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은 "기존 법과 제도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정책 결정 과정상의 변화와 개혁을 담보할 수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가 없으면 실현 가능성은 기대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기호 한신대 평화와공공성센터 소장도 "전체적 비전과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큰 틀의 정책, 또 이를 구현할 세부 정책이 가지런히 정리되지 않아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연혁 스탠더넌 남스쿠톨릭대 교수(정치학)는 "세 후보가 5년 앞까지도 생각하는 성평등 사회 국가 비전과 경제의 여동성, 그리고 저출산 · 고령화를 포괄적으로 고민하는 가족정책에 적극적으로 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18대 대통령은 성평등 가치 실현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정책 전반에서 성주류화 정책을 추동해낼 수 있는 조정 및 평가 권한을 가진 전담 기구 설립과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을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제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각 후보들의 공약상 여성문제를 '여성정책' 으로만 계보화해서는 큼 수 없다는 분제의식은 평가 위원들에게서 뚜렷이 드러난다.

류장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융합연구실장은 "여성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정책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여성에 대한 시혜나 특혜로 비칠 경우 정책 추진의 현실 가능성이 즐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임윤경 연세대 교수(문화콘텐츠)도 "여성 삶의 변화를 제도 변화에서만 찾으려 한다"며 "여성 삶의 주기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 임금노동 참여에서 젠더(gender) 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여성문제와 관련해 남성의 문제도 고함해보는 통합적 사고가 전무함을 아쉬워했다.

후보별 세부 공약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박근혜 후보는 '일 · 가정 양립' 분야에서 출산 · 보육료 및 인프라 지원, 근로시간 단축, 방과 후 교실 운영 확대 등 포괄적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성 일자리' 공약은 적극적 조치의 내용이 여성 관리자에만 집중돼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일 · 가정 양립' 정책이 보육정책에 집중돼 있는 제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여성 일자리' 공약은 성평등고용촉진 5개년의 시간 계획 속에서 여성고용률 확대를 도모하고, 비정규직 축소와 처우 개선에 주력하는 균형적 성격을 띤다"고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명선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책임교수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 "여성정책을 성평등 · 여성평등의 관점이 아니라 여성지원 혹은 여성복지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려 한다"는 입장을, 문재인 후보에 대해선 "참여정부에서 수행해온 여성정책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안한다면, 이번 후보 진영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내용은 한참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희 후보에 대해선 "진보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이 제안되고 있지 않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실장은 박 후보는 출산장려정책 관련 공약이, 문 후보는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관련 공약이 상대적으로 눈에 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의 경우 매우 중요한 여성정책 분야임에도 공약을 통해 비전을 엿보기 어려웠다"고 난색을 표했다.

일 · 가정 양립을 위해 모든 후보들이 집중하고 있는 보육정책에 관해 평가위원들은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래프3> 공약의 상대적 중요성



*일관성과 참신성은 모두 0.0%

최성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원 측면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정책은 일 · 가정 양립형 보육정책"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현행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국공립 확대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식별하지 않고, 무조건 국공립 시설 30% 확대 등 재원 투입으로 해결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보육재정의 현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은영 충북대 교수(아동복지학과)는 일 · 가정 양립 분야에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공공책임 강화와 가정책임 강화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구조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한 정책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돼 실현성 측면에서 일정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박근혜 후보의 출산휴가 3개월 중 1개월을 '아빠의 달'로 도입하겠다는 안은 여성의 출산 전후 보호와 회복이 필요한 시기를 오히려 줄이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내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 아동수당제도는 초기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원 마련과 실행 계획이 보다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두 후보 모두 일 · 가정 양립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시장의 변화, 특히 노동시간의 변화, 가족 시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관련 공약에 대해 표창원 경찰대 교수(행정학과)는 "모든 후보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취약 여성 ·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예방 · 대응조치, 그리고 안전환경 조성문제"라며 "후보마다 온라인상의 음란물에 대한 제재를 구체화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안전환경 디자인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경 편집위원 pleun@womannews.co.kr

<그래프2> 후보별 세부 여성정책공약 평가



인터뷰 김영준 여성정책공약평가단 단장

"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TV토론에서 보다 진전된 여성공약 보여줘야



"이번 작업은 어느 후보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20여 일 앞으로 대선이 바짝 다가왔지만 각 후보가 짧은 시간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여성정책 공약 개발에 분발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가급계는 12월 시작될 세 차례 보론의 중 마지막 남인 16일 여성분야 보론 때까지라도 여성공약의 허술한 부분을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김영준(사진) 명지대 교수는 이번 평가 작업의 궁극적 목표가 정책유도라는 데 있음을 분명히했다. 그는 이번에 여성신문 여성정책공약평가단의 단장을 맡아 평가작업을 총괄했다.

—이번 평가의 의미를 짐는다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유권자가 각 후보의 생각과 공약을 인지해야 하고, 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여성정책'에 집중한 이번 평가는 여성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평가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각 후보의 여성정책이 생각보다 훨씬 미흡했다. 국민 대통합, 경제 민주화, 복지도 중요한 시대정신이지만 성평등 국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공약 평가 결과 각 후보의 점수는 평균 이하였다. 10점 만점 중 평균 7.8점은 돼야 B마도 주는데, 모든 후보가 그 이하에서 기웃해야 C, D따수 안 된다. 특히 공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 계획성 측면에선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다 낙제점이다."

—후보별 분석에서 두드러진 점은.

"박근혜 후보의 경우,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말하지만 공약 내용상으론 크게 못 미친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 호응도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문재인 후보는 민주통합당이 여성정책 면에서 상대적으로 앞서 왔기에 박 후보보다 약간 앞서지만 어디까지나 표면상 우위일 뿐이다. 한층 분발해야 한다. 이정희 후보는 진보 가치의 핵심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데 그에 비해 공약 내용은 너무 초라하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당부하고 싶은 것은.

"후보들마다 강조하는 '새 정치'의 핵심 중 하나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그를 통한 여성 삶의 질 제고다. 후보들은 구호만으론 여성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여성공약을 새로 쓰라고 권하고 싶다. 그것도 공법위하고 폭넓고 깊이 있게 감동을 주면서. 아직도 TV토론 때까지는 기회가 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여성 유권자들도 후보들의 공약 행태에 분노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누가 성평등 국가를 향한 열정과 의지가 강하느냐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경 편집위원

대선 후보별 '여성 5개 분야 세부 공약 주요 내용

	대선 후보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5개 분야 공약 주요 내용	일과 가정의 양립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대, 아빠의 달 도입, 셋째아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임신기간 중 부분 근로시간 단축 제 도입, 가족친화 업체 1000곳의 근로자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전액을 세액 무료로 일 10시까지 대동학교 운영일 학교 운영 및 방과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등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국공립 어린이집 40% · 아동 이동 50% 확대, 사설 미이용 아동 대상 방문 돌봄서비스 제공, 아버지 휴가 주간연계도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대상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2배 인상, 전일 가족이벤트를 열자 대상 'Care Free Day' 제 도입해 연1주일 돌봄서비스 · 문화 바우처 제공 등	(육아정책) 어린이집 보육 지원 위해중학교 30분씩 일찍 조정하고 7시간 노동에 8시간 임금제계 실현, 아픈 아이 돌보는 특별어린이집 보건소와 연계해 돌아다 하나씩 설치,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에루 전면 확대 등
	여성 일자리 창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여성고용 상향 조정으로) 여성 관리자 고용 시정면고 대상 업종 내 평균 60% 이하에서 70% 이하 기업까지 확대, 여성관리직 비율 높은 기업에 정부 조달 우선권 등 인센티브 제공,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새로일하기센터' 에년 30개 확대 등	여성고용률 53.1% 2017년까지 OECD 국가 평균 수준 60.5% 이상 확대, 성평등 고용촉진 5개년 계획 추진, 여성 비정규직 50% 축소, 시간나비스 정아 30인 개 일 가사 정출, 30인 가사노동자 사회보험 지원, 저소득 여성근로자 위해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최저 임금 130% 이하로 확대 등	여성 일자리 목표 공약 없음
	여성인권 (복지)	성평등기본법 제정, 성목력 · 학교폭력 · 가정폭력범 ·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등	성차별금지법 제정, 여성발전기본법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16개 시 · 도에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성평등정책센터 설치, 가정폭력 가해자 전담재판부우선제 도입, 폭력방지 3개년 국가행동계획 수립, 성범죄피해자 구조기금 설치, 여성노인 대상 인권전담제 기반 마련 등	여성발전기본법 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 등
	여성 대표성	중앙정부 4급, 지방정부 5급 여성 임용목표를 채설정, 정당 공천심사위에 여성위원 비율 40% 의무화, 여군수 · 여교장 비율 제고 위한 제한 등	(지역구) 국회의원 30% 여성 공천제, 대통합의 정권 입법 및 각종 위원회 30% 이상 여성 임명,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 폐지 후 정원 20%를 정당투표 통한 여성 비례대표로 할당 등	전사회 여성할당제 의무화 추진 및 정책 여성 참여 보장 등
	성폭력 예방	성폭력범죄 사형 포함 양벌 조치, 성범죄전담반 설치 등	직장 내 성희롱 확인 폭행에 대해 피해자 긴급보호권 법제화, 성희롱 원따도 신업 재해로 인정 등	성폭력 법치공소시효 폐지,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 강화 등

의 결 번 호	2012대선49(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씨비에스노컷뉴스(데일리노컷뉴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18층 기독교방송회관 대표이사 이 정 희
심의대상기사	데일리노컷뉴스 2012년 12월 3일 6면 「유력 대선주자 여성정책공약 평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주요 후보자들의 정책 및 공약에 대해 비교 · 평가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후보자별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고 유권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2(정책 ·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 제11조(정책 ·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유력 대선주자 여성정책공약 평가

여성정책 공약 평가 文 6.43점 朴 앞질러

대선후보 여성정책공약 평가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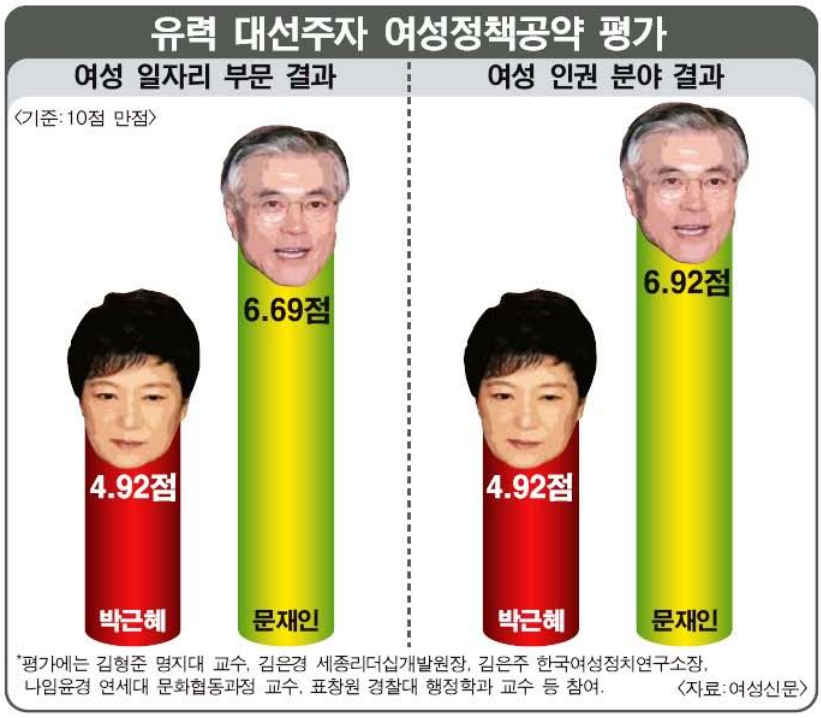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정책공약평가단이 대선 후보의 여성정책공약을 평가한 결과 문재인 후보 6.43점, 박근혜 후보 5.36점으로 문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섰다고 여성신문사가 2일 전했다.

이번 평가는 일·가정 양립,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대표성, 여성 인권(복지), 성폭력 예방의 5개 분야 공약에 대한 적합성, 실현 가능성, 일관성, 시간 계획성, 참신성 등 5개 항목에 걸쳐 10점 만점 기준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여성 일자리 부문에서 문 후보는 6.69점을 받아 박 후보(4.92점)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여성 인권 분야에서 6.92점으로 박 후보(4.92점)를 제쳤다.

이번 평가에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를 비롯해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협동과정 교수,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그래픽=윤지홍 기자 jaguar525@nocutnews.co.kr

여성정책 공약 평가 文 6.43점 朴 앞질러

대선후보 여성정책공약 평가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정책공약평가단이 대선 후보의 여성정책공약을 평가한 결과 문재인 후보 6.43점, 박근혜 후보 5.36점으로 문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섰다고 여성신문사가 2일 전했다.

이번 평가는 일·가정 양립,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대표성, 여성 인권(복지), 성폭력 예방의 5개 분야 공약에 대한 적합성, 실현 가능성, 일관성, 시간 계획성, 참신성 등 5개 항목에 걸쳐 10점 만점 기준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여성 일자리 부문에서 문 후보는 6.69점을 받아 박 후보(4.92점)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여성 인권 분야에서 6.92점으로 박 후보(4.92점)를 제쳤다.

이번 평가에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를 비롯해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협동과정 교수,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송강섭 기자 ericsong@nocutnews.co.kr

의 결 번 호	2012대선50(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대표이사 송 영 승
심의대상기사	경향신문 2012년 12월 4일 1면 「경향 · 경실련 13대 대선의제 공약 평가」, 6면 「선택 D-15 경향 · 경실련 '공약 평가' ①청년 실업 해결」, 5일자 1면 「경향 · 경실련 13대 대선의제 공약 평가」, 5면 「선택 D-14 경향 · 경실련 '공약 평가' ②고령화 사회 대책」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주요 후보자들의 정책 및 공약에 대해 비교 · 평가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후보자별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고 유권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2(정책 ·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 제11조(정책 ·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경향 · 경실련 공약 평가】

청년실업 해결 공약 문이 박보다 구체적

경향신문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평가해 그 결과를 4일부터 게재한다. 공약 평가는 경향신문이 선정한 13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구체성 · 개혁성 · 적합성 항목으로 나눠 이뤄진다.

첫 번째 의제인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 문 후보는 3가지 항목에서 모두 박 후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약의 개혁성 항목에서는 박 후보가 3.0점, 문 후보가 3.5점으로 비슷하게 평가됐다. 그러나 공약의 완결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성 항목에서 박 후보는 5점 만점에 2.5점, 문 후보는 4.0점을 받았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적실성 항목에서도 박 후보는 2.5점으로 문 후보의 3.7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실련 김한기 경제정책팀장은 "박 후보의 공약은 선언적 측면이 강하고 세부 계획 제시가 미흡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면서 "문 후보는 청년고용할당제와 고용분담금제 도입 등 특정 제도의 세부적 항목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에서 앞섰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박 후보에 비해 문 후보 공약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성격이 강해 적실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향·경실련 13대 대선의제 공약 평가

청년실업 해결 공약 문이 박보다 구체적

경향신문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평가해 그 결과를 4일부터 게재한다. 공약 평가는 경향신문이 선정한 13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구체성·개혁성·적합성 항목으로 나눠 이뤄진다. | 관련기사 6면

첫 번째 의제인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 문 후보는 3가지 항목에서 모두 박 후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약의 개혁성 항목에서는 박 후보가 3.0점, 문 후보가 3.5점으로 비슷하게 평가됐다. 그러나 공약의 완결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성 항목에서 박 후보는 5점 만점에 2.5점, 문 후보는 4.0점을 받았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적실성 항목에서도 박 후보는 2.5점으로 문 후보의 3.7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선 후보 청년실업 공약 평가 결과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문재인
구체성	2.5	4.0
개혁성	3.0	3.5
적실성	2.5	3.7

*점수는 5점 척도

경실련 김한기 경제정책팀장은 "박 후보의 공약은 선언적 측면이 강하고 세부 계획 제시가 미흡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면서 "문 후보는 청년고용할당제와 고용분담금제 도입 등 특정 제도의 세부적 항목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에서 앞섰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박 후보에 비해 문 후보 공약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성격이 강해 적실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

【경향 · 경실련 공약 평가】
① 청년 실업 해결

창업 · 융합인재 육성은 개혁적 실현 구체화 방법 없고 현실성 부족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비전에 비해 이를 구체화할 방법론이나 현실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후보는 대학의 창업기지화를 대표로 하는 창업국가 코리아,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구축,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한 'K-Move',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2만명 양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공약 자체는 개혁적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자리 찾기 강화, 이스라엘 사례를 벤치마킹한 해외 벤처캐피털 유치 등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개혁적 항목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공약이 지향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 제시가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 평가였다. 대체로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개별 공약들을 실행할 구체적 방법 등의 제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광택 국민대 교수는 대학을 창업기지화해 자연과학과 인문 · 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아우르는 융합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공약을 구체성이 부족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 교수는 또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공약 중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초기 창업단계의 실패를 용인하는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면서 구체적 방법론 제시는 없다"고 평가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창업 관련 공약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력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 채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공약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책적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방법론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혁승 연세대 교수는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나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구체적인 것들도 다수 있지만 대학의 창업기지화 등 구호성에 그칠 수 있는 것들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공약이 현실에서 얼마나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따지는 적실성의 한계로 이어졌다. 이 교수는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현지 정보를 이용해 청년의 해외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공약은 적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장년 인재은행, 재능기부, 전문가 멘토 구성 등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스펙을 초월한 청년취업센터 설립,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을 선발하는 제도 등은 현실적 정책환경과 부합하기 어렵다"면서 적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청년실업 대책으로 창업 활성화를 내놓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뜩이나 경기가 불투명해 기존의 중소기업도 문을 닫는 판에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으로 창업과 벤처를 제시한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창업을 해도 극소수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현재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은 채용시장에서 총수요가 부족하다는 데 있는 만큼 창업국가 코리아, 'K-Move' 등은 방향성 면에서 적실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신 "스펙을 초월한 채용 시스템 구축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채용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측면에서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조건과 환경에서 대

기업에 의해 식민지화되어 있다"며 "따라서 창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과 제도적 환경의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실업은 대부분의 국가가 직면한 과제"라며 "이런 환경에서 글로벌한 차원의 취업 기회 확장은 쉽게 성취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용 의무할당제 · 부담금 현실성 높아 벤처 육성 · 지역인재 우대 실효성 의문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청년실업 해소 공약은 비교적 구체성과 현실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으나 항목별로 편차가 컸다.

문 후보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의무할당 및 취업준비금 지급, 중·장년 퇴직자와 청년 창업자 간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 혁신벤처기업 일자리 만들기,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4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정책의 구체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광택 국민대 교수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나 공공기관 및 민간 300인 이상 대기업에 매년 3%씩 청년(30세 미만)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고 미준수 기업에 분담금을 부과해 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양혁승 연세대 교수는 "고용의무할당제나 고용분담금제는 민간 기업에 대한 행정적 강제를 수반하는 정책으로 실행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이 같은 제도는 한시적 정책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벤처기업 육성 계획은 공허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권 교수는 "청년 벤처 1만개 등의 공약은 이행과 관련된 전략이나 정책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했다"며 "공허한 공약으로 선거용 슬로건 수준"이라고 말했다.

개혁성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이 교수는 "중·장년 퇴직자와 청년 창업자 간의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은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우려하는 견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며 개혁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양 교수는 "청년실업의 구조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포괄하고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전체적으로 제시된 의제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정책 패키지의 재탕 수준으로 개혁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실 정책 환경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적실성 평가에서도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왔다. 특히 현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이 즉각적이고 소모적 대책에 치중하면서 재정지원이 미흡했던 것에 비하면 문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 법제도 개선으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경실련은 평가했다.

하지만 적실성 평가는 공약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청년고용할당제는 세대 단절이 심각한 청년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청년 실업부조는 청년들이 취업준비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그러나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으로 창업과 벤처를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도 "청년 벤처 1만개를 양성하고 모태펀드 2조원을 조성하여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를 위한 재도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공약은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학교 졸업생 30%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역차별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공무원 채용 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능

한 것이지 의무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4대 공약이 청년 취업 희망자 고용기회 창출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의 적실성은 높다"면서도 "지역인재 채용 우대제 실시 등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고용할당제나 지역 인재 채용 우대 등은 공정거래나 공정경쟁 이슈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고, 경기가 불투명해 기존의 중소영세 업체들도 문을 닫는 상황에서 벤처와 창업을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공약 평가 어떻게】

구체성 · 개혁성 · 적실성 반영, 실현 가능성에 주목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대선 후보 공약 평가는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대상으로 했다.

경실련은 평가를 위해 경향신문이 선정한 대선 13대 의제별로 개별 검증팀을 구성했다. 각 팀은 4~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가담하지 않은 교수와 연구원 등으로, 중도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물들을 주로 선정했다. 전체 공약 평가를 위해 13개 주제 · 분야에 맞춰 5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평가를 위해 각 후보 캠프에서 지금까지 제시한 공약과 후보들의 발언 및 각종 보도자료 등을 주요 자료로 활용했다. 평가는 구체성 · 개혁성 · 적실성이란 3대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구체성은 공약이 세부적 항목까지 완성도를 갖췄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이며, 개혁성은 현실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기준이다. 적실성은 각 공약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소요재원 마련 계획 등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정책 환경에 부합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3대 항목별로 5점 척도로 개별 평가하고, 경실련은 전문가들의 평가를 취합해 평점을 내는 방식으로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5점은 매우 우수, 4점은 우수, 3점은 보통, 2점은 미진, 1점은 매우 미진을 의미한다. 평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구체적 평가 내용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이 공약의 점수화, 서열화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적인 평점은 매기지 않았다.

"박, 스펙초월 채용 · 해외취업 확대"
"문, 2조 펀드로 벤처 1만개 양성"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청년실업 해소 공약은 크게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도입'과 국내외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로 크게 구분된다.

스펙 초월 채용 대책은 '정부 · 민간 합동 스펙 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하고, 중 · 장년 인재은행 · 재능기부 · 전문가 등의 멘토단을 구성해 이를 취업 준비생과 연결한다는 내용이다.

박 후보는 국내 창업 지원 대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자연과학과 인문 · 사회과학의 융합인재 육성, 산 · 학 공동연구물 소유권의 합리적 조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의무화 등 창조적 인재 육성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실패한 벤처창업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엔젤투자(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K-Move' 공약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해외취업 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해외취업 희망자에게 자금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정부와 기업이 함께 출자해 만든 매칭방식의 벤처캐피털)를 벤치마킹해 해외 벤처캐피털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는 기업 주도의 정보통신기술(ICT) 아카데미를 설립해 2만여명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육성키로 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청년실업 관련 공약은 직접적인 청년 취업,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로 구성돼 있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고용 대기업이 매년 3%씩 청년(30세 미만)을 정규직으로 고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일명 '로제타 플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기업이 이를 어길 경우 고용분담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또 청년들이 구직활동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급하는 '청년취업준비금'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후보는 지역채용 우대제를 실시해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서 해당지역 학교 졸업생을 최소 30% 채용하는 방안도 의무화하겠다고 제안했다.

문 후보는 청년 창업 대책으로는 세대 간 공동창업 모델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중·장년의 전문경력직 퇴직자와 창업예비자 간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는 모델을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청년 벤처 1만개를 양성하고, 모태펀드(개별 펀드에 출자해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을 올리는 펀드) 2조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또한 정보기술(IT), 융합기술, 문화예술 등 창조산업에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50만개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창출 대책도 제시했다.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청년실업 공약 주요 내용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고용 지원 및 촉진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 열정과 창의성으로 평가받는 사회 구현 • 정부·민간 합동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 • 멘토를 통한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인재 양성창업 지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의무할당 및 취업 준비금 지급** •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 도입 • '청년취업준비금' 지급 •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으로 학력차별에 따른 불이익 해소
창업 지원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창업국가 코리아** • 대학의 창업기지화 •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통섭한 융합인재 양성 • 산학 공동연구물의 소유권 합리적 조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의무화 등 창조적 인재 보호 • 앤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 콘텐츠 펀드 규모 확대 및 프로젝트 개발 지원	**중장년 퇴직자와 청년창업자 간 세대 융합형 창업지원** • 중장년의 경험과 노하우와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서로 연계시켜주는 세대 간 공동창업모델 촉진 및 지원 •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문경력직 퇴직자와 창업예비자 간 '멘토링' 사업 지원
일자리 만들기	**2만명 ICT 창의인재 양성** • 전국에 기업 주도의 ICT아케데미 설립 • 청년들을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으로 육성	**혁신벤처기업 일자리만들기 및 지역산업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만들기** • 청년 벤처 1만개 양성 및 모태펀드 2조원 조성 • 지역인재 채용우대제 실시
해외 취업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 해외 벤처캐피털 유치 등 글로벌 벤처 산업 육성 •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 확대 및 해외취업장려금 제도 도입 • 스펙초월인재시스템의 글로벌화	없음

① 청년 실업 해결

청년 창업·융합인재 육성은 개혁적 실현 구체화 방법 없고 현실성 부족

고용 의무할당제·부담금 현실성 높아 벤처 육성·지역인재 우대 실효성 의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비전에 비해 이를 구체화할 방법론이나 현실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후보는 대학의 창업기지화를 대표로 하는 창업국가 코리아,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구축,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한 'K-Move',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2만명 양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공약 자체는 개혁적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자리 찾기 강화, 에스라엘 사례를 벤치마킹한 해외 벤처개피털 유치 등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개혁적 항목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공약이 지향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 제시가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 평가였다. 대체로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개별 공약들을 실행할 구체적 방법 등의 제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광택 국민대 교수는 대학을 창업기지화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아우르는 융합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공약을 구체성이 부족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 교수는 또 "청년 창업을 위한 맨홀투자 활성화 공약 중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초기 창업단계의 실패를 용인하는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면서 구체적 방법론 제시는 없다고 평가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창업 관련 공약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력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 채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공약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책적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혁승 연세대 교수는 "맨홀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나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구체적인 것들도 다수 있지만 대학의 창업기지화 등 구호성에 그칠 수 있는 것들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공약이 현실에서 얼마나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따지는 적실성의 한계로 이어졌다. 이 교수는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현지 정보를 이용해 청년의 해외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공약은 적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장년 인재은행, 재능기부, 전문가 멘토 구성 등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스펙을 초월한 청년취업센터 설립,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을 선발하는 제도 등은 현실적 정책환경과 부합하기 어렵다"면서 적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청년실업 대책으로 창업 활성화를 내놓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이나 경기가 불부명해 기존의 중소기업도 문을 닫는 판에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으로 창업과 벤처를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창업을 해도 국소수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현재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은 제품시장에서 총수요가 부족하다는 데 있는 만큼 창업국가 코리아, 'K-Move' 등은 방향성 면에서 적실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신 "스펙을 초월한 채용 시스템 구축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측면에서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조건과 환경에서 대기업에 의해 삭민지화되어 있다"며 "따라서 창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과 제도적 환경의 마련이 우선 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실업은 대부분의 국가가 직면한 과제"라며 "이런 환경에서 글로벌한 차원의 취업 기회 확장은 섣게 성취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



지난 9월 3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잡(JOB) 페스티벌'에서 일자리를 구하러는 학생들이 채용 부스에 많아 상담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청년실업 해소 공약은 비교적 구체성과 현실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으나 한계점도 보였다.

문 후보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의무할당 및 취업손비금 지급, 중·장년 퇴직자와 청년 창업자 간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 혁신벤처기업 일자리 만들기,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4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정책의 구체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광택 국민대 교수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나 공공기관 및 민간 300인 이상 대기업에 매년 3%씩 청년(30세 미만)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고 미준수 기업에 분담금을 부과해 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양혁승 연세대 교수는 "고용의무할당제나 고용분담금제는 민간 기업에 대한 행정적 강제를 수반하는 정책으로 실행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이 같은 제도는 한시적 정책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벤처기업 육성 계획은 공허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권 교수는 "청년 벤처 1만개 등의 공약은 이행과 관련된 전략이나 정책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했다"며 "공허한 공약으로 선거용 슬로건 수준"이라고 말했다.

개혁성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이 교수는 "중·장년 퇴직자와 청년 창업자 간의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은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우려하는 견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며 개혁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양 교수는 "청년실업의 구조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포괄하고 있는 점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전체적으로 제시된 세제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정책 메키지의 재탕으로 나눠 신행됐다. 구체성은 공약이 세부적 항목까지 완성도를 갖췄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적도이며, 개혁성은 현실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분제의식이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기준이다. 적실성은 각 공약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소요재원 마련 계획 등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정책 환경에 부합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3대 항목별로 5점 적도로 개별 평가하고, 경실련은 전문가들의 평가를 취합해 종점을 내는 방식으로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5점은 매우 우수, 4점은 우수, 3점은 보통, 2점은 미진, 1점은 매우 미진을 의미한다. 평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구체적 평가 내용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이 공약의 검수와, 사생화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적인 종점은 매기지 않았다.

경향신 기자 silvermani@kyunghyang.com

수준으로 개혁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실 정책 환경에 얽매나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적실성 평가에서도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왔다. 특히 현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의 즉각적이고 소모적 대책에 치중하면서 재정지원이 미흡했던 것에 비해면 문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 법제도 개선으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경실련은 평가했다.

하지만 적실성 평가는 공약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청년고용할당제는 세대 단절이 심각한 청년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청년 실업부조는 청년들이 취업준비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그러나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으로 창업과 벤처를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도 "청년 벤처 1만개를 양성하고 모태펀드 2조원을 조성하여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를 위한 재도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공약은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 학교 졸업생 30%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역차별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공무원 채용 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의무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세대 공약이 청년 취업 희망자 고용기회 창출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의 적실성은 높다"면서도 "지역인재 채용우대제 실시 등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고용할당제나 지역인재 채용 우대 등은 공정거래나 공정경쟁 이슈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고, 경기가 불부명해 기존의 중소영세 업체들도 문을 닫는 상황에서 벤처와 창업을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

공약 평가 어떻게

구체성·개혁성·적실성 반영, 실현 가능성에 주목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대선 후보 공약 평가는 지지율 2%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대상으로 했다.

경실련은 평가를 위해 경향신문이 선정한 대선 13대 의제별로 개별 검증팀을 구성했다. 각 팀은 4~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기댄하지 않은 교수와 연구원 등으로, 중도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물들을 주로 선정했다. 전체 공약 평가를 위해 13개 주제·분야에 맞춰 5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평가를 위해 각 후보 캠프에서 지금까지 제시한 공약과 후보들의 발언 및 각종 보도자료 등을 주요 자료로 활용했다.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이란 3대 항목으로 나눠 진행했다. 구체성은 공약이 세부적 항목까지 완성도를 갖췄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적도이며, 개혁성은 현실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분제의식이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기준이다. 적실성은 각 공약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소요재원 마련 계획 등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정책 환경에 부합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3대 항목별로 5점 적도로 개별 평가하고, 경실련은 전문가들의 평가를 취합해 종점을 내는 방식으로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5점은 매우 우수, 4점은 우수, 3점은 보통, 2점은 미진, 1점은 매우 미진을 의미한다. 평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구체적 평가 내용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이 공약의 검수와, 사생화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적인 종점은 매기지 않았다.

경향신 기자 silvermani@kyunghyang.com

■ 대선 후보 청년실업 공약 평가해주신 분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양혁승 연세대 경영대 교수, 이광택 국민대 법대 교수 (가나다 순)

"박, 스펙초월 채용·해외취업 확대" "문, 2조 펀드로 벤처 1만개 양성"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청년실업 해소 공약은 크게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도입'과 '국내외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로 크게 구분된다.

스펙 초월 채용 대책은 '정부·민간 합동 스펙 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하고, 중·장년 인재은행·재능기부·전문가 등의 멘토단을 구성해 이들 취업을 준비생과 연결한다는 내용이다.

박 후보는 국내 창업 지원 대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융합인재 육성, 산·학·공 동연구를 소유권의 합리적 조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의무화 등 창조적 인재 육성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실패한 벤처창업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맨홀투자(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K-Move' 공약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해외취업 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해외취업 희망자에게 자금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

또한 에스라엘의 '요즈마 펀드'(정부와 기업이 함께 출자해 만든 매칭방식의 벤처개피털)를 벤치마킹해 해외 벤처개피털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는 기업 주도의 정보통신기술(ICT) 아카데미를 설립해 2만명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육성키로 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청년실업 관련 공약은 직접적인 청년 취업,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로 구성돼 있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고용 대기업의 매년 3%씩 청년(30세 미만)을 정규직으로 고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일명 '로제타 플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기업이 어쩔 수 없이 고용분담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또 청년들이 구직활동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급하는 '청년취업준비금'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표했다.

문 후보는 지역재투 우대제를 실시해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서 해당지역 학교 졸업생을 최소 30% 채용하는 방안도 의무화하겠다고 제안했다.

문 후보는 청년 창업 대책으로는 세대 간 공동창업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장년의 전문경력직 퇴직자와 창업예비자 간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는 모델을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청년 벤처 1만개를 양성하고, 모태펀드(개별 펀드에 출자해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을 올리는 펀드) 2조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또한 정보기술(IT), 융합기술, 문화예술 등 창조산업에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50만개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창출 대책도 제시했다.

강병원·이재덕 기자 silvermani@kyunghyang.com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청년실업 공약 주요 내용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고용 지원 및 촉진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 멘토과 청약성으로 평가받는 사회 구현 • 정부·민간 합동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 • 멘토를 통한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인재 양성창업 지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의무할당 및 취업 준비금 지급** •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 도입 • '청년취업준비금' 지급 •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으로 학력차별에 따른 불이익 배소
창업 지원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창업국가 코리아** • 대학의 창업기지화 •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아우른 융합인재 양성 • 산학 공동연구물의 소유권 합리적 조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의무화 등 창조적 인재 보호 • 맨홀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 콘텐츠 펀드 규모 확대 및 프로젝트 개별 지원	**중장년 퇴직자와 청년창업자 간 세대 융합형 창업지원** • 중장년의 경험과 노하우와 청년의 참의적 아이디어를 서로 연계시켜주는 세대 간 공동창업모델 확산 및 지원 •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나기 위해 전문경력직 퇴직자와 창업예비자 간 '멘토링' 사업 지원
일자리 만들기	**2만명 ICT 창의인재 양성** • 전국에 기업 주도의 ICT아카데미 설립 • 청년들을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으로 육성	**혁신벤처기업 일자리만들기 및 지역산업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만들기** • 청년 벤처 1만개 양성 및 모태펀드 2조원 조성 • 지역인재 채용우대제 실시
해외 취업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 해외 벤처개피털 유치 등 글로벌 벤처 산업 육성 •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 확대 및 해외취업장려금 제도 도입 • 스펙초월인재시스템의 글로벌화	없음

【경향 · 경실련 13대 대선의제 공약 평가】

고령층 일자리 · 복지 박 · 문 모두 '소극적'

정치권의 복지 경쟁으로 포퓰리즘 논란까지 제기됐음에도 대선 후보들의 고령화 대비 공약은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고령화 대비 공약 평가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모두 5점 만점에 3점 전후를 기록했다.

공약의 완결성을 따지는 구체성 항목에서는 박 후보가 2.7점, 문 후보가 3.1점으로 비슷한 성적을 기록했다.

공약의 개혁성 항목에서는 박 후보가 2.7점, 문 후보가 3.6점을 각각 받았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보기 위한 적실성 평가에서는 박 후보가 2.8점, 문 후보가 3.4점을 기록했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노인 일자리와 노후 보장 등 복지 대책은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박 후보는 현 정부의 기존 일자리 대책을 일부 확대하는 정도의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남 팀장은 "문 후보는 체계적인 개선 방안보다는 상징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한 공약이 주를 이뤘다"며 "두 후보 모두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통합적 공약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단기 4345년 (음력 10월 22일) 2012년 12월 5일 수요일

경향·경실련 13대 대선의제 공약 평가

고령층 일자리·복지
박·문 모두 '소극적'

정치권의 복지 경쟁으로 포퓰리즘 논란까지 제기됐음에도 대선 후보들의 고령화 대비 공약은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고령화 대비 공약 평가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모두 5점 만점에 3점 전후를 기록했다. | 관련기사 5면

공약의 완결성을 따지는 구체성 항목에서는 박 후보가 2.7점, 문 후보가 3.1점으로 비슷한 성적을 기록했다.

공약의 개혁성 항목에서는 박 후보가 2.7점, 문 후보가 3.6점을 각각 받았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보기 위한 적실성 평가에서는 박 후보가 2.8점, 문 후보가 3.4점을 기록했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노인 일자리와 노후 보장 등 복지 대

대선 후보 고령화 대책 평가 결과

	박근혜	문재인
구체성	2.7	3.1
개혁성	2.7	3.6
적실성	2.8	3.4

※점수는 5점 척도

책은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박 후보는 현 정부의 기존 일자리 대책을 일부 확대하는 정도의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남 팀장은 "문 후보는 체계적인 개선 방안보다는 상징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한 공약이 주를 이뤘다"며 "두 후보 모두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통합적 공약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

【경향 · 경실련 공약 평가】
② 고령화 사회 대책

기존 사업 확대 일자리 창출 개혁성 부족
맞춤형 급여 체계는 적실 · 합리성 엿보여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고령화 대비 정책은 현상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전체적으로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 머물러 구체성과 개혁성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증세 없이 재정과 조세개혁만으로 연간 27조원씩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고령화 대비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게 하는 배경이란 지적도 나왔다. 복지재원 확보 계획이 불투명하고, 그 재원을 노인복지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미다.

박 후보의 연간 22만개 노인 일자리 창출 공약은 기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일부 확대 변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현행 자활사업의 노인확대 모형에 그쳐 개혁성 측면에서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허준수 숭실대 교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7개월간 20만원을 지급하는 단기간 일시적 프로그램"이라며 "근본적인 노인 일자리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맞춤형으로 통합적인 노인 구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은 구체적 방법이 제시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허 교수는 결국 "박 후보의 노인 일자리 공약은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부분적 개선만을 제시하고, 노동시장에서 노인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적실성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공공근로 형태의 지원고용 프로그램 수준인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확대된다고 해서 노동시장 내에서 노인 고용과 취업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박 후보의 노후보장 관련 공약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우선 소득수준을 감안해 어려운 노인에게 더 주거나 별도의 생계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초노령연금 개선책을 제시했다. 노인수당 개념에서 공적부조 개념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대상자의 축소를 의미해 개혁성과 적실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보수적 접근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현주 가천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해 요양 보호사의 임금과 자질을 높이고 치매환자 보험을 확대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은 개혁성과 적실성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서비스 수혜자가 5.8%에 불과한데도 초점이 서비스 수급자 대상 확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응급 시 독거노인 안전돌보미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은 구체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7가지 급여를 맞춤체제로 전환해 개별 급여의 합리성을 제고하겠다는 기초생활수급제도 개선 공약도 적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는 반대했고,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제시하지 않아 개혁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허 교수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령연금 확대 · 빈곤선 도입 구체성 높아
재원 마련 · 배분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고령화 대책은 기초노령연금 확대, 상대적 빈곤선 도입

등을 제시해 비교적 개혁적이고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협소한 의미의 상징성이 높은 공약에 치중하고 있으며, 공약을 실행할 재정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이 부자감세 철회 등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노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현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개선과 노동시장 내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비교적 균형 있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행 계획이나 재정 마련 방안은 미흡하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었다.

남현주 가천대 교수는 "세대 간 공동창업모델 촉진 및 지원은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공약이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허준수 숭실대 교수는 "실버고용안정 서비스를 통해 노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와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사업들과 중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르신 친화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역시 대부분은 이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며, 사례로 든 문화재 관리자 등은 저소득층 일자리로 노후보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행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재능기부나 사회공헌 위주의 사회적 서비스 활동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 역시 퇴직 후 사회활동 지속의 의미는 있으나 노인 빈곤 문제 해소 방안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확충 역시 개혁성은 높지만 일자리 창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지는 미지수라는 진단을 받았다.

문 후보는 노후보장 확대를 위해 비교적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했다. 남 교수는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책임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 '출산크레딧(두 자녀 이상 가구에 주는 연금보험료 혜택)' 확대 등 여성 수급권 보장은 노후소득보장 충실화를 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재원이 소요된다"면서 "복지 재원과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노령연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구체성 의문이 제기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를 현행 5.8%에서 10%까지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은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민간 부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노인복지관 등 이용시설 확충이란 원론만 내놨다. 허 교수는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과 개혁성, 적실성에서 모두 부족하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 책정 기준을 상대적 빈곤선까지 상향하겠다는 정책은 개혁적이고 적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박 "일자리 22만개"…문 "연금 · 요양 확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크게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후보장 확대로 나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매년 노인 일자리를 22만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노인 사회봉사활동을 시간제 근로 형태로 바꿔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필요한 문화재 해설사와 같은 노인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문 후보는 중·

장년 퇴직자와 청년 창업자 간의 공동창업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아 돌보미나 아동 안전보호 안내자와 같은 '어르신 친화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보장을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주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에 도입됐다. 박 후보는 소득 수준을 감안해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2017년까지 연금액을 현행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최대 50개월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해주는 '출산 크레딧'이나 장애아동을 돌보는 저소득층의 연금 부담을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돌봄 크레딧' 도입 등 국민연금 개혁방안도 내놨다. 박 후보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은 내놓지 않았다.

박근혜 · 문재인 대선 후보 고령화 사회 대책 공약 비교

	박근혜	문재인
노인 일자리	• 연간 노인일자리 22만개 이상 시행(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 시장자립형) • 시간제근로형태의 사회봉사활동 및 급여 받는 직종 개발 및 도입 • 맞춤형으로 통합적으로 구직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	• 중·장년 퇴직자와 청년 창업자 간, 세대 간 공동창업모델 촉진 및 지원 • 실버고용안정서비스를 만들어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 어르신친화형 일자리 확대 (유아돌보미, 아동안전보호안내자, 문화재 관리자 등) • 현행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위주의 사회적 서비스 활동으로 전환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 의무화 조항 신설 • 출산크레딧 확대, 돌봄크레딧 도입 등 여성수급권이 보장되는 '1인1연금제' 구축
기초 노령연금	• 소득수준 감안, 어려운 노인에게 더 주거나 별도의 생계유지 지원금 지급 • 기초노령연금을 노인연금으로 전환(월 20만원)	• 2017년까지 연금액 두배로 인상 (9만원→18만원), 향후 기초연금 전환
노인장기 요양보험	•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 향상,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강화 •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 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노인 인구의 5.8%에서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 • 지자체별 국공립 노인장기요양 시설 확충
사회 서비스	• 노인대상 돌봄서비스확대, 응급 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활성화 • 지역별로 노인운동서비스 제공	•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용시설 확충
기초 생활보장	• 부양의무기준 폐지는 비용을 고려한 사회적 논의 필요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급여로 전환, 수급자-차상위층 역전현상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 축소 • 최저생계비 책정을 상대빈곤선 기준으로 전환

② 고령화 사회 대책

기존 사업 확대 일자리 창출 개혁성 부족 맞춤형 급여 체계는 적실·합리성 엇보여



지난 10월10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서울 놀이마당에서 열린 제14회 송파노인문화제에서 노인들이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노령연금 확대·빈곤선 도입 구체성 높아 재원 마련·배분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고령화 대비 정책은 현상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전체적으로 원론적인 수준의 연금에 머물러 구체성과 개혁성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증세 없이 재정과 조세개혁만으로 연간 27조원씩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고령화 대비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게 하는 배경이란 지적도 나왔다. 복지재원 확보 계획이 불투명하고, 그 재원을 노인 복지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미다.

박 후보의 연간 22만개 노인 일자리 창출공약은 기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일부 확대 변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정창화 단국대 교수는 "현행 자활사업의 노인확대 모형에 그쳐 개혁성 측면에서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허준수 숭실대 교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7개월간 20만원을 지급하는 단기간 일시적 프로그램"이라며 "근본적인 노인 일자리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맞춤형으로 통합적인 노인 구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은 구체적 방법이 제시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허 교수는 결국 "박 후보의 노인 일자리 공약은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부분적 개선안을 제시하고, 노동시장에서 노인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적실성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공공근로형태의 지원고용 프로그램 수준인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한다고 해서 노동시장 내에서 노인고용과 취업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박 후보의 노후보장 관련 공약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우선 소득수준을 감안해 여러분 노인에게 더 주거나 별도의 생계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초노령연금 개선책을 제시했다. 노인수당 개념에서 공적부조 개념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대상자의 축소를 의미해 개혁성과 적실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보수적 접근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현주 가천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해 요양 보호사의 임금과 자질을 높이고 지역편차 보험을 확대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은 개혁성과 적실성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서비스 수혜자가 5.8%에 불과한데도 초점이 서비스 수급자 대상 확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응급 시 독거노인 안전돌보미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은 구체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7가지 급여를 맞춤체제로 전환해 개별 급여의 합리성을 제고하겠다는 기초생활수급제도 개선 공약도 적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는 반대했고,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제시하지 않아 개혁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허 교수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환 기자 ytpark@kyunghyang.com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고령화 대책은 기초노령연금 확대, 상대적 빈곤선도입을 제시해 비교적 개혁적이고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협소한 의미의 상징성이 높은 공약에 치중하고 있으며, 공약을 실행할 재정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이 부자감세 철회 등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노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현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개선과 노동시장 내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비교적 균형 있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행 계획이나 재정 마련 방안은 미흡하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었다.

남현주 가천대 교수는 "세대 간 공동창업모델 촉진 및 지원은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공약이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허준수 숭실대 교수는 "실버고용안정서비스를 통해 노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와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사업들과 중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르신 전화정길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역시 대부분은 이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며, 사례로 든 문화재 관리자 등은 지소득층 일자리로 노후보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행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재능기부나 사회공헌 위주의 사회적 서비스 활동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 역시 퇴직 후 사회활동 자체의 의미는 있으나 노인 빈곤 문제 해소 방안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확충 역시 기존 사업들 놀지만 일자리 창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지는 미지수라는 진단을 받았다.

문 후보는 노후보장 확대를 위해 비교적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했다. 남 교수는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책임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 '출산크레딧'(두 자녀 이상 가구에 주는 연금보험료 혜택) 확대 등 여성 수급권 보장은 노후소득보장 증심화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재원이 소요된다"면서 "복지재원과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노령연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구체성 의문이 제기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를 현행 5.8%에서 10%까지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은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민간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노인복지관 등 이용시설 확충이란 원론만 내놨다. 허 교수는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과 개혁성, 적실성에서 모두 부족하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 책정 기준을 상대적 빈곤선까지 상향하겠다는 정책은 개혁적이고 적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박영환 기자 ytpark@kyunghyang.com

■고령화 사회 대책 공약 평가단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창화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나다 순)

박근혜·문재인 대선 후보 고령화 사회 대책 공약 비교

	박근혜	문재인
노인 일자리	• 연간 노인일자리 22만개 이상 시행(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 시장자립형) • 시간제·단로형태의 사회참사활동 및 공어 받는 직종 개발 및 도입 • 맞춤형으로 통합적으로 구사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	• 중·장년 퇴직자와 청년 창업자 간 세대 간 공동창업모델 촉진 및 지원 • 실버고용안정서비스를 만들어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 어르신전화형 일자리 확대 (60대들의, 어린안전보호인도자, 문화재 관리자 등) • 현행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위주의 사회적 서비스 활동으로 전환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 의무화 조항 신설 • 출산크레딧 확대, 둘째자녀부터 도입 등 여성수급권이 보장되는 '인연연금제' 구축
기초 노령연금	• 소득수준 감안, 어려운 노인에게 더 주거나 별도의 생계유지 지원금 지급 • 기초노령연금을 노인연금으로 전환해 20만원	• 2017년까지 연금액 두배로 인상 (60만원→120만원), 점후 기초연금 전환
노인장기 요양보험	•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 향상,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강화 •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 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노인 인구의 5.8%에서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 • 지자체별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사회 서비스	• 노인대상 돌봄서비스확대, 응급 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활성화 • 지역별로 노인맞춤서비스 제공	•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용시설 확충
기초 생활보장	• 부양의무기준 폐지는 비용을 고려한 사회적 논의 필요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 동림급여체계에서 맞춤형급여로 전환, 수급자-차상위층 역전현상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여 바수급 빈곤층 축소 • 최저생계비 책정을 상대빈곤선 기준으로 전환

박 "일자리 22만개"… 문 "연금·요양 확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크게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후보장 확대로 나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매년 노인 일자리를 22만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노인 사회봉사활동을 시간제 근로 형태로 바꿔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필요한 문화재 해설사와 같은 노인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문 후보는 중·장년 퇴직자와 청년 창업자 간의 공동창업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아 돌보미나 아동 안전보호 안내자와 같은 '어르신 전화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보장을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주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에 도입됐다. 박 후보는 소득 수준을 감안해 여러분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2017년까지 연금액을 현행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최대 50개월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해주는 '출산 크레딧'이나 장애아동을 돌보는 저소득층의 연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는 '돌봄크레딧' 도입 등 국민연금 개혁방안도 내놨다. 박 후보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은 내놓지 않았다.

박영환 기자 ytpark@kyunghyang.com

투자 전문가의 존재존비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채권펀드
시중금리 +α 추구!
| 글로벌다이나믹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누적 수익률 |
수익률
KOSPI
42.23%
글로벌다이나믹 채권펀드
+α
BM(비교지수)
시중금리
설정일(2009.6.30) 2010.6.30 2011.6.30 설정이후(2012.11.20)
미래에셋 글로벌다이나믹 채권펀드가 좋은 이유
1. 하이일드 채권에 비해 안정을 추구합니다
2. "누적 수익률 42.23%/ 시중금리 + α의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3. 전세계 우량 채권에 분산 투자합니다
"미래에셋 글로벌다이나믹 클래스 채권펀드"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연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펀드'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의 결 번 호	2012대선51(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미래한국미디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3-1 거평타운 1707호 대표이사 김 상 철
심의대상기사	미래한국 2012년 12월 3일~26일자(통권 435호) 표지 및 8~37면 「지금은 여성시대」, 「세기의 여성 지도자들 그들은 위기속에서 빛났다」, 「미국은 지금 여성 상위 시대」, 「美 최초 여성 대통령 꿈꾸는 힐러리 클린턴」,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여성지도자에 대한 국민 생각」, 「우리에게도 '철의 여인'이 필요하다」, 「南北 모두를 품는 리더십을 기다린다」, 「"여성의 강점 활용하면 유리천장은 없다"」, 「멋진 여성의 3대 조건」, 「딸의 롤모델을 찾아서」, 「"박근혜, 흐름탔다"」, 「"정수장학회는 장물이 아니다"」 제하의 기사 등 총 13건의 선거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성 지도자를 다룬 여러 형식의 특집기획기사를 보도하면서 첫 여성 대통령을 정치 구호로 삼은 특정 후보자를 특집기획기사와 연관시켜 부각함으로써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같은 보도는 선거기사를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 제6조(정치적 중립), 제9조(특집기획기사)를 위반한 위 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지금은 여성시대

위기 속에 빛난 여성 지도자들
朴 vs 文, 누가 경제를 더 잘 할까
달궈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평양의 겨울은 다르다

세기의 여성 지도자들
그들은 위기 속에서 빛났다

그리스 신화에는 한 여신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사랑의 기록이 있다. 바로 그리스를 수호하고 방직과 산업을 일으킨 여신 '아테나'다.

아테나는 평생 처녀로 살면서 그리스의 국가 수호신이 된다. 그녀는 올림푸스의 신들을 위협하고 아테네를 침입해 사람들을 삼키는 괴물 자이언트들을 상대로 전투에 나서 괴물들을 정복하고 지옥에 가둬 버렸다. 당시 올림푸스의 남신들조차 이 자이언트들을 두려워해 눈치만 보며 선뜻 나서지 못한 상황이었다.

아테나는 그런 호국의 여신이었지만 동시에 지혜의 여신이어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방직과 세공기술을 가르쳐 산업도 일으키게 했다.

그리스 신화와 현대의 아테나들

그래서인지 오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있는 동상은 제우스신이 아니라 창과 방패를 든 여신 아테나다. 그녀는 아버지 제우스를 넘어 그리스인들에게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안보와

산업의 수호신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된 것이다.

이러한 아테나의 신화는 현대에도 있다. 70년대 초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피비린내 나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무렵, 다비드 벤구리온 이스라엘 초대 총리는 71세 고령의 한 여성 정치인을 가리켜 '우리 정부에 있는 단 한 명의 남자'라고 말했다. 바로 4번째 총리로 수상직에 오른 골다 메이어, 그녀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당시 이스라엘은 건국 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1967년 6일전쟁에 이어 1973년 4차 중동전쟁인 욤키푸르 전쟁이 일었고 아랍세계로부터 피비린내 나는 테러가 빈발했다.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강점했다는 국제적 비난과 아랍세계의 공격에 대해 골다 메이어는 이렇게 말했다.

"동정을 받으며 죽거나 미움을 받으며 살거나 이 둘 중에서 택해야 한다면 나는 미움을 받고라도 살겠습니다. 생존의 문제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겁쟁이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한 골다 메이어는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들을 살해함으로써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아랍 테러조직 '검은 9월단'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살하는 명령을 모사드에게 내린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골다 메이어는 전쟁광이 아니었다. 73년 4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선제공격을 받았지만 골다메이어는 보복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침략자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

골다 메이어는 인간미 넘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아랍 포로 병사들에게 관대했으며 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탈했다. 외국 순방길에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던 이야기는 세계의 화제가 됐다. 그런 골다 메이어였기에 그녀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 1978년 12월 8일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조사(弔辭)에서 이렇게 말했다. "왜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가. 대부분은 권력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이어가 지도자가 된 이유는 달랐다. 그리고 단순했다. 국민에게 봉사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민에 대한 봉사로 국가의 부흥을 이끌고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여성 지도자는 역시 엘리자베스 1세였다. '영국인 누구도 엘리자베스 1세에게는 돌을 던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런 엘리자베스 1세지만 그녀의 탄생과 성장은 지극히 불행했다. 마치 아테나 여신처럼 말이다.

1533년 9월 7일 잉글랜드 런던 근처 그리니치(Greenwich)에서 튜더 왕조의 헨리 8세와 두 번째 왕비 앤 불린의 딸로 태어난 엘리자베스 1세는 어머니가 간통과 반역죄로 참수된 뒤 궁정의 복잡한 세력다툼의 와중에서 왕위 계승권이 박탈됐다. 또한 이복 언니 메리 1세의 가톨릭 복귀 정책이 불만을 사게 돼 와이어트 반란으로까지 확대됐을 때 그녀도 반란 가담의 혐의를 받아 런던탑에 유폐(1554)되는 등 다난한 소녀시절을 보냈다.

'위기는 날개다' 엘리자베스 1세, 박근혜의 롤모델?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던 당시의 잉글랜드는 약소국이었다. 잉글랜드는 전통적으로 강대국인 스페인과 동맹해 강대국 프랑스와 대적하는 국가였다. 하지만 헨리 8세에 의해 교황과의 신뢰가 깨지면서 스페인과의 동맹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무적함대를 통해서 신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로 인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던 스페인을 대적하기엔 잉글랜드는 무력도 약했고, 재정도 어려웠다. 엘리자베스 1세는 이러한 영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무엇보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뛰어난 판단력은 조세정책에 있었다

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 왕립학술원 연구원인 사빈(Sabine) 교수가 1980년 출판한 '세금의 略史'(A short history of taxation)에는 엘리자베스1세 여왕의 놀라운 혜안이 기록돼 있다. 여왕은 세금을 국가가 정하지 않고 국민들이 주는 대로 받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실천했다. 그 결과 당시 영국의 세금은 유럽에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영국의 세금제도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 내게 된다.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을 위협하자 엘리자베스 1세는 국민들에게 전비 모금을 호소했다. 당시 영국 왕실의 재정은 빈약했고 이로 인해 스페인에 맞설 전함구축 비용이 부족했다. 이에 엘리자베스1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시련이 올 때 어떤 자는 두려워 떨고, 어떤 자는 날개를 펴고 비상하죠."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무적함대를 이끌고 영국을 향해 다가올 때 젊은 여왕은 국민들에게 전비 모금을 호소했다. 상인들과 목축업자들이 먼저 적극 호응하며 외쳤다. "마음과 뜻과 몸과 생명과 재화를 다해 여왕을 돕자!"

그 결과 여왕이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34만 파운드의 모금이 이뤄졌다. 영국인들의 높은 애국심은 그해 아르마다 해전에서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이를 계기로 제해권은 영국으로 넘어갔다. 지지 않는 영국의 태양은 그렇게 떠올랐다.

젊은 여왕의 내면에는 그러한 지혜와 강인함이 감춰져 있었다. 시련 앞에서 그야말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른' 엘리자베스1세에 의해서 비로서 영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되고 르네상스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엘리자베스 1세는 16세기 영국의 부흥을 이끈 위대한 버진퀸(virgin queen)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다름 아닌 이 엘리자베스 1세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박 후보는 경선 당시 한 토론에서 "영국을 파산 위기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다"며 "자기가 불행을 겪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줄 알았고, 늘 관용의 정신을 갖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정을 이끌었다"며 엘리자베스1세를 자신의 롤 모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의 지지 않던 해가 어느덧 뉘엿뉘엿 석양으로 넘어갈 무렵 영국에는 또 한명의 아테나가 등장했다. 바로 마가렛 대처 총리. 그녀 역시 위대한 여성 지도자를 거론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런던 북부 지방에서 식료품집 둘째딸로 태어난 대처는 옥스퍼드대 화학과를 졸업했다. 독학으로 법률을 공부해 29세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돛은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마가렛 대처

34세 때 의회에 처음 들어갔고 1970년 당시의 에드워드 히스 총리에 의해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1975년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보수당 여당수가 됐으며 1979년 총선거에서는 노동당의 캘러헌 前 총리를 누르고 첫 여총리가 됐다.

1970년대 영국은 저성장과 고실업을 동시에 겪는 '영국병'을 앓고 있었다. 대처는 그 이전의 노동당의 정책을 180도 뒤집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정책들은 훗날 '대처리즘'이라는 새로운 이념의 기반이 된다. 대처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를 지향하였으나 사회적으로는 도덕성을 중시하는 보수성이다. 이전의 케인즈식 사회민주주의와는 정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당시 영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줬고 그 결과로 대처는 3번 연속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 대처 총리는 영국병이라는 복지 폐해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와 도전에 직면했다. 그때 대처가 한 말은 두고두고 세간에 회자가 됐다.(후략)


2012. 12. 3 - 12. 16 (435호) www.futurekorea.co.kr
미래한국
WEEKLY
지금은 여성시대
위기 속에 빛난 여성 지도자들
朴 vs 文, 누가 경제를 더 잘 할까
달궈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평양의 겨울은 다르다
값 4,000원
ISSN 2005-7318
미래한국미디어
부수인증매체

심층분석

세기(世紀)의 여성 지도자들 그들은 위기 속에서 빛났다

그리스 신화에는 한 여신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사랑의 기록이 있다. 바로 그리스를 수호하고 방직과 산업을 일으킨 여신 '아테나' 다.

아테나는 평생 처녀로 살면서 그리스의 국가 수호신이 된다. 그녀는 올림푸스의 신들을 위협하고 아테네를 침입해 사람들을 삼키는 괴물 자이언트들을 상대로 전투에 나서 괴물들을 정복하고 지옥에 가둬 버렸다. 당시 올림푸스의 남신들조차 이 자이언트들을 두려워해 눈치만 보며 선뜻 나서지 못한 상황이었다.

아테나는 그런 호국의 여신이었지만 동시에 지혜의 여신이어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방직과 세공기술을 가르쳐 산업도 일으키게 했다.

그리스 신화와 현대의 아테나들

그래서인지 오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서 있는 동상은 제우스신이 아니라 창과 방패를 든 여신 아테나다. 그녀는 아버지 제우스를 넘어 그리스인들에게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안보와 산업의 수호신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된 것이다.

이러한 아테나의 신화는 현대에도 있다. 70년대초 이스라엘과 아랍간에 피비린내 나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무렵, 다비드 벤구리온 이스라엘 초대 총리는 71세 고령의 한 여성 정치인을 가리켜 '우리 정부에 있는 단 한 명의 남자' 라고 말했다. 바로 4번째 총리로 수상직에 오른 골다 메이어. 그녀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당시 이스라엘은 건국 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1967년 6일전쟁에 이어 1973년 4차 중동전쟁인 욤키푸르 전쟁이 일어났고 아랍세계로부터 피비린내 나는 테러가 빈발했다.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강점했다는 국제적 비난과 아랍세계의 공격에 대해 골다 메이어는 이렇게 말했다.

"동정을 받으며 죽거나 미움을 받으며 살거나 이 둘 중에서 택해야 한다면 나는 미움을 받고라도 살겠습니다. 생존의 문제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골다 메이어 전 이스라엘 총리

"겁쟁이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고 말한 골다 메이어는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들을 살해함으로써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아랍 테러조직 '검은 9월단' 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살하는 명령을 모사드에게 내린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골다 메이어는 전쟁광이 아니었다. 73년 4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선제공격을 받았지만 골다 메이어는 보복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침략자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

골다 메이어는 인간미 넘치는 여성이었▶▶

다. 그녀는 아랍 포로 병사들에게 관대했으며 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탈했다. 외국 순방길에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던 이야기는 세계의 화제가 됐다. 그런 골다 메이어였기에 그녀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가 될 수 있었다. 1978년 12월 8일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조사(弔辭)에서 이렇게 말했다. "왜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가. 대부분은 권력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이어가 지도자가 된 이유는 달랐다. 그리고 단순했다. 국민에게 봉사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민에 대한 봉사로 국가의 부흥을 이끌고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여성 지도자는 역시 엘리자베스1세였다. '영국인 누구도 엘리자베스1세에게는 돌을 던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런 엘리자베스1세지만 그녀의 탄생과 성장은 지극히 불행했다. 마치 아테나 여신처럼 말이다.

1533년 9월 7일 잉글랜드 런던 근처 그리니치(Greenwich)에서 튜더 왕조의 헨리 8세와 두 번째 왕비 앤 불린의 딸로 태어난 엘리자베스1세는 어머니가 간통과 반역죄로 참수된 뒤 궁정의 복잡한 세력다툼의 와중에서 왕위 계승권이 박탈됐다. 또한 이복 언니 메리1세의 가톨릭 복귀 정책이 불만을 사게 돼 와이어트 반란으로까지 확대됐을 때 그녀도 반란 가담의 혐의를 받아 런던탑에 유폐(1554)되는 등 다난한 소녀시절을 보냈다.

'위기는 날개다' 엘리자베스1세, 박근혜의 롤모델?

엘리자베스1세가 즉위하던 당시의 잉글랜드는 약소국이었다. 잉글랜드는 전통적으로 강대국인 스페인과 동맹해 강대국 프랑스와 대적하는 국가였다. 하지만 헨리8세에 의해 교황과의 신뢰가 깨지면서 스페인과의 동맹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무적함대를 통해서 신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로 인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던 스페인을 대적하기엔 잉글랜드는 무력도 약했고, 재정도 어려웠다. 엘리자베스1세는 이러한 영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무엇보다 '민심이 천심' 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뛰어난 판단력은 조세정책에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 왕립학술원 연구원인 사빈(Sabine) 교수가 1980년 출판한 '세금의 略史' (A short history of taxation)에는 엘리자베스1세 여왕의 놀라운 혜안이 기록돼 있다. 여왕은 세금을 국가가 정하지 않고 국민들이 주는 대로 받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실천했다. 그 결과 당시 영국의 세금은 유럽에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영국의 세금제도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 내게 된다.


영국 엘리자베스1세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을 위협하자 엘리자베스1세는 국민들에게 전비 모금을 호소했다. 당시 영국 왕실의 재정은 빈약했고 이로 인해 스페인에 맞설 전함구축 비용이 부족했다. 이에 엘리자베스1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시련이 올 때 어떤 자는 두려워 떨고, 어떤 자는 날개를 펴고 비상하죠."

스페인의 펠리페2세가 무적함대를 이끌고 영국을 향해 다가올 때 젊은 여왕은 국민들에게 전비 모금을 호소했다. 상인들과 목축업자들이 먼저 적극 호응하며 외쳤다. "마음과 뜻과 몸과 생명과 재화를 다해 여왕을 돕자!"

그 결과 여왕이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34만 파운드의 모금이 이뤄졌다. 영

"겁쟁이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한 골다 메이어는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들을 살해함으로써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아랍 테러조직 '검은 9월단' 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살하는 명령을 모사드에게 내린 장본인이었다.

국인들의 높은 애국심은 그해 아르마다 해전에서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이를 계기로 제해권은 영국으로 넘어갔다. 지지 않는 영국의 태양은 그렇게 떠올랐다.

젊은 여왕의 내면에는 그러한 지혜와 강인함이 감춰져 있었다. 시련 앞에서 그야말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른' 엘리자베스1세에 의해서 비로소 영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되고 르네상스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엘리자베스1세는 16세기 영국의 부흥을 이끈 위대한 버진퀸(virgin queen)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다름 아닌 이 엘리자베스1세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박 후보는 경선 당시 한 토론에서 "영국을 파산 위기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다"며 "자기가 불행을 겪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줄 알았고, 늘 관용의 정신을 갖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정을 이끌었다"며 엘리자베스1세를 자신의 롤 모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의 지지 않던 해가 어느덧 뉘엿뉘엿 석양으로 넘어갈 무렵 영국에는 또 한 명의 아테나가 등장했다. 바로 마가렛 대처 총리. 그녀 역시 위대한 여성 지도자를 거론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런던 북부 지방에서 식료품집 둘째딸로 태어난 대처는 옥스퍼드대 화학과를 졸업했다. 독학으로 법률을 공부해 29세 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돛은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마가렛 대처

34세 때 의회에 처음 들어갔고 1970년 당시의 에드워드 히스 총리에 의해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1975년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보수당 여당수가 됐으며 1979년 총선거에서는 노동당의 캘러헌 前 총리를 누르고 첫 여총리가 됐다.

1970년대 영국은 저성장과 고실업을 동시에 겪는 '영국병'을 앓고 있었다. 대처는 그 이전의 노동당의 정책을 180도 뒤집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정책들은 훗날 '대처리즘'이라는 새로운 이념의 기반이 된다. 대처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를 지향하였으나 사회적으로는 도덕성을 중시하는 보수성이다. 이전의 케인즈 식 사회민주주의와는 정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당시 영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줬고 그 결과로 대처는 3번 연속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 대처 총리는 영국병이라는 복지 폐해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와 도전에 직면했다. 그때 대처가 한 말은 두고두고 세간에 회자가 됐다.

"같은 바람을 맞고도 두 척의 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바람이 아니라 돛을 어떻게 다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대처 총리는 또한 아르헨티나와 치른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인한 결단력을 내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당시 어느 누구도 영국이 대서양을 건너 아르헨티나가 점령한 영국령인 포클랜드 섬을 탈환하는 작전을 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대처는 이미 아르헨티나의 계산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녀는 전쟁 중에도 순국한 병사들의 가족에게 일일이 손으로 편지를 써서 전달했다. 국민들은 그러한 대처를 믿고 따랐던 것이다.

비록 대통령이나 총리는 아니었어도 여성으로서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을 들자면 역시 미국의 전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콘돌리자 라이스는 앨라배마 주 버밍햄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에는 흑인에 대한 백인의 인종차별이 심했다. 초등학교를 보내지 않고 직접 라이스를 가르친 어머니는 라이스가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바랐다. 그녀의 이름 '콘돌리자(Condoleezza)'는 음악과 관련된 이탈리아어 표현인 'Con dolcezza(부드럽게 연주하라)'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그러나 라이스는 자신이 피아노로서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고 대학 생활 중에 접한 정치학에서 소련학이 자신이 전공해야 할 길임을 단번에 인식해 바

"같은 바람을 맞고도 두 척의 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바람이 아니라 돛을 어떻게 다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로 전공을 정치학으로 바꿨다. 라이스는 이후 스탠퍼드대 교수로 재직하며 대학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흑자로 돌려놓아 부총장으로 발탁되는 능력을 발휘했다.

'악과 싸우는 것이 정의' 콘돌리자 라이스

무엇보다 콘돌리자 라이스의 지도력은 그녀의 외교안보에서 드러났다.

1999년 라이스는 미 외교협회가 발행하는 유력 격월간지〈포린 어페어즈〉에 '캠페인 2000 : 국가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했다. 라이스는 논문에서 반미(反美)노선을 걷는 이라크, 이란, 북한 3개국을 이른바 불량체제(rogue regime)로 규정하면서 체제 변화를 언급했다. 이 논문은 부시 후보의 대외정책 방향이 됐다. 부시 정부에서 라이스는 클린턴의 대북정책을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노선을 주장했다. 라이스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쓰려 한다면 어떠한 시도에도 (미국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나라 자체가 말살될 것이므로 쓸 수 없게 될 것" 이라고 주장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핵과 대량무기 폐기' 로 못박았다. 동시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할 것을 건의해 이를 통과시킨 장본인도 바로 콘돌리자 라이스였다.

"중동의 넓은 지역이 독재와 절망, 분노로 남아 있는 한 미국인과 우리의 친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주의자들과 집단적 움직임은 계속 생겨날 것이다. 팔레스타인에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은 성지(聖地)에서의 유혈투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는 라이스의 주장은 미국 정부의 중동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게 만들었다.

세계적으로 여성 정치수반은 2012년 현재 21명에 이른다.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핀란드의 타르야 할로넨, 아일랜드의 메리 매컬리스, 라트비아의 비케 프라이베르가,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라이베리아의 엘렌 존슨 실리프, 인도의 파르티바 파틸, 스위스 연방의 미셸린 칼미 레이 등 많은 여성 정치인들이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뛰어난 여성 지도자들이 등장했던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여성이 정치적 리더십을 갖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박준영 서울대 교수(국제정치학)는 '여성의 순종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적 고정관념' 과 '유교적이고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 그리고 '여성의 자기최면' 을 지적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깊이 내면화된 복종과 지배의 원리는 여성 정치 리더십을 약자인 여성이 강자인 남성을 지배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여성 리더십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화 속의 아테나와 같은 여성 지도자들은 역사 속에서 이미 등장했고, 그녀들은 국가의 부흥을 위해 남성 지도자들 보다 더 헌신적이고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우리가 주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정석 편집위원 kailto7@futurekorea.co.kr

【해외리포트】

미국은 지금 여성 상위 시대

정치, 경제, 학계 등 최고위직에 진출한 여성들, 美 역사상 최고 수준

미국사회에서 여성들의 활약은 대단하다.

지난 11월 6일 선거 후 뉴햄프셔 주에서는 미 역사상 최초로 주지사, 연방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모두가 여성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 인구 130만의 작은 주인 뉴햄프셔에는 이날 주지사와 2명의 연방하원의원을 선출했는데 모두 여성 후보가 당선됐다. 이미 뉴햄프셔 연방 상원의원으로 재임 중인 2명의 여성과 함께 이들은 뉴햄프셔를 대표하는 공인이 됐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이번 선거로 여성 연방상원의원이 역사상 최대인 20명이 된 것과 함께 정계에서 여성들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는 상징으로 보고 있다. 이미 많은 미국 여성들은 입법·사법·행정부 고위직에 두루 포진하고 있다. 내년에 출범할 제113기 연방 의회에서는 전체 100명의 연방상원의원 중 20명이 여성이고 연방하원의원에서는 전체 435명 중 81명이 여성이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원은 2008년 미 역사상 최초로 여성 연방하원의장을 역임했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종신직인 9명의 연방대법관 중 3명이 여성이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 역사상 세 번째 여성 국무장관인데 첫 번째 여성 국무장관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매들린 올브라이트였고 두 번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곧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후임으로 역시 여성인 수잔 라이스 UN 주재 미대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9·11 테러로 신설된 후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연방 부처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국토안보부의 수장 역시 여성인 자넷 나폴리타노 전 애리조나 주지사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 이행을 담당하는 건강인적자원부 장관은 캐서린 세벨리우라는 여성이며 미국 경제의 1/4을 차지하는 식품과 제약분야를 관할하는 식품의약청(FDA) 대표도 여성인 마가렛 햄버그다. 올해 2조5000억 달러의 미국 금융시장 개선을 주도한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매리 스카피로라는 여성이다.

미국 각계에서 활약 중인 여성 지도자들

미국에서는 그동안 35명의 여성 주지사가 나왔는데 현재는 7명의 여성 주지사가 활동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도 많은 미국 여성들은 회사 최고위 경영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드라 누이 펩시콜라 회장, 버지니아 로메티 IBM회장, 메그 화이트맨 휴렛 패커드 회장, 마리사 마이어 야후 회장, 앤 스위니 디즈니 미디어 회장, 샤프라카즈 오라클 회장, 엘렌 쿨만 듀퐁 사장, 잰 필드 맥도날드 사장, 수잔 와즈시스키 구글 수석부사장, 매리 바라 GM 수석부사장 등이 대표적인 예다.

언론계에서도 최고위직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질 아브람손은 지난해 6월 1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타임스 최초의 여성 편집장이 됐다. 이밖에 로라 랑 타임지 회장, 네이글 타임워너 HBO사장, 티나 브라운 뉴스위크 편집장 등이 있다. CNN 선임 국제부장인 크리스천 아만포어, 폭스뉴스의 그레타 벤 서스테렌, ABC의 다이안 소이어 등은 각 방송사의 간판 여성 언론인으로 중량 있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여성 대학 총장들이 나오고 있다.(후략)

해외리포트

미국은 지금 여성 상위 시대

정치, 경제, 학계 등 최고위직에 진출한 여성들, 美 역사상 최고 수준

미국사회에서 여성들의 활약은 대단하다.

지난 11월 6일 선거 후 뉴햄프셔 주에서는 미 역사상 최초로 주지사, 연방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모두가 여성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 인구 130만의 작은 주인 뉴햄프셔에는 이날 주지사와 2명의 연방하원의원을 선출했는데 모두 여성 후보가 당선됐다. 이미 뉴햄프셔 연방상원의원으로 재임 중인 2명의 여성과 함께 이들은 뉴햄프셔를 대표하는 공인이 됐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이번 선거로 여성 연방상원의원이 역사상 최대인 20명이 된 것과 함께 정계에서 여성들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는 상징으로 보고 있다. 이미 많은 미국 여성들은 입법·사법·행정부 고위직에 두루 포진하고 있다. 내년에 출범할 제113기 연방 의회에서는 전체 100명의 연방상원의원 중 20명이 여성이고 연방하원의원에서는 전체 435명 중 81명이 여성이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원은 2008년 미 역사상 최초로 여성 연방하원의장을 역임했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종신직인 9명의 연방대법관 중 3명이 여성이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 역사상 세 번째 여성 국무장관인데 첫 번째 여성 국무장관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매들린 올브라이트였고 두 번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곧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후임으로 역시 여성인 수잔 라이스 UN 주재 미대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9·11 테러로 신설된 후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연방 부처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국토안보부의 수장 역시 여성인 자넷 나폴리타노 전 애리조나 주지사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 이행을 담당하는 건강인적자원부 장관은 캐서린 세벨리우라는 여성이며 미국 경제의 1/4을 차지하는 식품과 제약 분야를 관할하는 식품의약청(FDA) 대표도 여성인 마가렛 햄버그다. 올해 2조5000억 달러의 미국 금융시장 개선을 주도한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매리 스카피로라는 여성이다.

미국 각계에서 활약 중인 여성 지도자들

미국에서는 그동안 35명의 여성 주지사가 나왔는데 현재는 7명의 여성 주지사가 활동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도 많은 미국 여성들은 회사 최고위 경영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드라 누이 펩시콜라 회장, 버지니아 로메티 IBM 회장, 메그 화이트맨 휴렛 패커드 회장, 마리사 마이어 야후 회장, 앤 스위니 디즈니 미디어 회장, 샤프라 카즈 오라클 회장, 엘렌 쿨만 듀퐁 사장, 잰 필드 맥도날드 사장, 수잔 와즈시스키 구글 수석부사장, 매리 바라 GM 수석부사장 등이 대표적인 예다.

언론계에서도 최고위직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질 아브람손은 지난해 6월 1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타임스 최초의 여성 편집장이 됐다. 이밖에 로라 랑 타임지 회장, 네이글 타임워너 HBO 사장, 티나 브라운 뉴스위크 편집장 등이 있다. CNN 선임 국제부장인 크리스천 아만포

뉴햄프셔 주에서는 미 역사상 최초로 주지사, 연방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모두가 여성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 전체 100명의 연방상원의원 중 20명이 여성이고 연방하원의원에서는 전체 435명 중 81명이 여성이다. 종신직인 9명의 연방대법관 중 3명이 여성이다.



〈왼쪽 위부터〉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캐서린 세빌리우 건강인적자원부 장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커스텐 질리브랜드 상원의원,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 〈왼쪽 아래부터〉엘렌 케이건 대법관, 인두라 누이 펩시콜라 회장, 드루 파우스트 하버드대 총장, 버지니아 로메티 IBM 회장, 매크 화이트맨 휴렛 패커드 회장, 질 아브람손 뉴욕타임스 편집장

미국에서 여성들이 이처럼 각 분야 최고위직에서 활약하게 된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고위직을 맡지 못한다는 이른바 '유리천장'을 부숴온 노력의 산물이다.

어, 폭스뉴스의 그레타 벤 서스테렌, ABC의 다이안 소이어 등은 각 방송사의 간판 여성 언론인으로 중량 있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여성 대학 총장들이 나오고 있다.

아이비리그인 하버드, 프린스턴, 브라운, 펜실베니아대 총장도 여성이다. 브라운대의 경우 지난 11년 간 흑인 여성인 루스 시몬스가 총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6월 후임으로 역시 여성인 크리스티나 팍슨이 제19대 총장이 됐다. 아이비리그를 포함, 미국 전체 대학의 총장 중 23%가 여성이다.

미국에서 여성들이 이처럼 각 분야 최고위직에서 활약하게 된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고위직을 맡지 못한다는 이른바 '유리천장'을 부숴온 노력의 산물이다. 미국에서 여성들은 1920년 수정헌법 19조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투표권이 없었다. 남북전쟁 후 1869년 수정헌법 15조로 흑인 남성들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백인 여성을 비롯, 미국의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기까지는 그 뒤 50년이라는 반세기가 걸렸다. 어렵게 투표권은 얻었지만 여전히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들로만 인식되던 여성들이 집 밖에서도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미국사회가 갖게 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벌어진 로지 리베타(The Rosie Riveter) 캠페인이다. 로지는 한 여성의 이름이고 리베타는 리벳(대못)을 박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대못을 박는 로지'로 해석될 수 있다.

당시 남성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느라 후방인 미국 군수공장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했다. 이에 여성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군수공장으로 가 남성들이 해왔던 용접, 대못 박기를 했다. 이것이 여성들의 사회참여 운동의 계기가 돼 1944년까지 약 200만명의 여성들이 군수공장에서 일했다. 머리를 수건으로 묶고 소매를 걷어붙인 한 여성이 오른 팔을 굽히며 '우리도 할 수 있다(We Can do it!)'고 말하는 당시 포스터는 로지 리베타 캠페인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 운동은 1960년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해 달라는 운동

(feminism)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 여성들이 각 분야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인식이 크다. 전체 연방의원 중 여성의원은 18%, 여성 주지사는 14%, 포춘 500대 기업에서 여성 CEO와 이사가 각각 3%, 16%인 것을 볼 때 더 많은 여성들이 각 분야에서 지도자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美 여성 대통령 나올 때

여성인 커스튼 질리브랜드 연방상원의원(뉴욕)은 "의회 경험을 볼 때 여성이 위원회와 청문회에 참여하면 더 나은 결정이 이뤄졌다"며 "많은 여성들이 정치, 경제 분야 등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여성들은 특성상 합의를 잘해 정치권에서는 초당적인 활동이 유리하다"며 "여성들이 참여하면 남성들의 시각을 보완해 정부와 회사에 하는 결정들이 더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주변에서 벗어나기' (off the sideline)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그녀는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다 잘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엄마들이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어린이 케어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하고 여성들은 투표, 의견개진 등 쉬운 것부터 하며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력한 리더십 연구소인 젠거 포크맨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은 리더의 16가지 능력 중 12가지에서 남성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7280명의 미국 각분야 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은 아무도 하지 않은 일 먼저 시작하기, 자기개발, 높은 성실과 정직, 결과를 내는 추진력, 다른 사람을 발전시키는 것, 다른 사람의 동기부여를 하는 것, 좋은 관계 수립, 협력과 팀워크, 문제를 풀고 이슈 분석하기 등에서 남성보다 우월했다.

보통 남성의 특징으로 알려진 아무도 하지 않은 일 먼저 시작하기, 결과를 내는 추진력 등에서 여성은 큰 차이를 내며 우월함을 보였다. 2007년 오바마 상원의원과 민주당 대선후보 자리를 두고 접전을 벌였던 클린턴 국무장관은 벌써부터 2016년 민주당의 강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흑인 대통령도 나왔으니 이제는 여성 대통령이 나올 때라는 인식이 미국사회에서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애틀란타=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글로벌 뷰】

美 최초 여성 대통령 꿈꾸는 힐러리 클린턴

워싱턴=미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에서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많고 행정부 요직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이미 여성이 국가수장을 역임하거나 재임 중인 것을 볼 때 미국에서 여성이 대통령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경제계 뿐 아니라 정계에서 여성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미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나라에서 나온다는 말인가?

하지만 여성 대통령 혹은 여성 부통령 배출과 관련해 미국 여성들은 그동안 실패해 왔다. 1984년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제럴딘 페라로와 2008년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세라 페일린 두 여성이 미국 부통령 후보로 나왔다. 하지만 둘 다 정치에서 여성의 이미지를 향상시키지 못했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여성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여성 최고지도자 실패 史

뉴욕시 검사 출신으로 연방 하원의원이었던 페라로는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 시 부통령이었던 월터 먼데일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출마했다. 좋은 선택처럼 보였지만 1980년 대선에서 카터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다가 로널드 레이건에게 대패한 먼데일은 1984년 대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미국 경제는 레이건 대통령 재임 중 좋아졌고, 페라로 남편의 의심스런 부동산 거래가 드러나며 그녀는 먼데일에게 오히려 골칫거리가 됐다. 결국 먼데일-페라로 티켓은 전체 표의 40%를 얻는 데 그쳤다.

1984년 당시 민주당 선거 전략가들은 부통령 후보로 여성을 내세우면 여성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희망했지만 매우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 뒤 여성이 다시 부통령 후보로 나오는 데는 25년이 걸렸다. 2008년 공화당 존 매케인의 러닝메이트가 된 세라 페일린 역시 골칫거리가 됐다. 알래스카 주지사로서 그녀는 훌륭한 선택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페일린은 국내 및 국제 현안 모두에 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통령 후보로 그녀는 매케인에 힘이 되기보다는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정도였다. 그녀가 언론에 부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평판은 악화됐다.

하지만 2008년에 또 다른 여성인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은 이전의 어떤 여성보다도 가장 대통령직에 오를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 클린턴은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강력한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패배를 인정하기 직전까지 거의 버락 오바마를 따라잡았다. 그녀는 21개 주 예비선거에서 승리했고 막판까지 오바마와 경합을 벌였다.

클린턴이 거물 정치인이 된 것은 그녀가 1992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 1996년 밥 돌 상원의원을 대선에서 물리쳤던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쉽다. 하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은 모니카 르윈스키 및 다른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이미지가 추락했고 힐러리 클린턴은 뉴욕주 연방상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이 재난에서 살아남았다.

클린턴은 세계 무대에서 정치, 외교적으로 중량급 인사가 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두고 치열한 싸움 끝에 오바마에게 패한 후 그녀는 강력한 국무장관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했다. 그녀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의 눈으로 본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시종일관 단호하고 타협하지 않을 것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후략)

글로벌 뷰

美 최초 여성 대통령 꿈꾸는 힐러리 클린턴

Hillary Clinton Still Looks Likeliest Among Women for U.S. President

도널드 커크 편집위원 · 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워싱턴=미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에서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많고 행정부 요직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이미 여성이 국가수장을 역임하거나 재임 중인 것을 볼 때 미국에서 여성이 대통령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경제계 뿐 아니라 정계에서 여성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미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나라에서 나온다는 말인가?

하지만 여성 대통령 혹은 여성 부통령 배출과 관련해 미국 여성들은 그동안 실패해 왔다. 1984년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제럴딘 페라로와 2008년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세라 페일린 두 여성이 미국 부통령 후보로 나왔다. 하지만 둘 다 정치에서 여성의 이미지를 향상시키지 못했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여성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여성 최고지도자 실패 史

뉴욕시 검사 출신으로 연방 하원의원이었던 페라로는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 시 부통령이었던 월터 먼데일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출마했다. 좋은 선택처럼 보였지만 1980년 대선에서 카터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다가 로널드 레이건에게 대패한 먼데일은 1984년 대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미국 경제는 레이건 대통령 재임 중 좋아졌고 페라로 남편의 의심스런 부동산 거래가 드러나며 그녀는 먼데일에게 오히려 골칫거리가 됐다. 결국 먼데일-페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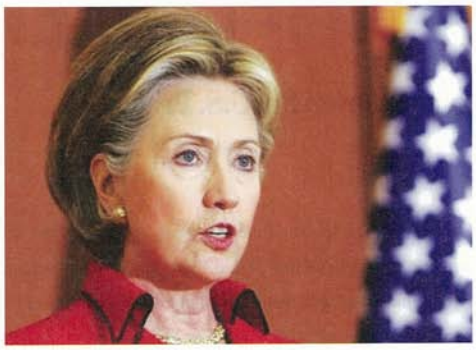


Donald Kirk
Contributing Editor
Journalist and author

WASHINGTON =The time is coming when a woman will becom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more women voting than men, with women holding increasing numbers of executive jobs, and with women as heads of state, past or present, from Britain to Germany to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logic dictates that a woman has to take over as U.S. president. How could it be otherwise in a country where women seem such a powerful force in politics as well as business?

The fact is, however, that women have fared rather badly when it came to consideration for the presidency or, for that matter, the vice presidency. Yes, two women have been nominated for vice president, Geraldine Ferraro on the Democratic ticket in 1984 and Sarah Palin on the Republican ticket in 2008. In neither case, however, did they improve the image of women in politics. In ways it might be argued, they actually did the cause of women more harm than good.

Ferraro, a member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ith a background as a prosecutor in New York City, might have seemed a good choice to run for vice president on the same ticket as Walter Mondale, who had served as vice president under President Jimmy Carter. Mondale, having gone down to defeat in 1980 in the landslide for Ronald Reagan that ended Carter's presidency, did not stand a serious chance of winning the presidency in 1984. The United States economy had been improving during Reagan's first term, and Ferraro as vice presidential candidate turned into



티켓은 전체 표의 40%를 얻는 데 그쳤다.

1984년 당시 민주당 선거 전략가들은 부통령 후보로 여성을 내세우면 여성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희망했지만 매우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 뒤 여성이 다시 부통령 후보로 나오는 데는 25년이 걸렸다. 2008년 공화당 존 매케인의 러닝메이트가 된 세라 페일린 역시 골칫거리가 됐다. 알래스카 주지사로서 그녀는 훌륭한 선택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페일린은 국내 및 국제 현안 모두에 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통령 후보로 그녀는 매케인에 힘이 되기보다는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정도였다. 그녀가 언론에 부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평판은 악화됐다.

하지만 2008년에 또 다른 여성인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은 이전의 어떤 여성보다도 가장 대통령직에 오를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 클린턴은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강력한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패배를 인정하기 직전까지 거의 버락 오바마를 따라잡았다. 그녀는 21개 주 예비선거에서 승리했고 막판까지 오바마와 경합을 벌였다.

클린턴이 거물 정치인이 된 것은 그녀가 1992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 1996년 밥 돌 상원의원을 대선에서 물리쳤던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쉽다. 하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은 모니카 르윈스키 및 다른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이미지가 추락했고 힐러리 클린턴은 뉴욕주 연방상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이 재난에서 살아남았다.

클린턴은 세계 무대에서 정치, 외교적으로 중량급 인사가 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두고 치열한 싸움 끝에 오바마에게 패

a liability after her husband's dubious real estate dealings were exposed. The Mondale-Ferraro ticket won barely 40 percent of the votes.

Democratic strategists in 1984 had hoped the presence of a woman on the ticket might help to win over female voters, but they were badly mistaken. It would be nearly a quarter of a century before a woman again ran for vice president. Sarah Palin, on the Republican ticket in 2008 with John McCain, also proved to be a liability. She might have appeared as an inspired choice in view of her service as governor of Alaska, but actually she proved to be ignorant of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issues. As a candidate, she was more of a curiosity than an asset for McCain, and her reputation worsened as her responses to the media showed her inadequacies.

In 2008, however, another woman, Hillary Rodham Clinton, came closer than any other women before her as a qualified aspirant for the presidency. Clinton waged a strong campaign in the Democratic primaries, nearly overtaking Barack Obama before conceding to him at the Democratic convention. She won primaries in 21 states, remaining a contender to the final days. It would be easy to say Clinton was a major political figure simply because she was married to Bill Clinton, who had defeated President George H.W. Bush in 1992 and Senator Robert Dole in 1996. Bill Clinton's presidency, however, was tarnished by the scandal of his relationship with Monica Lewinsky and other women, and Hillary Clinton had to survive those disasters on the way to achieving her own prominence as a U.S. senator from New York state.

Clinton, moreover, has shown herself to be a political and diplomatic heavyweight on the world stage. Having lost to Obama in a bruising fight for the presidential nomination, she has distinguished herself as a strong secretary of state. In visits to Seoul, where I've seen her as a journalistic observer at press conferences, she has maintained a tough, seemingly

한 후 그녀는 강력한 국무장관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했다. 그녀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의 눈으로 본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시종일관 단호하고 타협하지 않을 것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가장 유능한 국무장관, 하지만 시간은 반대편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하도록 중재에 성공하면서 그녀는 중동에서 능력 있는 협상가로 재부상하고 있다. 약 4년 간 국무장관으로 활동한 그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능한 국무장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을 것 같다. 클린턴의 이런 경력은 그녀가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데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다. 그녀는 그때가 되면 69세다. 그 나이가 돼도 클린턴이 지금과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을지 사실 회의적이다. 더욱이 다른 여성들이 대통령 혹은 부통령 자리를 두고 분명히 도전할 것이다. 평균적으로 볼 때 언젠가 여성 중 한 명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 주요 정당들이 입증된 경력을 가진 여성을 대통령감으로 보는지 아니면 '여성 표'를 얻기 위한 부수적인 인물로 생각하는지에 좌우될 것이다.

uncompromising position regarding North Korea. In the middle east, as seen in her latest attempt at bringing about a ceasefire between Israel and the Hamas, she has again appeared as an able negotiator. After nearly four years on the job, she may go down in history as one of America's most effective secretaries of state.

Clinton's record puts herself in a strong position to drum up support for the Democratic presidential nomination in 2016. Time, however, is working against her. She will by then be 69 years old. One wonders if she will have the same energy as she has now. Moreover, other women will doubtless be campaigning for nomination for president or vice president. By any law of averages, some day, one of them will win. Much will depend on whether the major U.S. parties turn to women with proven records or place their hopes on secondary figures in hopes of winning the "women's vote."

번역 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황의각 교수의 세상보기】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조선 초기에 봉건지배 세력이 성리학에 기반을 둔 남성주도의 가부장제를 정착시키면서 여성들을 남성들의 출세와 사회적 위신을 위해 희생하도록 강요해 왔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사회생활에 전념하고 안정적으로 가계의 대(代)를 계승할 수 있도록 출산과 육아, 그리고 가사노동과 관리를 떠맡게 됐다.

이런 가족문화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서 법적으로 남녀평등이 확립돼 있다고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은 여전히 여성억압과 여성폄하의 잠재의식을 지니고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보는 일부 남성들 뿐만 아니라 상당수 여성유권자들에게마저도 여성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 것으로 관찰된다.

우리 사회의 여성관과 태초의 여성상

최근 황상민 연세대 교수가 박근혜 후보를 평해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이 여성인데 박 후보는 생기만 갖고 있을 뿐 여자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으로 여론의 비판이 일자, 자기는 "젠더(gender), 즉, 사회적 관계로서의 성별"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육체적 생물학적 관계로서의 성(sex) 차원"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구차한 변명을 한 적이 있었다. 또 민중화가 홍성담은 예술작품이라는 명분으로 박근혜 후보가 아이를 낳는 황당한 풍자그림을 그려 대선 30일을 앞두고 전시했다고 한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는 호모루덴스(Homo ludens : 유희적 인가) 콤플렉스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헛소리나 정신병적 행동이 심심치 않게 작동하고 있어 쓴 웃음을 금할 수 없다.

태초에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도록 창조된 인간은 각 분야에 걸쳐 성차별이나 불이익이 허용돼서는 안된다. 그러나 오랜 집단가족공동사회의 생활관습을 통해 남녀분업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오면서 현실적으로 세계도처에서 여성의 역할은 주로 가사에 편중돼 사회 진출이 여러 면으로 제약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여성 사회 진출에 대한 제약은 남성들이 육체적 힘과 완력으로 각 분야를 선취독점한 후 여성을 가사에만 가둬두기 위해 여성의 정치나 사회 진출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막아왔던 데에도 기인하지만, 일정 부분은 여성들의 강한 남성의존성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들이 가정밖에서의 일과 업무에 남성보다 태생적으로 뒤진다는 뜻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많은 외부 활동이나 애국행동에서 여성이 남성에 못지않게 공헌한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다.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삼한통일의 기초를 다졌던 선덕여왕이며 일제침략에 저항해 분연히 일어선 유관순 열사 등 훌륭한 여성의 기여는 수없이 많다. 세계사적으로도 오래 전 구약 사사기시대에 여성의 두드러진 활약상의 좋은 예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Jabin)의 침략을 여선지자이자 지도자였던 드보라(Deborah)가 물리쳤던 기록을 들 수 있다(사사기 4-5장). 이 사건에서 주목할 사항은 첫째, 여성들의 활약이 남성에 못지않게 돋보인다는 점, 둘째 하나님이 부여하신 카리스마를 가진 여지도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원천이 돼 여성의 우수함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드보라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대처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 등 많은 걸출한 여성지도자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과 기회가 허용되기만 하면 정치 사회 공직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과 역할이 빠르게 신장될 수 있다는 점이 요즘 세계적 추세이자 현실이다.(후략)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황의각 편집고문 · 고려대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조선 초기에 봉건지배세력이 성리학에 기반을 둔 남성주도의 가부장제를 정착시키면서 여성들을 남성들의 출세와 사회적 위신을 위해 희생하도록 강요해 왔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사회생활에 전념하고 안정적으로 가계의 대(代)를 계승할 수 있도록 출산과 육아, 그리고 가사노동과 관리를 떠맡게 됐다.

이런 가족문화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서 법적으로 남녀평등이 확립돼 있다고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은 여전히 여성억압과 여성폄하의 잠재의식을 지니고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보는 일부 남성들뿐 만아니라 상당수 여성유권자들에게마저도 여성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 것으로 관찰된다.

우리 사회의 여성관과 태초의 여성상

최근 황상민 연세대 교수가 박근혜 후보를 평해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이 여성인데 박 후보는 생식기만 갖고 있을 뿐 여자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으로 여론의 비판이 일자, 자기는 "젠더(gender), 즉, 사회적 관계로서의 성별"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육체적 생물학적 관계로서의 성(sex)차원"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구차한 변명을 한 적이 있었다. 또 민중화가 홍성담은 예술작품이라는 명분으로 박근혜 후보가 아이를 낳는 황당한 풍자그림을 그려 대선 30일을 앞두고 전시했다고 한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는 호모루덴스(Homo ludens : 유희적 인간) 콤플렉스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헛소리나 정신병적 행동이 심심치 않게 작동하고 있어 쓴 웃음을 금할 수 없다.

태초에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도록 창조된 인간은 각 분야에 걸쳐 성차별이나 불이익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랜 집단가족공동사회의 생활관습을 통해 남녀분업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오면서 현실적으로 세계 도처에서 여성의 역할은 주로 가사에 편중돼 사회 진출이 여러 면으로 제약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여성 사회 진출에 대한 제약은 남성들이 육체적 힘과 완력으로 각 분야를 선취독점한 후 여성을 가사에만 가둬두기 위해 여성의 정치나 사회 진출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막아왔던 데에도 기인하지만, 일정 부분은 여성들의 강한 남성의존성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들이 가정밖에서의 일과 업무에 남성보다 태생적으로 뒤진다는 뜻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많은 외부 활동이나 애국행동에서 여성이 남성에 못지않게 공헌한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다.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삼한통일의 기초를 다졌던 선덕여왕이며 일제침략에 저항해 분연히 일어선 류관순 열사 등 훌륭한 여성의 기여는 수없이 많다. 세계사적으로도 오래 전 구약 사사기시대에 여성의 두드러진 활약상의 좋은 예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Jabin)의 침략을 여선지자이자 지도자였던 드보라(Deborah)가 물리쳤던 기록을 들 수 있다(사사기 4-5장). 이 사건에서 주목할 사항은 첫째, 여성들의 활약이 남성

에 못지않게 돋보인다는 점, 둘째 하나님이 부여하신 카리스마를 가진 여지도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원천이 돼 여성의 우수함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드보라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대처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 등 많은 걸출한 여성지도자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과 기회가 허용되기만 하면 정치 사회 공직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과 역할이 빠르게 신장될 수 있다는 점이 요즘 세계적 추세이자 현실이다. 199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의 결의 이후 과거 10여년에 걸쳐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 및 사회 진출이 괄목할 만큼 신장되고 있음을 2005년 성 평등을 위한 UN보고서(Gender Equality)는 밝히고 있다.

한국여성의 우월성은 남성을 능가한다

특히 우리 한국여성의 우월성은 공정한 경쟁과 기회가 보장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남성을 능가한다. 특히 한국의 여성은 어머니 뱃속에서 보호되며 자란 남성보다 훨씬 강인하고 생활력이 강하다. 사람이 아닌 모든 동물세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암컷이 수컷보다 생존 경쟁력이 강하며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다.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 사회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력하면 여성자원은 국가도약과 사회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남녀인권과 성(gender)의 공정성이 바로 평가되는 나라로서의 국권(國權)과 국격 및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를 계기로 경제 문화적으로 국운확대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세계적으로 남녀인권과 성(gender)의 공정성이 바로 평가되는 나라로서의 국권(國權)과 국격 및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를 계기로 경제 문화적으로 국운확대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이다.

물론 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이 남성이 되느냐 여성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확고한 국민통합철학과 카리스마(하늘이 내린 지도자의 은사)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잘 준비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돼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국운이 상승할 것이다. 나라를 이끄는 일은 통치권자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지도자는 자기 귀에 거슬려도 바른말하는 참모를 존중하며 거느릴 줄 알아야 한다. 훌륭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각자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국민 모두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국정책임자는 권력이 주어진 만큼 모든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끝으로 우리의 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분이 지녀야 할 통치자로서의 성품, 자질과 능력을 송(宋)나라 왕안석(王安石)이 삼불기(三不欺)에서 적시한 조언을 참고로 제시하려 한다.

仁足以使民不忍欺(인족이사민불인기), 智足以使民不能欺(지족이사민불능기), 政足以使民不敢欺(정족이사민불감기) (어진 마음은 백성들로 하여금 차마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에 족하고, 지혜로움은 백성들로 하여금 속일 수 없도록 하기에 족하며, 엄정한 법 집행은 백성들로 하여금 감히 속이려들지 못하도록 하기에 족하다.) 어진 마음과 지혜로움을 지닌 공정한 인물이 국가의 지도자로 선출되기를 바란다.

【분 석】

여성 지도자에 대한 국민 생각

여론조사, 여성 리더에 대한 기대감 증가 추세 반영

여성 최고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떨까?

제17대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2007년 12월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국내에서 언제쯤 여성 대통령이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5년 후'라는 응답이 58.7%로 가장 많았고 10년 후(26.9%), 15년 후(81.1%) 순으로 조사돼 85.6%가 10년 이내에 여성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성 대통령이 5년 후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의견은 대통합민주신당(36.7%)이나 민주당(18.8%)에 비해 한나라당(69.9%)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전체 여론조사 2위를 달리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그해 8월 경선 패배 이후 깨끗이 승복한 후 차기 대선을 기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60.8%)이 남성(56.2%)보다 5년 후 여성 대통령 당선을 전망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10년 후에 당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남성(87.2%>84.2%)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여성 대통령 탄생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많아 5년 후 당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20대(68.8%)가 가장 높았고, 30대(62.8%), 50대 이상(57.9%), 40대(50.7%) 순으로 조사됐으며, 10년 후에 당선될 것이라는 의견 역시 20대(100%), 30대(92.2%), 40대(81.9%) 순이었고, 50대 이상(78.3%)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여성대통령론, 선거전략으로도 성공

5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구호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11월 26일 처음 공개된 박 후보의 유세 차량에도 이 구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 이 구호는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산하 여의도 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성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되었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71.9%에 달했다. 특히 새누리당 및 보수층에 대한 반감이 강한 30~34세 여성층에서도 '여성 대통령'에 공감하는 응답이 81.4%에 달했다.

외부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된다.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박근혜-문재인 양자 대결 구도가 확정된 11월 24일 동아일보와 채널A는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두 후보의 성별 지지율은 남성에서 △문 후보 46.7% △박 후보 41.9%로 문 후보가 4.8%포인트 앞섰다. 하지만 여성에서는 △박 후보 48.4% △문 후보 37.0%로 박 후보의 지지율이 11.4%p 우세했다.

이 조사에서 '여성대통령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성은 62.7%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남성 중 공감한다는 응답은 50.4%였다. 특히 20대 여성에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49.6%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48.1%)을 앞섰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30대 여성 51.7% △40대 여성 61.4% △50대 여성 75.1% △60대 이상 여성 73.1%로 연령이 높을수록 공감도 역시 높았다.

야권에서는 박근혜 후보 측의 '여성대통령론'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0월 31일 종합편성TV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박근혜 후보의 '여성대통령론' 논란과 관련, "생식기만 여성"이라는 발언을 했다.(후략)

분석

여성 지도자에 대한 국민 생각

여론조사, 여성 리더에 대한 기대감 증가 추세 반영

여성 최고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떨까?

제17대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2007년 12월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국내에서 언제쯤 여성 대통령이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5년 후'라는 응답이 58.7%로 가장 많았고 10년 후(26.9%), 15년 후(81.1%) 순으로 조사돼 85.6%가 10년 이내에 여성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성 대통령이 5년 후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의견은 대통합민주신당(36.7%)이나 민주당(18.8%)에 비해 한나라당(69.9%)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전체 여론조사 2위를 달리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그해 8월 경선 패배 이후 깨끗이 승복한 후 차기 대선을 기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60.8%)이 남성(56.2%)보다 5년 후 여성 대통령 당선을 전망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10년 후에 당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남성(87.2%)84.2%)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여성 대통령 탄생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많아 5년 후 당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20대(68.8%)가 가장 높았고, 30대(62.8%), 50대 이상(57.9%), 40대(50.7%) 순으로 조사됐으며, 10년 후에 당선될 것이라는 의견 역시 20대(100%), 30대(92.2%), 40대(81.9%) 순이었고, 50대 이상(78.3%)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여성대통령론, 선거전략으로도 성공

5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구호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11월 26일 처음 공개된 박 후보의 유세 차량에도 이 구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 이 구호는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산하 여의도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성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되었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71.9%에 달했다. 특히 새누리당 및 보수층에 대한 반감이 강한 30~34세 여성층에서도 '여성 대통령'에 공감하는 응답이 81.4%에 달했다.

>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여성 대통령 탄생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많았다. 20대(68.8%)가 가장 높았고, 30대(62.8%), 50대 이상(57.9%), 40대(50.7%) 순으로 조사됐다.

외부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된다.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박근혜-문재인 양자대결 구도가 확정된 11월 24일 동아일보와 채널A는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두 후보의 성별 지지율은 남성에서 △문 후보 46.7% △박 후보 41.9%로 문 후보가 4.8%포인트 앞섰다. 하지만 여성에서는 △박 후보 48.4% △문 후보 37.0%로 박 후보의 지지율이 11.4%p 우세했다.

이 조사에서 '여성대통령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성은 62.7%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남성 중 공감한다는 응답은 50.4%였다. 특히 20대 여성에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49.6%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48.1%)을 앞섰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30대 여성 51.7% △40대 여성 61.4% △50대 여성 75.1% △60대 이상 여성 73.1%로 연령이 높을수록 공감도 역시 높았다.

야권에서는 박근혜 후보 측의 '여성대 ▸▸

통령론' 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0월 31일 종합편성TV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에 출연해 박근혜 후보의 '여성대통령론' 논란과 관련, "생식기만 여성"이라는 발언을 했다.

여성 때리기

이날 황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남자와 다른 생식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뜻하는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자식을 낳아 본 어머니가 될 수 있겠다.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고 그런 것을 여성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후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몰차게 비난한 황 교수의 이 발언은 이번 대선 정국에서 박 후보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

좌파성향 화가 홍성담 씨의 자극적인 그림 또한 여성대통령 논란과 맞물려서 역풍을 자초한 모양새다. 홍 씨는 지난 11월 2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출산-1' 이라는 그림을 공개했다. 해당 그림은 여성이 다리를 벌린 부분을 크게 묘사했으며, 이 여성의 성기에서 뱀의 몸통을 가진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출산되는 모습이 나온다.

이 그림에는 홍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세상의 모든 출산은 성스럽다? 유신독재의 망령을 출산해도 그것은 성스럽고 거룩하다? 성스러운 대한민국의 온 겨울이 내년 사쿠라 피는 봄을 위해 갖은 힘을 쓰는구나"라는 글이 남겨져 있다.



야권에서는 박근혜 후보 측의 '여성대통령론' 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좌파성향 화가 홍성담 씨의 자극적인 그림 또한 여성대통령 논란과 맞물려서 역풍을 자초한 모양새다.

미국도 여성 대통령 논의 '모락모락'

한편, 우리보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긴 미국에서도 오는 2016년 대선에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민주당 산하의 '공공정책 여론조사' (PPP)는 지난 11월 17일(현지시간) 2016년 대선 후보 조사에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클린턴 장관이 57%의 지지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으며, 공화당 진영에서는 크리스 크리스티 지사가 21% 지지로 선두를 달렸다고 밝혔다. 이 여론조사는 각당의 예비선거에 등록한 공화당원 742명과 민주당원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정재욱의 미디어워치】

우리에게도 '철의 여인'이 필요하다

영화-드라마에서 조명하는 여성 리더십

18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후보들의 선거전이 한창이다. 언론에서는 유력 두 정당의 후보가 맞붙은 양강 대결 구도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 비해 눈에 띄는 점은 그 중에 한 명이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들러리가 아니라 당선 가능성도 있단다. 격세지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 국회의원을 찾기도 쉽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 대중문화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몇 해 전에 이미 '여성 대통령'을 다룬 드라마가 나왔을 정도니 대중문화가 현실 정치보다 앞서간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2010년 SBS TV에서 방송한 〈대물〉이 그 드라마인데, 박인권의 동명만화를 TV에 옮긴 작품이다. 전직 아나운서 서혜림(고현정)이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후, 도지사를 거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드라마는 화제 속에 방송됐지만 여러 가지 논란도 낳았다. 현실 정치 상황을 다소 무리하게 풍자하고 이전 정권인 노무현 정부를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식의 비판이다. 그러나 대중문화에서 여성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활약한 의미는 작지 않았다. 극중에서 여성 대통령 서혜림이 국내외적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이제껏 수동적이기만 했던 기존 TV 드라마의 여성보다 진일보한 모습이었다.

대물 · 선덕여왕… 시대를 앞서가다

물론 그 중심에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 서혜림과 그를 연기한 고현정이 있었다. 고현정이 연기한 여성 대통령이 힘을 받은 것은 그의 전작 때문이기도 했다. 그가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지도자의 아이콘처럼 된 것은 2009년 방송한 MBC TV 〈선덕여왕〉의 미실 역 때문이었다. 이 드라마는 선덕여왕(이요원)과 미실이 신라의 왕좌를 쟁취하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경쟁을 그린 작품. 결과는 당연히 선덕여왕의 몫이었다.

선덕여왕이 누구인가. 신라 최초의 여왕으로 무장 김유신을 중용함으로써 군사력으로 외세에 맞서는가 하면 외교술을 발휘해 당시 삼국의 세력균형을 이뤄낸 인물이다. 삼국사기에서 '용봉(龍鳳)의 자태와 천일(天日)의 위엄을 지녔다'라고 평한 것처럼 여성 지도자의 '롤모델'을 만든 셈이다.

이전만 해도 우리 드라마 속 여성들은 소위 '신데렐라 스토리'라 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MBC 〈사랑을 그대 품 안에〉(1994)의 백화점 점원 이진주(신애라)가 이런 역할의 원조 격이다. 어려운 환경에도 밝고 착하게 살아가다 재벌 2세 강풍호(차인표)를 만나 사랑함으로써 신분상승을 이룩하는 스토리, 이후 여성 캐릭터는 역경을 딛고 일과 사랑에 모두 성공하는 '캔디형'으로 진화하지만, 여전히 그녀 옆을 든든히 지키는 남자의 도움은 필수다.

MBC 〈별은 내 가슴에〉(1997)의 패션디자이너 이연이(최진실)나 SBS 〈유리구두〉(2002)의 김윤희(김현주)가 그런 예들. 비슷한 종류의 여자 주인공들은 이후에도 우리 드라마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캐릭터가 됐다.

이런 맥락에서 온전히 본인의 능력과 성품만으로 시대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 대통령 서혜림과 선덕여왕이 우리 대중문화에서 주목 받고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 리더로서 여성의 역할과 능력이 필요해지는 현실을 앞서 반영한 셈이다.(후략)



정재욱의 미디어워치

우리에게도 '철의 여인'이 필요하다

영화-드라마에서 조명하는 여성 리더십

18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후보들의 선거전이 한창이다. 언론에서는 유력 두 정당의 후보가 맞붙은 양강 대결 구도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 비해 눈에 띄는 점은 그 중에 한 명이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들러리가 아니라 당선 가능성도 있단다. 격세지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 국회의원을 찾기도 쉽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 대중문화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몇 해 전에 이미 '여성 대통령'을 다룬 드라마가 나왔을 정도니 대중문화가 현실 정치보다 앞서간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2010년 SBS TV에서 방송한 〈대물〉이 그 드라마인데, 박인권의 동명만화를 TV에 옮긴 작품이다. 전직 아나운서 서혜림(고현정)이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후, 도지사를 거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드라마는 화제 속에 방송됐지만 여러 가지 논란도 낳았다. 현실 정치 상황을 다소 무리하게 풍자하고 이전 정권인 노무현 정부를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식의 비판이다. 그러나 대중문화에서 여성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활약한 의미는 작지 않았다. 극중에서 여성 대통령 서혜림이 국내외적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이제껏 수동적이기만 했던 기존 TV 드라마의 여성보다 진일보한 모습이었다.

대물 · 선덕여왕… 시대를 앞서가다

물론 그 중심에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 서혜림과 그를 연기한 고현정이 있었다. 고현정이 연기한 여성 대통령이 힘을 받은 것은 그의 전작 때문이기도 했다. 그가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지도자의 아이콘처럼

> 선덕여왕은 신라 최초의 여왕으로 무장 김유신을 중용함으로써 군사력으로 외세에 맞서는가 하면 외교술을 발휘해 당시 삼국의 세력균형을 이뤄냈다. 여성 지도자의 '롤모델'을 만든 셈이다.

된 것은 2009년 방송한 MBC TV 〈선덕여왕〉의 미실 역 때문이었다. 이 드라마는 선덕여왕(이요원)과 미실이 신라의 왕좌를 쟁취하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경쟁을 그린 작품. 결과는 당연히 선덕여왕의 몫이었다.

선덕여왕이 누구인가. 신라 최초의 여왕으로 무장 김유신을 중용함으로써 군사력으로 외세에 맞서는가 하면 외교술을 발휘해 당시 삼국의 세력균형을 이뤄낸 인물이다. 삼국사기에서 '용봉(龍鳳)의 자태와 천일(天日)의 위엄을 지녔다'라고 평한 것처럼 여성 지도자의 '롤모델'을 만든 셈이다.

이전만 해도 우리 드라마 속 여성들은 소위 '신데렐라 스토리'라 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MBC 〈사랑을 그대 품 안에〉(1994)의 백화점 점원 이진주(신애라)가 이런 역할의 원조 격이다. 어려운 환경에도 밝고 착하게 살아가다 재벌 2세 강풍호(차인표)를 만나 사랑함으로써 신분상승을 이룩하는 스토리. 이후 여성 캐릭터는 역경을 딛고 일과 사랑에 모두 성공하는 '캔디형'으로 진화하지만, 여전히 그녀 옆을 든든히 지키는 남자의 도움은 필수다.

MBC 〈별은 내 가슴에〉(1997)의 패션디자이너 이연이(최진실)나 SBS 〈유리구두〉(2002)의 김윤희(김현주)가 그런 예들. 비슷한 종류의 여자 주인공들은 이후에도 우리 드라마에서 혼하게 만날 수 있는 캐릭터가 됐다.

이런 맥락에서 온전히 본인의 능력과 성품만으로 시대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 대통령 서혜림과 선덕여왕


선덕여왕


대물


철의여인

이 우리 대중문화에서 주목 받고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 리더로서 여성의 역할과 능력이 필요해지는 현실을 앞서 반영한 셈이다.

여성 지도자 사회의 한 축으로 등장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여러 분야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져 '이제 여성 대통령이 나올 때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올해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506명 가운데 여성이 211명(41.7%)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국회에 진출하는 여성도 꾸준히 늘어 19대 총선에선 46명으로 15.7%까지 늘어났다.

더욱이 이번 대선에선 박근혜 후보뿐만 아니라 여성 후보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등 4명이나 된다. 등록한 7명의 후보 중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했으니 우리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가 명실상부하게 중요한 축을 형성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의 대처 총리 같은 여성 지도자를 볼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는 공기업 민영화나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난제를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영국의 '복지병' 을 해결한 주인공이다. 11년이라는 최장기 재임기간은 영국 국민들이 그에게 보내는 지지가 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처는 영국의 '복지병' 을 해결한 주인공이다. 우리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포퓰리즘 병' 을 치료할 '철의 여인' 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가렛 대처가 영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다면 올초 개봉한 영화 〈철의 여인〉을 보면 된다. 영화는 총리에서 퇴임한 후 가벼운 치매 증상으로 요양 치료를 받는 대처가 과거의 중요한 순간순간을 회상하며 돌아보는 형식이다. 영국을 바로 세우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과 동시에 남편에게 소홀했던 인간적인 고뇌가 그려졌다.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대처는 '대처보다 더 대처다웠다' 는 평가. 영화를 보면 아마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지 모르겠다. 우리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포퓰리즘 병' 을 치료할 '철의 여인' 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정치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중의 기분만 묻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묻지 않고요." 영국을 위해 신념을 굽히지 않은 대처가 영화에서 남긴 말이다.

정재욱 기자 jujung19@naver.com

【미래와 청년】

南北 모두를 품는 리더십을 기다린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자신의 꿈을 일기로 써오라고 숙제를 내주셨다. 나는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축구단을 만들겠다고 썼다. 축구가 좋아서가 아니라 TV에 나오는 축구단엔 왜 남자만 있는지 의아했고 일종의 남자만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다. 물론 선생님이 일기장 끝머리에 "여자 축구단은 이미 있단다"라는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바람에 머쓱하게 혼자 웃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진짜 남자만의 영역은 따로 있었다.

"커서 뭐가 될래?"하고 물으면 손들고 "대통령이 될래요"하는 애들 치고 여자는 없었다. 당돌한 남자아이들이나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약 20년이 지난 지금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의 한계조차 뛰어넘는 일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당선이 유력하다고 여겨지는 후보 중 한 명으로 여성이 등장했고 그 여성은 막판 선거를 앞두고 종횡무진하며 뛰고 있다.

'여성 리더'에 대한 거부감 거의 사라져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의미는 아마도 흑인인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와 같은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이 아닐까 생각된다. 오바마가 처음 대선 후보로 등장했을 때만 해도 그가 흑인인 것이 가장 큰 이슈였다. 그런데 얼마 전 오바마가 두 번째 대선을 치를 때에는 더 이상 흑인인 것이 이슈가 되지 않았다. 그의 정책이 조명 받을 뿐이었다. 그의 정책에 유권자들은 신뢰를 보내줬다.

흑인이라는 인종적 요소보다는 오바마라는 사람 자체를 바라보게 만든 것이 흑인 대통령이 미국사회에 끼친 영향력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유교적 가치관이 아직도 혼재한 한국사회에서 처음 박근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회자되기 시작될 무렵 나도 그렇고 대다수 사람들은 여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뒀다. 여성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에 상상력이 필요했고 우려심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많은 자리에서 차근차근 여성 박근혜가 아닌 지도자 박근혜의 모습을 쌓아갔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칼에 베어 얼굴에 심한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에게 선거 판세를 물어보는 모습을 보였던 사건은 이미 유명한 일화가 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권에서 치열하게 물고 늘어졌던 문제들이 박근혜의 과거사임을 볼 때 이제는 '그'가 아닌 '그녀'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여성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잠재의식이 생겨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우리 한국사회에 여성해방이라는 돌파구로서의 가능성을 지닐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말하는 여성해방이란 페미니스트적인 무거운 담론을 이야기 하거나 여성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남녀평등이 외쳐지고 있는 시대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차별이 많기 때문에 차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를 예로 들면 부모님은 남녀 차별이 없으셔서 내가 꿈을 위해 오래 공부하는 것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지만 주변 분들은 여자가 그렇게 공부 많이 해서 뭐하느냐고 대충 취업해서 시집 잘 가라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종종 하곤 했다. 생각해서 하는 말씀들이었겠지만 내심 서운한건 어쩔 수 없었다. 어디 이뿐이랴. 주위 친구들로부터 불합리한 차별이야기 한 가지씩 듣은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물론 여성은 결혼 후 양육과 가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제한이 있을 순 있다.(후략)

미래와 청년

南北 모두를 품는 리더십을 기다린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자신의 꿈을 일기로 써오라고 숙제를 내주셨다. 나는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축구단을 만들겠다고 썼다. 축구가 좋아서가 아니라 TV에 나오는 축구단엔 왜 남자만 있는지 의아했고 일종의 남자만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다. 물론 선생님이 일기장 끝머리에 "여자 축구단은 이미 있단다"라는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바람에 머쓱하게 혼자 웃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진짜 남자만의 영역은 따로 있었다.

"커서 뭐가 될래?" 하고 물으면 손들고 "대통령이 될래요"하는 애들 치고 여자는 없었다. 당돌한 남자아이들이나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 했을 뿐이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약 20년이 지난 지금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의 한계조차 뛰어넘는 일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당선이 유력하다고 여겨지는 후보 중 한명으로 여성이 등장했고 그 여성은 막판 선거를 앞두고 종횡무진하며 뛰고 있다.

'여성 리더'에 대한 거부감 거의 사라져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의미는 아마도 흑인인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와 같은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이 아닐까 생각된다. 오바마가 처음 대선 후보로 등장했을 때만 해도 그가 흑인인 것이 가장 큰 이슈였다. 그런데 얼마 전 오바마가 두 번째 대선을 치를 때에는 더 이상 흑인인 것이 이슈가 되지 않았다. 그의 정책이 조명 받을 뿐이었다. 그의 정책에 유권자들은 신뢰를 보내줬다.

흑인이라는 인종적 요소보다는 오바마라는 사람 자체를 바라보게 만든 것이 흑인 대통령이 미국사회에 끼친 영향력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유교적 가치관이 아직도 혼재한 한국사회에서 처음 박근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회자되기 시작될 무렵 나도 그렇고 대다수 사람들은 여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뒀다. 여성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에 상상력이 필요했고 우려심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차근차근 여성 박근혜가 아닌 지도자 박근혜의 모습을 쌓아갔다.

"대통령이 될래요"하는 애들 치고 여자는 없었다. 당돌한 남자아이들이나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 했을 뿐이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약 20년이 지난 지금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의 한계조차 뛰어넘는 일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칼에 베어 얼굴에 심한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에게 선거 판세를 물어보는 모습을 보였던 사건은 이미 유명한 일화가 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권에서 치열하게 물고 늘어졌던 문제들이 박근혜의 과거사임을 볼 때 이제는 '그'가 아닌 '그녀'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여성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잠재의식이 생겨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우리 한국사회에 여성해방이라는 돌파구로서의 가능성을 지닐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말하는 여성해방이란 페미니스트적인 무거운 담론을 이야기 하거나 여성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남녀평등이 외쳐지고 있는 시대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차별이 많기 때문에 차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를 예로 들면 부모님은 남녀차별이 없으셔서 내가 꿈을 위해 오래 공부하는 것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

않으셨지만 주변 분들은 여자가 그렇게 공부 많이 해서 뭐하느냐고 대충 취업해서 시집 잘 가라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종종 하곤 했다. 생각해서 하는 말씀들이었겠지만 내심 서운한건 어쩔 수 없었다. 어디 이뿐이랴. 주위 친구들로부터 불합리한 차별이야기 한 가지씩 듣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물론 여성은 결혼 후 양육과 가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제한이 있을 순 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 문제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제한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만이라도 바뀌게 된다면 이후 사회적 구조나 제도의 해법은 뒤따를 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인식이 바뀌는 측면에 있어서 만큼은 사회 내 보이지 않는 유리창이 깨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게 된다.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제한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만이라도 바뀌게 된다면 이후 사회적 구조나 제도의 해법은 뒤따를 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인식이 바뀌는 측면에 있어서 만큼은 사회 내 보이지 않는 유리창이 깨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게 된다.

우리에겐 '품을 수 있는 리더십' 필요해

나의 꿈은 향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교회에서 한 탈북자의 정치범수용소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과 더불어 눈물을 훔치던 그때부터 나의 꿈은 시작됐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며 울음을 토해내던 그 탈북자의 한 마디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오롯이 자리 잡게 됐기 때문이다. 같은 언어를 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38선 너머에 존재하고 있고, 상상 그 이상의 압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그래서 통일정책입안자가 되기 위해 행정고시를 준비했지만 여러 차례 낙방했고, 결국 진실성을 지닌 말로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인다는 주변의 칭찬을 참고로 중학교 때의 꿈이었던 아나운서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민간 대북방송 자유조선방송.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라디오를 통한 나의 목소리로 외부소식,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 권리, 북한 당국의 잘못된 죄악, 한 가닥의 희망과 위로를 전해 줄 수 있음이 감사하다. 또 같은 꿈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

그런데 요즘 일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북한체제가 심히 불안정하다는 사실이다. 북한 지도부의 비리와 악행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문제는 경제난이 극에 달했고 북한 주민들의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체제가 언제 붕괴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 어느날 갑자기 현실이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 필요한 많은 리더십이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품을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흔히들 '통합' 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굳이 '품다' 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 말의 뉘앙스 차이 때문이다. 북한 내 처벌받아야 할 수많은 간부, 군인, 경제적 격차 문제, 토지문제, 문화적 차이 등 통합으로 표현하기엔 너무나 많은 인내와 장애물적 요소들이 산재한다.

새가 알을 품듯이 알 속의 새끼 새를 볼 수 있는 어미 새의 마음. 새끼 새가 부화할 때까지 인내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어미 새의 마음. 바로 이 어미 새의 마음을 지닌 '품을 수 있는 리더십'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후보가 비록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성 특유의 모성애가 그녀에게도 있다고 본다. 내가 여성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덕목이다. 그간 닦아온 국정운영능력에 남북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더하는 것. 바로 이 리더십이 '그'가 아닌 '그녀' 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바가 아닐까?



이성희
자유조선방송 아나운서
중앙대 불문학과 졸업

【기 획】
4人 4色 여성리더 좌담회

"여성의 강점 활용하면 유리천장은 없다"

참석자 : 김상임 CJ그룹자문임원, 전문코치
김형미 서울시 영양사협회 회장
최소현 (주)퍼셉션 대표
하지원 (사)에코맘코리아 대표
사 회 : 황성준 본지 편집위원

여성리더를 수식하는 단어들은 많다. 알파걸, 슈퍼우먼, 워킹맘…. 하나같이 자신감 넘치는 뉘앙스의 말들이지만 현실 속 여성리더들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다. 그녀들의 일상은 자신감보다는 피로감으로 점철되기 일쑤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여성후보가 대통령 당선 가시권에 들어온 초유의 장면을 목격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여성들의 삶은 여전히 험난하고 고단하다.

이에 〈미래한국〉은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며 활약하고 있는 여성리더 4인을 초청해 작은 좌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의 리더십을 지도하는 김상임 전문코치, 서울시 영양사협회 김형미 회장, 디자인 컨설팅 그룹 '퍼셉션' 최소현 대표, 서울 시의원 출신의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가 한 자리에 만나 여성리더로서의 고충과 가능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자기 소개부터 해주시면 어떨까요

김상임 : 저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삼성그룹에 입사해 25년 동안 기업에서 열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임원까지 달면서 신나게 회사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 세상을 보니 제가 알던 세상만 있는 건 아니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행복을 나누기 위한 코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들을 포함해서 제가 대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코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로서의 삶

최소현 : 이 자리에선 제가 최연소네요. 올해로 서른여덟이니까 3040세대의 중간쯤에 해당될 텐데요.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잠깐 거쳐 벤처기업에서 몇 년 일하다가 사업을 시작한 지는 이제 만 10년이 됐어요. 디자인 컨설팅이란 게 아직까지 생소할 수 있지만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까지 디자인은 매우 중요해요. 전략적인 디자인 뿐 아니라 기저귀나 크리넥스 제품에 들어가는 일상적 디자인까지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하네요.

하지원 : 저는 직업이 많이 바뀐 편이에요. 학교를 졸업한 직후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ISO인증 국제심사위원이 되면서 중소기업 컨설팅 업무를 병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생각지도 않게 서울시 의원이 되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했어요. 그때 환경은 정책으로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실행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에코로 바꾸는 에코맘코리아 대표이자 세종대 환경에너지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김형미 : 저도 나름대로 스페셜리스트로서 일을 해 왔네요. 졸업하고 병원에서 계속 30년을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아이들이 다 자랐지만 한때는 워킹맘 생활도 했고요. 한국은 IT 쪽으로는 선진국인데 식문화는 아직 많이 낙후돼 있어요. 그 격랑 속에서 여성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왔네요. 지금은 서울시 영양사협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시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육아일 텐데요. 한때 여성 리더는 '독신여성'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자녀가 있으시네요. 육아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하지원: 육아가 가장 큰 숙제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한다고 하는데도 늘 미안하고 안타까운 게 육아문제네요. 그래도 저는 "여자라서 그렇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많이 노력하기는 했어요. 아이 임신하고 "위험하니 누워 있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계속 강의하다가 강의실에서 기절한 적도 있네요. 출산 전날까지 일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노력해도 제가 일을 하니까 행여 아이가 외로울까 늘 걱정이 돼요. 지금도 아이 혼자 문 따고 들어올 일은 없도록 늘 신경을 써요. 주말은 아이와 있으려고 노력하고, 서울 바깥에서 주말 출장이 있을 땐 아이를 불러서 둘만의 시간을 갖기도 해요. 결국은 '노력'이네요. 대화하려는 노력을 반복하다 보니까 바쁜 엄마에게 불만이 많던 아이도 점점 제 입장을 이해해 주게 되고, 심지어 어떤 부분은 자랑스럽게도 생각해 주기도 해요.

김상임: 육아라는 테마에 저는 '협상'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싶은데요. 제 경우엔 첫째 아이는 시어머니 도움을 받았어요. 둘째 아이 낳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사표를 냈더니 회사에서 잡더라고요. 일단 애를 놓고 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붙잡고 협상을 했죠. "제가 시어머니 인생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아직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제가 약속드린 거고 저도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불만은 전혀 없고요. 저는 이 얘기를 후배들한테도 많이 해요. 모든 걸 다 잘 할 수 없다는 거죠.

육아는 '워킹맘 제1의 도전'

김형미: 최고령인 제가 육아에는 가장 해탈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웃음)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수많은 후배들을 봐 왔지만,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워킹맘들을 보면 육아와 집안일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놓고 보통은 첫 애를 낳으면서 나가떨어지죠. 중요한 건 우선순위의 배분이고, 사회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으면 그걸 중심에 놓고 가정생활에 대한 우선순위를 배분해야 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려 하면 결국 다 망치게 되거든요.

– 예전에 우리가 '바람직한 여성상'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신사임당을 떠올렸는데요. 요즘엔 슈퍼우먼들이 인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후배들이 어떤 여성으로 성장하길 바라시나요.

하지원: 제가 여성들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직한 끈기가 다소 부족하고 손해 보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작은 계산이 지금은 이익인 것 같지만 결국은 훨씬 더 큰 손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오히려 지금 작게 손해 보는 것에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넉넉한 마음은 넉넉한 성과와 넉넉한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누구나 떠올리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상임: 저는 스스로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보라고 요청하고 싶어요. 리더는 결국 조직이나 단체에서 구성원들을 독려해서 성과를 내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많은 여성리더들이 '지휘자'가 아닌 '연주자'로 녹아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결국 그 연주자 역할에 빠져버리곤 하죠. 훌륭한 지휘자들은 눈을 감고서도 단원들과 교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스로가 교감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매 순간 철저하게 자문(self-questioning)했으면 해요.(후략)

기획

4人 4色 여성리더 좌담회

"여성의 강점 활용하면 유리천장은 없다"

참석자 | 김상임 CJ그룹자문임원, 전문코치
김형미 서울시 영양사협회 회장
최소현 (주)퍼셉션 대표
하지원 (사)에코맘코리아 대표
사 회 | 황성준 본지 편집위원

여성리더를 수식하는 단어들은 많다. 알파걸, 슈퍼우먼, 워킹맘…. 하나같이 자신감 넘치는 뉘앙스의 말들이지만 현실 속 여성리더들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다. 그녀들의 일상은 자신감보다는 피로감으로 점철되기 일쑤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여성후보가 대통령 당선 가시권에 들어온 초유의 장면을 목격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여성들의 삶은 여전히 험난하고 고단하다.

이에 〈미래한국〉은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며 활약하고 있는 여성리더 4인을 초청해 작은 좌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의 리더십을 지도하는 김상임 전문코치, 서울시 영양사협회 김형미 회장, 디자인 컨설팅 그룹 '퍼셉션' 최소현 대표, 서울 시의원 출신의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가 한 자리에 만나 여성리더로서의 고충과 가능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자기소개부터 해주시면 어떨까요.

김상임 : 저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입니다. 삼성그룹에 입사해 25년 동안 기업에서 열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임원까지 달면서 신나게 회사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 세상을 보니 제가 알던 세상만 있는 건 아니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행복을 나누기 위한 코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들을 포함해서 제가 대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코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 로서의 삶

최소현 : 이 자리에선 제가 최연소네요. 올해로 서른여덟이니까 30/40세대의 중간쯤에 해당될 텐데요.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잠깐 거쳐 벤처기업에서 몇 년 일하다가 사업을 시작한 지는 이제 만 10년이 됐어요. 디자인 컨설팅이란 게 아직까지 생소할 수 있지만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까지 디자인은 매우 중요해요. 전략적인 디자인 뿐 아니라 기저귀나 크리넥스 제품에 들어가는 일상적 디자인까지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하네요.

하지원 : 저는 직업이 많이 바뀐 편이에요. 학교를 졸업한 직후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ISO인증 국제심사위원이 되면서 중소기업 컨설팅 업무를 병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생각지도 않게 서울시의원이 되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했어요. 그때 환경은 정책으로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실행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에코로 바꾸는 에코맘코리아 대표이자 세종대 환경에너지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김형미 : 저도 나름대로 스페셜리스트로서 일을 해 왔네요. 졸업하고 병원에서 계속 30년을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아이들이 다 자랐지만 한때는 워킹맘 생활도 했고요. 한국은 IT쪽으로는 선진국인데 식문화는 아직 많이 낙후돼 있어요. 그 격랑 속에서 여성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왔네요. 지금은 서울시 영양사협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시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육아일 텐데요. 한때 ▸▸

여성리더는 '독신여성' 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자녀가 있으시네요. 육아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하지원 : 육아가 가장 큰 숙제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한다고 하는데도 늘 미안하고 안타까운 게 육아문제네요. 그래도 저는 "여자라서 그렇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많이 노력하기는 했어요. 아이 임신하고 "위험하니 누워 있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계속 강의하다가 강의실에서 기절한 적도 있네요. 출산 전날까지 일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노력해도 제가 일을 하니까 행여 아이가 외로울까 늘 걱정이 돼요. 지금도 아이 혼자 문 따고 들어올 일은 없도록 늘 신경을 써요. 주말은 아이와 있으려고 노력하고, 서울 바깥에서 주말 출장이 있을 땐 아이를 불러서 둘만의 시간을 갖기도 해요. 결국은 '노력' 이네요. 대화하려는 노력을 반복하다 보니까 바쁜 엄마에게 불만이 많던 아이도 점점 제 입장을 이해해 주게 되고, 심지어 어떤 부분은 자랑스럽게도 생각해 주기도 해요.

김상임 : 육아라는 테마에 저는 '협상' 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싶은데요. 제 경우엔 첫째 아이는 시어머니 도움을 받았어요. 둘째 아이 낳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사표를 냈더니 회사에서 잡더라고요. 일단 애를 놓고 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붙잡고 협상을 했죠. "제가 시어머니 인생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아직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제가 약속드린 거고 저도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불만은 전혀 없고요. 저는 이 얘기를 후배들한테도 많이 해요. 모든 걸 다 잘 할 수 없다는 거죠.

육아는 '워킹맘 제1의 도전'

김형미 : 최고령인 제가 육아에는 가장 해탈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웃음)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수많은 후배들을 봐 왔지만,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워킹맘들을 보면 육아와 집안일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놓고 보통은 첫 애를 낳으면서 나가떨어지죠. 중요한 건 우선순위의 배분이고, 사회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으면 그걸 중심에 놓고 가정생활에 대한 우선순위를 배분해야 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려 하면 결국 다 망치게 되거든요.

> "결국은 '노력' 이네요. 대화하려는 노력을 반복하다 보니까 바쁜 엄마에게 불만이 많던 아이도 점점 제 입장을 이해해 주게 되고, 심지어 어떤 부분은 자랑스럽게도 생각해 주기도 해요."



- 예전에 우리가 '바람직한 여성상' 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신사임당을 떠올렸는데요. 요즘엔 슈퍼우먼들이 인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후배들이 어떤 여성으로 성장하길 바라시나요.

하지원 : 제가 여성들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직한 끈기가 다소 부족하고 손해 보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작은 계산이 지금은 이익인 것 같지만 결국은 훨씬 더 큰 손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오히려 지금 작게 손해 보는 것에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넉넉한 마음은 넉넉한 성과와 넉넉한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누구나 떠올리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상임 : 저는 스스로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보라고 요청하고 싶어요. 리더는 결국 조직이나 단체에서 구성원들을 독려해서 성과를 내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많은 여성리더들이 '지휘자' 가 아닌


김상임 CJ그룹 자문위원, 전문코치


최소현 (주)퍼셉션 대표

'연주자'로 녹아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결국 그 연주자 역할에 빠져버리곤 하죠. 훌륭한 지휘자들은 눈을 감고서도 단원들과 교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스로가 교감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매 순간 철저하게 자문(self-questioning)했으면 해요.

재능 썩히는 여성들 국가가 주목해야

최소현 : 팔로어가 아니라 리더이기를 선택한 여성이라면 세 가지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스스로에게 '자존심' 아닌 '자존감' 이 높은 사람이었음 좋겠어요. 스스로를 존중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배려심 있는 사람이었으면 해요. 모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을 살리자는 거죠. 세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앞의 두 가지 조건을 골고루 갖췄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팀원들을 동기부여시킬 수 있을 거예요.

- 세상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비율의 여성들은 전업주부의 길을 갑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입장에서 전업주부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일동 한숨)

김상임 : 전업주부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작년에 퇴임하고 나서 여성가족부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들을 다시 사회로 끌어내는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분들이 정말로 무한한 잠재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근데 문제는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저는 우수 인력 활용 차원에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4,50대라고 해 봐야 인생에서 정오예요. 인생 2모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애들 위해 살았지만, 아이들이 다 자란 뒤에는 목적을 잃어버린 여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국가 차원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어요.

> "많은 여성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오히려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적어도 대학은 직업의식에 대한 명확한 교육을 해야 하고, 졸업한 뒤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지를 고민하게 해 줘야 해요."

최소현 : 저도 현재 12살, 9살 아이가 있다 보니 전업주부 학부형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같은 얘깁니다. 일하고 싶은데 통 모르겠다는 거죠. 고학력을 썩히고 있는 여성이 참 많아요.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는데, 이 보상심리가 결국 아이들한테 향하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최근엔 디자이너로서 전업주부를 위한 명함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서가 아니라 본인의 이름과 정체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말이죠.

김형미 : 제가 봤을 땐 아직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계속 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대학에서조차도요. 대학 교육의 목적을 모르겠다는 거죠. 많은 여성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오히려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적어도 대학은 직업의식에 대한 명확한 교육을 해야 하고, 졸업한 뒤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지를 고민하게 해 줘야 해요.

정체성이 없는 상태로 사회에 나온 학생들이 무작정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어차피 원해서 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싫은 건 안 하겠다는 거죠. 사회에 뼈를 묻겠다는 생각이 보편화된 남자들과 달리 여성들의 경우엔 '올인' 할 준비가 안 된 경우도 많고요.

이게 최 대표님이 말씀하신 '교육열'의 문제와 결부되면 헬리콥터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직무가 마음에 안 들면 엄마들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는 시대가 됐어요.

▶▶ - 대화를 나눌수록 '여성문제'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널리 알려진 여성문제일 텐데요. 여성은 '약자'인가요? 유리천장은 존재합니까?


김형미 서울시 영양사협회 회장


하지원 (주)에코맘코리아 대표

여성만의 강점 분명히 존재

하지원: 저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게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직원들이 부족해 보이고 맘에 안 드는 부분도 많았지만, 뭐든지 예쁘게 봐 주려고 노력하고 이해하고 격려할 때 어느 순간 능력도 향상되고 예쁘게 변하더라고요.

여성이 약자인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저는 여성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배려, 소통, 사랑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 충실하다 보면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섬김의 리더십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여성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자꾸 약자나 유리천장이라는 패러다임에 매몰되지 말고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감사한 일만 생긴다는 게 진실인 것 같아요.

최소현: 저는 후배들한테 건강하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여성들의 문제 중 하나는 본인이 힘든 줄도 모르고 뭘 자꾸 한다는 거거든요. 섬세함이 분명 여성의 강점이지만 이런 차원에서는 약점으로 변하기도 하죠. 그런데 자꾸 무리를 하다 보면 남자와 여자는 태생적으로 체력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이 나가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욕심이 많으면 그만큼 건강해야 하는 거고, 체력적으로 밀리면서 유리천장이 어떻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반드시 약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성만의 강점도 정말 많으니까요.

> "성과를 내기만 하면 회사는 반드시 알아봐 주고, 길게 보면 성별은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유리천장의 존재 여부를 궁금해 하기 전에 여성들이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설레게 하는 꿈이 있는가?'"

김상임: 남자가 다수인 조직에서 여성들은 한 번만 실수를 하면 집중이 확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여자라서 난처한 부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 '마인드'의 문제 같아요. 그냥 대강 취직해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전제로 치열하게 목표를 정립하면 아무리 조직이 터프해도 견뎌냅니다.

제가 여성후배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네가 여성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지 마라." 성과를 내기만 하면 회사는 반드시 알아봐 주고, 길게 보면 성별은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유리천장의 존재 여부를 궁금해 하기 전에 여성들이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설레게 하는 꿈이 있는가?' 비전이 명확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김형미: 성공한 여성리더들을 보면 완벽주의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지나치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후배들에게 "중간에 그만두지는 말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여자라서 한직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버티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이 유리한 점이 많다는 걸 후배들이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여성이 약자인 건 맞지만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늘 있는 법이고, 그 방법이 잘 발현되면 여성도 충분히 강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정리 · 사진 / 이원우 기자 m_bishop@naver.com

【서른살의 자유주의】

멋진 여성의 3대 조건

'여성' 이전에 '개인'으로 자유할 때 세상은 더욱 멋져질 것

유능한 일본 개그맨들은 글도 잘 쓰는 경우가 많다. 마츠모토 히토시(松本人志)도 그중 한 명이다. 1990년대 중반에 출간한 에세이 〈유서(遺書)〉와 〈마츠모토(松本)〉의 판매량을 합치면 550만 부를 훌쩍 넘긴다.

재기 넘치는 발상으로 가득 찬 이 책들에는 성별에 관련된 파격적 주장이 있었다. '여자는 최고의 개그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견 가부장적이기 짝이 없는 이 말에 여성독자들의 항의는 빗발쳤다. 하지만 그에게도 나름의 근거는 있었다.

"아무리 재미있는 말을 해도 귀고리나 브로치, 화장을 하고 있으면 왠지 흥이 깨져버리는 것은 나뿐인가? 어차피 남자를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유도 시합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남자선수는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게 쉽게 느껴지지만, 여자선수의 경우 도복 안에 입고 있는 티셔츠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 100% 유도에 빠지지 못한 채 맨몸이 보일까봐 두려워하고 있음이 느껴진다는 거다. 유도가 그러한데 개그는 오죽할까. 수치심도 체면도 없어야 하는 개그맨에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켜야만 할 무언가가 있는 '여성'은 분명 약점이다."

여성 독자들께서는 부디 노여움을 거둬주시길. 이것은 한 일본 개그맨의 20년 전 생각일 뿐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강점을 갖는 분야도 세상에는 잔뜩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켜야만 할 무언가에 천착한다는 건 리더(leader)에겐 매우 중요한 자질이다. 우리는 이미 조국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 없이 선봉에 나섰던 유관순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례를 알고 있다. 영국의 대처 총리는 여론의 반대 속에서도 자기 신념을 지켰고 최근엔 독일의 메르켈이 그 계보를 이으려 하고 있다. 남성이라고 못할 건 없을 일들이지만 리더가 여성일 때 수성(守成)의 과정은 더욱 숭고하고 값져 보일 때가 많다.

멋진 여성의 3가지 공통점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리더다. 당연히 모든 여성들에게는 자기만의 가치를 지키며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잠재력이 내재한다. 반드시 국가나 기업의 리더가 아닐지라도 삶을 능동적으로 리드하는 멋진 여성들은 많이 있다.

그렇다면 멋진 여성의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20대의 시간을 온통 '멋진 여자'를 찾는 데 보낸 뒤 〈연애의 뒷면〉이라는 책까지 휘갈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드릴 말씀이 매우 많다. 적어도 나의 판단으로 멋진 여성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다.

① 가볍지 않을 것

'멋진 여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스타일(style)이 있는 여자'다. 여기서의 스타일이란 옷이나 외모의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다.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인 것이다. 스타일이 있는 여자는 인생의 수많은 굴곡 앞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태도를 정돈하며 방향을 가늠한다. 가볍지 않은 이 태도는 남성들을 매혹시킬 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② 어둡지 않을 것

자기 스타일을 수립하는 데 사색(思索)은 필수지만, 지나치게 생각이 많은 여자는 자칫 어두워질 염려가 있다. 너무 많은 생각은 얄팍한 비관주의로 흐를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비관적인 사람은 잠깐 만나기엔 멋지고 깊이 있어 보이지만 긴 시간을 함께하다 보면 사람을 지치게 한다. 결국 상대방의 낙관주의마저 앗아가는 해로운 존재로 변하고 만다.(후략)





유능한 일본 개그맨들은 글도 잘 쓰는 경우가 많다. 마츠모토 히토시(松本人志)도 그중 한 명이다. 1990년대 중반에 출간한 에세이 〈유서(遺書)〉와 〈마츠모토(松本)〉의 판매량을 합치면 550만 부를 훌쩍 넘긴다.

재기 넘치는 발상으로 가득 찬 이 책들에는 성별에 관련된 파격적 주장이 있었다. '여자는 최고의 개그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견 가부장적이기 짝이 없는 이 말에 여성독자들의 항의는 빗발쳤다. 하지만 그에게도 나름의 근거는 있었다.

"아무리 재미 있는 말을 해도 귀고리나 브로치, 화장을 하고 있으면 왠지 홍이 깨져버리는 것은 나뿐인가? 어차피 남자를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유도 시합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남자선수는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는 게 쉽게 느껴지지만, 여자선수의 경우 도복 안에 입고 있는 티셔츠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 100% 유도에 빠지지 못한 채 맨몸이 보일까봐 두려워하고 있음이 느껴진다는 거다. 유도가 그러한데 개그는 오죽할까. 수치심도 체면도 없어야 하는 개그맨에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켜야만 할 무언가가 있는 '여성'은 분명 약점이다."

여성 독자들께서는 부디 노여움을 거둬주시길. 이것은 한 일본 개그맨의 20년 전 생각일 뿐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강점을 갖는 분야도 세상에는 잔뜩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켜야만 할 무언가에 천착한다는 건 리더(leader)에겐 매우 중요한 자질이다. 우리는 이미 조국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 없이 선봉에 나섰던 유관순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례를 알고 있다. 영국의 대처 총리는 여론의 반대 속에서도 자기 신념을 지켰고 최근엔 독일의 메르켈이 그 계보를 이으려 하고 있다. 남성이라고 못할 건 없을 일들이지만 리더가 여성일 때 수성(守成)의 과정은 더욱 숭고하고 값져 보일 때가 많다.

멋진 여성의 3가지 공통점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리더다. 당연히 모든 여성들에게는 자기만의 가치를 지키며 험난한 세상을 헤쳐 나갈 잠재력이 내재한다. 반드시 국가나 기업의 리더가 아닐지라도 삶을 능동적으로 리드하는 멋진 여성들은 많이 있다.

그렇다면 멋진 여성의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20대의 시간을 온통 '멋진 여자'를 찾는데 보낸 뒤 〈연애의 뒷면〉이라는 책까지 휘갈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드릴 말씀이 매우 많다. 적어도 나의 판단으로 멋진 여성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다.

①가볍지 않을 것

'멋진 여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스타일(style)이 있는 여자'다. 여기서의 스타일이란 옷이나 외모의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다.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인 것이다. 스타일이 있는 여자는 인생의 수많은 굴곡 앞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태도를 정돈하며 방향을 가늠한다. 가볍지 않은 이 태도는 남성들을 매혹시킬 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②어둡지 않을 것

자기 스타일을 수립하는 데 사색(思索)은 필수지만, 지나치게 생각이 많은 여자는 자칫 어두워질 염려가 있다. 너무 많은 생각은 얄팍한 비관주의로 흐를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

이다. 비관적인 사람은 잠깐 만나기엔 멋지고 깊이 있어 보이지만 긴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사람을 지치게 한다. 결국 상대방의 낙관주의마저 앗아가는 해로운 존재로 변하고 만다.

황성준 편집위원은 본지 칼럼집 〈유럽과의 역사투쟁〉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웬만한 일에 실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독한 비관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워낙 애초에 비관적이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좌절할 일도 적다."

내공 있는 비관주의자는 어둠을 섣불리 드러내지 않는다. 멋진 여자는 어둡지 않다.

③ '여성'에 머무르지 않을 것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앞세움으로써 몰(沒)개성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논할 때에도 여성의 스펙트럼을 씌우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에 한계가 생긴다.

진정으로 멋진 여자는 여성임을 앞세우기 이전에 개인(individual)을 중시한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 또한 남/여 이전에 개인으로서 인식한다. 당연히 스스로를 여성의 틀 속에 가두는 사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격조가 묻어난다.

'멋진 여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스타일(style)이 있는 여자'다. 여기서의 스타일이란 옷이나 외모의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다.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인 것이다.

여자라면 시오노 나나미처럼

위의 세 가지 전제조건을 골고루 갖춘 '멋진 여성'으로 가장 먼저 꼽고 싶은 사람이 있다. 〈로마인 이야기〉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野七生)다. 그녀와 직접 만나 대화해 본 적은 없지만 책 속에 빼곡하게 들어찬 문장들만으로도 그녀가 멋진 여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우선 그녀는 가볍지 않다.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로마인이야기〉 시리즈를 1년에 한 권씩 내놓겠다는 약속을 완벽하게 이행한 그녀가 아닌가. 로마의 장구한 역사를 다루는 그녀의 필치 또한 15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최근 발간된 〈십자군이야기〉는 전작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여전히 장쾌한 매력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으로 그녀는 어둡지 않다.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작가인





것이다. 그녀의 유머러스함은 〈나의 인생은 영화관에서 시작되었다〉, 〈남자들에게〉 등의 에세이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생각은 깊게, 연구는 치밀하게 하면서도 웃음으로 긴장감을 희석시킬 줄 아는 멋진 여성이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여성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을 지향한다. 그녀의 작품 〈침묵하는 소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보수주의에 보내는 헌정사에 다름 아니다. 그녀의 글을 읽다 보면 여성과 남성의 경계는 흐려지고 그저 글을 쓴 개인과 글을 읽는 개인만이 남게 된다. 이 정도면 충분히 멋진 여성이 아닐까.

한국인들은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 대통령이 배출될 확률이 높은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한국의 여성들에게 묻고 싶다. 이 멋진 시대에 발맞춰 멋진 여성이 될 준비가 돼 있는가?

이원우 기자 m_bishop@naver.com

【황성준의 BOOK & World】

딸의 롤모델을 찾아서

린다 차베스의 〈그럴 것 같지 않은 보수주의자〉 (An Unlikely Conservative)를 읽고

1995년 12월 체첸 남부산악지대에 위치한 베데노 마을에서의 이야기다. 당시 '체첸반군의 해방구'였던 베데노는 체첸반군의 주요거점으로, 러시아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었다. 이 마을에 도착하자 체첸 게릴라 측에서 거처로 한 민가를 소개해줬다. 저녁때가 되자 식사가 나왔다. 삶은 양고기와 빵, 그리고 삶은 감자가 나왔다. 해발 2,000m에 달하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그것도 지뢰밭과 저격병을 피하면서 올라오다 보니 매우 지친 상태였고 특히 배가 무척 고팠다. 그래서 음식이 나오자마자 접시를 깨끗이 비워 버렸다. 그리고 잠을 청하기 위해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밖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에 문을 열고 나가 봤다. 부엌에서 5세가량의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12세가량의 언니가 이를 달래고 있는 것이었다. 안주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무 일도 아닙니다. 저녁은 잘 드셨는지요?"라고 말한 뒤 아이들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식사를 남겼어야 했던 이유

다음날 이골 로타리 당시 이즈베스티야지(紙) 기자에게 야단(?)을 맞고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체첸에서 여자들은 남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 남자들이 식사를 끝내면 여자들은 남은 것을 부엌에서 먹는다. 따라서 남자들은 식사의 일부를 남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은 굶어야 한다. 또 손님을 환대하는 관습 때문에 집안에 있는 것을 모두 내놓았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다 먹어 버렸다는 것은 한 끼가 아니라 앞으로 한동안의 식량을 모두 없앤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죄책감에 쥐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날 오후 그 집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간 통조림을 내놓았다. 안주인은 사양했으나 "지나친 사양은 손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겨우 설득, 받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껴둔 비상용 초콜릿을 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나눠줬다. 초콜릿을 들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체첸은 철저한 남존여비(男尊女卑) 사회이다. 남자들은 일도 하지 않는다.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꾸란을 읽거나 무술을 연마하는 일이다. 집안일은 물론 농사일, 장사 모두 여성의 몫이다. 길을 갈 때도 남자들은 빈손으로 걸어가고 그 뒤에 여자들이 짐을 짊어지고 뒤따라간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다. 영국인 페미니스트 여기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체첸 여자들이 빈손으로 앞장서가고, 남자들이 짐을 들고 뒤따라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여기자가 "어떻게 이런 천지개벽이 일어났는지"를 물었더니 "앞에 지뢰밭이 있거든"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체첸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도 있었다. 그리 먼 과거 일도 아니었다. 우리의 어머니 세대 혹은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남긴 밥을 부엌에서 먹어야만 했고 집안일은 물론 농사일 대부분을 전담해야 했다. 또 많은 누이들은 남동생 학비를 벌기 위해 구로공단 등지에서 졸음방지약 타이밍을 먹으며 미싱을 돌려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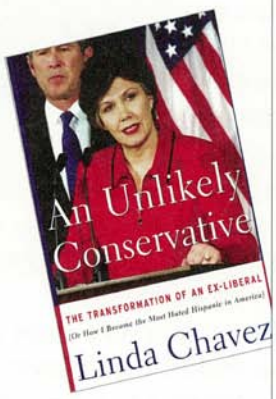
현재 상황은 다르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의 진출이 눈부시게 이뤄지고 있다. 남성 고유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관학교에서 여성들이 주름잡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랜 전의 일이며 각종 고시 합격자에서도 여성이 다수파로 올라서고 있다.(후략)

황성준의 BOOK & World

딸의 롤모델을 찾아서

린다 차베스의 <그럴 것 같지 않은 보수주의자>(An Unlikely Conservative)를 읽고

황성준 편집위원 · 동원대 초빙교수



1995년 12월 체첸 남부산악지대에 위치한 베데노 마을에서의 이야기다. 당시 '체첸반군의 해방구' 였던 베데노는 체첸반군의 주요거점으로, 러시아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었다. 이 마을에 도착하자 체첸 게릴라 측에서 거처로 한 민가를 소개해줬다. 저녁때가 되자 식사가 나왔다. 삶은 양고기와 빵, 그리고 삶은 감자가 나왔다. 해발 2,000m에 달하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그것도 지뢰밭과 저격병을 피하면서 올라오다 보니 매우 지친 상태였고 특히 배가 무척 고팠다. 그래서 음식이 나오자마자 접시를 깨끗이 비워 버렸다. 그리고 잠을 청하기 위해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밖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에 문을 열고 나가 봤다. 부엌에서 5세가량의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12세가량의 언니가 이를 달래고 있는 것이었다. 안주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무 일도 아닙니다. 저녁은 잘 드셨는지요?" 라고 말한 뒤 아이들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식사를 남겼어야 했던 이유

다음날 이골 로타리 당시 이즈베스티야지(紙) 기자에게 야단(?)을 맞고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체첸에서 여자들은 남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 남자들이 식사를 끝내면 여자들은 남은 것을 부엌에서 먹는다. 따라서 남자들은 식사의 일부를 남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은 굶어야 한다. 또 손님을 환대하는 관습 때문에 집안에 있는 것을 모두 내놓았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다 먹어 버렸다는 것은 한 끼가 아니라 앞으로 한동안의 식량을 모두 없앤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죄책감에 쥐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날 오후 그 집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간 통조림을 내놓았다. 안주인은 사양했으나 "지나친 사양은 손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겨우 설득, 받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껴둔 비상용 초콜릿을 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나눠줬다. 초콜릿을 들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체첸은 철저한 남존여비(男尊女卑) 사회이다. 남자들은 일도 하지 않는다. 남자들이 하 ▸▸

체첸에서 여자들은 남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 남자들이 식사를 끝내면 여자들은 남은 것을 부엌에서 먹는다. 따라서 남자들은 식사의 일부를 남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은 굶어야 한다.

▶▶ 는 일이라고는 꾸란을 읽거나 무술을 연마하는 일이다. 집안일은 물론 농사일, 장사 모두 여성의 몫이다. 길을 갈 때도 남자들은 빈손으로 걸어가고 그 뒤에 여자들이 짐을 짊어지고 뒤따라간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다. 영국인 페미니스트 여기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체첸 여자들이 빈손으로 앞장서 가고, 남자들이 짐을 들고 뒤따라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여기자가 "어떻게 이런 천지개벽이 일어났는지"를 물었더니 "앞에 지뢰밭이 있거든"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체첸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도 있었다. 그리 먼 과거 일도 아니었다. 우리의 어머니 세대 혹은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남긴 밥을 부엌에서 먹어야만 했고 집안일은 물론 농사일 대부분을 전담해야 했다. 또 많은 누이들은 남동생 학비를 벌기 위해 구로공단 등지에서 졸음방지약 타이밍을 먹으며 미싱을 돌려야만 했다.

현재 상황은 다르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의 진출이 눈부시게 이뤄지고 있다. 남성 고유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관학교에서 여성들이 주름잡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랜 전의 일이며 각종 고시 합격자에서도 여성이 다수파로 올라서고 있다. 오히려 남성이 위축돼 갈 곳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여성차별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무엇보다 여성은 육아문제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 가사노동의 분배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출산은 물론 육아문제의 대부분이 여성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애를 안 낳으려는 풍조, 더 나아가 결혼 자체를 회피하는 풍조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 만연하다. 또 '이상적 여성상'의 기준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 칭송되던 '신사임당' 형은 더 이상 현대 젊은 여성에게 매력적인 이상형이 아니다.

> 그녀가 보수주의자가 된 것은 극단적 페미니즘의 반남성(anti-male)이 여성 자신들에게 해롭다는 사실, 그리고 성별과 인종에 따른 직장 쿼터제가 의도와는 달리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사실 등을 현장에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페인트공의 딸에서 보수주의 리더로

대학생 딸을 둔 아버지로서 내 딸이 본받았으면 하는 여성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을 염두에 둔 채 〈그럴 것 같지 않은 보수주의자〉을 읽어 보았다. 이 책은 가난한 페인트공의 딸로 태어나 노조운동가를 지낸 히스패닉계 미국인 여성 린다 차베스의 자서전이다.

차베스는 레이건 정부 당시 백악관 고위관리로 일하고 아들 부시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바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여성이다.(불법 이민자를 파출부로 고용한 사실이 폭로되자 스스로 장관 임명을 포기해서 장관직을 수행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희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의 기쁨 또한 크다고 주장하며 직장생활과 양육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낸 세 아이의 어머니이다. 책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차베스는 보수주의자가 되기 힘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히스패닉계, 노조 운동가, 여성 등등 … 차베스도 초기에는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보수주의자가 된 것은 극단적 페미니즘의 반남성(anti-male)이 여성 자신들에게 해롭다는 사실, 그리고 성별과 인종에 따른 직장 쿼터제가 의도와는 달리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사실 등을 현장에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근육의 힘'이 중요시되던 사회에서 남성의 우위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근육의 역할'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에 '여성 지도자 시대'가 열리고 있다. 딸 가진 아빠로서 이를 환영한다.

【미래 인터뷰】
1급 선거전략가 이영작 박사

"박근혜, 흐름 탔다"

DJ 당선 1등 공신이 보는 대선 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영작 박사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통계학박사학위를 받은 여론조사 전문가이며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선거전략가들 중 한명이다. 1997년 김대중 대선 후보의 '준비된 대통령' 구호도 이영작 박사의 아이디어였다. 〈미래한국〉은 지난 11월 23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이 박사의 사무실에서 이번 대선과 관련해 그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 우선 초미의 관심사인 이번 대선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은 여론조사 및 통계 전문가이고 선거전략가로서도 유명하신데요. 이번 대선을 전망할 때 가장 깊게 고려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으신지요?

저는 민심이라는 게 시계추와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계추는 끊임없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시계추가 중간에 가만히 멈춰 있으면 시계가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강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심이 변할 뿐이죠.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현대적으로 정착된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였습니다. 이때부터 대통령 연임제도 시작됐죠. 여기서 역사를 보면, 거의 8년 주기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권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루먼이 재선에 성공한 후 아이젠하워–케네디–존슨–닉슨–포드–카터–레이건–부시–클린턴–부시–오바마를 거치는 동안 예외는 몇 번 있었으나 대부분 8년 단위로 시계추가 좌우로 왕복하면서 좌파와 우파가 상호 견제를 하고, 미국도 더 개혁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종·지역·종교의 편견이 해소됐습니다. 이제 성별의 타파만 남았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분석입니다.

역사의 흐름 볼 때 여당 우세

– 그렇다면 이번 한국 대선에서도 여당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생각이시겠군요.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역사를 보면,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이 5년씩 10년을 집권했습니다. 이후 정권교체가 된 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10년 집권했죠.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5년간 집권했는데, 여기서 우파가 한번 더 집권하는 게 자연의 흐름 아닐까요?

따라서 저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이 '흐름'을 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판에 치명적인 실수만 범하지 않는다면 당선이 유력할 겁니다.

–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단일화 이전의 질문)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3자대결일 경우 박근혜 후보가 앞서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또는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양자대결할 경우 박근혜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3자대결일 경우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고 양자대결일 경우 박근혜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좌우를 아우르는 국민통합, 정치혁신을 내세우자 '삐딱한 우파'들이 안철수를 지지한 거죠. 그러다가 재벌을 비판하며 좌로 돌아선 것이 패착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안철수 지지자 중 '삐딱한 우파'들은 투표를 안할지언정 문재인 후보를 찍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론조사는 '응답률'에 유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발표되는 대부분의 여론조사, 특히 ARS 조사들의 경우에는 응답률이 10% 미만입니다. 즉 1천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총 1만명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의미죠. 이렇게 되면 적극적인 지지자, 또는 정치에 관심이 아주 많은 유권자들만 응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응답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중의 여론조사들은 크게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박근혜의 최대 자산은 故 박정희 전 대통령

– 그렇다면 대선후보들 입장에서는 기존 여론조사 결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각 후보 진영에서도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표를 얻을지를 생각해야지 경마식 여론조사 보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박근혜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故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메시지 차원에서 볼 때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후보에게 자산이 되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인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끌어들이면 이길 수 있는 선거입니다. 좌파의 공세가 있더라도 단기간에 극복해 내면 됩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를 보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정과 각종 비리로 인해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두 분을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는 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문재인 후보는 NLL, FTA, 해군기지 등 국가 중대사에 대해 말이 너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오락가락 한다는 인상을 자주 줍니다. 그 부분을 극복해야 할 겁니다.

– 박사님이 민심 파악을 위해 주로 사용하시는 조사 기법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개별심층면접(IDI)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IDI는 In-Depth Interview의 약자로, 설문서를 만들어서 직접 만나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형태가 단순 지지도 조사와는 다르죠, 가치중립적이고 재미있는 내용의 설문지를 만들면, 응답률도 높아지면서 좀 더 상세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여론조사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메시지를 설정해 놓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이 박근혜 후보에게 얼마나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에게 큰 감표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은 여당 소속이기는 해도 국민들이 이 대통령과 박 후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듯합니다. 박 후보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정이 문재인 후보에게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현상과도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후략)

미래 인터뷰 1급 선거전략가 **이영작** 박사

"박근혜, 흐름 탔다"

DJ 당선 1등 공신이 보는 대선 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영작 박사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통계학박사학위를 받은 여론조사 전문가이며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선거전략가들 중 한명이다. 1997년 김대중 대선 후보의 '준비된 대통령' 구호도 이영작 박사의 아이디어였다. 〈미래한국〉은 지난 11월 23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이 박사의 사무실에서 이번 대선과 관련해 그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 우선 초미의 관심사인 이번 대선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은 여론조사 및 통계 전문가이고 선거전략가로서도 유명하신데요. 이번 대선을 전망할 때 가장 깊게 고려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으신지요?

저는 민심이라는 게 시계추와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계추는 끊임없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시계추가 중간에 가만히 멈춰 있으면 시계가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강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심이 변할 뿐이죠.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현대적으로 정착된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였습니다. 이때부터 대통령 연임제도 시작됐죠. 여기서 역사를 보면, 거의 8년 주기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권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루먼이 재선에 성공한 후 아이젠하워-케네디-존슨-닉슨-포드-카터-레이건-부시-클린턴-부시-오바마를 거치는 동안 예외는 몇 번 있었으나 대부분 8년 단위로 시계추가 좌우로 왕복하면서 좌파와 우파가 상호 견제를 하고, 미국도 더 개혁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종 · 지역 · 종교의 편견이 해소됐습니다. 이제 성별의 타파만 남았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분석입니다.

역사의 흐름 볼 때 여당 우세

- 그렇다면 이번 한국 대선에서도 여당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생각이시겠군요.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역사를 보면,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이 5년씩 10년을 집권했습니다. 이후 정권교체가 된 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10년 집권했죠.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5년간 집권했는데, 여기서 우파가 한번 더 집권하는 게 자연의 흐름 아닐까요?

따라서 저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이 '흐름'을 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판에 치명적인 실수만 범하지 않는다면 당선이 유력할 겁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단일화 이전의 질문)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3자대결일 경우 박근혜 후보가 앞서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또는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양자대결할 경우 박근혜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3자대결일 경우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고 양자대결일 경우 박근혜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좌우를 아우르는 국민통합, 정치혁신을 내세우자 '삐딱한 우파' 들이 안철수를 지지한 거죠. 그러다가 재벌을 비판하며 좌로 돌아선 것이 패착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안철수 지지자 중 '삐딱한 우파' 들은 투표를 안할지언정 문재인 후보를 찍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박근혜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故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메시지 차원에서 볼 때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후보에게 자산이 되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는 '응답률'에 유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발표되는 대부분의 여론조사, 특히 ARS 조사들의 경우에는 응답률이 10% 미만입니다. 즉 1천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총 1만명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의미죠. 이렇게 되면 적극적인 지지자, 또는 정치에 관심이 아주 많은 유권자들만 응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응답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중의 여론조사들은 크게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박근혜의 최대 자산은 故 박정희 전 대통령

-그렇다면 대선후보들 입장에서는 기존 여론조사 결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각 후보 진영에서도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표를 얻을지를 생각해야지 경마식 여론조사 보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박근혜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故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메시지 차원에서 볼 때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후보에게 자산이 되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인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끌어들이면 이길 수 있는 선거입니다. 좌파의 공세가 있더라도 단기간에 극복해 내면 됩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를 보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정과 각종 비리로 인해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두 분을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는 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문재인 후보는 NLL, FTA, 해군기지 등 국가 중대사에 대해 말이 너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오락가락 한다는 인상을 자주 줍니다. 그 부분을 극복해야 할 겁니다.

-박사님이 민심 파악을 위해 주로 사용하시는 조사 기법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개별심층면접(IDI)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IDI는 In-Depth Interview의 약자로, 설문서를 만들어서 직접 만나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형태가 단순 지지도 조사와는 다르죠. 가치중립적이고 재미 있는 내용의 설문지를 만들면, 응답률도 높아지면서 좀 더 상세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여론조사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메시지를 설정해 놓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이 박근혜 후보에게 얼마나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에게 큰 감표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은 여당 소속이기는 해도 국민들이 이 대통령과 박 후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듯합니다. 박 후보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정이 문재인 후보에게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현상과도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 박사님이 이번 선거에서 40대의 불안을 없애는 데 성공하는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인가요? 2030에 좌우되지는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40대가 가정적 부담이 크고 직장에서도 은퇴하는 경우가 많아 불안해하는 세대입니다. 미국에서는 40대가 한창 일하며 안정적인 것에 비해 다릅니다.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는 의외로 보수적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적이기를 원하는 면이 있어요.

네거티브 캠페인 목적은 '부동층 견제'

-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사용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전 대한민국 유권자의 비율을 넓게 봤을 때 우파 40%, 좌파 40%, 부동층 20%로 봅니다. 이 비율이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선거전략적으로 처음에는 지지층을 끌어안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하다가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투표하지 않게 하거나 부동층을 흡수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네거티브 캠페인은 공식선거운동 시작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후보들도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구요.

> "선거전략적으로 처음에는 지지층을 끌어안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하다가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투표하지 않게 하거나 부동층을 흡수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 예전에 많은 선거에 참여하시고 승리로 이끄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를 손꼽아 주신다면?

2000년 4월 총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민주당 배기선, 송영길, 김성호, 이종걸 후보의 지역구 선거를 도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는 구호로 선거에 임하라고 조언을 했는데 그것이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판세를 보니 네 후보 모두 당선이 어렵다는 여론조사가 우세했는데 역전승을 거둬 더 기억에 남습니다.

- 이번 선거에서 따로 조언을 해주시거나 지원하는 후보 진영이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정 진영과 함께 일하지 않고 그냥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저는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 정권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문제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육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교육 관련 주무장관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급변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교육감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 교육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미래한국은 전교조가 교육 병폐의 큰 요인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교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교조가 이렇게 강력해진 건 보수우파 진영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보수진영에서 올바른 교육 모델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80년대 후반에 전교조가 출범했고, 현재까지 온 게 아닐까요.

- 지금 운영하시는 LSK Global PS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약품의 임상실험을 하는 곳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의료통계로 임상실험을 해왔습니다. 제 전공분야죠.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약효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합니다. 제가 이 분야를 한국에 소개할 당시에는 제약회사의 인식이 낮아 필요성을 홍보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제약회사 회장들을 일일이 다 만나고 다니며 임상실험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강시영 기자 ksiyeong@futurekorea.co.kr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북리뷰】

"정수장학회는 장물이 아니다"

김영 부산 MBC 전 시장 〈정수장학회와 다이아반지〉 출간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강탈된 것이 아니라 증여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 방송문화진흥회 전 감사가 신간 〈정수장학회와 다이아반지〉를 출간해 "故 김지태 씨가 자신의 비리로 구속돼 석방되는 s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재산 일부를 국가에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정수장학회는 1962년 설립된 5·16장학회를 모태로 하여 1982년 전두환 정권 때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5·16 장학회에 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한국문화방송 및 토지를 기증했던 김지태 씨의 유족이 2010년 6월 국가를 상대로 불거졌다. 정치권에선 '박정희 정권이 개인의 재산을 강탈했다'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김영 전 감사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런 정수장학회 강탈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감사는 부산MBC에서 보도국장과 사장을 지내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정통하다고 자처하는 인물이다. 그는 저서에서 김지태 씨가 1962년 4월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에 의해 농지개혁법 위반, 탈세, 외환관리법 위반, 부인의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석방을 위해 최고권력자인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에게 석방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재산 헌납 이후 박정희 정권의 비호가 김지태 씨의 사업이 확장되는 데 일조했다고도 덧붙였다. 금탑·은탑산업훈장을 받을 정도로 사업체가 번창한 데는 거액의 차관을 융자 받는 식으로 정부 지원의 힘이 컸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김 전 감사는 또 저서에서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은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선 "정수장학회가 공익재단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다하고 있다"며 "어느 특정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익재단법인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수장학회의 명칭에 대해서도 저자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박정희와 육영수 부부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정수장학회의 명칭은 고전인 〈대학〉 7장에 나오는 '정심수기(正心修己)' 편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심수기란 바른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한편, 최근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김지태 씨 유족이 "국가에 헌납한 당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상고장 각하 명령을 내렸고, 유족이 즉시항고 절차를 밟지 않아 이런 부산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김 씨 유족과 정수장학회, 국가가 관련된 재산반환 소송의 첫 확정 판결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미래한국 2012년 12월 3일 정치 37

BOOK 리뷰

"정수장학회는 장물이 아니다"

김영 부산 MBC 전 사장 <정수장학회와 다이아반지>출간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강탈된 것이 아니라 증여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 방송문화진흥회 전 감사가 신간 〈정수장학회와 다이아반지〉를 출간해 "故 김지태 씨가 자신의 비리로 구속돼 석방되는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재산 일부를 국가에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정수장학회는 1962년 설립된 5·16장학회를 모태로 하여 1982년 전두환 정권 때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5·16장학회에 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한국문화방송 및 토지를 기증했던 김지태 씨의 유족이 2010년 6월 국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낸 이후 최근 정치 이슈로 불거졌다. 정치권에선 '박정희 정권이 개인의 재산을 강탈했다'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김영 전 감사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런 정수장학회 강탈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감사는 부산MBC에서 보도국장과 사장을 지내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정통하다고 자처하는 인물이다. 그는 저서에서 김지태 씨가 1962년 4월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에 의해 농지개혁법 위반, 탈세, 외환관리법위반, 부인의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석방을 위해 최고권력자인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에게 석방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재산 헌납 이후 박정희 정권의 비호가 김지태 씨의 사업이 확장되는 데 일조했다고도 덧붙였다. 금탑·은탑산업훈장을 받을 정도로 사업체가 번창한 데는 거액의 차관을 융자 받는 식으로 정부 지원의 힘이 컸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김 전 감사는 또 저서에서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은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선 "정수장학회가 공익재단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다하고 있다"며 "어느 특정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익재단법인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수장학회의 명칭에 대해서도 저자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박정희와 육영수 부부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정수장학회의 명칭은 고전인 〈대학〉 7장에 나오는 '정심수기(正心修己)' 편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심수기란 바른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한편, 최근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김지태 씨 유족이 "국가에 헌납한 땅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상고장 각하 명령을 내렸고, 유족이 즉시항고 절차를 밟지 않아 이런 부산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김 씨 유족과 정수장학회, 국가가 관련된 재산반환 소송의 첫 확정 판결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재욱 기자 jujung19@naver.com

의 결 번 호	2012대선52(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일간시사서울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7길 13 대표이사 나 정 영
심의대상기사	시사서울 2012년 12월 3일자 3면 「대선 여성공약 비교해보니… 평균 C학점」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주요 후보자들의 정책 및 공약에 대해 비교·평가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후보자별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고 유권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 제11조(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대선 여성공약 비교해보니 … 평균 C학점

여성신문, 대선 주자별 여성정책 공약 평가
10점 만점에 文 6.43·朴 5.36… 李 3.36 낙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캠프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대선 사상 가장 많은 여성 후보가 출마하는 등 여성정책이 중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각 후보의 여성정책공약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신문'이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정책공약평가단에게 대선 후보의 여성정책공약을 평가하도록 해 분석한 결과 10점 만점 척도로 봤을 때 문 후보는 6.43점, 박 후보는 5.36점을 받았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3.36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이는 ▲일·가정 양립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대표성 ▲여성 인권(복지) ▲성폭력 예방 5개 분야 공약을 적합성, 실현가능성, 일관성, 시간계획성, 참신성 등 5개 항목으로 나누어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로, 여성신문은 "평균 C학점…여성공약 다시 써라"라고 총평했다.

평가단은 특히 여성 일자리 부문에서 박 후보(4.92점)의 공약이 문 후보(6.69점)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여성 인권 분야도 박 후보(4.92점)가 문 후보(6.92점)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지만 각 분야에서 우위를 점한 문 후보 공약도 계획성이나 참신함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대선 여성공약 비교해보니 … 평균 C학점

여성신문, 대선 주자별 여성정책 공약 평가

10점 만점에 文6.43 · 朴5.36… 李3.36 낙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캠프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대선 사상 가장 많은 여성 후보가 출마하는 등 여성정책이 중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각 후보의 여성정책공약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신문'이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정책공약평가단에게 대선 후보의 여성정책공약을 평가하도록 해 분석한 결과 10점 만점 척도로 봤을 때 문 후보는 6.43점, 박 후보는 5.36점을 받았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3.36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이는 ▲일 · 가정 양립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대표성 ▲여성 인권(복지) ▲성폭력 예방 5개 분야 공약을 적합성, 실현가능성, 일관성, 시간계획성, 참신성 등 5개 항목으로 나누어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로, 여성신문은 "평균 C학점…여성공약 다시 써라"라고 총평했다.

평가단은 특히 여성 일자리 부문에서 박 후보(4.92점)의 공약이 문 후보(6.69점)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여성 인권 분야도 박 후보(4.92점)가 문 후보(6.92점)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지만 각 분야에서 우위를 점한 문 후보 공약도 계획성이나 참신함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경탁 기자 gimtak@

▲ 시사서울 2012년 12월 3일자 3면

의 결 번 호	2012대선53(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재 호
심의대상기사	동아일보 2012년 12월 7일자 A1면 「朴-文 15개 정책, 본보-정당학회가 검증해보니」, A4~A5면 「선택 2012 대선 메니페스토 정책검증」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주요 후보자들의 정책 및 공약에 대해 비교·평가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후보자별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고 유권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108조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 제11조(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朴-文 15개 정책, 본보-정당학회가 검증해보니】

실현수단은 '무난' 朴 3.0 文 2.6점… 〈5점 만점〉
재정방안은 '부실' 朴 2.3 文 1.9점

대선후보들이 서로 정책을 베끼면서 '누가 되든' 큰 차이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부 정책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났다.

▸A4·5면에 관련기사

6일 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으로 정책 어젠다 15개를 선정해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어젠다별 구체적 실행방안과 예산 추계, 재원조달 방안 등을 물은 결과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 적합성'에서 박 후보가 3.0점(5점 만점), 문 후보가 2.6점이었다.

재원 규모가 적절한지를 살피는 '재정 실현성'에서는 박 후보 2.3점, 문 후보 1.9점으로 둘 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그만큼 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다.

채택된 수단을 쉽게 집행할 수 있느냐는 '집행용이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비용 효과성'에서는 박 후보가 문 후보보다 각각 0.7점, 0.6점 높았다. 정책 완성도에서 박 후보가 문 후보를 다소 앞선다는 얘기다.

10월 말 정당학회와 함께 박, 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를 대상으로 리더십 및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했을 때는 5개 항목(의사소통능력, 국정운영능력, 위기관리능력, 정치력, 비전제시능력)에서 문 후보가 모두 1위를 차지했었다.

두 후보의 정책이 이념 스펙트럼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념적 좌표'를 평가한 결과 박 후보는 1.0점(3점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으로 중도보수적 태도를, 문 후보는 -1.8점(-3점에 가까울수록 진보적)으로 진보적 태도를 보였다.

박 후보는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현행 유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증세 억제를 주장한 반면 문 후보는 재벌 소유 지배구조 개선, 노동

시장 유연성 확대 반대, 상위 1% 부자증세 추진 등을 내세웠다. 또 문 후보는 특목고 · 자사고 폐지, 아동수당 도입, 적극적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박 후보는 이에 반대했다.

朴-文 15개 정책, 본보-정당학회가 검증해보니

실현수단은 '무난' 朴 3.0 文 2.6점 〈5점 만점〉

재정방안은 '부실' 朴 2.3 文 1.9점

대선후보들이 서로 정책을 베끼면서 '누가 되든' 큰 차이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부 정책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났다. ▶A4·5면에 관련기사

6일 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으로 정책 어젠다 15개를 선정해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어젠다별 구체적 실행방안과 예산 추계, 재원조달 방안 등을 물은 결과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 적합성'에서 박 후보가 3.0점(5점 만점), 문 후보가 2.6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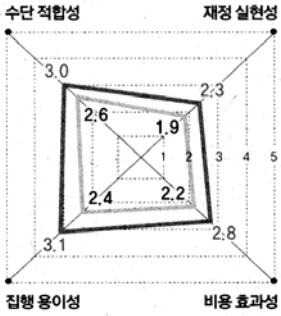
재원 규모가 적절한지를 살피는 '재정 실현성'에서는 박 후보 2.3점, 문 후보 1.9점으로 둘 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그만큼 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다.

채택된 수단을 쉽게 집행할 수 있느냐는 '집행 용이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비용 효과성'에서는 박 후보가 문 후보보다 각각 0.7점, 0.6점 높았다. 정책 완성도에서 박 후보가 문 후보를 다소 앞선다는 얘기다.

10월 말 정당학회와 함께 박, 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를 대상으로 리더십 및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했을 때는 5개 항목(의사소통능력, 국정운영능력, 위기관리능력, 정치력, 비전제시능력)에서 문 후보가 모두 1위를 차지했었다.

동아일보-한국정당학회의 대선후보 정책 평가 결과 — 박근혜 / 문재인

5점 만점.



두 후보의 정책이 이념 스펙트럼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념적 좌표'를 평가한 결과 박 후보는 1.0점(3점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으로 중도보수적 태도를, 문 후보는 −1.8점(−3점에 가까울수록 진보적)으로 진보적 태도를 보였다.

박 후보는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현행 유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증세 억제를 주장한 반면 문 후보는 재벌 소유 지배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반대, 상위 1% 부자증세 추진 등을 내세웠다. 또 문 후보는 특목고·자사고 폐지, 아동수당 도입, 적극적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박 후보는 이에 반대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선택 2012 대선 매니페스토 정책검증】

경제 민주화
“朴은 시장충격 완화 – 文은 경제약자 보호 두드러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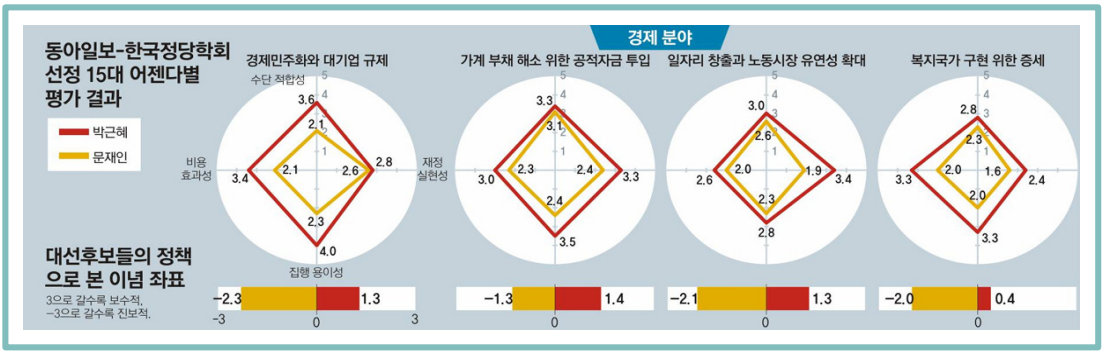
【경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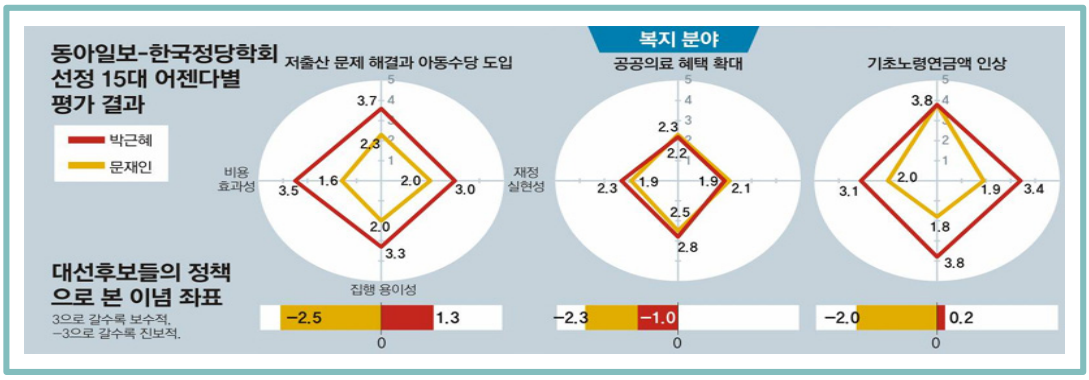
경제 분야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이념적 좌표는 다른 분야에 비해 확연히 갈린다. 경제 정책에서 두 후보 간 이념적 좌표 사이의 거리는 7점 척도(±3점)에서 평균 3.0으로 교육·사회(2.7), 복지, 정치(이상 2.5)에 비해 멀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박 후보는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꺼내 든 뒤 시장경제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시장 친화, 민주당은 정부 개입을 선호하는 근본적인 노선 차이는 분명했다. 이번 대선 초반의 주요 어젠다 가운데 하나였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기업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서 이 같은 차이가 잘 드러난다.

박 후보는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규제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소유지배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방안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문 후보는 “재벌들이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등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매니페스토 자문교수단은 박 후보에 대해 “대기업의 현실을 감안해주는 정책”이라면서도 “실현 가능한 수단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대기업 금융·보험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현행 15%에서 최종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안을 꼽았다. 이성규 안동대 교수는 “시장 충격을 줄이면서 집행이 용이하다”고 말했다.(후략)





"朴 연금중복 방지-文 건보 사후정산제 긍정적"

【복지 분야】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 기조는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로 대비된다. 복지공약의 이념좌표를 보면 박 후보는 '중도', 문 후보는 '진보적'으로 나타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박 후보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정에 '새아기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액은 자녀 1인당 최고 50만 원까지다. 반면 문 후보는 5세까지 전체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제시했다. 소득하위계층에 주던 양육수당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신준섭 건국대 교수는 "무상보육과 연계해 선별적 지원을 강조한 박 후보의 공약은 재정이나 집행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선 "5년간 소요예산을 8조4480억 원으로 추계했는데 재원부담이 이를 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의료 혜택의 경우 박 후보는 특정 질병과 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 확대를 강조한다. 암 중풍 심장병 백혈병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을 100% 책임지는 것이 핵심이다. 문 후보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제안했다.

신 교수는 박 후보의 정책에 대해 "4대 중증질환만 100% 보장으로 한정해 보장성 확대의 폭이 좁다"며 "재정을 연간 1조5000억 원으로 제시했으나 진료비 지출 효율화, 급여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 확충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공약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높이기 위해 사후정산제를 실시한다는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후략)

"朴 세출절감 불확실… 文 부자증세로 못채워"

【공약 재원계획】

연평균 朴 27조-文 39조 제시

재원 조달 계획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재원 조달 방안의 우선순위 (연평균)	①예산 절감, 세출 구조조정 14조2000억 원 ②세제 개편 9조6000억 원 ③복지행정 개혁 2조1000억 원 ④기타 재정수입 증대 1조 원 =연평균 27조 원	①조세 개혁(부자감세 철회 및 상위 1% 증세) 19조 원 ②재정 개혁 14조7000억 원 ③복지 개혁(건강보험료 부담체계 개선 등) 5조7000억 원 =연평균 39조4000억 원
집권 5년간 총 조달 재원	135조 원	197조 원

박근혜 후보 측은 "재원 마련에 적절한 대책이 없다"고 문재인 후보 측을 비판한다. 반대로 문 후보 측은 "아예 증세 방안에 대한 검토가 결여됐다"고 박 후보 측을 공격한다. 재원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각 캠프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박, 문 후보 측은 본보 평가에서 모두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을 내놓았다. 집권 5년 동안 박 후보는 연평균 27조 원, 문 후보는 연평균 39조40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조달 방안의 구체성 등을 묻는 재정 실현성이나 행정 역량,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한 집행 용이성에서 박 후보는 문 후보에 비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공약 수입-지출표'를 작성하는 등 계획이 구체적이란 평가다. 하지만 매니페스토 자문교수단은 "박 후보가 강조하는 예산 절감으로도 부족하고, 문 후보가 제시한 부자 증세로도 모자란다"고 총평했다.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어젠다에 박 후보는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등의 증세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 부담을 늘리기 전에 '알뜰한 나라살림'이 먼저라는 것. 또 세입을 확충하더라도 누락, 탈루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고 봉급생활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금융 및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후략)



●경제 민주화 "朴은 시장충격 완화-文은 경제약자 보호 두드러져"

경제 분야

경제 분야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이념적 좌표는 다른 분야에 비해 확연히 갈린다. 경제 정책에서 두 후보 간 이념적 좌표 사이의 거리는 7점 척도(±3점)에서 평균 3.0으로 교육-사회(2.7), 복지, 정치이상 2.5에 비해 멀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박 후보는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캐내 든 뒤 시장경제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시장 친화, 민주당은 정부 개입을 선호하는 근본적인 노선 차이는 분명했다. 이번 대선 최대의 주요 어젠다 가운데 하나였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기업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서 이 같은 차이가 잘 드러난다.

박 후보는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규제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소유지배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방안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문 후보는 "재벌들이 최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매니페스토 자문교수단은 박 후보에 대해 "대기업의 현실을 감안해주는 정책"이라면서도 "실현 가능한 수단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대기업 금융·보험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현행 15%에서 최종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안을 꼽았다. 이성규 안동대 교수는 "시장 충격을 줄이면서 집행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해법

"朴, 국민행복기금 18조 조성 국가 재정부담으로 돌아와"

文, 피에타 3법 개정 주장 입법 통한 해법 효율성 의문"

문 후보에 대해선 "경제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수단을 제시했다"고 그 의지를 평가하면서도 "정책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단 적합성에 낮은 점수를 줬다. 이영환 계명대 교수는 "재벌의 글로벌 경쟁력을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으면서도 구체적 방안에는 재벌을 해체하는 정책이 다수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해법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에는 두 후보 모두 부정적이었다. 박 후보는 "공적자금은 최후수단"이라는 의견을 냈다. 문 후보는 하우스푸어 대책의 하나인 지분매각제를 예로 들어 "은행과 투자자의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두 후보 모두 기계부채 해법을 감조했지만 방점은 달랐다. 박 후보는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후 구제책'에, 문 후보는 '피에타 3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을 개정하는 '사전 예방책'에 무게를 뒀다.

박 후보는 기금 조성에 대해 "신용회복기금 등의 재원으로 채권을 발행해 정부의 직접 재정투입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문교수단은 "정부가 채권 발행을 위해 보증을 서면 재정 부담이 국가로 이전된다"고 지적했다. 또 문 후보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에 대해 박 후보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 문 후보는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문교수단은 박 후보에 대해 "노동 신축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문 후보에 대해 "기업의 일자리 수요 증가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각각 지적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동아일보-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 자문교수단 (가나다순)



"朴 연금중복 방지-文 건보 사후정산제 긍정적"

복지 분야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 기조는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로 대비된다. 복지공약의 이념좌표를 보면 박 후보는 '중도', 문 후보는 '진보적'으로 나타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박 후보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정에 '세아기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액은 자녀 1인당 최고 50만 원까지다. 반면 문 후보는 5세까지 전 세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제시했다. 소득하위계층에 주던 양육수당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신준섭 건국대 교수는 "무상보육과 연계해 선별적 지원을 강조한 박 후보의 공약은 재정이나 집행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선 "5조 원 소요예산을 65조4490억 원으로 추계했는데 재원부담이 이를 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의료 체제의 경우 박 후보는 특정 질병과 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 확대를 강조한다. 암 중증 심장병 백혈병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을 100% 책임지는 것이 핵심이다. 문 후보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제안했다.

신 교수는 박 후보의 정책에 대해 "4대 중증질환만 100% 보장으로 한정해 보장성 확대의 폭이 좁다"며 "재정을 연간 1조5000억 원으로 제시했으나 진료비 지출 효율화, 급여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 확충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공약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이기 위해 사후정산제를 실시한다는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3인 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은 두 후보 모두 20만 안팎인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연금 소득이 많은 노인의 경우 더 높은 감액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노양 적합형 일자리 확대 등 연금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병행하자고 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연금의 중복·과잉 지급을 막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노인 복지 정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복지·조세개혁을 통해 연평균 39조4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문 후보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이다.

이남희 기자 nun@donga.com

"朴 세출절감 불확실… 文 부자증세로 못채워"

공약 재원계획

연평균 朴 27조-文 39조 제시

박근혜 후보 측은 "재원 마련에 적절한 대책이 없다"고 문재인 후보 측을 비판한다. 반대로 문 후보 측은 "아예 증세 방안에 대한 검토가 결여됐다"고 박 후보 측을 공격한다. 재원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각 캠프도 잘 알고 있는 데기다.

박, 문 후보 측은 본보 평가에서 모두 꼴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을 내놓았다. 집권 5년 동안 박 후보는 연평균 27조 원, 문 후보는 연평균 39조40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조달 방안의 구체성 등을 묻는 재정 실행성에서 박 후보는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등의 증세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 부담을 늘리기 전에 '알뜰한 나라살림'이 먼저라는 것. 또 세입을 확충하더라도 누락, 탈루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고 봉급생활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금융 및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환 계명대 교수는 "박 후보의 재원 조달 계획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출 절감(예산 절감, 세출 구조조정)을 연평균 14조2000억 원으로 잡은 것은 대단히 불확실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문 후보는 감은 어젯다에 대해 '선(先)조세구조 개혁 후(後)증세 기조'를 전제한 뒤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 부담 없이 부자감세 철회 및 상위 1% 증세"라는 조건부 찬성 견해를 밝혔다. 이를 통해 2012년 현재 19.8%인 조세부담률을 집권 마지막 해인 2017년 21.6%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석원 서울대 교수는 "상위 소득 1%가 부담하는 세금 비중을 미뤄봄 때 이들만의 증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자증세는 포퓰리즘적 구호"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 당론대로 대기업 법인세율을 높이고,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 대상자(현행 '3억 원 초과'→'1억5000만 원 초과')를 늘려도 세수 확대 효과가 연간 5조 원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재원 조달 계획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재원 조달 방안의 우선순위 (연평균)	①예산 절감 세출 구조조정 14조2000억 원 ②세제 개편 8조6000억 원 ③복지재원 개혁 2조1000억 원 ④기타 재정수입 증대 1조 원 →연평균 27조 원	①조세 개혁(부자감세 철회 및 상위 1% 증세) 13조 원 ②재정 개혁 14조7000억 원 ③복지, 개혁(건강보험료 부담체계 개선 등) 5조7000억 원 →연평균 39조4000억 원
집권 5년간 총 조달 재원	135조 원	197조 원



【선택 2012 대선 매니페스토 정책검증】

한미-한중관계
"朴, 조화 강조… 투명성 부족"
"文, 균형 주장… 논리적 모순"

동아일보-한국정당학회 공약 평가 지표

구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이념적 좌표	▪대선후보의 의견이 보수 우파적인가, 진보 좌파적인가?	3: 매우 보수적 2: 보수적 1: 중도 보수적 0: 중도 -1: 중도 진보적 -2: 진보적 -3: 매우 진보적
수단 적합성	▪채택한 정책수단이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수단은 아닌가?	5점: 매우 현실적 4점: 약간 현실적 3점: 보통 2점: 약간 비현실적 1점: 매우 비현실적
재정 실현성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가 현실을 감안해 예측됐는가?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집행 용이성	▪정부 조직체계, 행정역량 등을 고려할 때 채택된 수단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가?	
비용 효과성	▪채택된 수단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투입 재원 규모가 너무 크지 않은가? ▪정책목표를 실현하더라도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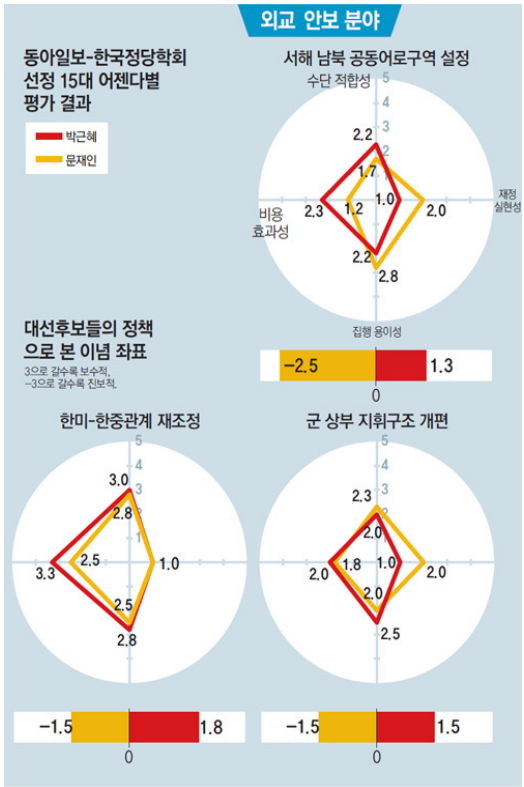
【외교 안보 분야】

외교안보 분야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집행 용이성과 비용 효과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수단 적합성, 재정 실현성에서 평가가 좋았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따라 한미, 한중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어젠다에 대해 두 후보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동시에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한미동맹은 공고하게 발전시키되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호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균형외교'를 내세웠다.

매니페스토 자문교수단은 박 후보에 대해 "동북아 질서를 현상유지의 관점에서 유지하고 있어 보수적인 견해로 평가한다"며 "현 정부 대외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측면에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립대 황지환 교수는 "외교정책은 기본적인 실행 계획이 투명해야 한다"며 "모호한 정책은 향후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자문교수단은 문 후보에 대해선 "한미동맹보다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 진보적 견해로 평가한다"면서 "한미관계와 주변국과의 균형외교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떠올리게 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국방비 증액 등 상당한 안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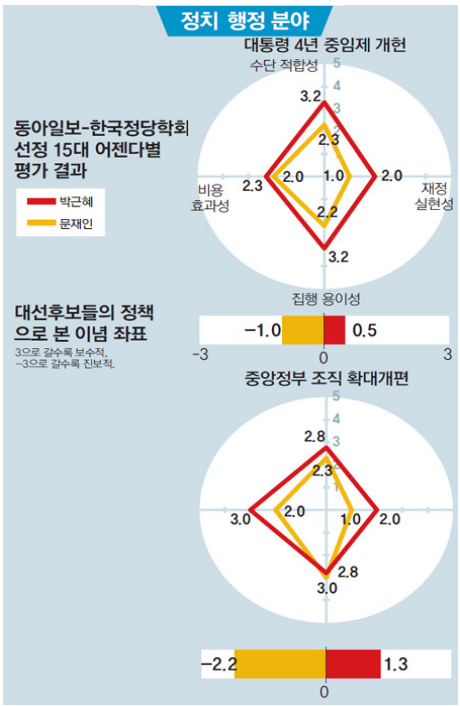
“朴-文, 중임제 개헌 로드맵 없어… 선언적 수준”

【정치 행정 분야】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정치 · 행정 분야 어젠다에 대한 의견은 닮은 듯하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두 후보 모두 정책 방향은 제시했지만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지 못해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매니페스토 자문교수단의 평가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두 후보는 모두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방점은 전혀 달랐다.

박 후보는 “헌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면서도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등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주력한 뒤 적절한 시기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임기 초반에 개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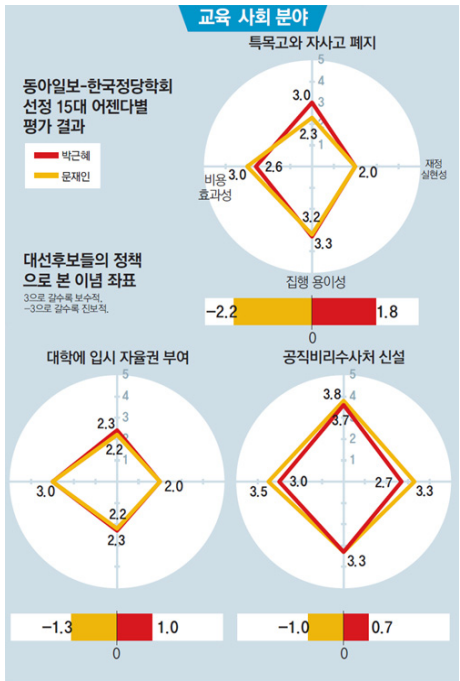
“朴 특목고 감독 강화 – 文 폐지… 누가 돼도 혼란”

【교육 사회 분야】

교육 · 사회 분야 어젠다에서 박근혜 후보는 ‘점진적 개선’에, 문재인 후보는 ‘급진적 개혁’에 방점을 뒀다.

‘고교서열화를 막기 위해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폐지하느냐’를 놓고 두 후보의 입장은 엇갈렸다. 박 후보는 △특목고가 설립의 ‘특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 강화 △일반고 집중 육성을 제안했다. 반면 문 후보는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자고 주장한다.

김혜숙 연세대 교수는 “박 후보 공약은 고교서열화 해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후보 공약에 대해선 “고교서열화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폐지 대상이 되는 학교의 반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후략)



자문교수단, 어젠다 15개를 '재정 실현성' 등 5개 지표로 평가

■ 어떻게 조사했나

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교수단을 꾸린 뒤 지난달 3차례 회의를 열어 정책 어젠다 15개를 선정했다. 기존 정책 검증이 각 후보들의 백화점식 공약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면서 유권자가 후보 간 차이를 파악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두 후보가 대립하고 있는 분야별 핵심 어젠다만을 골라 꼼꼼히 비교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평가 지표는 5가지로 세분화했다.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 수단인가(수단 적합성) △소요 재원 규모가 적절한가(재정 실현성) △채택된 수단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가(집행 용이성) △정책목표를 실현하더라도 다른 부작용이 없는가(비용 효과성)를 살펴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겼다. 여기에 후보별 정책이 이념적으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념 좌표를 별도로 평가했다.(후략)



• 한미-한중관계 "朴, 조화 강조… 투명성 부족" "文, 균형 주장… 논리적 모순"

동아일보-한국정당학회 공약 평가 지표

구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이념적 좌표	• 대선후보의 의견이 보수 우파적인가, 진보 좌파적인가?	3: 매우 보수적 2: 보수적 1: 중도 보수적 0: 중도 -1: 중도 진보적 -2: 진보적 -3: 매우 진보적
수단 적합성	• 제시한 정책수단이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가? • 모름/비공개/대상집합주의적 수단은 아닌가?	
재원 실현성	•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가 현실성 감안해 예측했는가? •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5점: 매우 현실적 4점: 약간 현실적 3점: 보통 2점: 약간 비현실적 1점: 매우 비현실적
집행 용이성	• 정부 조직체계, 행정체제 등을 고려할 때 제시한 수단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가? •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가?	
비용 효과성	• 제시한 수단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투입 재원 규모가 너무 크지 않은가? • 정책목표를 실현하더라도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가?	

외교 안보 분야

외교안보 분야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집행 용이성과 비용 효과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수단 적합성, 재정 실현성에서 평가가 좋았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따라 한미, 한중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어젠다에 대해 두 후보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동시에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한미동맹은 공고하게 발전시키되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호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균형외교'를 내세웠다.

매니페스토 자문교수단은 박 후보에 대해 "동북아 질서를 현상유지의 관점에서 유지하고 있어 보수적인 전해로 평가한다"며 "현 정부 대외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측면에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립대 황지환 교수는 "외교정책은 기본적인 실현 계획이 부명해야 한다"며 "모호한 정책은 향후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자문교수단은 문 후보에 대해선 "한미동맹보다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 진보적 전해로 평가한다"면서 "한미관계와 주변국과의 균형외교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희음리게 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국방비 증액 등 상당한 안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NLL주변 공동어로구역

"朴, 北의 NLL인정이 조건 설정 자체가 불가능할 듯

文, 남북정제연합 계획 지속적 사회 부작용 우려"

과의 균형외교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희음리게 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국방비 증액 등 상당한 안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의 상부 지휘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박 후보는 "전시작전권 전환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거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잘못된 진단"이라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자문교수단은 박 후보 답변에 대해 "군 내부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모호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3군의 균형발전, 전력의 합동성, 국방 문민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현재 3군 간 균형을 볼 때 실제로 이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두 후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해 총론에서는 동의했지만 각론에선 매우 달랐다. 박 후보는 "NLL을 북한이 인정할 경우에만 공동어로구역을 열의할 수 있다"며 "NLL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자문교수단은 "북한의 'NLL 인정 불가' 방침은 명확하다. 그럴다면 공동어로수역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후보에 대해서는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이란 세부 계획을 밝혔지만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정한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朴-文, 중임제 개헌 로드맵 없어… 선언적 수준"

정치 행정 분야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정치·행정 분야 어젠다에 대한 의견은 닮은 듯 하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두 후보 모두 정책 방향은 제시했지만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지 못해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매니페스토 자문교수단의 평가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두 후보는 모두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방점은 전혀 달랐다.

박 후보는 "헌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면서도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등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주력한 뒤 적절한 시기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임기 초반에 개헌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후보는 개헌에 '조건부 찬성'의 견을 냈다. 그 조건은 중임제뿐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통치구조와 국정운영 방식 전반을 다루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감한다고 밝힌 박 후보보다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낸 문 후보의 개헌 의지가 훨씬 강한 셈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차기 대통령 임기 초반에 개헌 요구가 클 텐데 박 후보가 이를 극복하려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당분간 유지해야 할 논리적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 확대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박 후보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조직통합에 따른 조직기능 강화, 둘째 조직분리에 따른 상호견제 강화, 셋째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초기와 같은 전면적 정부조직 개편은 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이룰 구체적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문 후보는 "기존의 '작은 정부론'에서 탈피해 '일 잘하는 적정한 정부'를 지향하겠다"며 사상상 '큰 정부론'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 부활, 중소상공부 설치 검토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부처 신설과 통폐합 시 예산이 필요할에도 이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었다.

이재명 기자 eyja@donga.com

"朴 특목고 감독 강화-文 폐지… 누가 돼도 혼란"

교육 사회 분야

교육·사회 분야 어젠다에서 박근혜 후보는 '점진적 개선'에, 문재인 후보는 '급진적 개혁'에 방점을 뒀다.

'고교서열화를 막기 위해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를 폐지하느냐'를 놓고 두 후보의 입장은 엇갈렸다. 박 후보는 △특목고가 설립의 '특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 강화 △입학고 집중 육성을 제안했다. 반면 문 후보는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자고 주장한다.

김혜숙 연세대 교수는 "박 후보 공약은 고교 서열화 해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후보 공약에 대해선 "고교서열화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폐지 대상이 되는 학교의 반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대학에 입시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대학에 입시 자율권을 주되 공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대입전형 단순화와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도 권장한다. 문 후보는 "공정경쟁, 학생·학부모 부담 최소화, 공교육 정상화, 사회통합 등을 고려한 입시제도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가지 유형으로 입시 단순화 △고교과정을 넘어선 논술, 영어 점수 반영 금지 등을 제안했다.

대입 단순화 전형을 권장하는 박 후보의 공약은 입시 자율권을 찬성하는 기본 입장과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다.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입시 단순화는 국민정서에 부합해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된 대학은 학생 변별이 어려워져 부담할 소지가 크다"는 평이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비리 문제를 근절할 해결책도 다르다. 박 후보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제 도입을,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주장한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문 후보 공약이 '더 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비용도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후보 공약에 대해선 "좀 더 온건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 공직자 비리문제가 해소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nun@donga.com

자문교수단, 어젠다 15개를 '재정 실현성' 등 5개 지표로 평가

■ 어떻게 조사했나

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교수단을 꾸린 뒤 지난달 3차례 회의를 열어 정책 어젠다 15개를 선정했다. 기존 정책 검증이 각 후보들의 백화점식 공약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면서 유권자가 후보 간 차이를 파악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두 후보가 대립하고 있는 분야별 핵심 어젠다만을 골라 좀 더 비교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평가 지표는 5가지로 세분화했다.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 수단인가(수단 적합성) △소요 재원 규모가 적절한가(재정 실현성) △재택원 수단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가(집행 용이성) △정책목표를 실현하려고 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얼는가이(비용 효과성)를 살펴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겼다. 예가에 후보별 정책이 이념적으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념 좌표를 별도로 평가했다.

자문교수단은 "어젠다를 정책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거나 재원조달 방안이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며 "정책을 실행할 때 나타날 사회적 갈등 비용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eyja@donga.com



4. 권고

의 결 번 호	2012대선1(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 서울시 중구 필동1가 30 대표이사 장 대 환
심의대상기사	매일경제 2012년 5월 1일자 A1면 「박근혜 44.6% 안철수 39.9%」, 5월 1일자 A8면 「"與 국민경선 현 규정대로" 56%」, 5월 15일자 A7면 「민주-진보 연대 反 43% 〉 贊 30%」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일자 및 방법,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누락시켰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5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근혜 44.6% 안철수 39.9%

매경 · 한길리서치 조사, 문재인 지지율 하락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매일경제 · MB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선 양자대결 지지를 물어본 결과 박 위원장의 지지율은 44.6%,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지율은 39.9%로 나타났다. 총선 10여 일 전인 지난 3월 말 조사에서는 안 원장의 지지율이 39.1%를 기록하면서 36.6%에 머무른 박 위원장을 2.5%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총선 직후 조사에서 박 위원장의 지지율이 46.9%로 10%포인트 이상 급등하면서 안 원장을 추월했다.

문 고문은 총선 직전 박 위원장과의 양자대결에서 33.6%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6.0%포인트까지 격차를 좁혔다.

그러나 총선 직후 박 위원장의 지지율은 50.8%로 뛰어올랐고, 이번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54.0%까지 치솟았다. 두 사람 간 지지율 격차는 23.3%포인트까지 벌어졌다.

"與 국민경선 현 규정대로" 56%

매경 · 한길리서치 조사, "미국산 쇠고기 우선 수입중단" 72%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박근혜-안철수 대선 양강구도'가 확연해졌다. 4 · 11 총선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문재인 고문의 지지율이

주춤했고, 박근혜 위원장과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당분간 두 사람을 흔들 만한 악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야권 내부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다.

'야권의 대통령 후보 중 누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안철수 원장 30.2% △문재인 고문 13.3%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9.1%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 5.4% △김두관 경남지사 3.7%의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37.0%였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고문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의 지지율 차가 좁혀졌다. 손 전 대표는 9.1%의 지지율을 기록해 두 자릿수대 지지율 진입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10일간의 유럽 방문을 마치고 이달 2일 귀국하는 손 전 대표가 원내대표 선거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어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선 레이스 참여를 선언할지가 향후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재인 고문은 영남을 넘어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듭나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여권 후보 중 대통령에 적합한 사람을 물어본 결과 박근혜 위원장을 지지한 사람은 전체의 53.6%였다. 정몽준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운찬 전 총리의 지지율은 각각 5.8%, 5.7%, 4.9%에 머물러 박 위원장과의 격차가 50%포인트가량 벌어져 있다.

총선 직후 13.6%포인트까지 벌어졌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당지지율은 각각 36.3%, 26.5%를 기록하면서 소폭 좁혀졌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지난달 둘째주에 38.5%, 민주당 지지율은 24.9%였다.

김문수 지사와 정몽준 의원, 민주당 등이 압박하고 있는 새누리당 완전국민경선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반반씩 반영하는 현재 대통령 후보 선출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56.0%였지만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38.1%에 그쳤다. 박근혜 위원장 측이 완전국민경선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민주당 새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들의 견해가 엇갈렸다.

이해찬 민주당 고문과 박지원 의원이 각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았다. '두 사람의 협력이 친노그룹과 호남세력 간 권력 분점을 위한 담합'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7.2%였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협력'으로 해석한 사람은 29.9%였다. 미묘한 질문이어서 '잘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도 32.8%나 됐다.

박근혜 44.6% 안철수 39.9%

매경·한길리서치 조사, 문재인 지지율 하락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매일경제·MB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선 양자대결 지지를 물어본 결과 박 위원장의 지지율은 44.6%,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지율은 39.9%로 나타났다.

총선 10여 일 전인 지난 3월 말 조사에서는 안 원장의 지지율이 39.1%를 기록하면서 36.6%에 머무른 박 위원장을 2.5%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총선 직후 조사에서 박 위원장의 지지율이 46.9%로 10%포인트 이상 급등하면서 안 원장을 추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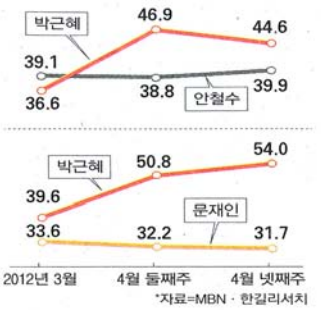
문 고문은 총선 직전 박 위원장과의 양자대결에서 33.6%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6.0%포인트까지 격차를 좁혔다.

그러나 총선 직후 박 위원장의 지지율은 50.8%로 뛰어올랐고, 이번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54.0%까지 치솟았다. 두 사람 간 지지율 격차는 23.3%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관련기사 A 8면

김은표 기자

대선 양자대결 지지율 (단위=%)



*자료=MBN · 한길리서치

"與 국민경선 현 규정대로" 56%

□ 매경 – 한길리서치 조사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박근혜–안철수 대선 양강구도'가 확연해졌다. 4·11 총선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문재인 고문의 지지율이 주춤했고, 박근혜 위원장과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당분간 두 사람을 흔들 만한 악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야권 내부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다.

'야권의 대통령 후보 중 누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안철수 원장 30.2% △문재인 고문 13.3%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9.1%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 5.4% △김두관 경남지사 3.7%의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37.0%였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고문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의 지지율 차가 좁혀졌다. 손 전 대표는 9.1%의 지지율을 기록해 두 자릿수대 지지율 진입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10일간의 유럽 방문을 마치고 이달 2일 귀국하는 손 전 대표가 원내대표 선거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어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선 레이스 참여를 선언할지가 향후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재인 고문은 영남을 넘어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듭나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여권 후보 중 대통령에 적합한 사람을 물어본 결과 박근혜 위원장을 지지한 사람은 전체의 53.6%였다. 정몽준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운찬 전 총리의 지지율은 각각 5.8%, 5.7%, 4.9%에 머물러 박 위원장과의 격차가 50%포인트가량 벌어져 있다.

총선 직후 13.6%포인트까지 벌어졌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당지지율은 각각 36.3%, 26.5%를 기록하면서 소폭 좁혀졌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지난달 둘째주에 38.5%, 민주당 지지율은 24.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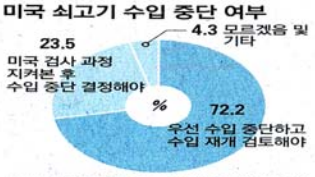
김문수 지사와 정몽준 의원, 민주당 등이 압박하고 있는 새누리당 완전국민경선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반반씩 반영하는 현재 대통령 후보 선출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56.0%였지만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38.1%에 그쳤다. 박근혜 위원장 측이 완전국민경선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민주당 새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들의 견해가 엇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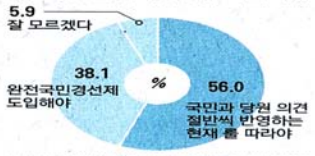
이해찬 민주당 고문과 박지원 의원이 각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았다. '두 사람의 협력이 친노그룹과 호남세력 간 권력 분점을 위한 담합'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7.2%였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협력'으로 해석한 사람은 29.9%였다. 미묘한 질문이어서 '잘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도 32.8%나 됐다.

김은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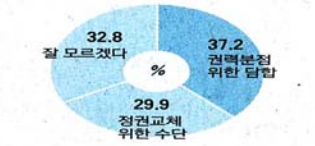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 여부



새누리당 완전국민경선 도입 여부



민주통합당 이해찬 · 박지원 연대 평가



"미국산 쇠고기 우선 수입중단" 72%

▲ 2012년 5월 1일(화) 매일경제 A8면

민주-진보 연대 反 43%>贊 30%

朴-文 격차 여전…손학규 · 김두관 '약진'
'文-安 공동정부론' 반대 41%>필요 32%
與野다자대결 김문수 · 정몽준 1~2%대 부진

□ 매경 · 한길리서치 조사

통합진보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싸늘했다. 4·11총선 직후 10%에 육박해 관심의 대상이었던 진보당의 정당 지지율은 한 달 새 3%대로 주저앉았다. 나아가 민주통합당이 12월 대선을 위해 진보당과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최근 불거진 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파문과 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과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화제가 됐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서울대 교수 간 공동정부 구성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매일경제·MBN이 여론조사 전문사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1~13일(5월 둘째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물어본 결과, 진보당의 지지율이 3.6%를 기록해 한 달 전(9.2%)보다 무려 5.6%포인트나 하락했다.

진보당의 지지율은 단일화 경선 부정 여파로 지난 3월 3.9%까지 떨어졌다가 야권단일화 효과와 새누리당에 대한 견제 심리 덕분에 총선 직후인 지난달 13~14일(4월 둘째주)에는 9.2%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이후 지지율은 하락했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갈등이 폭력사태라는 파국으로 치달은 5월 둘째주에는 다시 3%대로 주저앉았다. 특히 진보당 주 지지층인 30~40대 연령층의 등 돌림이 두드러졌다. 한 달 전 각각 14.6%, 17.4%였던 30대와 40대의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5.2%와 6.2%로 폭락했다.

'혼란 속에 빠진 통합진보당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6.8%는 '노선이 다른 세력 간의 정략적 결합'이라고 답했고, 친북 성향의 국가 정체성 문제(17.6%), '폐쇄적·비민주적 당 운영'(15.6%) 등의 대답이 그 뒤를 이었다.

진보당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은 야권연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대선을 앞둔 민주당과 진보당의 야권연대에 대해 응답자의 42.9%는 '정체성이 다른 정당 간 집권을 위한 연대는 반대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보인 반면 '새누리당 집권을 막고 야권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30.2%에 그쳤다.

또 진보당의 추락과 달리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2.6%포인트 오른 27.5%를 기록했다.

최근 문 상임고문은 안 교수에게 공동정부 연대 구성, 이른바 '문재인-안철수 연합'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론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았다. 응답자의 40.7%는 정체성이 다른 후보 간 공동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고, 32.1%만이 '찬성'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1.8%로 앞선 가운데 안 교수(22.4%), 문 상임고문(10.7%) 등이 뒤를 이었다. 여야 잠룡인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은 여전히 1~2%대 지지율에 그쳤다.

양자 대결에서 박 위원장은 48.4%, 안 교수는 42.8%로 격차는 5.6%포인트였다.

한 달 전 지지율 격차 8.1%포인트(46.9% 대 38.8%)보다는 좁혀졌지만 4월 넷째주 조사 당시의 4.7%포인트(44.6% 대 39.9%)보다는 격차가 커졌다. 박 위원장과 문 상임고문 간의 대결에서는 55.0% 대 37.7%로 박 위원장이 17.3%포인트 앞섰다.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야권 대권주자 중 손학규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지사의 약진이었다. 야권 대통령 후보만을 놓고 조사한 지지율에서 한 달 전만 해도 손 고문은 3.8%에 불과했으나 이번에는 7.7%로 두 배 넘게 뛰어올랐다. 김 지사도 한 달 전

에는 1.5%의 미미한 수준을 얻는 데 그쳤다. 하지만 4월 넷째주 지지율은 3.7%로 상승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5.4%로 올라 이른바 지지율의 마지노선인 5%를 넘었다.

반면 문재인 상임고문은 한 달 전 20.2%에서 이번에는 19.4%로 소폭 떨어졌다. 총선 이후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진보 연대 反 43%>贊 30%

□ 매경·한길리서치 조사

통합진보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싸늘했다. 4·11총선 직후 10%에 육박해 관심의 대상이었던 진보당의 정당 지지율은 한 달 새 3%대로 주저앉았다. 나아가 민주통합당이 12월 대선을 위해 진보당과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최근 불거진 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파문과 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과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화제가 됐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서울대 교수 간 공동정부 구성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매일경제·MBN이 여론조사 전문사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1~13일(5월 둘째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물어본 결과, 진보당의 지지율이 3.6%를 기록해 한 달 전(9.2%)보다 무려 5.6%포인트나 하락했다.

진보당의 지지율은 단일화 경선 부정 여파로 지난 3월 3.9%까지 떨어졌다가 야권단일화 효과와 새누리당에 대한 견제 심리 덕분에 총선 직후인 지난달 13~14일(4월 둘째주)에는 9.2%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이후 지지율은 하락했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갈등이 폭력사태라는 파국으로 치달은 5월 둘째주에는 다시 3%대로 주저앉았다. 특히 진보당 주 지지층인 30~40대 연령층의 등 돌림이 두드러졌다. 한 달 전 각각 14.6%, 17.4%였던 30대와 40대의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5.2%와 6.2%로 폭락했다.

'혼란 속에 빠진 통합진보당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6.8%는 '노선이 다른 세력 간의 정략적 결합'이라고 답했고, '친북 성향의 국가 정체성 문제'(17.6%), '폐쇄적·비민주적 당 운영'(15.6%) 등의 대답이 그 뒤를 이었다.

진보당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은 야권연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대선을 앞둔 민주당과 진보당의 야권연대에 대해 응답자의 42.9%는 '정체성이 다른 정당 간 집권을 위한 연대는 반대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보인 반면 '새누리당 집권을 막고 야권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30.2%에 그쳤다.

또 진보당의 추락과 달리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2.6%포인트 오른 27.5%를 기록했다.

최근 문 상임고문은 안 교수에게 공동정부 연대 구성, 이른바 '문재인-안철수 연합'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론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았다. 응답자의 40.7%는 정체성이 다른 후보 간 공동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고, 32.1%만이 '찬성'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1.8%로 앞선 가운데 안 교수(22.4%), 문 상임고문(10.7%) 등이 뒤를 이었다. 여야 잠룡인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은 여전히 1~2%대 지지율에 그쳤다.

양자 대결에서 박 위원장은 48.4%, 안 교수는 42.8%로 격차는 5.6%포인트였다.

한 달 전 지지율 격차 8.1%포인트(46.9% 대 38.8%)보다는 좁혀졌지만 4월 넷째주 조사 당시의 4.7%포인트(44.6% 대 39.9%)보다는 격차가 커졌다. 박 위원장과 문 상임고문 간의 대결에서는 55.0% 대 37.7%로 박 위원장이 17.3%포인트 앞섰다.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야권 대권주자 중 손학규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지사의 약진이었다. 야권 대통령 후보만을 놓고 조사한 지지율에서 한 달 전만 해도 손 고문은 3.8%에 불과했으나 이번에는 7.7%로 두 배 넘게 뛰어올랐다. 김 지사도 한 달 전에는 1.5%의 미미한 수준을 얻는 데 그쳤다. 하지만 4월 넷째주 지지율은 3.7%로 상승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5.4%로 올라 이른바 지지율의 마지노선인 5%를 넘었다.

반면 문재인 상임고문은 한 달 전 20.2%에서 이번에는 19.4%로 소폭 떨어졌다. 총선 이후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훈 기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朴-文 격차 여전…손학규·김두관 '약진'

'文-安 공동정부론' 반대 41%>필요 32%

與野다자대결 김문수·정몽준 1~2%대 부진

▲ 2012년 5월 15일(화) 매일경제 A7면

의 결 번 호	2012대선2(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대경신문(대경일보)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55-11번지 대표이사 이 춘 부
심의대상기사	대경일보 2012년 5월 17일자 2면 「박근혜 대선 지지율 47% '1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주간 정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결과 공표 준수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채 보도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5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근혜 대선 지지율 47% '1위'

안철수 · 문재인 하락세

지난 4 · 11총선과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도가 소폭 상승하며 대선주자 지지 1위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의 대선주자로 떠오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15일 실시한 대선주자 지지도 · 정당지지도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47.0%의 지지도를 나타내 1위를 지켰다. 이어 안철수 원장 15.2%, 문재인 상임고문 14.2%, 김문수 경기지사 4.3%, 김두관 경남지사 4.2%,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2.5%,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2.1%,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지지도 조사에서 40.5%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5%p 지지도가 상승했다. 반면 안철수 원장은 3.8%p, 유시민 공동대표는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1.6%p 소폭 하락했다.

권역별 조사에서 박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경북권으로 70.9%를 나타냈다.

호남권에서는 안철수 원장, 문재인 상임고문이 각각 34.3%, 31.0% 순으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 79.9%가 박 전 위원장을 지지했다. 민주통합당 지지 응답자는 31.3%가 안철수 원장을, 통합진보당 지지 응답자는 43.4%가 문재인 상임고문을 각각 선택했다.

박근혜 대선 지지율 47% '1위'

안철수·문재인 하락세

지난 4 · 11총선과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도가 소폭 상승하며 대선주자 지지 1위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의 대선주자로 떠오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15일 실시한 대선주자 지지도 · 정당지지도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47.0%의 지지도를 나타내 1위를 지켰다. 이어 안철수 원장 15.2%, 문재인 상임고문 14.2%, 김문수 경기지사 4.3%, 김두관 경남지사 4.2%,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2.5%,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2.1%,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은 지난 4월12일 지지도 조사에서 40.5%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5%p 지지도가 상승했다. 반면 안철수 원장은 3.8%p, 유시민 공동대표는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1.6%p 소폭 하락했다.

권역별 조사에서 박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경북권으로 70.9%를 나타냈다.

호남권에서는 안철수 원장, 문재인 상임고문이 각각 34.3%, 31.0% 순으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 79.9%가 박 전 위원장을 지지했다. 민주통합당 지지 응답자는 31.3%가 안철수 원장을, 통합진보당 지지 응답자는 43.4%가 문재인 상임고문을 각각 선택했다.

뉴시스

의 결 번 호	2012대선3(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영남일보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11 대표이사 손 인 락
심의대상기사	영남일보 2012년 5월 22일자 4면 「새누리 박근혜 범야권 안철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주간 정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결과 공표 준수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채 보도했다. 이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새누리 박근혜 범야권 안철수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1위

올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각각 적합 후보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5월 셋째 주 '데일리 정치지표'에 따르면, 지난 14~18일 전국 유권자 1천5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단일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경우 박 전 위원장이 61%의 응답자로부터 '적합하다'는 답변을 얻어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8%, 정몽준 전 대표가 7%로 그 뒤를 이었고 이재오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각 1%였다. '모른다'거나 '없다'는 응답은 21%였다.

또 야권 단일 후보로는 '안 원장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상임고문이 21%, 손학규 상임고문이 19%를 얻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4%, 민주당의 정동영 · 정세균 상임고문이 각각 3%와 1%였다. '모른다'거나 '없다'는 응답은 26%였다.

같은 기간 주요 대권주자들의 지지율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박 전 위원장이 전주와 같은 38%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안 원장은 23%로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위원장과 안 원장의 양자 가상대결에선 박 전 위원장이 47%, 안 원장이 37%로 같은 기관 조사에서 6주 연속 박 전 위원장이 안 원장을 앞질렀다.

새누리 박근혜 범야권 안철수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1위

올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각각 적합 후보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5월 셋째 주 '데일리 정치지표'에 따르면, 지난 14~18일 전국 유권자 1천5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단일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경우 박 전 위원장이 61%의 응답자로부터 '적합하다'는 답변을 얻어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8%, 정몽준 전 대표가 7%로 그 뒤를 이었고 이재오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각 1%였다. '모른다' 거나 '없다'는 응답은 21%였다.

또 야권 단일 후보로는 '안 원장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상임고문이 21%, 손학규 상임고문이 19%를 얻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4%, 민주당의 정동영·정세균 상임고문이 각각 3%와 1%였다. '모른다' 거나 '없다'는 응답은 26%였다.

같은 기간 주요 대권주자들의 지지율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박 전 위원장이 전주와 같은 38%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안 원장은 23%로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위원장과 안 원장의 양자 가상대결에선 박 전 위원장이 47%, 안 원장이 37%로 같은 기관 조사에서 6주 연속 박 전 위원장이 안 원장을 앞질렀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의 결 번 호	2012대선4(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대구연합일보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52-3 대표이사 전 경 도
심의대상기사	대구연합일보 2012년 6월 4일자 3면 「양자대결 박근혜-안철수 51.9%~39.5% 박근혜-문재인 56.5%-34.5%」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정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결과 공표 준수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채 보도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5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양자대결】

박근혜-안철수 51.9%-39.5%, 박근혜-문재인 56.5%-34.5%

2개월 만에 공개 석상에 나타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의 지지율이 5.5%p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5월 31일 실시한 '대선 주자 다자 대결 지지도 정례 여론조사'에서 안 원장은 지난달 15일 같은 조사보다 지지율이 5.5% 포인트 상승한 20.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자 대결 최고 지지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달 대비 3.9% 포인트 떨어진 43.1%를 보였지만 현재까지 수위를 유지했다.

이어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12.3%(15일 대비 1.9%↓), 김두관 경남지사 4.0%(0.2%↓),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2.9%(0.4%↑), 김문수 경기지사 2.7%(1.6%↓),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0.8%↑),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1.2%(0.9%↓) 등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 상승은 20대와 30대에서 이전 조사보다 각각 14.1%p, 10.7%p 올라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충청과 경남에서 각각 지난 조사보다 14.1%p, 9.1%p 오른 추세를 보였다.

대선 주자 양자 대결에서는 박근혜-안철수 51.9%-39.5%, 박근혜-문재인 56.5%-34.5%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박근혜-안철수 양자 대결에서는 박근혜 전 위원장 지지율이 60대 이상에서는 66.0%, 안철수 원장 지지율이 20대에서는 56.3%를 보였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경북권에서 81.3%, 안철수 원장은 전라권에서 59.9%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종 합

▨ 양자대결

박근혜-안철수 51.9%-39.5%, 박근혜-문재인 56.5%-34.5%

2개월 만에 공개 석상에 나타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의 지지율이 5.5%p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5월31일 실시한 '대선 주자 다자 대결 지지도 정례 여론조사'에서 안 원장은 지난달 15일 같은 조사보다 지지율이 5.5% 포인트 상승한 20.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자 대결 최고 지지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달 대비 3.9% 포인트 떨어진 43.1%를 보였지만 현재까지 수위를 유지했다.

이어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12.3%(15일 대비 1.9%↓), 김두관 경남지사 4.0%(0.2%↓)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2.9%(0.4%↑), 김문수 경기지사 2.7%(1.6%↓),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0.8%↑),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1.2%(0.9%↓) 등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 상승은 20대와 30대에서 이전 조사보다 각각 14.1%p, 10.7%p 올라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충청과 경남에서 각각 지난 조사보다 14.1%p, 9.1%p 오른 추세를 보였다.

대선 주자 양자 대결에서는 박근혜-안철수 51.9%-39.5%, 박근혜-문재인 56.5%-34.5%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박근혜-안철수 양자 대결에서는 박근혜 전 위원장 지지율이 60대 이상에서는 66.0%, 안철수 원장 지지율이 20대에서는 56.3%를 보였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경북권에서 81.3%, 안철수 원장는 전라권에서 59.9%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뉴시스

▨ 다자대결

박근혜 43.1% 안철수 20.7%

의 결 번 호	2012대선5(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재 호
심의대상기사	동아일보 2012년 6월 5일자 A8면 「"문재인 지지율 9%로 하락… 김두관은 4%로 상승"」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정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결과 공표 준수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채 보도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5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문재인 지지율 9%로 하락… 김두관은 4%로 상승"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사진)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고문은 5월 넷째 주(5월 29일~6월 1일) 성인 남녀 122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선후보 다자구도에서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9%를 기록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9%,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23%였다. 반면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1일 모노리서치 조사에서 4.0%, 4일 리얼미터 조사에선 2.2%를 얻었다.



"문재인 지지율 9%로 하락… 김두관은 4%로 상승"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사진)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고문은 5월 넷째 주(5월 29일~6월 1일) 성인 남녀 122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선후보 다자구도에서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9%를 기록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9%,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23%였다. 반면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1일 모노리서치 조사에서 4.0%, 4일 리얼미터 조사에선 2.2%를 얻었다.

의 결 번 호	2012대선6(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헤럴드경제) 서울시 중구 정동 1-17 대표이사 이 영 만
심의대상기사	헤럴드경제 2012년 6월 7일자 4면 「文 · 孫 · 金 3强…5%P내 박빙 격차」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특정 정당의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결과 공표 준수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채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5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민주 대의원들에 대선주자 물어보니

文 · 孫 · 金 3强…5%P내 박빙 격차

<문재인 · 손학규 ·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의원들은 문재인 상임고문과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대통령감으로 꼽았다. 당의 주인인 당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이런 표심은 향후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이들 3자 간의 치열한 박빙 구도로 치러질 것임을 암시한 셈이다.

7일 국가비전연구소와 타임리서치가 민주당 전국 대의원 2286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4.4%가 문 고문을 꼽았다. 손 전 대표는 22.8%, 김 지사는 20.7%로 치열한 3각 구도를 형성했다. 반면 정동영 전 의원과 정세균 의원은 각각 9.1%와 7.9%로 '2약'으로 구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 경남과 대구 · 경북, 그리고 충청 지역에서 문 고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다. 또 손 전 대표는 수도권과 호남, 강원 · 제주에서, 김 지사는 영남과 강원 · 제주에서 비교적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선 야권연대에 대한 호불호 차이는 대선 주자 호감도의 차이로도 이어졌다. 야권연대에 찬성한 대의원들은 호감 가는 후보로 문 고문을 꼽았고, 반대층은 손 전 대표에게 호감을 나타냈다. 이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연대 의지를 강하게 밝힌 문 고문의 발언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편 12월 대선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대의원이 50.5%, 반대는 36.2%로 조사됐다. 최근 통진당 내 부정 경선과 종북 논란에도 야권연대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함을 보여준 것이다. 또 연말 대선 결과 예측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의원의 절대다수인 67.7%가 '야권이 집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주 대의원들에 대선주자 물어보니…

文·孫·金 3强…5%P내 박빙 격차

〈문재인·손학규·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의원들은 문재인 상임고문과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대통령감으로 꼽았다. 당의 주인인 당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이런 표심은 향후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이들 3자 간의 치열한 박빙 구도로 치러질 것임을 암시한 셈이다.

7일 국가비전연구소와 타임리서치가 민주당 전국 대의원 2286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4.4%가 문 고문을 꼽았다. 손 전 대표는 22.8%, 김 지사는 20.7%로 치열한 3각 구도를 형성했다. 반면 정동영 전 의원과 정세균 의원은 각각 9.1%와 7.9%로 '2약'으로 구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그리고 충청 지역에서 문 고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다. 또 손 전 대표는 수도권과 호남, 감원·제주에서, 김 지사는 영남과 강원·제주에서 비교적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선 야권연대에 대한 호불호 차이는 대선 주자 호감도의 차이로도 이어졌다. 야권연대에 찬성한 대의원들은 호감 가는 후보로 문 고문을 꼽았고, 반대층은 손 전 대표에게 호감을 나타냈다. 이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연대 의지를 강하게 밝힌 문 고문의 발언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편 12월 대선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대의원이 50.5%, 반대는 36.2%로 조사됐다. 최근 통진당 내 부정 경선과 종북 논란에도 야권연대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함을 보여준 것이다. 또 연말 대선 결과 예측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의원의 절대다수인 67.7%가 '야권이 집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정호·양대근 기자/choijh@**

의 결 번 호	2012대선7(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시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송 영 승
심의대상기사	경향신문 2012년 6월 8일자 6면 「김두관 뜨자 대선주자 '박빙 3파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특정 정당의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결과 공표 준수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채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5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두관 뜨자 민주 대선주자 '박빙 3파전'

대의원들 호감도 조사

민주통합당 대선 레이스가 문재인 · 손학규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지사의 '3두마차'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국가비전연구소'는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 민주당 대의원 2,286명을 대상으로 '대선주자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지지율이 문 상임고문 24.4%, 손 상임고문 22.8%, 김 지사 20.7%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9.1%, 정세균 상임고문은 7.9%를 기록했다.

문 고문은 부산 · 경남에서 36.1%, 충청에서는 34.3%를, 손 고문은 호남 27.7%와 수도권 26.1%, 김 지사는 제주 33.3%와 부산 · 경남 34.5% 등에서 각각 높은 지지를 받았다. 문 고문과 김 지사는 대구 · 경북 지역에서 지지율이 30.6%로 같았다.

국가비전연구소(박명광 소장)는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이다.

김 지사는 상승세가 뚜렷한 반면 문 고문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당내 세력 지형도 기존 '친노 대 비노' 중심의 양자 구도에서 삼분지세(三分之勢) 양상을 띠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국가비전연구소가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주최한 '2012년 대선후보 특강'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누리는 부와 신분은 대물림을 받은 측면이 강하다"며 "이런 사회에서는 서민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했다. 그는 '계층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서울 출신 서울대 합격자의 43.6%가 강남 3구(서초 · 강남 · 송파) 출신이라는 점은 우리나라가 현대판 신분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 학부는 '엘리트 교육'에서 '사회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야권은 쇄신, 단결해 가장 알맞은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시대정

신을 담대하게 충족시킨다면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김 지사의 잠재적 경쟁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일본 도쿄시내의 한 호텔에서 한국특파원과 간담회를 하며, "내 생각에는 (내가)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대선 도전을 두고는 "김 지사가 경쟁에 참여한다면 민주당 경선이 역동적이고 풍부해질 것이라 기대한다"면서도 "민주당의 경남 국회의원이 1명 밖에 없기 때문에 김 지사가 지사직을 그만두는 것에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뜨자 민주 대선주자 '박빙 3파전'

대의원들 호감도 조사

민주통합당 대선 레이스가 문재인·손학규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지사의 '3두마차'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국가비전연구소'는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 민주당 대의원 2286명을 대상으로 '대선주자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지지율이 문 상임고문 24.4%, 손 상임고문 22.8%, 김 지사 20.7%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9.1%, 정세균 상임고문은 7.9%를 기록했다.

문 고문은 부산·경남에서 36.1%, 충청에서는 34.3%를, 손 고문은 호남 27.7%와 수도권 26.1%, 김 지사는 제주 33.3%와 부산·경남 34.5% 등에서 각각 높은 지지를 받았다. 문 고문과 김 지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지율이 30.6%로 같았다.

국가비전연구소(박명광 소장)는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이다.

김 지사는 상승세가 뚜렷한 반면 문 고문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당내 세력 지형도 기존 '친노 대 비노' 중심의 양자 구도에서 삼분지세(三分之勢) 양상을 띠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국가비전연구소가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주최한 '2012년 대선후보 특강'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누리는 부와 신분은 대물림을 받은 측면이 강하다"며 "이런 사회에서는 서민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했다. 그는 '계층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서울 출신 서울대 합격자의 43.6%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출신이라는 점은 우리나라가 현대판 신분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 학부는 '열리트 교육'에서 '사회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야권은 쇄신, 단결해 가장 알맞은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시대정신을 담대하게 충족시킨다면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김 지사의 잠재적 경쟁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일본 도쿄시내의 한 호텔에서 한국특파원과 간담회를 하며, "내 생각에는 (내가)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대선 도전을 두고는 "김 지사가 경쟁에 참여한다면 민주당 경선이 역동적이고 풍부해질 것이라 기대한다"면서도 "민주당의 경남 국회의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김 지사가 지사직을 그만두는 것에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구혜영 기자 koohy@kyunghyang.com

의 결 번 호	2012대선8(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이 동 화
심의대상기사	서울신문 2012년 6월 8일자 3면 「민주 대의원 후보 선호도 문재인 · 손학규 · 김두관 박빙」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특정 정당의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결과 공표 준수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채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5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민주 대의원 후보 선호도 문재인(24.4%) · 손학규(22.8%) · 김두관(20.7%) 박빙

민주통합당 대의원들은 당내 대선주자 가운데 문재인 상임고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22.8%, 김두관 경남지사는 20.7%로 뒤를 이었다. 12월 대선에서는 5명 가운데 1명꼴로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예상했다.

국가비전연구소와 타임리서치가 7일 공개한 '민주당 전국대의원 대상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동영 상임고문은 9.1%, 정세균 상임고문은 7.9%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1%였다. 여론조사는 대의원 2,286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 하루 동안 진행됐다.

지역별로 문 고문은 친노무현계가 강세를 보이는 부산 · 울산 · 경남(PK)과 대구 · 경북(TK)에서 선두를 달렸으며 이해찬 상임고문의 고향(충남 청양)이자 지역구(세종)인 대전 · 충남 · 세종에서 34.4%로 높게 나왔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손 고문은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에서 1위(26.1%)를 차지했고 광주 등 호남권에서도 27.7%로 문 고문(17.2%)과 김 지사(17.6%)를 크게 따돌렸다. 김 지사는 강원 · 제주에서 33.3%의 지지를 받았으며 자신의 정치 기반인 영남권에서는 문 고문과의 지지율이 박빙으로 나타났다. TK에서는 동률을 기록해 '대안론'을 실감케 했으며 PK에서는 34.5%로 문 고문(36.1%)과 1.6% 포인트 차를 기록했다.

대선 전망에 대해 대의원 응답자의 67.7%가 대선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18.2%는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다. 총선 패배 후유증으로 분석된다. '모르겠다'는 14.1%였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0.5%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겼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6.2%였다.

민주 대의원 후보 선호도 문재인(24.4%)·손학규(22.8%)·김두관(20.7%) 박빙

민주통합당 대의원들은 당내 대선주자 가운데 문재인 상임고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22.8%, 김두관 경남지사는 20.7%로 뒤를 이었다. 12월 대선에서는 5명 가운데 1명꼴로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예상했다.

국가비전연구소와 타임리서치가 7일 공개한 '민주당 전국대의원 대상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동영 상임고문은 9.1%, 정세균 상임고문은 7.9%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1%였다. 여론조사는 대의원 2286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 하루 동안 진행됐다.

지역별로 문 고문은 친노무현계가 강세를 보이는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에서 선두를 달렸으며 이해찬 상임고문의 고향(충남 청양)이자 지역구(세종)인 대전·충남·세종에서 34.4%로 높게 나왔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손 고문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1위(26.1%)를 차지했고 광주 등 호남권에서도 27.7%로 문 고문(17.2%)과 김 지사(17.6%)를 크게 따돌렸다. 김 지사는 강원·제주에서 33.3%의 지지를 받았으며 자신의 정치 기반인 영남권에서는 문 고문과의 지지율이 박빙으로 나타났다. TK에서는 동률을 기록해 '대안론'을 실감케 했으며 PK에서는 34.5%로 문 고문(36.1%)과 1.6% 포인트 차를 기록했다.

대선 전망에 대해 대의원 응답자의 67.7%가 대선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18.2%는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다. 총선 패배 후유증으로 분석된다. '모르겠다'는 14.1%였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0.5%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겼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6.2%였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의 결 번 호	2012대선9(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대전일보사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4번지 대표이사 남 상 현
심의대상기사	대전일보 2012년 6월 12일자 3면 「정당구도 양당체제 양상」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정례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결과 공표 준수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채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5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정당구도 양당체제 양상

리얼미터, 지지율 여론조사
새누리 45% · 민주 32.9%

국내 정당구도가 양당체제로 정리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6월 첫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 종북 논란의 직격탄을 맞은 통합진보당은 창당 이후 주간 집계 최저치인 3.9%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선진통일당 역시 0.4%로 당명 개편 이후 지지도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45.0%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계속했고, 민주통합당 역시 종북 논란에도 불구하고 32.9%를 기록했다.

18대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권주자를 낼 수 있는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군소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차기 대선후보 다자구도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가 41.0%를 기록, 9주 연속 40%대를 유지했다. 2위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23.2%를 기록, 박 전 대표와 17.8%p의 격차를 보였다. 지지율 3위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11.7%를 기록했고,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3.6%, 민주당 김두관 경남 지사가 2.8%로 그 뒤를 이었다.

새누리당 비박계 주자 중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한 정몽준 전 대표는 2.4%, 최근 선진통일당을 탈당한 이회창 전 대표는 2.2%를 기록했다. 또 새누리당 김문수 경기지사와 통합진보당 유시민 전 대표,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각각 2.0%를 기록했으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2%, 민주당 정세균 전 대표가 1.1%를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표와 안철수 원장간 양자대결은 각각 49.1%와 44.7%의 지지를 기록하며 4.4%p의 격차를 보였고, 박 전 대표와 문재인 고문간 대결에서는 각각 53.4%와 36.8%를 기록해 16.6%p의 차이를 보였다.

정당구도 양당체제 양상

리얼미터, 지지율 여론조사

새누리 45%·민주 32.9%

국내 정당구도가 양당체제로 정리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6월 첫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 종북 논란의 직격탄을 맞은 통합진보당은 창당 이후 주간 집계 최저치인 3.9%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선진통일당 역시 0.4%로 당명 개편 이후 지지도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45.0%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계속했고, 민주통합당 역시 종북 논란에도 불구하고 32.9%를 기록했다.

18대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권주자를 낼 수 있는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군소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차기 대선후보 다자구도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가 41.0%를 기록, 9주 연속 40%대를 유지했다. 2위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23.2%를 기록, 박 전 대표와 17.8%p의 격차를 보였다. 지지율 3위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11.7%를 기록했고,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3.6%, 민주당 김두관 경남 지사가 2.8%로 그 뒤를 이었다.

새누리당 비박계 주자 중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한 정몽준 전 대표는 2.4%, 최근 선진통일당을 탈당한 이회창 전 대표는 2.2%를 기록했다. 또 새누리당 김문수 경기지사와 통합진보당 유시민 전 대표,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각각 2.0%를 기록했으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2%, 민주당 정세균 전 대표가 1.1%를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표와 안철수 원장간 양자대결은 각각 49.1%와 44.7%의 지지를 기록하며 4.4%p의 격차를 보였고, 박 전 대표와 문재인 고문간 대결에서는 각각 53.4%와 36.8%를 기록해 16.6%p의 차이를 보였다.

성희제 기자 topshj@daejonilbo.com

의 결 번 호	2012대선10(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세계일보사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50-15 대표이사 김 병 수
심의대상기사	세계일보 2012년 6월 12일자 4면 「朴 지지율 자신감에 대선정국 정면돌파… 복병은 '숨은 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유력 대선 후보 예정자의 선거 전략을 분석하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한 조사 결과를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결과 공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채 보도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5항,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0조(여론조사 보도)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朴 지지율 자신감에 대선 정국 정면돌파… 복병은 '숨은 표'

정치 인사이드 박근혜 '굳히기 전략' 성공할까

바둑에 비유하자면, 박근혜(사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굳히기에 나선 게 분명하다. 사당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 새누리당은 친박(비박근혜) 일색으로 당 구조가 바뀌었다. 박 전 위원장은 비박(비박근혜) 주자들의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요구에도 요지부동이다. 경선이 무산되거나 당의 통합이 상처를 입더라도 독자적으로 대선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을 확실히 장악해 일사불란하게 대선 본선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박근혜의 굳히기' 는 2007년 경선의 학습효과라는 지적이 있다. 본인과 친박 진영은 "그때 다 이긴 경선을 룰 싸움에 밀려 패배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엔 자신에게 과도한 공세가 집중되더라도 대선 정국을 주도적으로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굳히기 전략은 지지율에서 선두이기 때문에 구사할 수 있다. '37 대 23 대 11', 한국갤럽이 조사한 5월 넷째 주 유력 대선 후보 다자구도 지지도 조사 결과(%)다. 박 전 위원장이 월등한 선두로 질주하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한참 뒤처져서 숨을 고르고, 그보다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이 허덕이고 있다. 2, 3위 주자의 지지도를 다 합쳐도 1위를 이기지 못한다. 양자대결 구도에서도 박 전 위원장은 안 원장에게 45%대 38%로 앞서고 있다. 취약지역인 수도권에서도 8%포인트 앞서고 40대 연령층에서도 9%포인트 리드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 원장 지지자 중에는 무당파층이 많고 민주당이나 진보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총선 이후 박 전 위원장에게 상당 부분 넘어간 것이다.

2007년 경선 패배 학습효과
사당화 논란에도 친박 구조로
오픈프라이머리 요구도 외면

그러면 '박근혜 대세론'이라고 평가할 만한가? 정치평론가들은 다자구도에서는 박근혜 대세론을 인정하지만 양자구도에선 인정하지 않는다. 조사기관에 따라 양자대결 구도에서 오차범위 내로 좁혀드는 경우도 적잖다. 일부 평론가는 "박 전 위원장이 부동의 선두주자이나, 아직 출마도 안한 안 원장에게 가까스로 이기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향후 지지율이 요동칠 수 있는 계기는 몇 차례 있다. 야권 단일화와 안 원장 출마시 얻을 프리미엄이다. 안 원장이 출마를 선언하면 5%포인트 안팎의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두 사람의 양자대결 구도는 다시 혼전 상태가 된다. 안 원장이 야권 단일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지지율의 변화 추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예측불허다.

양자구도서도 安 따돌리고 1위
전문가들 "실제론 혼전 양상"
수도권 · 중도층 · 40대 승패 관건

안 원장이 중도층과 무당파층에서 지지세가 넓어 상승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반면 안 원장이 여야 모두로부터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의 부재라는 핸디캡으로 인해 지지율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쪽도 있다.

박 전 위원장 측은 대선 승부가 수도권과 중도층, 20~40대의 향배에서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이 사당화 논란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도 틈만 나면 민생을 외치고 민생행보를 조급히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안 원장에게 갈 수 있는 중도층과 무당파층, 40대를 끌어안기 위해서다. 안 원장의 야권 단일화와 검증 과정에서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지지율을 지키면서 안 원장을 공격해 크게 흔들 것이다.

굳히기 전략의 복병은 숨은 표가 될지 모른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는 숨겨진 표가 많다. 대선 투표율을 70%대로 예상하면 숨겨진 표심이 10% 정도일 것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본다. 그렇다면 현재 수도권에서 박 전위원장이 앞서지만 실제로는 혼전 양상인 것이다. 박근혜 캠프 내부에서도 안 원장이 현재의 지지율을 유지할 경우를 상정해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관계자는 "70%대의 투표율과 수도권의 숨은 표를 감안할 경우 현재 박 전 위원장은 2%포인트, 60만표 차이 정도로 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공격을 통해 점수를 더 따야 한다는 의견인데, 현재로선 소수의견에 불과하다.

朴 지지율 자신감에 대선정국 정면돌파… 복병은 '숨은 표'

정치 인사이드 박근혜 '굳히기 전략' 성공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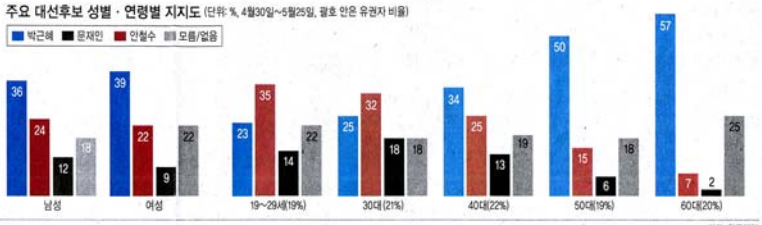
바둑에 비유하자면, 박근혜(사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굳히기에 나선 게 분명하다. 사당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 새누리당은 친박(비박근혜) 일색으로 당 구조가 바뀌었다. 박 전 위원장은 비박(비박근혜) 주자들의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요구에도 요지부동이다. 경선이 무산되거나 당의 통합이 삐처를 입더라도 독자적으로 대선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을 확실히 장악해 일사불란하게 대선 본선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박근혜의 굳히기'는 2007년 경선의 학습효과라는 지적이 있다. 본인과 친박 진영은 "그때 다 이긴 경선을 물 싸움에 밀려 패배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엔 자신에게 과도한 공세가 집중되더라도 대선 정국을 주도적으로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굳히기 전략은 지지율에서 선두이기 때문에 구사할 수 있다. '37 대 23 대 11', 한국갤럽이 조사한 5월 넷째 주 유력 대선 후보 다자구도 지지도 조사 결과(%)다. 박 전 위원장이 월등한 선두로 질주하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한참 뒤처져서 숨을 고르고, 그보다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이 허덕이고 있다. 2, 3위 주자의 지지도를 다 합쳐도 1위를 이기지 못한다. 양자대결 구도에서도 박 전 위원장은 안 원장에게 45%대 38%로 앞서고 있다. 취약 지역인 수도권에서도 8%포인트 앞서고 40대 연령층에서도 9%포인트 리드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 원장 지지자 중에는 무당파층이 많고 민주당이나 진보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총선 이후 박 전 위원장에게 상당 부분 넘어간 것이다.

주요 대선후보 성별 · 연령별 지지도 (단위: %, 4월30일~5월25일, 괄호 안은 유권자 비율)



자료: 한국갤럽

대선후보 다자구도 지지도 (단위: %)



자료: 한국갤럽

2007년 경선 패배 학습효과
사당화 논란에도 친박 구조로
오픈프라이머리 요구도 외면

양자구도서도 安 따돌리고 1위
전문가들 "실제론 혼전 양상"
수도권·중도층·40대 승패 관건

그러면 "박근혜 대세론"이라고 평가할 만한가? 정치평론가들은 다자구도에서는 박근혜 대세론을 인정하지만 양자구도에선 인정하지 않는다. 조사기관에 따라 양자대결 구도에서 오차범위 내로 좁혀드는 경우도 적잖다. 일부 평론가는 "박 전 위원장이 부동의 선두주자이나, 아직 출마도 안한 안 원장에게 가까스로 이기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향후 지지율이 요동칠 수 있는 계기는 몇 차례 있다. 야권 단일화와 안 원장 출마 시 얻을 프리미엄이다. 안 원장이 출마를 선언하면 5%포인트 안팎의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두 사람의 양자대결 구도는 다시 혼전 상태가 된다. 안 원장이 야권 단일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지지율의 변화 추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예측불허다.

안 원장이 중도층과 무당파층에서 지지세가 넓어 상승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반면 안 원장이 여야 모두로부터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의 부재라는 핸디캡으로 인해 지지율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쪽도 있다.

박 전 위원장 측은 대선 승부가 수도권과 중도층, 20~40대의 향배에서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이 사당화 논란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도 틈만 나면 민생을 외치고 민생 행보를 조급히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안 원장에게 갈 수 있는 중도층과 무당파층, 40대를 끌어안기 위해서다. 안 원장의 야권 단일화와 검증 과정에서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지지율을 지키면서 안 원장을 공격해 크게 흔들 것이다.

굳히기 전략의 복병은 숨은 표가 될지 모른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는 숨겨진 표가 많다. 대선 투표율을 70%대로 예상하면 숨겨진 표심이 10% 정도일 것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본다. 그렇다면 현재 수도권에서 박 전 위원장이 앞서지만 실제로는 혼전 양상인 것이다. 박근혜 캠프 내부에서도 안 원장이 현재의 지지율을 유지할 경우를 상정해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관계자는 "70%대의 투표율과 수도권의 승은 표를 감안할 경우 현재 박 전 위원장은 2%포인트, 60만표 차이 정도로 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공격을 통해 점수를 더 따야 한다는 의견인데, 현재로선 소수의견에 불과하다.

백영철 정치전문기자
iron100@segye.com

의 결 번 호	2012대선12(자심)
언 론 사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시 중구 수하동 67 센터원빌딩 연합뉴스 대표이사 박 정 찬
심의대상기사	연합뉴스 2012년 7월 10일자 정치면 「사상 첫 여성대통령 노리는 박근혜 누구인가」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출마선언에 즈음한 프로필 기사를 보도하면서 다른 예비후보자의 프로필 기사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분량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여타 예비후보자들과의 형평에 문제가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이력 및 경력 등을 상당히 우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사상 첫 여성대통령 노리는 박근혜 누구인가

비운의 공주→선거의 여왕→대권주자의 파란만장한 정치역정
애국심 · 원칙 · 신뢰로 성장.. 부친의 그늘 · 불통 이미지 약점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맏딸이자 5선(選) 국회의원으로서 녹록지 않은 정치력을 쌓아온 그가 마침내 대권을 향한 마지막 가파른 등정을 시작했다.

올해 만60세. 12월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우리나라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된다.

그는 대선 슬로건을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정했다. 미래지향적 가치를 중시하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일찍 정치와 권력의 속성에 눈뜬 정치인이다.

그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유산에 14년간의 의정활동을 더해 안정감 있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으나, 동시에 유신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다.

개인사에서도 부모를 모두 총탄에 잃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오면서 '비운의 공주'라고 불릴 정도로 그늘이 짙었다.

◇청와대서 보낸 10·20대.. 정치를 조기교육 받다 = 박 전 위원장은 1952년 2월 아버지 박정희와 어머니 육영수 사이의 2녀1남 중 장녀로 대구에서 태어났다.

9살이던 1961년 육군 소장이던 부친은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잡았고 1963년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의 국가관은 1979년까지 청와대에서 이런 아버지의 통치를 지켜보며 형성됐다.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탈출해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을 권력의 심장부에서 생생히 지켜봤다. 조국·민족·국가 같은 단어를 어린 나이에 인지했다.

성심여고를 거쳐 이공계인 서강대 전자공학

과(70학번)를 전공으로 선택한 것도 수출을 늘리려면 전자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는 인생의 첫 굴곡을 22살때 맞았다. 1974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어머니인 육여사가 간첩 문세광의 총탄에 절명했다.

프랑스 유학에서 귀국하며 신문기사로 어머니의 별세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그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수만볼트의 전기가 훑고 지나가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퍼스트레이디 대행이라는 공인의 삶이 대학을 갓 졸업한 그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주어졌다.

선친 곁에서 국정을 도우며 무엇이든 기록하던 습관은 훗날 '수첩공주'라는 별칭을 붙였다.

청와대 직원들이 추위가 빨리오거나, 눈이 많이 온다는 날씨정보에 긴장하면 그는 이들을 불러 "전국을 빠짐없이 챙겨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뒤 수첩에 그들의 보고를 메모했다는 일화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서거.. 18년의 암흑기 = 1979년 10·26사태로 그는 아버지마저 잃었다. 27일 새벽1시 박 전 대통령의 유고 소식을 처음 전해들었을 때 그의 첫 마디가 "전방의 상태는 괜찮습니까"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국가안보가 DNA처럼 피 속에 박혀 나온 조건반사적 얘기"라고 회상했다.

신당동 옛집으로 돌아온 후 야인(野人)으로 보낸 18년은 단편적으로 알려질 뿐이다. 그는 "은둔은 아니었고 평범한 일반 시민으로 살았다.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고 사색도 하고 마음을 풀 길이 없어 글도 썼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는 "밥이 모래알 같고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TV에서 우스운 장면을 봐도 웃음이 나질 않았다"며 10·26 직후의 충격을 표현했다.

당시 '박정희 체제'에서 혜택받았던 이들의 배신에 따른 고통도 컸던 듯 하다.

그는 저서인 '고난을 벗삼아, 진실을 등대삼아'에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슬프고 우울하게 만든다", "배신하는 사람의 벌은 다른 것보다 자기 마음 안의 무너뜨려서는 안되는 성(城)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점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육영재단 이사장, 영남대학교 이사장,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내면서 선친의 업적과 역사적 정당성을 외롭게 주장했다.

◇IMF사태로 정치 입문.. 위기에 강했던 당(黨)의 구원투수 = 그는 46세인 1998년 대구 달성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며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정치인으로서 첫 주목은 2000년 당 총재 경선 때 받았다. 경선에서 이회창 전 총재에 이어 부총재로 당선됐지만 이듬해 '이회창 대세론'에 반발해 당 개혁안을 요구하며 탈당, '미래연합'을 창당하는 강단을 보였다.

이 시기에 그는 방북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한 현안을 협의했다.

2002년 재입당한 그가 '정치인 박근혜'로 도약한 것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였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침몰 직전이던 2004년 3월 당대표를 맡았다. 국민 앞에 과거를 반성하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에서 그는 '천막당사'를 감행했다.

그해 치러진 4.15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의석을 싹쓸이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21석으로 개헌저지선을 확보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후 2년3개월간 당대표로 재임하면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5차례의 국회의원 재·보선과 지방선거에서 완승해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 대표 시절, 그는 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

와 사학법 개정을 시도했을 때 앞장서 저지했다. 2006년 지방선거 지원유세 때 테러를 당했으나 병원 입원 중 "대전은요"라는 한마디로 선거의 판도를 바꿔놓을 정도로 그의 짧은 한마디가 정국을 뒤흔들었던 적이 많았다.

◇첫 대권도전서 고배.. '원칙과 신뢰정치'로 다시 유력주자로 =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그는 2007년 17대 대선출마를 선언했으나, 사상 유례없는 대혈전이었던 8월 당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 석패했다. 그는 패배에 승복하고 대선에서 이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

이듬해 '이명박 정권'이 출범했으나 경선 과정의 극심한 갈등으로 화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적 혹한을 맞은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소극적 지원의 의미로 '정치적 칩거'를 선택했다.

정치적 언행을 최대한 자제한 침묵의 행보였으나, 자신을 지지하는 60여명의 친박(친박근혜)계와 더불어 입법저지를 할 수 있는 비주류의 세력을 형성했다.

그는 2009년 미디어법 입법에 반대하며 여권 주류와 한차례 갈등한데 이어, 이듬해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대함으로써 이 대통령과 정면충돌하는 위기를 감수했다. 세종시 원안고수는 그를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하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으로 각인시켰다.

그는 18대 대선을 앞둔 4·11총선에 즈음해 대권행보를 시작하려 했지만,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선 패배 후 잇단 악재로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퇴하자 비대위원장으로 조기등판, 수렁에 빠진 당을 또다시 떠안았다.

그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며 새누리당으로의 당명개정 등 강도높은 쇄신책을 단행한 끝에 4·11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과반을 넘는 151석을 거머쥐며 또한번 위기수습 능력을 과시했다.

애국심, 철저한 안보관, 국가·국민에 대한 사랑은 그가 가진 덕목으로 꼽힌다. 부정부패와 불법에 단호하고, 한번 옳다고 결단한 것을 번복하지 않은 결연함도 그의 장점들로 언급된다.

그러나 원칙을 고수하면서 수반되는 소통불능의 이미지는 대선가도에서 넘어서야할 장벽이다.

또한 독재, 인권탄압, 비민주화 등 '박정희 시대'의 어두운 단면과 선친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는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도 그가 안고 있는 무거운 숙제이다.

연합뉴스 인쇄 | 닫기

<사상 첫 여성대통령 노리는 박근혜 누구인가>



지지자들에게 손 흔드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10일 오전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 위해 영등포 타임스퀘어 행사장으로 입장,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12.7.10
utzza@yna.co.kr

비운의 공주→선거의 여왕→대권주자의 파란만장한 정치역정
애국심 · 원칙 · 신뢰로 성장..부친의 그늘 · 불통 이미지 약점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권 고지 앞에 섰다.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맏딸이자 5선(選) 국회의원으로서 녹록지 않은 정치력을 쌓아온 그가 마침내 대권을 향한 마지막 가파른 등정을 시작했다.

올해 만60세. 12월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우리나라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된다.

그는 대선 슬로건을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정했다. 미래지향적 가치를 중시하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일찍 정치와 권력의 속성에 눈뜬 정치인이다.

그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유산에 14년간의 의정활동을 더해 안정감 있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으나, 동시에 유신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다.

개인사에서도 부모를 모두 흉탄에 잃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오면서 `비운의 공주'라고 불릴 정도로 그늘이 짙었다.

◇청와대서 보낸 10 · 20대..정치를 조기교육 받다 = 박 전 위원장은 1952년 2월 아버지 박정희와 어머니 육영수 사이의 2녀1남 중 장녀로 대구에서 태어났다.

9살이던 1961년 육군 소장이던 부친은 5 · 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잡았고 1963년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의 국가관은 1979년까지 청와대에서 이런 아버지의 통치를 지켜보며 형성됐다.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탈출해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을 권력의 심장부에서 생생히 지켜봤다. 조국 · 민족 · 국가 같은 단어를 어린 나이에 인지했다.

성심여고를 거쳐 이공계인 서강대 전자공학과(70학번)를 전공으로 선택한 것도 수출을 늘리려면 전자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는 인생의 첫 굴곡을 22살에 맞았다. 1974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어머니인 육 여사가 간첩 문세광의 흉탄에 절명했다.

프랑스 유학에서 귀국하며 신문기사로 어머니의 별세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그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수만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지나가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퍼스트레이디 대행이라는 공인의 삶이 대학을 갓 졸업한 그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주어졌다.

선친 곁에서 국정을 도우며 무엇이든 기록하던 습관은 훗날 `수첩공주'라는 별칭을 불렀다.

청와대 직원들이 추위가 빨리오거나, 눈이 많이 온다는 날씨정보에 긴장하면 그는 이들을 불러 "전국을 빠짐없이 챙겨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뒤 수첩에 그들의 보고를 메모했다는 일화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서거..18년의 암흑기 = 1979년 10 · 26사태로 그는 아버지마저 잃었다. 27일 새벽1시 박 전 대통령의 유고 소식을 처음 전해들었을 때 그의 첫 마디가 "전방의 상태는 괜찮습니까"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국가안보가 DNA처럼 피 속에 박혀 나온 조건반사적 얘기"라고 회상했다.

신당동 옛집으로 돌아온 후 야인(野人)으로 보낸 18년은 단편적으로 알려질 뿐이다. 그는 "은둔은 아니었고 평범한 일반 시민으로 살았다.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고 사색도 하고 마음을 풀 길이 없어 글도 썼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는 "밥이 모래알 같고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TV에서 우스운 장면을 봐도 웃음이 나질 않았다"며 10 · 26 직후의 충격을 표현했다.

당시 `박정희 체제'에서 혜택받았던 이들의 배신에 따른 고통도 컸던 듯 하다.

그는 저서인 `고난을 벗삼아, 진실을 등대삼아'에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슬프고 우울하게 만든다", "배신하는 사람의 벌은 다른 것보다 자기 마음 안의 무너뜨려서는 안되는 성(城)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점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육영재단 이사장, 영남대학교 이사장,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내면서 선친의 업적과 역사적 정당성을 외롭게 주장했다.

◇IMF사태로 정치 입문..위기에 강했던 당(黨)의 구원투수 = 그는 46세인 1998년 대구 달성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며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정치인으로서 첫 주목은 2000년 당 총재 경선 때 받았다. 경선에서 이회창 전 총재에 이어 부총재로 당선됐지만 이듬해 `이회창 대세론'에 반발해 당 개혁안을 요구하며 탈당, `미래연합'을 창당하는 강단을 보였다.

이 시기에 그는 방북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한 현안을 협의했다.

2002년 재입당한 그가 `정치인 박근혜'로 도약한 것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였다. 불법대선자금 수수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침몰 직전이던 2004년 3월 당대표를 맡았다. 국민 앞에 과거를 반성하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에서 그는 `천막당사'를 감행했다.

그해 치러진 4.15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의석을 싹쓸이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21석으로 개헌저지선을 확보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후 2년3개월간 당대표로 재임하면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5차례의 국회의원 재 · 보선과 지방선거에서 완승해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 전 위원장은 이후 2년3개월간 당대표로 재임하면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5차례의 국회의원 재 · 보선과 지방선거에서 완승해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 대표 시절, 그는 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학법 개정을 시도했을때 앞장서 저지했다. 2006년 지방선거 지원유세 때 테러를 당했으나 병원 입원 중 "대전은요"라는 한마디로 선거의 판도를 바꿔놓을 정도로 그의 짧은 한마디가 정국을 뒤흔들었던 적이 많았다.

◇첫 대권도전서 고배..`원칙과 신뢰정치'로 다시 유력주자로 =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그는 2007년 17대 대선출마를 선언했으나, 사상 유례없는 대혈전이었던 8월 당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 석패했다. 그는 패배에 승복하고 대선에서 이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

이듬해 `이명박 정권'이 출범했으나 경선 과정의 극심한 갈등으로 화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적 혹한을 맞은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소극적 지원의 의미로 정치적 `칩거'를 선택했다.

정치적 언행을 최대한 자제한 침묵의 행보였으나, 자신을 지지하는 60여명의 친박(친박근혜)계와 더불어 입법저지를 할 수 있는 비주류의 세력을 형성했다.

그는 2009년 미디어법 입법에 반대하며 여권 주류와 한차례 갈등한데 이어, 이듬해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대함으로써 이 대통령과 정면충돌하는 위기를 감수했다. 세종시 원안고수는 그를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하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으로 각인시켰다.

그는 18대 대선을 앞둔 4 · 11총선에 즈음해 대권행보를 시작하려 했지만, 2011년 10 · 26 서울시장 보선 패배 후 잇단 악재로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퇴하자 비대위원장으로 조기등판, 수렁에 빠진 당을 또다시 떠안았다.

그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며 새누리당으로의 당명개정 등 강도높은 쇄신책을 단행한 끝에 4 · 11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과반을 넘는 151석을 거머쥐며 또한번 위기수습 능력을 과시했다.

애국심, 철저한 안보관, 국가 · 국민에 대한 사랑은 그가 가진 덕목으로 꼽힌다. 부정부패와 불법에 단호하고, 한번 옳다고 결단한 것을 번복하지 않은 결연함도 그의 장점들로 언급된다.

그러나 원칙을 고수하면서 수반되는 소통불능의 이미지는 대선가도에서 넘어서야할 장벽이다.

또한 독재, 인권탄압, 비민주화 등 `박정희 시대'의 어두운 단면과 선친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는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도 그가 안고 있는 무거운 숙제이다.

quintet@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2-07-10 10:30 송고]

연합뉴스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2005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제2장 시정요구심의

1. 정정보도문 게재

의 결 번 호	2012대선43(시심) 결정유형 / 정정보도문 게재
시정요구인	문 재 인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심의대상기사	조선일보 2012년 11월 27일자 A5면 「朴-시급한 계층 우선, 文-전계층에 평등 지원… 복지철학의 충돌」 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한다. 2.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조선일보〉 A2~A6면(정치 및 선거기사 관련 지면) 가운데 중앙 이상 위치에 〈별지 1〉 보도문을 2단 이상의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 중 부제목 「朴은 공약 비용으로 14조, 文은 42조 제시… 재원대책 의문」의 제목 크기 및 활자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문단 구분할 것과 제목 글자 크기 및 글자 수 축소 불가, 제목 넘칠 경우 2단 처리할 것).
신 청 취 지	피시정요구인은 조선일보에 신청인이 별첨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주요 후보자들의 의료정책을 비교하면서 시정요구인의 의료정책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적시함으로써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해당 기사가 적시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다.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해당 기사는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정요구인의 의료정책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부정적 평가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 이는 선거기사를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정정보도문〉 결정
2. 내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본지 10월 27일자 5면 「朴-시급한 계층 우선, 文-전계층에 평등지원… 복지철학의 충돌」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본지가 문재인 후보 측의 의료정책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1인당 월 5000원 인상'인 것으로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문 후보 측은 건강보험료 재정확충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1인당 월 5000원 인상'이 아니라 '한 가구당 월 5000원 인상안'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위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선택 12 · 19】
【朴 · 文정책, 이것이 다르다】 (1) 의료 정책

朴-시급한 계층 우선, 文-전계층에 평등지원… 복지철학의 충돌

朴은 공약 비용으로 14조, 文은 42조 제시… 재원대책 의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의료 정책 분야다. 박 후보는 특정 질병 · 계층부터 의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선택적 의료'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문 후보는 연령 ·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일정한 의료비 부담만 지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실상 '무상의료'를 주장하고 있다.

① 선택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박 후보 의료 정책은 '가장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분야부터 선별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선택적 복지가 기본 철학이다. 반면 문 후보는 '전 국민이 건강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실현하겠다'는 평등적 보편주의가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봉주 서울대 교수는 "박 후보는 국가 지원이 필요한 타깃 계층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전통적 복지 철학에 기초한 반면, 문 후보는 전체 국민이 누구나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평등주의적 복지관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다.

② 朴은 노인 · 중증질환, 文은 누구나

박 후보 의료 공약의 핵심은 암 · 심장병 · 중풍 · 난치병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급여) 의료비와 미적용(비급여) 의료비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가 100%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강석훈 의원은 "급여 의료비 지원율을 현재의 95%에서 100%로 높이고, 고액 치료제 등 비급여 의료비도 앞으로는 국가가 지원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또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증 치매 환자 1만4000여명에 대해서도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환자 본인 부담을 연간 100만원 이내로 줄이는 '100만원 상한제'를 내걸었다. 100만원 입원 진료비만 부담하면 누구나 계층

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던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MRI, 초음파 등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간병 서비스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또한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거나 국가가 보조하는 동시에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지원도 전면 확대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장기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며, 문재인 후보는 여기에 더해 입원 진료비 보장률은 9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③ 文 정책 소요액은 朴의 최소 3배

박 후보는 자신의 의료 공약을 시행하는 데 2013~2017년 5년간 14조원, 연간 2조8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의 전체 공약 예산(97조원)의 14.4% 수준이다.

문 후보는 보편적 의료 공약에 5년간 42조8000억원, 연간 8조6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의 의료 공약 소요액의 3배가 넘는 액수다. 그러나 정부는 문 후보의 무상 의료 공약을 시행하는 데 연간 최소 13조6000억원, 최대 28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④ 文은 건보료 일부 인상, 朴은 행정 비용 절감

박 후보 측은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합리화 등 복지 행정 개혁을 통해 10조6000억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보조에 대해선 뚜렷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문 후보 측은 건보 재정 합리화와 함께 "건강보험료는 한 가구당 월 5000원, 가구당 1만~2만원만 더 내면 된다"고 했다. 또 "80% 가구가 민간 의료보험료를 월평균 20만원 지출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총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문 후보의 의료 공약 비용을 분석한 결과, 연소득 4000만원 가구는 연간 최소 38만원, 최대 127만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⑤ 朴은 일관성, 文은 실현성 떨어져

박 후보는 문 후보 공약에 대해 "100만원 상한제가 시행되면 의료 쇼핑에 따른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나 건강보험의 의료 급여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건보료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증 질환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국민에게 충분한 의료 보장을 해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재원 마련 계획은 다소 부풀려진 인상이 있고, 문 후보의 무상 의료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박 후보가 특정 질병만 보장을 확대하겠다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보편적으로 80%까지 올리겠다고 한 것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신준섭 건국대 교수는 "무상 의료 공약에는 연간 최소 15조원 이상이 들고, 의료 가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급진적 좌클릭 정책"이라고 했다. 문 후보가 제시한 5년간 42조원의 두 배 가량인 80조원 이상이 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朴-시급한 계층 우선, 文-전계층에 평등지원… 복지철학의 충돌

朴·文정책, 이것이 다르다

⟨1⟩의료 정책

朴은 공약 비용으로 14조, 文은 42조 제시… 재원대책 의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의료 정책 분야다. 박 후보는 특정 질병·계층부터 의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선택적 의료' 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문 후보는 연령·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일정한 의료비 부담만 지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실상 '무상 의료' 를 주장하고 있다.

①선택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박 후보 정책은 "가장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분야부터 선별적으로 혜택을 준다" 는 선택적 복지가 기본 철학이다. 반면 문 후보는 "전 국민이 건강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실현하겠다" 는 평등적 보편주의가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봉주 서울대 교수는 "박 후보는 국가 지원이 필요한 타깃 계층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전통적 복지 철학에 기초한 반면, 문 후보는 전체 국민이 누구나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평등주의적 복지관에 기초하고 있다" 고 했다.

②朴은 노인·중증질환, 文은 누구나

박 후보 의료 공약의 핵심은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급여) 의료비와 미적용(비급여) 의료비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가 100%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강득은 의원은 "급여 의료비 지원율을 현재의 95%에서 100%로 높이고, 고액 치료제 등 비급여 의료비도 앞으로는 국가가 지원해주자는 것" 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또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증 치매 환자 1인당 400만 원에 대해서도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환자 본인 부담을 연간 100만원 이내로 줄이는 '100만원 상한제' 를 내걸었다. 100만원 입원 진료비만 부담하면 누구나 계층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던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MRI, 초음파 등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간병 서비스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해 '보호자 없는 병원' 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또한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거나 국가가 보조하는 동시에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지원도 전면 확대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장기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며, 문재인 후보는 여기에 더해 입원 진료비 보장률은 9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③文 정책 소요예산 朴의 최소 3배

박 후보는 자신의 의료 공약을 시행하는 데 2013~2017년 5년간 14조원, 연간 2조8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의 전체 공약 예산(97조원)의 14.4% 수준이다.

문 후보는 보편적 의료 공약에 5년간 42조8000억원, 연간 8조6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의 의료 공약 소요액의 3배가 넘는 액수다. 그러나 정부는 문 후보의 무상 의료 공약을 시행하는 데 연간 최소 13조6000억원, 최대 28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④文은 건보료 일부 인상, 朴은 행정 비용 절감

박 후보 측은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합리화 등 복지행정 개혁을 통해 10조6000억원을 확보할 것" 이라고 했다.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보조에 대해선 두루뭉술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문 후보 측은 건보 재정 합리화와 함께 "건강보험료는 1인당 월 5000원, 가구당 1만~2만원만 더 내면 된다" 고 했다. 또 "80% 가구가 민간 의료보험료를 월평균 30만원 지출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총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 고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문 후보의 의료 공약 비용을 분석한 결과, 연소득 4000만원 가구는 연간 최소 38만원, 최대 127만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⑤朴은 일관성, 文은 실현성 떨어져

박 후보는 문 후보 공약에 대해 "100만원 상한제가 시행되면 의료 쇼핑에 따른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나 건강보험의 의료 급여 지출이 급증할 것" 이라며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안기게 될 것" 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진보료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이라며 "오히려 중증 질환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국민에게 충분한 의료보장을 해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 고 했다.

①지원 대상 朴, 노인·중증환자… 文, 계층·질병 가리지 않고 지원

②재원 계획 朴, 건보 운용비 절감… 文, 건보료 월 1만~2만원 인상

③전문가 평가 "朴, 정책 일관성 부족"… "文정책, 80조이상 들 수도"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재원 마련 계획은 다소 부풀려진 인상이 있고, 문 후보의 무상 의료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고 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박 후보가 특정 질병만 보장을 확대하겠다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80%까지 올리겠다고 한 것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고 했다. 신준섭 건국대 교수는 "무상 의료 공약에는 연간 최소 15조원 이상이 들고, 의료 가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부담은 더 커질 것" 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급진적 좌클릭 정책" 이라고 했다. 문 후보가 제시한 5년간 42조원의 두 배 가량인 80조원 이상이 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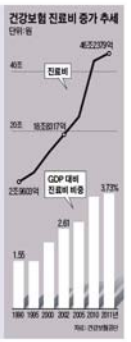
배성규·선정민 기자

대선 후보 의료 공약 비교

박근혜		문재인
선택적 의료	기본 철학	보편적 의료(무상의료)
노인·중증환자	수혜 대상	전 계층
❶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중풍·난치병) 100% 국가 부담 ❷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❸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 보험적용 ❹저소득층 의료보호 강화	주요 내용	❶건강 환자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❷간병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❸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 지원 ❹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면제 보조
5년간 14조원 (연간 2조8000억원)	소요 예산	5년간 42조8000억원 (연간 8조6000억원)
건보 재정 합리화 등 복지행정 개혁 통해 10조6000억원 확보	재원 마련 계획	건보 재정 합리화 통해 최소 6조원 이상 확보. 1인당 건강보험료 월 5000원 추가 부담
개인 추가 부담 연금 없음	개인 부담	건보료 가구당 1만~2만원 증가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건강보험료 폭탄 타질 것	상대방 평가	4대 중증질환 보장만으로는 충분한 의료 보장 못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고 지원 빼면 지금도 연간 3조~6조원 적자	전문가 의견	100만원 상한제만 연간 13조~26조원 소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추세

단위: 원



자료: 건강보험공단



예산안 심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에서 2013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여야는 내년 의료 정책을 포함한 복지 분야 예산 규모를 놓고 적잖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기룡 기자

결정 후 보도문

바로잡습니다

▲본지 10월 27일자 A5면 '복지철학의 충돌' 기사와 11월 27일 A5면 '朴·文 의료정책, 이것이 다르다' 기사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건강보험료 1인당 월 5000원 인상'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은 '한 가구당 월 5000원 인상안' 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 2012년 12월 15일(토) 조선일보 A6면

2. 취하(반론보도문 게재)

의 결 번 호	2012대선42(시심)
시정요구인	문 재 인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월간조선)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김 창 기
시정요구기사	월간조선 2012년 12월호 62면 「[확인] 金正日 앞에서 盧武鉉은 이렇게 말했다!」 제하의 기사
신 청 취 지	1. 피시정요구인은 월간 조선 2013년 1월호 제1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도록 한다. 2. 피시정요구인은 월간 조선 2013년 1월호 제1면에 다음과 같은 반론보도문을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도록 한다. 3. 월간 조선 인터넷 홈페이지인 'http://monthly.chosun.com'의 초기화면의 보도목록 앞부분에 위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을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시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4. 또한 48시간 후에는 위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을 보도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보도내용

【확인】

金正日 앞에서 盧武鉉은 이렇게 말했다!

*읽은 이들 경악: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다 읽을 수가 없었다'

◉ 盧, '그러니까 (차기 정부에) 쐐기를 박자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뭐 하느냐 하시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안보 위협 나라로 1등이 미국, 2등이 일본, 3등이 북한입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하였던 일입니다'

◉ 金. '(NLL) 관련법 폐기하시오'

◉ 영토선으로서 NLL 포기 약속, 韓美 5029 작전계획 막은 것 자랑, 核 폐기 요구 없고 평화협정 강조, 反美발언으로 칭찬받으려는 듯, 수십 조 퍼주는 약속하고도 국군포로 및 납북자는 이야기도 못 꺼냈다.

◉ 천영우 수석의 讀後感: '대한민국의 품격과 관련되는 문제'

◉ 대한민국의 심장에 박힌 이 대못을 뽑는 방법은 대회록 全文 공개

지난 10월 25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國政) 감사를 하였다. 정문헌(鄭文憲)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폭로한 노무현(盧武鉉)-김정일(金正日) 회담록 내용에 대한 문답이 계속되었다. 국회속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

〈**서용교 위원**: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이 NLL 문제로 난리법석을 치는데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사린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 더 문제가 커집니다. 어떻게 하면 공개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 뭘 했습니까?

대통령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 천영우: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일단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로 국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뜻이 있고, 또 어떤 대한민국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공개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대한민국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는 무슨 뜻일까? 청와대 측의 설명에 따르면, 회담록에 적혀 있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말이 너무나 수준 이하라 공개되면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뜻이라고 한다.

국정원에 보관 중인 노무현-김정일 단독회담 대화록(2007년 10월 3일 오후, 평양 백화원 초대소, 배석자를 둔 회담)은 남측이 녹음한 것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어서 표현이 적나라하다. 이 기록을 읽은 이들의 공통된 감상을 점잖게 요약한 것이 천 수석의 '대한민국의 품격에 관련된다'는 말이다. '속이 뒤틀려, 학생이 선생한테 보고하듯 하는 녹취록을 끝까지 읽을 수가 없었다'는 이도 있었다.

필자는 대화록을 읽어본 이들을 만나 독후감(讀後感)과 내용을 파악해 보았다.

네 시간 정도 이어진 (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주된 발언자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회담록의 약 3분의 2가 그의 발언이라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일단 보존 중인 회담록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여야(與野) 공동으로 열람하자고 압박했으나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다. 우파 단체들은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역적모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문서 독자(讀者)들은 대체로 "보호해야 할 국가기밀이 없다"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남북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북이 차기 정부에 노-김 밀약을 근거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였다.

최초의 讀者는 李明博 대통령

국가정보원 바깥에서 이 녹취록을 읽은 최초의 인물은 이명박 대통령으로서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 사이였다. 그는 요약본이 아니라 100페이지가 넘는 회담록 전체를 국정원에서 가져와서 읽었다고 한다. 집무실에서 읽다가 사저(私邸)로 가져가서도 읽은 듯하다. 안보 참보들도 이때 회담록을 읽었다.

당시에는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 이후 남북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다. 북은 이명박 정부 쪽에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10·4 선언' 이행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대통령은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고 싶어 대화록을 가져오게 하였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담록을 읽고 경악하였다고 한다. 참모들에게 "너무 창피하다. 이 정도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고 한다. 복수(複數)의 인사들이 털어놓은 독후감은 "노무현은 교사한테 보고하는 학생 같았다", "노 대통령이 너무나 굴욕적이라 도저히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反)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한테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형국이었다", "노 대통령는 두서가 없고 김정일이 오히려 신중했다", "노무현은 국익을 갖다 바치려 애쓰고 김정일이 오히려 말리는 편이다. 거의 매국노(賣國奴) 수준이다" 등이다.

*** 서해 NLL(북방한계선) 관련 언급**: 노-김 대화록을 읽고 난 청와대 관계자들은, 북이

10·4 선언 이행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NLL은 미군이 땅 따먹기 하기 위하여 그은 선'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앞으로는 NLL을 주장하지 않을테니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들자'고 제안한다(정문헌 의원의 폭로 내용).

"남한에선 아직도 NLL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는 "남한엔 아직도 NLL을 영토선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라고 빈정대는 투의 말을 하고, "안보지도로서의 NLL 대신 경제지도를 긋자"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노 당시 대통령은 NLL 수호 의지가 없음을 확실히 한 바탕에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다 듣고 난 김정일은 "그렇다면 (NLL) 관련법을 폐기하시오"라고 명령조로 이야기했다.

지난 9월 29일 북한의 소위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말한 아래 내용이 노-김 대화록 요지의 정확한 전달이다.

"10·4 선언에 명기된 조선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문제는 철두철미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합의 조치의 하나이다.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 년의 떠벌림이나 다른 괴뢰 당국자들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예외 없이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다."

NLL이란 선(線)을 놓고도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데 NLL을 대체하는 공동어로수역이란 면(面)을 설정한다면 관리가 더 복잡해져 항구적(恒久的)인 분쟁수역이 될 것이 뻔하다. 북한은 어선도 무장을 하는데, 피아(彼我) 선박이 섞이다 자주 충돌이 발생하면 결국은 수도권 방어의 생명선인 NLL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2005년부터 북한 선박에 대해 부산~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하였더니 그들은 우리의 검문 요구를 수시로 무시하였다.

김정일과 만나고 돌아온 노무현은 NLL의 성격을 바꿔보려고 애쓴다. 그는 2007년 11월 1일 이런 발언을 하였다. 《조선일보》를 인용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지켜야 한다는 국내 일부 주장을 어렸을 적 '땅 따먹기 놀이'에 비유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실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노 대통령은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그림까지 딱 넣고 합의 도장을 찍어버려야 하는데 조금 더 북쪽으로 밀어붙이자, 남쪽으로 내려오자 옥신각신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땅 따먹기 놀이'

노 대통령은 "어릴 때 책상 가운데 줄 그어놓고 칼 들고 넘어오기만 하면 찍어버린다, 꼭 그것과 비슷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다시 긋는다고 우리나라에 뭐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북쪽에 대한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 뒤, 그래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지대 설치로 우회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는 NLL이 ▲합의되지 않은 선이다 ▲국제법상 영토선 획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내 마음대로 줄 긋고 내려오면 아마 판문점 어디에서 '좌파 친북 대통령 노무현은 돌아오지 말라, 북한에서 살아라' 이렇게 플래카드 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무현의 연설 속에는 당시 김정일에게 한 약속이 들어 있다. 즉 'NLL은 꼭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영토선이 아니란 북한 주장이 맞다', 'NLL의 성격을 우회적으로 변질시키자' 등등.

북한은 10·4 선언 후속조치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을 NLL 남쪽에 설정하는 안을 내어 놓았고(명백한 영해 침범), 한국은 NLL을 중심으로 남북 등거리 설정안을 내놓았다.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대통령 또한 김장수 국방장관을 압박하지 못했다. 대선(大選)정국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졌고 여론과 언론도 NLL 포기에 반대하여 추진동력을 잃었다.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김정일 회담 직후인 2007년 10월 17일 국정감사 때 이화영 의원과 이런 문답을 나눴다.

〈**이화영 의원**: 그 다음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공동어로수역을 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NLL을 기준으로 해서 등거리, 등면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이 문제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남북 관계는 꼭 상호주의라는 그런 원칙 아래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정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NLL이란 군사경계선을 포기하고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등거리-등면적 원칙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건 사실상 NLL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심을 비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노-김 회담록에 담겨 있는 NLL 관련 발언을 짐작케 한다.

核 포기 요구 없고, 反美的 발언

***'북 대변 열심히 한다'**: 정문헌 의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였다. 대화록을 읽은 한 사람은, '핵개발을 비호한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북한 입장을 변호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노무현은 '우호적인' 언론인들 앞에서 "인도 핵은 되는데 북한 핵은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방언(方言)을 했다고 하니 '북 대변인 노릇'이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

***美國 비난**: 노무현은 "미국의 BDA(방코델타아시아)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말하였다. 북한이 위조달러를 만드는 등 국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이 북의 거래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취한 금융제재 조치를 비방한 것이다. 형사가 범인 앞에서 동료 형사를 욕한 격이다.

***북핵(北核) 폐기 요구 실종**: 회담록에는 노무현이 회담의 가장 중요한 문제여야 할 북핵 폐기에 대한 의미 있는 요구를 한 대목이 없다고 한다. 특히 북핵 문제의 핵심인 고농축 우라늄 문제 등에 대해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10·4 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만 했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문제가 된 것은 북핵이지 '한반도 핵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용어혼란 전술에 노무현이 동조한 셈이다.

***평화협정 종용**: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나 세 사람이 종전(終戰) 선언을 위한 회담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읍시다"라는 요지의 말도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 다음에라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는데도 노무현은 북핵 폐기 요구 없이 종전선언

과 평화협정을 꺼냈다. 김정일은 이에 관심을 보인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한 채 평화협정을 통하여 한미(韓美)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숙원(宿願)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 반미(反美)여론을 자랑?**: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이런 요지의 말도 했다

"위원장께선 너희가 뭘 하고 있느냐고 하시지만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주한미군이 수도권에서 나가게 되어 있고 전시(戰時)작전권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미국이 꼽혔고, 두 번째가 일본, 세 번째가 북한입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노 당시 대통령은 "이렇게 바뀐 것은 자주외교와 민족공조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입니다"라는 요지의 해설을 덧붙였다. 그는 "그래도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므로 내가 가끔 친미(親美)할 수 밖에 없다"는 요지의 말도 했다. 반미가 당연하지만 친미도 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이야기였다. 2006년 우호적인 신문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추진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나를 친미파(親美派)라 부를 것"이라고 농담을 하였다〉고 한다. 그는 좌파 언론과 김정일 등 '이념적 동지들' 앞에선 '친미적' 정책을 취한 게 무슨 죄나 짓는 일인 양 어색해 한 듯하다.

5029 계획 막았다고 자랑

*** 작전계획 5029**: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월 13일 《한겨레》 등 '우호적' 신문사 간부들을 초청, 저녁식사를 같이하면서, 한미 간의 북한급변 대책인 5029 계획을 비판하였다. 그는 김정일 앞에서도 "5029 계획은 미군이 북한으로 쳐들어가려는 계획인데, 내가 무산시켰다"는 요지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 최근 《조선일보》 장일현 기자는 이렇게 정리하였다.

〈한미 당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부터 북한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때 만든게 '개념계획(CONPLAN) 5029'다. 개념계획은 병력 동원이나 부대 배치 등이 담겨 있지 않은 추상적인 시나리오다. 한미 군 당국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작전계획 5029'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임 두 정권은 한미가 북한급변 사태를 상정한 군사작전 계획을 짠다는 발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여름 북한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5029를 언제든 실행 가능한 작전계획으로 바꿔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 그리고 1년여의 협의 끝에 작계(作計) 5029가 완성됐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 담당 핵심 간부는 "노무현 세력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이를 통일로 가져갈 생각을 않는다. 북한정권을 살려서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한다. 5029의 완성으로 한미는 북한급변 사태를 통일의 계기로 삼기로 한 셈이다"고 설명했다. 5029 계획을 둘러싼 대북관 및 통일관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난 셈이다.

*** 쐐기박기**: 《문화일보》는 지난 10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4 선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십조(兆)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하면서, 김정일에게 "(내년에 정권이 바뀌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못질을 해야 한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두 달 후가 되면 (남한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내년에는 정권이 바뀌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노무현은 '대못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쐐기를 박자는 것 아닙니까"란 요지의 표현을 썼다.

"한국군의 존재목적은 북한군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과 김정일 사이에 오간 대화를 남북 공동선언문으로 정리한 것이 10·4 선언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박아놓은 대못이다. 요약하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NLL 무력화, 북핵 사실상 용인, 핵포기 안 된 상태에서 종전(終戰)선언 추진 등 한미동맹 해체로 갈 조건 조성, 조선(造船)공단 건설과 철도 및 고속도로 개보수 등 막대한 대북 퍼주기식 지원 약속' 등이다. 노무현은 반국가 집단에 수십조가 들어갈 지원은 약속하면서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노-김 밀약을 이행하진 않았으나 대못을 뽑지도 못한 채 10·4 선언이란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겨줄 태세이다. 가장 확실하게 대못을 뽑는 방법은 노-김 대화록을 전문 공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노-김 대화록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흡사한 자료를 구했다. 독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고(思考)구조와 화법(話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이다.

2006년 8월 19일 주한미국 대사관 부(副)대사 조셉 Y. 윤이 본국으로 보고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공식 논평: 전작권(戰作權), 북한, 미국정부, 그리고 국내 정치에 대하여'라는 전문(電文)은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의하여 공개된 문서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노무현의 안보 및 대북관(對北觀)은 충격적이다. 상당부분은 1년 뒤 김정일을 만났을 때 말하는 내용과 같다. 전문의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월 13일, '우호적'이라고 평가되는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 등 몇 개 신문사 초청 만찬을 가졌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노무현은 전작권, 한미(韓美)동맹, 북한, 한미FTA 등의 주제들에 대하여 솔직한 논평을 하였다. 한국에선 '오프 레코드'(off the record·비공개 약속) 같은 것은 지켜지지 않는다. 특히 언론인들이 관련되면. 대화록은 그 만찬에 참석하였던 한 편집 간부가 우리에게 준 것이다.

***요약 및(조셉 윤의) 편집:** 노무현의 솔직한 화법은 여러 번 그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는데 이번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군의 목적은 북한군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무현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건 놀랍다. 언론을 상대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노무현이 자신은 레임덕이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도, 아직 임기가 17개월이나 남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정부 인사들에겐 암울한 것이다. 이런 발언에서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노무현의 발언 요약

***5029 문제:** 전작권(전환) 문제는 미국과의 논의에 기초하여 추진 중이다. 보수언론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10년 전엔 그들이 요구하였던 일이다. (노무현은 보수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많은 비판자들은 한국군의 능력을 의심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군사력을 증강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국방부는 시급히 일본이 보유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대북(對北)억지력에 대한 이야기는 주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그는 북한의 낙후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방어에 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군사주권(軍事主權)의 본질은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작전계획 5029의 세부 사항은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계획은 미군이 북한으로 진격하여 상황을 통제하는 데 주로 집중되어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중국은 미군이 중·북(中北) 국경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 의논도 하지 않고) 북한을 놓고 경쟁할까 걱정이다.

*** 북한 핵문제와 6자 회담:** 현재로선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나는 지금 곤혹스럽다. 미국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므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한편 북한은 완고하다. 한국은 중간에 끼였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데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북의 핵 기술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한은 안 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하나?

참석자 질문: 미국과 중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협상하도록 위임한다면 어떻게 될까?

노무현 답변: 미국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은 북과 직접 교섭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야만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야만인들에게 문명(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강요하던 식으로 나올 것이다. 미국은 북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 미국정부:** 안보문제에 관하여 부시 정부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정동영-김정일 회담부터 9·19 공동합의까지는 상황이 괜찮았으나 미국이 BDA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바뀌었다. 이상하게도 부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하나의 자산이라고 믿는다. 국방개혁은 매우 어렵다. 윤광웅 장관이 아니었더라면 국방개혁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 한국군:** 내가 취임한 뒤 국방부에 처음 갔을 때 나는 국방부 간부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인상을 갖게 되었다. 그들이 (내 앞에서) 한국군과 북한군의 능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을 보고는 이들이 국방부를 방문한 보통사람 취급을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국군의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 보수언론:** 나는 지금 퇴임하기 전에 상황을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까, 아니면 포기해 버릴까 생각이 왔다 갔다한다. 그렇다고 국정운영에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모두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 세 신문은 정치 권력화 되었다. 나는 내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 세 신문의 영향력이 떨어지도록 하고 싶다. 이는 내 후임자를 위하여서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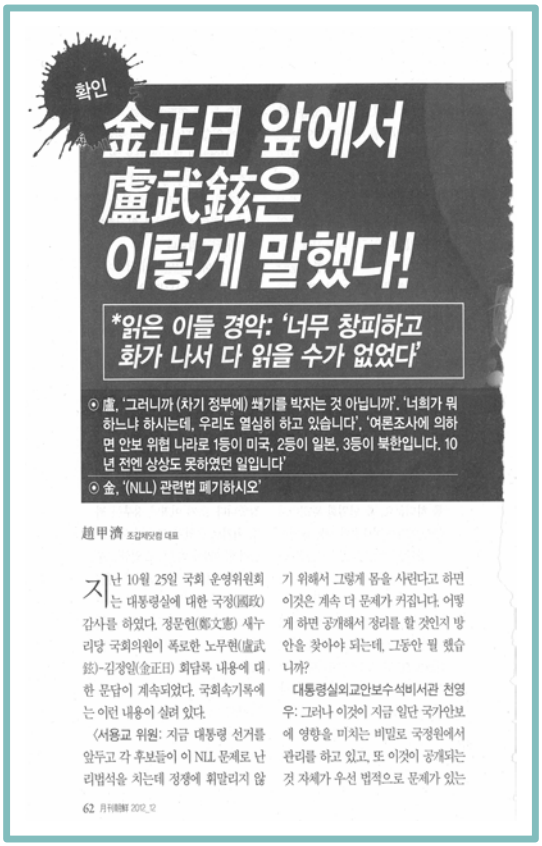
*** FTA:** 한미FTA보다 전작권 전환이 더 쟁점이 되어 나는 덜 부담스럽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1000명이 나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건 1만명의 보수가 시위하는 것보다 더 나를 괴롭게 한다.(중략) 우리가 강대국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가가 중요하다. 미국은 미국과 FTA를 맺으려 한 25개 국가 중 한국을 FTA 상대자로 선택하였다. (노무현은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친미파라 부를 것이라고 농담을 하였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우호적인' 언론인들 앞에서 긴장을 풀고 공개되면 큰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을 쏟아내었다. 북한급변 사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대비계획인 5029에 대한 거부감, 한국군의 존재 목적이 북한군의 남침 억지가 아니라는 발언, 북핵 옹호성 발언, 친북반미적(親北反美的) 화법은 1년 뒤 김정일 앞에서 그가 털어놓는 말들과 맥락이 닿아 있다. 두 경우 다 '이념적 동지'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낸 말이란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全文 공개해야

대통령이 여야 합의 여부(與否)에 관계없이 보관 중인 대화록을 공개해야 할 이유는 이렇다.

1. 북한정권은 노무현이 NLL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한국 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밀약을 존중한다는 뜻이 된다.
2. 이명박 대통령의 부하였던 통일비서관 출신 정문헌 의원이 대화록의 내용을 폭로하였다면 그의 상관이었던 대통령은 진위(眞僞)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북한정권은 작년에 이명박-김정일 회담 타진 관련 남북한 비밀접촉 대화를 공개, 남한정부를 압박한 적이 있다.
4. 국민이 같이 알아야 할 정보를 '나만 알고 덮겠다'는 것은 독재자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국민이 몰라서 되나?
5.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정보를 다 알고 투표를 해야 후회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이고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원천적 부정선거 획책이 될 것이다.



확인

金正日 앞에서 盧武鉉은 이렇게 말했다!

*읽은 이들 경악: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다 읽을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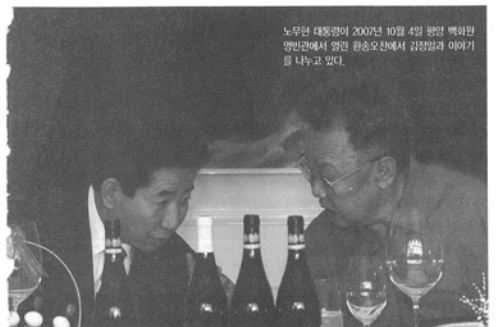
- 盧, '그러니까 (차기 정부에) 쌔기를 박자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뭐 하느냐 하시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안보 위협 나라로 1등이 미국, 2등이 일본, 3등이 북한입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하였던 일입니다'
- 金, '(NLL) 관련법 폐기하시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지난 10월 25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國政) 감사를 하였다. 정문헌(鄭文憲)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폭로한 노무현(盧武鉉)-김정일(金正日) 회담록 내용에 대한 문답이 계속되었다. 국회속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

〈서용교 위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이 NLL 문제로 난리법석을 치는데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사린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 더 문제가 커집니다. 어떻게 하면 공개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 뭘 했습니까?

대통령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 천영우: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일단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로 국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환송오찬에서 김정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영토선으로서의 NLL 포기 약속, 韓美 5029 작전계획 막은 것 자랑, 核 폐기 요구 없고 평화협정 강조, 反美발언으로 칭찬받으려는 듯, 수십 조 퍼주는 약속하고도 국군포로 및 납북자는 이야기도 못 꺼냈다
- 천영우 수석의 讀後感: '대한민국의 품격과 관련되는 문제'
- 대한민국의 심장에 박힌 이 대못을 뽑는 방법은 대화록 全文공개

뜻이 있고, 또 어떤 대한민국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공개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대한민국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는 무슨 뜻일까? 청와대 측의 설명에 따르면, 회담록에 적혀 있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말이 너무나 수준 이하라 공개되면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뜻이라고 한다.

국정원에 보관 중인 노무현-김정일 단독회담 대화록(2007년 10월 3일 오후, 평양 백화원 초대소, 배석자를 둔 회담)은 남측이 녹음한 것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어서 표현이 적나라하다. 이 기록을 읽은 이들의 공통된 감상을 점잖게 요약한 것이 천 수석의 '대한민국의 품격에 관련된다'는 말이다. '속이 뒤틀려, 학생이 선생한테 보고하듯 하는 녹취록을 끝까지 읽을 수가 없었다'는 이도 있었다.

필자는 대화록을 읽어본 이들을 만나 독후감(讀後感)과 내용을 파악해

보았다.

네 시간 정도 이어진 (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주된 발언자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회담록의 약 3분의 2가 그의 발언이라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일단 보존 중인 회담록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여야(與野) 공동으로 열람하자고 압박했으나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다. 우파 단체들은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역적모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문서 독자(讀者)들은 대체로 "보호해야 할 국가기밀이 없다"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남북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북이 차기 정부에 노-김 밀약을 근거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였다.



2012년 10월 2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최초의 讀者는 李明博 대통령

국가정보원 바깥에서 이 녹취록을 읽은 최초의 인물은 이명박 대통령으로서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 사이였다. 그는 요약본이 아니라 100페이지가 넘는 회담록 전체를 국정원에서 가져와서 읽었다고 한다. 집무실에서 읽다가 사저(私邸)로 가져가서도 읽은 듯하다. 안보 참모들도 이때 회담록을 읽었다.

당시에는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 이후 남북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다. 북은 이명박 정부 쪽에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10·4 선언' 이행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대통령은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고 싶어 대화록을 가져오게 하였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담록을 읽고 경악하였다고 한다. 참모들에게 "너무 창피하다. 이 정도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고 한다. 복수(複數)의 인사들이 털어놓은 독후감은 "노무현은 교사한테 보고하는 학생 같았다", "노 대통령이 너무나 굴욕적이라 도저히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反)국가 단체 수괴인 김정일한테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형국이었다", "노 대통령은 두서가 없고 김정일이 오히려 신중했다", "노무현은 국익을 갖다바치려 애쓰고 김정일이 오히려 말리는 편이다. 거의 매국노(賣國奴) 수준이다" 등이다.

*서해 NLL(북방한계선) 관련 언급:

노-김 대화록을 읽고 난 청와대 관계자들은, 북이 10·4 선언 이행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NLL은 미군이 땅 따먹기 하기 위하여 그은 선'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앞으로는 NLL을 주장하지 않을 테니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들자'고 제안한다(정문헌 의원의 폭로 내용).

"남한에선 아직도 NLL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는 "남한에 아직도 NLL을 영토선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라고 빈정대는 투의 말을 하고, "안보지도로서의 NLL 대신 경제지도를 긋자"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노 당시 대통령은 NLL 수호 의지가 없음을 확실히 한 바탕에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다 듣고 난 김정일은 "그렇다면 (NLL) 관련법을 폐기하시오"라고 명령조로 이야기했다.

지난 9월 29일 북한의 소위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말한 아래 내용이 노-김 대화록 요지의 정확한 전달이다.

"10·4 선언에 명기된 조선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문제는 철두철미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 조치의 하나이다.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 년의 떠벌림이나 다른 괴뢰 당국자들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예외 없이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다."

NLL이란 선(線)을 놓고도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데 NLL을 대체하는 공동어로수역이란 면(面)을 설정한다면 관리가 더 복잡해져 항구적(恒久的)인 분쟁수역이 될 것이 뻔하다. 북한은 어선도 무장을 하는데, 피아(彼我) 선박이 섞이다 자주 충돌이 발생하면 결국은 수도권 방어의 생명선인 NLL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2005년부터 북한 선박에 대해 부산~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하였더니 그들은 우리의 검문 요구를 수시로 무시하였다.

김정일과 만나고 돌아온 노무현은 NLL의 성격을 바꿔보려고 애쓴다. 그는 2007년 11월 1일 이런 발언을 하였다. 〈조선일보〉를 인용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지켜야 한다는 국내 일부 주장을 어렵을 적 '땅 따먹기 놀이'에 비유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실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노 대통령은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그럼까지 딱 넣고 합의 도장을 찍어버려야 하는데 조금 더 북쪽으로 밀어붙이자, 남쪽으로 내려오자 옥신각신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2007년 10월 4일 남북공동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땅 따먹기 놀이'

노 대통령은 "어릴 때 책상 가운데 줄 그어놓고 칼 들고 넘어오기만 하면 찍어버린다, 꼭 그것과 비슷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다시 긋는다고 우리나라에 뭐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북쪽에 대한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 뒤, 그래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지대 설치로 우회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NLL이 ▲합의되지 않은 선이다 ▲국제법상 영토선 획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내 마음대로 줄 긋고 내려오면 아마 판문점 어디에서 '좌파 친북 대통령 노무현은 돌아오지 말라, 북한에서 살아라' 이렇게 플래카드 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무현의 연설 속에는 당시 김정일에게 한 약속이 들어 있다. 즉 'NLL은 꼭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영토선이 아니란 북한 주장이 맞다', 'NLL의 성격을 우회적으로 변질시키자' 등등.

북한은 10·4 선언 후속조치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을 NLL 남쪽에 설정하는 안을 내어놓았고(명백한 영해 침범), 한국은 NLL을 중심으로 남북 등거리 설정안을 내놓았다.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대통령 또한 김장수 국방장관을 압박하지 못했다. 대선(大選)정국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졌고 여론과 언론도 NLL 포기에 반대하여 추진동력을 잃었다.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김정일 회담 직후인 2007년 10월 17일 국정감사 때 이화영 의원과 이런 문답을 나눴다.

〈이화영 의원: 그 다음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공동어로수역을 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NLL을 기준으로 해서 등거리, 등면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이 문제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남북 관계는 꼭 상호주의라는 그런 원칙 아래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정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NLL이란 군사경계선을 포기하고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등거리-등면적 원칙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건 사실상 NLL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심을 비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노-김 회담록에 담겨 있는 NLL 관련 발언을 짐작게 한다.

核 포기 요구 없고, 反美的 발언

*'북 대변 열심히 한다': 정문헌 의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였다. 대화록을 읽은 한 사람은, '핵개발을 비호한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북한 입장을 변호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노무현은 '우호적인' 언론인들 앞에서 "인도 핵은 되는데 북한 핵은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방언(放言)을 했다고 하니 '북 대변인 노릇'이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

*美國 비난: 노무현은 "미국의 BDA(방코델타아시아)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말하였다. 북한이 위조달러를 만드는 등 국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이 북의 거래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취한 금융제재 조치를 비방한 것이다. 형사가 범인 앞에서 동료 형사를 욕한 격이다.

*북핵(北核) 폐기 요구 실종: 회담록에는 노무현이 회담의 가장 중요한 문제여야 할 북핵 폐기에 대한 의미 있는 요구를 한 대목이 없다고 한다. 특히 북핵 문제의 핵심인 고농축우라늄 문제 등에 대해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10·4 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만 했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문제가 된 것은 북핵이지 '한반도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용어혼란 전술에 노무현이 동조한 셈이다.

＊평화협정 종용: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나 세 사람이 종전(終戰) 선언을 위한 회담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읍시다"라는 요지의 말도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 다음에라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는데도 노무현은 북핵 폐기 요구 없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꺼냈다. 김정일은 이에 관심을 보인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한 채 평화협정을 통하여 한미(韓美)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숙원(宿願)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반미(反美)여론을 자랑?: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이런 요지의 말도 했다.

"위원장께선 너희가 뭘 하고 있느냐고 하시지만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주한미군이 수도권에서 나가게 되어 있고 전시(戰時)작전권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미국이 꼽혔고, 두 번째가 일본, 세 번째가 북한입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노 당시 대통령은 "이렇게 바뀐 것은 자주외교와 민족공조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입니다"라는 요지의 해설을 덧붙였다. 그는 "그래도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므로 내가 가끔 친미(親美)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말도 했다. 반미가 당연하지만 친미도 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이야기였다. 2006년 우호적인 신문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추진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나를 친미파(親美派)라 부를 것"이라고 농담을 하였다는〉고 한다. 그는 좌파언론과 김정일 등 '이념적 동지들' 앞에선 '친미적' 정책을 취한 게 무슨 죄나 짓는 일인 양 어색해 한 듯하다.

5029 계획 막았다고 자랑

＊작전계획 5029: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8월 13일 《한겨레》 등 '우호적' 신문사 간부들을 초청, 저녁식사를 같이하면서, 한미 간의 북한급변 대책인 5029계획을 비판하였다. 그는 김정일 앞에서도 "5029 계획은 미군이 북한으로 쳐들어가려는 계획인데, 내가 부산시켰다"는 요지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 최근 《조선일보》 장일현 기자는 이렇게 정리하였다.

〈한미 당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부터 북한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때 만든 게 '개념계획(CONPLAN) 5029'다. 개념계획은 병력 동원이나 부대 배치 등이 담겨 있지 않은 추상적인 시나리오다. 한미 군 당국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작전계획 5029'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임 두 정권은 한미가 북한급변 사태를 상정한 군사작전 계획을 짠다는 발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여름 북한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5029를 언제든 실행 가능한 작전계획으로 바꿔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 그리고 1년여의 협의 끝에 작계(作計) 5029가 완성됐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 담당 핵심 간부는 "노무현 세력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이를 통일로 가져갈 생각을 않는다. 북한정권을 살려서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한다. 5029의 완성으로 한미는 북한급변 사태를 통일의 계기로 삼기로 한 셈이다"고 설명했다. 5029 계획을 둘러싼 대북관 및 통일관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난 셈이다.



2007년 10월 17일 통일부 국정 감사에 앞서 이재정 당시 장관 등 통일부 간부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쐐기박기: 《문화일보》는 지난 10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4 선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십조(兆)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협력 사업을 제안하면서, 김정일에게 "(내년에 정권이 바뀌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못질을 해야 한다"며 말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두 달 후가 되면 (남한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내년에는 정권이 바뀌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노무현은 '대못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쐐기를 박자는 것 아닙니까'란 요지의 표현을 썼다.

"한국군의 존재목적은 북한군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과 김정일 사이에 오간 대화를 남북공동선언문으로 정리한 것이 10·4 선언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박아놓은 대못이다. 요약하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NLL 무력화, 북핵 사실상 용인, 핵포기 안 된 상태에서 종전(終戰)선언 추진 등 한미동맹 해체로 갈 조건 조성, 조선(造船) 공단 건설과 철도 및 고속도로 개보수 등 막대한 대북 퍼주기 식 지원 약속' 등이다. 노무현은 반국가 집단에 수십조가 들어갈 지원은 약속하면서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노-김 밀약을 이행하진 않았으나 대못을 뽑지도 못한 채 10·4 선언이란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겨줄 태세이다. 가장 확실하게 대못을 뽑는 방법은 노-김 대화록을 전문 공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노-김 대화록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흡사한 자료를 구했다. 독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고(思考)구조와 화법(話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이다.

2006년 8월 19일 주한미국 대사관부(副)대사 조셉 Y. 윤이 본국으로 보고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공식 논평: 전작권(戰作權), 북한, 미국정부, 그리고 국내 정치에 대하여'라는 전문(電文)은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의하여 공개된 문서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노무현의 안보 및 대북관(對北觀)은 충격적이다. 상당부분은 1년 뒤 김정일을 만났을 때 말하는 내용과 같다. 전문의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월 13일, '우호적'이라고 평가되는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 등 몇 개 신문사 초청 만찬을 가졌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노무현은 전작권, 한미(韓美)동맹, 북한, 한미FTA 등의 주제들에 대하여 솔직한 논평을 하였다. 한국에선 '오프 레코드'(off the record·비공개 약속) 같은 것은 지켜지지 않는다. 특히 언론인들이 관련되면. 대화록은 그 만찬에 참석하였던 한 편집 간부가 우리에게 준 것이다.

＊요약 및(조셉 윤의) 논평: 노무현의 솔직한 화법은 여러 번 그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는데 이번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군의 목적은 북한군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무현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건 놀랍다. 언론을 상대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노무현이 자신은 레임덕이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도, 아직 임기가 17개월이나 남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정부 인사들에겐 암울한 것이다. 이런 발언에서 패배의식에 찌어 있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노무현의 발언 요약

＊5029 문제: 전작권(전환) 문제는 미국과의 논의에 기초하여 추진 중이다. 보수언론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10년 전엔 그들이 요구하였던 일이다. (노무현은 보수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많은 비판자들은 한국군의 능력을 의심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군사력을 증강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국방부는 시급히 일본이 보유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대북(對北)억지력에 대한 이야기는 주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그는 북한의 낙후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방어에 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군사주권(軍事主權)의 본질은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작전계획 5029의 세부 사항은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계획은 미군이 북한으로 진격하여 상황을 통제하는 데 주로 집중되어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중국은 미군이 중·북(中北) 국경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 의논도 하지 않고) 북한을 놓고 경쟁할까 걱정이다.

＊북한 핵문제와 6자 회담: 현재로선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나는 지금 곤혹스럽다. 미국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므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한편 북

| 광고 |



〈카르멘모타의 푸에고〉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의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워커힐씨어터'에서 12월 17일(월)부터 23일(일)까지 스페인 오리지널 공연팀이 펼치는 플라멩코 디너쇼 〈카르멘모타의 푸에고〉를 선보인다.

플라멩코의 국보라 칭송받는 카르멘 모타와 노트르담드파리 연출의 원인쪽스, 집시 플라멩코 아티스트 등이 모여 펼치는 세계 최정상의 완벽한 오리지널 플라멩코 공연을 최고급 디너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카르멘모타의 푸에고〉는 2005년 예술의 전당, 2008년과 2009년 LG아트센터 등 세 차례의 내한 공연을 통해 그 실력을 입증받은 바 있다. 최고급 하몽과 다양한 스페인 요리, 샴페인 등이 코스로 제공되어 공연의 재미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전석 균일 VIP석으로 266,000원이다.

한편, 공연 관람과 호텔 투숙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카르멘모타의 푸에고 패키지〉도 선보일 예정. 객실 1박과 공연 및 디너, 플라멩코의 대가 '카르멘 모타'의 사인 DVD 증정의 구성으로 주중 629,900원, 주말 702,500원부터 시작되며, 사전 예약은 필수다.

■ 문의 및 예약 : (02) 455-5000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한은 완고하다. 한국은 중간에 끼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데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북의 핵 기술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한은 안 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하나?

참석자 질문: 미국과 중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협상하도록 위임한다면 어떻게 될까?

노무현 답변: 미국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은 북과 직접 교섭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야만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야만인들에게 문명(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강요하던 식으로 나올 것이다. 미국은 북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미국정부: 안보문제에 관하여 부시 정부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정동영-김정일 회담부터 9·19 공동합의까지는 상황이 괜찮았으나 미국이 BDA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바뀌었다. 이상하게도 부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하나의 자산이라고 믿는다. 국방개혁은 매우 어렵다. 윤광웅 장관이 아니었더라면 국방개혁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한국군: 내가 취임한 뒤 국방부에 처음 갔을 때 나는 국방부 간부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인상을 갖게 되었다. 그들이 (내 앞에서) 한국군과 북한군의 능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을 보고는 이들이 국방부를 방문한 보통사람 취급을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국군의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보수언론: 나는 지금 퇴임하기 전에 상황을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까, 아니면 포기해 버릴까 생각이 왔다 갔다한다. 그렇다고 국정운영에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모두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 세 신문은 정치권력화되었다. 나는 내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 세 신문의 영향력이 떨어지도록 하고 싶다. 이는 내 후임자를 위하여서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FTA: 한미FTA보다 전작권 전환이 더 쟁점이 되어 나는 덜 부담스럽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1000명이 나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건 1만명의 보수가 시위하는 것보다 더 나를 괴롭게 한다. (중략) 우리가 강대국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가가 중요하다. 미국은 미국과 FTA를 맺으려 한 25개 국가 중 한국을 FTA 상대자로 선택하였다. (노무현은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친미파라 부를 것이라고 농담을 하였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우호적인' 언론인들 앞에서 긴장을 풀고 공개되면 큰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을 쏟아내었다.

북한급변 사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대비계획인 5029에 대한 거부감, 한국군의 존재 목적이 북한군의 남침 억지가 아니라는 발언, 북핵 용호성 발언, 친북반미적(親北反美的) 화법은 1년 뒤 김정일 앞에서 그가 털어놓는 말들과 맥락이 닿아 있다. 두 경우 다 '이념적 동지'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낸 말이란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全文 공개해야

대통령이 여야 합의 여부(與否)에 관계없이 보관 중인 대화록을 공개해야 할 이유는 이렇다.

1. 북한정권은 노무현이 NLL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한국 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밀약을 존중한다는 뜻이 된다.

2. 이명박 대통령의 부하였던 통일비서관 출신 정문헌 의원이 대화록의 내용을 폭로하였다면 그의 상관이었던 대통령은 진위(眞僞)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북한정권은 작년에 이명박-김정일 회담 타진 관련 남북한 비밀접촉 대화를 공개, 남한정부를 압박한 적이 있다.

4. 국민이 같이 알아야 할 정보를 '나만 알고 덮겠다'는 것은 독재자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국민이 몰라서 되나?

5.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정보를 다 알고 투표를 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이고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원천적 부정선거 획책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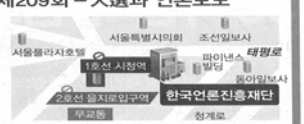
《趙甲濟 기자의 현대사 강좌 》 안내

'조갑제(趙甲濟) 기자의 현대사 강좌'가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아래 날짜에 개최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12월 3일(월) 오후 2시: 제209회 – 大選과 언론보도

趙甲濟의 부산 月例강좌

▶주제: 제56회 – 유권자의 자격
▶일시: 2012년 11월 24일 오후 2시
▶장소: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
(1호선 부산진역 5, 7번 출구)



문의 (02)722-9411~3(조갑제닷컴) 홈페이지: www.chogabje.com

취하 후 보도문

반론보도문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등'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2년 12월호에서 '[확인] 金正日 앞에서 盧武鉉은 이렇게 말했다!'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재정씨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보내왔습니다.

① 월간조선은 "2007년 10. 4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영토선으로서의 NLL 포기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NLL을 지키는 전제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② 월간조선은 "노 전 대통령이 10. 4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핵 폐기 요구 없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말하고, 10·4선언에서 '한반도핵문제'로 명기하여 북한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6자회담의 결과물인 9·19공동성명의 연장선상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2006년 10. 18 한미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핵문제 해결 후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③ 월간조선은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반미여론을 자랑"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한민국은 친미국가이며 친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④ 월간조선은 "노 전 대통령이 '5029계획은 미군이 북한으로 쳐들어가려는 계획인데, 내가 무산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연합사가 작계5029를 개념계획으로 전환한 것은 유사시 미군 주도의 군사작전이 남북간, 미중간 무력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반론보도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게재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문 288

▲ 2013년 1월호 월간조선 288면 반론보도문

3. 기각

의 결 번 호	**2012대선46(시심)**
시정요구인	문 재 인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조선일보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심의대상기사	조선일보 2012년 10월 23일자 A1, A6면 「盧 주재회의서 청와대 문건 목록 없애기로」 제하의 기사
주　　문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시정요구인은 조선일보 지면에 〈별지〉의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시정요구인이 참석한 수석비서관 회의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보도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대통령기록물을 차기 정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혀 시정요구인이 불법행위를 공모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생각건대, 심의대상기사는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도하면서 시정요구인이 참석한 사실과 회의 중 언급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바, 위 기사는 위 회의의 회의록을 근거로 사실 위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허위를 적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동 회의록에 드러난 참석자들의 발언의 취지나 당시 회의장의 분위기 등에 대하여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해당 기사가 반드시 시정요구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 결 번 호	2012대선54(재심)	원심결정 : 2012대선46(시심)
재심청구인	문 재 인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조선일보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심의대상기사	조선일보 2012년 10월 23일자 A1, A6면 [盧 주재회의서 청와대 문건 목록 없애기로] 제하의 기사	
주 문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2012대선46(시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심의대상기사(이하 '해당 기사'라고 한다.) 내용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위 회의에서 청와대 주요 문건과 그 목록을 없애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부분은 명백한 허위보도일 뿐 아니라 언론사의 해석의견에 불과하며 또한 취재를 통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민감한'이라는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사용한 것은 불공정한 보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 위원회 2012대선46(시심) 결정(이하 '원심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결정의 의결기록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기사 내용 중, 재심청구인이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재심청구인에 의해 허위사실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해당 기사가 당시 2007년 5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영상물 대화록을 토대로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회의에 참여한 비서관 등을 통해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7조 제4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해당 기사는 같은 기준 제7조에 따른 사실보도이고, 같은 기준 제8조는 인용보도 및 인터뷰기사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같은 기준 제8조 위반의 점에 대한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같은 기준 제8조가 해당 기사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내용 및 성격상 '민감하다'는 표현이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 청구는 그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盧 주재회의서 청와대 문건 목록 없애기로

2007년 5월 차기정부 인계 관련 비서관회의…
盧 "제목까지 없애고 넘겨주는 게 가능하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5년간 대통령기록물의 차기 정부 인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문건의 내용과 함께 문건의 목록도 없애버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주재한 각종 주요 회의를 녹화시켰다. 본지가 입수한 2007년 5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 영상물의 대화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 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 그게 기

술상 가능하냐는 문제도 있지요"라고 묻자 당시 A 비서관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이 거듭 "가능하냐"고 묻자, A 비서관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록을 없애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다.

이 같은 논의에 대해 당시 B 수석비서관은 "차기 정부의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을 어떻게 했나 그 과정을 보고 싶을 때 어떤 문서는 있었다는 걸 알아야 정책의 수립과정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회의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참석했다.

당시 회의는 노무현 청와대의 문서 결재 시스템인 'e지원'과 관련된 회의였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2008년 2월 청와대 컴퓨터 메인 서버의 e지원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봉하마을로 가져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은 "(노무현 정부가 남긴) e지원에 잡다한 업무 매뉴얼과 정책 자료를 제외하곤 참고할 정보가 거의 없다"면서 200만건이 넘는 노무현 청와대 자료가 유출됐다고 주장했었다.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회의 영상물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일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은 한편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줘야 할 e지원 자료 중 상당수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만들어 목록까지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당시 회의에서 논의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목록까지도 쏙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라며 "그렇게 해서 (직원들에게) 교육할 때 그런 점을 잘 설명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2007년 4월에 공포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비밀로 보호되는 기록물을 뜻한다.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정하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는 문서까지 목록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목록 자체도 빠져버리면 보호기간이 지난 후 다시 기록을 복원해야 할 때 (문서의) 소속을 어떻게 찾느냐"고 말했다.

한편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원서버를 두고 (비밀로) 지정할 것은 다 지정해서 이관(대통령기록관) 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중에 인계하고 싶은 것도 뽑아가면 남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남은 것을 오히려 복사본으로 개념을 전환해 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남겨둔 컴퓨터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가 복사본이고, 봉하마을로 가져간 하드디스크가 원본이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30자 情YOU' 캠페인
헤드폰의 노랫말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은 게 언제인가요?
불효자 최진호
S-OIL

朝鮮日報

1920년 3월 5일 창간 안내 (02) 724-5114 구독배달 080-900-0077 chosun.com 서울

盧 주재회의서 청와대 문건 목록 없애기로

2007년 5월 차기정부 인계 관련 비서관회의
盧 "제목까지 없애고 넘겨주는 게 가능하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5년간 대통령기록물의 차기 정부 인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문건의 내용과 함께 문건의 목록도 없애버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주재한 각종 주요 회의를 녹화시켰다. 본지가 입수한 2007년 5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 영상물의 대화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 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 그게 기술상 가능하냐는 문제도 있지요"라고 묻자 당시 A 비서관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이 거듭 "가능하냐"고 묻자, A 비서관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록을 없애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다.

이 같은 논의에 대해 당시 B 수석비서관은 "차기 정부의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을 어떻게 했나 그 과정을 보고 싶을 때 어떤 문서는 있었다는 걸 알아야 정책의 수립과정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회의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참석했다.

당시 회의는 노무현 청와대의 문서결재 시스템인 'e지원'과 관련된 회의였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2008년 2월 청와대 컴퓨터 메인 서버의 e지원 하드디스크를 봉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은 "(노무현 정부가 남긴) e지원에 잡다한 업무 매뉴얼과 정책 자료를 제외하곤 참고할 정보가 거의 없다"면서 ㅅㅅ만건이 넘는 노무현 청와대 자료가 유출됐다고 주장했었다.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회의 영상물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일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은 한편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줘야 할 e지원 자료 중 상당수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만들어 목록까지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당시 회의에서 논의했다. 최현묵 기자

A6면에 계속

盧 주재회의서 청와대 문건 목록 없애기로 A1면에서 계속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목록까지도 쏙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라며 "그렇게 해서 (직원들에게) 교육할 때 그런 점을 잘 설명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2007년 4월에 공포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비밀로 보호되는 기록물을 뜻한다.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정하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는 문서까지 목록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목록 자체도 빠져버리면 보호기간이 지난 후 다시 기록을 복원해야 할 때 (문서의) 소속을 어떻게 찾느냐"고 말했다.

한편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원서버를 두고 (비밀로) 지정할 것은 다 지정해서 이관(대통령기록관) 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중에 인계하고 싶은 것도 뽑아가면 남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남은 것을 오히려 복사본으로 개념을 전환해 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남겨둔 컴퓨터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가 복사본이고, 봉하마을로 가져간 하드디스크가 원본이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4. 각하

의 결 번 호	2012대선37(시심)
시정요구인	문 재 인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문화일보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68번지 대표이사　이 병 규
심의대상기사	문화일보 2012년 10월 17일자 1면 「"盧 지시로 靑 보관용 회담록 폐기」 제하의 기사
주　　문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를 각하한다.
신 청 취 지	피시정요구인은 문화일보 지면에 〈별지〉의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제2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청와대용 사본을 폐기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회담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도 이관되지 못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 같은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또한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익명의 취재원의 말만 그대로 인용해 보도함으로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시정요구인에게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해당 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집중해 보도하면서 시정요구인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상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선거기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 결 번 호	2012대선47(재심) 원심결정 : 2012대선37(시심)
재심청구인	문 재 인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심의대상기사	문화일보 2012년 10월 17일자 1면 「"盧 지시로 靑 보관용 회담록 폐기」 제하의 기사
주 문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2012대선37(시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본건 심의대상 기사가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제8조의2 제6항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선거기사"에 해당하고 또한 그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선거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본 위원회 2012대선37(시심)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본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서 다루고 있는 "선거기사"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모든 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선거기사"에 해당하는 기사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요한 헌법 이념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가치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인 '언론의 자유'가 중대하고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기사가 "선거기사"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재심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공직선거법 제8조의3을 비롯한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선거기사"에 대하여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에서 "선거기사"를 처음 언급하면서 "(사설·논평·광고 그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보충설명 규정을 둠으로써, 위 법 조항에서 의미하는 "선거기사"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법은 "선거기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기사의 형태나 형식이 어떤 것인지는 불문하지만, 그 내용이 "선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1항의 "선거보도"에 대한 보충설명 규정에서도 "선거에 관한 내용"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기사라면 "선거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헌법상의 가치들을 조화롭게 보장하고 보호하는 해석일 것이다. 그런데, 본건 심의대상 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한 것으로서, 재심청구인의 이름을 언급하는 등 선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또한, 본건 심의대상 기사가 게재된 이후 특정 언론사 등에서 본건 심의대상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전제로 하면서 재심청구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보도 등을 하였다고 하여, 당초의 본건 심의대상 기사가 선거기사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재심청구인의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유	한편, 재심청구인은 본 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기준” 제9조에 “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기사를 게재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당해 선거와 관련성이 있으면 그 내용에 관계없이 “선거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기준 제9조는 “선거기간 중” 및 “특집기획기사”라는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본건 심의대상 기사에 관한 판단에 원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오히려, 위 조문을 반대해석한다면, 선거기간 중에 게재되지 아니하고 특집기획기사의 형식이 아닌 기사의 경우에, 이를 “선거기사”로 보기 위하여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이어야만 가능하다”는 해석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선거기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던 본 위원회 2012대선37(시심) 결정은 정당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 청구는 그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盧지시로 靑보관용 회담록 폐기”

여권 고위관계자 밝혀
“2007년末~ 2008년初파쇄
기록관 보관용 사본 없어
국정원에만 원본 보관 중”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에 오간 제2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가운데 청와대 보관용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량 폐기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17일 문화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당시 회담록은 국가정보원 원본과 청와대 사본 등으로 두 군데에서 동시 보관해 오다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말~2008년 초 폐기를 지시했다”면서 “이 지시에 따라 청와대 보관용은 파쇄돼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 보관돼 있어야 할 회담록 사본은 없다”면서 “하지만 국정원은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폐기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어떤 이유로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대통령기록물은 2007년 4월 공포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장에게 통보하고 이관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회담록 열람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회담록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지 않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열람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회담록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정치권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대화록 의혹을 제기한 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가짜 대화록’ 공개 및 허위 판명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책임 약속을 전제로 ‘조건부 대화록 열람’을 언

급하면서 맞서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당시 회담록과 관련, 청와대와 국정원이 갖고 있었다고 밝혔는데 현재 청와대에는 보관돼 있는 게 없다"며 "회담록이 청와대에 보관돼 있었다면 당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졌을 텐데 이관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盧 지시로 靑보관용 회담록 폐기"

<盧-金 정상회담>

여권 고위관계자 밝혀
"2007년末~2008년初 파쇄
기록관 보관용 사본 없어
국정원에만 원본 보관 중"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에 오간 제2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가운데 청와대 보관용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량 폐기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17일 문화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당시 회담록은 국가정보원 원본과 청와대 사본 등으로 두 군데에서 동시 보관해 오다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말~2008년 초 폐기를 지시했다"면서 "이 지시에 따라 청와대 보관용은 파쇄돼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 보관돼 있어야 할 회담록 사본은 없다"면서 "하지만 국정원은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폐기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어떤 이유로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대통령기록물은 2007년 4월 공포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장에게 통보하고 이관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회담록 열람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회담록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지 않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열람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회담록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정치권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대화록 의혹을 제기한 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가짜 대화록' 공개 및 허위 관명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책임 약속을 전제로 '조건부 대화록 열람'을 언급하면서 맞서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당시 회담록과 관련, 청와대와 국정원이 갖고 있었다고 밝혔는데 현재 청와대에는 보관돼 있는 게 없다"며 "회담록이 청와대에 보관돼 있었다면 당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졌을 텐데 이관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상협 기자 jupiter@munhwa.com



부 록

1. 선거기사심의기준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4. 심의대상 매체현황
5. 색 인

1 선거기사심의기준

[개정 2012. 3. 8]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 3에 따라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기사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심의기본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선거기사심의의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선거기사의 공정성
2.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의 형평성
3. 사실에 기초한 객관성
4. 정치적 중립

제 3 조(일반심의기준) 위원회는 선거기사를 심의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위반 등을 판단함에 있어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2.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등에 따른 영향력
3. 선거기사의 게재시기
4. 심의기준에 대한 언론사의 반복 위반 여부

제 2 장 심의기준

제 4 조(공정성)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 보도하여야 한다.

제 5 조(형평성) 언론사는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6 조(정치적 중립) 언론사는 후보자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 7 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① 언론사는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②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여야 하며, 기사에서 사실보도와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취재를 통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특정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을 그대로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언론사는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에 대해 예측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언론사가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간의 대담, 토론을 다룰 때에는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인용보도 및 인터뷰기사) ①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포함한 개인이나 정당을 포함한 단체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인용할 때는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고, 그 출처를 밝혀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를 게재할 경우 상반된 견해를 가능한 균형있게 보도하여야 한다.

③ 인터뷰 기사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편집,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특집기획기사) 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기사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여론조사 보도) ① 언론사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일전 6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언론사는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③ 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해설기사의 경우 해당 조사의 전제 여건 및 결과와 다른 해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보도) ① 언론사가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를 보도할 때는 후보자나 정당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사는 제1항의 비교평가결과 보도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여야 한다.

제12조(기고 등) ①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아닌 개인 또는 언론사 내부필진의 의견을 게재할 경우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삭제〉

제13조(의견광고) 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상업광고의 제한) ①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언론사는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기사제목) 언론사는 기사제목이 기사내용과 달리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6조(사진게재) ① 언론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게재 시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사진게재에 있어 어떠한 변형이나 재구성을 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사진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언론사는 선거유세장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참가 인원이나 내용을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권리구제

제17조(정정보도청구권) 언론사는 선거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8조(반론보도청구권) 언론사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합당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결 정

제19조(제재결정 등) ①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과문 게재
   가.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2. 정정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반론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에 대한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의 반론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결정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5. 주의사실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6. 경고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의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선거기사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권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2012년 3월 5일 시행]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따라 설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선거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각종 규칙을 준용한다.

제 2 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 3 조(심의위원회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②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 4 조(심의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할 경우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여 위촉한다. 다만,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피추천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장 등) ① 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사람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기 등)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에 따라 그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선거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의결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소집) 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심의 및 시정요구

제12조(심의안건) ①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등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 심의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3조(정기간행물등 제출 요구)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정기간행물등의 제출 의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요구) ① 후보자가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정을 요구한 후보자는 해당 언론사가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사과문 게재
2.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결정문 게재
4. 주의사실 게재
5. 경고 또는 주의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진술) ①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결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요구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등) 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등에 대한 제15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이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결정을 해당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행 사실을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시정요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재심청구) ① 제15조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하 "재심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인(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및 관련 당사자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심청구인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반론보도청구

제19조(반론보도청구회부) ①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양측 당사자 등에게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구두, 팩시밀리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반론보도청구회부의 결정 및 통보) ①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하는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할 경우 해당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결정문은 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조정중재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특례절차)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2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23조(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추 천 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첨 부 : 본인승낙서 1부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대표자 :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본인승낙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직업	
	한자					
주소				전화번호		
				e-mail		
학력						
경력						

위 본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자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주 : 학력 및 경력은 주요사항 2~3개 정도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table>
<tr><td>선거기사
심의위원회
(☎)</td><td colspan="4">시 정 요 구 서</td></tr>
<tr><td rowspan="2">시정요구인</td><td>① 성 명</td><td></td><td>② 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③ 주 소
(e-mail 주소)</td><td></td><td>④ 전 화 번 호</td><td></td></tr>
<tr><td rowspan="3">시정요구
대상</td><td>⑤ 언론사명
(매체명)</td><td></td><td>⑥ 대표자 성명</td><td></td></tr>
<tr><td>⑦ 보도일자
및 지면</td><td></td><td>⑧ 소 재 지</td><td></td></tr>
<tr><td>⑨ 보 도 내 용</td><td></td><td>⑩ 전 화 번 호</td><td></td></tr>
<tr><td>시정요구
사항
(별지작성
가능)</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정요구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보도기사 전문</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별지 제5호 서식)

<table>
<tr><td>선거기사
심의위원회
(☎)</td><td colspan="2">재 심 청 구 서</td></tr>
<tr><td rowspan="2">원 심 결 정</td><td>의 결 번 호</td><td></td></tr>
<tr><td>결 정 일 자</td><td></td></tr>
<tr><td rowspan="4">청 구 인</td><td>성 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td><td></td></tr>
<tr><td>주 소</td><td></td></tr>
<tr><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E-mail</td><td></td></tr>
<tr><td>청구의 취지
및 사유</td><td colspan="2">별 첨</td></tr>
<tr><td colspan="3">「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td></tr>
</table>

(별지 제7호 서식)

<table>
<tr><td>선거기사
심의위원회
(☎)</td><td colspan="4">반 론 보 도 청 구 회 부 서</td><td>처리시간
48시간</td></tr>
<tr><td rowspan="3">청 구 인</td><td>① 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td><td></td><td>② 주 소
(e-mail 주소)</td><td colspan="2"></td></tr>
<tr><td>③ 대표자 성명</td><td></td><td>④ 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⑤ 소 재 지</td><td></td><td>⑥ 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피 청 구 인</td><td>⑦ 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td><td></td><td>⑧ 주 소</td><td colspan="2"></td></tr>
<tr><td>⑨ 대표자 성명</td><td></td><td>⑩ 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⑪ 소 재 지</td><td></td><td>⑫ 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반 론 보 도
청 구 대 상</td><td>⑬ 언 론 사 명
(매 체 명)</td><td colspan="4"></td></tr>
<tr><td>⑭ 보도일자 및
지면</td><td colspan="4"></td></tr>
<tr><td>⑮ 보 도 내 용</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공직선거법 제8조의4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합니다.

년 월 일

반론보도청구회부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td></tr>
<tr><td colspan="5">구비서류: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4. 보도기사 전문</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시행 2012. 7. 1]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일부개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

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 ·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 8 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

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제69조(신문광고) ①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②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⑤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5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있는 때
2.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⑧~⑨ (생략)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

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①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3. 제2호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10회 이내

제178조(개표의 진행)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6조·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하. 제108조의2를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거.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⑦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⑧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

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심의대상 매체현황

※ 일간지 131개(중앙일간 31, 지역일간 100), 주간지 242개(종합주간 32, 지역주간 206, 특수주간 4), 월간지 25개, 뉴스통신 3개 : 총 401개(2012년 7월 31일 기준)

1) 일간지 131개

구 분	매 체 명	
중앙 일간 (31)	-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스포츠칸, 일간스포츠 - 농민신문 - 데일리노컷뉴스, 더데일리포커스, 메트로, 에이엠세븐, 이브닝, City(시티), 스포츠한국	
지역 일간 (100)	서울(12)	내외일보, 새한일보(구 대한매일신문) 서울일보, 시민일보, 신아일보, 아시아경제, 아시아일보, 아시아투데이, 아주경제, 경향매일, 이투데이, 환경일보
	강원(2)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제주(4)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한라일보
	부산(2)	국제신문, 부산일보
	울산(4)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대구(6)	대구신문, 대구연합일보, 대구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경일보
	경북(4)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안일보
	인천(3)	경도신문, 인천신문, 인천일보
	경기(16)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매일, 경인일보, 경인종합일보, 수도권일보, 시대일보, 우리일보, 전국매일, 중부일보, 현대일보, 수원일보, 오늘신문, 일간경기
	광주(14)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광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 광주타임즈, 전남도민일보, 주간호남일보, 희망일보(구 일간호남)
	대전(8)	금강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중앙매일, 충남일보, 충청신문, 충청투데이, 대전투데이
	충북(6)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매일, 충청타임즈
	전북(6)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전북중앙신문, 전주일보,
	전북(4)	새만금일보, 전민일보, 전북매일신문, 일간전북타임스
	경남(9)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연합일보, 경남도민신문, 창원일보, 일간뉴스경남, 한남일보

2) 주간지 : 242개

구 분	매 체 명	
종합 주간 (32)	뉴시스아이즈, 뉴스위크한국판, 대한뉴스, 매경ECONOMY, 미래한국, 시사IN(인), 시사저널, 시사포커스, 씨앤비(CNB)저널, 주간경향,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믹리뷰, 주간동아, 주간조선, 한겨레21, 한경비즈니스, 동아비즈니스 리뷰, 뉴스포스트, 미디어워치, 민주신문, 사건의 내막, 시민사회신문, 시사서울, 월드경제, 월요신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주간현대, 중앙선데이, 토요경제, 주간한국	
지역 주간 (206)	서울(37)	강남내일신문, 강남저널, 강남포스트, 강서양천신문, 관악신문, 구로오늘신문, 구로타임즈, 노원신문, 동북일보, 동작포커스, 마포타임즈,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자치신문, 서울강북신문, 서울강서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울송파신문, 서초구민신문, 성북신문, 양천투데이, 영등포신문, 위클리온서울, 은평시민신문, 종로저널, 주간 강남신문, 주간 동대문신문, 주간 동작신문, 주간 마포신문, 주간 서대문신문, 주간 서부신문, 주간 시정신문, 주간 은평신문, 주간 중랑신문,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종로신문, 지역연합신문
	강원(11)	강릉신문, 강원고성신문, 강원리뷰, 강원북부신문, 강원영동네트워크신문, 삼척동해신문, 설악신문, 영월신문, 원주투데이, 태백신문, 홍천신문
	부산(1)	부산여성뉴스
	울산(2)	울산여성신문, 울산종합신문
	제주(2)	서귀포신문, 제주프레스
	대구(3)	대구달성신문, 대구푸른신문, 팔공신문
	경북(25)	(영천)시민신문, 경북자치신문, 경북중부신문, 경산신문, 경산자치신문, 경주신문, 고령신문, 고향신문, 군위신문, 김천신문, 상주시민신문, 상주신문, 성주신문, 성주자치신문, 안동신문, 새영남신문, (주간)영덕신문, 영주시민신문, 영주신문, 예천신문, 울진21, 울진신문, 의성신문, 청도신문, 칠곡신문
	광주, 전남(22)	시민의소리, 광양신문, 나주투데이, 담양주간신문, 목포투데이, 무안신문, 순천시민의신문, 여수신문, 영광21, 영암신문, 예향진도신문, 장성군민신문, 전남저널, 주간 강진신문, 주간 나주신문, 주간 영광신문, 주간 완도신문, 주간 장흥신문, 주간 함평신문, 주간 해남신문, 큰여수신문, 해남우리신문
	대전, 충남(11)	공주신문, 금산신문, 뉴스서천, 당진시대, 온양신문, 청양신문, 충남시사신문, 홍성신문, 서해안신문, 놀뫼신문, 예산신문, 태안신문
	충북(12)	영동신문, 음성뉴스, 제천신문, 진천시사신문, 충북뉴스, 충주신문, 충청리뷰, 증평괴산저널, 보은신문, 보은사람들, 옥천신문, 삼군신문
	경기(28)	고양신문, 과천문화신문, 광명일보, 군포신문, 김포신문, 남양주신문, 뉴스리더동부교차로저널, 반월신문, 부천신문, 부천타운, 세종신문, 시흥신문, 안산정론신문, 안양광역신문, 양주신문, 여주신문, 용인신문, 이천신문, 자치안성, 주간 현대, 파주저널, 평안신문, 평택시민신문, 포천신문, 하남신문, 남동신문, 부평신문
	전북(18)	고창신문, 군산뉴스, 군산미래신문, 김제시민의신문, 부안독립신문, 부안서림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익산신문, 정읍신문, 진안신문, 주간군산신문, 주간김제신문, 주간소통신문, 전북신문고, 정읍뉴스, 익산투데이, 해피데이고창
	경남(34)	거제신문, 거제중앙신문, 거창군민신문, 거창신문, 거창신보, 거창중앙신문, 경남여성신문, 고성미래신문, 고성신문, 김해뉴스, 남해시대, 남해신문, 밀양시민신문, 밀양신문, 사천신문, 새거제신문, 서경신문, 양산시민신문, 양산신문, 의령신문, 주간아림신문, 주간한산신문, 주간함양, 창원신문, 창녕신문, 하동신문, 한려투데이, 함안뉴스, 함안신문, 함안아라신문, 함안정통신문, 함양신문, 황강신문, The 함안신문

※ 특수주간(4) : PD저널, 기자협회보, 재외동포신문, 대한변협신문

3) 월간지 : 25개

구 분	매 체 명
종합월간(12)	경제풍월, 뉴스저널, 서울21, 시사매거진,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이코노미플러스, 포브스코리아, 포춘코리아, 폴리피플, 한국논단
여성지(6)	레이디경향, 여성동아, 여성조선, 여성중앙, 우먼센스, 주부생활
지역월간(7)	피플파워(경남), 굿뉴스피플(광주), 전라도닷컴(광주), 시사전북(광주), 김포뉴스(경기), 전국지방시대(경기), 고흥타임즈(광주)

4) 뉴스통신 : 3개

뉴시스, 연합뉴스, KNS뉴스통신

5 색 인

1) 결정유형별

구 분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체심의	사과문 게재	2012대선19	시민일보	60
	경 고	2012대선13	남해시대	72
	경 고	2012대선18	서울21	93
	경 고	2012대선20	경북도민일보	135
	경 고	2012대선21	대구일보	146
	경 고	2012대선23	조선일보	157
	경 고	2012대선24	일요시사	161
	경 고	2012대선32	조선일보	167
	경 고	2012대선40	아시아투데이	170
	주 의	2012대선11	경남매일	205
	주 의	2012대선14	일요시사	207
	주 의	2012대선15	조선일보	210
	주 의	2012대선16	한겨레	212
	주 의	2012대선17	광주타임즈	214
	주 의	2012대선25	일요서울	216
	주 의	2012대선26	동아일보	222
	주 의	2012대선27	조선일보	224
	주 의	2012대선28	경북도민일보	225
	주 의	2012대선29	경북매일	229
	주 의	2012대선30	경북일보	231
	주 의	2012대선31	아시아일보	233
	주 의	2012대선33	시사서울	240
	주 의	2012대선34	문화일보	243
	주 의	2012대선35	서울신문	245

구 분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언 론 사 명	면 수
	주 의	2012대선36	경향신문	246
	주 의	2012대선38	중앙일보	248
	주 의	2012대선39	동아일보	252
	주 의	2012대선41	한겨레	257
	주 의	2012대선44	경제풍월	259
	주 의	2012대선45	서울신문	284
	주 의	2012대선48	여성신문	288
	주 의	2012대선49	데일리노컷뉴스	293
	주 의	2012대선50	경향신문	295
	주 의	2012대선51	미래한국	307
	주 의	2012대선52	시사서울	354
	주 의	2012대선53	동아일보	356
	권 고	2012대선1	매일경제	365
	권 고	2012대선2	대경일보	370
	권 고	2012대선3	영남일보	372
	권 고	2012대선4	대구연합일보	374
	권 고	2012대선5	동아일보	376
	권 고	2012대선6	헤럴드경제	377
	권 고	2012대선7	경향신문사	379
	권 고	2012대선8	서울신문	381
	권 고	2012대선9	대전일보	383
	권 고	2012대선10	세계일보	385
	권 고	2012대선12	연합뉴스	388

구 분	결정 유형	의결 번호	시정요구인 / 매체명	면 수
시정요구 심의	정정보도문 게재	2012대선43	문재인 / 조선일보	393
	취하 (반론보도문 게재)	2012대선42	문재인 / 월간조선	397
	기각	2012대선46	문재인 / 조선일보	409
	각하	2012대선37	문재인 / 문화일보	413

2) 언론사별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면 수
자체심의	경남매일	주 의	2012대선11	205
	경북도민일보	경 고	2012대선20	135
	경북도민일보	주 의	2012대선28	225
	경북매일	주 의	2012대선29	229
	경북일보	주 의	2012대선30	231
	경제풍월	주 의	2012대선44	259
	경향신문	주 의	2012대선36	246
	경향신문	주 의	2012대선50	295
	경향신문사	권 고	2012대선7	379
	광주타임즈	주 의	2012대선17	214
	남해시대	경 고	2012대선13	72
	대경일보	권 고	2012대선2	370
	대구연합일보	권 고	2012대선4	374
	대구일보	경 고	2012대선21	146
	대전일보	권 고	2012대선9	383
	데일리노컷뉴스	주 의	2012대선49	293
	동아일보	주 의	2012대선26	222
	동아일보	주 의	2012대선39	252
	동아일보	주 의	2012대선53	356
	동아일보	권 고	2012대선5	376
	매일경제	권 고	2012대선1	365
	문화일보	주 의	2012대선34	243
	미래한국	주 의	2012대선51	307
	서울21	경 고	2012대선18	93
	서울신문	주 의	2012대선35	245
	서울신문	주 의	2012대선45	284
	서울신문	권 고	2012대선8	381
	세계일보	권 고	2012대선10	385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면 수
	시민일보	사과문 게재	2012대선19	60
	시사서울	주 의	2012대선33	240
	시사서울	주 의	2012대선52	354
	아시아일보	주 의	2012대선31	233
	아시아투데이	경 고	2012대선40	170
	여성신문	주 의	2012대선48	288
	연합뉴스	권 고	2012대선12	388
	영남일보	권 고	2012대선3	372
	일요서울	주 의	2012대선25	216
	일요시사	경 고	2012대선24	161
	일요시사	주 의	2012대선14	207
	조선일보	경 고	2012대선23	157
	조선일보	경 고	2012대선32	167
	조선일보	주 의	2012대선15	210
	조선일보	주 의	2012대선27	224
	중앙일보	주 의	2012대선38	248
	한겨레	주 의	2012대선16	212
	한겨레	주 의	2012대선41	257
	헤럴드경제	권 고	2012대선6	377

구 분	언론사명	결정 유형	의결 번호	면 수
시정요구 심의	문화일보 / 문재인	각하	2012대선37	413
	월간조선 / 문재인	취하 (반론보도문 게재)	2012대선42	397
	조선일보 / 문재인	정정보도문 게재	2012대선43	393
	조선일보 / 문재인	기각	2012대선46	409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 397-3114
언론분쟁상담 02) 397-3000, 3010, 3100, 3110
팩스 02) 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전화 051) 759 - 7083~4 | FAX 051) 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53) 763-0020~1 | FAX 053) 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5(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전화 062) 676-0360~1 | FAX 062) 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42) 525-0778~9 | FAX 042) 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116-1) 경기문화재단 8층
전화 031) 211-9022, 9027 | FAX 031) 211-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033) 255-2878~9 | FAX 033) 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산남동 657) 엔젤변호사빌딩 404호
전화 043) 286-8081, 8083 | FAX 043) 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72(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063) 288-0010, 0981 | FAX 063) 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사파동 80) 보고빌딩 601호
전화 055) 263-1780, 1787 | FAX 055) 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남광북 5길(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전화 064) 722-3328, 3352 | FAX 064) 726-3201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인쇄일 2013년 3월 30일
발행일 2013년 3월 30일
발행인 권 성
편 저 : 언론중재위원회 심리본부 기사심의팀 (02-397-3153)
발행처 :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114 | FAX 02)397-3089
http://www.pac.or.kr
제 작 : 계 문 사 02)725-5216

※ 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02)397-3114 FAX : 02)397-3089
http://www.pac.or.kr